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000-000111-10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도가 걸어온 길

민선7기 주요정책 사례집

('19. 9. 1. ~ '20. 6. 30.)

경 기 도

새로운 경기도가 걸어온 길 – 발간사

민선7기 경기도가 출범한 이후 적지 않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뤄낸 결과들을 모아 주요 정책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경기도는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적토성산(積土成山)의 마음가짐으로 역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이뤄낸 눈부신 성과들이라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경기도는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기본소득은 이념을 뛰어넘어서 전 국민적인 의제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불법 점유되고 있던 계곡과 하천을 도민에게 환원한 청정계곡 하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의 공평하고 엄정한 행정으로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었고 철거지역 상인들과 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함으로써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Publisher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정국 신설과 특별 사법 경찰단 활동, 불법 탈세를 근절하고자 추진한 경기도 맞춤형 체납관리단 운영, 그리고 산업현장에 잔존해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관급공사 건설 원가 공개 등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 중 무엇 하나 쉽게 시작된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의 가치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막중한 권한과 역할을 위임해주신 도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주요정책 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정책 사례집이 경기도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살피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경기도지사 이 재 명

제1장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도

제1절 불공정행위 근절로 공정경기 기틀마련

1.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기능강화 15
2.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으로 조세정의 실현 24
3.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33
4.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로 도민에게 깨끗한 자연환경 환원 38
5. 기획부동산 투기차단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44
6. 광역시·도 최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출범 50
7. 휴양지 불법야영장 불법행위 대거 적발 54
8.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8
9.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개인사업장 조사 및 체납처분 67
10.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역량강화 73
11.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제도 도입 80
12. 최대 '공정무역도시' 인증 달성 86
13. 道 청사용지 복합개발 실현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 발판 마련 95
14.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101

제2절 평등하고 규제없는 세상

15.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 추진 107
16. 입찰·계약서류 간소화 추진 113
17. 규제 개선 통한 고양화훼산업특구 활성화 119
18. 적극행정 요구로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조기 시행 123
19.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집단급식소 설치 허용 129

Contents

제3절 모두에게 존중받는 노동권익 증대

20. 노동자 쉼터 조성 132
21.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38
22.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141
23. 노동이사제 도입 및 시행 145
24.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 149
25.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155
26. 비정규직 노동자 권역별 동아리 지원사업 161
27.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166

제2장 평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경기도

제1절 평화를 앞당기는 남북교류사업 확대

28. 2019 DMZ 포럼 성공적 개최 177
29. DMZ 세계자연유산 남북공동 등재추진 183
30.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파견 191
31.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추진 199
32.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대북제재 면제 승인 206
33.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212

제2절 미래발전을 주도하는 혁신경기 실현

34. HP, 경기도에 '글로벌 전략 R&D허브' 구축 217
35.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정식 오픈 224
36.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229
37.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선도사업 234
38. 램리서치 R&D센터 유치 239
39.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구축 245
40.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조성 착수 253
4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259
42.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 창업지원 추진 268
43. 경기도주식회사 매출액 100억 달성 273
44. 지역경제 빅데이터(유통) 플랫폼 및 센터 구축·운영 278
45. 일본 수출규제 신속 대응 및 소부장산업 육성 284
46. 공공주도형 新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289
47. 평택 포승(BIX)지구 진입도록 첫삽 297
48. 코로나19 대응, 전국 최초 항균마스크 생산지원 303

제3절 누구나 관광 오는 명품 경기 조성

49. 화성 국제테마파크 306
50.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조사·발굴 및 관광테마골목 육성 311
51.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조성 316
52. 경기도 내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321
53.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진 326
54. 문턱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331
55.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335
56.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342

Contents

제3장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제1절 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

57.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및 시행 349
58.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 356
59. 세계최초 경기도 데이터 배당 시행 361
60. 경기도민 정책축제 활성화 367
61. 빅데이터 기반 '경기 데이터 분석 플랫폼' 374
62.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운영 380

제2절 생애주기별 복지망 구축

63. 장애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384
64.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보듬' 개소 388
65.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394
66. 이·통장이 협력하여 아동의 안부를 묻다! 397
67.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403
68.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시행 412
69. 광역 최초 '청소년 안전망팀' 신설 417
7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421
71. 경기도 전역 민주시민교육 확산 추진 429
72. 청년농업인 공동체 활동 지원 434
73.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운영 439
74.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강력 추진 443

제3절 역사로 이어지는 과거와 현재

75.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 450
76.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추진 464
77. 친일잔재 청산 프로젝트 추진 471
78.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477

제4장 상생하는 경제, 성장하는 경기도

제1절 함께하는 지역경제의 밑바탕 마련

79. 지역화폐 확대발행(활성화 정책 포함) 487
80.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495
81. 전국 최대 규모, 지역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소각 501
82.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507
83.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육성 511
84.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기준 확대 권고 516
85. 도시계획 차원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523
86. '착착착'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통합판로 지원 527
87. 2020 착한 여행 캠페인 534
88.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540
89.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긴급지원 546
90.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전국 최다 552
91. 코로나19 극복 지역농산물 '착한 소비' 효과 톡톡!! 560

Contents

제2절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

92.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추진 567
93.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 성공 573
94.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원 575
95. 연천 덴마크파크 조성 579
96.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소유권 이전 583
97. 道 공공기관, 북부 및 자연보전권역 등 입지 추진 586
98. 경기북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추진 591
99. 도봉산~옥정 광역철도(7호선 북부연장) 건설사업 착수 597
100.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제곱미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602
101.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최종 확정 606
102.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산단 조성사업 613

제5장 깨끗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경기도

제1절 사람중심의 주거환경

103.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619
104.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624
105. 경기도 원도심 '도시재생' 50곳 이상으로 확대 632
106.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640
107.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647
108.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652
109.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운영 658
110. 수원-화성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665

새로운 경기도가 걸어온 길

제2절 촘촘한 교통인프라 확충

11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671
112. 신안산선 복선전철 조기착공 677
113.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681
114. 하남선 복선전철 1단계 차질없는 개통 687
115. 경기교통공사 설립 절차 매듭-새로운 교통질서 구축 692
116. 경기도 320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699
117.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702
118.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709

제3절 건강한 삶을 위한 깨끗한 환경 조성

119. 5등급 노후경유차 57% 감축 713
120. 숲속공장(Plant in the Forest) 조성 추진 사업 추진 721
12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우리 동네 '초록담' 조성사업 726
122. 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 지원 732
123. 일본산 석탄재 수입 대책 마련 742
124. 청소선 도입으로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747
125. 생활폐기물 저감 재활용 활성화 모델을 시군과 공유 754

제4절 모두를 지키는 사회안전망 구축

126. 도내 정신질환자 한밤중 진료 입원 언제든 가능 762
127. 수술실 CCTV 설치·운영 767
128. 음압부검 설비 갖춘 AI전용 BL3시설 구축 774
129. 소방 대응력 강화 779
130. 2020년 산불진화헬기 20대 운영 786

Contents

131.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보급 792
132. 비상구 신고포상제 활성화 796
133. 음성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156개소 확대 구축 804
134. 전국 최초 주거용 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획득 807
135. 「노동안전지킴이」운영 811
136.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추진 816
137. 방범 CCTV 확대 설치 820
138.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완료(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 827

제5절 모두를 지키는 사회안전망 구축

139. 재난대응 물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831
140. 코로나19 대응 838
141. 경기북부지역 양돈농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845
142. 이천 물류창고 화재 854

새로운 경기도가 걸어온 길

제1장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도

제1절 불공정행위 근절로 공정경기 기틀마련

1.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기능 강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총괄팀장 윤태완

- 추진배경 : 다양해진 민생범죄 예방 및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추진내용 : 전국 지방정부 중 최대 수사권 확보, 선제적인 제도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문제점 및 해결 :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관제 운영, 수사관의 직렬 다양화
- 평　　가 : 민생과 도민관심분야 집중수사로 도민의 신뢰도 제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별사법경찰은 고도로 전문화된 기능별, 지역별 특수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그 근거를 두고 관할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수행한다.

사회의 분화, 전문화, 다양화에 따라 범죄의 내용도 점점 지능적이고 전문화됨에 따라 경기도는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생범죄부터 사익을 편취하는 불공정범죄까지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조직과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조직의 대폭 확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09년 3월 24일 1단 3팀 22명에서 출범하여 단계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여 민선7기 전반기에는 2단 20팀 193명까지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2018년 10월 1일 1단을 증설하여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를,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와 복지 등 불공정 범죄 수사를 전담하였다. 이후 2019년 4월 1일에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위험물 취급관련 불법행위 단절을 위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소방수사팀,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하여 소방전문 5명과 지적전문 4명을 각각 배치하였다.

[표 1-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2단 20팀 193명]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4팀 139명(도 67, 시군 72)													
수사총괄팀	소방수사팀	수사1팀	수사2팀	수사3팀	수사4팀	수사5팀	수사6팀	수사7팀	수사8팀	수사9팀	수사10팀	수사11팀	수사12팀
9 (0)	5 (0)	12 (7)	10 (5)	11 (7)	10 (6)	11 (7)	9 (5)	12 (8)	10 (5)	10 (6)	11 (6)	11 (6)	8 (4)

공정특별사법경찰단 6팀 54명(도33, 시군21)					
수사지원팀	경제수사팀	복지수사팀	부동산수사팀	과학수사팀	현장수사팀
5 (0)	15 (9)	10 (5)	7 (1)	13 (6)	4 (0)

2020년 3월 16일, 환경오염 배출시설과 폐기물 배출 · 처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포천과 연천지역에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속의 수사12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의 현장수사팀을 수원역사에 증설하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수사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권역별 6개 팀 11개 수사센터에 보건 · 시설 · 농업 · 환

경전문 5급 팀장을 배치하여 11개 수사팀으로 직제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총 2단 20팀 193명으로 전국 지방정부 중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2) 전국 지방정부 중 최다 수사권한 보유

민선7기에 들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 의료 · 의약, 청소년분야 등 6개 분야 52개 법률에서 5차례에 거친 단계적인 확대로 총 33개 분야 108개 법률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직무지명을 부여받았다.

먼저 1단계로 2018년 7월 30일 사회복지법인 · 시설의 보조금관련 비리를 포함하여 대부업자, 방문판매 및 다단계, 여객 · 화물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등 6개 분야 8개 법률에 대하여 신규로 직무지명을 받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다.

2단계로 2018년 11월 29일, 동물사랑 등 도민의 공감과 관심분야인 동물보호,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9개 분야 12개 법률을 추가로 지명 받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이와 일명 '짝퉁 제품' 등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위반과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도 지명 받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전담하였다.

3단계로 2019년 4월 1일, 소방분야와 부동산 분야 등 2개 분야 10개 법률에 대하여 추가 지명을 받았고, 4단계로 2019년 9월 10일에 수산업분야 5개 법률에 대하여 지명받았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일에는 도내에 대상이 적어 수사수요가 미미하나 기존 수사업무와 연계하여 지명이 필요하거나 유사시를 대비하여 12개 분야 21개 법률에 대하여 추가로 직무지명을 받았다.

그리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총 33개 분야 108개 법률로 사법경찰직무법상 가능한 모든 법률에 대한 수사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국 지방정부 중 최다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3) 첨단 과학 장비 도입

특별사법경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이유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12개 수사팀은 관할 지방검찰청이 소재한 시 · 군에 위치하고 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생산하는 연간 1.300여건에 이르는 수사자료의 통합관리시스템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였고, 이 시스템 구축사업과 더불어 민생범죄 분석 및 통계공개는 민선7기 핵심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 2018년 11월, 수사통계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12월 수사 사건 정보입력, 처리, 통계원표 작성 등 사건 진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20년 3월 특별사법경찰단 창설이후부터 2019년까지의 수사통계 지역별 범죄 현황, 연도별 발생건수, 월별 발생건수 등 3종에 대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해 우선 공개하였다. 2020년에 발생된 범죄통계에 대해서는 2021년 3월에 범행동기, 피의자 직업군, 범죄유형별 재범률, 발생장소 등 7종을 더하여 10종을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2019년 5월 29일 범죄수사에서 이용되고 있는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각종 디지털 데이터 및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개소하였다. 전문 분석요원 2명이 배치되어 강제수사 현장 투입, 증거물 분석 등 활발한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4)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선제적인 제도 마련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관의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2020년 1월 10일 서울시와 더불어 선제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하였다.

인권보호수사지침은 총 5장 7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와 방어권 보장, 사건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수사사건의 예외적 공개 및 공보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수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로 증가하는 신고 · 제보와 경제 · 지능범죄의 경우 수사 착수 전 내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사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건수리 및 내사처리지침」을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하였다.

5) 처벌보다는 계도를 위한 홍보 강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인 경우 위반행위 발생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영세사업자의 범법자 양산 방지와 범죄 발생 최소화를 위해 언론보도, SNS,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사 1주일 전에 단속 · 수사 계획을 널리 알렸다.

2019년에 15회, 2020년 상반기에 22회 사전계도 하였고, 분야별로 자주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 위주로 제작한 홍보물 10,000부를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관내 업체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단속 · 수사 종료 후에는 동종 범죄, 반복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위반 사례 위주로 발표하였다. 2019년 61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117건 보도 되었고, 2020년 상

반기에는 36회 배포하여 1,385건 보도 되었다.

이 외에도 특별사법경찰단 활동내용이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제보자들, SBS 모닝와이드, 비디오머그 등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수사전문 인력 부족

의료 · 의약, 동물보호, 소방, 사회복지, 대부업 등 사법경찰직무법상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직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창설이후 민선6기까지 식품범죄, 환경범죄 위주로 단속 · 수사를 추진하다가 민선7기에 직무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 배치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직무지명권이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기대로 바꾸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필요했다.

2) 전문 계약직원 채용과 수사 전문관 운영

점차 복합적이고, 지능적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법령 해석과 판례 적용, 인권보호 수사지침 등 규정 마련을 위하여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변호사 1명을 채용하였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제수사팀, 복지수사팀, 과학수사팀의 팀장에 검찰 · 경찰출신 공무원을 채용하여 검찰과 경찰의 업무협의와 수사의 적법절차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불법대부업을 수사하는 경제수사팀에 경찰 출신 수사관 2명을, 지능범죄가 많은 복지수사팀에 회계전문가를, 과학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 전문 분석요원 1명을 채용 · 배치하여 수사 전문성을 높였다.

수사는 특성상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기초로 한 적법절차, 수사기법, 피의자와의 심리전, 현장 채증 방법 등 업무처리에 있어 수사 경험에서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정확한 법령해석과 판단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은 필수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전입하는 전 직원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하고 있다. 또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환경,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축산 · 의약, 관광분야수사 등 13개 전문직위에 11명의 전문관이 있으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분야수사 등 3개 전문직위에 2명의 전문관이 활동하고 있다.

3) 수사업무 통합추진, 전문직렬 배치

행정 주무부서는 일반 행정업무와 단속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불법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수사경험 부족 등으로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업무 일원화 추진이 필요하였다.

먼저 남 · 북부 소방재난본부와 도내 각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소방관련 불법행위 단속 · 수사업무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방수사팀에 소방직 5명을 배치하였고,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TF팀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에 지적직 2명포함 총 4명을 배치하였다.

또 2019년 9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던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 단속 · 수사업무를 추가 지명 받으면서 해양수산직 1명을, 방치 · 투기 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분야 수사업무에 환경직 2명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최근에는 안전특별점검단에서 진행하는 재난안전,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와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과적단속에 관한 수사권을 신규로 지명 받았다. 이와 같이 6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사효과 극대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통합하였다.

이 외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인력은 총 193명으로 도 직원 100명, 시 · 군 파견직원 9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견직원의 파견기간 만료 시 지역 수사수요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 파견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13개 파견직렬 중 환경, 식품위생, 보건직 공무원이 60%로 식품범죄, 환경범죄 등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전문성을 높였다.

4) 수원지방검찰청과의 간담회 추진

특별사법경찰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직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받아 수사업무를 할 수 있다. 경기도지사의 제청에 의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가능 여부, 수사관의 결격사유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법률에 대한 대인적 직무지명을 한다.

2020년 3월 25일 「재난안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저작권법」 등 21개 법률에 대한 지명 제청과 관련하여 2020년 4월 24일 수원지방검찰청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공정국장,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수사1팀장이 참여하여 직무지명 필요성과 전문성 보유 등을 설명하였다.

2020년 6월 1일 21개 법률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함으로써 총 108개 법률 지명으로 전국 지방정부 중 가장 많은 수사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민선7기 들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조직과 직무지명 법률은 민선6기에 비해 2배 규모로 대폭 확대되었고, 과학적 수사시스템 구축과 전문적 인력 구성,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제도 마련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였다. 그 결과 2020년 검찰총장이 뽑은 전국 특별사법경찰 최우수기관에 선정

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 1-1] 전국 특별사법경찰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이 가장 원하는 먹거리분야, 환경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간 단속 ·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청정계곡 · 하천과 더불어 깨끗한 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수사를 펼치는 한편, 자연 훼손, 동물관련 범죄, 집값 담합행위,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등을 강력하게 척결해 나갈 것이다.

2.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으로 조세정의 실현

조세정의과 체납총괄팀장 배호상

- 추진배경 : 획일적 체납처분으로 납세자 불만, 고액 고질체납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 추진내용 : 업무매뉴얼 제작, 기간제 근로자 채용, 체납관리단 출범식, 실태조사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시 · 군 업무부담 가중, 민원 발생, 부정적 여론 개선을 위해 노력
- 평　　가 : 지방재정 확충,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강제징수 위주의 지방세 체납정책은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고액 · 고질체납자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또한,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는 상대적 상실감이 상존해 있었다. 경기도는 체납자의 체납 사유와 납부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체납처분으로는 납세자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은 2010년부터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권리분석,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제징수 위주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451만 명에 이르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전담 공무원 수는 359명에 불과하여 공무원 1인당 체납자 12,560명을 관리하여야 한다. 더욱이 체납분야는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징수실적에만 치중함으로써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433만 명에게는 압류 외에는 별다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경기도는 체납자의 재정 상태, 납부능력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광역체납기동반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전담하게 하였다. 또한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안내, 납세홍보, 불편사항 청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경영 악화 · 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결손처분 등 맞춤형 징수를,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복지 연계를 통해 조세정의 공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

도세 부과 · 징수 사무는 31개 시장 ·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징수 사무에 해당하는 경기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시 · 군과의 체납관리단에 대한 채용 협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추진이 불가능하였다. 일부 시 · 군에서는 한정된 공무원에 신규 업무가 추가되자 업무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3년간 총 4,500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2019년은 1,262명, 2020년은 2,30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다. 시 · 군에서 체납관리단을 채용함에 있어 중도실업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채용하고 또한 매년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구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업무만족도 설문조사에서 2019년도 체납관리단 대부분(67%)이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체납자 실태조사는 실효성 있는 체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과거 재정지출 목적으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경기도의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지방재정 확충,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 셈이다. 경기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일자리창출 사업의 표준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제주도가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2) 업무매뉴얼 제작 및 직무교육 실시

체납자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경기도와 시 · 군 세무공무원이 공감하고 있었으나,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인력운용 및 조직, 예산,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정형화된 업무프로세스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민선7기 핵심공약인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체납자 실태조사 표준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계획하였다. 경기도와 시 · 군 공무원 10명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표준교재 제작 TF팀을 구성하여 2차례 합동회의와 검수 과정을 거쳐 일반 행정, 실태조사 실무, 후속조치 3개 분야에 총 157페이지 분량으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2018년 12월에 2019년 체납자 실태조사 표준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에도 2019년 체납자 실태조사 표준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189페이지 분량의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 2020년도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였다.

경기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 31개 시 ·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 75명을 대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표준교재를 활용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2019년에도 12월 16일, 18일 2일간 체납자 실태조사 담당자 63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시 · 군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위법성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표 2-1] 2019, 2020년도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매뉴얼

한편, 시군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군 체납관리단 자체교육을 경기도 주관 집합교육으로 변경하여 실태조사 위법성에 대한 답변, 실태조사 방법 및 민원 최소화 대책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시·군 사업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납관리단의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체납관리단의 업무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3) 체납관리단 출범식 개최 등으로 도정 홍보

체납자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성남시가 2015년에 최초 시행하던 사업을 광역 단위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2019년 3월 8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부의장, 오산시장을 비롯한 도·시·군 관계자들과 시·군 체납관리단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1,262명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출범식에서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공

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강조하면서 “체납관리단이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일조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체납관리단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납자 실태조사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2-1] 체납관리단 출범식('19.3.8.)

4) 체납자 실태조사로 재정 확충, 복지사각지대 해소

체납자 실태조사는 2019년에 소액 체납자 1,000,22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소액 체납자 371,951명으로 하여금 795억 원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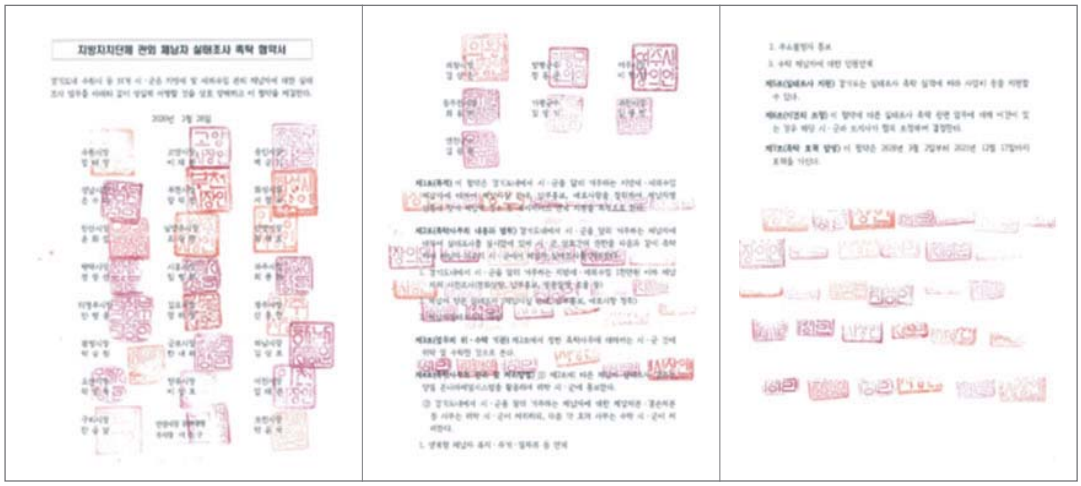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즉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 18,833명에게 분납을 적극 독려하여 48억 원을 징수하는 한편, 납부능력을 상실한 무재산 체납자 17,411명의 체납액 85억 원을 결손처분 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

에 대하여 복지, 주거, 일자리 등에 연계시켜 이중 663명이 해당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긴급복지, 주거환경개선, 취업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2020년부터는 광역 행정의 이점을 살려 경기도와 31개 시 · 군이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 협약을 체결('20.2.28.)하여 경기도 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체납자도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지방 재정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2] 경기도 31개 시 · 군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 협약서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관리인력 부족

경기도의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체납관리단 채용, 교육, 관리 및 민원처리 등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상당 부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보강이 이루어지지지 않아 일부 시 · 군에서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경기도는 체납관

리단 전국 확대 시행을 행정안전부에 건의('19.6.14.)하였다. 중앙정부가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본다.

위와 별개로 체납자 실태조사에 대한 시 · 군 지원과 협조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김포시, 시흥시, 오산시 등 6개 우수 시 · 군에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2) 민원 발생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사전예고 없이 3명씩이나 방문했냐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고, 그 다음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으로, 체납관리단의 답변과 안내로 대부분은 해결되었다.

다만, 체납관리단에게 체납자 과세정보, 금융정보, 재산사항 등 제공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 · 군수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태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고, 체납관리단은 체납처분 또는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불편사항 접수 등 세무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단순 ·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을 받아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규정 소정의 '다른 사람' 이라 함은 타 기관 또는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라도 지방세 업무와 무관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 실태조사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보조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을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2018.10.31. 시 · 도 세정과장 회의 자료 참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실) 할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체납관리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체납관리

단의 과세정보 접근을 최소화하는 등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였다.

3) 일부 부정적 여론

경기도의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에 대하여 일부 언론기관의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주민세 1만 원을 체납한 소액 체납자까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거나 체납관리단의 방문이나 안내문으로 체납 정보가 노출되어 불쾌하다는 등 사업에 흠집내기식 보도를 하였다.

경기도는 "경기세금똑똑!" 이라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브랜드를 개발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하여 실태조사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 TV와 라디오 방송 인터뷰, 팟캐스트 출연, 자체홍보 영상 제작, G버스 광고,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체납관리단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공공일자리 창출, 체납징수,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실적에 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체납관리단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로 2019년 5월에 부천 북부역 인근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를 발견,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경험을 살려 신속한 신고와 함께 심폐소생술 처치를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등 체납관리단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납세의식 강화 및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공일자리 창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및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 체납자의 경제사정 파악에 집중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및 일자리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는 한편 체납자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3.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회계과 계약1팀장 김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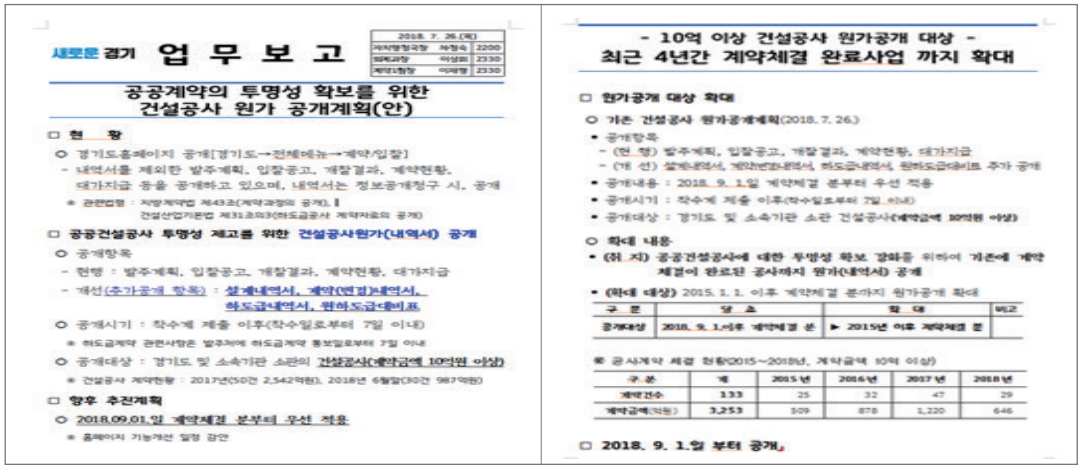
- 추진배경 : 국정과제 3번. 더 공정해진 경기도
- 추진내용 :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 문제점 및 해결 : 원가공개를 통한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민간공사와 비교를 통해 적정공사비 반영 가능
- 평　　가 :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는 그동안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건설공사의 단순한 계약현황만 공개하여 도민의 세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기존의 단순 계약현황에서 원가내역서까지 공개하여 민간건설공사와 공공건설공사 간 비교를 통해 적정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공종을 삭제하거나 과도하게 반영된 단가의 조정을 통하여 최적화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건설공사의 원가내역서를 공개하여 민간공사와 비교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종체크가 가능하며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까지 공개함으로써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의 무리한 요구(신규공종 끼워넣기, 단가인하, 수량증가)로부터 하도급업체의 보호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표 3-1] 경기도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내부방침



새로운 경기 업 무 보 고

2018. 7. 26.(목)

공공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원가 공개계획(안)

□ 현 황

○ 경기도홈페이지 공개[경기도→전체메뉴→계약/입찰]
- 내역서를 제외한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역서는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

□ 공공건설공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건설공사원가(내역서) 공개

○ 공개항목
- 현행 :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 개선(추가공개 항목) :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 공개시기 : 착수계 제출 이후(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공개대상 :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의 건설공사(계약금액 10억원 이상)

□ 향후 추진계획

○ 2018.09.01.일 계약체결 분부터 우선 적용

- 10억 이상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
최근 4년간 계약체결 완료사업 까지 확대

□ 원가공개 대상 확대

○ 기존 건설공사 원가공개계획(2018. 7. 26.)
- 공개항목
  - (현 행)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 (개 선)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추가 공개
- 공개내용 : 2018. 9. 1.일 계약체결 분부터 우선 적용
- 공개시기 : 착수계 제출 이후(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공개대상 :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건설공사(계약금액 10억원 이상)

○ 확대 내용
- (취 지)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계약체결이 완료된 공사까지 원가(내역서) 공개
- (확대 대상) 2015. 1. 1. 이후 계약체결 분까지 원가공개 확대

구 분	당 초	확 대	비고
공개대상	2018. 9. 1.이후 계약체결 분	▶ 2015년 이후 계약체결 분	

※ 공사계약 체결 현황(2015~2018년, 계약금액 10억 이상)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약건수	133	25	32	47	29
계약금액(억원)	3,253	509	878	1,220	646

□ 2018. 9. 1.일 부터 공개.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경기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내역을 2018년 9월 1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내용만 공개하였으나,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계약금액을 비롯하여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5개 항목으로 공개내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와 함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일반 분양아파트의 공사원가를 공개하였고, 2018년 9월 7일부터는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까지 공개하였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공개 문제에 대하여는 시민단체와 건설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원가공개 토론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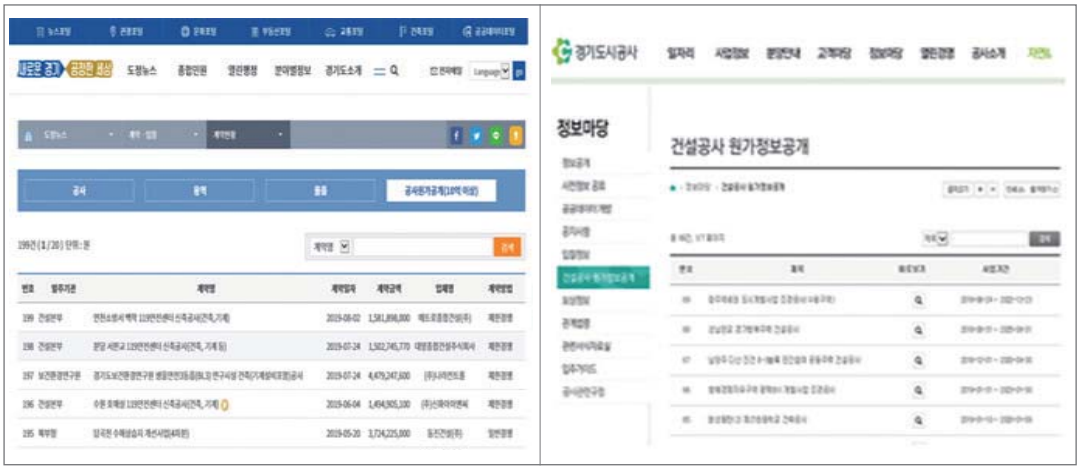
의견에 따라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공개가 민간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서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원가공개는 관련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정부도 2019년 2월 제429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3월부터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018년 9월 10일 경기도는 원가공개 파일이 읽기 기능만 있는 PDF파일 형태로서 내려받기가 안 되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엑셀 형식의 원가공개 파일을 추가로 게재하고 파일 다운로드 기능도 추가하였으며, 2020년 7월 말 기준 경기도 221건(1조 9,275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 83건(2조 1,634억 원) 등 총 304건(4조 909억 원)을 공개하고 있다.

[표 3-2] 경기도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원가공개로 인한 건설사의 영업 침해 우려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건설사의 영업비밀 침해, 중소건설사의 손실 발생, 하도급업체의 재정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계약금액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며 경기도에서 공개하는 원가공개 대상은 계약금액에 대한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항목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의거 하도급률이 82% 미만으로는 하도급 계약체결이 불가하므로 하도급업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아울러, 건설사가 자체 노하우로 원가 절감한 부분은 원가공개대상 항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금액 대비 실제 사용한 금액의 나머지에 대하여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공공기관에는 없으며 민간의 기업정보이기에 앞서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각종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항목을 공개하는 사항으로 실제 건설사가 얼마의 돈으로 시공을 하여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에 대하여 발주처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도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원가공개는 건설사 영업 침해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090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에서도 확인하였다.

2) 원가공개 대상 확대에 대한 법률 저촉 여부

공개되는 원가내역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기존부터 공개해 온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건설업체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및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원가공개 대상을 2018년 9월 1일 이후 계약체결분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확대하여 공개하는 것에 대해 법령위반 등 우려가 있었으나, 검토결과 「지방계약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에 의거 계약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바, 종전부터 공개해 온 내용에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추가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최종 원가공개 확대를 결정하였다.

3) 원가공개 항목 확대 추진

원가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동안 공개해 온 설계내역서가 원가계산서 · 공종별집계표만 해당됨에 따라 공종별 단가 비교 및 산출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내역서의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단가 대비표까지 전체를 공개하였으며, 공사품질 및 적정시공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시방서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공사목록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아울러, 설계내역서 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내역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공종별 단가'와 그동안 공개 자료를 분석한 '원가공개 사례분석 자료' 까지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와 편리함을 높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원가공개제도는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함께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하수급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건설공사 분야의 공정경제 체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4.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로 도민에게 깨끗한 자연환경 환원

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이재건

- 추진배경 : 하천 · 계곡 내 불법 상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추진내용 : 하천 · 계곡 불법시설 철거 및 도민 환원
- 문제점 및 해결 : 지자체 합동 추진, 강한 근절의지 표현
- 평　　가 : 불법 없는 공정한 사회 실현

가. 추진배경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곡 내 천막, 평상, 방갈로, 식당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자릿세를 요구하는 바가지 영업행위가 수십 년간 관습적으로 계속되었고, 공공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권리금을 매매하는 행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여름 휴가철 방문객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하천의 유수소통을 막는 불법 시설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 시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었다.

반복되는 도민 피해로 계곡 내 불법시설을 이용한 상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경기도는 관내 하천 · 계곡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여론조사(2019. 8. 29.) 결과 : (도민 87%) 하천 · 계곡 불법행위 심각, (도민 90%) 불법 근절되면 하천 · 계곡 환경 지금보다 개선 기대

[표 4-1] 하천·계곡 불법시설 언론보도

[`13.7.24. SBS 8시 뉴스]	[`19.8.2. SBS 모닝와이드]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전수조사 및 철거 추진

경기도는 하천 · 계곡 불법영업의 근절을 위해 단순히 평상, 천막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평상이 설치되는 바닥, 천막 고정용 기둥 및 방갈로, 불법건축물, 교량 등 모든 불법시설물을 단속 및 철거대상으로 설정하여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적발된 불법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동시 진행토록 하여 여름 행락철 이전 불법 정비를 통한 도민환원을 추진하였다.

행정2부지사 주관 道 특별전담 TF팀을 조직하여 「하천법」 이외 「건축법」, 「산지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또한, 13회에 걸친 주기적인 대책회의, 매월 2회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파악된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시설DB 구축하여 철거완료 시까지 추적관리, 강제대집행 등 원상복구를 추진토록 하였다.

2)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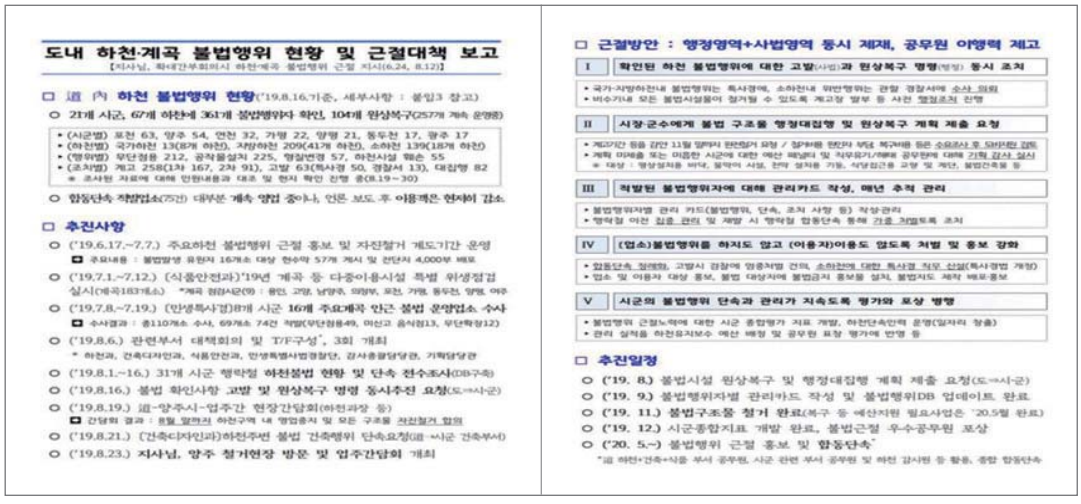
적발 철거된 하천불법행위의 재발방지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족한 시 · 군 하천 담당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불법감시업무를 수행하는 '하천계곡지킴이(19개 시 · 군 94명 채용)'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하천 · 계곡지킴이는 철거지역을 포함한 주요 계곡에 주기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 재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수익에 비해 미미한 처벌의 강화를 위하여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불법점용 벌칙 강화 관련 법령 개정 건의하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3) 청정계곡 주민환원

불법시설물이 철거된 지역을 청정계곡으로 복원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불법시설 철거지역 정비, 주민 진출입 시설 설치(50억 원),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시설 지원(340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마을공동체 지원,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연계관광 활성화 추진 등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4-2] 불법행위 근절대책 보고('19.8.27.) 및 시군별 불법시설 철거계획 보고



도내 하천·계곡 불법행위 현황 및 근절대책 보고

【지사님, 확대간부회의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지시(6.24, 8.12)】

□ 道 內 하천 불법행위 현황('19.8.16.기준, 세부사항 : 붙임3 참고)

○ 21개 시군, 67개 하천에 361개 불법행위가 확인, 104개 원상복구(257개 계속 운영)

- (시군별) 포천 63, 양주 54, 연천 32, 가평 22, 양평 21, 동두천 17, 광주 17
- (하천별) 국가하천 13(8개 하천), 지방하천 209(41개 하천), 소하천 139(18개 하천)
- (행위별) 무단점용 212, 공작물설치 225, 형질변경 57, 하천시설 훼손 55
- (조치별) 계고 258(1차 167, 2차 91), 고발 63(특사경 50, 경찰서 13), 대집행 82

※ 조사된 자료에 대해 단원내용과 대조 및 현지 확인 진행 중(8.19~30)

○ 합동단속 직할업소(75건) 대부분 계속 영업 중이나, 언론 보도 후 이용객은 현저히 감소

□ 추진사항

○ ('19.6.17.~7.7.) 주요하천 불법행위 근절 홍보 및 자진철거 계도기간 운영

■ 주요내용 : 불법행위 유원지 16개소 대상 현수막 57개 게시 및 전단지 4,000부 배포

○ ('19.7.1.~7.12.) (식품안전과)'19년 계곡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 위생점검 실시(계곡183개소) *계곡 점검시군(9) : 광주, 고양, 남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동두천, 양평, 여주

○ ('19.7.8.~7.19.) (민생특사경)8개 시군 16개 주요계곡 안근 불법 운영업소 수사

■ 수사결과 : 총110개소 수사, 69개소 74건 적발(무단점용49, 미신고 음식점13, 무단확장12)

○ ('19.8.6.) 관련부서 대책회의 및 T/F구성', 3회 개최

*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식품안전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감사총괄담당관, 기획담당관

○ ('19.8.1.~16.) 31개 시군 행락철 하천불법 현황 및 단속 전수조사(DB구축)

○ ('19.8.16.) 불법 확인사항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 동시추진 요청(도→시군)

○ ('19.8.19.) 道-양주시-업주간 현장간담회(하천과장 등)

■ 간담회 결과 : 8월 말까지 하천구역 내 영업중지 및 모든 구조물 자진철거 합의

○ ('19.8.21.) (건축디자인과)하천주변 불법 건축행위 단속요청(道→시군 건축부서)

○ ('19.8.23.) 지사님, 양주 철거현장 방문 및 업주간담회 개최

□ 근절방안 : 행정영역+사법영역 동시 제재, 공무원 이행력 제고

I 확인된 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사법)과 원상복구 명령(행정) 동시 조치

- 국가·지방하천내 불법행위는 특사경에, 소하천내 위반행위는 관할 경찰서에 소산 의뢰
- 비수기내 모든 불법시설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계고장 발부 등 사전 행정조치 진행

II 시장·군수에게 불법 구조물 행정대집행 및 원상복구 계획 제출 요청

- 계고기간 등을 감안 11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철거 / 철거비용 산정 후 소요예산 확보 등
- 계획 미제출 또는 이행한 시군에 대한 예산 페널티 및 직무유기/태만 공무원에 대해 기획 감사 실시

※ 대상 : 영상정보를 바탕, 불법여부 사실, 단속 실시를 기준, 식당업근용 고발 및 계산, 불법건축물 등

III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리카드 작성, 매년 추적 관리

- 불법행위자별 관리 카드(불법행위, 단속, 조치 사항 등) 작성관리
- 행락철 이전 집중 관리 및 재발 시 행락철 합동단속 통해 가중 처벌토록 조치

IV (업소)불법행위를 하지도 않고 (이용자)이용도 않도록 처벌 및 홍보 강화

- 합동단속 정례화, 고발시 검찰에 엄중처벌 건의, 소하천에 대한 특사경 직무 신설(특사경법 개정)
- 업소 및 이용자 대상 홍보, 불법 대상자에 불법금지 홍보물 설치, 불법자도 계약 배포·홍보

V 시군의 불법행위 단속과 관리가 지속되록 평가와 포상 병행

- 불법행위 근절노력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 지표 개발, 하천단속인력 운영(일자리 창출)
- 관리 실적을 하천유지보수 예산 배정 및 공무원 표창 평가에 반영 등

□ 추진일정

○ ('19. 8.) 불법시설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계획 제출 요청(도→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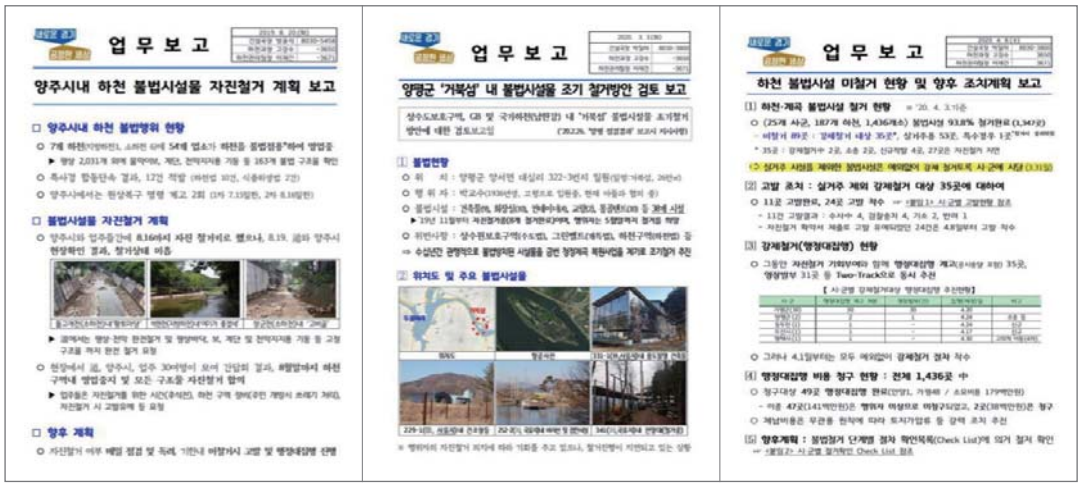
○ ('19. 9.) 불법행위자별 관리카드 작성 및 불법행위DB 업데이트 완료

○ ('19. 11.) 불법구조물 철거 완료(복구 등 예산지원 필요사업은 '20.5월 완료)

○ ('19. 12.) 시군종합지표 개발 완료, 불법근절 우수공무원 포상

○ ('20. 5.~) 불법행위 근절 홍보 및 합동단속

"道 하천·건축·식품 부서 공무원, 시군 관련 부서 공무원 및 하천 감시원 등 활용, 종합 합동단속



업 무 보 고

양주시내 하천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계획 보고

□ 양주시내 하천 불법행위 현황

□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계획

□ 향후 계획

업 무 보 고

양평군 '거북섬' 내 불법시설물 조기 철거방안 검토 보고

[1] 불법현황

[2] 위치도 및 주요 불법시설물

업 무 보 고

하천 불법시설 미철거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1]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 현황

[2] 고발 조치 : 실거주 제외 강제철거 대상 35곳에 대하여

[3] 강제철거(행정대집행) 현황

[4]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현황 : 전체 1,436곳 中

[5] 향후계획 : 불법철거 단계별 점차 확인목록(Check List)에 의거 철저 확인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실무상의 어려움

시 · 군이 단속권한을 갖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단속인력의 부족과 단속의지도 없는 상황이었다. 단속인원 1~2명이 하천시설공사, 하천점용허가와 같은 일반 행정업무와 단속업무를 병행하였으며, 또한 불법업소가 많은 지역일수록 저항이 크다보니 단체장들은 단속에 부정적 입장으로 그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십 년간 불법점유와 영업이 계속되다 보니 업주들도 불법점유를 당연히 여기고 있었고, 매년 단속은 반복되었으나, 수익에 비해 처벌이 미미하여 단속의 효과도 없는 상황으로 큰 곳은 여름 한철 성수기 수입만 수억 원에 달해 권리금도 수억에 거래되고 있으나 실제 단속에 따른 벌금은 2~3백만 원에 불과, 단속 후 시설철거도 단순히 평상 천막만 치워 놓았다가 다음해 다시 설치를 반복하였다.

2) 해결을 위한 노력

관리소관과 상관없이 경기도 31개 시 · 군 내 19개 국가하천, 497개 지방하천, 2,008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추진, 동일 기준으로 단속함으로서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우수 추진 시·군 대상 포상, 예산 등 지원 등 道의 권한을 활용하여 시 · 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견인하였다.

자진철거하지 않는 불법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시행함으로써 불법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수십 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과 회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철거의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도, 시 · 군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불법은 하지도 말고 이용도 하지 않도록 인식전환을 위한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하였다.

[표 4-3]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 언론보도

- '업소 점유했던 용인 수지 고기리 계곡 시민 품으로' (뉴스1 `19.9.19.)
- '불법시설 몸살 앓던 (포천 백운, 양주 장흥)계곡, 산책로, 쉼터, 꽃길 새 단장' (동아 `20.2.6.)
- '불법 판치던 남한산성 계곡, 관광자원으로 조성된다' (SBS `20.4.8.)
- '가평군 '가평천 생태관광하천 조성사업' 탄력' (국민일보 `20.4.19.)
- '동두천 탑동계곡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공용 캠핑장 조성' (경인일보 `20.2.6.)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내 모든 하천 내 불법점용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철거 추진, 도, 시 · 군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2020년 6월 30일 기준, 도내 198개 하천에서 불법시설물 11,390건 중 98.7%에 해당하는 11,239건에 대해 철거를 완료하였다.

불법시설이 철거된 하천·계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들 시작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놓게 되었다.

5. 기획부동산 투기차단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 추진배경 : 도정핵심과제 8번,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
- 추진내용 : 기획부동산의 투기차단, 부동산 거래 불법(편법)행위 적극 대처
- 문제점 및 해결 : 선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평　　가 :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 공정경기 실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기획부동산에서 개발이 어려운 토지(임야)를 과장 광고하여 투자자를 모집, 편법(지분)으로 분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획부동산에 대한 단속 · 처분규정이 미비하였다.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 및 과열 현상에 편승하여 탈법 · 투기적 부동산 거래 행위 성행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게재(광고)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다운(down) 신고하거나, 주택 자금조달계획을 거짓 신고하여 취득 · 양도 · 증여세 등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경기도는 2019년 4월 KBS, JTBC 등 각종 언론에서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 투기 관련 보도 후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하였다. 2019년 5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유인수가 많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의 22필지 7,844건에 대한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고,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등 4,40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다. 기획부동산을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령 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경기연구원에 '기획부동산의 실태와 경기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2020년 3월 11일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임야(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방안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한 후, 2020년 5월 4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본격 홍보에 나섰다.

[사진 5-1] 토지거래허가구역(상적동)

[사진 5-2] 정책 브리핑('20.5.4.)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의 토지거래 중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78,514건 4,071필지를 전수 조사하였고,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44개의 법인을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이후 전수조사 DB를 바탕으로 '경기부동산포털' 內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매수하면 '주의', 토지분양을 시작하면 '위험'으로 알려주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야의 공유지분 거래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였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 후, 도 전역 29개 시·군 211.98㎢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공고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표 5-1] 기획부동산 주의보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2)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경기도는 2018년 7월, 9월에 부동산 허위매물 처분규정 신설, 집값 담합 처분규정의 신설을 건의하였다. 2019년 8월 20일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으며, 2020년 8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이전이라도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11월 4일 전국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 및 지원을 하기로 협약하였다.

이후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시·군 업무 담당자와 협회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하였고,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근절 홍보 스티커를 3만장 제작하였고 중개의뢰서 서식을 배부하였다.

또한 허위매물 게재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행정처분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정지 및 명단공개를 추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였다.

[사진 5-3]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업무협약('19.11.4.) 및 홍보스티커

3)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경기도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이었다.

특별조사 결과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7억4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경기도는 2020년 상반기에도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3,503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3억4천6백만 원을 부과, 친인척 간 매매신고 등 거래가격이 의심되는 155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을 위한 노력

기획부동산은 그동안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 피해자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해주는 등 합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고발을 취하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기획부동산 수사업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법인 말소를 하는 등 책임회피를 하여 매수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는 도민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했고, 그에 대한 대책이 선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었다. 시 · 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이어 도 전역 29개 시 · 군 211.98㎢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 공고하였다.

2020년 1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기획부동산이 편법분양(쪼개기)을 하기 전에 도민에게 알려주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 및 송치 경험이 풍부한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를 방문하여 기획부동산의 구체적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도정 핵심과제로 지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에 대한 조사, 행정처분, 선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무이하다.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역시 전국 최초이며, 타 시·도에서 뒤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역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런 경기도의 노력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며, 그간 추진해 온 사업의 보완 및 업데이트 등의 노력을 지속한다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6. 광역시 · 도 최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출범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안전관리팀장 양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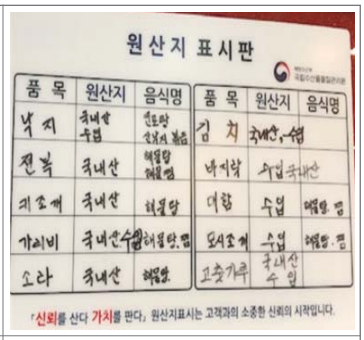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생활적폐청산 · 공정경기추진단 추진과제
- 추진내용 : 2019년 28개 시 · 군 원산지표시 감시원 127명 운영
- 평　　가 : 먹거리 투명성 확보 및 공공일자리 창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는 법률에서 정하는 품목 및 표시방법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2020년 도내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업은 약180천곳, 식료품 도 · 소매업은 약25천 곳으로 매년 신규 창업 및 폐업으로 인해 원산지표시 계도 · 홍보대상이 증가하고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적발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부정유통 적발건수 (`17)3,951→(`18)3,917→(`19)4,00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진 6-1]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미표시, 거짓표시)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활수산물 원산지 미표시</td>
<td>원산지 혼동우려 표시</td>
<td>원산지 이중(국내산, 수입산)표시</td>
</tr>
</table>

이에 경기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농축수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전국 광역시 · 도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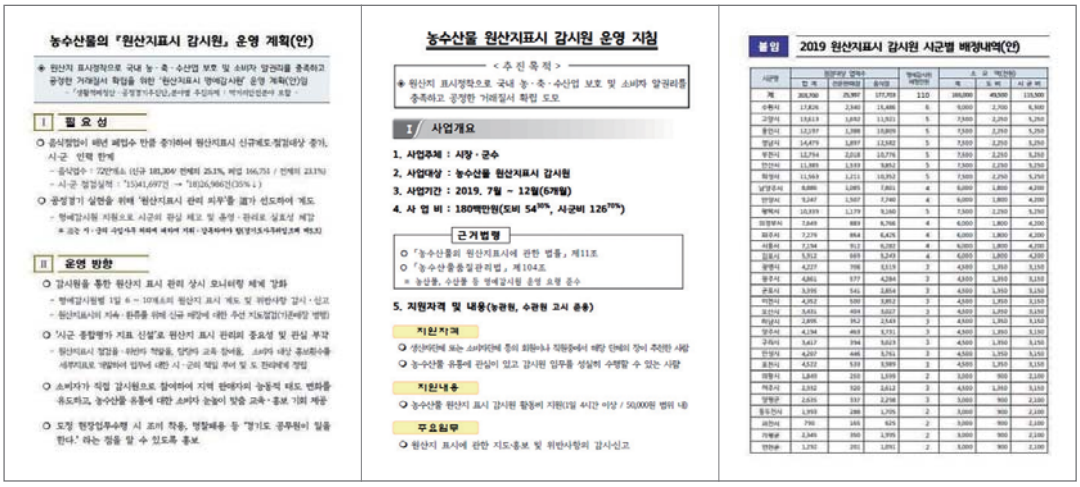
초로 도입하는 것으로써 감시원을 통한 원산지표시 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판매자의 능동적인 원산지표시 이행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도입 및 운영지침 마련

경기도는 2019년 5월 28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운영을 위한 사업절차 및 시행방법,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으로 배포하였다. 이후 2019년 6월 1차 추가경정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도내 28개 시·군으로 교부하면서 본격적인 감시원 운영사업을 시행하게 된다.(3개 시·군은 자체 감시원 활용)

[표 6-1]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침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계획(안)

◈ 원산지 표시정착으로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 및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안)임

Ⅰ 필 요 성

○ 음식점업이 해년 폐업수 만큼 증가하여 원산지표시 신규제도·점검대상 증가, 시·군 인력 한계

- 음식업수 : '22년도(신규 181,304' 전체의 25.1%, 폐업 166,751 / 전체의 23.1%)
- 시·군 점검실적 : '15년1,697건 → '18년6,960건(35% ↓)

○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자를 넓게 선도하여 제도

- 명예감시원 지원으로 시·군의 관심 제고 및 홍보·관리로 실효성 제고

Ⅱ 운영 방향

○ 감시원을 통한 원산지 표시 관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명예감시원별 1일 6 ~ 10개소의 원산지 표시 제도 및 위반사항 감시·신고
- 원산지표시의 지속·확대를 위해 신규 배업에 대한 주선 지도점검(기존대상 병행)

○ '시·군 종합계획 지표 신설'로 원산지 표시 관리의 중요성 및 관심 부각

- 원산지표시 점검을 · 위반자 적발을, 집중과 교육 강화를, 소비자 대상 홍보확수를 세부지표로 명확하게 제한 시·군의 책임 부여 및 도 전략계획 정립

○ 소비자가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판매자의 능동적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 맞춤 교육·홍보 기회 제공

○ 도정 행정업무수행 시 조례 작동, 명함배용 등 "경기도 공무원이 일을 한다." 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홍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침

< 추 진 목 적 >

◈ 원산지 표시정착으로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 및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도모

Ⅰ 사업개요

1. 사업주체 : 시장·군수
2. 사업대상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3. 사업기간 : 2019. 7월 ~ 12월(6개월)
4. 사 업 비 : 180백만원(도비 54$^{30\%}$, 시군비 126$^{70\%}$)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4조
※ 농산물, 수산물 등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준수

5. 지원자격 및 내용(농관원, 수관원 고시 준용)

지원자격

○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중의 회원·농·축·수산업에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 농수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감시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지원내용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비 지원(1일 4시간 이상 / 50,000원 범위 내)

주요임무

○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붙임 2019 원산지표시 감시원 시군별 배정내역(안)

시군명	합계	전문위원	중식업	명예감시원 배정인원	소 교 역(천원) 계	도 비	시 군 비
계	308,700	25,997	177,703	110	180,000	49,500	130,500
수원시	17,826	2,340	15,486	6	9,000	2,700	6,300
고양시	13,613	1,692	11,921	5	7,500	2,250	5,250
용인시	13,197	1,388	10,809	5	7,500	2,250	5,250
성남시	14,479	1,897	12,582	5	7,500	2,250	5,250
부천시	13,774	2,018	10,776	5	7,500	2,250	5,250
안산시	11,885	1,533	9,852	5	7,500	2,250	5,250
화성시	11,563	1,211	10,352	5	7,500	2,250	5,250
남양주시	8,886	1,085	7,801	4	6,000	1,800	4,200
안양시	9,247	1,507	7,740	4	6,000	1,800	4,200
평택시	10,939	1,179	9,760	5	7,500	2,250	5,250
의정부시	7,649	889	6,760	4	6,000	1,800	4,200
파주시	7,276	864	6,412	4	6,000	1,800	4,200
시흥시	7,194	913	6,281	4	6,000	1,800	4,200
김포시	5,912	669	5,243	4	6,000	1,800	4,200
광명시	4,227	598	3,629	3	4,500	1,350	3,150
광주시	4,861	577	4,284	3	4,500	1,350	3,150
군포시	3,936	541	3,854	3	4,500	1,350	3,150
하남시	4,352	590	3,852	3	4,500	1,350	3,150
오산시	3,431	404	3,027	3	4,500	1,350	3,150
이천시	2,896	352	2,543	3	4,500	1,350	3,150
양주시	4,194	493	3,731	3	4,500	1,350	3,150
구리시	3,417	394	3,023	3	4,500	1,350	3,150
안성시	4,207	446	3,761	3	4,500	1,350	3,150
포천시	4,522	539	3,983	3	4,500	1,350	3,150
의왕시	1,849	210	1,639	2	3,000	900	2,100
여주시	3,032	520	2,512	3	4,500	1,350	3,150
양평군	2,635	537	2,298	3	3,000	900	2,100
동두천시	1,993	288	1,705	2	3,000	900	2,100
과천시	790	165	625	2	3,000	900	2,100
가평군	2,349	350	1,999	2	3,000	900	2,100
연천군	1,292	201	1,091	2	3,000	900	2,100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원 지원자격, 주요임무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6-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운영 개요

○ 지 원 자 격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농수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감시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주 요 임 무 : 원산지표시 제도에 관한 지도 · 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 · 신고 활동
○ 지 원 내 용 : 원산지표시 감시원 활동비 50천 원 지원(1인당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2) 광역시 · 도 최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위촉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침에 따라 시 · 군에서 모집 · 선발한 112명을 2019년 7월 9일 처음으로 원산지표시 감시원으로 위촉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감시원 활동에 앞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처벌규정을 비롯한 민원 응대요령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감시원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동기부여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사진 6-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발대식 및 직무교육

3)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활동 개시

직무교육을 이수한 원산지표시 감시원들은 지역 내 음식점 및 농수산물 도 · 소매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방법, 위반 시 처벌사항 등에 지도한다. 이를 토대로 원산지표시제 이행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홍보 및 지도 · 단속 활동에 반영하

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 지하철 역사, 지역 행사장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산지 비교 전시회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6-3]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활동

다. 평가 및 발전방안

2019년, 경기도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으로 도내 음식점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체 70,024개소를 지도·점검하였다. 이는 2018년 26,986개소의 약 2.6배에 달하는 실적으로 도내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먹거리 투명성 확보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28개 시·군 지역주민 127명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지역 공공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앞으로 경기도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원으로 감시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도내 유통 농수산물의 원산지 관리 강화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7. 휴양지 불법야영장 불법행위 대거 적발

관광과 관광기반팀장 김영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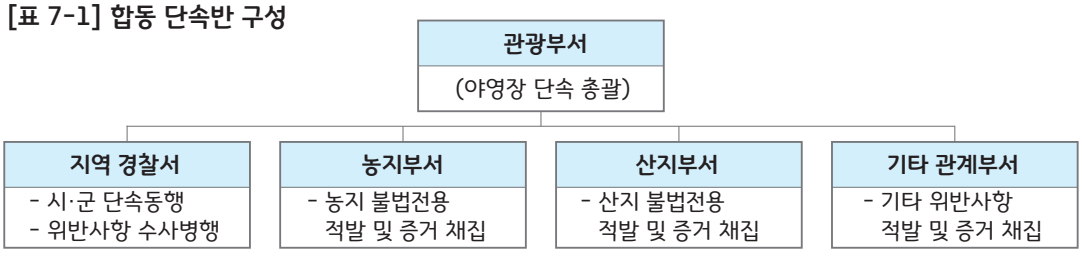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시설기준 및 안전 · 위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미등록 불법영업 운영
- 추진내용 : 미등록 야영장 현장 단속
- 문제점 및 해결 : 고발 및 행정처분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등록 유도
- 평　　가 : 시설 및 안전 · 기준에 맞춘 합법적 운영 유도를 통해 야영장을 선호하는 여가문화로 정착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5년 야영장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 야영장은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 및 안전 · 위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여전히 미등록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등록 및 안전위생기준 부합을 위해 각종 비용을 투입한 등록 야영장 인근에 불법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어, 정부 정책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신뢰 저하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 · 군(관광부서) 주관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차 온라인 확인 미등록 야영장과 현장에서 파악된 미등록 업체 또는 민원 · 제보 등으로 기 파악된 미등록 업체 건에 대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표 7-1] 합동 단속반 구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차 온라인 확인 미등록 야영장 121개소 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전 단속 9개소 제외한 11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온라인상 영업행위 증거를 근거로 영업행위의 현장 근거를 추가로 확보하되, 가능한 금요일 오후에서 일요일 낮 시간 사이에 단속을 실시하여 무혐의 처분 사례를 최소화하였고, 확보한 증거를 통해 고발 조치하고 이후 미등록 영업을 계속하는 야영장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재고발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사업자에게는 고발 및 행정처분 병과와 함께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방법 안내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표 7-2] 단속 결과

구분	단속업체수	고발 관련		등록관련		행정처분 등
		고발 완료	고발 예정	등록완료	등록예정	
경기도(총계)	**134**	**14**	**19**	**14**	**16**	
가평군	41	2	6	6	0	시정명령 1개소 과태료 2개소
고양시	1	0	0	0	0	
광주시	2	0	0	0	0	
김포시	3	0	3	0	3	
남양주시	10	0	0	1	0	
안산시	7	0	4	1	0	시정명령 4개소
안성시	4	1	0	0	1	
양주시	10	1	0	0	1	
양평군	6	0	0	0	1	
여주시	1	0	0	0	0	
연천군	3	0	0	0	2	
용인시	18	3	0	2	3	시정명령 6개소
의왕시	1	0	0	0	0	
의정부시	2	1	0	1	0	
파주시	5	2	1	0	3	
평택시	2	0	0	1	0	
포천시	18	4	5	2	2	

ㅇ 미등록 야영장 현장 단속 : 총 134개소

- 문체부 통보 121개소 중 5개소 중복 기재로 제외, 116개소 시·군에 단속토록 통보
- 시·군 자체 추가 적발 18개소

ㅇ 단속 결과 : 33개소 업체 고발 및 고발예정

※ 시·군 단속결과 외 경기도특사경에서 별도로 불법숙박시설 단속 시 8개소 적발하여 추가 조치 예정(가평1, 남양주1, 안산3, 파주1, 포천2)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홈페이지 삭제 요청) 및 등록 유도하고, 실제로 영업하지 않은 미운영 및 폐업 사항이 대다수로 확인됨

ㅇ 미등록 사유

- 입지지역 제한 및 개별법 위반 : 19개소

※ 제한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행위 불가, 산지·농지 전용 불가

- 등록의사 없음 : 14개소

※ 비용 부담(개발부담금 등)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관련부서별 행정조치

미등록 야영장 고발 후 실제 부과되는 벌금이 운영 수익에 비하여 소액(약 300만 원)이어서, 고발에도 불구하고 얻는 수익이 많아 불법야영장이 근절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관련 행정조치와 함께 토지 불법용도 변경 관련 사항, 환경 관련 법률 적용, 행정대집행 등 시 · 군 부서의 근본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2) 온라인 모니터링 방식 개선 필요

주소만으로도 불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등록야영장(기등록 · 청소년 야영장 등) 및 야영장과 관계없는 사업장(상업시설 내 오피스텔 등)이 온라인 모니터링 점검대상에 20%

이상 포함되어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1)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관광문화 형성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시 · 군, 경찰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미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 후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고발 및 행정 조치를 실시하여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고 건전한 야영장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미등록 야영장 양성화

2015년 등록 의무화 이후 야영장업 및 이용객수는 양적으로 지속 성장 중이다. 미등록 야영장 등록 방법 안내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용객을 위한 야영장 안전 강화와 함께 야영장을 선호하는 일상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해 나갈 필요가 있다.

8.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기획팀장 이태진

- 추진배경 : 공약 127번. 경기도 경제민주화 실현 기반 마련
- 추진내용 :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추진과제 26개 사업
- 문제점 및 해결 : 신규과제 발굴, 과제 추진내용 보완 · 수정 등
- 평　　가 : 더불어 사는 공정한 경기 실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에 따라 대 · 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인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1]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본과 기술의 편중 및 격차로 인해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불공정하게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영세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공공의 역할은 한층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민선 7기 경기도에서는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1) 2019.1월 KBS 신년 여론조사 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기조로 공정경제가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2) 공정경제 기본계획 개요

2018년 10월 23일 경기도는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확정하기로 하고, 위원회에 중소상공인과 노사대표, 금융기관, 기업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하였다. 한편, 관련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도의원, 실무부서를 분과별로 배치해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사항은 ▲기본계획 수립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확대 설치 ·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경제민주화를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로 용어 변경 ▲위원회 명칭을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공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였다.

[표 8-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내용

○ **1차 개정(2019.6.18.)**
- 위원회 확대(13명 →30명 이내)
- 경제민주화 계획수립 의무화(재량→매5년)
○ **2차 개정(2019.10.1.)**
- '공정경제' 개념추가
- 위원회 명칭변경(경제민주화위원회 →공정경제위원회)

2)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19년 10월 24일 경기도와 공정경제위원회는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재등용, 경제상황 등이 공정하게 유지됐을 때 나라가 흥했고, 깨졌을 때 망했다. 정부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자본, 기술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상황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격차'와 '편중' 때문이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불공정이 끊임없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이나 역량이 한쪽에 쌓여 썩지 않도록 하고, 자원이 제대로 순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을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에 열심히 협조하고,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절대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위의 권한 일부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성장의 과실이 정당하게 나눠지는 기반을 마련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공정국 신설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해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구제관련 협력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방안 마련 ▲정책교육 및 홍보강화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민선 7기 공정 2020 비전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를 목표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 ▲조세정의 실현 ▲불공정 · 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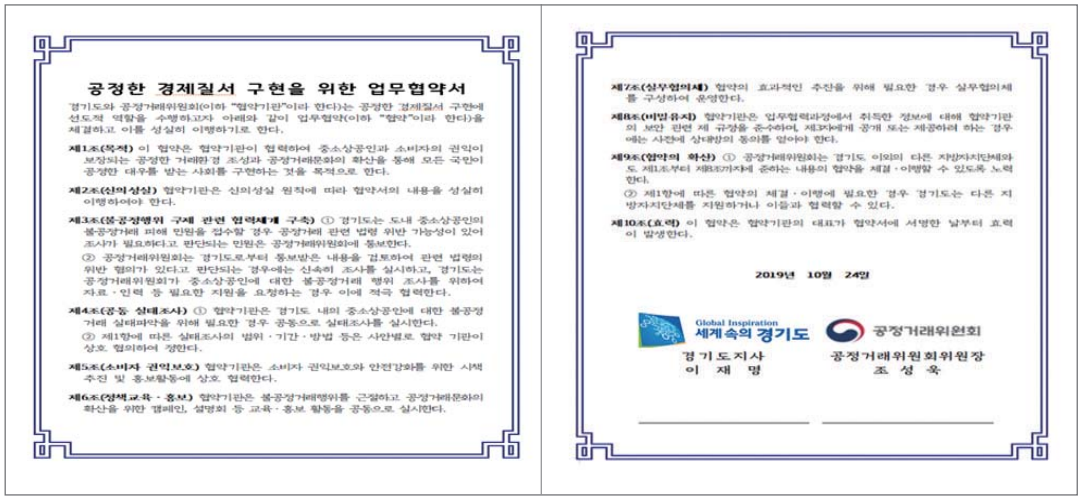
'억강부약'의 기조를 바탕으로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고액 · 상습체납 징수 강화 민생 · 경제 범죄수사 실시 등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공정 경제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공정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한 계획을 한층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였고,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진 8-1]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도-공정위 업무협약식('19.10.24.)

[표 8-2] 업무협약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서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협력하여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협약기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불공정행위 구제 관련 협력체계 구축) ① 경기도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하여 자료·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제4조(공동 실태조사) ① 협약기관은 경기도 내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기간·방법 등은 사안별로 협약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소비자 권익보호) 협약기관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안전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및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한다.

제6조(정책교육·홍보) 협약기관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 설명회 등 교육·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협약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업무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협약기관의 보안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려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자방자치단체와도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거나 이들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효력) 이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10월 24일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지사 이재명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3)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2019년 11월 21일에는 지난 10월 개정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경기도형 공정경제' 추진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소비자 피해예방 등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교수, 연구원, 법률전문가, 노동전문가 등 민간위원 24명과 도의원 2명,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1부지사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강신하 변호사(민간위원장)가 호선되었고, 위원회는 공정거래 · 상생 · 노동 · 소비자 등 4개 분과로 구성하였다.

4개 분과위원회 중 공정거래분과는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 등을, 상생분과는 도내 기업들의 동반성장 및 사회적책임 제도화 등을, 노동분과는 비정규직 문

제해결, 노사갈등, 임금문제 등을, 소비자 분과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문제해결, 권익향상 사업 등의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핵심의제를 논의하며, 발굴된 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도정연계, 사업화 검토 등 심의기구역할을 맡는다.

[사진 8-2]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위촉식('19.11.21.)

4)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마련(4개 분야 26개 사업)

경기도는 공정경제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정거래 · 상생 · 소비자 · 노동 등 총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2020년 2월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심의 · 의결했다. 추진과제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 소상공인 · 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공정거래 · 상생·소비자 · 노동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거쳐 발굴됐다.

경기도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020년 3월 31일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 소비자피해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8-3] 경기도 공정경제 기본계획 추진방향

○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공정거래 제도개선 추진

- 중소상공인의 대기업(가맹본부 등)과의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거래조건 향상 및 중소상공인 단체구성과 집단교섭권 보장 지원
-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제보센터 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 유출 근절을 위한 사전 · 사후적 지원 강화

○ 중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기반조성

- 대규모 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 강화 및 도시계획차원의 대형유통점 진출규제 확대
- 골목상권 노후 상점가의 특성을 분석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 지원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보호

○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자동차 수리 시 고비용의 OEM부품(순정부품) 사용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품 선택권 보호를 위한 대체부품사용 활성화 추진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한 집합건물 관리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추진

○ 노동권 보호활동 강화 및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공무직원 노동조건 개선 추진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신규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회적 포럼 운영
-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및 자율·책임 경영 보장을 위한 노동이사제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활임금 확대 추진

먼저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 · 가맹 · 유통 · 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 및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들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진출규제,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 예방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경기도형 일터혁신사업,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포럼 운영 사업을 통해 공정한 노동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해 각 분야별 사업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관련 신규 의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신규과제 발굴 어려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과 역할 등에 대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제 주체 간에 갈등 해소, 경제적 · 사회적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민선7기 공약사업인 경제민주화 기반조성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중소상공인 · 시민단체 · 노동전문가 · 교수 등으로 민간주도의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형 공정경제” 추진과제 26개(공정거래 10, 상생7, 소비자 4, 노동 5), 사업비 3,037.45억 원 규모의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 권한 부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개선에 한계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불공정사례, 특히 가맹 · 유통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에서는 감독권한 부재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

통 ·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수도권공정경제 협의체를 통하여 공동 대응을 하는 한편, 국회 · 정부(공정위)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시역량 공유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정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매 5년마다 수립을 의무화하고 민간주도의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을 통해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20~'24)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한 것은 경기도지사 권한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 지역산업 · 중소기업 등의 경제주체들 간의 발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앞으로 공정경제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경제 추진과제의 발전과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9.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개인사업장 조사 및 체납처분

조세정의과 광역체납2팀장 기이도

- 추진배경 : 납세회피 체납자 명의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대한 조사 필요
- 추진내용 : 경기도 전 시 · 군으로,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확대 및 체납처분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시 · 군 인력부족 극복 및 영세한 사업장의 고충에 대한 지원
- 평　　가 :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한 사업장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구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는 민선7기 조세정의 실현공약(22번)에 따라 납세자 불편 · 불만을 최소화 하고 체납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체납기동반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였다. 도내 31개 시 · 군과 함께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하여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징수 등 맞춤형 체납징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4개 권역) 월례회의를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권역별 월례회의에서는 고액체납자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최선의 징수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새로운 징수사례와 최신 판례 등을 토론하고 있다.

[사진 9-1] 광역체납기동반 권역별 월례회의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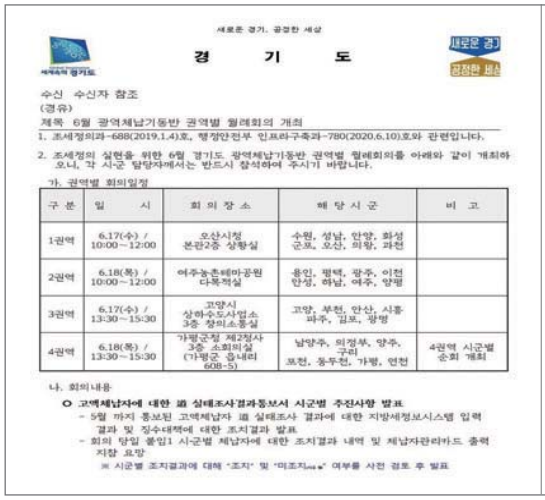
1권역
(오산시청 2층 상황실)

2권역
(여주농촌테마공원 다목적실)

3권역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창의소통실)

1권역
(가평군청 제2청사 소회의실)

[표 9-1] 광역체납기동반 권역별 월례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 기 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6월 광역체납기동반 권역별 월례회의 개최

1. 조세정의과-688(2019.1.4).호, 행정안전부 인프라구축과-780(2020.6.10).호와 관련입니다.

2.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6월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권역별 월례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시·군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역별 회의일정

구 분	일 시	회 의 장 소	해 당 시 군	비 고
1권역	6.17(수) / 10:00~12:00	오산시청 본관2층 상황실	수원, 성남, 안양, 화성 군포, 오산, 의왕, 과천	
2권역	6.18(목) / 10:00~12:00	여주농촌테마공원 다목적실	용인, 평택, 광주, 이천 안성, 하남, 여주, 양평	
3권역	6.17(수) / 13:30~15:30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3층 창의소통실	고양, 부천, 안산, 시흥 파주, 김포, 광명	
4권역	6.18(목) / 13:30~15:30	가평군청 제2청사 3층 소회의실 (가평군 읍내리 608-5)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4권역 시군별 순회 개최

나. 회의내용

○ **고액체납자에 대한 ㅍ 실태조사결과등보서 시군별 추진사항 발표**
- 5월 까지 통보된 고액체납자 ㅍ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입력 결과 및 징수대책에 대한 조치결과 발표
- 회의 당일 불입1 시·군별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 및 체납자관리카드 출력 지참 요망

※ 시군별 조치결과에 대해 "조치" 및 "미조치ㅍㅍ" 여부를 사전 검토 후 발표

6월 권역별 광역체납기동반 월례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6. 17.(수)~ 6. 18.(목)
○ 목 적 : 6월 권역별 광역체납기동반 정례회의 개최
○ 참 석 자 : ㅍ시·군 광역체납기동반 총 62명

구분	일시	회의장소	해당시군	비고
1권역 (15)	6.18.(수) / 10:00~12:00	오산시청 본관2층 상황실	수원(1), 성남(1), 안양(1), 화성(1) 군포(1), 오산(3), 의왕(1), 과천(1)	광역체납1팀(3) 행안부(2)
2권역 (14)	6.19.(목) / 10:00~12:00	여주농촌테마공원 다목적실	용인(1), 평택(1), 광주(1), 이천(2) 안성(1), 하남(1), 여주(1), 양평(1)	광역체납1팀(3) 행안부(2)
3권역 (15)	6.18.(수) / 13:30~15:30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3층 창의소통실	고양(1), 부천(1), 안산(1), 시흥(1) 파주(풍창), 김포(1), 광명(1)	광역체납2팀(7) 행안부(2)
4권역 (18)	6.19.(목) / 13:30~16:30	가평군청 제2청사 3층 소회의실	남양주(2), 의정부(1), 양주(1), 구리(1), 포천(1), 동두천(1), 가평(1), 연천(1)	광역체납2팀(7) 행안부(2)

※ 팔호안은 참석인원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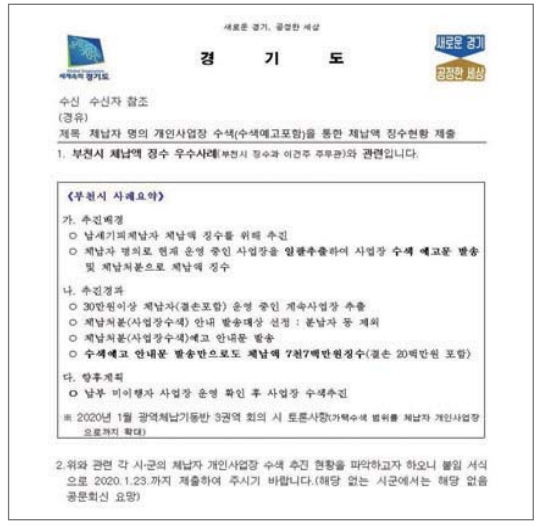
□ 회의총평
○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중인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체납회수등급 시범분석 결과) 설명회를 통해 진행상황 전달 및 의견수렴
○ 합동 동산공매 개최에 따른 감정평가 업체 선정 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객관적 평가 지표 및 시·군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선정

〈 ★ 6월 월례회의 현안사항 〉
①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 빅데이터 시범과제 체납회수등급 설명회
② 고액체납자 ㅍ 실태조사결과 통보서 시·군별 추진사항 발표
③ 체납처분 관련 심판결정 및 판례 사례 공유
④ 합동 동산 공매 관련 감정평가 업체 선정
⑤ 언택트(비대면) 징수기법 관련 토론

2020년 1월 광역체납기동반 3권역 월례회의 시, 부천시에서는 新 징수사례로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가 상당수 있고, 사업장 수색 예고만으로도 징수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경기도 광역체납 2팀은 회의를 통하여 31개 전 시 · 군에 대하여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을 통한 징수실적을 조사하기로 하였고, 조사결과 6개 시 · 군(부천, 고양, 화성, 의정부, 안성, 김포)에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와 부천시에서는 개인사업장 32개를 수색하여 177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사업장 수색 예고문 644건을 발송하여 98백만 원(161건)을 징수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31개 전체 시 · 군과 합동으로 2020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광역지방정부 전국 최초로 체납된 개인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표 9-2] 체납자 명의 개인사업장 수색 (수색예고문) 징수사례 조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 기 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체납자 명의 개인사업장 수색(수색예고포함)을 통한 체납액 징수현황 제출

1. **부천시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부천시 징수과 이건주 주무관)와 관련입니다.

《부천시 사례요약》

가. 추진배경
○ 납세기피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추진
○ 체납자 명의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일괄추출**하여 사업장 **수색 예고문 발송**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

나. 추진경과
○ 30만원이상 체납자(결손포함) 운영 중인 계속사업장 추출
○ 체납처분(사업장수색) 안내 발송대상 선정 : 본납자 등 제외
○ 체납처분(사업장수색)예고 안내문 발송
○ **수색예고 안내문 발송만으로도 체납액 7천7백만원징수**(결손 20백만원 포함)

다. 향후계획
○ **납부 미이행자 사업장 운영 확인 후 사업장 수색추진**

※ 2020년 1월 광역체납기동반 3권역 회의 시 토론사항(가택수색 범위를 체납자 개인사업장으로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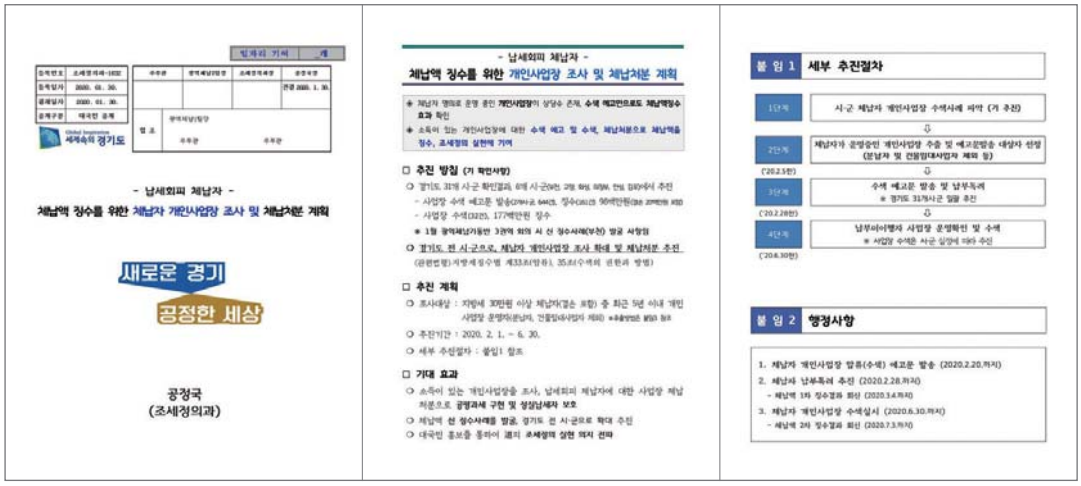
2.위와 관련 각 시·군의 체납자 개인사업장 수색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2020.1.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없는 시군에서는 해당 없음 공문회신 요망)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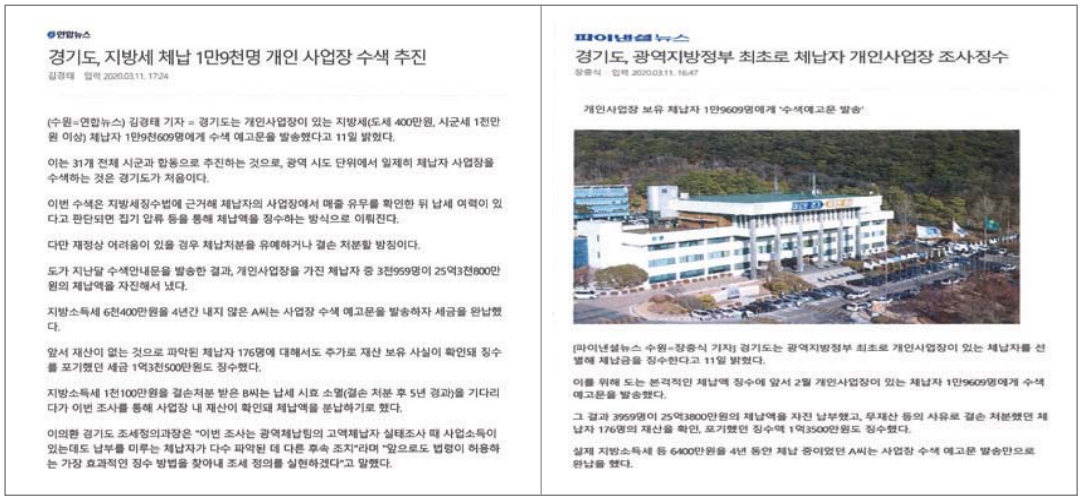
1)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 계획 수립

경기도는 2020년 1월 체납자 명의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추진 절차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결손포함)이며, 조사방법은 납세회피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에 수색예고문 발송 및 납부독려, 사업장 수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표 9-3]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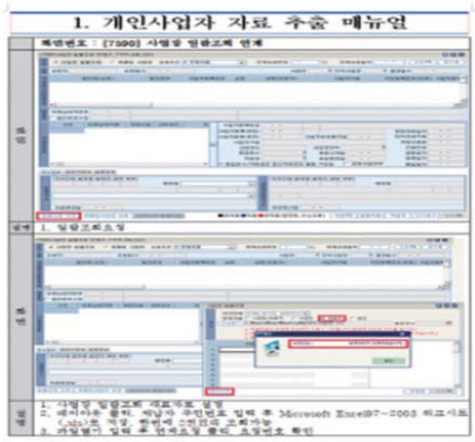
[표 9-4] 체납자 사업장 수색 언론보도



2) 개인사업장 수색대상자 선정 및 자료 추출 매뉴얼 배포

경기도는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수색을 위해 표준지방세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 및 수색예고서 발송 등을 포함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31개 시 · 군에 배포하다.

[표 9-5] 개인사업장 수색대상자 자료 추출 매뉴얼 및 압류(수색) 예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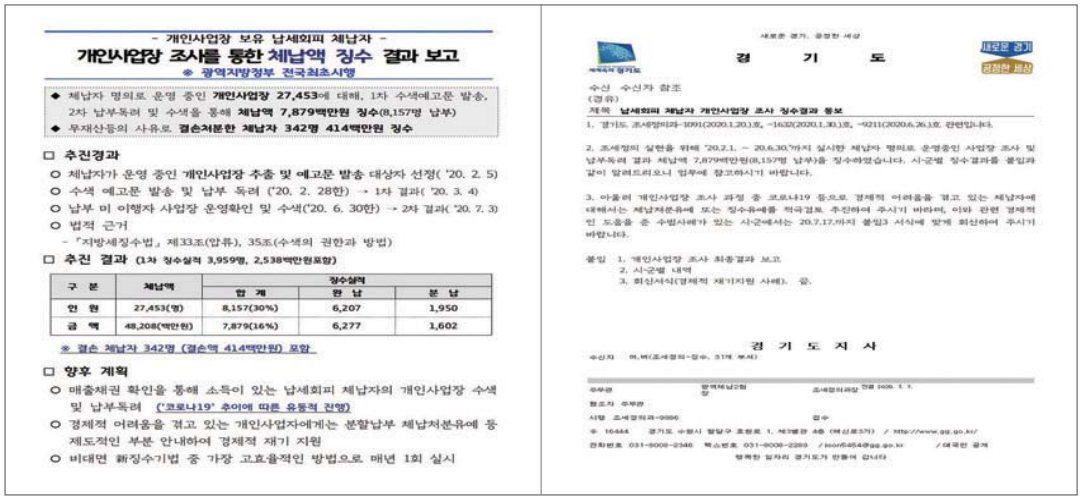


3) 납세회피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 실시

경기도와 31개 시 · 군에서는 체납자 명의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장 27,453개를 선정하여 1차로 수색예고문을 발송하고 2차로 납부독려 및 수색을 실시하였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5개월 간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독려 및 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8,157명, 7,879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특히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체납자 342명에 대하여도 414백만 원을 징수하게 되었다.

구 분	체납액	징수실적		
		합 계	완 납	분 납
인 원	27,453(명)	8,157(30%)	6,207	1,950
금 액	48,208(백만원)	7,879(16%)	6,277	1,602

[표 9-6]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결과 보고서



- 개인사업장 보유 납세의피 체납자 -

개인사업장 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 결과 보고

※ 광역지방정부 전국최초시행

◆ 체납자 명의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장 27,453**에 대해, 1차 수색예고문 발송, 2차 납부독려 및 수색을 통해 **체납액 7,879백만원 징수**(8,157명 납부)
◆ 무재산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체납자 342명 414백만원 징수**

□ **추진경과**
○ 체납자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장 추출 및 예고문 발송** 대상자 선정('20. 2. 5)
○ 수색 예고문 발송 및 납부 독려 ('20. 2. 28한) → 1차 결과('20. 3. 4)
○ 납부 미 이행자 사업장 운영확인 및 수색('20. 6. 30한) → 2차 결과('20. 7. 3)
○ 법적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 **추진 결과** (1차 징수실적 3,959명, 2,538백만원포함)

구 분	체납액	징수실적		
		합 계	완 납	분 납
인 원	27,453(명)	8,157(30%)	6,207	1,950
금 액	48,208(백만원)	7,879(16%)	6,277	1,602

※ 결손 체납자 342명 (결손액 414백만원) 포함

□ **향후 계획**
○ 매출채권 확인을 통해 소득이 있는 납세의피 체납자의 개인사업장 수색 및 납부독려 ('코로나19' 추이에 따른 융통적 진행)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등 제도적인 부분 안내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
○ 비대면 新징수기법 중 가장 고효율적인 방법으로 매년 1회 실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 기 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납세의피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 징수결과 통보**

1. '경기도 조세정의과-1091(2020.1.20.)호, -1632(2020.1.30.)호, -9211(2020.6.26.)호 관련입니다.

2.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1. ~ 20.6.30.'까지 실시한 체납자 명의로 운영중인 사업장 조사 및 납부독려 결과 체납액 7,879백만원(8,157명 납부)을 징수하였습니다. 시·군별 징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인사업장 조사 과정 중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또는 징수유예를 적극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경제적인 도움을 준 수범사례가 있는 시·군에서는 20.7.17.까지 붙임3 서식에 맞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사업장 조사 최종결과 보고
2. 시·군별 내역
3. 회신서식(경제적 재기지원 사례). 끝.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00,00(조세정의과장, 31개 부서)

우)
주무관
협조자 주무관
시행 조세정의과-9986 접수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제2별관 4층 (매산로3가)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2346 팩스번호 031-8008-2289 / leon5454@gg.go.kr / 대국민 공개
행정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시·군의 인력부족 문제

도내 시 · 군에서는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장에 대한 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체납징수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인력부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에서는 개인사업장 수색의 세부추진절차, 자료추출 방법, 수색예고서 등 매뉴얼을 제작 · 배포하여 행정력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현장수색은 매출채권조사를 통해 시·군의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영세사업장에 대한 수색의 어려움

체납자는 조사대상 사업장의 상당수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마른 수건에 물 짜기'라고 비유하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수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장수색은 매출채권 조사를 통해 소득이 확인되는 체납자 개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3) 코로나 19발발로 가뜩이나 장사도 안돼 생계유지도 힘든데 체납액 조금 있다고 개인영업장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반발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 · 검사권)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조사과정을 통해 실제 코로나 19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비 지원,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호응을 얻었다. 일시납부는 어렵지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체납자도 다수 있어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수색예고문 발송만으로도 다수의 체납자가 자진 납부를 하였으며,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체납자도 수색을 통한 재산을 확인하여 포기했던 체납액도 징수하였다. 예를 들면 화성시 소재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받은 후 소득이 있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효소멸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개인사업자 조사를 통해 재산이 확인되어 매월 체납액을 분납하였다.

이러한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수색은 전국 광역시도 단위 최초의 도-시 · 군 합동 징수사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매출채권을 통해 소득이 있는 납세회피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수색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 등 제도적인 혜택을 안내하여 경제적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0.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역량강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장 김교석

- 추진배경 : 과학수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체계 구축
- 추진내용 : 디지털 포렌식, 불법광고전화차단시스템, 디지털인증서비스, 전자수사자료표 도입 · 운영
- 문제점 및 해결 : 신규 수사기법과 변화에 대한 우려, 지속적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평　　가 : 신속 · 정확한 범죄사실 입증, 현장대응능력 강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산업혁명을 거듭하면서 범죄의 형태도 더욱 지능화되고, 컴퓨터 전문가가 증거를 은닉하는 등 범죄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자기기를 분석하는 기법의 도입은 물론, 현장 수사관의 수사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다.

첫 번째 변화는 경기도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축하여 범죄수사 시 발견한 전자기기를 직접 분석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신속하게 찾도록 하는 것이다. 구축 이전에는 발견한 전자기기를 분석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90일 넘게 소요되어 수사 일정에 차질이 있었다.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수사관으로는 첨단화 되어가는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존 수사방식을 개선하여 불공정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사경 수사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사법기관을 포함하여 조사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

경기도는 최근 변화한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수사에 있어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 증거물의 압수 및 분석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19년 5월 29일 경기도청 내 휴대폰, 컴퓨터, CCTV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분석관 2명을 배치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표 10-1] 디지털 포렌식 흐름도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압수수색 현장에 분석관이 같이 동행하여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 · 수집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여 31,000%가 넘는 살인적인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보조금 인건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거된 사회복지 운영 비리를 밝히는 등 특별사법경찰 수사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19.5.29.부터 '20.7.1.까지 총 155개 증거물 분석)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과정의 준수사항 및 절차를 담은 예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 · 분석 및 관리지침」을 2020년 1월 2일 발령하여 증거분석의 절차를

명문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AWCS) 구축·활용

불법 대부업(사채) 및 청소년 유해 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됨에 따라 도민의 피해사례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특정 전화번호에 3초마다 자동으로 신호를 발송해 통화 자체를 봉쇄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 1월 7일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0-2] 불법 광고전단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절차>	불법 광고물 수거 정보수집	▶ 미스터리 쇼핑	▶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등록	▶ 불법광고전화 이용중지 요청
	번화가, 학교주변 등 주요 거점 중심 수거	성매매 · 불법 사채 현장 수사	불법 광고전화 차단 시스템 (단기)	불법광고전화 영구이용중지 요청
<대상>	불법 성매매 · 사채 광고물(전단지 등)	불법 성매매 · 사채 이용 전화번호	불법 성매매 · 사채 광고 전단지	불법 성매매 · 사채 광고물
<역할>	- 기간제 노동자 - 시 · 군	- 道(공정특사경)	- 道(공정특사경)	- 道⇒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체) - 道⇒이동통신사(성매매)

위의 표와 같이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는 대부업의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소를 통해 번호중지를 하고 있지만 성매매업소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없어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 4월 19일 통신 3사(KT · SKT · LGT)와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 달인 5월 21일 MVNO(별정통신사업자)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였다.

[사진 10-2] 통신3사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MOU 체결('19.4.19.)

추진결과 2020년 6월 말 기준 총 3,142건(대부 2,164, 성매매 978)의 번호를 차단하여 불법광고전화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도입

문서, 음성, 사진 등의 전자파일은 컴퓨터 전문가에 의해 위 · 변조가 쉽고, 그 여부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취급을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므로 확보하는 증거물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에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 도입을 2019년 9월 국과수 디지털분석과와 협의하였으며, 2020년 3월 1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개요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표 10-3] 국과수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개요도

디지털 인증 서비스는 전자지문(해시 값)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적용, 휴대폰과 컴퓨터 캡처기능을 활용하여 수사 목적으로 촬영하는 모든 디지털 파일(사진 · 동영상 · 음성)에 대해 전자지문(해시 값)을 산출하여 국과수 인증서를 제공해 수사관이 수집하는 모든 디지털 증거물에 대해 객관성 ·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4)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 도입

경기도는 수사자료표 작성('19년 수사자료표 작성 · 송부 : 1,387건)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수사자료표의 분실 위험을 방지하고자 추진하였다. 2019년 7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도입을 위해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2020년 3월 1일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시행하였다. 기존 수사자료표의 작성 · 송부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0-4] 기존 수사자료표 송부 절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 피의자 신문 · 종이수사자료표 작성	→	· 검찰 사건 송치 · 경찰청 수사자료표 우편(등기)송부	→	· 인적도용여부 확인 · 수사경력자료 반영

수사관은 행정망을 통해 공유되는 주민등록원지 기반 DB와 생체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 · 실시간으로 경찰청에 전송 ·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사자료표의 작성 · 송부 절차의 간소화로 수사효율을 증대시켰으며, 향후 범죄 · 수사 경력이 보다 신속하게 반영되어 각종 자격심사(채용, 연금 등)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0-5] 전자수사자료표 포털(E-CRIS)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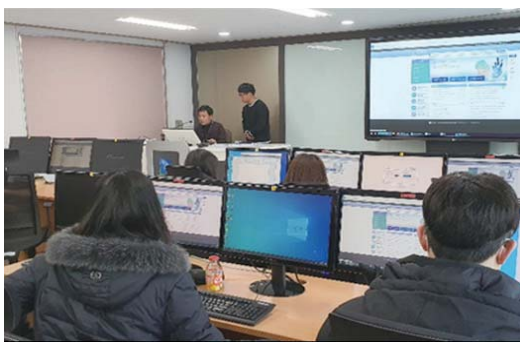
1) 신규 수사기법과 변화에 대한 우려

업무의 변화에 따라 기존 수사기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어서 수사관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범죄의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불공정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한 과학수사기법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또한 현행 증거물 취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최근 판례와 수사기록이 유실되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의해 이미 다수의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축 · 도입 ·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므로 이러한 불편함은 감내해야 할 과제다.

2) 지속적 교육을 통한 수사관 전문성 강화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수사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수사팀 단위로 디지털 증거물 취급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다수의 사건에 대하여 일선 수사관과 공동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3월 1일 도입한 전자수사자료표와 인증서비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각 시스템 관리자는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전교육을 받았으며, 2020년 2월 17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을 대상으로 국과수 담당자와 함께 도입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진 10-3] 수사관 대상 사전교육('20.2.17.)



라. 평가 및 발전방안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을 통해 고도화된 지능범죄에 적극대응하고 있으며, 수사관과 현장 공동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수사역량은 수사결과로 증명하고 있다.

자동전화발신차단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을 통해 전화번호 차단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불법광고전단지 살포는 2019년 1월 가동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과수 디지털 인증 서비스 도입을 통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인증서로써 중립성을 증명할 수 있어 수사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수사자료표 작성 시 피의자의 신원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수사자료표를 온라인으로 전송함으로써 분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선두로 하는 과학수사 도입은 기존 수사업무 방식을 개선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가능하게 해 더욱 많은 불공정범죄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외부 수사기관의 시스템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업무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11.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제도 도입

건설정책과 건축기술팀장 김완신

- 추진배경 :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1.14.)
- 추진내용 : 공공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 · 안전관리,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점검 활동
- 문제점 및 해결 : 단순 단속위주의 현장점검 지양 및 안전관리 분야 등 전문성 강화
- 평　　가 : 공공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첫 운영,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5년 2월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2015년 3월 용인 도로공사 교량 붕괴사고, 2017년 8월 평택국제대교 거더 붕괴사고, 2018년 9월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등 언론을 통해서 건설공사의 관리체계 미흡과 부실시공 등으로 발생한 건설 사고를 접할 수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중앙부처 등은 관련 대책과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부분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도시기반시설이거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편의시설이어서 안전성과 견실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건설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제때 공급할 수 없어 시민의 복리증진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물의 지반침하, 콘크리트 균열, 마감파손, 누수 발생 등과 건설기술인 산업재

해 발생 등 건설현장의 건설사업관리 부실로 인한 인적 · 물적 손실의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설계의 오류, 공사감독자의 전문성 부족, 페이퍼 건설업체의 난립, 도급 · 하도급 업체의 관련 법령 숙지 미흡, 촉박한 공사기간, 낮은 수주금액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문제점으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舊 책임감리자, 시공감리자)의 형식적인 감리업무를 꼽을 수 있다.

또한, 감리업무가 문서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공사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감리활동의 부족 및 업무로 인한 현장 확인 및 지도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건설현장 감리 기능 유명무실로 제도의 보완 강구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공감리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이에 시민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품질 · 안전 요구수준 증대와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건설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을 목표로 민선 7기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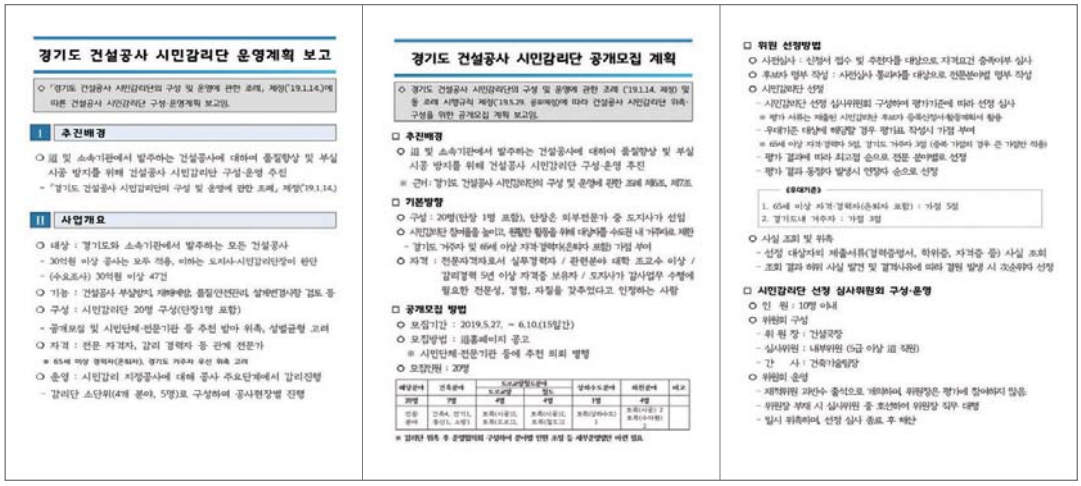
1)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첫 구성·운영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공사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살펴봄으로써 부실설계 · 시공 방지, 건설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 건설공사 중 전체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의무 감리대상으로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등 4개 분야이다.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 · 안전관리,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감리단은 감리결과에 따라 위법 · 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분, 제도 개선을 요청 ·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발주자는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감리단의 시정지시에 적극 응해야 한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감리단 참여자를 모집했다. 참여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중 건설 등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시민, 관련 분야 대학 ·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시민, 민간 감리경력 5년 이상인 시민 등으로 이후 경기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 토목시공, 전기, 통신, 소방,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안전관리, 기계설비 분야 등 총 26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표 11-1]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계획(안) 및 공개모집 계획(안)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계획 보고

◇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9.1.14.)에 따른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구성·운영계획 보고임.

I 추진배경

○ 道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구성·운영 추진
-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9.1.14.)

II 사업개요

○ 대상 :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 30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적용, 이하는 도지사·시민감리단장이 판단
- (小오프사) 30억원 이상 47건
○ 기능 :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
○ 구성 : 시민감리단 20명 구성(단장1명 포함)
- 공개모집 및 시민단체·전문기관 등 추천 받아 위촉, 성별균형 고려
○ 자격 : 전문 자격자, 감리 경력자 등 관련 전문가
※ 65세 이상 경력자(존치자), 경기도 거주자 우선 위촉 고려
○ 운영 : 시민감리 지정공사에 대해 공사 주요단계에서 감리진행
- 감리단 소단위(4개 분야, 5명)로 구성하여 공사현장별 진행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공개모집 계획

◇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1.14. 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19.5.29. 공포예정)에 따라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위촉·구성을 위한 공개모집 계획 보고임.

□ 추진배경
○ 道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구성·운영 추진
※ 근거: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7조

□ 기본방향
○ 구성 : 20명(단장 1명 포함), 단장은 외부전문가 중 도지사가 선임
○ 시민감리단 참여를 높이고, 특별한 활동을 위해 대상자를 수도권 내 거주자로 제한
- 경기도 거주자 및 65세 이상 지역 경력자(존치자 포함) 가점 부여
○ 자격 : 전문자격자로서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 / 감리경력 5년 이상 자격증 보유자 / 도지사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공개모집 방법
○ 모집기간 : 2019.5.27. ~ 6.10.(15일간)
○ 모집방법 : 道홈페이지 공고
※ 시민단체·전문기관 등에 추천 의뢰 병행
○ 모집인원 : 20명

대상분야	전체분야	도지사		상하수도분야	비전문가	비고
		전문분야	일반			
20명	7명	4명	4명	1명	4명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토목시공, 토목도로	토목시공, 토목철도		토목(시공) 2 토목(상하수도) 1	

※ 감리단 위촉 후 운영과정에서 분야별 인원 조정 등 세부운영방안 마련 필요

□ 위원 선정방법
○ 시민심사 : 신청서 접수 및 추천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
○ 후보자 명부 작성 : 시민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별 명부 작성
○ 시민감리단 선정
- 시민감리단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심사
※ 평가 서류는 적출된 시민감리단 후보자 중복지정사항 활용예정
- 후보자는 대상에 해당할 경우 평가표 작성시 가점 부여
※ 65세 이상 지역 경력자 5점, 경기도 거주자 3점 (중복 가점의 경우 큰 가점만 적용)
-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 순으로 전문 분야별로 선정
-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연장자 순으로 선정

<후보대기순>
1. 65세 이상 지역 경력자(존치자 포함) : 가점 5점
2. 경기도내 거주자 : 가점 3점

○ 사실 조회 및 위촉
- 선정 대상자의 제출서류(경력증명서, 학위증, 자격증 등) 사실 조회
- 조회 결과 허위 사실 발견 및 결격사유에 따라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선정

□ 시민감리단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인 원 : 10명 이내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건설국장
- 심사위원 : 내부위원 (5급 이상 3명 직원)
- 간 사 : 건축기술팀장
○ 위원회 운영
- 제척위원 해당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위원장 부재 시 심사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 직무 대행
- 필요 위촉하며, 선정 심사 종료 후 해촉

2)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현장점검

2019년 7월 8일 '1기 시민감리단'의 위촉식을 갖고 출범하였고, 2019년 7월 8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된다.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여 2019년 11월 말까지 오포-포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안산천 고향의 강 사업 등 총 26개 현장을 살폈다. 첫 운영인 만큼 단순 단속차원을 넘어 현장의 불편 · 건의사항을 청취해 이에 대해 조언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도로분야는 교량 및 도로, 절개지 등 품질 및 안전관리, 철도분야는 지하철역사 이용자 편의시설 품질 및 안전관리, 하천분야는 하천기본계획 및 홍수위 등 주민불편사항, 건축분야는 건축 품질 및 안전관리, 하자 등이다. 점검 결과, 도로 111건 하천 99건 철도 66건 건축 51건 등 총 327건의 보완사항을 발견,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지도하고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감리단의 활동방식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 단속과 처분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현장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방향까지 세심히 지도해 줌으로써, 품질 높은 공사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었다.

[사진 11-1]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위촉 및 간담회

[사진 11-2]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현장점검 활동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시민감리단 조례(안)에 대해 관련업계에 의견수렴 시 법적 근거 부족과 행정력 낭비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시민감리단의 활동으로 인해 현장 관계자의 업무 혼선과 공기지연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과도한 업무 개입 등을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관계자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단순 단속 위주의 현장점검이 아닌 현장관계자와 의견교환, 보완할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지도 등을 통해 건설업계에서 반발을 줄여야 할 것이다. 보다 안전한 건설 환경에서 품질 높은 공공시설물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9년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관리소홀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이 두드러지면서, 건설현장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분야와 기계설비분야의 시민감리단 보강이 필요하였다.

2020년 1월 22일 건설안전관리 전문가 등 6명의 시민감리단을 추가 위촉하여 현장점검 시 공사현장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교육 등 이행사항 확인을 통해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 예방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하도록 할 것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시민의 눈을 통해 도내 공공시설물 공사현장의 감리기능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건설현장 관계자들 스스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민감리단 제도를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입하여 건설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 · 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 도입 예정으로, 정부 차원의 건설정책 제도 마련에 보탬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다.

12. 최대 ‘공정무역도시’ 인증 달성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마케팅지원팀 전희연

- 추진배경 : 상생하는 경제, 성장하는 경기도
- 추진내용 : 경기도의 ‘공정무역도시’ 인증 달성
- 문제점 및 해결 : 공정무역 민관 협의 체계 토대 마련
- 평　　가 : 공정무역 인식 확산 및 판로 확대 기반 마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적으로 노동착취, 이윤 추구가 아닌 저개발국 생산자의 삶을 개선하는 무역이득의 공정분배 및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정무역이 그 대안으로써 성장하고 있다.

공정무역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공정무역마을 운동이다.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전 세계적인 공정무역 커뮤니티 운동으로서,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 상품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서로 다른 36개국 2,000여 곳의 마을과 도시가 ‘공정무역마을’의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인구규모, 산업규모, 무역규모 등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의 역할을 위해 윤리적 소비운동의 일환으로 도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무역 관련 법 · 제도적 기반조성, 시민사회와 협

력을 통해 경기도의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지역 의회의 지지 - 조례 제정 및 결의안 채택

2016년 9월부터 경기도청 공무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공정무역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모여 공정무역 경기포럼을 수차례 개최하였다. 공정무역 경기포럼은 공정무역을 학습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수평적 기구였다. 포럼에서는 2017년 공정무역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경기도의 공정무역을 만들어 갈 정책들을 논의하고 계획하는 등 경기도 공정무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였다.

2017년 9월 26일에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경기도 국제 공정무역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공정무역 컨퍼런스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국제공정무역 컨퍼런스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아이쿱생협, 한국공정무역협의회과 주관하여 열린 것으로 공정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이 함께 처음으로 경기도 공정무역 행사를 만들어 갔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공정무역 컨퍼런스에서는 경기도가 공정무역 마을운동을 추진하고 경기도의회 및 시민사회가 이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선언식이 진행되었다.

[사진 12-1] 경기도 공정무역 포럼('16.9.) 및 국제 컨퍼런스('17.9.26.)

2017년 11월에는 마침내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의 발의로 공정무역사업 기본계획 및 행 · 재정적 지원범위 등을 규정한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공정무역 관련 법 ·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2) 지역 매장의 접근성 확장 - 공정무역상품 판매처 확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매장과 카페, 음식점, 단체급식 등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해야 한다. 최초 인증에서는 최소 1개 이상의 판매처가 필요하며 순차적으로 기준을 높여 2년 단위로 재인증하게 된다. 1차 재인증시에는 인구 250,000명 당 1개의 매장이 필요하며 2차 재인증시에는 인구 200,000명 당 1개의 매장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총인구가 13,557천 명이었고 인구 250,000명 당 1개의 매장 기준을 만족하려면 543개의 공정무역 매장이 필요했는데, 560개의 매장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인증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지역 매장의 접근성 확장을 위하여 공정무역 판매대를 제작하여 숍인숍 판매와 공정무역 제품구매를 지원하였고, 시흥 바라지마켓 내 경기도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직영매장을 설치 ·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시·군 보조금을 통한 시 · 군 공정무역 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매장을 시 ·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진 12-2] 시흥 바라지마켓 내 공정무역 직영매장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Fair Trade by GGD 판매대</td>
<td>공정무역 제품 홍보대</td>
</tr>
</table>

3) 지역 공동체에서의 공정무역 제품 활용 지원 - 공정무역 포트나잇 및 인식 확산 교육

2017년 공정무역 선포식 이후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가 진행되었다. '공정무역 포트나잇(FortNight)'이란 지난 1997년부터 유럽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소개하고 생활 속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움직임으로, 공정무역 제품 판매, 강연, 캠페인 등의 행사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NGO 등이 함께 참여해 이뤄지는 '14일'간의 캠페인이다. 여기서 포트나잇(Fortnight)이란 'Fourteen Night'에서 유래된 단어로, '2주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8년에는 도내 10개 시 · 군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에는 도내 15개 시·군, 200여 개 커뮤니티가 참여하였다.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에서는 도민들이 도내 카페, 생협, 학교, 교회, 도서관 등 마을 곳곳에서 공정무역 콘서트, 도서전, 생산자와의 만남, 찾아가는 교실, 공정무역 티파티(Tea Party)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2019년에는 경기도·하남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서를 받았고, 도내 15개 시가 공정무역 도시 추진을 선언했다.

[사진 12-3] 2019년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이러한 포트나잇 행사 외에도 2018년부터 공정무역 인식확산 사업을 통해 공정무역 커뮤니티 활성화, 공정무역 제품을 활용한 티파티 개최, 학생 · 일반 시민 대상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등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4) 미디어 홍보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미디어 홍보를 진행하였다. 공정무역 소개 기사 보도(기호일보), 공정무역 캠페인 광고 및 전문가 인터뷰(YTN 라디오), 공정무역 포트나잇 홍보 영상 G버스 게재, 공정무역 유기농 면생리대 관련 토크쇼 제작(동아TV)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도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 수행하였으며, 학교, 지역커뮤니티 등에서 온라인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여 경기도 G-seek 캠퍼스에 탑재하였다.

[사진 12-4] 착한 생산! 착한 소비! 공정무역 바로알기(온라인 강좌)

[표 12-1] 2019년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및 커뮤니티 확산 성과

○ 5개 기관 공모·선정을 통한 道 전역 공정무역 교육사업 실시
- 초·중·고 및 일반시민 대상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
공정무역 티파티,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 등 실시

○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300학급/7,350명)

○ 캠페이너 양성과정(33회/203명 수료)

○ 공정무역 티파티(11회/178명)

○ 공정무역 커뮤니티 조성(112회/1,212명)

5) 공정무역 위원회 구성

2018년 5월에는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1기 경기도 공정무역 위원회에는 공무원, 도의원, 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가 13명이 위촉되었으며 공정무역 추진계획 수립 · 평가 및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아왔다.

[표 12-2]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개요

○ 근　　거 :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 성　　격 : 심의 및 자문위원회

○ 임　　기 : 2년(연임가능)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기능
-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제6조에 따른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로컬 페어트레이드란 지역 원료와 저개발국가의 공정무역 생산품을 결합하는 신개념 공정무역으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공정무역 사업이다. 공정무역과 로컬푸드라는 두 개의 가치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실질적인 제품으로 탄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베트남 공정무역 캐슈넛과 경기도 콩으로 만든 '캐슈두유'를 선보였다. 이어 2019년에는 여주 쌀, 이천 고구마, 파주 장단콩과 베트남 공정무역 카카오를 결합한 '더 귀한 초콜릿 3종' 등을 기획 · 개발한 바 있다. 경기도형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은 경기도주식회사의 공정무역 브랜드 'Fair Trade by GGD'로 출시되어 그 품질이 보증되고 있다.

[사진 12-5]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캐슈두유) 및 Fair Trade by GGD 마크

FAIR TRADE by GGD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시군 이해도 및 거버넌스 기반 부족 - 정책간담회 개최 및 협의체 구성 지원

시군 공무원 조직 내 공정무역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 또는 인력이 없거나,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사회가 공조하는 거버넌스가 구성되기 어려

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2019년 경기도에서는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최에 앞서 15개 시·군에 찾아가 지역 공정무역 운동가와 시군 공무원이 함께 하는 공정무역 지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공정무역 마을운동과 타 시군 공정무역 지역협의체 우수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포트나잇 준비위원회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각 지역 내에서 자발적인 민관 거버넌스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도왔다. 지역별 포트나잇 준비위원회는 지역 내 포트나잇을 준비하는 데에서 나아가, 공정무역 지역 협의체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15개 시에서 포트나잇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데 이어 6개 시에서 공정무역 협의회(성남, 광명, 남양주, 시흥, 부천, 수원)가 결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 경기도 공정무역 관련 현황 자료 및 통계 부족 - 판매처 자료 수집

경기도 공정무역 관련 현황 자료 및 통계 수집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판매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 한국공정무역 마을위원회,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담당 공무원이 공정무역 제품 판매 매장 560여 곳을 전수조사하여, 최초로 경기도 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의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인구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은 사례로 국내 공정무역마을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적으로도 2019년 WFTO(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세계공정무역기구) 총회에서 경기도 공공조달 및 공정무역 제도 발표, 경기도 공정무역 사례 소개를 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 공정무역 정책은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도민들에게 윤리적 소비를 체감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경기도 공정무역 정책의 특색은 경기도의 광역성과 생산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공정무

역정책이라는 점에 있다.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광역성, 독립적인 행정구조를 고려하여 도내 31개 시군의 공정무역마을운동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타 지역과 달리, 풍부한 도내 생산물을 활용한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국제공정무역 흐름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정무역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를 통하여 공정무역도시 인증에서 나아가 공정무역 운동을 선도하는 공정무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비전으로 삼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현재 경기도 내 공정무역공정무역제품 판매처는 약 700여 곳으로 양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했으나 상품군이 커피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판매처가 대형 프랜차이즈 및 드러그 스토어에 편중(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과 드러그 스토어가 약 70%로 공정무역 판매처의 대부분을 차지)되어 있어 질적 성장의 과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공정무역 마을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교회나 학교의 매점에 공정무역제품이 입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시군 특색에 맞는 소규모 판매처 발굴,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 내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 단체 급식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의 판로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3. 道 청사용지 복합개발 실현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 발판 마련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융합타운기획팀장 박현석

- 추진배경 :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 추진내용 :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 · 문화 · 상업 시설 등이 어우러진 융합타운을 조성, 복합개발수익의 재투자(타운 내 기반시설)를 통해 개발이익 도민환원 및 도비 절감
- 문제점 및 해결 : 국내 최초의 공공청사 부지 기반 단지형 복합개발로 관련 기관 및 주민 등의 반대, 입주기관 간 합의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으나, 시민위원회 구성 등 지속 소통, 건축협정 체결을 비롯한 입주기관 사업 여건 마련 등으로 극복
- 평　　가 : 약 2,100억 원의 복합개발수익을 재투자하여 타운 내 기반시설 전체 조성 예정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 신청사는 지난 1995년 청사 노후에 따른 행정능률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종합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으로 추진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위기로 중단되었고, 2001년 경기도의회 이전건립 권고 결의에 따라 2004년 광교 신도시에 청사 부지를 지정하고 다시 추진되었다. 그러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지자체 재정 위기, 자치단체 호화청사 논란 등으로 또다시 중단되었다.

이후 2015년 경기도의회에서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을 권고함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며 '복합개발 방식'을 계획하고 2016년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은 기존 청사시설 용지의 일부를 업무시설 및 주상복합시설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입주기관에 토지를 매각한다. 그에 따라 발생된 복합

개발수익을 활용하여 경기융합타운 내 기반시설, 도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1,090억 원의 복합개발수익 예상)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입주기관 사업 확정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었으나,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도민환원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이 본격 추진되어 2019년 GH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도서관, 주상복합 사업을 확정할 수 있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경기융합타운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적 기법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계획이다. 지자체 공유재산 복합개발의 선도적 사례이며 향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13-1]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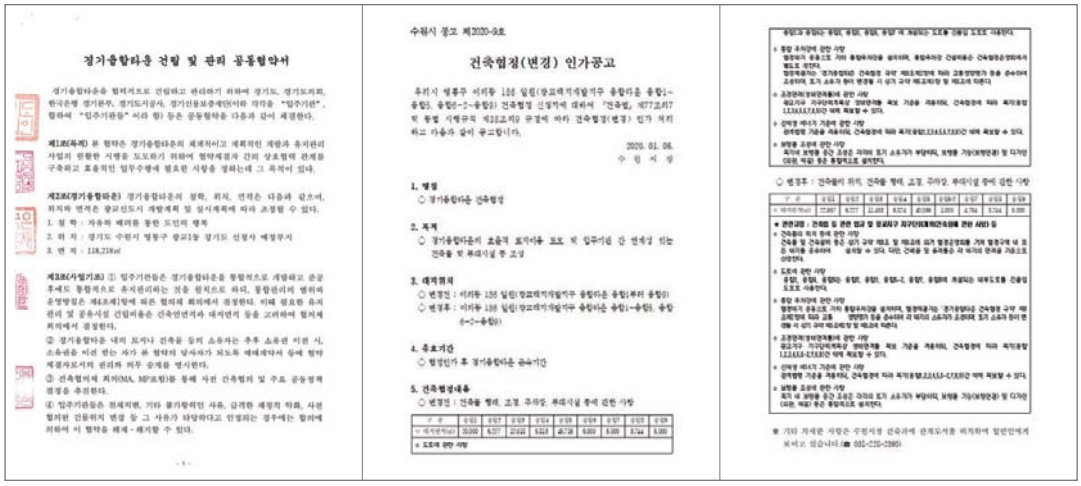
[표 13-2] 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 변경

2)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 사업추진체계 수립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3개 광역행정기관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입주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행정타운이다. 입주기관 간 통합적 설계 및 건립을 위해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공동협약에 따라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은 협의체 회의 구성 · 운영, 건축협정 및 총괄건축가(MA) 제도 도입 등 마스터플랜 실현,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및 연계성 있는 건축물 조성을 목표로 사업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3-3]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서 및 건축협정 인가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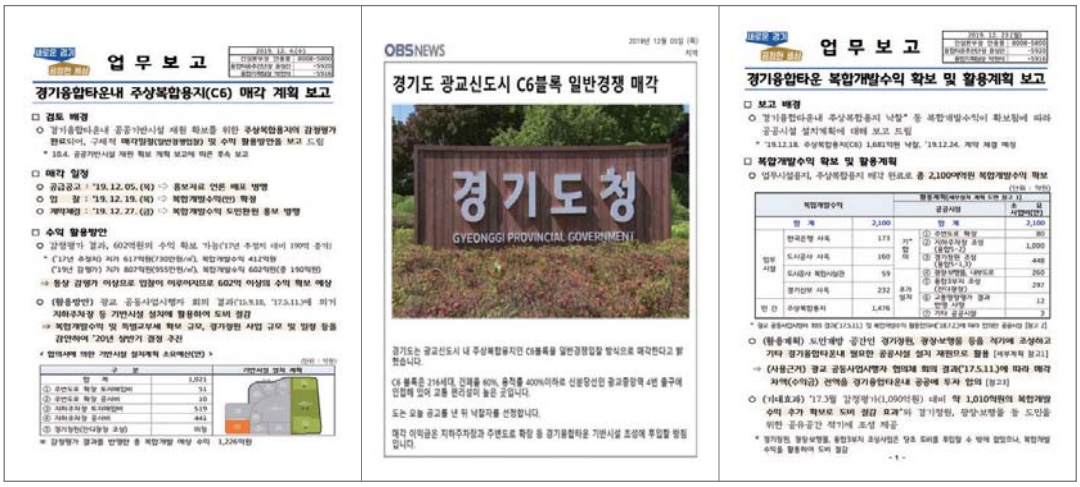
건축협정(변경) 인가공고

3) 복합개발수익(약 2,100억 원)의 재투자를 통해 도비 절감 및 개발이익 도민환원 실현

2019년 5월 경기융합타운 전체 입주기관의 사업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다. 2019년 12월 주상복합 용지의 매각방식(일반경쟁입찰) 적기 결정으로, 당초 예상한 1,090억 원보다 1,010억 원이 많은 2,100억 원의 복합개발수익을 확보하였다. 이에 경기융합타운 내 기반시설은 전부 복합개발수익만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정원, 광장 · 보행몰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기반시설을 복합개발수익으로 조성함으로써, 도민환원제의 취지와 부합하는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100여억 원의 도비 절감으로 경기도의 재정 건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4]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 확보 및 활용계획(공공시설 설치)


업 무 보 고

경기융합타운내 주상복합용지(C6) 매각 계획 보고

OBSNEWS

경기도 광교신도시 C6블록 일반경쟁 매각

업 무 보 고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 확보 및 활용계획 보고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복합개발방식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

광교지구 도 신청사 조속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경기도의 복합개발 계획 발표에 따른 수원시, 광교입주협의체 등의 강한 반발과 부정적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이에 경기도는 12차례의 주민설명회 개최, 100인의 시민위원회 구성 · 운영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사진 13-1] 주민설명회

[사진 13-2] 시민위원회

2) 입주기관 사업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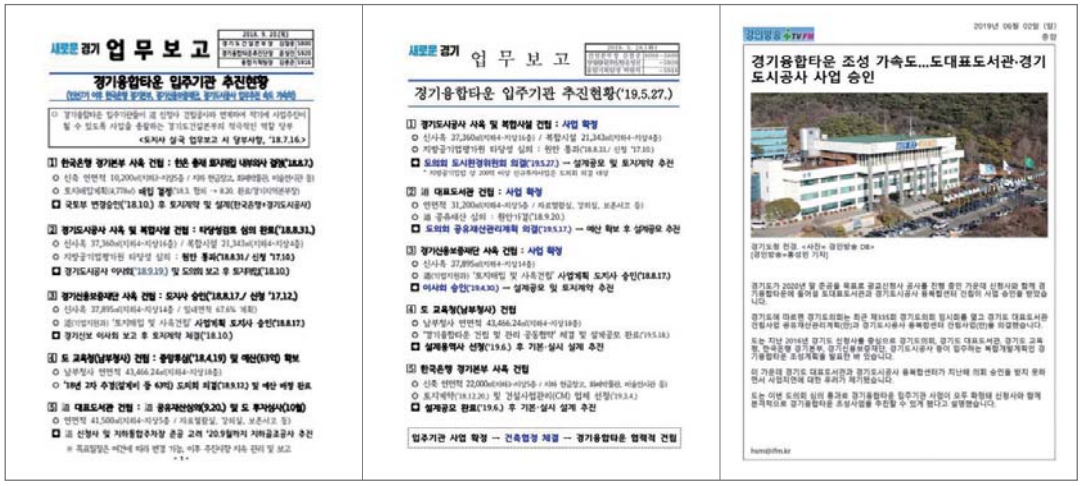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계획이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경기도는 지하통합주차장 등 입주기관과의 지하층을 통합하여 연결하는 계획으로 이듬해 9월 도 신청사 건립공사를 먼저 착공하였다. 그러나 다른 입주기관들의 사업 확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한 통합적 건립에 차질이 예상되었다.

민선 7기에 들어 경기도건설본부는 민선 7기 주요공약인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해, 입주기관들이 도 신청사 건립공사와 연계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확정을 위한 절차별 이행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도의회,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각 입주기관별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승인 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2019년 5월 모든 입주기관이 사업 확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입주기관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및 설계공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기관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파악된 입주기관들의 사업추진 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협정 변경, 입주기관 간 사업계획 조정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사업 총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13-5]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추진현황 관리 및 관련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업 무 보 고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추진현황

(입주기관 확정 현황, 문제점 및 개선, 향후 사업의 일관성 확보 방안)

○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들에 대 창업과 건립공사와 연계하여 적극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건설본부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도지사 성국 업무보고 시 당부사항, '18.7.16.>

[1] 한국콘텐 경기본부 사옥 건립 : 한은 중복 토지매입 내부이사 경매('18.8.7.)

○ 신축 연면적 10,200㎡(지하3~지상5층 / 지하 한강2호, 8m이동로, 비상전기관 등)

○ 토지매입비용(4,778억) 예산 결정('18.3. 정부 → 6.20. 한콘/경기아트센터)

■ 국토부 변경승인('18.10.) 후 토지계약 및 설계(한국콘텐+경기도시공사)

[2] 경기도시공사 사옥 및 복합사업 건립 : 타당성검토 심의 완료('18.8.31.)

○ 신사옥 37,360㎡(지하4~지상16층) / 복합사업 21,343㎡(지하4~지상4층)

○ 지방공기업법상의 타당성 심의 : 원안 통과('18.8.31./ 신청 '17.10.)

■ 경기도시공사 이사회('18.9.19.) 및 도의회 보고 후 토지매입('18.10.)

[3]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건립 : 도지사 승인('18.8.17./ 신청 '17.12.)

○ 신사옥 37,895㎡(지하4~지상14층 / 입체면적 67.6% 계획)

○ 경기융합타운의 '토지매입 및 사옥건립' 사업계획 도지사 승인('18.8.17.)

■ 경기신보 이사회 보고 후 토지계약 체결('18.10.)

[4] 도 교육청(남부청사) 건립 : 증앙투상('18.4.19) 및 예산(53억) 확보

○ 남부청사 연면적 43,466.24㎡(지하4~지상18층)

○ '19년 2차 추경(상계이 중 63억) 도의회 의결('18.9.12.) 및 예산 배정 완료

[5] 코 대표도서관 건립 : 코 중앙재산심의(9.20.) 및 도 투자심사(10월)

○ 연면적 41,500㎡(지하4~지상5층 / 자료열람실, 강의실, 보존서고 등)

■ 코 신청사 및 지하통합주차장 준공 고려 '20.9월까지 지하공고공사 추진

※ 특허절차로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이후 주민의견 서속 관리 및 보고

새로운 경기 업 무 보 고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추진현황('19.5.27.)

[1] 경기도시공사 사옥 및 복합사업 건립 : 사업 확정

○ 신사옥 37,360㎡(지하4~지상16층) / 복합사업 21,343㎡(지하4~지상4층)

○ 지방공기업법상의 타당성 심의 : 원안 통과('18.8.31./ 신청 '17.10.)

■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결('19.5.27.) → 설계공모 및 토지계약 추진

* 지방공기업법 상 3000㎡ 이상 인수추진사업은 도의회 의결 대상

[2] 코 대표도서관 건립 : 사업 확정

○ 연면적 31,200㎡(지하4~지상5층 / 자료열람실, 강의실, 보존서고 등)

○ 코 종추세상 심의 : 원안가결('18.9.20.)

■ 도의회 중앙재산관리계획 의결('19.5.17.) → 예산 확보 후 설계공모 추진

[3]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건립 : 사업 확정

○ 신사옥 37,895㎡(지하4~지상14층)

○ 경기융합타운의 '토지매입 및 사옥건립' 사업계획 도지사 승인('18.8.17.)

■ 이사회 승인('19.4.30.) → 설계공모 및 토지계약 추진

[4] 도 교육청(남부청사) 건립

○ 남부청사 연면적 43,466.24㎡(지하4~지상18층)

○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원리 공동협약" 체결 및 설계공모 완료('19.5.18.)

■ 설계용역사 선정('19.6.) 후 기본·실시 설계 추진

[5] 한국콘텐 경기본부 사옥 건립

○ 신축 연면적 22,000㎡(지하3~지상5층 / 지하 한강2호, 8m이동로, 비상전기관 등)

○ 토지매입비('18.12.26.) 및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선정('19.3.4.)

■ 설계공모 완료('19.6.) 후 기본·실시 설계 추진

입주기관 사업 확정 → 건축협정 체결 → 경기융합타운 협력적 건립

2019년 06월 02일 (일) 종합

경인방송 iTVFM

경기융합타운 조성 가속도...도대표도서관·경기도시공사 사업 승인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iTV>
(경인방송=홍성민 기자)

경기도가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공건립청사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청사와 함께 경기융합타운에 들어설 도대표도서관과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이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광역개선관리계획(안)과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사업(안)을 의결했습니다.

도는 지난 2016년 경기도 신청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 대표도서관, 경기도 교육청, 한국콘텐 경기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공사 등이 입주하는 복합개발계획인 경기융합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대표도서관과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가 지난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연내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도는 이번 도의회 심의 통과로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사업이 모두 확정된 신청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hsm@ifm.kr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융합타운 조성 사업은 공공청사 용지를 복합 개발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복합개발에 따른 수익금을 활용하여 주변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단순 청사 건립보다는 도민을 위한 공간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활력과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경기도가 개발사업 추진 시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 및 공유하고, 환원에 대한 제도화 통해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면, 도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14.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공공택지과 택지계획팀장 오병관

- 추진배경 :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및 환수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내용 :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공영개발 확대, 기부채납 기준개선, 법률개정 등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도민환원제 제도화를 위한 관련근거 마련(관련제도 개선 추진)
- 평　　가 :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함께 국토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고, 이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각종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됨으로써 소득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나아가서는 계층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일정 부분 공공의 몫으로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의 노력과 협조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공공은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필요시설의 건설을 위해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등 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도민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기도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은 서로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공공이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도민에게 환원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3기 신도시 대규모지구(7곳) 지방참여 확정 및 기본협약 체결

경기도는 3기신도시 사업지구 중 대규모지구 7곳에 신도시 역사상 최초로 지방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차례에 걸쳐 최대지방참여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고 6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 주관 지방참여 비율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지구 7곳 중 3곳(과천 과천, 하남 교산, 안산 장상)의 지방참여비율을 확정 지었고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 7곳 모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곳(하남 교산, 과천 과천, 안산 장상)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도민을 위한 3기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 4월 28일에는 하남교산지구 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 간 지분 명문화, 역할 분담 등에 대하여 확정짓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3기 신도시 대규모 7곳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해당 市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타 지구들도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진 14-1]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식('20.4.28.)

[표 14-1] 3기 신도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100만㎡ 이상) 7곳 참여

(국토교통부 2차 발표지구 / ’18.12.)	(국토교통부 3차 발표지구 / ’19.5.)
(남양주왕숙·왕숙2) 경기도, LH **(하남교산) 경기도**, LH, 경기도공, 하남도공 **(과천과천) 경기도**, 과천시, LH, 경기도공	**(고양창릉) 경기도**, LH **(안산장상) 경기도**, LH, 경기도공, 안산도공 **(부천대장) 경기도**, LH, 부천도공

2)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남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2020년 3월 12일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의 인 · 허가 및 준공, 협약기관 간 인계 · 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약 4,330억 원 규모를 남양주시의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다.

[사진 14-2]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식(’20.3.12.)

3) '공공주택 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

경기도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지원 재투자 등 도민에게 사용하기 위해 기존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다함으로써 2019년 9월 26일 3개 법률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며, 발의 이후,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개정되지 못하였으나, 경기도는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되고,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개선방안 마련

경기도는 2016년 12월 12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 · 개발밀도 ·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등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운영 중인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공공기여 비율 부담과 추진 법령이 다른 사업별로 적합한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당초 통합기준으로 운영한 두 개의 사업에 대하여 분리 및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검토

기준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안)」으로 수정 · 보완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제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정성을 고려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라 부담량이 비례하도록 개선하고 둘째, 기반시설의 효용성이 낮은 자투리형 토지 및 원형보전 공원·녹지의 기부채납을 지양하고 구역 외 기부채납 인정 및 위원회에서 공공기여로 인정되지 않는 기반시설은 공공기여시설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 · 개정되는 검토기준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금년 중 확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개발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위축 우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제·개정(안)은 개발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다양한 지역여건 및 개별 사업마다의 특성이 고려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의 부담수준 · 방법 등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용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 · 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2) 지방 사업시행자간 참여 지분 합의

경기도는 3기신도시 사업지구 중 대규모지구 7곳에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구의 지방참여 비율을 확정하였고, 이렇게 결정된 지방참여 비율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간 참여 지분을 조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 경우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아 합리적인 참여비율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업비의 계속적 증가, 주택공급 위한 추가 재원, 부동산 시장 변화 등 외부요인 대응을 감안하여 해당 시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하남 교산지구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간 참여 지분을 확정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안산 장상지구, 과천 과천지구 등 기타지구도 참여비율 합의 및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써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지 않고, 공공에 환원하여 많은 도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서, 한쪽으로 치우친 불평등한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원과 기회를 사회 곳곳에 배분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영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실현하여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정착 및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제2절 평등하고 규제없는 세상

15.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 추진

규제개혁담당관 행정혁신팀장 김연섭

- 추진배경 :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 추진
- 추진내용 : 민원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 및 절차 148건 개선
- 문제점 및 해결 :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 등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어 불합리한 민원 제도 개선
- 평　　가 : 민원서류 및 절차 148건 개선으로 민원인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에서 연간 약 190만 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1일 평균으로 약 5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전히 민원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민원인에게 과도한 민원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는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이며,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제합리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고, ‘작지만 가성비가 높은 정책’인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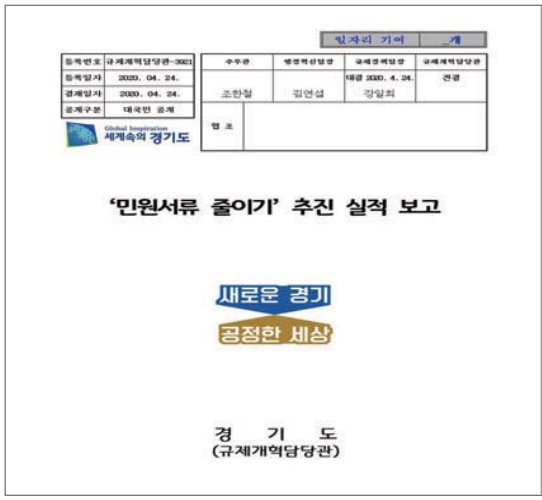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불필요한 민원서류 및 제도 148건 개선

민원서류 전수 조사, 도민 제안 공모,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적극 발굴하고, '민원서류 줄이기 TF팀' 운영 등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서류 및 절차 148건을 개선했다.

이 중 입찰 · 계약과 관련 사항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설립 및 면허 관련 40건, 임용 · 채용 관련 10건, 기타 행정 관련 사항이 28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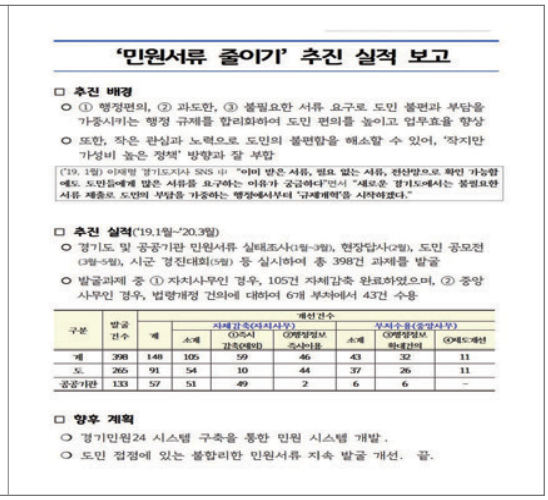
[표 15-1]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 추진 실적 보고



'민원서류 줄이기' 추진 실적 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 기 도
(규제개혁담당관)



'민원서류 줄이기' 추진 실적 보고

□ 추진 배경

○ ① 행정편의, ② 과도한, ③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도민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 규제를 합리화하여 도민 편의를 높이고 업무효율을 향상

○ 또한,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작지만 가성비 높은 정책' 방향과 잘 부합

('19.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中 "이미 받은 서류, 필요 없는 서류,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도민들에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도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

□ 추진 실적('19.1월~'20.3월)

○ 경기도 및 공공기관 민원서류 실태조사(1월~3월), 현장답사(2월), 도민 공모전(3월~5월), 시군 경진대회(5월) 등 실시하여 총 398건 과제를 발굴

○ 발굴과제 중 ① 자치사무인 경우, 105건 자체감축 완료하였으며, ② 중앙사무인 경우, 법령개정 건의에 대하여 6개 부처에서 43건 수용

구분	발굴건수	개선건수					
		계	자체감축(자치사무)			부처수용(중앙사무)		
			소계	①즉시 감축(예외)	②행정절차 축소·단축	소계	①행정절차 축소·단축	②제도개선
계	398	148	105	59	46	43	32	11
도	265	91	54	10	44	37	26	11
공공기관	133	57	51	49	2	6	6	-

□ 향후 계획

○ '경기민원24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원 시스템 개발.

○ 도민 접점에 있는 불합리한 민원서류 지속 발굴 개선. 끝.

2) 주요 개선 사례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입찰 · 계약과 관련한 민원인 제출 서류를 대폭 줄였다. 민원인이 경기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증 등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서류'에 대한 행정전산망 조회 권한을 지자체 최초로 부여받아 제출 목록에서 제외됐다.

또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우 나라장터, 중소기업구매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활용해 확인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임용 · 채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낼 때, 접수단계에 제출하던 서류를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전형 통과자만 제출하면 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채용 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증명서 및 이력서 등 불필요한 서류도 민원 제출 서류 목록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에서 정부에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 민원서류 및 제도 43건을 개선하였다. 예로 건설기계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현재 거주지가 아닌 건설기계 등록지에서만 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 재발급 지역 확대를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2021년 8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3) 불필요한 민원서류 신설 방지를 위한 사전 심사 제도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향후에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9년 9월부터는 자치법규 제 · 개정 과정에서 민원서류 제출 규정을 신설하려면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자치법규 제 ·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서류가 신설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 등으로 민원인 불편 발생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전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는 법령이나 규정 상 필요가 없는 서류 등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민원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민원인에게 과도한 민원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 및 제도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 부족,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등 변화되는 행정업무 환경에 대한 무지, 그리고 기존 관행을 변경하는 데 대한 거부감 등으로 민원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2)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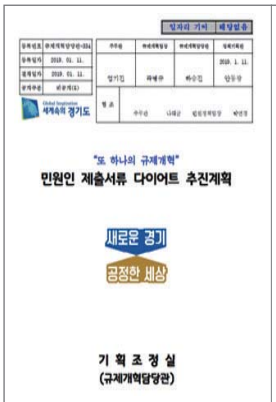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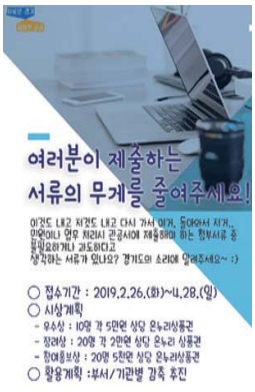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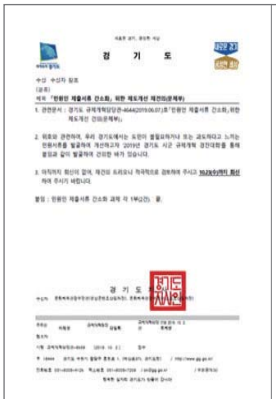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하거나,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불필요한 민원서류 및 불합리한 민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기도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민원서류를 전수 조사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발굴하고, 민원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2월 21일 민원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찾아내기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도민 제안 공모를 진행하였다. 또한 도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시와 군의 공무원들이 느끼는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찾아내기 위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5월 31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발굴한 불필요한 민원서류 및 불합리한 민원서류 중 자체 과제는 즉시 개선을 실시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 및 절차 148건을 개선했다.

[표 15-2]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 추진 내용

<table>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민원서류 전수조사
('19.1~2.)</td>
<td>민원 현장답사
('19.2.)</td>
<td>도민 공모
('19.2.~4.)</td>
<td>시·군 경진대회
('19.4.~6.)</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법령 개정 건의
('19.6.~'20.2.)</td>
<td>TF팀 운영
('19.8.~'20.2.)</td>
<td>우수사례 전파
('20.1.)</td>
<td>언론브리핑
('20.2.)</td>
</tr>
</table>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은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불필요한 민원서류 및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148건을 개선함으로써,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도민의 소

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되는 등 도민의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다.

특히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시 · 군 등에 배포하였고, 경기도가 최초로 행안부로부터 부여 받은 입찰 관련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서류'에 대한 행정전산망 조회 권한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는 등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류 줄이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통합 일원화하고 구비서류를 최소화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산 시스템 연계로 제출 서류는 줄어들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6. 입찰·계약서류 간소화 추진

회계과 계약2팀장 장태일

- 추진배경 : 도지사 지시사항('19.1.6.),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 간소화
- 추진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입찰 및 계약분야 제출서류 간소화
- 문제점 및 해결 : 중앙부처 간 가교역할 수행을 통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승인
- 평　　가 : 계약상대방 입찰참가 편의성 개선 및 행정효율성 증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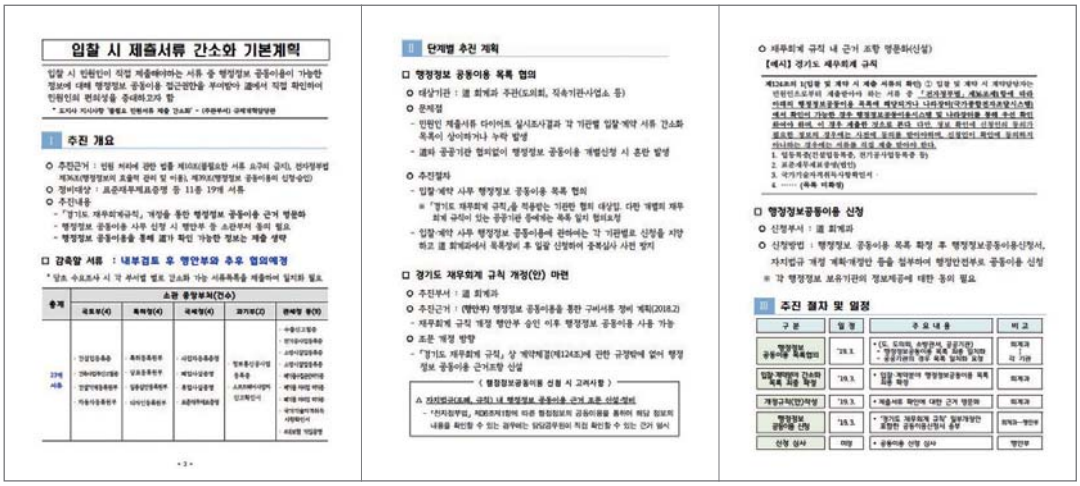
'입찰 · 계약서류 간소화'는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이 제출하고 있는 서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서류 및 계약체결을 위한 각종 서류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서류 중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열람가능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계약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

'입찰 · 계약서류 간소화'는 그간 경기도민 제안 등의 형식으로 도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숙제였던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간소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입찰 · 계약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표 16-1] 입찰시 제출서류 간소화 기본계획



입찰 시 제출서류 간소화 기본계획

입찰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클에서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

* 도지사 지시사항 '행정조 민원서류 제출 간소화' - (주관부서) 규제개혁담당관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행정효율을 위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 정비대상 :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1종 19개 서류

○ 추진내용

-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명문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신청 시 행안부 등 소관부처 동의 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얻가 확인 가능한 정보는 제출 생략

□ 감축할 서류 : 내부검토 후 행안부와 추후 협의예정

* 담당 수요조사 시 각 부서별 별로 갖소화 가능 서류목록을 제출하여 입지화 필요

순번	소관 증명부처(건수)				
	국토부(4)	복지부(4)	국세청(4)	과기부(2)	한국정 등(9)
23개 서류	· 건설업등록증 · 건축사업무신고증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 지적기술자증명서	· 회계등록증명서 · 장애등록증명서 · 일용업종등록증명서 · 다자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수출신고필증 · 전기안전관리증 · 소방시설업등록증 · 소방시설업등록증 · 위험물안전관리증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사회복지사 자격증명

- 3 -

Ⅱ 단계별 추진 계획

□ 행정정보 공동이용 목록 협의

○ 대상기관 : 道 회계과 주관(도의회, 직속기관·사업소 등)

○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실시조사결과 각 기관별 입찰·계약 서류 간소화 목록이 상이하거나 누락 발생
- 결과 공공기관 협의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별신청 시 혼란 발생

○ 추진절차

- 입찰·계약 사무 행정정보 공동이용 목록 협의

※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는 기관만 협의 대상임. 다만 개별의 재무회계 규칙이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는 목록 일치 협의로정

- 입찰·계약 사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신청을 지양하고 道 회계과에서 목록정비 후 일괄 신청하여 중복심사 사전 방지

□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마련

○ 추진부서 : 道 회계과

○ 추진근거 : (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정비 계획(2018.2)

- 재무회계 규칙 개정 행안부 승인 이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 가능

○ 조문 개정 방향

-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상 계약체결(제124조)에 관한 규정앞에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조항 신설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시 고려사항)

△ 자치법규(조례, 규칙)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조문 신설 검토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법시

○ 재무회계 규칙 내 근거 조항 명문화(신설)

【예시】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124조의 1(입찰 및 계약 시 제출 서류의 확인) ① 입찰 및 계약 시 계약담당자는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목록에 해당하거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나라장터를 통해 추진 확인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달리 확인에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직접 제출 받아야 한다.

1. 입찰등록(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등)
2.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 …… (목록 미확정)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 신청부서 : 道 회계과

○ 신청방법 : 행정정보 공동이용 목록 확정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자치법규 개정 계획·개정안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로 공동이용 신청

※ 각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필요

Ⅲ 추진 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목록협의	'19.3.	• (도, 도의회, 소방본부, 공공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 목록 최종 협의 - 공동이용의 장점 목록 일치화 요망	회계과 / 각 기관
입찰·계약분야 간소화 목록 최종 확정	'19.3.	• 입찰·계약분야 행정정보공동이용 목록 최종 확정	회계과
개정규칙(안)작성	'19.3.	• 제출서류 확인에 대한 근거 명문화	회계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19.3.	•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포함한 공동이용신청서 송부	회계과→행안부
신청 심사	미정	• 공동이용 신청 심사	행안부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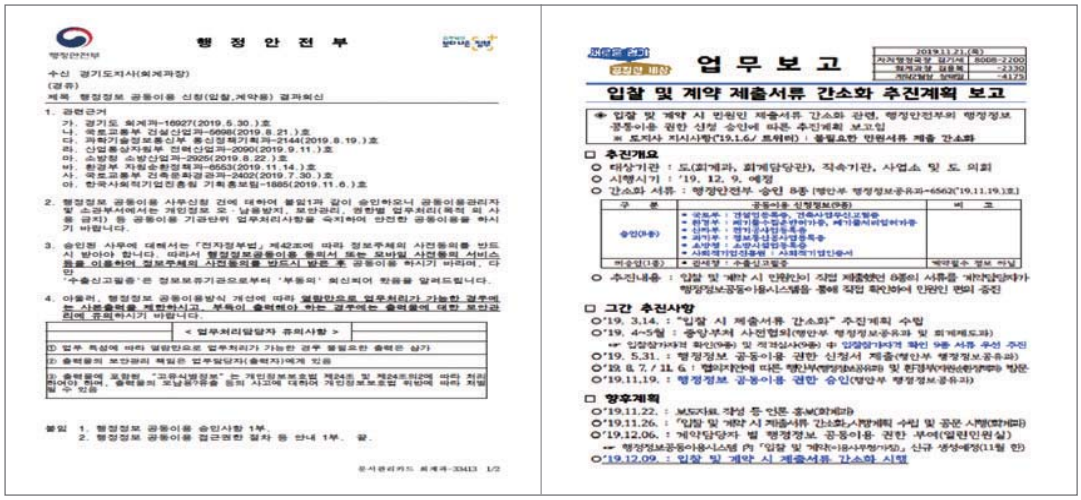
1) 입찰·계약서류 간소화 시행

2019년 11월 19일 경기도는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설업등록증 등 8종의 정보'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승인 받게 되었다.

그간 입찰 및 계약분야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권한이 없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정보열람이 불가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용권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해당 정보에 대한 자료를 계약상대방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상대방의 사전 동의만 얻으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계약상대방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 편의성이 증진되었고, 계약담당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바로 출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후, 경기도는 계약담당자 별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사용자등록, 시스템 사용방법 공유 등의 내부 준비단계를 거쳐 2019년 12월 9일부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입찰 · 계약서류 간소화를 시행 중에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8종이다.

[표 16-2] 행정안전부 승인공문 및 입찰·계약서류 간소화 추진계획 보고



행 정 안 전 부

수신 경기도지사(회계과장)
(경유)
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입찰,계약등) 결과회신

1. 관련근거
가. 경기도 회계과-16927(2019.5.30.)호
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5668(2019. 8. 21.)호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2144(2019. 8. 19.)호
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2090(2019. 9. 11.)호
마. 소방청 소방산업과-2925(2019. 8. 22.)호
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6553(2019. 11. 14.)호
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402(2019. 7. 30.)호
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홍보팀-1885(2019. 11. 6.)호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신청 건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승인하오니 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공동이용 기관단위 업무처리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승인된 사무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또는 모바일 사전동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시 받은 후 공동이용 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술신고필증' 은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부동의' 회신되어 확인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방식 개선에 따라 열람만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출력을 제한하시고, 부득이 출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에 대한 보안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담당자 유의사항 >
① 업무 특성에 따라 열람만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열람으로만 승인
② 출력물의 보안관리 책임은 업무담당자(출력자)에게 있음
③ 출력물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 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이는 하여, 출력물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사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사항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편람 등 안내 1부. 끝.

문서관리카드 회계과-33413 1/2

업 무 보 고

2019.11.21.(목)
지지체장국장 담기석 | 6008-2200
책임과장 김용복 | -2330
주무담당 노예진 | -4173

입찰 및 계약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계획 보고

◈ 입찰 및 계약 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관련,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신청 승인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입 ※ 도지사 지시사항('19.1.6./ 트럼터) :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 간소화

□ 추진개요
○ 대상기관 : 도(회계과, 회계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 의회
○ 시행시기 : '19. 12. 9. 예정
○ 간소화 서류 : 행정안전부 승인 8종 (행안부 행정정보공유과-6562('19.11.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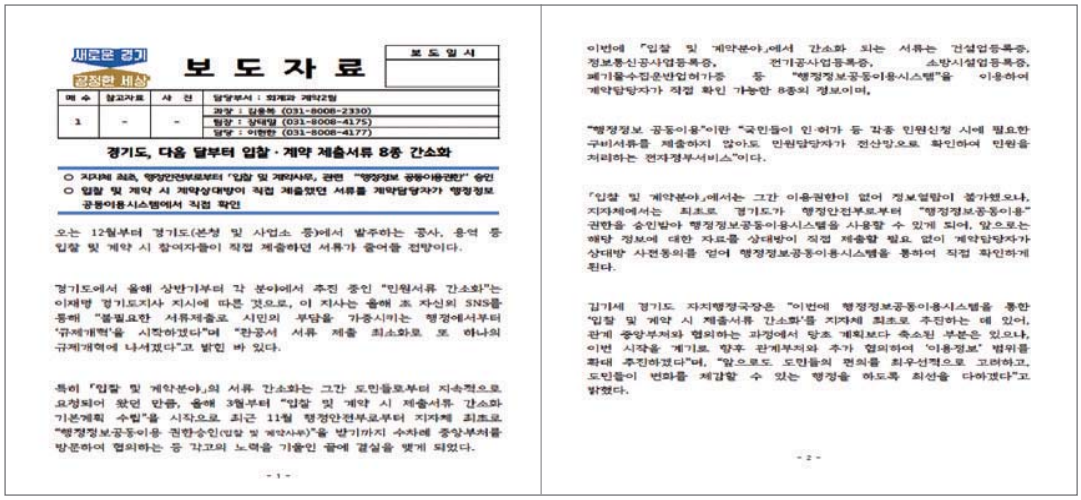
구 분	공동이용 신청정보(8종)	비 고
승인(8종)	• 국토부 :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환경부 :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 산자부 : 전기공사업등록증 • 과기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소방청 : 소방시설업등록증 • 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인증서	
미승인(1종)	• 관세청 : 수출신고필증	계약필수 정보 아님

○ 추진내용 : 입찰 및 계약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던 8종의 서류를 계약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 그간 추진사항
○'19. 3.14. : "입찰 시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계획 수립
○'19. 4~5월 : 중앙부처 사전협의(행안부 행정정보공유과 및 회계제도과)
☞ 입찰참가자격 확인(9종) 및 적격심사(9종) 中 입찰참가자격 확인 9종 서류 우선 추진
○'19. 5.31. :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신청서 제출(행안부 행정정보공유과)
○'19. 6. 7. / 11. 6. : 업무지침에 따른 행안부(행정정보공유과) 및 환경부(폐기물관리과) 방문
○'19.11.19. :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승인(행안부 행정정보공유과)

□ 향후계획
○'19.11.22. :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홍보(회계과)
○'19.11.26. : "입찰 및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 시행계획 수립 및 공문 시행(회계과)
○'19.12.06. : 계약담당자 별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부여(업무담당자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內 "입찰 및 계약(=용사부장가입), 신규 생성계정(11월 한)
○'19.12.09. : 입찰 및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 시행

[표 16-3] 입찰·계약서류 간소화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회계과 계약2팀 과장 : 김용복 (031-8008-2330) 팀장 : 장대일 (031-8008-4175) 담당 : 이한한 (031-8008-4177)
1	-	-	

경기도, 다음 달부터 입찰 · 계약 제출서류 8종 간소화

○ 지난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 및 계약사무,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권한" 승인
○ 입찰 및 계약 시 계약상대방이 직접 제출했던 서류를 계약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오는 12월부터 경기도(본청 및 사업소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등 입찰 및 계약 시 참여자들이 직접 제출하던 서류가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민원서류 간소화"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올해 초 자신의 SNS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며 "한공서 서류 제출 최소화로 또 하나의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입찰 및 계약분야,의 서류 간소화는 그간 도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던 만큼, 올해 3월부터 "입찰 및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최근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 최초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승인(입찰 및 계약사무)"을 받기까지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 1 -

이번에 "입찰 및 계약분야,에서 간소화 되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 가능한 8종의 정보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이다.

「입찰 및 계약분야,에서는 그간 이용권한이 없어 정보열람이 불가했으나,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해당 정보에 대한 자료를 상대방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상대방 사전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게 된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입찰 및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데 있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부분은 있으나, 이번 시작을 계기로 향후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하여 '이용정보' 범위를 확대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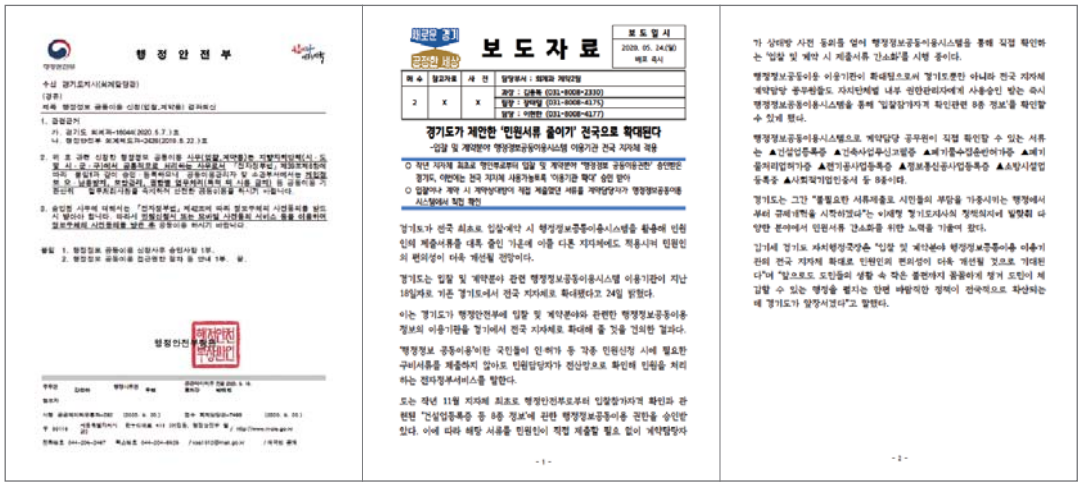
2) 입찰·계약서류 간소화 확대추진

2020년 5월 18일, 경기도에서 시작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입찰 · 계약서류 간소화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이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입찰 및 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승인을 받은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정보의 이용기관을 기존 경기도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이다.

이로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계약담당공무원들도 자치단체별 내부 권한관리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표 16-4] 행정안전부 공문 및 입찰·계약서류 간소화 확대 보도자료



행 정 안 전 부

보 도 자 료

경기도가 제안한 '민원서류 줄이기' 전국으로 확대된다

-입찰 및 계약분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 전국 지자체 적용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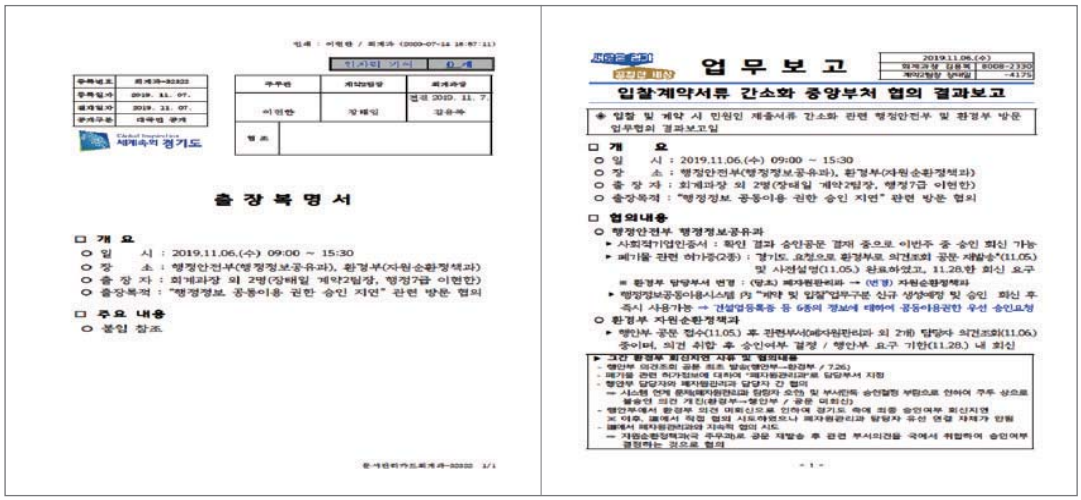
당초 입찰 · 계약서류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권한을 승인받기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정보소관부처(예: 건설업등록증 → 국토교통부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 환경부) 의견조회과정*에서만 2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난항을 겪게 되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승인과정(약 2개월 소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	→	신청내용 1차검토	→	정보소관부처 의견조회	→	검토결과회신	→	최종결과통보
경기도→행안부		행안부		행안부→정보별 소관부처		정보별 소관부처→행안부		행안부→경기도

특히 환경부의 경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등 2종 정보 승인여부에 대한 의견조회과정에서 시스템 연계문제 및 부서단독(당시 폐자원관리과에서 행정안전부 의견조회 공문 접수)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구두상으로만 의견을 피력한 뒤 공문 회신 없이 2개월 이상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표 16-5] 출장복명서(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협의)



출 장 복 명 서

□ 개 요
○ 일 시 : 2019.11.06.(수) 09:00 ~ 15:30
○ 장 소 :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출 장 자 : 회계과장 외 2명(장해림 계약2팀장, 행정7급 이현한)
○ 출장목적 :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승인 지연" 관련 방문 협의

□ 주요 내용
○ 붙임 참조

업 무 보 고

입찰계약서류 간소화 중앙부처 협의 결과보고

◈ 입찰 및 계약 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관련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방문 업무협의 결과보고임

□ 개 요
○ 일 시 : 2019.11.06.(수) 09:00 ~ 15:30
○ 장 소 :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출 장 자 : 회계과장 외 2명(장해림 계약2팀장, 행정7급 이현한)
○ 출장목적 :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승인 지연" 관련 방문 협의

□ 협의내용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 사회적기업인증서 : 확인 결과 승인공문 결재 중으로 이번주 중 승인 회신 가능
▸ 폐기물 관련 허가증(2종) : 경기도 요청으로 환경부로 의견조회 공문 재발송*(11.05.) 및 사전설명(11.05.) 완료하였고, 11.28.한 회신 요구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內 "제약 및 입찰"업무구분 신규 생성예정 및 승인 회신 후 즉시 사용가능 → 건설업등록증 등 6종의 정보에 대하여 공동이용권한 우선 승인요청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행안부 공문 접수(11.05.) 후 관련부서(폐자원관리과 외 2개) 담당자 의견조회(11.06.) 중이며, 의견 취합 후 승인여부 결정 / 행안부 요구 기한(11.28.) 내 회신

▸ 그간 환경부 회신지연 사유 및 협의내용
- 행안부 의견조회 공문 따른 발송(행안부→환경부 / 7.26)
- 폐기물 관련 허가정보에 대하여 "폐자원관리과"로 담당부서 지정
- 행안부 담당자와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간 협의
→ 시스템 연계 문제(폐기물관리과 담당자 요청 및 부서변동 승인절차 부합으로 인하여 주무 상으로 붙임2 의견 개진(환경부→행안부 / 공문 미회신)
- 행안부에서 환경부 의견 미회신으로 인하여 경기도 측에 의견 승인여부 회신지연
※ 대표, 팀에서 직접 협의 시도하였으나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유선 연결 재개가 안됨
- 팀에서 폐자원관리과와 지속적 협의 시도
→ 자원순환정책과와 주무과로 공문 재발송 후 관련 부서의견을 국에서 취합하여 승인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

행정안전부에서는 환경부 회신이 없어 최종결과 통보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가 환경부 담당자와 직접 협의에 나서 입찰 · 계약서류 간소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서 단독결정이 아니라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국 주무과(자원순환정책과)에서 관련 부서 의견을 취합 후 승인여부 공문을 회신해주기로 협의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가교역할(행정안전부 방문 2회, 환경부 방문 1회)을 수행한 결과,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등 2종 정보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권한 최종승인 공문이 회신되었고,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입찰 · 계약서류 간소화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에서 추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입찰 · 계약서류 간소화는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를 확대하고, 또 다른 방식의 서류간소화 방법을 강구하여 도민들의 입찰참가 편의성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

17. 규제 개선 통한 고양화훼산업특구 활성화

규제개혁담당관 규제합리화팀장 김정아

- 추진배경 :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의 민생과 혁신을 위한 민선7기 공약에 따른 규제합리화 추진
- 추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특화특구 안에서는 “품목조합(업종별 조합)”도 공판장 설치 허용
- 문제점 및 해결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을 위해 “지역조합”이 설치하는 공판장만 허용
- 평　　가 :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역차별 속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경쟁력 강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부지와 기능을 확대하여 생산 · 유통 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개발제한구역 내 약 31만 4천㎡ 기존 고양화훼산업특구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확대 지정(41,779㎡)하여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공모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40억 원[총사업비 195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 원,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 115억 원)]을 지원받아, 2020년까지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거점에 유통센터 설립을 계획하여 권역별 화훼농산물의 수집·분산 역할에 경매를 통한 도매 기능(공판장)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관할 시 · 군 ·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지역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화훼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어 화훼산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조합’인 한국화훼농협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제도적

으로 불가능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국고 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경기도는 2018년 6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의 사정을 파악한 후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중앙부처(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규제합리화 건의안에 대한 계속되는 불수용

2018년 6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의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2018년 10월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에 대한 행위주체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서 지역특화사업자 추가에 대한 개선안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로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개선안에 대해 불수용 회신했다.

경기도는 불합리한 규제로 사업무산 위기에 처한 고양화훼산업특구사업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실무협의, 한국화훼농협 실무자 면담 등 개선안을 보완·수정하였다. 2019년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한해 공판장 설치 주체를 기존의 "지역조합"에서 "품목조합"까지 포함하는 사항에 대하여 2차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개발제한구역을 보전 ·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판장 설치 주체 확대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 다시 한번 불수용 회신하였다.

2) 끊임없는 규제합리화 필요성 강조 및 개선안 보완

경기도는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을 국무조정실 실무협의에서 강조하면서 한국화훼농협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 · 강화하였다. 건의서를 통해 "현재 개발제

한구역 안에는 정작 지역조합이 설치한 공판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은 기능이 매우 흡사하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2019년 4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소명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도 규제개혁담당관실에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적 장애물 탓에 경제활동에 어려움 겪는 도민이 없어야 한다. 특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의 산업 강화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 제도개선에 힘을 보탰다.

3)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공감... 개정안 수용

경기도는 소명절차 진행 중에도 시 · 군 순회간담회,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중앙부처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에 공감한 국무조정실은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회의를 통해 2019년 6월 19일 규제합리화 건의사항 소명에 대한 수용회신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2월 2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대해서 법령 개정 완료하여, 현재 고양화훼산업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는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사진 17-1] 수도권 화훼유통센터 조감도(사업시행 전·후)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화훼산업의 유통체계 개편을 통해 2030년까지 약 500억 원 규모의 화훼거래가 이루어져 4배 매출 증대와 135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경기도의 국토와 물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18. 적극행정 요구로 학교복합시설[1] 투자심사 간소화 조기 시행

규제개혁담당관 규제정책팀장 강일희

- 추진배경 : 학교복합시설에 대한'중복투자심사'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
- 추진내용 : 지방재정 투입 학교복합시설 건립관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중복투자심사 조기 일원화
- 문제점 및 해결 : 중복투자심사 사전 방지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 평　　가 : 관계기관 적극행정 시행 건의로 불합리한 중복투자심사제도 조기개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용어 설명>

○ 중앙투자심사 : 지방예산 · 지방교육재정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방지. 예산편성 전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 대 상 : 시 · 군 · 구 사업비 200억 원 이상(행정안전부), 사업비 100억 원 이상(교육부)

○ 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이 대상.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객관성 ·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절차임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교육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수원 권선지구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이 대표적 사례로써 현행 규정대로 한다면 교육

1)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학교시설

부와 행정안전부의 중복투자심사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다. ‘동일한 심사 대상’을 중복으로 ‘투자심사’함으로써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지연으로 지역의 교육여건 향상이 늦추어지고 집단민원이 지속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예산 및 행정력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러한 불합리한 절차를 고치기로 하고 본격적인 제도 합리화에 나섰다.

<수원 권선지구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개교: ’23.3.)>

○ 사업규모 : 곡반3초 · 중학교, 학교복합화(체육관, 대강당, 수영장 등 포함)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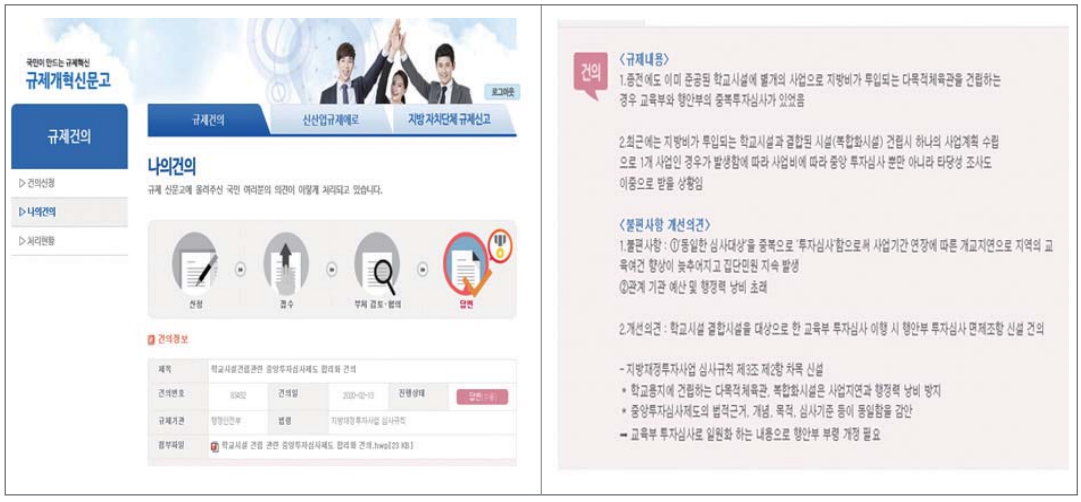
○ 사 업 비 : 721억 원(국비 40, 시비 235, 기타 446 / **복합화 275, 학교 216, 부지 230**)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중복투자심사 일원화 건의

2020년 2월초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중복투자심사 내용 설명 및 빠른 개선책을 유선으로 요청하였고, 2월 11일에는 수원 권선지구 상황 설명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를 방문하였다.

[표 18-1]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내용



위와 같은 사전협의과정을 거쳐 2월 13일 '지방재정 투입 학교시설 건립관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를 국무조정실 운영 규제개선 건의 창구인 규제개혁 신문고에 공식 건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화시설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투자심사 이행 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면제조항 신설이었다.

2) 일부 수용으로 회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이 함께 투입이 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투자심사(타당성 조사 포함)를 교육부와 협의하여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3월 11일 회신하였다.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와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간소화 방안 협의하여 법령 또는 지침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 여부를 결정(~4월)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상호 지정(~7월)
- 법령 또는 지침(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및 시행(~9월)

3) 적극행정을 통한 조기 개정 요구

그러나, 수원 권선지구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제일 중요한 개교시기('23.3.)를 맞추고 교육재정이 투입되는'학교건물'과 지방재정이 소요되는'복합시설'이 동시 준공되기 위해서는 9월까지 개정되어서는 건립사업 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3개월이 단축된 6월까지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경기도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에 6월 말까지 조기 개정해 줄 것을 다시 건의하였다.

조기개정의 필요성은 곡정초등교 과대학교 및 2021년 이후 과밀화 해소와 통학여건 개선이 지연된다는 점, 2012년 입주시기부터 현재까지 단지 내 중학교가 없는 점, 학교건물과 복합시설의 동시 준공이 필요한 점, 미래학교 특성상 중간개교가 불가하고 민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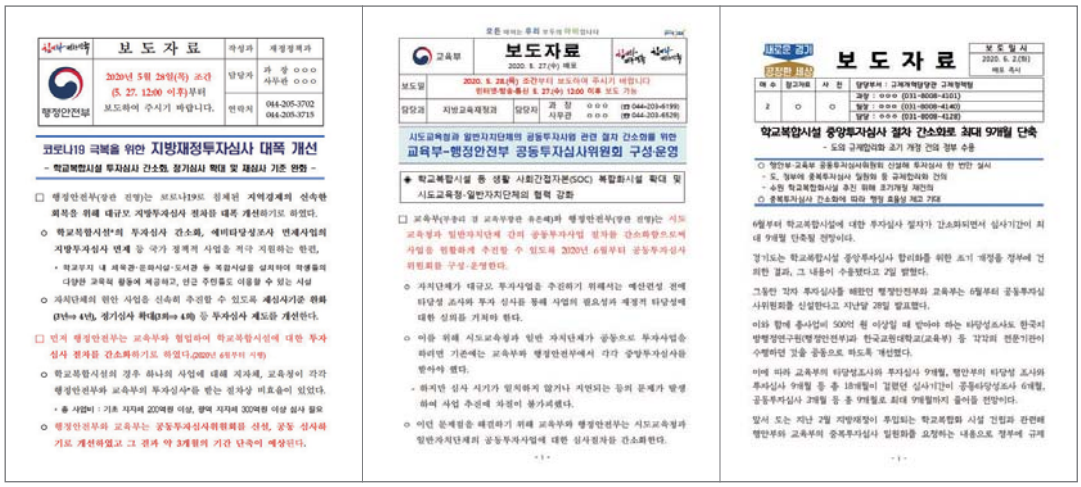
과 사회적 갈등 야기 등을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4) 조기개정 공식화

마침내 5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폭 개선' 제목으로 교육부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6월부터 제도 개선에 들어감을 공식화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하였고 아울러 타당성조사도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 9개월 정도의 기간단축이 예상된다.

[표 18-2]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기도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2020년 5월 28일(목) 조간 (5. 2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폭 개선

-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경기심사 확대 및 재심사 기준 완화 -

보도자료

2020. 5. 28.(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보 도 자 료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로 최대 9개월 단축

- 도와 교육합의와 조기 개정 건의 정부 수용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문제는 소관부서 담당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통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외부 회의에 따른 출장이 많아 일주일 내내 전화를 걸어도 1번 통화할 수 있을까 말까이다.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번호를 알아도 통화가 되지 않아 SNS로 겨우 연락이 오갈 정도였다. 또한 조기 개정 내용 설명을 위한 해당기관 방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다행인 것은 국무조정실 조정기능을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공동작업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다. 4월 초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조정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관계자와 통화하여 개정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간부 공무원의 소통도 추진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심사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극 행정 요구로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를 조기 시행한 것은 국무조정실의 조정역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적극 행정 시행, 경기도의 지속적 건의로 만들어진 합작품이며, 지면을 빌어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수원시와 수원교육청과의 협업도 주효했다.

경기도는 향후에도 도민이 불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어 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19.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집단급식소 설치 허용

특화기업지원과 기업SOS팀장 양기석

- 추진배경 : 민선7기 공약세부 실행과제 'No.140 중소기업 규제 개선 추진'
- 추진내용 :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집단급식소 설치 허용
- 문제점 및 해결 :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 조항 발굴 및 개선(관련 근거 규정 마련)
- 평　　가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노동자 근무조건 향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산업단지 내 공동식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여러 입주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집단급식소(공동 식당)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의 노동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거나, 산업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부득이 원거리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등 식사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집단급식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 마련(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중앙부처 법령 개정 건의

2019년 1월 22일 연천 백학 일반산업단지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가지고 2월 15일 법령 개정 제도개선 시·군 전수조사 통해 기업불편사항을 접수하였다.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1차적으로 2019년 3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2차적으로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2) 성과

2020년 2월 28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식당을 공장부지 안에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최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한 결과, 2019년 4월 14일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단지 내 집단급식소 허용 시 기존 이해관계자(외부 식당 등) 형평성 문제와 관리방안 부재 및 외부영업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므로 산업단지 내 집단급식소 허용은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경기도는 법제처 법령해석("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 **정책적 결정사항**" '19.7.17.) 및 2019년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도내 산업단지 구내식당 설치 운영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완하여, 2019년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령개정을 재건의하였다.

<도내 일반산단 구내식당 운영현황 조사결과>

○ **조사대상** : 도내 산업단지 소재 22개 시 · 군 (고양, 광주 등 산단이 없는 9개 시 · 군 제외)

○ **산단현황** : 총 104개 * 완료92개 / 조성중 산단 일부(12개) 포함, 평택 및 국가산단 제외

- 전체 입주업체 8,801개사 중 50인 미만 업체 7,325개사(83.2%), 평균 종업원 수 16명

○ **식당현황** : 50인 미만 업체 중 자체식당 운영 217개사, 산단 내 일반음식점 수 평균 5.3개

*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낙후지역 시군은 산단 내 일반음식점 전무

재건의한 결과, 2019년 10월 1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생활밀착형 규제혁신방안(IV)'에 포함되게 되었다. "주거 · 상업지와 이격되어 있고, 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기업체 2개사 이상 공동 구내식당 설치 · 운영 허용 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20년 2월 2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내 공동식당 설치가 가능해 졌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2020년 2월 2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집단급식소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원거리 · 격오지 산단 입주기업의 신규 인력 유입이 가능해지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산단 경쟁력을 증진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공동 집단급식소 설치를 지원하고, 시 · 군 등과 협력해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도내 산단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집단급식소 설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3절 모두에게 존중받는 노동권익 증대

20. 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권익과 플랫폼노동지원팀장 이숙경

- 추진배경 :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노동자 급증과 휴식권 보장 및 노동여건 개선 필요
- 추진내용 : 쉼터설치 및 권리구제(법률, 노무 등), 안전 · 직무교육, 취업 · 전직 및 자조모임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부지(공간)선정 곤란 및 사전절차 이행시간 필요
- 평　　가 :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휴게시설 제공과 더불어 권리구제, 재활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균형 있는 일과 삶 구현에 기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고용환경이 변화하면서 플랫폼이동노동자는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휴식권 보장과 노동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민선7기 노동 존중 사업의 일환으로, 일터에서 가까운 노동자 휴식문화공간 마련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2021년까지 13개소('19년 4개, '20년 5개, '21년 4개)에 설치할 계획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지원근거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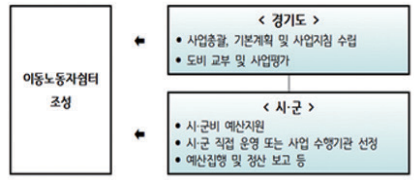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근거는 「경기도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시 · 군에 예산지원 가능)와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의한다.

쉼터조성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이동노동자의 접근성과 공간안정성이다. 쉼터는 단순 휴게시설을 넘어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법률, 노무, 금융 등 권리구제 상담과 직업, 전직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 추진전개

31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고 시 · 군별로 이용자 수요 및 특성에 맞게 쉼터를 설치(신축 및 리모델링)할 수 있으며, 설치면적에 따라 개소 당 신축(또는 매입)은 최대 10억 원, 리모델링은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표 20-1] 쉼터 추진 체계

○ (도) 사업비 일부 지원 (시설 설치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50%) ○ (시·군) 쉼터 공간 확보 및 운영	

3) 추진현황

2019년에는 4개소(수원, 성남, 광주, 하남)를 선정하여, 2020년 7월 현재 운영 중이다. 2020년 상반기에는 3개소(부천, 시흥, 광명)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2개소를

공모 중(7.23.~8.21.)이다.

2020년 10월에 부천쉼터, 12월 광명쉼터가 개소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의 이동노동자에게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권리구제, 자조모임, 커뮤니티, 동호회 등의 노동자 주체 형성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4) 쉼터 운영 활성화

노동자 쉼터사업의 조기정착과 노동환경 개선, 노동존중 실현을 위해 4개 쉼터 운영비의 일부(사업비의 50%)를 지원하였다. 쉼터 운영방식의 통일성 확보와 쉼터 근무자의 역량 제고 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계기관 운영방안 회의를 실시하였다.

[사진 20-1] 도내 쉼터 4개소

<table>
<tr><td> </td><td>
</td></tr>
<tr><td>광주쉼터('20.1.20)</td><td>수원쉼터('20.2.7)</td></tr>
<tr><td> </td><td> </td></tr>
<tr><td>하남쉼터('20.2.20)</td><td>성남쉼터('20.6.1)</td></tr>
</table>

2020년 2월 1일 개최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매뉴얼 마련 자문회의와 5월 7일 표준매뉴얼 수립 및 운영방안 회의를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 운영 표준매뉴얼」을 수립하고, 7월 2일 각 시 · 군에 배포하였다. 이용자 우수사업과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업무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및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회의(월 1회 이상)를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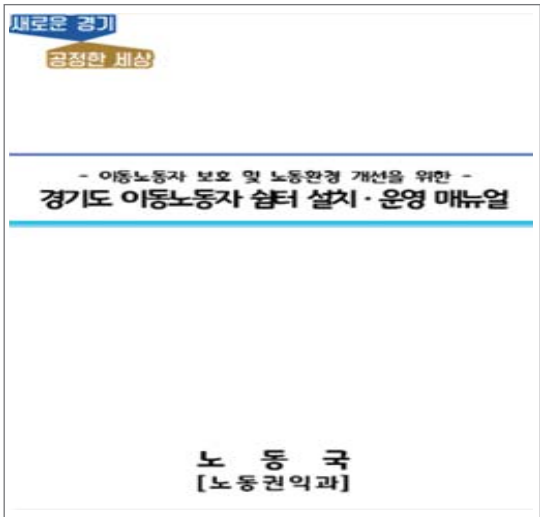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권리구제(법률, 노동, 금융), 자조모임 육성, 커뮤니티 활성화 등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 현황과 쉼터별 운영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로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표 20-2]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 운영 매뉴얼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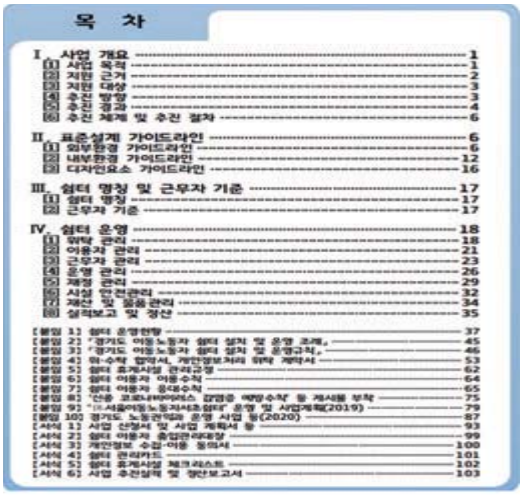
(1) 외부환경 가이드라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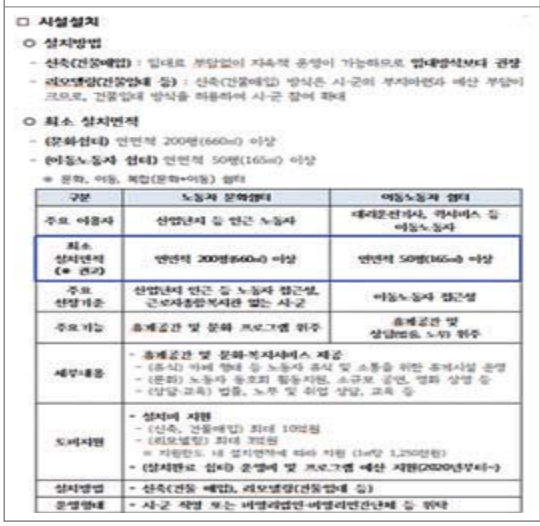
- 이동노동자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 운영 매뉴얼

노 동 국
[노동권익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1] 사업 목적 ····· 1
[2] 지원 근거 ····· 2
[3] 지원 대상 ····· 3
[4] 추진 방향 ····· 3
[5] 추진 경과 ····· 4
[6] 추진 체계 및 추진 절차 ····· 6
Ⅱ.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 6
[1] 외부환경 가이드라인 ····· 6
[2] 내부환경 가이드라인 ····· 12
[3] 디자인요소 가이드라인 ····· 16
Ⅲ. 쉼터 명칭 및 근무자 기준 ····· 17
[1] 쉼터 명칭 ····· 17
[2] 근무자 기준 ····· 17
Ⅳ. 쉼터 운영 ····· 18
[1] 위탁 관리 ····· 18
[2] 이용자 관리 ····· 21
[3] 근무자 관리 ····· 23
[4] 운영 관리 ····· 26
[5] 재정 관리 ····· 29
[6] 시설 안전관리 ····· 32
[7] 재산 및 물품 관리 ····· 34
[8] 실적보고 및 정산 ····· 35
[붙임 1] 쉼터 운영현황 ····· 37
[붙임 2]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45
[붙임 3]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규칙」 ····· 46
[붙임 4] 위·수탁 협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53
[붙임 5] 쉼터 표준사업 관리규정 ····· 62
[붙임 6] 쉼터 이용자 이용수칙 ····· 64
[붙임 7] 쉼터 이동자 공대수칙 ····· 65
[붙임 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등 게시물 부착 ····· 75
[붙임 9] 「'19 서울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및 사업계획(2019) ····· 79
[붙임 10] 경기도 노동권익과 운영 사업 등(2020) ····· 87
[서식 1]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등 ····· 93
[서식 2] 쉼터 이용자 출입관리대장 ····· 99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00
[서식 4] 쉼터 관리카드 ····· 101
[서식 5] 쉼터 표준사업 체크리스트 ····· 102
[서식 6]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103


□ 시설설치

○ 설치방법

- 신축(건물매입) : 일대로 부담없이 자유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임대형식보다 권장
- 리모델링(건물임대) 등 : 신축(건물매입) 방식은 시·군의 부지마련과 예산 부담이 크므로, 건물임대 방식을 허용하여 시·군 참여 확대

○ 최소 설치면적

- (문화쉼터) 연면적 200평(660㎡) 이상
- (이동노동자 쉼터) 연면적 50평(165㎡) 이상

※ 문화, 이동, 복합(문화+이동) 쉼터

구분	노동자 문화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주요 이용자	산업단지 등 인근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
최소 설치면적 (※ 권고)	연면적 200평(660㎡) 이상	연면적 50평(165㎡) 이상
주요 선정기준	산업단지 인근 등 노동자 접근성, 근로자종합복지관 없는 시·군	이동노동자 접근성
주요 기능	휴게공간 및 문화 프로그램 위주	휴게공간 및 상담(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교육 등) 위주
세부내용	- 휴게공간 및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 (휴식) 수면 장비 등 노동자 휴식 및 소통을 위한 휴게시설 운영 - (문화) 노동자 동호회 활동지원, 소규모 공연, 영화 상영 등 - (상담·교육)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교육 등	
도비지원	- 설치비 지원 - (신축, 건물매입) 최대 10억원 - (리모델링) 최대 3억원 ※ 지원한도 내 설치면적에 따라 지원 (1㎡당 1,250천원) - (장세한로 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예산 지원(2020년부터~)	
설치방법	- 신축(건물 매입), 리모델링(건물임대 등)	
운영형태	- 시·군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위탁	

※ 평면도(수원쉼터)

운영매뉴얼 자문회의

쉼터 운영사례 발표

(2) 내부환경 가이드라인

□ 시설배치

○ (공간) 오픈형(개방형) 구조 권장
- 쉼터 전체 공간이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으며, 필요시 공간 확장 가능
  * 공간 내비 이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교육실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
  * (참고 사례) 하남쉼터(교육실 활용도이), 서울 강동쉼터(편의점 카페) 등

○ (동선) 쉼터 근무자 공간은 되도록 출입구 방향과 가깝게 위치하여 방문자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배치

□ 주요 시설

○ 기본 휴게시설 외 상담실, 강의실, 체육문화시설(헬스장, 소규모 공연장 등) 등 각 시군별로 수요 및 특색에 맞게 구성

○ 쉼터 이용자들의 동선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

◈ 의무시설

▸ 사무실, 휴게시설, 여성 전용 휴게실, 회의실, 물품창고(다용도실), 탕비실, 쉼터 게시판

○ (사무실) 쉼터 운영자 기획 및 사무공간, 이용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사무공간 입구에 조직도 비치(근무자 사진 및 실명 포함)

○ (휴게시설) 쉼터 이용자 휴식공간
-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출입구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며, 음해물질 취급 장소와는 격리된 곳에 설치
- 이용대상 노동자 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정한 면적과 개수 확보
  * 1인당 1㎡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하여 6㎡ 확보(권장)
- 정방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하여, 여간 이용자를 위한 간이휴게 정구류 등 비치
  * 안마의자, 발 마사지기, 안락의자, 컴퓨터, 휴대폰 충전설비 등 물품비치
  * 이용자들의 선호도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가구 및 비품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음

- 간단한 검색이나 업무보조용으로 컴퓨터 사용공간 배치(소량 인쇄 가능)
  * 컴퓨터 사용공간은 스탠딩 책상(소수 개인 장시간 독점금지, 꼭 필요한 정보검색 용으로만 사용 유도)
- 휴게시설은 흡삭에 방해되지 않는 조명(권고수준 : 100~200Lux)과 소음 수준(권고수준 : 50dB 이하) 유지
- 분리해야 할 공간이 큰 경우 가벽 등으로 분리하여 패쇄적에 설치하며, 여성 전용 휴게시설은 별도 설치

○ (여성 전용 휴게실) 여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흡삭권 보호를 위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
-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노동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상담가 클레더보이지 않도록 블루투성 가림막 및 출문 등으로 시건 가능
  *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경보기 또는 비상벨 설치
  * 간이침대, 담요, 알약커튼, 소형냉장고 등 설치 권장

○ (회의실) 다목적 회의실, 당사자 단체 대여 가능한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

○ (물품창고/다용도실) 쉼터 운영 관련 물품보관(간이의자, 소모품, 작원 사물함 등)

○ (탕비실) 음용수 제공, 커피·다과 등 이용 가능한 간이 주방

- 흡삭물 반입 금지 원칙
  * 쉼터에서 제공하는 다과 이외의 음식물은 반입 및 취사는 원칙적으로 금함. 다만,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자의 판단에 따라 허용할 수 있음
  * 식사 및 조리 금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안내 문구 등 사용(권장)

< 수원쉼터 사례 >

▪ <휴게모임 금해는 여러는?>
냄새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냄새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여럿이 허가된 동료들의 식욕을 자극하는 일은 실례가 되겠지요. 컵라면은 물에도 안 좋은 음식입니다. 음식 섭취는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가급적 집에서 든든히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 내세요~

□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현황(경기도)

구 분	광주쉼터	수원쉼터	하남쉼터	성남쉼터
개소일	'20.1.20.	'20.2.7.	'20.2.20.	'20.6.1.
위치	광주시 중앙로 110, 5층 502호(포인돌)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6, 성보빌딩 2층(단계동)	하남시 대청로 13, 하남보건빌딩 2층(신장동)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808번길 3-21, 모란드림시티 (2층, 성남동)
규모	195㎡(60평)	256.4㎡(70평)	200㎡	202.21㎡(61.17평)
운영 방식	광주시 직영	위탁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하남시 직영	위탁 (한국노총)
설치	임대	임대	임대	매입
2019년 예산 (최초 설치 시 예산)	206,700천원 (인테리어 공사비) 60,000천원	261,000천원 (인테리어 공사비) 100,000천원	250,000천원 (인테리어 공사비) 86,900천원	2,207,858천원 - (건물매입비) 1,751,986천원 (인테리어 공사비) 253,136천원
운영 인력	2명 (대표1, 간사1)	2명 (대표1, 간사1, 공간관리원 주2~3)	5명 (대표1, 간사1, 공간관리원 주2~3)	5명 (대표1, 간사1, 상담원 2, 직원 2)
운영 시간	14:00 ~ 익일 06:00 (월~금)	10:00 ~ 익일 06:00 (월~금)	10:00 ~ 22:00 (월~금)	10:00 ~ 익일 07:00 (월~금 / 토 휴무)
이용인원 (1일기준)	40명	30명	2명	-
프로그램	(공통) 노동자 권리구제법률, 노무, 세무 등, 창업취업 교육 프로그램, 법률·고충상담, 문직장진 교육, 임금체불 등 근로자 지원사업 (안타깝) 오도바이 정비실비 교육, 문화예술회관 연계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			
시설 현황	남여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탕비실, 다용도실(창고) 등			

쉼터 운영 방안회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매뉴얼

21.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정책과 공무직운영팀장 이종성

- 추진배경 : 국정과제 12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추진내용 : 道 및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평　　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공부문 노동자 고용안정성 강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인력운영에 있어 비용절감과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경기도 역시 정부방침에 근거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기간제 ·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완료

경기도는 2017년 7월 20일 발표된 정부합동 「제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 라인」에 근거하여, 2017년 8월 29일 「경기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비정규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환대상자를 확정하고 무기계약노동자 전환 심

의위원회를 거쳐 2018년 1월 1일자로 310명의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파견용역 노동자 경우 2017년 특별 실태조사를 통해 전환대상자를 확정하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운영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267명의 파견용역노동자를 2019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추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5월 31일 발표된 「제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산하 27개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확정하였고, 무기계약노동자전환심의위원회와 노 · 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다.

2020년 6월 30일 현재, 27개 기관 중 25개 기관 1,110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2개 기관 263명의 경우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3) 민간위탁수행기관 종사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추진

2019년 2월 27일, 정부는 「제3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감안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민간위탁사무의 수행방식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와 처우개선을 기관별로 추진하도록 제시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그간 2차례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 행정조직 비대화 방지,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접수행보다는 민간위탁사무를 유지하는 동시에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보장 및 처우개선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경기도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추진 시, 도의회 사전 동의를 강화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신규 및 기존사업 위탁 시 사전에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민간위탁노동자 고용보장 · 승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민간위탁 · 대행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지난 3년간의 과정을 통해 정규직 전환사업은 마무리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의 정규직 전환은 양적확대에만 치중한 것도 사실이나, 향후 양적확대에 걸맞는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 등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노 · 사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2.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회계과 계약1팀장 김수형

- 추진배경 : 국정과제 11번. 더 공정해진 경기도
- 추진내용 :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 문제점 및 해결 :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 보장
- 평　　가 :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 기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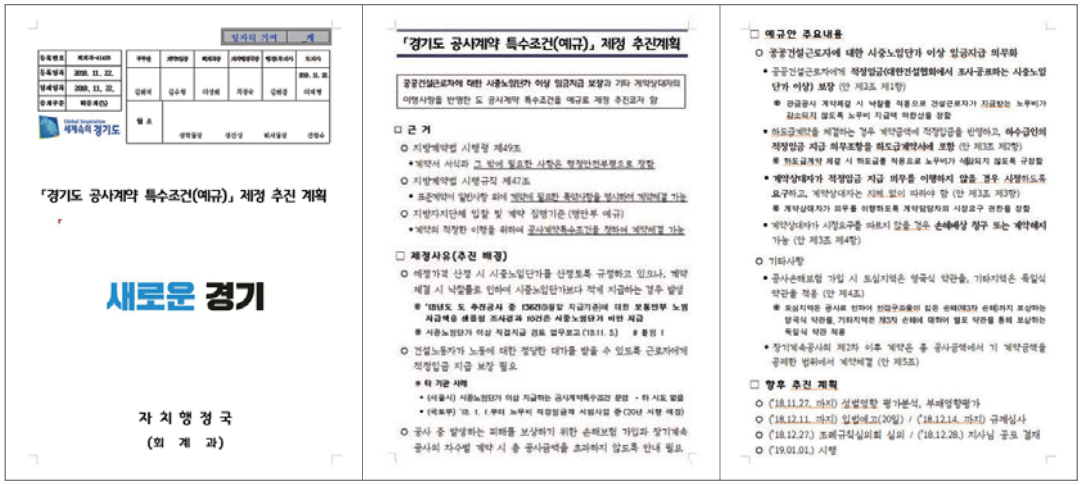
공공건설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설계서 작성 시 예정가격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체결 시 낙찰률로 인하여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2018년도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공건설공사 136건에 대하여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건(7.4%)이 시중노임단가 미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의 근로 복지를 위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적정임금 지급 사례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이미 2017년 5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을 제정하여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22-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 제정 추진계획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 제정 추진 계획

새로운 경기

자 치 행 정 국
(회 계 과)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 제정 추진계획

□ 근 거

□ 제정사유(추진 배경)

□ 예규안 주요내용

□ 향후 추진 계획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이 2018년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여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1월 2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수의계약 포함)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말 현재 1,399건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였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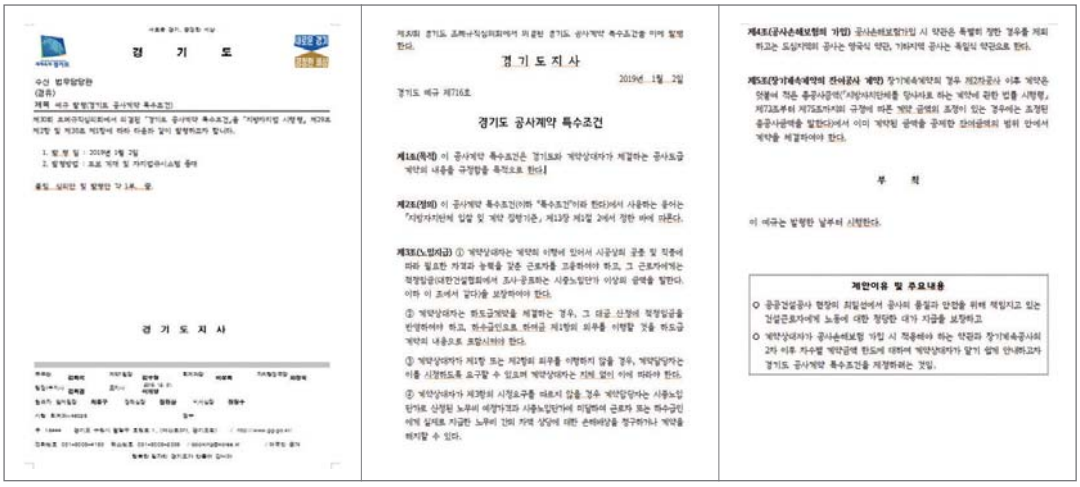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 제정안 입법 예고 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건설사(29개사), 개인(3명) 등으로부터 '공사비 부족으로 부실공사 발생 및 미숙련

공 등 고용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의무화에 따른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은 공공건설공사 현장의 최일 선에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특별시에서도 2017년 5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2018년 1월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안내하였다.

[표 22-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 발령



경 기 도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지 사

2019년 1월 2일

경기도 예규 제716호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입기준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전이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입찰에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건설공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책임지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하고
- 계약상대자가 공사손해보험 가입 시 적용해야 하는 약관과 장기계속공사의 2차 이후 차수별 계약금액 한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알기 쉽게 안내하고자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하려는 것임.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 시행으로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일부 건설노동자까지 빠짐없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받아 기본생활을 보장하였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찰 방식을 개선하여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정임금제를 검토하여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노동자 기본생활권 보장 및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 노동이사제 도입 및 시행

공공기관담당관 공공기관정책팀장 김효환

- 추진배경 : 국정과제 12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추진내용 : 16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노동이사 간담회 실시, 조례 개정
- 문제점 및 해결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상위법 부재
  도의회-집행부-노동이사 간 지속적 대화를 통해 합의 도출
- 평　　가 : 노동 존중,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노동자와 경영자는 상호협력이 필요한 관계이나 노동자들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노사 갈등이 야기되고 사회 갈등 비용은 증가했다. 최근 노동자들도 민주적 시민의식을 갖추고 상당한 교육을 받으며, 고용관계에서 단순히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노동이사제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기관의 이사직을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되어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서유럽 국가는 공공·민간부문에서 노동이사 제도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7월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의무도입 대상기관(11개)을 포함하여 총 16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민선 7기 1년차('18.7.1. ~ '19.8.31.)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임명되었고, 2년차('19.9.1. ~ '20.6.30.)에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의료원, 킨텍스,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11개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추가로 임명되면서 총 16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가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

2) 노동이사 간담회 실시

2020년 2월 3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공공기관담당관, 공공기관정책팀장, 12개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이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운영을 위한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진 23-1] 노동이사 간담회 개최('20.2.3.)

3)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신정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4월 10일 입법예고 되었고, 6월 22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 학습기회 · 훈련, 활동시간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정원 200명 이상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동이사의 이사회 안건제출권, 정보열람권을 명시하였다.

또한, 노동이사에게 기존의 이사회 안건 및 자료검토 수당, 여비뿐만 아니라 대근로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이사 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상위법 부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상위법 부재로 명확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노동이사의 정수, 권한, 책임, 활동지원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까지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었다.

2) 도의회-집행부-노동이사 간 지속적 대화를 통해 합의 도출

2020년 2월 3일 노동이사 간담회 이후, 2월 20일 노동이사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서울시를 방문하여 운영체계, 우수사례 및 개선점 등에 관하여 정보를 공유 하였고, 이후 경기도의회, 공공기관담당관, 노동이사 간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도의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을 수 있었다.

정원 200명 이상의 기관이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이사회 안건제출권, 정보열람권, 대근로자 활동비 등 조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기도 노동이사제도만의 특징이 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노사 간 성과 및 책임 공유를 위한 상생 · 발전의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으로 노사 협력 및 노동 존중 문화를 정착 · 확산한다.

또한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을 통한 노동 협치를 강화하며 자율 · 책임 경영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또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 강화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4.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

건설정책과 하도급심사팀장 박현숙

- 추진배경 : 저임금 불법외국인의 고용에 따른 일자리 및 소득감소, 임금 체불 및 허위청구 등의 건설업 부조리 개선 필요
- 추진내용 : 道 발주 50억 원 이상(잔여공기 2년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 도입
- 문제점 및 해결 : 불법외국인 취업 방지, 노무비 관련 부조리 차단으로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
- 평　　가 : 건설업 부조리 차단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촉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전문건설업체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다단계 도급에 의한 낮은 수주금액 등으로 인해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고 임금체불,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해 청년세대 유입이 감소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인맥에 의한 채용, 새벽인력시장 등 폐쇄적이고 낙후된 채용시스템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노동자 보호기능 미흡,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잠식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및 소득 감소 등 노동자와 일자리를 동시에 보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하여 임금보장 강화, 노동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2019년에는 '건설일자리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확충, 질 좋은 일자리, 안전한 일터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9개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적정 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과제를 중점적

으로 추진하여 건설노동자들의 임금보장,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발표하였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자 2018년 9월부터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임금 직접 지급체계를 구축하였고, 2019년 1월부터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퇴직공제금 확보 및 임금삭감 · 체불 등의 노무비 관련 부조리 방지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확대하여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개선하고 공정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도입

경기도는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공건설현장(도급액 50억 원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전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 중이다.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해 2019년 8월 1일에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3자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개 분야별 시범사업장을 선정하고 총 14대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현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였다.

(하천) 방림천 수해개선사업	(도로) 가납-상수 도로확포장	(철도) 별내선 복선전철4공구	(건축) 도 신청사 건립

[사진 24-1] 전자카드제 업무협약식

[사진 24-2] 전자카드 출근 등록

2) 전자카드제 주요 기능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출입구 등에 설치한 단말기에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자동 전송되어 근무 일수 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 퇴직공제부금의 정확한 적립, 건설인력의 경력관리,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 건설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뿐만 아니라 권익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국인이나 합법적 외국인노동자에게만 전자카드 발급이 가능하므로 저임금 불법외국인의 고용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전자카드제는 실시간 근무현황 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시 작업장 출입명단 즉시 확보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안전한 일터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의 공사대금 관련 부조리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노무비 청구 내역과 현장 출퇴근 기록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표 24-1]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운영체계

건설현장 전자카드 태그

⇩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실시간 기록

(건설근로자공제회)

⇩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근로기록 수신

(매일)

⇩

노무비 청구내역과 전자카드 기록 비교

(발주부서)

3)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경기도는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앞서 2020년 1월 13일「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월에는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자카드제는 도 및 산하기관 발주 50억 원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가 적용 대상이며, 2020년 상반기에는 17개 사업장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연말까지 총 25개소 이상 건설현장에 제도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2020년 11월 법제화*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민 · 관 건설현장에 확대될 예정이며, 경기도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행을 돕기 위하여 도 · 시 · 군 합동 설명회 및 교육,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0.11.27. 개정 시행

[사진 24-3]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및 전자카드제 홍보자료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과정

1) 제도 확대시행을 위한 교육 · 홍보

당초에는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발주 및 회계부서 담당자, 적용 대상사업장의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운영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관련계획을 전면 취소하였고, 대상사업장의 전자카드제 적용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개별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 설명, 시스템 사용방법, 현장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2) 전자카드제 운영

전자카드 미소지자 출입에 따른 인원수 불일치, 퇴직공제 미 적용자의 전자카드 태그 기록 변경절차 등으로 인해 제도운영 및 자료 관리에 상당한 시간과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전자카드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전자카드 발급 거부, 태그율 부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자카드제 운영비용의 원가반영, 전자카드 출입기록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사업장 운영, 본 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대한 교육 · 홍보 강화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건설현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 방지 등 건설현장의 각종 부조리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소하도급사, 장비 · 자재업체 등 건설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 추진하여 공정한 건설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5.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노동권익과 플랫폼노동지원팀장 이숙경

- 추진배경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도(복지)
- 추진내용 : 고양 등 6개 시 · 군 공모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업 진행
- 문제점 및 해결 : 도비와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시 · 군 사업 참여 한계
- 평　　가 : 소규모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및 사업주 법 위반 예방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은 단시간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권익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는 의무사항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 등 분쟁발생,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예방조치와 계도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사업장에 대한 직접 근로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기초 노동법 홍보 및 계도 등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자에게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안심사업장을 인증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인증서 수여 등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노동권익 서포터즈 도입 검토

경기도 노동국 신설에 따라 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 활동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단시간 알바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지킴이 활동을 진행해온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례를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019년 10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업에 대한 시 · 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6개 시·군이 신청하였다.

[표 25-1] 시·군 수요조사 결과

(단위:백만 원)

시 · 군	사업비	분담액		비 고
		도	시·군	
합 계	**350**	**175**	**175**	
고양시	35	17.5	17.5	
부천시	35	17.5	17.5	
평택시	70	35	35	
시흥시	70	35	35	
양주시	70	35	35	
양평군	70	35	35	

2) 기본계획 수립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 군에 자금교부를 하였다. 아울러,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편의점 등 사업장을 방문할 때 사업주가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2020년 5월 고용노동부 및 프랜차이즈 본사 등과 MOU를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참가단체는 경기도 및 6개 시 · 군, 고용노동부(경기지청), 프랜차이즈 본사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 등 5개 업체) 등이었다. 경기도에서는 노동국장이 참가하였다.

[사진 25-1] 업무협약식('20.5.)

[표 25-2] 업무협약서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경기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시, 부천시, 시흥시, 양주시, 양평군, 평택시,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주)(이하 "협약 당사자"라 한다)은 노동관계법 준수를 통한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해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며 건전한 고용질서가 정착되도록 상호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의 당사자는 이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존중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협약내용)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지원한다.
가. 사업장에서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제도·홍보·교육 활동
나.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다.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사업설과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제4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 당사자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매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협약의 변경) 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서류의 준수)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1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5. 26.

경기도 노동국장 류광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과장 최종수
고양시 일자리정책국장 천상범
부천시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헌
평택시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철
시흥시 경제국장 윤주호
양주시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양평군 일자리정책과장 이한구
㈜GS리테일 인재개발센터장 공일천
롯데GRS 경영지원부문장 이호우
BGF리테일 상생협력실장 서기문
코리아세븐 영업본부장 이우석
한국미니스톱(주) 영업본부장 김보중

5) 노동권익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식 및 교육 진행

2020년 4월에서 5월, 시 · 군별로 수행단체를 공모하여 시흥, 부천이 단체 선정을 하였다. 양주, 양평, 평택은 시군담당부서인 일자리정책과 등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 지원 조례에 보조금 교부 대상이 법인으로 되어있고 수행할 단체를 찾기도 어려워 수차례 공고를 냈으나 적격한 수행단체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청년 및 일자리 조례에서 비영리민

간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찾아 공고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양평, 평택은 시행 시기가 지연되었고, 양주시는 조례를 개정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한 달 간 지연되던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시흥, 부천 등 단체가 선정된 곳부터 6월부터 위촉장 수여식 및 노동인권 교육, 사업매뉴얼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 25-2] 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

6)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개시

6개 시 · 군 및 수행단체가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동권익과장이 주관하여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였다. 2020년 5월 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운영상 불편사항 지원 및 사업운영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성은 노동권익과장, 도 청년비서관,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4명과 시 · 군 및 수행단체 담당자이다.

[표 25-3] 서포터즈 운영매뉴얼 및 홍보물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도와 시 · 군의 5:5 매칭 예산으로 참가 시·군이 6개에 그쳤으며, 보조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의 확보가 어려웠다. 조례 미비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대면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없던 것이 그 이유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근로감독권이 없는 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 노동자등 취약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도비 100%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단체에 충분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여 사업 참가를 확대할 것과, 프랜차이즈 본사 업무협약 대상을 확대하고 업체 기여 및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6. 비정규직 노동자 권역별 동아리 지원사업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 추진배경 :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발굴 및 활동지원을 통한 문화활동 활성화 및 네트워크 형성
- 추진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활동 지원 (권역별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동아리 활동지원이 도 전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남부에 편중되어 '20년에는 3개 권역별로 나누어 지원
- 평　　가 : 동아리 활동지원을 남동권, 남서권, 북부권 총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지원하여 지역별, 영역별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 가능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노동종사자는 대표적인 취약노동자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것과 동시에 각종 문화활동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양한 생활 · 문화 · 예술분야의 동아리 활동 등의 지원으로, 영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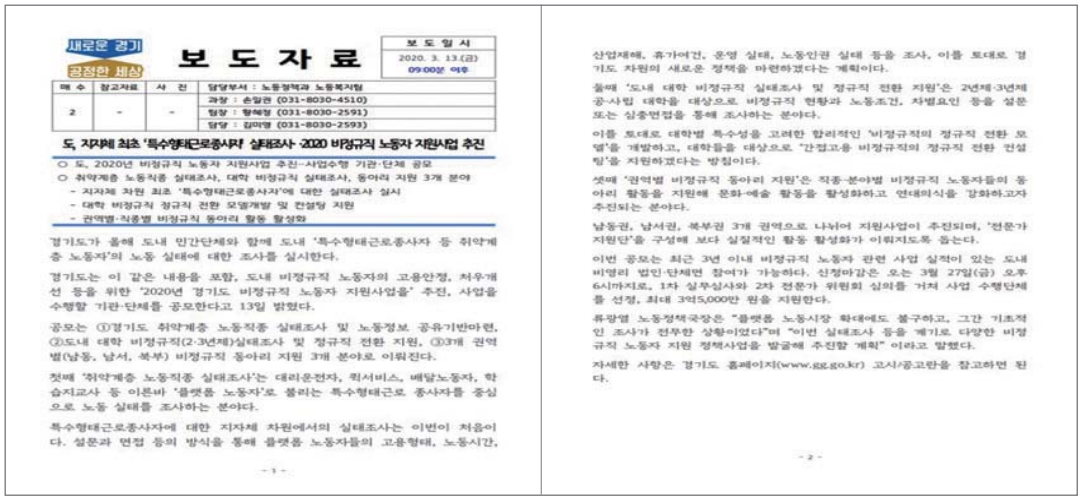
1) 권역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2020년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권역별 활동을 위해 컨소시엄 등 협업 형

태로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원, 성남, 용인, 안성, 인천, 여주, 광주, 하남, 양평 등 9개 시군을 묶은 남동권역과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과천, 안양, 군포, 의왕, 화성, 오산, 평택 등 12개 시군을 묶은 남서권역, 파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양주, 구리,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등 10개 시·군을 묶은 북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각 권역별로 6개 ~ 8개 이상의 동아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모를 추진하였다.

[표 26-1] 공모추진 관련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0. 3. 13.(금)
09:00분 석우

매 수	참고자료	사 건	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2	-	-	과장 : 손일권 (031-8030-4510)
			팀장 : 황혜정 (031-8030-2591)
			담당 : 김미영 (031-8030-2593)

도, 지자체 최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2020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 도, 2020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사업수행 기관·단체 공모
○ 취약계층 노동직종 실태조사,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동아리 지원 3개 분야
- 지자체 차원 최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대학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모델개발 및 컨설팅 지원
- 권역별·직종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 활성화

경기도가 올해 도내 민간단체와 함께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을 위한 '2020년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①경기도 취약계층 노동직종 실태조사 및 노동정보 공유기반마련, ②도내 대학 비정규직(2·3년제)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 지원, ③3개 권역별(남동, 남서, 북부)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 3개 분야로 이뤄진다.

첫째 '취약계층 노동직종 실태조사'는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달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중심으로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분야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과 면접 등의 방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노동시간, 산업재해, 휴가여건, 운영 실태, 노동인권 실태 등을 조사, 이를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도내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 지원'은 2년제·3년제 공·사립 대학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조건, 차별요인 등을 설문 또는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하는 분야다.

이를 토대로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들을 대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은 직종·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분야다.

남동권, 남서권, 북부권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보다 실질적인 활동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이번 공모는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마감은 오는 3월 27일(금) 오후 6시까지로,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단체를 선정, 최대 3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류광열 노동정책국장은 "플랫폼 노동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초적인 조사가 전무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2) 지원단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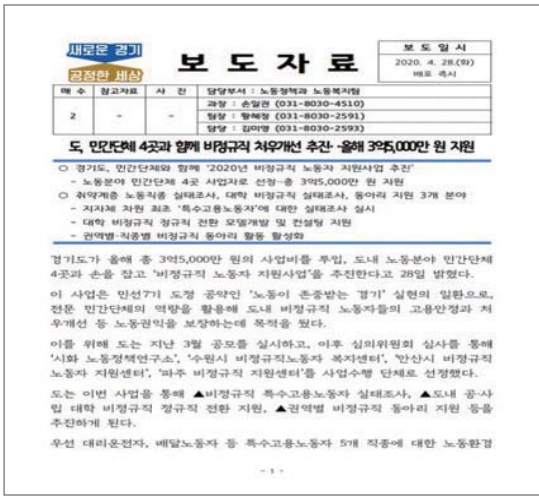
권역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교수,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2020년 4월 8일에 개최하여 권역별 대표 단체 총 3개를 선정하였다.

[표 26-2] 심의위원회 선정결과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백만 원)	단 체 명(컨소시엄)	비고
1	**남동권역** 비정규직 노동자 활동지원 (동아리 지원)	35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 수원여성노동자회(김경희) - 용인민주노동자회의(김태훈)	선정
2	**남서권역** 비정규직 노동자 활동지원 (동아리 지원)	35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최영진) -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박희정)	선정
3	**북부권역** 비정규직 노동자 활동지원 (동아리 지원)	30	**파주 비정규직 지원센터** -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이상원) -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강명용) - 경기북부 노동인권센터(신동진) - 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차명순)	선정

[사진 26-1] 선정심의위원회 개최('20.4.8.) 및 발표자료(남동권역)

[표 26-3] 단체 선정 지원 관련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0. 4. 28.(화)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과장 : 손일권 (031-8030-4510) 담당 : 황혜정 (031-8030-2591) 담당 : 김미영 (031-8030-2593)
2	-	-	

도, 민간단체 4곳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 추진 -올해 3억5,000만 원 지원

○ 경기도, 민간단체와 함께 '2020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 노동분야 민간단체 4곳 사업자로 선정-총 3억5,000만 원 지원

○ 취약계층 노동직종 실태조사,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동아리 지원 3개 분야
- 지자체 차원 최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대학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모델개발 및 컨설팅 지원
- 권역별·직종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 활성화

경기도가 올해 총 3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내 노동분야 민간단체 4곳과 손을 잡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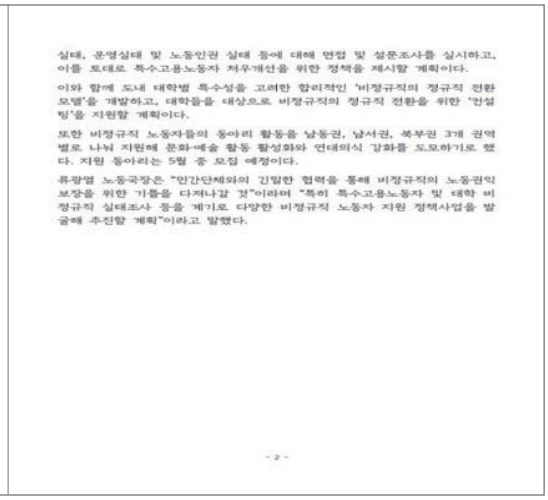
이 사업은 민선7기 도정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전문 민간단체의 역량을 활용해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노동권익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공모를 실시하고, 이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화 노동정책연구소',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 복지센터',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파주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사업수행 단체로 선정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조사, ▲도내 공·사립 대학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대리운전자,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5개 직종에 대한 노동환경

- 1 -



실태, 운영실태 및 노동인권 실태 등에 대해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특수고용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남동권, 남서권, 북부권 3개 권역별로 나눠 지원해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연대의식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지원 동아리는 5월 중 모집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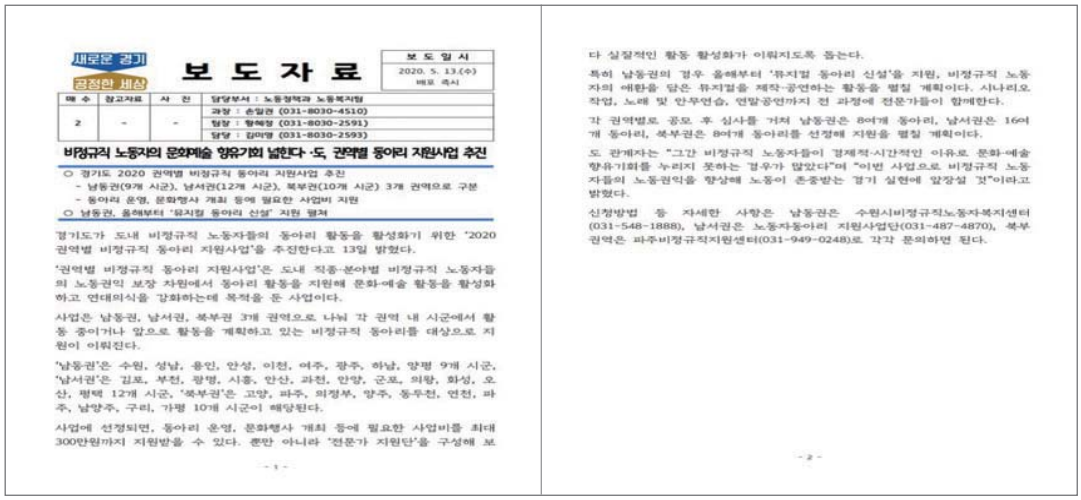
류광열 노동국장은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및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 -

3) 3개 권역 총41개 동아리 977명 지원

각 권역별로 선정된 단체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지원할 동아리를 모집하였고 최종 남동권역 9개(98명), 남서권역 20개(749명), 북부권역 12개(130명)를 선정하여 모두 41개 동아리에 977명을 지원한다.

[표 26-4] 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0. 5. 13.(수)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전	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2	-	-	과장 : 손일권 (031-8030-4510)
			팀장 : 함혜정 (031-8030-2591)
			담당 : 김미영 (031-8030-2593)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넓힌다 -도, 권역별 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 경기도 2020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 남동권(9개 시군), 남서권(12개 시군), 북부권(10개 시군) 3개 권역으로 구분
- 동아리 운영,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남동권, 올해부터 '유지형 동아리 신설' 지원 병행

경기도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기 위한 '2020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은 도내 직종·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장 차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사업은 남동권, 남서권, 북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 내 시군에서 활동 중이거나 앞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비정규직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남동권'은 수원, 성남, 용인, 안성, 이천, 여주, 광주, 하남, 양평 9개 시군, '남서권'은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과천, 안양, 군포, 의왕, 화성, 오산, 평택 12개 시군, '북부권'은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파주, 남양주, 구리, 가평 10개 시군이 해당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동아리 운영,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보

- 1 -

다 실질적인 활동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특히 남동권의 경우 올해부터 '유지형 동아리 신설'을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환을 담은 뮤지컬을 제작·공연하는 활동을 별칭 계획이다. 시나리오 작업, 노래 및 안무연습, 연말공연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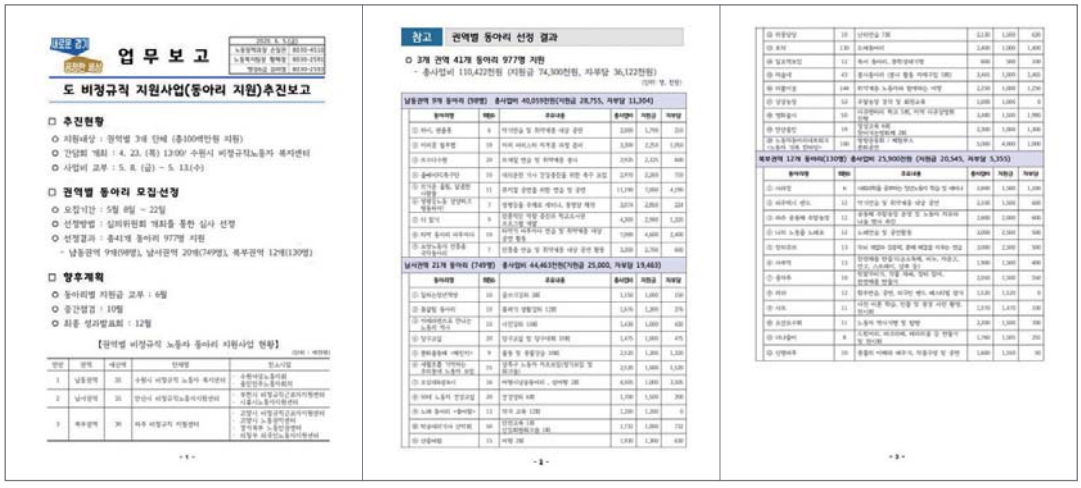
각 권역별로 공모 후 심사를 거쳐 남동권은 8여개 동아리, 남서권은 16여개 동아리, 북부권은 8여개 동아리를 선정해 지원을 별칭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제적·시간적인 이유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향상해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남동권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031-548-1888), 남서권은 노동자동아리 지원사업단(031-487-4870), 북부권역은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031-949-0248)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 2 -

[표 26-5] 도 비정규직 지원사업(동아리 활동지원) 추진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업 무 보 고

보고일자: 2020. 5. 13.(수)
노동정책과장 전결 : 팀장-손일권(031-8030-4510)
노동복지팀장 협조 : 팀장-함혜정(031-8030-2591)
협조자 : 김미영(031-8030-2593)

도 비정규직 지원사업(동아리 지원)추진보고

□ 추진현황
○ 지원대상 : 권역별 3개 단체 (총100여만원 지원)
○ 간담회 개최 : 4. 23. (목) 13:00/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 복지센터
○ 사업비 교부 : 5. 8. (금) ~ 5. 13.(수)

□ 권역별 동아리 모집·선정
○ 모집기간 : 5월 8일 ~ 22일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선정
○ 선정결과 : 총41개 동아리 977명 지원
- 남동권역 9개(98명), 남서권역 20개(749명), 북부권역 12개(130명)

□ 향후계획
○ 동아리별 지원금 교부 : 6월
○ 중간점검 : 10월
○ 최종 성과발표회 : 12월

【권역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지원사업 현황】

번호	권역	대상자	단체명	진흥사업
1	남동권역	30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수원비정노동자회 울림합주노동자회
2	남서권역	30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푸른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3	북부권역	30	파주 비정규직 지원센터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고양시 노동센터센터 양주북부 노동인권센터 파주부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 1 -

참고 권역별 동아리 선정 결과

○ 3개 권역 41개 동아리 977명 지원
- 총사업비 110,422천원 (지원금 74,300천원, 자부담 36,122천원)

(단위: 명, 천원)

남동권역 9개 동아리 (98명) 총사업비 40,055천원(지원금 28,755, 자부담 11,304)

동아리명	대표	주요내용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① 하나, 생활동	6	악기연습 및 희망예술 대상 공연	3,000	1,700	210
② 아리랑 합창단	10	아리 서비스의 직계를 위한 공사	3,350	2,250	1,050
③ 우리나라랑	20	희망일 연습 및 희망예술 장사	2,925	2,325	600
④ 플레이어즈연구단	10	대리공연 기사 감정증진을 위한 축구 프로	2,970	2,265	705
⑤ 우리는 음악, 남성한 단합회	11	음악일 공연을 위한 연습 및 공연	11,190	7,000	4,190
⑥ 한양도심 단합대고 방송하다	7	생활동을 위해요 세우나, 동방상 계획	3,070	2,850	220
⑦ 더 합격	9	합창단단 작업 공간과 학교도시관 리스크별 생활	4,200	2,980	1,220
⑧ 50대 동아리 세우자아	10	희망적 대표자의 연습 및 희망예술 대상 공연 활동	7,000	4,600	2,400
⑨ 포장노동자 인정을 위한동아리	7	인정을 연습 및 희망예술 대상 공연 활동	3,200	2,700	500

남서권역 21개 동아리 (749명) 총사업비 44,463천원(지원금 25,000, 자부담 19,463)

동아리명	대표	주요내용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① 일하는장애인합창	10	음악연습실 3회	1,150	1,000	150
② 통합형 동아리	10	통계적 생활실력 1회	1,575	1,200	375
③ 아름다운으로 만나는 노동의 역사	10	사진전시 1회	1,420	1,000	420
④ 장구모임	20	장구모임 및 장구대회 1회	1,475	1,000	475
⑤ 한마음동아리 (예방시)	9	생활 및 생활모임 1회	2,120	1,200	1,320
⑥ 사람으로 가득하는 우리들의 노동인 모임	15	상호구 노동자 직조합단합대회 및 회의회	2,120	1,000	1,320
⑦ 오르라마음동아리	16	여행이라생활대회 , 생여행 2회	4,000	1,000	3,000
⑧ 50대 노동자 합창모임	20	합창단회 6회	1,700	1,500	200
⑨ 노래 동아리 <놀이합>	13	악기 교육 12회	1,200	1,200	0
⑩ 학습하여가자 산악회	16	산악교육 1회 산악회원체조용 1회	1,720	1,000	720
⑪ 산업사랑	15	여행 2회	1,920	1,300	620

- 2 -

⑫ 마중모임	10	산악연습 7회	2,120	1,500	620
⑬ 희망	130	오케스트라	2,400	1,000	1,400
⑭ 일요계획모임	12	학교 동아리, 문학동아리방	600	300	300
⑮ 마음세	43	음식동아리 (분기 활동 지역구입 3회)	3,445	1,000	2,445
⑯ 어울마음	140	취약계층 노동자와 함께하는 여행	2,250	1,000	1,250
⑰ 양궁동합	12	주말동합 정기 및 회원교육	1,000	1,000	0
⑱ 영화동아	10	다문화아이 학교 3회, 지역 다문화합창단	3,600	1,500	1,900
⑲ 양산클럽	19	양산교육 4회	2,300	1,000	1,300
⑳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권 지켜 합창단을	100	합창단동합 / 해방무스	5,000	4,000	1,000

북부권역 12개 동아리(130명) 총사업비 25,900천원 (지원금 20,545, 자부담 5,355)

동아리명	대표	주요내용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① 사랑합	6	사회적약자를 중심으로 찾아노래자 작업 및 세미나	2,000	1,500	1,100
② 바우하나 센스	12	악기연습 및 희망예술 대상 공연	2,150	1,500	600
③ 하루 중합에 희망동합	12	합창에 희망동합 공연 및 노동자 작업의 보호, 정신 지원	2,600	2,000	600
④ 나의 노동을 노래로	12	노래연습 및 공연활동	3,000	2,500	500
⑤ 장미꽃회	13	장미 여성과 인권에 관해 배움을 이루는 연습	2,500	2,000	500
⑥ 사회적	13	장애예술 단합지고노동에, 여노, 자유그, 연고, 스트레이, 장애 등)	1,900	1,500	400
⑦ 통계추	10	장합장이도, 작업 계획, 장비 장치, 합합예술 보합도	2,000	1,500	500
⑧ 하나	12	합주연습, 공연, 이기인 세노 세노이합 장치	1,320	1,320	0
⑨ 사노	11	작업 이용 학습, 작업 및 동합 사진 활동, 작가회	2,470	1,470	100
⑩ 소선소사회	11	노동자 역사이해 및 합창	2,300	1,500	300
⑪ 다노합이	8	다문화의 이해증대, 네트워크 및 연합구축, 합사회	1,700	1,500	200
⑫ 산업여주	10	통합의 이해와 여주시, 작품감상 및 공연	1,600	1,500	90

- 3 -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 지역편중에 따른 권역별 안배

그동안 동아리 활동지원은 대부분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도 전역에 있는 비정규직 등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한계점이 있어 2020년에는 3개 권역별 배분으로 지역을 안배하되 직종 및 분야별로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개별 동아리들은 각 권역별 대표단체의 지원을 통해 동아리 활동을 추진하며 12월에는 최종 성과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별, 업종별 노동자 네트워크 형성을 장려하는 본 사업은 향후 취약노동자 자조모임이 형성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27.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 추진배경 :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제고
- 추진내용 : 도 비정규직 특수형태노동 종사자 등 1,600명 휴가비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여행의 불투명한 수요를 경기도형 문화 · 여가 상품 개발 제공을 통해 극복
- 평　　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제고 및 일 · 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기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비정규직의 77.6%는 유급휴가가 없고, 휴가 사용일수가 평균 7.6일로 정규직 10.5일의 76.9% 수준에 불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휴가여건이 열악하다. 이러한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문화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여가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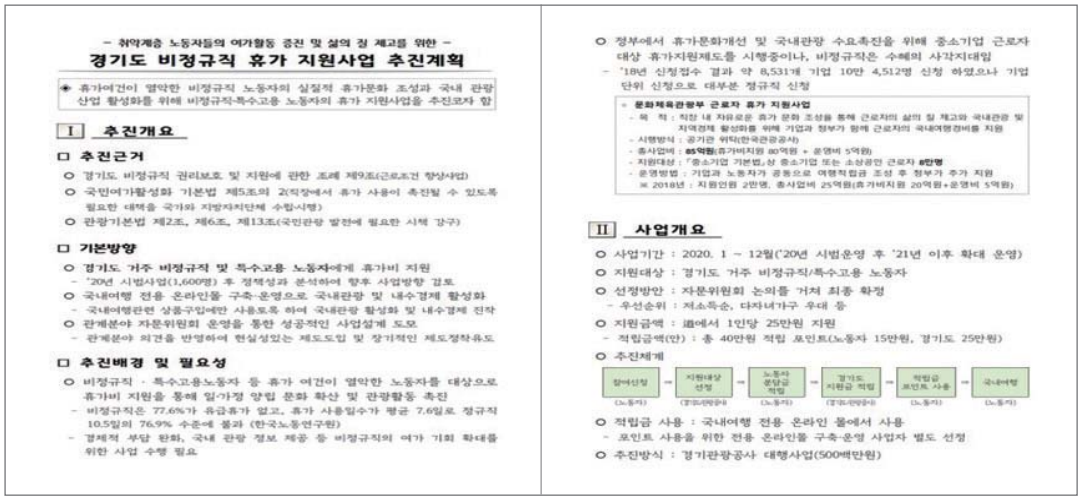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동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업단위 신청이므로 대부분 정규직에게 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여전히 비정규직과 특수형태노동종사자는 사각지대였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 비정규직과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여, 취약노동자들의 휴가여건 개선 및 일 · 가정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비정규직 휴가 지원사업 도입 검토

경기도는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휴가지원을 위해 비정규직 휴가비 지원사업을 검토하였다.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과 특수형태노동종사자 1,600명에게 노동자 본인이 15만 원을 부담하면 도에서 25만 원의 지원금을 주어 총 40만 원의 휴가비로 국내여행을 갈 수 있는 적립금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표 27-1] 「2020년 경기도 비정규직 휴가지원」 사업 추진계획



–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여가활동 공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

경기도 비정규직 휴가 지원사업 추진계획

◈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의 휴가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근로조건 향상사업)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5조의 2(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립·시행)

○ 관광기본법 제2조, 제6조, 제13조(국민관광 발전에 필요한 시책 강구)

□ 기본방향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휴가비 지원
- '20년 시범사업(1,600명) 후 정책성과 분석하여 향후 사업방향 검토

○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으로 국내관광 및 내수경제 활성화
- 국내여행관련 상품구입에만 사용토록 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내수경제 진작

○ 관계분야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설계 도모
- 관계분야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성있는 제도도입 및 장기적인 제도정착유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비정규직 · 특수고용노동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관광활동 촉진
- 비정규직은 77.6%가 유급휴가 없고, 휴가 사용일수가 평균 7.6일로 정규직 10.5일의 76.9% 수준에 불과 (한국노동연구원)
- 경제적 부담 완화, 국내 관광 정보 제공 등 비정규직의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수행 필요

○ 정부에서 휴가문화개선 및 국내관광 수요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제도를 시행중이나, 비정규직은 수혜의 사각지대임
- '18년 신청접수 결과 약 8,531개 기업 10만 4,512명 신청 하였으나 기업 단위 신청으로 대부분 정규직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 목 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국내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
- 시행방식 : 공기관 위탁(한국관광공사)
- 총사업비 : 85억원(휴가비지원 80억원 + 운영비 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
- 운영방법 :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 지원
※ 2018년 : 지원인원 2만명, 총사업비 25억원(휴가비지원 20억원+운영비 5억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20년 시범운영 후 '21년 이후 확대 운영)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 선정방안 :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우선순위 : 저소득순, 다자녀가구 우대 등

○ 지원금액 : 1인에서 1인당 25만원 지원
- 적립금액(안) : 총 40만원 적립 모인트(노동자 15만원, 경기도 25만원)

○ 추진체계

참여신청 (노동자) → 지원대상 선정 (경기도/한국관광공사) → 노동자 본당금 적립 (노동자) → 경기도 지원금 적립 (경기도/한국관광공사) → 적립금 포인트 사용 (노동자) → 국내여행 (노동자)

○ 적립금 사용 :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
- 모인트 사용을 위한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사업자 별도 선정

○ 추진방식 : 경기관광공사 대행사업(500백만원)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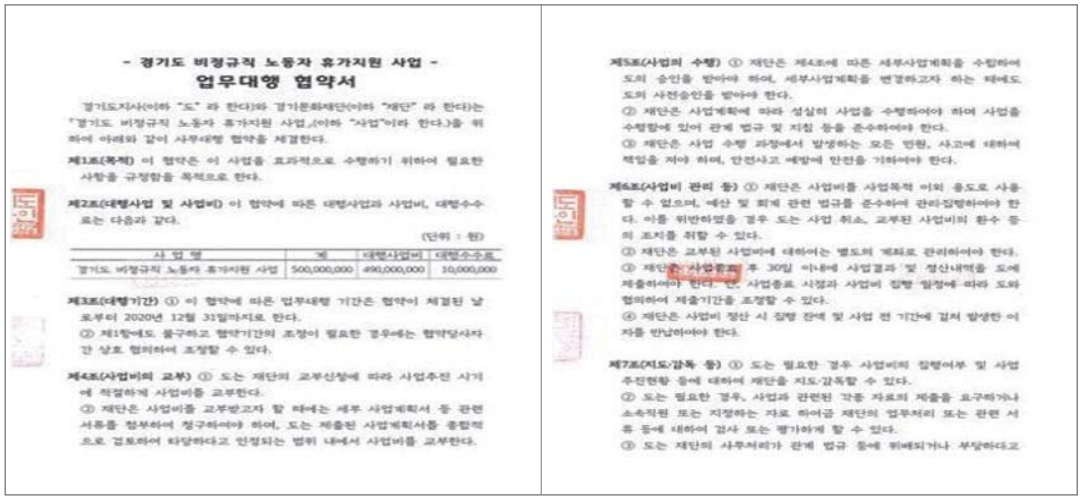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변경

국내여행 및 관광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관광공사에 대행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및 수수료 등 당초 예산범위에서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내여행상품을 제공하여 여행을 독려할 수 있는지 사업 자체의 추진여

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심리방역(예술백신) 중심의 경기도형 문화여가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집중휴가철뿐만 아니라 연중 여가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경기문화재단'이 최종 대행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2020년 4월 29일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27-2] 업무대행 협약서



-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

업무대행 협약서

경기도지사(이하 "도" 라 한다)와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 라 한다)는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무대행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사업 및 사업비) 이 협약에 따른 대행사업과 사업비, 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사 업 명	계	대행사업비	대행수수료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500,000,000	490,000,000	10,000,000

제3조(대행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업무대행 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비의 교부) ① 도는 재단의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에 적절하게 사업비를 교부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세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도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교부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4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관리 등) ① 재단은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 및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도는 사업 취소, 교부된 사업비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교부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 및 정산내역을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도와 협의하여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사업비 정산 시 집행 잔액 및 사업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는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집행여부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는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는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2) 지원대상 기준 수립

경기도 비정규직 규모는 1,941천 명(2019년 8월 기준)인 데 비해 지원대상은 1,600명에 불과해 신청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문화여가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여행전문가, 비정규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신청기준을 소득기준 월3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로 정하였다. 중간정산 및 추가모집이 용이하도록 도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비율에 따라 정산 환급하는 방식이 아닌 본인부담금을 우선 사용토록 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경기도형 상품 개발 시 월별로 공연, 지역축제 등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이에 맞춰 월별 프로모션 홍보, 이벤트, 수기공모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사진 27-1] 자문위원회 개최 (’20.5.7.)

3) 홍보 및 대상자 모집 선정

2020년 5월 15일 월간 정책홍보기획회의에서 홍보방향 및 전략을 컨설팅 받고 포스터를 제작 지원하여, 경기도가 보유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20년 5월 28일 제9회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 결과, 정책명을 직관적이고 도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1안)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2안)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채움사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슬로건으로는 (1안) 25만 원 받고 렛츠고(Let’s go) (2안) 쉬는 즐거움 떠나는 설레임 (3안) 나를 위한 선물 25만 원의 행복충전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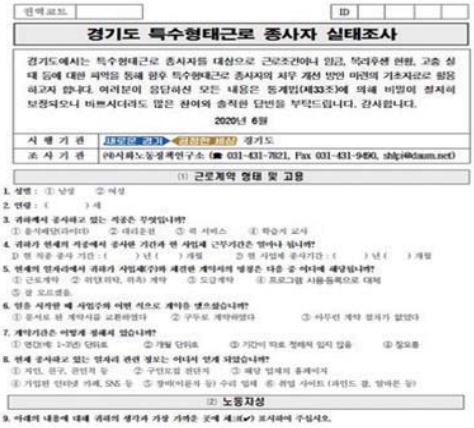
이에 최종 정책명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으로, 또한 슬로건은 ‘25만 원 받고 렛츠고(Let’s go)’로 추진하되 2안 또는 3안도 적절하게 사용키로 하였다.

2020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총 21일간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도 보유 매체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매체를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가 진행되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의 협조하에 팟캐스트를 통한 홍보, 지역신문 지면광고 및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를 통해 모집홍보

가 진행되었다. 특히 관련 협회 및 단체,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당시 진행 중이던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기간('20.6.5. ~ 7.5.)에 설문지 2,000부로 홍보물을 게재하였다.

[사진 27-3] 포스터, 배너

[표 27-4] 설문지, 홍보물


경기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조사

경기도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 대상으로 근로조건에서 임금, 직무무관 관련, 고충 심대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향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여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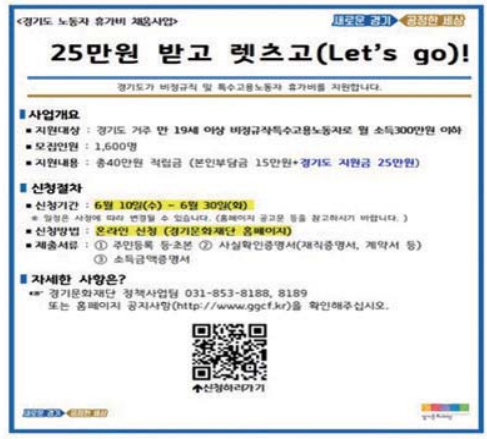
시 행 기 관 | 재단문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
조 사 기 관 | ㈜시화노동정책연구소 (☎ 031-431-7821, Fax 031-431-9450, shj@daum.net)

(1) 근로계약 형태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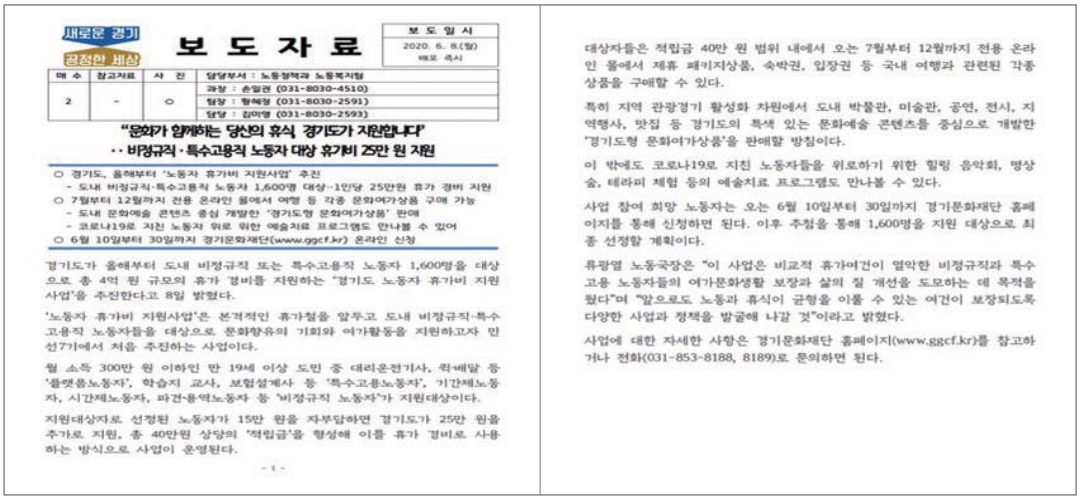
1.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 ( ) 세
3. 귀하께서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① 음식배달라이더 ② 대리운전 ③ 택 서비스 ④ 학습지 교사
4. 귀하가 현재의 직종에서 종사한 기간과 한 사업체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현 직종 종사 기간 : ( ) 년 ( ) 개월 ② 현 사업체 종사기간 : ( ) 년 ( ) 개월
5. 현재의 업무수행에서 귀하가 사업주(기업 제공한 계약서의 명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근로계약 ② 위임(위탁, 위촉) 계약 ③ 도급계약 ④ 프로그램 사용등록으로 대체
⑤ 알 수 모르겠음.
6. 업종 사작할 때 사업주와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① 문서로 된 계약서를 교환하였다 ② 구두로 계약하였다 ③ 아무런 계약 절차가 없었다
7.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① 연간(예 1-3년) 단위로 ② 개월 단위로 ③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④ 잘모름
8.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체와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게 되었습니까?
① 지인, 친구, 관련자 등 ② 구인모집 관련지 ③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④ 가입된 인터넷 카페, SNS 등 ⑤ 정책이문자 등) 수리 업체 ⑥ 취업 사이트 (사인드, 잡, 알바몬 등)

(2) 노동자성

9. 아래의 내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표 27-5] 보도자료 (신청 접수 안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0. 6. 8.(월)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2	-	○	과장 : 손일권 (031-8030-4510)
			팀장 : 함혜정 (031-8030-2591)
			담당 : 김미영 (031-8030-2593)

"문화가 함께하는 당신의 휴식,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 대상 휴가비 25만 원 지원

○ 경기도, 올해부터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
- 도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 1,600명 대상·1인당 25만원 휴가 경비 지원
○ 7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여행 등 각종 문화여가상품 구매 가능
- 도내 문화예술 콘텐츠 중심 개발한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 판매
- 코로나19로 지친 노동자 위로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어
○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문화재단(www.ggcf.kr) 온라인 신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1,6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 원 규모의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기간제노동자, 시간제노동자, 파견·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형성해 이를 휴가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된다.

- 1 -

대상자들은 적립금 40만 원 범위 내에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제휴 패키지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경기도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한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지친 노동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 음악회, 명상숲, 테라피 체험 등의 예술치료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 노동자는 오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1,6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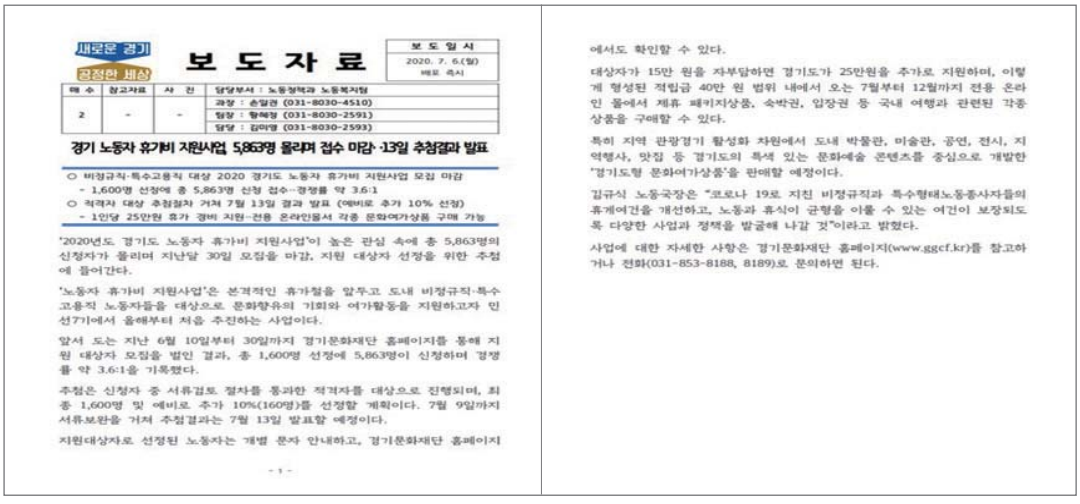
류광열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비교적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여가문화생활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노동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1-853-8188, 8189)로 문의하면 된다.

4) 접수결과 및 최종 선정

접수결과 1,600명 모집에 총 5,863명이 접수하여 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노동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반면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구비서류에 대한 불만 등 약간의 민원이 생기기도 하였고 "신청자의 44%가 탈락위기"라는 보도가 있기도 하였다.

[표 27-6] 보도자료 (접수 결과)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0. 7. 6.(월)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2	-	-	과장 : 손일권 (031-8030-4510)
			팀장 : 함혜정 (031-8030-2591)
			담당 : 김미영 (031-8030-2593)

경기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5,863명 몰려며 접수 마감·13일 추첨결과 발표

○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대상 2020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모집 마감
- 1,600명 선정에 총 5,863명 신청 접수…경쟁률 약 3.6:1
○ 적격자 대상 추첨절차 거쳐 7월 13일 결과 발표 (예비로 추가 10% 선정)
- 1인당 25만원 휴가 경비 지원…전용 온라인몰서 각종 문화여가상품 구매 가능

'2020년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높은 관심 속에 총 5,863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지난달 30일 모집을 마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에 들어간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민선7기에서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자 모집을 벌인 결과, 총 1,600명 선정에 5,863명이 신청하며 경쟁률 약 3.6:1을 기록했다.

추첨은 신청자 중 서류검토 절차를 통과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종 1,600명 및 예비로 추가 10%(160명)를 선정할 계획이다. 7월 9일까지 서류보완을 거쳐 추첨결과는 7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는 개별 문자 안내하고,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1 -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렇게 형성된 적립금 40만 원 범위 내에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제휴 패키지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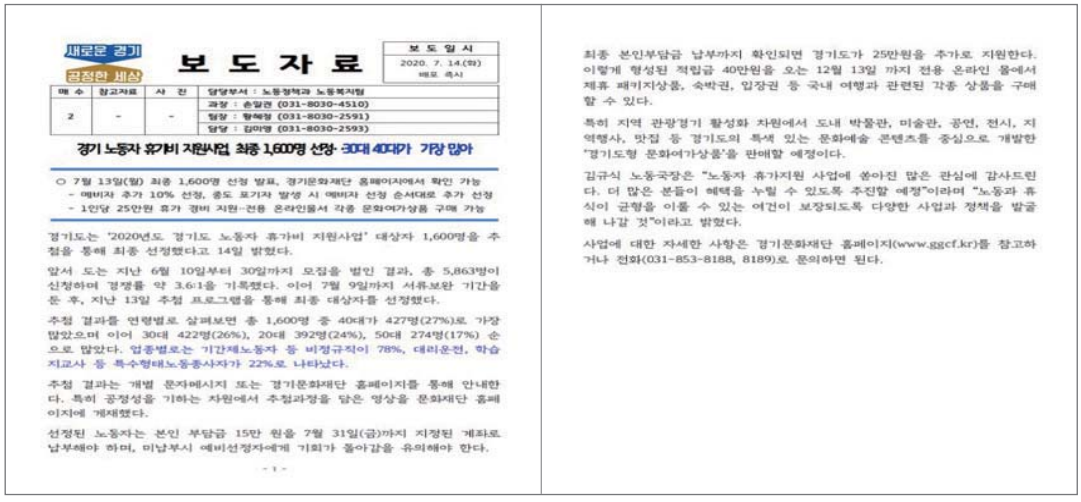
특히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경기도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한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 19로 지친 비정규직과 특수형태노동종사자들의 휴게여건을 개선하고, 노동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1-853-8188, 8189)로 문의하면 된다.

7월 13일 전산 프로그램으로 공정한 추첨을 통해 최종 1,600명을 선정하였다. 40대가 427명, 30대가 422명으로 이들이 총 선정자의 53%를 차지했다. 아울러 20대가 392명, 기타가 359명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선정되었고, 이중 특수형태노동종사자가 351명으로 22%를 차지했다. 선정자 중 본인부담금(15만 원)을 납부한 노동자에게 최종 지원을 하게 되며 미납부자는 예비 선정자 및 추가 추첨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표 27-7] 보도자료 (최종 선정)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0. 7. 14.(화)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2	-	-	과장 : 손일권 (031-8030-4510)
			팀장 : 황혜정 (031-8030-2591)
			담당 : 김미영 (031-8030-2593)

경기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최종 1,600명 선정 · 30대 40대가 가장 많아

○ 7월 13일(월) 최종 1,600명 선정 발표,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예비자 추가 10% 선정, 종도 포기자 발생 시 예비자 선정 순서대로 추가 선정
- 1인당 25만원 휴가 경비 지원-전용 온라인몰서 각종 문화여가상품 구매 가능

경기도는 '2020년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모집을 벌인 결과, 총 5,863명이 신청하여 경쟁률 약 3.6:1을 기록했다. 이어 7월 9일까지 서류보완 기간을 둔 후, 지난 13일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추첨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총 1,600명 중 40대가 427명(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422명(26%), 20대 392명(24%), 50대 274명(17%)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기간제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78%, 대리운전,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가 22%로 나타났다.

추첨 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 또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특히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추첨과정을 담은 영상을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선정된 노동자는 본인 부담금 15만 원을 7월 31일(금)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예비선정자에게 기회가 돌아감을 유의해야 한다.

- 1 -

최종 본인부담금 납부까지 확인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렇게 형성된 적립금 40만원을 오는 12월 13일 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체류 패키지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경기도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한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에 쏟아진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노동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1-853-8188, 8189)로 문의하면 된다.

[표 27-8] 전용 온라인 몰

경기문화재단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운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모두투어를 선정하였다. 모두투어는 국내호텔 등 단품 상품과 향후 개발 예정인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을 선정자만 로그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몰을 통해 제공키로 하였으며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국내항공상품, 패키지형 여행상품 등 모두투어가 판매하는 모든 국내 여행상품을 추가로 제공 중에 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처음 실시됨에도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을 개발하여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아울러 2021년에는 대상자와 대상범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 노동자들의 휴가 여건을 개선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경기도가 걸어온 길

제2장

평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경기도

제1절 평화를 앞당기는 남북교류사업 확대

28. 2019 DMZ 포럼 성공적 개최

DMZ정책과 DMZ정책팀장 이남주

- 추진배경 :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 관련 국제적 논의의 장 마련
- 추진내용 :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대규모 국제포럼 개최
- 문제점 및 해결 : 다양한 전문가 · 기관의 참여 확대, 지속적인 관계기관 소통 · 협업 추진
- 평　　가 :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제 도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에는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여러 가지 대외적 여건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체 국면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다소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시선이 한반도를 향해 있다. 특히, 분단과 평화의 상징이며 자연과 생태가 변함없이 보존된 DMZ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가치에 대한 전문가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대부분의 논의가 일회성 행사로 개최되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경기도는 DMZ를 품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책 의지에 따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전 세계 석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계획하였다.

국내외 타 포럼과의 차별화로,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전연구를 실시하였고, 포럼 기간 중 발표된 전문가 패널의 다양한 의견을 집대성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조직위원회 구성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접목

전례 없는 대규모 국제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포럼기획, 패널 선정 · 초청, 현장 의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였다. 경기도는 정동채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김갑수 문화평론가, 황교익 맛 컬럼리스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킴푹 여사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하는 등 수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 포럼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또한 행사 전 조직위원회 언론브리핑 시 조직위원인 김갑수, 황교익 등 셀럽의 등장으로 대중의 관심은 물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사진 28-1] 조직위원회 회의개최 및 언론브리핑

2) 「2019 DMZ 포럼」 성공적 개최

경기도는 10여 개월 간의 준비 끝에 「2019 DMZ 포럼」을 개최하였다. 우선 공식행사

전일인 9월 18 해외 패널을 대상으로 DMZ 일원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임진각, 캠프그리브스, 대성동마을 등을 방문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패널들이 한국의 분단과 냉전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며 느낄 수 있었다.

9월 19일 공식행사 첫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간의 포럼의 막이 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킴푹, 전 세계 여성운동의 상징인 미국의 사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이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청중과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DMZ의 평화적 활용과 관련 경기연구원에서 기획한 6개 테마 총 11개 기획세션을 개최했고,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특별세션Ⅰ을 진행했다.

이튿날인 9월 20일에는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진행하는 특별세션Ⅱ, 동아시아 다자협력에 관해 논의하는 특별세션Ⅲ, 2일간의 포럼을 정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고, 남북평화협력과 DMZ 가치 제고의 실행의지를 담은 '경기평화선언문'을 채택하며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표 28-1] 2019 DMZ 포럼 개요

○ 기　　간 : '19. 9. 19(목) ~ 9. 20(금), 2일간
* 9.18.(수) 해외연사 사전 현장방문 : 임진각, 캠프그리브스, 대성동마을 등
○ 장　　소 : 고양시 킨텍스
○ 주최/주관 : 경기도 / 경기연구원
○ '19년 주제 :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 DMZ 포럼 대주제 :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 참 여 인 원 : 해외연사 30여 명, 국내연사 60여 명, 참관인원 2,500여 명 등

[사진 28-2] 2019 DMZ 포럼 개회식

[표 28-2] 2019 DMZ 포럼 언론보도

경향신문

2019년 09월 18일
14A면 (수도권/제주)

경기, 9·19 공동선언 1주년 기념 'DMZ 포럼' 연다

19~20일 고양 킨텍스에서
국내외 석학 평화·협력 논의
DMZ 평화상 제정 제안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2019 DMZ 포럼'을 19~20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9·19 공동성언 1주년을 기념해 냉전시대 마지막 유산인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담론과 정책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 킴푹, 미국의 평화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3개의 특별세션(남북평화협력,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경기연구원이 준비한 DMZ의 역사, 생태, 평화 등 6개 테마 11개 기획세션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3개의 특별세션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교수, 조지프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중국의 리닝 장군, 러시아의 알렉산더 루킨 교수 등 국내외 지도자와 석학이 참석해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폐회식에서는 포럼 참석자들의 뜻을 모아 DMZ 평화선언문을 채택하고, 향후 주요 실천과제로 DMZ 평화상(가칭) 제정 및 관련 기구 설립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19.5×6.3)cm

한겨레

2019년 09월 20일
1면 (국방/외교)

'네이팜탄 소녀'의 당부…"한반도 평화는 겸손·인내 요구"

베트남전 참상 사진속 주인공
전쟁 멈춰세운 판티킴푹 연설
"남북, 평화노력 포기하지 말길"

비무장지대 걸어서 넘었던
글로리아 스타이넘도 참석
"미국은 종전선언부터 해야"

"한반도의 통일은 오랫동안 유지돼온 유무형의 장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남북 정상의 '9·19 평양공동선언' 1돌을 기념해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엠제트(DMZ) 포럼 2019'에서 유네스코 평화문화 전선대사인 판티킴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현은 겸손과 인내를 요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9살이던 1972년 6월8일 베트남전 당시 불에 타버린 옷을 벗어던진 채 울며 달아나는 그의 모습은 당시 〈에이피〉 통신 기자 닉 우트의 카메라에 담겼다. '네이팜탄 소녀'로 알려진 그의 사진은 베트남전 종식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17번의 수술을 거친 판티킴푹은 "어린 소녀로서 제가 겪은 가장 강력한 것은 전쟁의 파괴력이었다. 소이탄이 제 몸의 60% 이상을 태워 한 고통을 매일 겪으면서 소이탄이 아니라 분노와 증오 그리고 희망 없음이 나를 죽이고 있었다"며 "하지만 주변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기억하고 같은 피해자를 돕보는 나눔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하는 글로리아 스타이넘.

판티킴푹은 "평화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용서는 어렵고 되돌려준다는 것은 희생을 필요로 하며 화해는 노력을 요구한다"며 "남북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 이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2015년 5월24일 전세계 여성평화운동가 30명과 함께 북한에서 직접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넘어오는 위민크로스(Women's Cross) 캠페인을 펼쳤던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세계에 이 분단 경계란 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엄마로 상징한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고 정치적 의지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러 왔다"고 말했다.

판티킴푹 엠국제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디엠제트 포럼 2019'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고양/김명효 기자 hyopd@hani.co.kr

그는 "미국 지도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만이 평화회담의 필수 여건임을 업무적으로 강요하는 접근은 (과거로의) 후퇴다. 비핵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려면 우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남북한 국민과 정부의 염원을 존중해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임시적인 휴전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쟁과 군사주의는 가장 취약한 집단인 어린이와 여성을 폭력의 희생자로 만든다. 한국의 평화정착 과정에서 진정한 안보는 억압, 권력의 차이 그리고 군사주의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때 찾아온다는 남북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국외 인사 외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완상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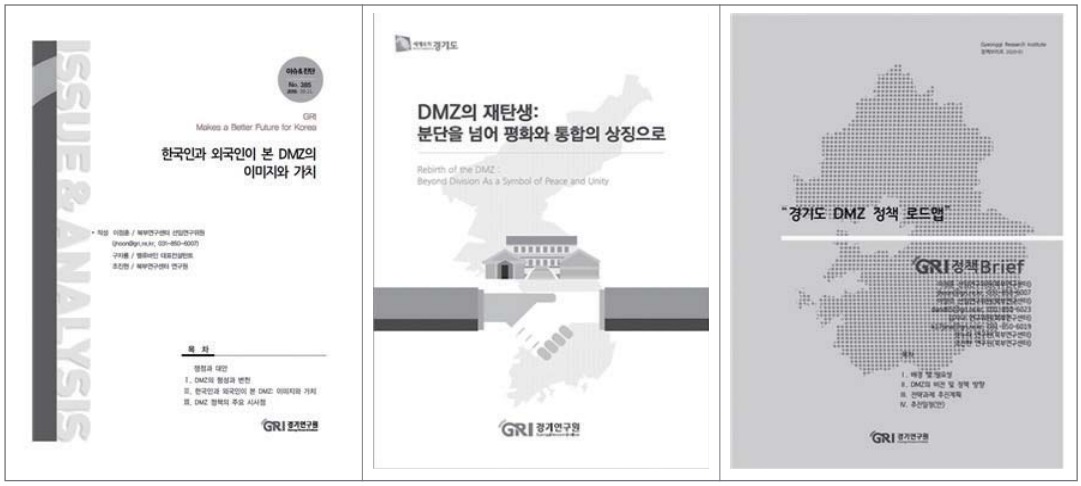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표) 3×17.4cm

3) 다양한 정책의제 발굴

경기도는 「2019 DMZ 포럼」이 일회성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정책추진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포럼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한층 심화하고 구체화한 'DMZ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DMZ의 재탄생: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합의 상징으로」와 「DMZ정책 로드맵」 등을 제작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 28-3] DMZ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보고서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 전담기구 부재: 관계기관 소통과 협업으로 극복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간 위 · 수탁 협약을 통해 포럼 개최를 계획하였지만 양 기관 내 해당 사무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할 수는 없었다. 사업초기 기조연설자 선정 등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어 준비단계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조직위원회의 의사결정 아래 경기도 각 부서(DMZ정책과,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등) 및 산하기관(경기연구원, 경기문화

재단, 경기아트센터 등) 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분업화를 통해 행사를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6개 테마의 11개 기획세션, 3개 특별세션, 라운드테이블 등으로 구성된 「2019 DMZ 포럼」을 완성도 높게 개최하였고, 미국, 영국 등 8개국 30여 명 해외연사와 국내 학계 · 관계기관 전문가 60여 명의 참여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제 학술행사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었다. 또한,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등 정책적 대안 제시로 보다 더 실용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는 「DMZ 포럼」을 대한민국 대표 평화포럼으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전 세계 평화운동 단체 · 기관 등이 참여하여 평화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만들어 평화운동의 거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29. DMZ 세계자연유산 남북공동 등재 추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활용팀장 박병우

- 추진배경 :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DMZ를 국제평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 추진내용 : DMZ 가치발굴을 위한 비교연구, 학술심포지엄, DMZ 실태조사 등 OUV 도출
- 문제점 및 해결 :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 체결
- 평　　가 : DMZ 세계자연유산 남북공동 등재 추진의 초석 마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전쟁터는 전쟁을 겪은 민족이나 국가에서 다시는 떠올리기 싫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장소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억의 장소는 바로 비무장지대(DMZ)일 것이다. DMZ는 정전협정 이후의 세월 동안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가장 평화로운 생태의 현장으로써, 생명, 평화, 치유라는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고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DMZ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발표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DMZ를 등재하는 것은 DMZ의 자연적 특징을 살리면서 세계유산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상징으로 만들고, 평화와 화합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서 DMZ 내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유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보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확실한 보호체계인 셈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문화재청, 강원도 등 관련기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DMZ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연구자료 등 업무공유 및 협력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 2019년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에 'DMZ를 국제평화지대 조성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제안'을 함으로써 DMZ의 세계

자연유산 남북공동 등재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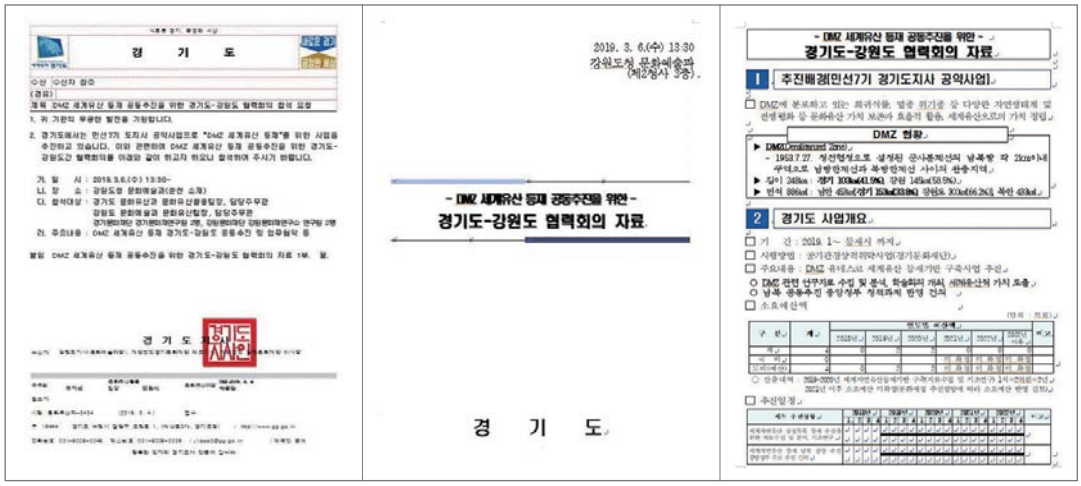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및 중앙정부 정책과제 포함 건의

DMZ는 총 면적이 886㎢로 남한이 453㎢, 북한이 433㎢에 해당하며, 이중 남한쪽을 다시 구분하면 경기도가 153㎢로 33.8%, 강원도가 300㎢로 66.2%에 해당된다. 이는 DMZ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먼저 끌어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남한 내에서도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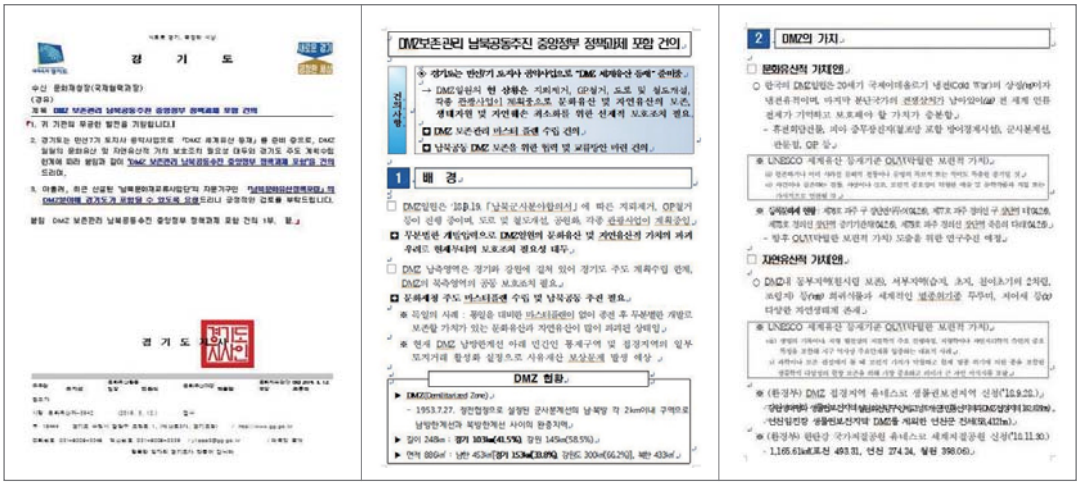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문화재청 국제협력팀,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강원도 문화유산 관련부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DMZ 일원 연구자료 업무공유와 협력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DMZ 분야의 문화재청과 경기도 공동연구 및 상호 지속적 협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29-1] DMZ 세계자연유산 공동추진을 위한 경기도-강원도 협력회의



또한, 문화재청의 DMZ 보존과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과 남북공동 DMZ 보존을 위한 협력 및 교류방안 마련을 위하여 'DMZ 보존관리 남북공동추진을 중앙정부 정책과제에 포함' 할 것을 문화재청에 공문으로 정식 제안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표 29-2] DMZ 보존관리 남북공동추진 중앙정부 정책과제 포함 건의


경 기 도

DMZ보존관리 남북공동추진 중앙정부 정책과제 포함 건의

1 배 경

2 DMZ의 가치

2)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MOU 체결(경기도 · 문화재청 · 강원도)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우선, 문화재청의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TF조직인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과 자문기구인 「남북문화유산정책포럼」의 공동개최를 제안했고, 문화재청의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2019년 4월과 5월에 개최된 제1차, 제2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에 경기도도 함께 참여했다.

또한, 2019년 4월 23일에는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고자 하는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범국가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하여 경기도와 국회의원 45명이 함께 주최 및 주관하여 'DMZ를 세계유산으로' 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DMZ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붐업 조성에 성공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사진 29-1] ‘DMZ를 세계유산으로’ 학술심포지엄 (국회도서관, ’19.4.23.)

이어 2019년 7월 11일 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MOU를 서울 한국의집에서 경기도지사, 문화재청장, 강원도지사가 직접 만나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남북협의, 등재신청, 사전조치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동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사진 29-2]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MOU 체결’ (’19.7.11.)

3)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공동추진

경기도 · 문화재청 · 강원도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본격적인 DMZ의 세계자연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하여 정기적인 경기도 · 문화재청 · 강원도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각 기관별 향후 추진계획 등 중기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협력방안으로 2019년 「DMZ」를 주제로 한 제3차부터 제6차까지 네 번의 「남

북문화유산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하였고, 특히 제5차 포럼은 경기도 주관으로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구상」 주제로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하였고, 2020년에는 4차에 걸친 「북한의 민족유산」을 주제로 한 「남북문화유산정책포럼」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로 DMZ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의 붐업 조성을 위하여 「DMZ, 냉전에서 평화로」의 주제로 해외 전문가를 초청 국제학술심포지엄을 2019년 12월에 공동 개최하여 현장답사,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다.

5) DMZ 내 현장실태조사 공동 추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DMZ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여 증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과정인데, 여기서의 기본은 DMZ 전 구역에 걸쳐 분포한 자연 · 문화유산의 기초자료 조사인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문화재청, 강원도와 공동으로 자연 · 문화 · 군사 · 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이 참여하여 2020년 5월 26일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1차로 파주 대성동마을, 2차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향후 18차에 걸쳐 추진하게 될 실태조사는 비무장지대의 의미와 형성 전후의 변화를 드러내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설명할 수 있는 유산의 구성 요소들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대상을 포함시켜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1년여 동안 추진될 실태조사를 통해 유산구역 설정에 필요한 자연 · 문화유산의 기본 정보 확보 및 보존현황의 파악과 함께 주요 대상의 정밀조사, 비교분석 심화연구, 문화재 지정 · 등록 등 후속 조치 방안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사진 29-3] ‘DMZ내 현장실태조사 추진’ (’20.5.26.)

경기도는 문화재청과 강원도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 등과 꾸준한 협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비무장지대 보호관리 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코로나19 등 국제상황 변화로 계획된 사업추진의 차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MZ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DMZ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인 과제로, 2020년 6월 중국 푸저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관계자를 초청 ‘DMZ의 세계자연유산 남북공동 등재’와 관련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제적인 붐업 조성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전 세계에 몰아닥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 취소, 국제학술심포엄 개최 불가 등 전반적인 국제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는 제1차로 DMZ 내 현장실태조사를 마친 한국전쟁 이후 비

무장지대 내 주민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마을과 도내 민북마을인 횡산리마을, 해마루촌, 통일촌 3개 마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DMZ 유산과 완충구역 설정을 위한 관련유산의 현황 조사를 추진하여 향후 안정적인 보존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2) DMZ 접경지역민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시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는 세계유산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특히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DMZ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지역민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나 피해, 그리고 규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크기 때문에 접경지역민에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를 심어주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연천과 파주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DMZ 보존과 활용」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접경지역 주민 8명의 사례발표와 토론을 거쳐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사진 29-4]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포럼 ('19.7.12.)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 등재는 주민들은 나중에 등재된 다음에 알고, 과정에서는 거의 배제되어 있다시피 했지만, 경기도는 DMZ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라는 과제를 초기부터 주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추진하였고, 2020년 하반기에는 「접경지역주민 아카데미교육」 사업도 추진하여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향한 DMZ의 보존과 관리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선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DMZ의 세계자연유산 남북공동 등재는 비무장지대라는 장소적 특징을 살리면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 치유의 공간으로 가져가자는 소망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발과 훼손이 아닌 보존을 통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에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삼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문화재청, 강원도와 함께 DMZ 세계자연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중기 이행계획에 따라, 북측의 참여와 성과도출, DMZ 기초자료의 수집과 분석, 학술연구와 국제학술 심포지엄, 지역주민 교육 사업 등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DMZ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전략 수립과 지속성을 갖춘 정책적 접근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30.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파견

평화협력과 국제협력지원팀장 황수익

- 추진배경 : 국정과제 12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추진내용 : 8개 기관 도입 결정 및 관련 근거 규정 마련
- 문제점 및 해결 : 노동조합과 협의, 상호 이해의 폭 확대
- 평　　가 : 노동 존중,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해외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사회에 올바른 봉사활동 문화와 제3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소외계층의 지원으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시민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의 구현을 위하여 도민(청년) 직접 참여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에 '경기도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배려심을 가지고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청년인재를 육성하는 데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다.

경기도는 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을 위하여 사업 총괄기관인 코디네이터(분당환경경시민의모임)과 6개의 파견기관을 선정하여 150명의 청년봉사단원을 몽골과 베트남에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 미술봉사, 체육봉사, K-POP 공연, 도서관 환경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추진절차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파견'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파견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를 선정한 이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와 사업추진 절차, 봉사단 모집, 사전교육, 발대식, 파견 절차, 봉사활동, 사후관리 등 파견 사업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수차례 협의하였다.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 30-1] 경기청년해외봉사단 파견 추진절차

사전 준비	→	사전 교육	→	컨설팅 제공	→	발대식
- 봉사단체 안내 등 준비 - 안전 관리 대응 매뉴얼		- 오리엔테이션 - 안전교육 - 봉사 마인드 고양 - 홍보		- 사업계획서 검토 - 봉사 콘텐츠 개선 - 성과지표 구체화 - 안전관리, 홍보계획 - 일자리 방안 연계 등		- 행사 준비 - 봉사단 모자 등 물품

파견 준비	→	모니터링	→	해단식
- 출국지원 - 관련문제 대응 등		- SNS 현장 홍보 지원 및 관리 - 현지 활동 상황 확인 및 점검		- 수료증 제작 - 성과 공유 및 영상 제작

[사진 30-1] 경기청년해외봉사단 추진

발대식 사진

출국 보고 사진

현지 봉사활동 진행 보고

해단식 자료(책자 및 수료증) 배송

2) 파견국가 및 봉사활동 내용

경기도는 6개의 봉사파견기관을 선정하여 총 150명의 청년봉사단원을 선발하였으며, 이 중 베트남에 120명, 몽골에 30명을 파견하였다. 한국어 교육, 미술봉사, 체육봉사, K-POP 공연, 도서관 환경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경기도의 위상을 높였다.

[표 30-2] 경기청년해외봉사단 파견내역

봉사단	기간	인원	파견국	활동
한몽교류진흥협회-신구대	'19.6.26.~7.5.	15	몽골	몽골 경기도 작은도서관 주변 아동대상 공작, 공예, 미술봉사
항공대학교	'19.6.25.~7.12	15	몽골	드론과 3D 프린트 실습 태권도 및 K-POP
TVD사회적협동조합	'19.7.18.~8.1.	20	베트남	미술봉사, 체육봉사 도서관 환경개선
	'20.1.6.~1.17.	10	"	
	'20.1.6.~1.17.	15	"	
인덕대학교	'19.7.28.~8.10.	15	베트남	벽화봉사, 음식봉사 K-POP 공연
	'20.1.5.~1.18.	15	"	
한국외국어대학교	'19.8.3.~8.16.	30	베트남	한국어 교육봉사
서울국제친선협회-서정대	'19.8.6.~8.16.	15	베트남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점검 교통안전교육

몽골 교육봉사	몽골 교육봉사
베트남 벽화봉사	베트남 미용봉사

3) 파견단 만족도 및 성과

경기도 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의 목표는 파견국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대 및 봉사단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이며 목적은 봉사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자리 탐색 또는 수원국 취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봉사이수자 수, 봉사자들의 만족도, 봉사자들의 참여율, 봉사자들의 설문조사 점수 등 4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목표치 대 달성도 측정결과 4개 지표 모두 목표치 대비 달성도 수치가 초과하여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목표(Goal) 수원국 대상지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대 및 국내 참가자 글로벌 마인드 함양						
목적(Purpose/Outcome)			지표 (Indicator)	기준치 (Baseline)	목표치 (Target)	달성도 (누적)
봉사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자리 탐색 또는 수원국 취업에 대한 인식을 높임			-봉사활동가들의 만족도	100	70	90
산출물(Outputs)		산출 시기 (xx년 x/4분기)	지표 (Indicator)	기준치 (Baseline)	목표치 (Target)	달성도 (누적)
1	봉사자들 확보 및 사전 교육	2019년 5월/2분기	이수자 수	150명	150명	150명
2	봉사자들의 만족스럽고 안전한 활동 실시	2019년 12월/4분기	봉사자들의 만족도	100	80	90
3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2019년 12월/4분기	봉사자들의 참여율	100	80	100
4	봉사자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식 개선도 및 취업 희망도 조사	2019년 12월/4분기	봉사자들의 설문조사 점수	100	80	95

4) 언론보도

경기도 청년봉사단 파견 사업에 대한 홍보를 보면 신문,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도를 통하여 청년봉사단 파견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신문 보도 목록

		제목	매체명	배포 일자	비고
국내	1	'2019 경기도 청년 해외봉사단' 발대식 (https://www.etnews.com/20190609000112)	전자신문	'19.6.9	
	2	'2019 경기도 청년 해외봉사단 발대식' 가져 https://www.news1.kr/articles/?3640990	news1	'19.6.9	
	3	경기도, '2019 청년 해외봉사단 발대식' 개최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71	수원일보	'19.6.9	
	4	경기도 청년 해외봉사단 발대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995	경기도민일보	'19.6.9	
	5	'도 청년 해외봉사단' 발대 국제사회 기여·일자리 탐색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633	경기신문	'19.6.9	
		그 밖의 발대식 관련 8건의 기사			

2) 라디오 방송 목록

		제목	매체명	방송 일자	비고
국내	1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경기도”...청년봉사단 파견·소방차량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활발 http://www.ifm.kr/news/263145	경인방송	’19.8.21.	

3) SNS 홍보 목록

		제목	매체명	게시 일자	비고
국내	1	경기청년해외봉사단 꿈꾸는 나무와 슈퍼스타의 등장 https://blog.naver.com/tojkw111/221767415389	네이버 블로그	’20.1.11.	
	2	[경기청년해외봉사단] 한국어 교육 봉사 (1)한국외대 봉사단... https://blog.naver.com/yeny8825/221605388972	네이버 블로그	’19.8.4.	
	3	[1] 경기도청년해외봉사단, 드디어 베트남으로 출발 !! https://blog.naver.com/lde291/221809402620	네이버 블로그	’20.5.14.	
	4	파견 전 마지막 교육!” - 경기청년해외봉사단x꿈바라기 2차 교육 https://blog.naver.com/sifophoto/221601193097	네이버 블로그	’19.7.31.	
	5	그 밖의 페이스북 “경기개발협력얼라이언스” 게시물 다수	페이스북	’19.5.~ ’20.1.	

※각 시행단체에게 봉사단 활동과 관련하여 게시물 업로드 장려 및 확인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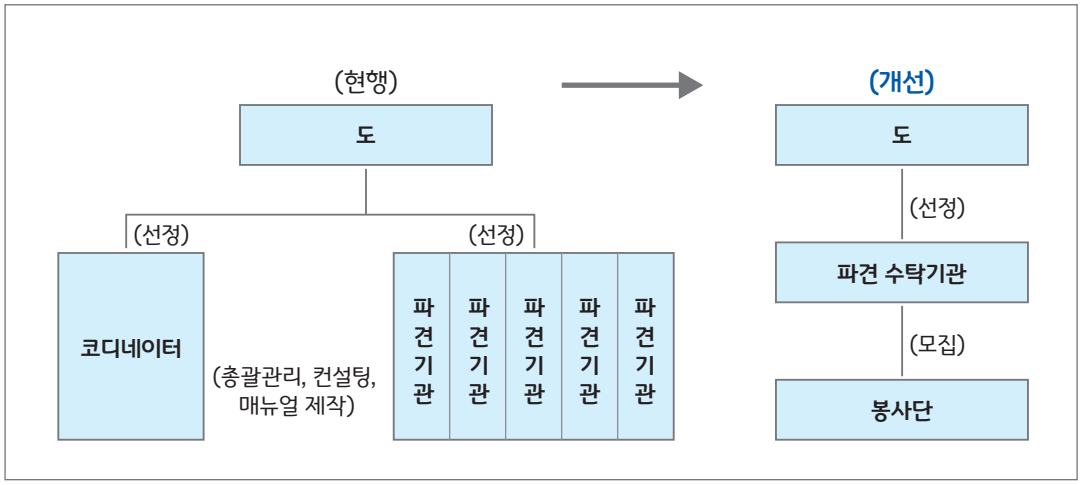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문제점

2019년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道가 코디네이터 기관과 파견기관을 별도 선정하고 코디네이터가 다수의 봉사기관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봉사기관별 파견 상황 파악, 파견 후 결과보고 및 정산,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즉, 코디네이터와 파견기관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책임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2) 극복방안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봉사단 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책임성 및 효율성 증진이 필요하다. 즉 경기도가 파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이 봉사단 모집, 교육, 파견, 결과보고, 정산, 사후관리 등을 일원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도포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20년에 자원봉사 특화기관인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를 청년봉사단 파견기관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청년봉사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는 도민(청년) 직접 참여형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을 시작하였다. 베트남과 몽골에 150명의 청년봉사단을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 미술봉사, 체육봉사, K-POP 공연, 도서관 환경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글로벌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경기도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봉사이수자 수, 봉사자들의 만족도, 봉사자들의 참여율, 봉사자들의 설문조사 점수 등 4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4개 지표 모두 목표치 대비 달성도 수치가 초과하였다. 하지만 코디네이터와 파견기관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책임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2020년에 자원봉사 특화기관인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를 청년봉사단 파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020년에는 봉사활동, 글로벌 일자리 탐색, 한민족 역사 유적지 탐방을 연계하는 다목적 봉사를 추진하고 경기도가 시행한 ODA사업지를 파견봉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ODA사업을 수행하고 성과 평가, 환류로 사업개선, 직업탐색 연관 컨설팅 제공 등 지속적 관리로 취업으로 연결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봉사단 파견에 앞서 온라인상에서 봉사단, 모집 후 선발, 코로나 방역 등 온라인 사전교육, 개도국을 온라인으로 연결, 미술 및 체육 관련 교육봉사활동, 코로나19 방역 홍보 및 위생교육, 마스크, 손소독제 등 K방역 물품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에 대비한 봉사단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31.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추진

평화협력과 평화기획팀장 설종진

- 추진배경 :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상 위험 발생 가능성 고조
- 추진내용 : 긴급 TF팀 구성,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도 · 시 · 군 합동대응반 구성 · 운영
- 문제점 및 해결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 · 개정 및 접경지역 시도 공동대응 필요
- 평　　가 : 대북전단 살포 원천차단, 남북긴장 완화에 큰 기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는 도내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다. 실제 지난 2014년 10월 10일 북측 초소에서 상공에 떠오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조준사격을 하였고, 탄환 몇 발이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 등에 떨어져서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고 주민들이 대피를 한 바 있다.

2020년 5월 31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북한 통일전선부가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담화를 발표('20.6.5.)하고, 남북 통신연락채널을 완전 차단('20.6.9.)한 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20.6.16.)하는 등 북측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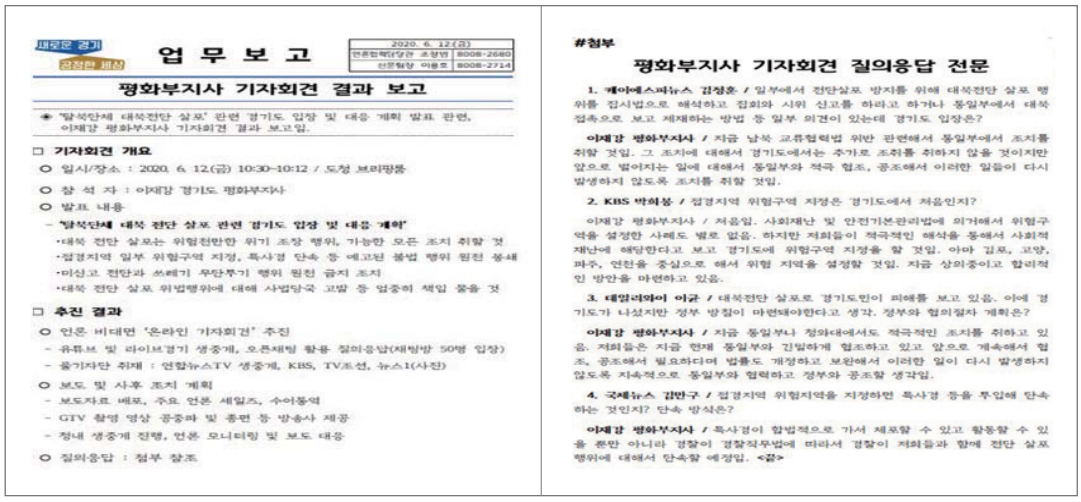
따라서 추가 전단 살포 시 북측의 조준사격,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과 안전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재난상황에 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대북전단 살포 대응계획 언론 브리핑 및 TF팀 구성 · 운영

경기도는 2020년 6월 12일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경기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방지책을 발표하고, 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6월 16일 평화부지사 주재 하에 16개 부서로 구성된 긴급 TF팀을 구성하여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31-1] 대북전단 살포방지 긴급 언론 브리핑 업무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업 무 보 고

2020. 6. 12(금)
언론협력담당관 조장범 8008-2680
신문팀장 이용호 8008-2714

평화부지사 기자회견 결과 보고

◉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관련 경기도 입장 및 대응 계획 발표 관련, 이재강 평화부지사 기자회견 결과 보고임.

□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20. 6. 12.(금) 10:30~10:12 / 도청 브리핑룸

○ 참 석 자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 발표 내용

- '탈북단체 대북 전단 살포 관련 경기도 입장 및 대응 계획'
  - ·대북 전단 살포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 가능한 모든 조치 취할 것
  - ·접경지역 일부 위험구역 지정, 특사경 단속 등 예고된 불법 행위 원천 봉쇄
  - ·미성고 전단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원천 금지 조치
  - ·대북 전단 살포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 등 엄중히 책임 물을 것

□ 추진 결과

○ 언론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 추진

- 유튜브 및 라이브경기 생중계, 오픈채팅 활용 질의응답(채팅방 50명 입장)
- 출기자단 취재 : 연합뉴스TV 생중계, KBS, TV조선, 뉴스1(사진)

○ 보도 및 사후 조치 계획

- 보도자료 배포, 주요 언론 세일즈, 수어통역
- GTV 촬영 영상 공중파 및 종편 등 방송사 제공
- 정내 생중계 진행, 언론 모니터링 및 보도 대응

○ 질의응답 : 첨부 참조

#첨부

평화부지사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1. 데이에스파뉴스 김정훈 / 일부에서 전단살포 방지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집시법으로 해석하고 집회와 시위 신고를 하라고 하거나 통일부에서 대북접촉으로 보고 제재하는 방법 등 일부 의견이 있는데 경기도 입장은?

이재강 평화부지사 / 자금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관련에서 통일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임. 그 조치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추가로 조취를 취하지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통일부와 적극 협조, 공조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

2. KBS 박희봉 /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은 경기도에서 처음인지?

이재강 평화부지사 / 처음임. 사회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에 의거해서 위험구역을 설정한 사례도 별로 없음.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기도에 위험구역 지정을 할 것임. 아마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중심으로 해서 위험 지역을 설정할 것임. 자금 상의중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3. 데일리안 이균 / 대북전단 살포로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경기도가 나섰지만 정부 방침이 마련돼야한다고 생각. 정부와 협의절차 계획은?

이재강 평화부지사 / 자금 통일부나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저희들은 지금 현재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조, 공조해서 필요하다며 법률도 개정하고 보완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일부와 협력하고 정부와 공조할 생각임.

4. 국제뉴스 김만구 / 접경지역 위험지역을 지정하면 특사경 등을 투입해 단속하는 것인지? 단속 방식은?

이재강 평화부지사 / 특사경이 합법적으로 가서 채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경찰작무법에 따라서 경찰이 저희들과 함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예정임. <끝>

2)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경기도지사는 2020년 6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제46조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예상지역인 김포, 파주, 고양, 포천, 연천 등 5개 시 · 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구역 내 출입을 포함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하였다.

평화부지사는 2016년부터 7회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력이 있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어떠한 행위라도 할 경우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하고, 미신고 고압가스용기의 이동 및 사용금지를 위한 계고장을 부착하였다.

[표 31-2]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TF팀 구성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0. 6. 16. (9)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평화기획팀
2			과장 : 배영철 (031-8008-3270)
			팀장 : 설종진 (031-8008-3268)
			담당 : 문현우 (031-8008-3298)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대응 실행방안 구체화 착수

- 16개 부서가 참여하는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후속추진 T/F 구성 -

○ 경기도, 16일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이행점검 T/F 1차 회의 개최
- 위험구역 설정을 위한 세부 조치계획 점검
- 김포·파주·연천 등 도내 접경지역 시군 및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비상연락망 구축
- 대북전단 살포 대응방안 부서별 실행계획 구체화 등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최근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주 1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단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16일 평화부지사가 주재하고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방지 실행계획 점검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이 논의되었는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응급조치 가능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시군·경찰·군부대와 불법전단 동향 공유 및 감시 협력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로 검토되는 「민방위기본법」 제32조와 제37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동이나 업무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함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12일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 대응방안에 대하여 부서별 대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들도 논의되었는데,

위험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6월 25일 전까지 시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대북전단 살포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전단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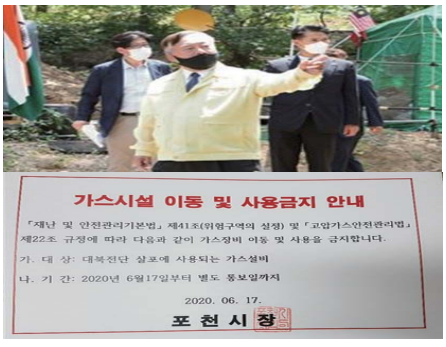
대북 전단지를 불법 광고물 내지 폐기물로 간주하여 소관 부서별로 시군 협조를 통해 대북전단 수거를 통한 과태료 부과 및 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시군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공유수면이나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김포시와 합동으로 투기 가능지역을 수시로 감시하고, 투기행위 적발시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단속 및 수사진행하며, 필요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T/F 회의를 주재한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6월 25일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모든 행정수단을 모색하고, 실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31-1] 위험구역 설정 및 현장 행정명령 집행

위험구역설정 안내표지판



대북풍선단 단장 거주지 현장방문 및 계고장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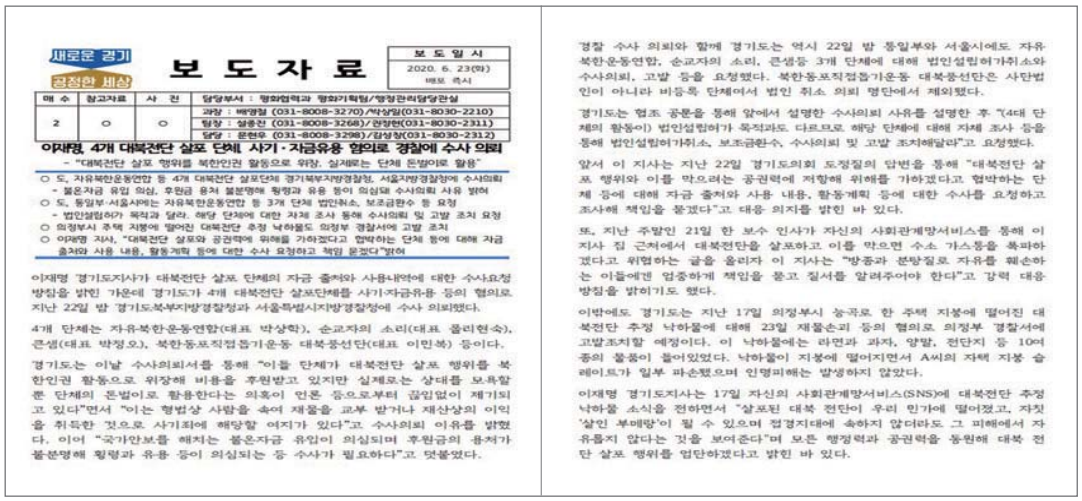
3)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의뢰 및 조사 · 행정처분 요청, 재물손괴 혐의 고발

경기도는 2020년 6월 22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해 온 4개 단체에 대해 사기 및 자금유용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통일부와 서

울시에 자체 조사를 통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이 2020년 6월 17일 의정부시 한 주택 에 떨어져 지붕이 파손된 사건에 대해 6월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표 31-3]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요청, 재물손괴 혐의 고발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0. 6. 23(만)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전	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평화기획팀/행정관리담당관실
			과장 : 배광철 (031-8008-3270)/박상남(031-8030-2210)
2	○	○	팀장 : 설용진 (031-8008-3268)/권정현(031-8030-2311)
			담당 : 문현우 (031-8008-3298)/김상철(031-8030-2312)

이재명,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 사기·자금유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 실제로는 단체 돈벌이로 활용"

○ 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 불온자금 유입 의심, 후원금 용처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돼 수사의뢰 사유 밝혀
○ 도, 통일부·서울시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 법인취소, 보조금환수 등 요청
- 법인설립허가 목적과 달라, 해당 단체에 대한 자체 조사 통해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요청
○ 의정부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도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 조치
○ 이재명 지사, "대북전단 살포와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 요청하고 책임 묻겠다"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대를 모독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는 역시 22일 밤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앞에서 설명한 수사의뢰 사유를 설명한 후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취소, 보조금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주말인 21일 한 보수 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리자 이 지사는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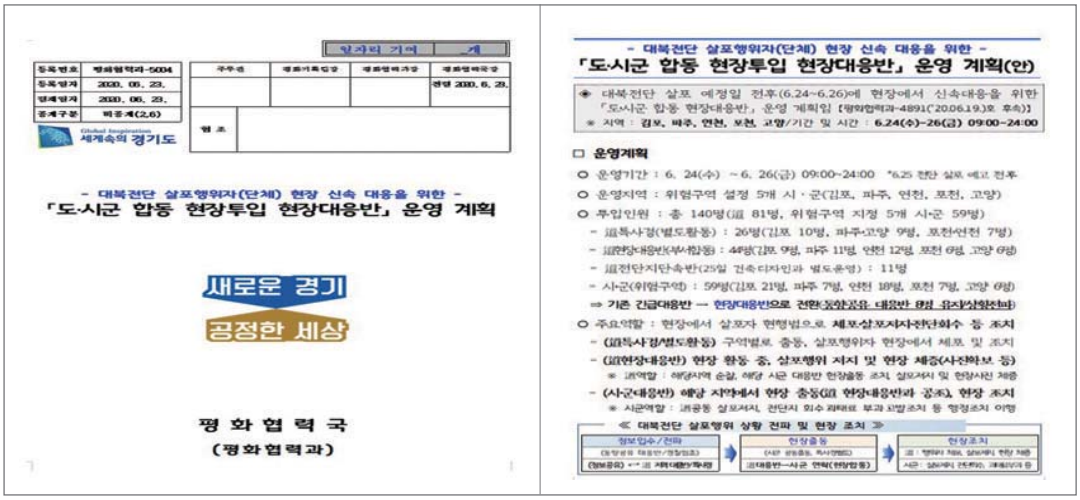
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A씨의 자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 소식을 전하면서 "살포된 대북 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졌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 대북전단 살포행위 도·시·군 합동 현장대응반 구성·운영

일부 탈북민단체가 2020년 6월 25일을 전후한 시기에 대량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하자, 경기도는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2020년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위험구역 5개 시군과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현장단속을 위한 대응반을 구성 · 운영하였다. 총 140명으로 구성된 도 · 시군 합동 현장대응반은,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살포행위 저지와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 전단 살포 예상지역 순찰과 전단 살포단체 동향 파악 활동을 하였고, 이를 통해 예고되었던 대량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표 31-4] 대북전단 살포방지 도·시·군 합동 현장대응반 운영계획



- 대북전단 살포행위자(단체) 현장 신속 대응을 위한 -
「도·시군 합동 현장투입 현장대응반」 운영 계획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평 화 협 력 국
(평화협력과)

- 대북전단 살포행위자(단체) 현장 신속 대응을 위한 -
「도·시군 합동 현장투입 현장대응반」 운영 계획(안)

◈ 대북전단 살포 예정일 전후(6.24~6.26)에 현장에서 신속대응을 위한 「도·시군 합동 현장대응반」 운영 계획임 【평화협력과-4891('20.06.19.)호 후속】
※ 지역 : 김포, 파주, 연천, 포천, 고양/기간 및 시간 : 6.24(수)~26(금) 09:00~24:00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6. 24(수) ~ 6. 26(금) 09:00~24:00 *6.25 전단 살포 예고 전후
○ 운영지역 : 위험구역 설정 5개 시·군(김포, 파주, 연천, 포천, 고양)
○ 투입인원 : 총 140명(道 81명, 위험구역 지정 5개 시·군 59명)
- 道특사경(별도활동) : 26명(김포 10명, 파주·고양 9명, 포천·연천 7명)
- 道현장대응반(복합팀) : 44명(김포 9명, 파주 11명, 연천 12명, 포천 6명, 고양 6명)
- 道전단지단속반(25일 건축디자인과 별도운영) : 11명
- 시·군(위험구역) : 59명(김포 21명, 파주 7명, 연천 18명, 포천 7명, 고양 6명)
⇒ 기존 긴급대응반 → 현장대응반으로 전환·동행공유 대응반 6명 유지(상황전파)
○ 주요역할 : 현장에서 살포자 현행범으로 체포·살포지차량단속수 등 조치
- (道특사경(별도활동)) 구역별로 출동, 살포행위자 현장에서 체포 및 조치
- (道현장대응반) 현장 활동 중, 살포행위 시지 및 현장 채증(사진확보 등)
※ 파역할 : 해당지역 순찰, 해당 시군 대응반 현장출동 조치 살포자시 및 현장사진 채증
- (시군대응반) 해당 지역에서 현장 출동(道 현장대응반과 공조), 현장 조치
※ 시군역할 : 파공동 살포자시, 전단지 회수 파체포 부과 과발조치 등 행정조치 이행

≪ 대북전단 살포행위 상황 전파 및 현장 조치 ≫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부재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이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도,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이 법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법 집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 성격의 법률을 제정하여, 접경지역의 긴장 조성과 주민안전 위협,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 살포 규제방안을 포함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김홍걸 의원, 2020.6.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박상혁 의원, 2020.6.10.)

2)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한 대응방안 강구

한편, 대법원은 대북전단을 실은 대형풍선을 날리는 행위는 해당 지역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경찰관이나 군인이 이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3. 29. 선고 2015다247394 판결).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남북교류협력법」뿐 아니라 「재난안전법」,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에 대한 적극적이고 심도깊은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명령, 과태료부과, 전단수거조치 및 비용징수, 형사고발 등 대북전단 살포 규제방안을 강구 ·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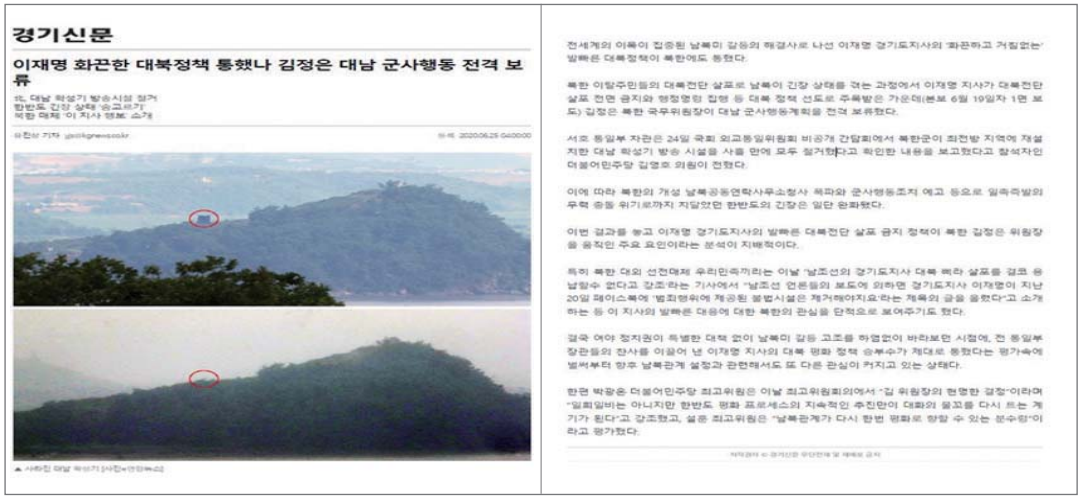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이번 김포시 대북전단 살포사건이 발생한 후 경기도 차원에서 신속히 TF팀을 구성하고 대북전단 살포방지를 위해 가능한 법적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일부 탈북민단체가 예고했던 6월 25일 전후의 대량 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였다.

또한 언론에서는 경기도의 발빠른 대처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은 그 법적 성격을 떠나 정상 간의 합의사항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도 조성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접경지역 타 시 · 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방지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표 31-5]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남북긴장 완화 기여 언론보도



경기신문

이재명 화끈한 대북정책 통했나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전격 보류

32.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대북제재 면제 승인

평화협력과 평화지원팀장 이근이

- 추진배경 : 북한산림 복구 지원
- 추진내용 :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대북제재 면제 승인
- 문제점 및 해결 : 대북제재면제 협의 어려움, 제재관계자와 사전소통을 통한 공감대 확보
- 평　　가 : 대북인도협력사업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개풍양묘장이 위치한 황해남·북도 지역은 통계상 산림황폐화 정도가 황해남도 50%, 황해북도 41%로 심한 지역으로, 북한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여름철 적은 비에도 산사태와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하다.

또한 황해남북도 지역은 북한 내에서도 중요한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북한 전체 식량생산량의 30~40%를 담당할 만큼 식량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계속된 태풍과 홍수(2011년, 2018년, 2019년)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여 수확량이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주택, 도로, 논밭, 과수원, 농장 등 다양한 부분에 피해가 막대하여, 북한 주민의 식량안보 및 보건위생 분야와도 문제가 직결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산림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경기도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시 개풍동에 위치한 개풍양묘장을 조성하고, 묘목, 상토, 양묘용기, 비료 등을 지원하여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황해남북도 개성, 장풍, 금천 등 6개 지역에 성묘를 공급하여 북한 지역 임야 조림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 5.24 조치 및 UN대북제재로 인하여 남북교류가 중단됨에 따라 양묘장 조성지원도 중단되어 1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설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개풍양묘장 조성 재개를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UN대북제재면제 승인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개풍양묘장 조성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면제 신청

현재 북한 산림의 황폐화 정도는 전체 산림면적의 평균 3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황폐화된 산림은 홍수 및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발생시켜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농경지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경기도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시 개풍군에 조성한 개풍양묘장 시설을 보수하여 개성, 장풍, 금천, 배천 등의 평야와 임야 지역에 묘목을 지원함으로써 산림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양묘장 온실 개보수 물자 가운데 필수적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① 골조자재(파이프기둥, 지붕, 연결부속 등), ② 관개시설(스프링클러, 분무기 등), ③ 공사 장비, ④ 관개시설, 난방, 조명 등에 필요한 에너지-태양열발전기, ⑤ 작업공구 등이 UN대북제재 2397호(UNSCR 2397)에 따른 HS Code 73, 84류 등에 해당되어 북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UN제재 해당품목에 관하여 제재면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우리민족서로돕기와 2019년 8월~10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통일부를 통해 2019년 11월초 UN1718제재위원회에 개풍양묘장 조성 재개를 위한 제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표 32-1] UN제재면제 신청 절차

제재면제 신청서 작성	▶	제재면제 신청서 검토	▶	제재면제 신청 접수	▶	협의	▶	제재면제 신청서 제출	▶	제재면제 신청 결과통보
신고인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통일부		관계부처		외교부		UN1718 제재위원회

2) 대북제재면제 당위성 설명을 위한 간담회 및 국제회의 개최

경기도는 개풍양묘장 조성을 비롯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고 민간단체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직접 알려 남북 간의 평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19.10.29.~11.2.(5박 7일) 일정으로 간담회 및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국제회의에는 유엔 안보리 1718제재위원회 관계자 및 국제 NGO,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였으며, 대북 인도협력사업 경험 공유 및 향후 발전 방안 논의, 유엔 대북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미 국무부, 미 의회, 유엔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면제승인의 당위성 설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미 국무부 및 미 의회, 하원의원 면담을 통해 개풍양묘장 지원물자 대북제재 면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ASF 등 접경지 공동방역 추진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경기도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북제재면제 해제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미국 전미북한위원회를 대상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북인도협력 연구자 및 학

자, 대북협력 UN 기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대북제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최소한 인도적 협력사업은 예외가 되어야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끌어냈다.

[표 32-2] 공동선언문 및 보도자료(머니투데이, '19.11.4.)

1. 유엔의 제재 면제과정은 인도적 협력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협력을 활성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대북인도협력 제재 면제 신청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인도적 협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미국, 한국, 북한 정부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국은 보다 투명한 인도협력 절차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3. 대북인도협력을 실행하는 상주기구와 비상주 기구, 국제기구와 한국 민간단체, 지방정부는 북한주민의 필요와 후원자들에 대한 책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北 인도적 지원, 美·유엔 모두 전향적"

머니투데이 |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11.04 04:00

[인터뷰] 신영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인터뷰 "지나친 대북제재로 우리 국민들 피해...인도적 지원엔 제재 면제해야"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미 국무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서 놀랐다. 미 상원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계자를 역시 실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틀림없다고 했다."

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와 만난 신영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4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신 국장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유엔과의 면담 결과를 전하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3) 개풍양묘장 대북제재면제 승인

2019년 12월 22일 유엔 1718제재위원회는 경기도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신청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지원물자 152개 품목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 통보하였다. 이번에 면제승인을 받은 물자는 연동 및 단동용 양묘온실, 양묘기자재, 공사장비 및 작업 공구 등 총 152개 품목으로, 사업비는 22억7,500만 원에 달한다.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착국면에 접어든 남북교류협력에 한층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산림 황폐화에 따른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지역과 경기도 접경지역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32-3]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개요 및 제재면제 연장 통보서

○ 사 업 명 :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 신 청 자 :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지원지역 :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개풍양묘장 - 주요물자 : 연동 및 단동용 양묘온실, 양묘기자재, 공사장비 및 작업공구 등 총 152개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POSTAL ADDRESS - ADRESSE POSTALE: UNITED NATIONS, N.Y. 10017 CABLE ADDRESS - ADRESSE TELEGRAPHIQUE: UNATIONS NEWYORK REFERENCE: SCAC/19/2020/OUT/125 3 June 2020 Excellency, On behalf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your letter dated 27 May 2020, by which you requested the Committee for an adjustment of the timeframe for the exemption granted to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Korean Sharing Movement (KSM) on 7 December 2019 pursuant to paragraph 25 of resolution 2397 (2017) to allow for the shipment of materials and equipment to the DPRK to refurbish and improve the facilities of the Gaepung Tree Nursery, aimed t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devastated forests in the South and North Hwanghae provinces and improve food security for residents in nearby areas, due to delays in the procurement and transfer of materials and equipment as a result of the current outbreak of COVID-19.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inform you that, following due consideration, the Committee has decided to adjust the timeframe for the exemption until 31 December 2020 to complete the procurement and shipment of the relevant items, the details of which are enclosed in the letter as an attach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5 of resolution 2397 (2017). The Committee would like to thank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diligence. Yours sincerely, Christoph Heusgen Chair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His Excellency Mr. Cho Hyun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급변하는 대내외 정치상황 및 제제면제 승인 불확실

대북제제 면제 신청시기인 2019년 11월은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실무접촉이 중단된 상태로 교착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북측이 공식적으로 대남 접촉을 거부하고, 현실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대북제제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사안의 결정 시 전체 회원국의 '전원 동의'로 운영되는 체계로, 제재면제 심사 신청 시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는 등 면제승인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2) 간담회 및 국제회의 등 적극적 소통

경기도는 대북제재면제를 담당하는 기관과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 국무부 및 UN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미 국무부의 마크 램버트 대북특별부대표, 미 상원의 마이클 시퍼 외교 관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유엔 소냐 바흐만 아시아태양양국 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돼지열병이 확산돼 수많은 돼지들이 살처분된 것은 대북제재로 인한 공동방역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도적 교류협력의 중단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전향적인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전 소통과 협의를 통해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끌어 냈으며 협력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개풍양묘장 대북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통일부 및 외교부와 협의에 1달 이상 걸린 반면, 유엔 제재위 제출 10일 만에 제재면제 승인 통보를 받았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개풍양묘장 대북제재 면제 승인은 대북제재 한계를 지자체가 극복한 첫 번째 사례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북미 핵협상 지연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경기도가 계획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력 확보의 의미도 있다.

경기도는 이번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계기로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 양돈을 포함한 축산협력, 다제내성 결핵과 말라리아 방역 지원, 북한농촌종합개발사업,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 등 실현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3.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평화기반조성과 통일기반조성팀장 장동현

- 추진배경 : 공약사항72
- 추진내용 :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 문제점 및 해결 : 남북 간 대화중단 등 경색상황, 남북관계 개선 및 지속적인 평화기반조성
- 평　　가 : 남북교류협력 강화, 평화지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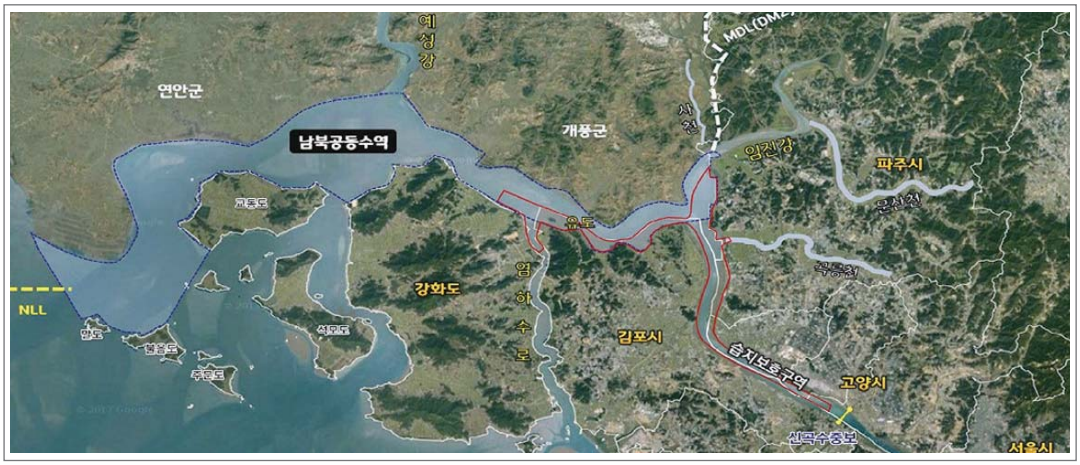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한강하구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강하 교동도 말도섬,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이며, 길이 70㎞·면적 280㎢에 이르는 곳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조강(祖江(조강)할아버지강)이라 불리우며 서해에서 마포나루를 거쳐 세곡선과 각종 물품을 실어 나르던 물길이면서,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세력과 서양문화가 이 지역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한 곳이며 1950년 한국 전쟁 후에는 유엔, 중국, 북한의 정전협정에 따라 모든 선박운항은 어려우나 민간선박만은 통행이 가능한 중립지역으로 되어 있고,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이어지는 현재 평화의 소통공간이 되지 못하고, 출입이 통제되어 남북 간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갈등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9.19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한강하구 지역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구상을 제안하였으나, 남북 관계 등 여건이 미성숙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하여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한강하구가 가지고 있는 생태 · 환경, 역사 · 문화, 경제 가치를 재평가하여,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방안, 관련 법 · 제도 등의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사진 33-1]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범위



(위 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의 범위로 총 연장은 약 70㎞, 면적은 약 280㎢임

(상 황) 정전협정상 민간선박 통행이 가능한 중립수역이나, 현실적으로 남북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막혀있는 상황

정전협정 제1조 5항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한강하구의 경제적 · 생태적 ·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평화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표 33-1]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용 역 명 :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 ○ 연구기간 : ’19.1.4. ~ ’19.10.30.(10개월) ○ 수행기관 : 경경기연구원(책임연구원 : 김동성 연구위원)
	○ 주요내용 - 생태 · 환경, 관광 · 지역개발, 교통, 산업 · 경제 등 활용방안 - 법 · 제도개선,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방식 등

연구내용은, ①생태 · 환경 ②관광 · 지역개발 ③교통 · SOC ④산업 · 경제 등 총 4대 분야 15개 사업이 제시됐다.

첫째, ‘생태 · 환경’ 분야로는 한강하구의 제도적 관리대안 및 법적 요건 연구, 한강하구 생태자원 특성 남북공동조사, 한강하구 수산자원 현황 파악 및 남북공동 활용, 한강하구 중립수역 남북공동 람사르습지 등재 및 관리 등 4개 사업이다.

둘째, ‘관광 · 지역개발’ 분야에는 뱃길(신곡수중보~김포 연안~서해 및 파주 임진강) 복원, 포구마을 조성(역사·문화 복원), 한강하구 도보길 조성 등 3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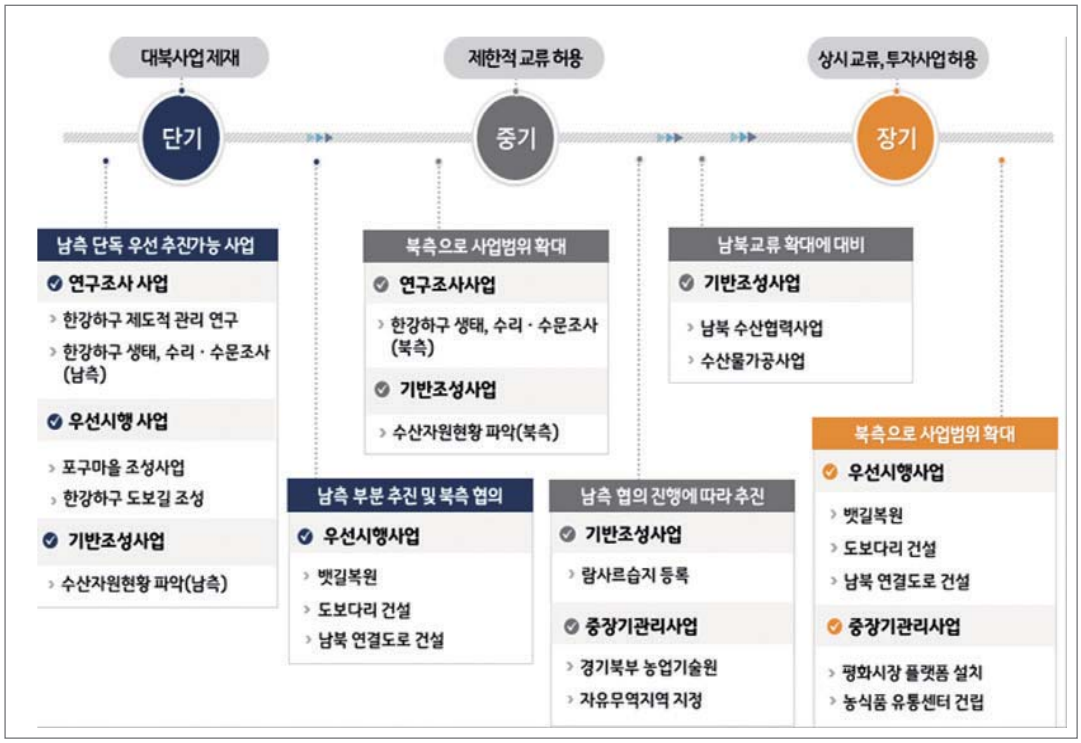
셋째, ‘교통 · SOC’ 분야로는 평화 도보다리 건설, 남북 연결도로 건설, 평화시장 플랫폼 설치 등 3개 사업이다.

넷째, ‘산업 · 경제’ 분야에는 남북 수산협력,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남북 농식품 유통센터 건립, 경기북부 농업기술원 개원, 남북경협 활성화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5개 사업이다.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단기 · 중기 · 장기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되었다. 함께 한강하구 연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 방안, 남과 북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남북 지역협의회’ 구성 방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 DMZ · 한강하구 관리 전담 기구인 'DMZ · 한강하구 관리청 설치'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되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부터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후, 지자체 협의, 중앙부처 건의 · 협의 등을 병행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표 33-2]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추진단계



[표 33-3]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사업 종합도

[표 33-4]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사업 구상도

한강하구 남북보행교량과 포구마을	뱃길복원과 선착장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남북관계 경색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계획 수립과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한 계획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구상을 통해 한강하구를 보존 및 개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모색할 것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한강하구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오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서해로 흐르는 여러 강 중 유일하게 하구에 제방이나 둑이 없어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기수역이면서 이에 세계적인 생태, 환경의 보고로서 한강하구의 가치를 살리어 환경보존과 문화관광 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한강하구가 대표적인 남북 평화 소통구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제2절 미래발전을 주도하는 혁신경기 실현

34. HP, 경기도에 '글로벌 전략 R&D허브' 구축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장 정현석

- 추진배경 : 민선7기 공약사항. 4차산업혁명 거점 육성
- 추진내용 : HP 업무시설 및 연구시설(R&D센터) 설립
- 문제점 및 해결 : 환경오염 민원을 사전 환경영향 민관기업 공동 검증을 통해 예방
- 평　　가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미국의 대표적 컴퓨터, 프린터, 인터넷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첨단정보산업의 선도기업인 HP는 지난 2016년 9월 프린트 시장 확대와 레이저프린터 리더의 입지 강화를 위해 삼성 프린터사업부를 인수하기로 발표했다. 도는 인수 후에 HP 한국사무소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치 의향을 전달하고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여 2017년 한국사무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년간 건립 부지 공동 검토,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이해와 조정, 환경 오염 우려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통해 4억 달러 투자협약을 체결('19.10.21.)하여 업무시설과 연구시설(R&D센터)을 유치하는 성과를 맺게 되었다.

경기도 성남에 입지하는 업무시설과 R&D센터는 HP 프린팅 비즈니스의 중요부분인 A3 프린팅의 글로벌 전략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과의 비즈니

스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표 34-1] 투자개요

○ (규모/입지) **4억 달러** /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및 분당구 백현동 일원 ○ (투 자 자) HPPK(HP Printing Korea, 미 HP 한국 본부) ○ (주 요 시 설) **R&D 시설** 및 **업무시설** - R&D 시설(고등동) : 프린터, 복합기, 소프트웨어 등 기술 개발 - 업무 시설(백현동) : 기술 연구 지원, 품질 및 공급망 관리 등 ○ (기 대 효 과) **약 2,000명 고용**(기존 삼성 프린팅사업부문 1,700명 + 신규 300명), IT 중소기업 협력 및 도민 공공 기여 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HP 한국사무소 & R&D 시설 도내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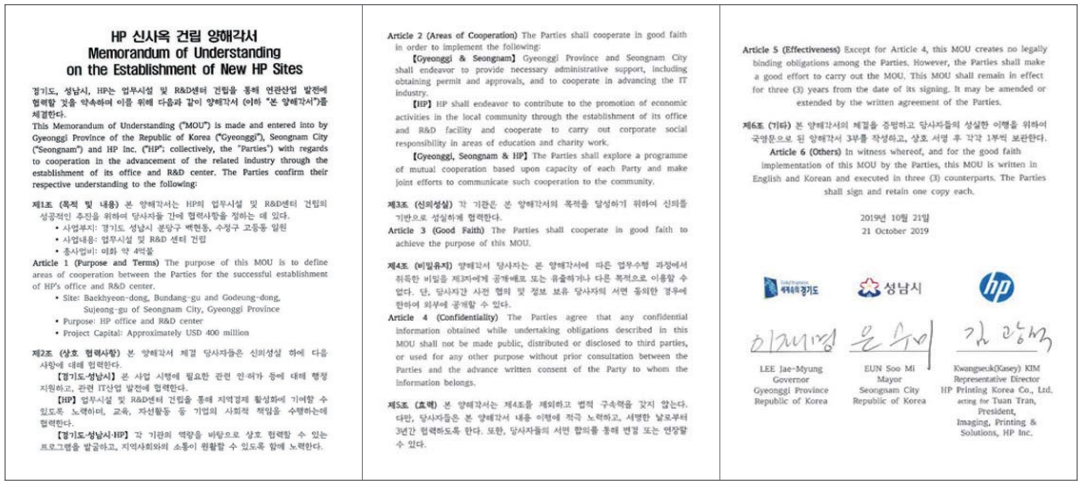
경기도는 2017년 7월 5일 HP와 한국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 후, HP와 함께 신사옥 건립을 위한 부지를 검토하는 등 2년간의 노력을 거쳐 2018년 11월 신사옥 입지를 성남으로 최종 선정하고, 2019년 10월 21일 경기도는 성남시, HP와 4억 달러 규모의 업무시설 및 R&D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와 성남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 인 · 허가 등 행정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략 R&D 허브'의 성공적 구축 및 관련 IT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HP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및 자선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R&D센터'와 '업무시설' 로 구성되는 '글로벌 전략 R&D 허브'는 HP 프린팅 비즈니스의 중요부문인 A3 프린팅의 글로벌 전략 허브이자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으로, 연구개발 및 사무인력으로 2,000명 이상이 근무하게 된다.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의 첨

단 R&D센터는 2022년 상반기에 건립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업무시설은 2019년 9월부터 백현동 알파돔타워에 입주하여 기술 연구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34-2] HP 신사옥 건립 양해각서('19.10.21.)



HP 신사옥 건립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Establishment of New HP Sites

경기도, 성남시, HP는 업무시설 및 R&D센터 건립을 통해 연관산업 발전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여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 (이하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s made and entered into by Gyeonggi Province of the Republic of Korea ("Gyeonggi"), Seongnam City ("Seongnam") and HP Inc. ("HP"; collectively, the "Parties") with regards to cooperation in the advancement of the related industr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ts office and R&D center. The Parties confirm their respective understanding to the following:

제1조 (목적 및 내용) 본 양해각서는 HP의 업무시설 및 R&D센터 건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사자들 간에 협력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 사업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수정구 고등동 일원
• 사업내용: 업무시설 및 R&D 센터 건립
• 총사업비: 4천 억 원대물
Article 1 (Purpose and Terms) The purpose of this MOU is to define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HP's office and R&D center.
• Site: Baekhyeon-dong, Bundang-gu and Godeung-dong, Sujeong-gu of Seongnam City, Gyeonggi Province
• Purpose: HP office and R&D center
• Project Capital: Approximately USD 400 million

제2조 (상호 협력사항) 본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들은 신의성실 하에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경기도·성남시】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등에 대해 행정 지원하고, 관련 IT산업 발전에 협력한다.
【HP】 업무시설 및 R&D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육, 자선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협력한다.
【경기도·성남시·HP】 각 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Article 2 (Areas of Cooperation)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in order to implement the following:
【Gyeonggi & Seongnam】 Gyeonggi Province and Seongnam City shall endeavor to provide necessary administrative support, including obtaining permit and approvals, and to cooperate in advancing the IT industry.
【HP】 HP shall endeavor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ts office and R&D facility and cooperate to carry 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reas of education and charity work.
【Gyeonggi, Seongnam & HP】 The Parties shall explore a programme of mutual cooperation based upon capacity of each Party and make joint efforts to communicate such cooperation to the community.

제3조 (신의성실) 각 기관은 본 양해각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기반으로 성실하게 협력한다.
Article 3 (Good Faith)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MOU.

제4조 (비밀유지) 양해각서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배포 또는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간 사전 협의 및 정보 보유 당사자의 서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Article 4 (Confidentiality) The Parties agree that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btained while undertaking obligations described in this MOU shall not be made public, distributed or disclosed to third parties, or used for any other purpose without prior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advance written consent of the Party to whom the information belongs.

제5조 (효력) 본 양해각서는 제4조를 제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 내용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협력하도록 한다. 또한,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Article 5 (Effectiveness) Except for Article 4, this MOU creates no legally binding obligations among the Parties. However, the Parties shall make a good effort to carry out the MOU. This MOU shall remain in effect for three (3) years from the date of its signing. It may be amended or extended by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제6조 (기타) 본 양해각서의 체결을 증명하고 당사자들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국영문으로 된 양해각서 3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Article 6 (Others) In witness whereof, and for the good faith implementation of this MOU by the Parties, this MOU is written in English and Korean and executed in three (3) counterparts. The Parties shall sign and retain one copy each.

2019년 10월 21일
21 October 2019

경기도 / 성남시 / hp

LEE Jae-Myung
Governor
Gye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

EUN Soo Mi
Mayor
Seongnam City
Republic of Korea

Kwangseuk(Kasey) KIM
Representative Director
HP Printing Korea Co., Ltd.
acting for Tuan Tran,
President,
Imaging, Printing & Solutions, HP Inc.

[표 34-3] 시설개요

○ HP R&D센터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97-4(지하5층, 지상7층)
- 주요용도 : 연구시설(3D 프린팅, 복합기, 소프트웨어 등 기술 개발)
- 근무인력 : 800~1,100명(잔여인력 400명, 알파돔 400명, 신규 300명)
※ '19. 6월 기반공사 착공, '22년 하반기 완공

○ HP 업무시설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알파돔 타워(4~10층)
- 주요용도 : 업무시설(기술 연구 지원, 품질 및 공급망 관리)
- 근무인력 : 1,300명(삼성프린팅 사업기존인력 1,700명 중 일부)
※ '22년 고등동 R&D센터 완공 후 신규 고용인력 및 잔여인력 이전근무

'글로벌 전략 R&D허브' 구축이 완료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HP는 1939년 실리콘밸리에 처음으로 설립돼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혁신의 상징'

으로 손꼽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선도기업으로 PC, 프린터, 3D 프린터, VR,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 55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표 34-4] HP 회사 개요

○ 창립일 : 1939년 1월 1일	○ 본　　사 : 캘리포니아 주 팰로앨토
○ 창립자 : 빌 휴렛, 데이비드 팩커드	○ 매 출 액 : 585억 달러(2018년)
○ 종업원 : 55,000명(2018년)	○ 산업분야 : 컴퓨터 제조 및 판매
○ 주요통계	
- 퍼스널 시스템 부문 : 전통 PC 1위, 커머셜 노트북 1위, 워크스테이션 1위, 컨슈머 PC클라이언트 1위	
- 프린팅 시스템 부문 : 잉크젯 프린터(44.0%), 레이저 프린터(33.7%)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실리콘밸리의 탄생지(Birthplace of Silicon Valley)로 지정된 휴렛과 팩커드 사업이 시작되었던 차고

데이비드 팩커드 & 빌 휴렛

2) 민관 협업을 통해 투자 유치의 새로운 모델 구축

2019년 3월, 경기도는 성남에 글로벌기업 HP의 R&D센터 유치를 결정하기 전, 주민, 전문가, 경기도, 성남시, HP가 공동으로 환경 및 사회영향 검증위원회를 구성 ·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의 불안감을 슬기롭게 극복한 선례를 남겼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투자임에도 정확한 정보 부재,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주민과 기업, 지자체의 소통체계 미흡으로 투자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민

관이 협력하여 민원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다.

* '19.3.5 검증을 위한 MOU 체결(道-성남시-HPPK, 시민환경연구소, 성남환경운동연합) → 환경, 폐수, 대기, 안전 등 6개 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 관계자 10명 위원회 구성 → 총8차 회의 실시('19.3.26~6.4)

[표 34-5] 환경 및 사회영향 검증사업 추진 양해각서('19. 3. 5.)

「성남 고등지구 HP R&D센터의 입지에 따른
환경 및 사회영향 검증」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Review of HP R&D Centre at Seongnam Godeung District"

2019년 3월 5일
5th March 2019

LEE Jae-Myung
Governor
Gyeonggi Province

EUN Soo-mi
Mayor
Seongnam City

James R. Nottingham
Representative Director
HP Printing Korea Co., Ltd.

Hyunyong Lee and Jaecheol Choi
Joint Chairperson
Seongnam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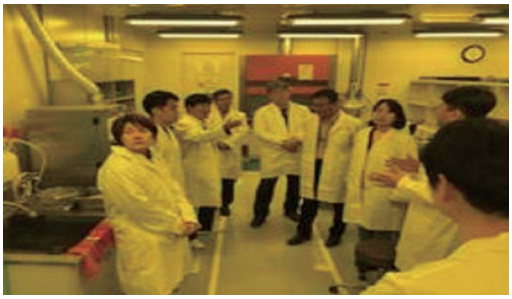
Junha Yoon
Chairperson
Citizen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HP는 글로벌 ICT융복합기술의 중심지인 판교에 연구시설을 건립하기를 희망하였으나, R&D센터가 폐수 · 폐기물 등 각종 환경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제보로 인해 성남시의 반발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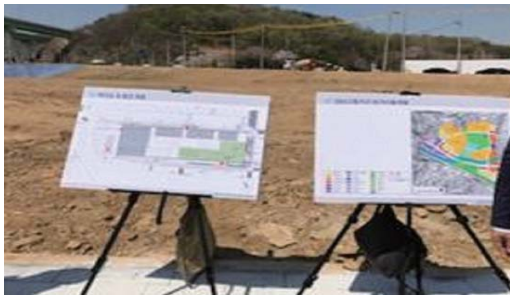
이에 도는 2019년 3월 5일 성남시, HP, 성남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와 협약을 맺었다. R&D센터 입지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문제와 영향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HP R&D 환경 및 사회영향 검증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을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검증사업 이후에도 HP는 성남시에 이행계획서 및 경과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34-1] 3차 회의 : 수원 삼성디지털단지(연구소) 및 고등동 현장 방문('19.4.17.)



○ 실험실 투어

- 화학물질은 실험실 환경에서 시약 수준으로 소량 취급
- 지정 폐기물은 전량 전문업체 위탁처리



○ 브리핑 및 사이트 투어(고등동)

- 아시아 최고의 친환경 R&D센터 건립 목적
- 국내건축법, IBC 기준 및 HP 가이드라인 모두 준수

[표 34-7] 회의 주요 내용

○ 제1차 회의(3.26.) : 추진경위 브리핑(道), 입지 계획(HP), 우려사항(市) 발표 및 논의

○ 제2차 회의(4.11.) :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장외영향 관련 발표 및 논의

○ 제3차 회의(4.17.) : 수원 삼성디지털단지(연구소 내부시설) 및 고등동 현장 방문

○ 제4차 회의(4.25.) : R&D센터 관련 주민 우려사항 논의, HP 비상대응 절차 발표

○ 제5차 회의 (5.9.) : 대기배출 방지시설 계획 및 폐수 위탁업체 관리 계획 발표

○ 제6차 회의(5.17.) : 검증위 권고안 및 지역사회 소통방안 협의

○ 제7차 회의(5.30.) : 검증위 권고안, R&D센터 Q&A 내용, 검증위 결과보고서 협의

○ 제8차 회의(6.4.) : 검증위 최종보고서 및 HP 이행계획서 협의

라. 평가 및 발전방안

○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HP가 업무시설 및 R&D센터 유치에 따라 기존 인수한 삼성프린터사업부 인력 1,700명 외 향후 5년 내 추가로 300명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HP는 싱가포르에 운영 중인 A3 전략사업본부를 한국으로 이전시키고 A3 복합기 연구개발 거점 조직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한, 제조, 판매, 유통 분야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 협력사 확대, 주변상권 활성화, 산학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도내 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환경보호활동, 저소득층 IT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시 민관참여 시스템 구축

투자 결정 전 민관 합동 환경영향 검증사업으로 민원 발생을 예방한 투자유치 모델을 발전시켜, 향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안 단계부터 시민단체 등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민관참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예정이다.

35.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정식 오픈

창업지원과 창업정책팀장 김동주

- 추진배경 : 공약 143번.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추진내용 : 민 · 관 · 공공의 창업정보 통합 및 상호교류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자체 최초)
- 문제점 및 해결 : 플랫폼 구성 및 기능 구현, 플랫폼 참여 민간전문가 확보
- 평　　가 : 온라인을 통한 창업정보 통합 제공, 스타트업·민간 전문가 등 비대면 양방향 소통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창업자는 혁신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 들지만 상당수는 사업화 자금 · 업무공간 등의 창업자원과 창업경험 등이 부족하여 「창업-성장-회수-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에서 무수한 위기를 맞이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인 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살아남아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사업화 자금, 공간 및 시설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창업 시설·공간 등 인프라와 지원사업이 다소 산재되어 창업지원의 효과가 다소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와의 교류 등 네트워킹 분야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창구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내 스타트업·창업지원기관·창업자원·전문가 등이 총 결집하여 창업 인프라와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상호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필요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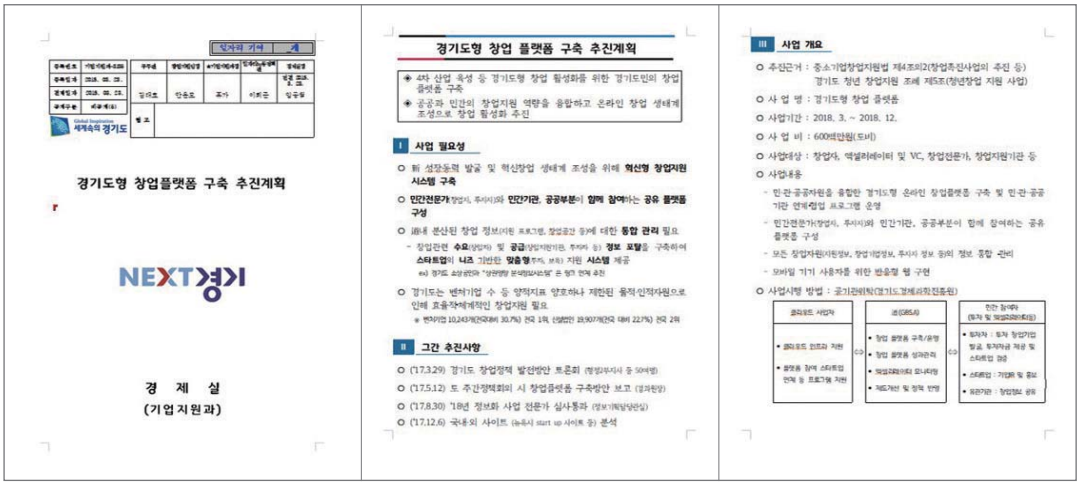
1) 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는 기존의 창업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 3월 29일 경기도 창업정책 발전방안 토론회를 행정2부지사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토론회에서 민 · 관 · 공공자원을 융합하고 상호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 되었다.

그간 중앙부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플랫폼은 지원사업, 창업공간 등 정보제공 및 지원신청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 및 지원기관 간 유기적 소통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스타트업, 유관기관, 민간 창업기관, 창업 전문 등 양방향 소통 채널과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의 투자연계지원으로 상호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기획하여 정보화 사업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후 2018년 3월 23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5-1] 경기도형 창업플랫폼 구축 추진계획(안)



결재권자 기재 | 계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형 창업플랫폼 구축 추진계획

NEXT경기

경 제 실
(기업지원과)

경기도형 창업 플랫폼 구축 추진계획

◉ 4차 산업 육성 등 경기도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민의 창업 플랫폼 구축
◉ 공공과 민간의 창업지원 역량을 융합하고 온라인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업 활성화 주진

Ⅰ 사업 필요성

○ 新 성장동력 발굴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형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 **민간전문가**(창업자, 투자자)와 **민간기관, 공공부분**이 **함께 참여**하는 **공유 플랫폼 구성**
○ 산재된 창업 정보(지원 프로그램, 창업공간 등)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
- 창업관련 **수요**(창업자) 및 **공급**(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 **정보 포탈**을 구축하여 **스타트업**이 **니즈 기반한 맞춤형**(추천, 보좌) 지원 **시스템** 제공
○ 경기도는 벤처기업 수 등 양적지표 양호하나 제한된 물적·인적자원으로 인해 효율적·체계적인 창업지원 필요

Ⅱ 그간 추진사항

○ (17.3.29) 경기도 창업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행정2부지사 등 50여명)
○ (17.5.12) 도 추진정책회의 시 창업플랫폼 구축방안 보고 (경제부장)
○ (17.8.30) '18년 정보화 사업 전문가 심사통과 (정보기획담당관실)
○ (17.12.6) 국내외 사이트 (눈동시 start up 사이트 등) 분석

Ⅲ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2(창업추진사업의 추진 등)
경기도 청년 창업지원 조례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 사 업 명 : 경기도형 창업 플랫폼
○ 사업기간 : 2018. 3. ~ 2018. 12.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 사업대상 : 창업자, 액셀러레이터 및 VC, 창업전문가, 창업지원기관 등
○ 사업내용
- 민·관·공공자원을 융합한 경기도형 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 및 민·관·공공기관 연계협업 프로그램 운영
- 민간전문가(창업자, 투자자)와 민간기관, 공공부분이 함께 참여하는 공유플랫폼 구성
- 모든 창업자원(지원정보, 창업기업정보, 투자사 정보 등)의 정보 통합 관리
- 모바일 기기 사용자를 위한 반응형 웹 구현
○ 사업시행 방법 : 공기관위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구축(지자체 최초)

2019년 11월 1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자체 최초로 창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포털형 창업플랫폼인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지자체 최초로 출시했다.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은 스타트업, 투자/자금, 전문가자문 지원사업, 공간시설 등의 창업정보를 한데 모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실시간 양방향 소통기능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였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은 창업지원을 받고자 발품 팔 필요 없이 플랫폼 내에서 창업정보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전문가 자문도 플랫폼과 함께하는 127명의 분야별(경영, 회계, 노무, 기술, 마케팅 등) 전문가 리스트에서 희망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신청을 하여 원하는 시간 · 장소에서 만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운영과 투자유치 기회제공을 위해 네이버, ㈜KT, 부천산업진흥재단, NICE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경기대, 아주대,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카카오벤처스,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슬파트너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YSK MEDIA, 와디주㈜ 등 총 26개의 다양한 공공 · 민간기관 · 투자자가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고 투자자는 스타트업이 게시한 기업정보를 통해 스타트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스타트업에게 플랫폼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

[표 35-2]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도메인

3) 플랫폼 활성화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출시 이후 창업정보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내 스타트업 2,270개사('20.7.기준)가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이들이 플랫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이 많은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 · 위치기반의 모바일 웹 버전을 개발완료('20.7.13.오픈)하였다. 아울러, 유망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투자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자IR데이 및 투자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 등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플랫폼을 고도화한 제조공유플랫폼을 '20.12월 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사진 35-1]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컨퍼런스 시상식('20.5.27)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창업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창업진흥원의 K-Startup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창업지원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실효성 있고 실제 창업활동도 도울 수 있는 차별화된 온라인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플랫폼 구축계획 수립 전 창업지원관련 공공기관 및 타 실과 등 소관부서가 참여한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스타트업 가입 및 정보제공 방식 · 범위, 플랫폼 내 콘텐츠

의 차별화 방안, 공공과 민간의 정보 제공 및 활용 방법 등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였으며, 구축 추진 중 도내 스타트업이 참여한 중간보고회를 통해 개선방안 등을 함께 논의 및 반영하여 지자체 최초로 온라인 창업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플랫폼의 정보제공 및 양방향 소통 기능과 민간의 전문역량을 융합한 전문가 자문 지원, 투자유치기회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세무, 법무, 마케팅,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파트너사로서 공공·민간·투자기관과의 협약을 추진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은 창업에 관심 있는 모든 도민을 위해 분산된 창업 자원 및 정보를 실시간 통합 제공하여 정보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회원 간 비대면 양방향 소통과 모바일의 위치 · 지도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스타트업 등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플랫폼 기능과 민·관·공공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의 실시간 정보제공, 비대면 양방향 소통 기능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성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제조업체, 공공기관 등 자문을 통해 플랫폼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내 전문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36.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장 정현석

- 추진배경 : 인공서핑 시설 도입을 통한 서해안 레저관광산업 발전
- 추진내용 : 수도권 신개념 해양레포츠 시설 유치
- 문제점 및 해결 : 공원 내 시설설치물 서핑시설 해석
- 평　　가 : 재정투입 없이 주민 친화 공원 및 체육시설 확충, 지역 이미지 개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시화 방조제 건설로 인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시화호의 수질이 1997년 해수유통을 통해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탈바꿈하고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는 시화호를 수도권에 위치한 해양마리나 및 레포츠 관광명소로 추진코자 결정하였다.

때마침 부산시에서 송도해상케이블카, 황령산 전망대 건설 등 관광레저시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원플러스그룹이 서핑산업의 국내 저변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서 사계절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인공서핑파크 조성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

통상적으로 미국, 유럽 등에 위치한 인공서핑장은 바다와 접하지 않아 서핑을 즐기기 어려운 내륙지방 위주로 조성되어 도시지역, 추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연중 서핑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해변과 맞닿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거북섬을 대원플러스 그룹의 인공서핑파크 장소로 적극 추천하였고, 입지분석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민간투자를 위한 유치활동과 별도로 경기도는 2017년 10월 24일 시흥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거북섬 일원 특화개발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특화시설 도입을 위한 사업자 공모, 인허가 등 신속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 기업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정보교환 등의 협력을 약속하였다.

[표 36-1] 대원플러스그룹 회사 개요

○ 창 립 일 : 1999년 ○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2로 33

○ 대표이사 : 최삼섭 ○ 업 종 : 건설, 관광산업, IT 등

○ 주요 자회사

- (건설 및 부동산개발) 대원플러스개발, 대원플러스산업, 현원개잘
- (레저, 관광산업 개발) 송도해상케이블카, ㈜웨이브파크(서핑파크 개발 및 운영)
  인터원개발(영주리조트), FN(황령산테마파크), 비에스펀투어(여행사)

○ 사업실적

황령산(부산) 테마파크 리조트

송도 해상케이블카(부산 에어크루즈)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기공식

2019년 5월 2일 시화호 거북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원, 함진규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함께 모여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기공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2018년 11월 22일 경기도-시흥시-수자원공사-대원플러스그룹이 함께 「시흥 인공서핑파크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원 시설 내 서핑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법령 유권해석 등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이 주효했다.

2) 수도권 신개념 해양레포츠 시설

대한서핑협회에 따르면 국내 서핑인구는 2014년 4만 명 수준에서 2017년 2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주, 부산, 양양 등 높은 파고가 있는 바다에서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인식되어 있어 수도권 내에서는 즐길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없었다.

시화 거북섬에 건립될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는 해외에서 이미 서핑 애호가로부터 입증된 웨이브가든社의 '인공파도 제작기술'을 도입한 서핑장으로 주변 상업시설, 호텔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에서도 누구든지 레포츠와 휴양,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양레저 · 관광 거점 공간

서해안 해양레저 · 관광산업 벨트는 화성시에 대규모로 추진 중인 국제테마파크를 비롯,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 화성 제부마리나 등 시화호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해양 레포츠 시설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다.

해양레저 · 관광 벨트의 하나로서 추진되고 있는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는 인근 해양생태과학관(시흥시 MTV 內, '22년 준공) 및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500억 원 규모의 해양레저복합 클럽하우스(거북섬 內, '22년 준공)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서해안 해양레저 · 관광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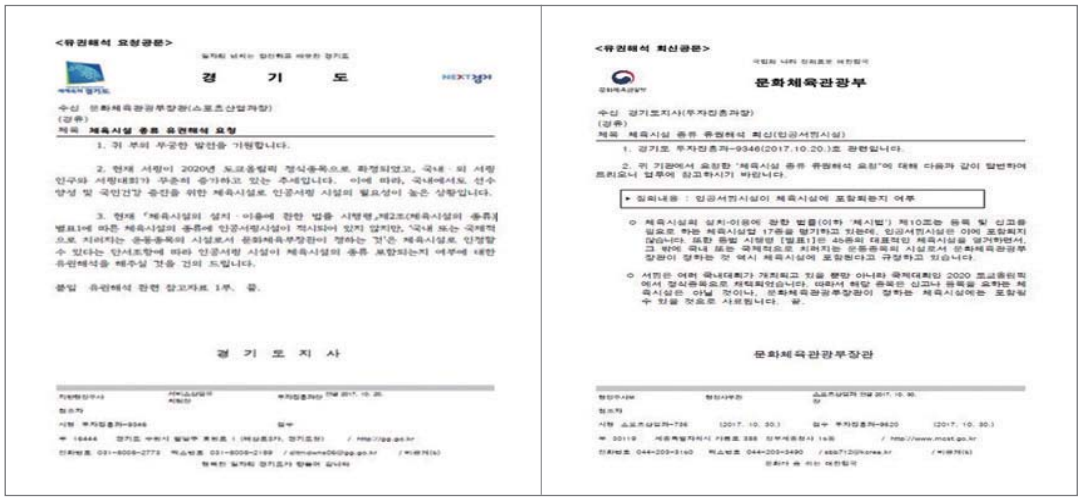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인공서핑 파크로서 특색 있는 서해안 관광자원의 하나가 될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는 시화호가 도민의 여유와 휴식을 위해 찾아가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도심공원인 거북섬 수변공원 내 서핑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상 설치 가능한 시설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였다. 왜냐하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시설물이다 보니 당시 관련 법령(「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변공원 내 설치 가능한 45종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던 경기도는 민간투자자를 통해 인공서핑파크가 체육시설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게 하고, 해당 법령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수차례 방문 ·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입주 가능한 체육시설물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내었고 안정적으로 투자가 진행될 수 있었다.

[표 36-2] 체육시설 종류 유권해석 공문(道 투자진흥과⇋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 요청공문>

경 기 도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
(경유)
제목 체육시설 종류 유권해석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서핑이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확정되었고, 국내 · 외 서핑 인구와 서핑대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선수 양성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 인공서핑 시설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3.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에 인공서핑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체육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인공서핑 시설이 체육시설의 종류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붙임 유권해석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유권해석 회신공문>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경기도지사(투자진흥과장)
(경유)
제목 체육시설 종류 유권해석 회신(인공서핑시설)

1. 경기도 투자진흥과-9346(2017.10.20.)호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체육시설 종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반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인공서핑시설이 체육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10조는 등록 및 신고를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업 17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인공서핑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1]은 45종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을 열거하면서,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역시 체육시설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핑은 여러 국내대회가 개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인 2020 도쿄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종목은 신고나 등록을 요하는 체육시설은 아닐 것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체육시설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는 100%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형 레포츠 관광개발 사업으로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함께 서해안 해양레저관광산업에서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향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레저산업으로 국내 저변 확대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2021년 도쿄 올림픽, 2024년 파리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향후 국가대표 서핑 연습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양레저산업에 있어 그 개발 가치가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1단계 서핑장이 개장되는 2020년 9월을 기점으로 잔여 부지 내 상업시설 및 호텔, 리조트 사업까지 완성되면 직접고용 약 1,400여 명에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화MTV의 해양 관광복합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사진 36-1]시흥 인공 서핑파크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18.11.22.)

37.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선도사업

산업정책과 반도체산단팀장 김동건

- 추진배경 : 여건이 우수한 대학부지에 새로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
- 추진내용 : 정부 공모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경기도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산단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의 근거 확보
- 평　　가 :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IT·BT·CT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후 성장(POST BI)기업들의 생존율 향상, 대학부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대학발전에 기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 신축 지원, 정부의 산학연협력사업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이를 위해 2019년 4월 24일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공모사업 추진

2019년 6월 국토교통부는 캠퍼스혁신파크 추진을 설명, 공모 공고는 2019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2019년 8월 21

일부터 참가신청 접수를 받았다.

4년제 대학 및 산업대학을 신청대상으로 대학이 최소 1만㎡ 이상 나대지를 보유하고 LH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 관련 인 · 허가 및 단지조성 등을 공동수행 가능한 경우에 공모 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019년 7월 18일 도 · 시군 담당과장 · 주무관, 대학 사업담당자(경기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양대ERICA, 단국대, 가천대, 협성대, 한세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공모 관심대학과 해당 지자체 관계자가 함께 대학의 사업의지 및 지자체의 행 · 재정적 사업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청취 · 수렴 등을 하였고, 시 · 군 산단물량 해결, 인 · 허가 절차 사항 지원 등 행 ·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 하였다.

경기도내 10여 개 대학에서 공모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으며 경기대 등 10개 대학*이 대학발전 · 특성화계획을 담은 사업제안서 작성, 직접 공모에 참여하였다.

* 도내 아주대·성균관대·경기대(수원), 동국대·중부대(고양), 가천대(성남), 한세대(군포), 한양대 에리카(안산), 단국대(용인), 협성대(화성) 등이 준비

이에 경기도는 도내 공모 준비대학과 동일조건의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종선정 대학에는 해당 시와 함께 행정 인 · 허가 지원 및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2) 공모선정

선도사업 공모에는 총 32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10대1을 상회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모지침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32개 대학을 평가('19.8.12.~16.)하여 9개소를 우선 선정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 대학 역량 및 의지, 기업 유치 가능성 등

이후, 2019년 8월 22일부터 23일 이틀 간의 현장실사를 통해 캠퍼스의 실제 상황과 주변 여건 등을 확인 후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3개 대학교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선도 사업지로 선정 · 발표했다.

[표 37-1]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주요 내용

선도사업	주요 내용
 <한양대학교 ERICA>	○ 부지 186,848㎡ / 건물 연면적 984,826㎡ - (1단계) 부지 79,219㎡ / 건물 연면적 456,446㎡ ○ 추진 계획 - IT연계 창업기업, 첨단부품소재·스마트제조혁신 기업 공간조성·유치(1단계, ~'22) - 주거·문화·복지시설 조성(2단계, ~'25) - BT·CT창업, BIO·의료기업 유치(3단계, ~30)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산업단지 물량 및 예산 협의

공모 선정이후 대학에 첨단 산단 조성과 '산학연혁신허브' 구축(LH가 선투자 후 30년간 임대 수익 회수)을 위해 ①산단물량 공급 ②기관별 예산분담 추진을 논의하였다.

① 산단 물량 부족

국토교통부는 당초 한양대가 요청한 산단물량 186,848㎡(5.6만 평)을 경기도에 요구하였고, 한양대는 공모사업인 만큼 정부 특별물량 마련 요청 이외 경기도에도 물량배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물량 여유분이 없으므로 당초 공모 취지, 총사업비 규모에

걸맞은 적정 규모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하였다.

② 예산 편성 지난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의 40%를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한양대 역시 부지 무상제공,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비 부담(10억 원) 이외 추가 재원 부담 '불가' 입장으로 사업 예산과 관련한 이견을 확인하였다.

경기도는 사업 공고 시 국가 · 지자체 · 대학 간 부담비율 없음, 선정 후 정부가 제시한 국비 차등지원(수도권 20%, 지방 40%)에 대한 비형평성과 40%의 지방비 부담 가중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였다.

2) 극복 방안

경기도는 5차에 걸친 산업물량 조정 및 사업예산 관련 협의와 국토교통부의 수요분석을 토대로 79,219㎡의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 확보하였고, 공급을 검토하게 되었다.

예산의 경우 경기도는 10억 원 지원(국비의 10% 정도), 안산시는 20억 원, 한양대는 대학의 자부담 '불가' 입장 고수로 공동사업시행자인 LH가 16억 원 이상 사업비를 검토하게 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정부가 추진 중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선도사업'에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선정되어 대학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입주, 창업지원, 주거 문화시설 등 복합 개발로 정부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이 종합지원될 계획이다.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이 완료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BT, CT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 약 1,3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38. 램리서치 R&D센터 유치

투자진흥과 미주중국팀장 최원규

- 추진배경 : 글로벌 앵커기업(美램리서치) 유치로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기여
- 추진내용 : 램리서치 R&D센터 유치
- 문제점 및 해결 : 한국(경기도)와 말레이시아 경합 ⇒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로 경기도 유치
- 평　　가 : 국내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로 글로벌 기술 초격차 유지
  램리서치 R&D센터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업체 집적화로 후방산업 생태계 강화
  중소협력업체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9년 7월 일본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재료를 무기화하면서 기습적인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일본이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에서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 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 · 부품 · 장비(이하 소 · 부 · 장) 산업의 탈일본화와 생태계 육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곧 소 · 부 · 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조 1,000억 원의 특별회계가 편성되는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소 · 부 · 장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이 추진됐다. 경기도 역시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독립 기회를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TF팀 구성, 긴급 추경예산 투입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단기간 내 소 · 부 · 장 산업의 탈일본화와 생태계 육

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소 · 부 · 장 산업의 탈일본화와 생태계 육성을 앞당길 촉매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해외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첨단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국내 소 · 부 · 장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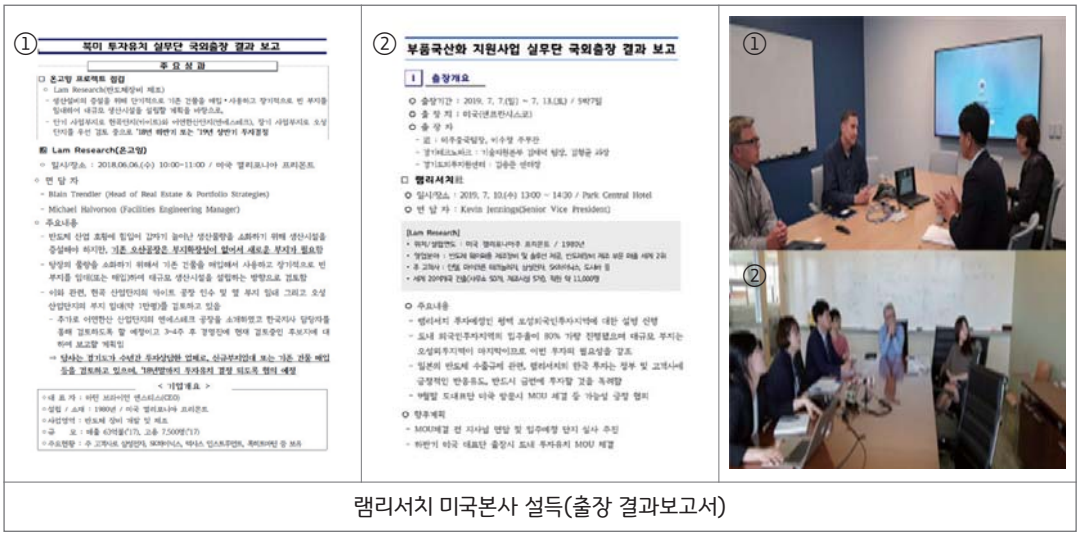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가 한국,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해외 R&D센터 설립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램리서치 R&D센터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참고로 램리서치는 식각공정과 증착공정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세계 3대 반도체 장비업체다.

1) 램리서치 R&D센터 유치를 위하여 미국 본사를 직접 설득

램리서치코퍼레이션(한국본사)와 함께 램리서치 미국본사를 전략적으로 설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미국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매력적인 투자입지로서 경기도의 강점을 설명했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가 경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주요 고객사의 니즈에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그들과의 협업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당연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맞물려 한국 고객사들이 램리서치 R&D센터가 자신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은 미국 본사 관계자에게 후보지를 직접 안내하는 등 램리서치 R&D센터를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본사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투자협상을 진행했다.

[표 38-1] 램리서치 미국본사 설득(출장 결과보고서)



램리서치 미국본사 설득(출장 결과보고서)

2)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시

램리서치 R&D센터를 경기도로 유치하려면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했고, 현금지원을 제시했다. 2019년 1월 1일부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면서, 외국인투자가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인센티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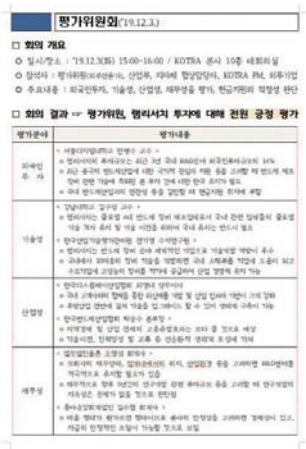
현금지원제도는 신성장동력 산업,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연구개발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외국인투자, 기술성, 재무성 등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현금지원 타당성을 평가하고, 한도산정위원회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현금지원의 한도를 결정하여 산업부장관, 도지사 등이 위원으로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현금지원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표 38-2]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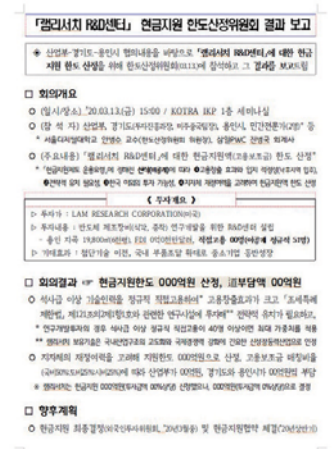
① 현금지원 상담 (기업↔산업부 지자체)	② 현금지원 신청 (기업↔산업부)	③ **평가위원회** (관련 외부 전문가)	④ **한도산정위원회** (관련 외부 전문가)
⑤ 기획재정부 협의 (산업부↔기재부)	⑥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 : 산업부장관)	⑦ 현금지원협약 체결 (산업부↔기재부, 지자체)	⑧ 현금지원 시행 (산업부↔지자체, 기업)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절차

[표 38-3] 평가위원회, 한도산정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결과



평가위원회 결과



한도산정위원회 결과

외국인투자위원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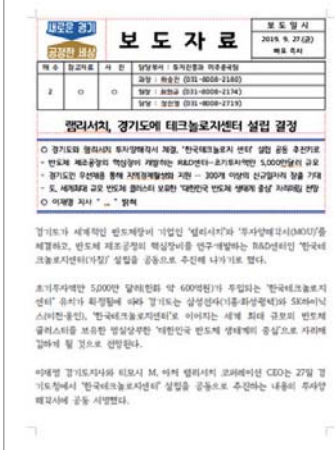
3) 램리서치, 경기도 내 최초 해외 R&D센터 설립 결정

램리서치는 한국에 R&D센터 설립을 공식화했다. 2019년 9월 27일 경기도와 램리서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장비를 연구 · 개발하는 R&D센터를 경기도에 설립하는 내용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삼성전자(기흥, 화성, 평택)와 SK하이닉스(이천, 용인)를 아울러 명실상부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표 38-4]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및 모바일, 언론 보도자료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모바일 보도자료



언론 보도자료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말레이시아와의 유치 경쟁

램리서치가 경기도에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말레이시아와 치열하게 경합했다. EU가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문제 삼으며 한국을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됐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크게 하락했다. 경기도가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임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말레이시아에 밀리기 시작했다.

램리서치를 경기도로 유치할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했고, 과감하게 '현금지원'을 제시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현금지원제도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일부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핵심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투자금액의 40%까지 현금지원을 해줄 수 있다. 현금지원은 램리서치 입장

에서는 아주 매력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였다. 결국, 램리서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주요 고객사와 가깝고 현금지원을 제시한 경기도를 투자지역으로 최종 결정했다.

2) 현금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현금지원액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하여 마련된다. 현금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현금지원 규모를 두고 관계기관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램리서치 현금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15차례 관계기간과 회의를 진행하고 협조 공문을 주고받으며 입장 차이를 서서히 좁혀나갔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현금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현금지원예산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경기도와 용인시는 램리서치 현금지원예산을 따로 수립해야만 했다.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리하여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램리서치 유치와 현금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도의회를 적극 설득했고, 2020년 6월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는 기흥 삼성, 이천 SK하이닉스와 용인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반도체 트라이앵글이 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다. 램리서치 R&D센터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자리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주요 고객사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차세대 기술 개발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 초격차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연구 · 개발한 장비에 들어갈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자체 장비 국산화율을 크게 높이면서 중소협력업체의 연구 · 개발활동을 지원하여 국내 소부장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9.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구축

투자진흥과 미주중국팀장 최원규

- 추진배경 : 기초기술 강국 러시아의 혁신기술 상용화를 통해 도내 中企의 신성장동력 확보
- 추진내용 :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도내기업의 상용화기술 매칭 및 러시아 비즈니스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道-러시아 기업 간 단발적 기술협력, 중장기적 기술협력 시스템 구축
- 평　　가 :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 및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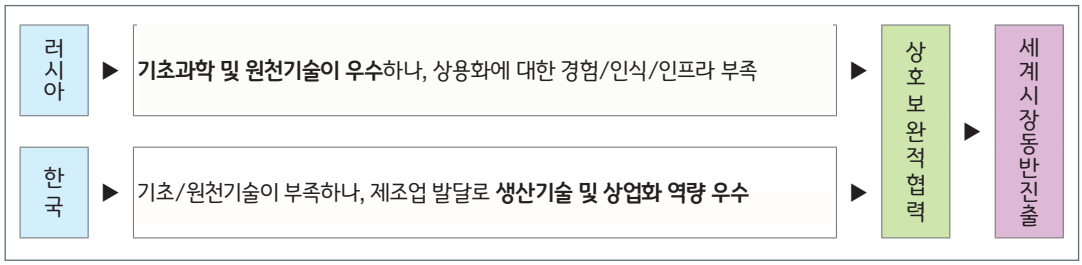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러시아는 물리 · 재료 · 화학 등 기초과학과 우주항공 · 로봇 · 소재 · 광학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자 12명을 배출(물리 9명, 화학 1명, 생리의학 2명)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 최초 대륙 간 탄도미사일, 최초 인공위성 및 유인 우주선발사, 최초 우주정거장 개발에 성공한 국가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기술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저렴한 기술이전 비용으로 사업화 성공 시 수익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기술도입 장벽이 높지 않아 기술선진국 기술보호주의도 극복할 수 있다.

러시아는 수준 높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약한 제조기반으로 인해 상용화 역량이 떨어지고, 한국은 기초기술이 부족하나 상용화 역량이 우수하여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도내 기업이 상용화하는 형태의 한-러 기술협력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다.

[표 39-1] 한-러 기술협력 방향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개소

4차 산업분야 기술 강국인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인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가 2019년 10월 31일 개소식과 함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강화를 추진, 도내 중소기업이 첨단기술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는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1층과 5층에 총 315㎡ 규모로 세워졌으며, 1층에는 러시아의 IT, 신소재, 광학, 로봇, VR 제품 등이 전시된 '혁신기술제품 전시관'이 마련됐으며, 5층은 사무 공간 및 기업 입주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센터 내에는 러시아어가 가능하고 한 · 러 기업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담 인력이 상주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기술공사, 하나금융투자, 국제시험인증원, 법무법인 경연, 우진 글로벌 로지스틱스, 한-러 비즈니스협의회 지원데스크가 위치하고 있어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원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물류,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진 39-1]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개소식 행사

도지사 축사

道-러시아 기업 간 기술제휴협약

혁신기술제품 전시관 투어

2) 경기-러시아 ICT 포럼 개최

'19년 10월 31일 경기-러시아 ICT 포럼이 개최되었고, 미래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등 '4차산업'과 관련한 러시아 기업 15개社가 참여하여 기술설명회를 했으며, 도내 관심기업과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 러시아기술공사 한국지사장, 러시아 소프트웨어개발기업협회 회장 등 약 150여 명이 참가했다.

[사진 39-2] 경기-러시아 ICT 포럼 행사

부지사 축사

RUSSOFT 회장 연설

참석자 단체 촬영

3) 러시아 기술협력단 파견

'19년 11월 4일~7일 경기도는 도내기업 7개社를 파견하여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

르부르크에서 러시아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도내 기업을 매칭하고, 러시아 혁신기술설명회 및 1:1 상담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기술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본 기술협력단으로 동행한 도내기업 NTC Soft社는 러시아 기업 Dephan社와 자율주행 센서를 공동개발하여 SFA社에 납품하기로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사진 39-3] 러시아기술협력단 파견 행사

모스크바 기술설명회

스콜코보 혁신센터 방문

바우만공대 방문

4)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와 도내 5개 창보센터 간 기술혁신 협약

’20년 4월 29일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성균관대 창업보육센터, 경기대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POST-BI센터, 경기중소기업 성장 지원센터 등 도내 5개 창업보육센터와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러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5개 창업보육센터는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가 주관하는 기술협력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는 선발된 창업기업들에게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위한 정보 제공과 세미나, 전문가 컨설팅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올 하반기에 러시아 현지 기술 파견단을 꾸릴 계획으로, 도내 창업기업의 기술 경쟁력 및 글로벌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39-4] 기술혁신 협약 체결식

5) 道-러시아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성공사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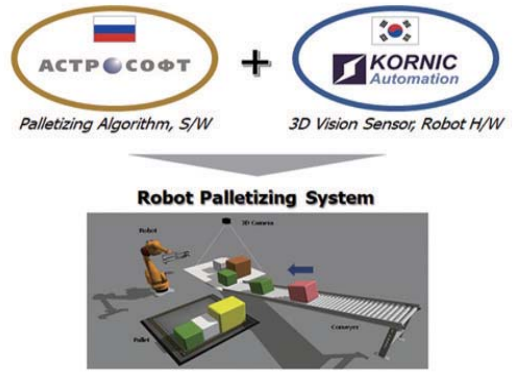
‘19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는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기술협력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본 사업 수혜기업인 도내기업 ‘엑소아틀레트’社는 러시아와 국내 투자자로부터 약 1500만불 투자를 유치할 예정으로, 2023년 한국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내기업 ‘루프’는 러시아 국영기업 아브토마티카社와 기술제휴를 통해 연 150만대 디지털 차량운행계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의 도움으로 도내기업과 러시아 기업이 매칭에 성공하여 기술제휴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기업 ‘코닉오토메이션’과 러시아 기업 ‘아

스트로소프트사'가 기술제휴를 통해 국외 제품에 의존했던 3D비전 시스템의 국산화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물류자동화 장비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표 39-2] 기술개발 성공사례

<table>
<tr><td>
</td></tr>
<tr><td>엑소아틀레트 사례</td></tr>
<tr><td>
</td></tr>
<tr><td>루프 사례</td></tr>
<tr><td> 
</td></tr>
<tr><td>코닉오토메이션 사례</td></tr>
</table>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구축 장소 확보 및 협력기관 유치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혁신 원천기술을 이전하고, 道-러시아 기업 간 공동기술협력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道-러시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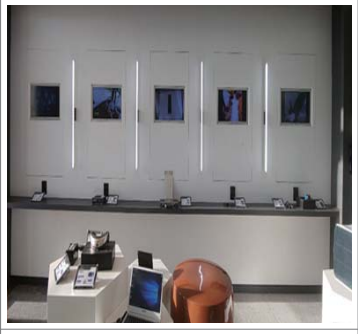
업 간 기술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곳에 플랫폼 구축이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어촌연구원, 고대 안산병원 등 공공지원기관은 물론 대학과 국가출연연구원, 대기업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고, 다국적기업 및 벤처기업 200개社가 입주 · 활동하고 있는 안산 사이언스밸리야 말로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가 위치할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되었다.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기 위해 우리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총장 면담 및 대학 측 관계자와의 미팅을 약 10회 가량 진행한 끝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창업보육센터 1층과 5층 약 100평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첨단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러시아의 핵심 파트너 기관인 러시아기술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내 러시아기술공사 경기오피스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러시아 엔지니어가 매주 상주하게 되었다.

[사진 39-5]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외부	혁신 기술제품 전시관	오피스 내부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는 4차 산업분야 기술 강국인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이다. 이 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道-러시아 기업 간 단발적 기술협력만을 지원하였고, 러시아 기술 '알선'에 그치는 소극적 협력만이 이루어졌으며, 도내 중소기업의 러시아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 상용화 지원 시스템은 전무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에 특화된 플랫폼인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중장기 협력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고,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내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혁신기술 분야 기술협력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수입선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인 러시아와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러시아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도내기업의 기술 자립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는 러시아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도내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기술 상용화 협력을 지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생각이다.

40.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 조성 착수

미래산업과 자율주행첨단단지팀장 임준범

- 추진배경 : 판교테크노밸리의 글로벌화를 통해 기업도시 경쟁력 강화
  - 서울 등 판교 주변도시의 경쟁력을 차별화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 방안 마련
  - 주변도시 보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 스타트업 육성
- 추진내용 : 글로벌 Top 수준의 엑셀러레이터를 판교로 유치
  - 엑셀러레이터 유치 → 경기도 글로벌 선포식 → 해외 진출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주변도시와의 경쟁(유치 경쟁), 코로나 19 사태 대응
- 평　　가 : 판교 지역가치 상승과 글로벌스타트업 육성 연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현재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을 구매하거나 M&A 등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판교의 경우 제1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매출은 약 80조 원 수준이나 높은 매출에 비해 스타트업과의 협력이나 공동개발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판교를 서울 등과 비교하였을 때 주요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므로 부동산 호재 여건이 악화될 경우 우수기업이 주변 도시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기도 글로벌스타트업 육성사업'은 판교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하여 판교 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제 불균형 완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판교의 브랜드와 지역 가치를 향상하여 '글로벌 도시 판교'를 구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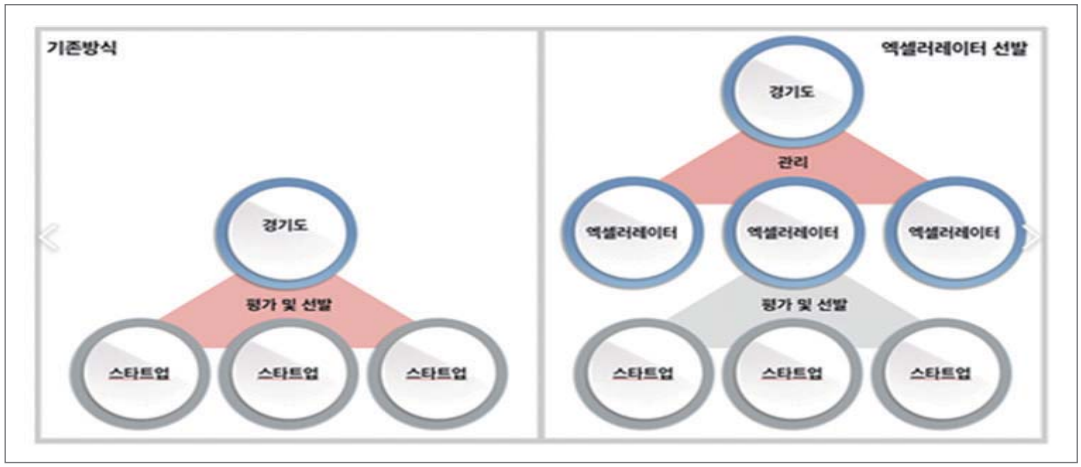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글로벌 도시 판교 핵심 액셀러레이터(약은 약사에게, 스타트업은 액셀러레이터에게)

글로벌 도시 판교와 대 · 중 · 소기업의 협력을 위해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판교로 유치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투자와 펀드 등의 자본논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관에서 주도하여 대부분 실패하였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철저하게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되 경기도에서 액셀러레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

[표 40-1] 민-관 협력 프로그램 정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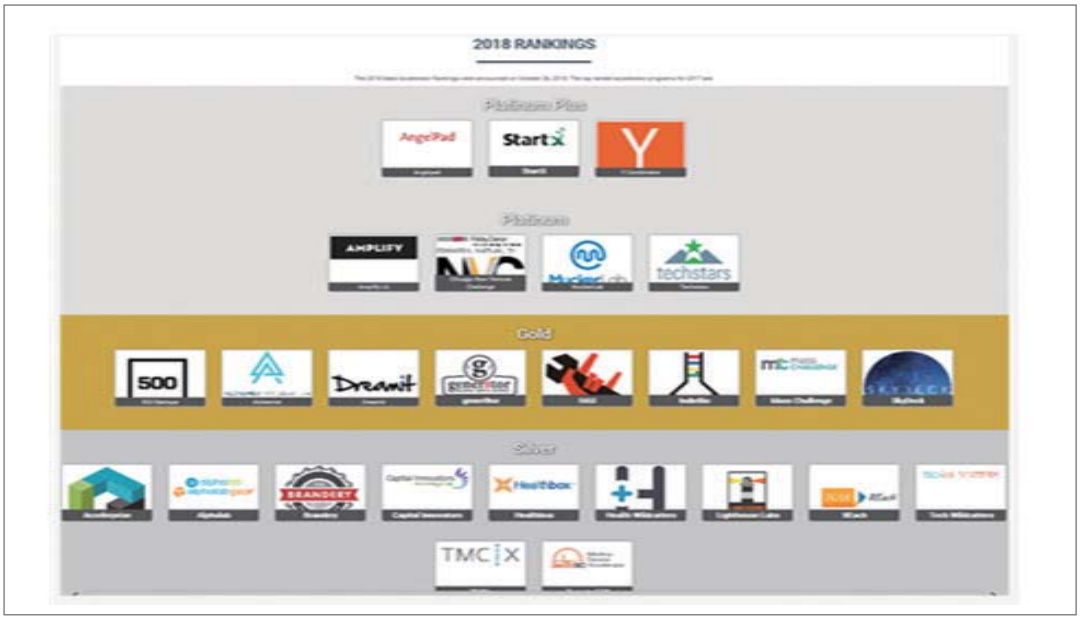


2) 적극적인 정책 실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중 성과가 우수한 곳을 모색하되 판교에 입주할만한 “기술 중심” 액셀러레이터를 모색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하였다. 액셀러레이터 후보군으로 테크스타스(Techstars),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 파이브헌드레드(500), SOSA 등이 확정되었다. 특히 테크스타스는 와이컴비네이터와 함께 전 세계 최고의 액셀러레이터 그룹에 속

하는 액셀러레이터로, 마침 인도에 지사 설립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다. 경기도의 경제실장, 미래산업과 등의 공무원은 테크스타스(Techstars)와 개별적 미팅을 마련하고 도청으로 직접 초대하여 경기도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 결과 테크스타스(Techstars)가 판교의 입주를 결정하였다.

[표 40-2]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순위 분석



3) 민주도-공공주도의 Two-Track 운영

성과 비교를 위하여 민간수익형과 공공정책형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수익형은 글로벌 TOP 액셀러레이터의 사업 방식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고, 민간의 투자대상, 방식, 수익구조 등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기업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공공주도형은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일반 수익 구조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분야를 공공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경기도의 정책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사업 부문에 집중하여 운영한다. 향후 두 성과를 비교하여 우수한 분야로 점차 집중하되 판교의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식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정책 로드맵 작성할 예정이다.

4) 경기도의 글로벌 선포식, 정책의지 홍보

2019년 12월 18일 판교 글로벌 선포식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판교에 우수한 액셀러레이터가 입주한 사실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판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은 판교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서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며 4차산업혁명의 한 부분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사진 40-1] 판교 글로벌 진출 선포식

5) 코로나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순항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입주가 지연되고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어려워지는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총 25개사가 입주 완료하였다. 또한 투자검토 단계의 4개사 14억 원, 계약검토 단계의 5개사 83억 원, 그리고 계약체결 단계의 1개사 10억 원 등 2020년 상반기에만 해외진출 및 투자 등으로 10개사 총 107억 원을 달성하였다.

[표 40-3] 2020년 상반기 실적 107억 원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서울 등 주변 경쟁 도시와 글로벌 TOP 액셀러레이터와 경쟁

글로벌 TOP 액셀러레이터의 높은 인지도 때문에 중앙정부 부처, 서울시와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였다. 높은 지원 금액을 제시한 곳도 있었고, 서울시의 경우 공항과의 연계를 통해 편리한 접근성을 강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는 글로벌 TOP 액셀러레이터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IT, BT, CT 등 첨단기업이 집적화된 판교테크노밸리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치열한 타 기관과의 경쟁 속에서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2) 코로나19 사태

코로나-19 때문에 스타트업캠퍼스 입주예정 기업들의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

다.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이동제한이 문제되었다. 이 사태를 극복하고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들과 화상회의 혹은 비대면 접촉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업진행과정의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글로벌스타트업 육성사업 기업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고 이와 동시에 판교 글로벌 브랜드 구축 및 지역가치라는 상생구조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전문적인 글로벌 AC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해외진출지원을 시도하였으며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가지는 장점들을 모아 서로 성장하고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였다.

글로벌스타트업 기업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며 경기도 내 지역의 발전과 글로벌스타트업 기업들 간에 상생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4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산업정책과 반도체산단팀장 김동건

- 추진배경 : 반도체산업 NO.1 지위 확립 필요
- 추진내용 : 공업 물량 및 산단지정계획 반영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부 건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특별물량 확보
- 문제점 및 해결 : 수도권 특별물량 요청과 산단지정계획 반영
  국토부 및 비수도권의 반발, 수도권 입지 필요성 전략 수립
- 평　　가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반도체산업 육성
  균형적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반도체 경쟁력 강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21%를 차지하는 국가 주력산업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국내 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2022년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19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굴기선언(약 180조 원 투자계획 발표) 등 경쟁국의 추격에 대비한 글로벌 NO.1 지위 확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연구와 양산을 위한 투자가 필요했고 이에 경기도는 인프라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검토하였다.

다만, 경기도에 배정된 2018~2020 산업단지 일반물량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함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산업단지 추가물량 확보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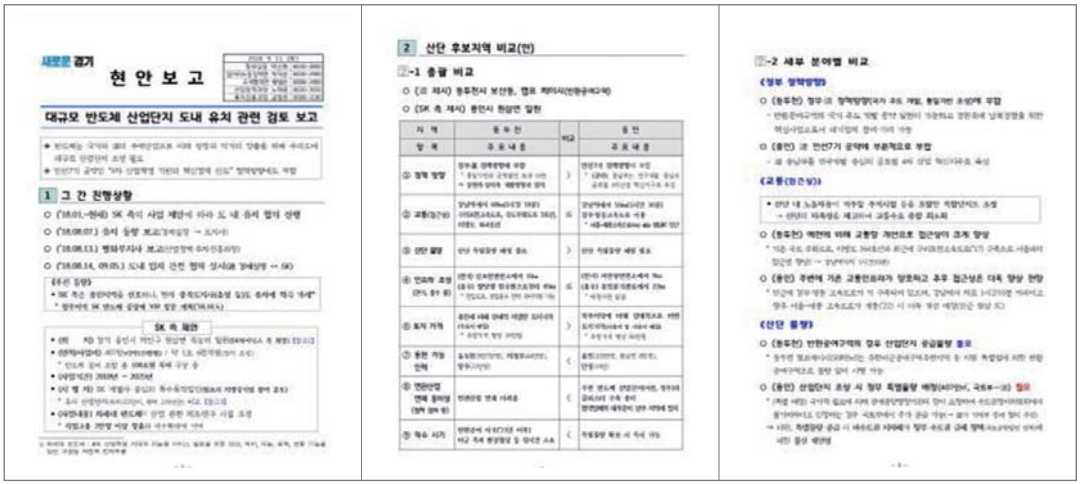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원 약 4.16㎢, 면적의 부지에 기반시설 1조8천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대응을 위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생산시설, 기존 반도체의 장점들을 조합한 초고속 · 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 제조시설, 연구시설, 중소기업 협력시설, 주거단지 등이 들어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투자유치는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SK의 사업 제안 및 입지 검토

SK측 사업제안을 통해 반환공여지 등을 포함한 도내 유치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연구 인력 확보, ▲용수 · 전력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시급성 · 용이성 · 입지 타당성을 고려 용인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표 41-1]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도내 유치 관련 검토(내부보고)


현 안 보 고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도내 유치 관련 검토 보고

1 그 간 진행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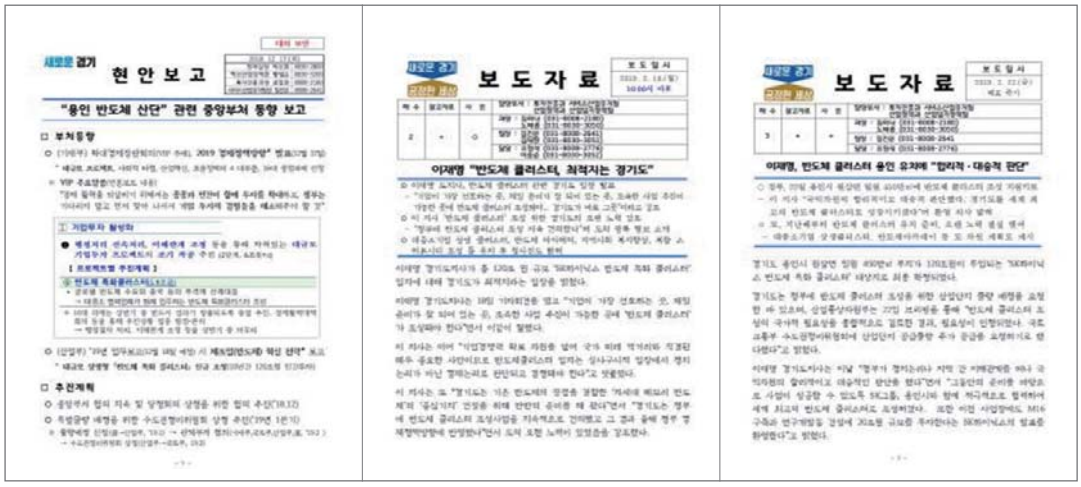
2 산단 후보지역 비교(안)

2) 정부 정책 반영 건의 및 용인 입지 결정

경기도는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 투자 필요성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이런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 방향과 업무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민간투자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뜨거웠으나 경기도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유치 의사 표명 및 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추진하여 마침내 정부는 2월 용인을 반도체 클러스터 최종 입지로 확정하였다.

[표 41-2] 정부 정책 발표(내부보고) 및 용인 입지 결정 발표(보도자료)


현 안 보 고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중앙부처 동향 보고

보 도 자 료

이재명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의사 표명"

보 도 자 료

이재명,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에 "합리적 · 대승적 판단"

3)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투자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계획 요청(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신청하였으며, 산업부-도-용인시-SK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직접 관계부서 및 실무위원을 방문, 사업 취지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고 마침내 지난 3월 26

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되었다.

이후 도-용인시-SK하이닉스-SK건설은 대중소기업, 지역주민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자고 5월 21일 함께 모여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41-3]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의결 발표 및 투자협약 체결(보도자료)

4)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및 행정절차 진행

2019년 3월 26일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공업 물량을 받은 후, 2019년 6월 5일 국토교통부 산업정책입지심의회에서 '2019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새로 포함되도록 의결하였다.

이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로부터 입지 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사안이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 6월 12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반영된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다.

이번 지정계획 고시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산단(SK건설 등)은 2019년 7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후 2020년 9월경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같은 해 10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용인시 승인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표 41-4] 2019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2019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시도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 면적(천㎡)	산업용지 면적(천㎡)	사업시행자	비고
경기		26개소		11,025	6,926		
	안성시	안성바이오1	일반	294	214	한국콘무브이(주) (주)상지건설개발	기존
	화성시	동탄2일반산단	일반	255	159	동탄에이산업개발(주)	〃
	용인시	죽능일반산단	일반	69	54	(주)원당산단	〃
	김포시	학운일반산단	일반	885	504	(주)학운일반산업단지개발	〃
	김포시	학운2일반산단	일반	186	121	학운산단2(주), 김포도시공사	〃
	파주시	법원일반산단	일반	305	172	파주시	〃
	용인시	언세이뮤복합	도심	201	85	주식회사 이화미션	〃
	파주시	파평일반산단	일반	597	426	파평산업단지개발(주)	〃
	양주시	은남 일반산단	일반	1167	552	양주시, 현대엔지니어링	〃
	안성시	양죽산업 허브센터 일반산단	일반	225	145	LH	〃
	화성시	동신일반산단	일반	182	131	(주)동신에이엔	〃

시도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 면적(천㎡)	산업용지 면적(천㎡)	사업시행자	비고
	안성시	공도일반산단	일반	44	28	(주)서한에프에이시스템	기존
	안성시	죽산서운복합일반산단	일반	225	145	(주)신진	〃
	광주시	곤지암 프레시푸드일반산단	일반	37	26	(주)건우푸드 외 2개사	〃
	광주시	한울일반산단	일반	38	31	(주)한울상사 외 2개사	〃
	용인시	백암 일반산단	일반	59	44	대지철강(주)	〃
	오산시	오산가장제3일반산단	일반	166	105	오산가장제3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
	이천시	조읍일반산단	일반	59	50	(주)세원인텍스 (주)세원홈스토리	〃
	이천시	남이창일반산단	일반	58	49	농업회사법인 (주)한길	〃
	연천군	풍현일반산단	일반	169	129	(주)빙그레	〃
	용인시	제일일반산업단지	일반	56	46	(주)[illegible] 외 2개사	〃
	용인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일반	4,484	2,515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추가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일반	854	549	특수목적법인 (주)안성테크노밸리	추가
	김포시	학운31일반산단	일반	120	74	대원산업개발(주)	추가
	김포시	월곶일반산단	일반	871	555	(주)월곶산업개발	추가

5) 소재부품장비산업법 '특화단지' 지정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2월 17일에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에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2020년 4월1일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에 따라 '20년 하반기 중 전국에 1~2개소 시범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지정계획은 6대 업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초화학, 전기전자, 기계금속)을 중심으로 산업 공급망 강화 등 정책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거나(기존 산단),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신규 산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정 시 혜택은 수도, 전기, 가스 등 필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이 있다.

경기도는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20.6.9.)하였고, 관계 중앙부처 협의,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 부위원장: 산업부장관) 심의를 통과한 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국 1호'로 특화단지에 지정('20.8.)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국가 버팀목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선제적·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 선점·글로벌 경쟁력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 반도체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국내 생산설비 확보
○ 기술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

[표 41-5]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 >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비수도권의 유치경쟁 및 국토부 부정적 입장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발표 이후 경기도를 포함하여 청주, 구미, 천안 등 유치 경쟁이 시작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 발전 논리에 따라 수도권 입지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 입장이었다.

특히 토지 무상공급 및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비수도권 지역과의 경쟁이 치열하였다. 구미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위해 영 · 호남 시 · 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청주 또한 충북 시장 · 군수 협의회를 통해 비수도권 입지 건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사진 41-1]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비수도권 유치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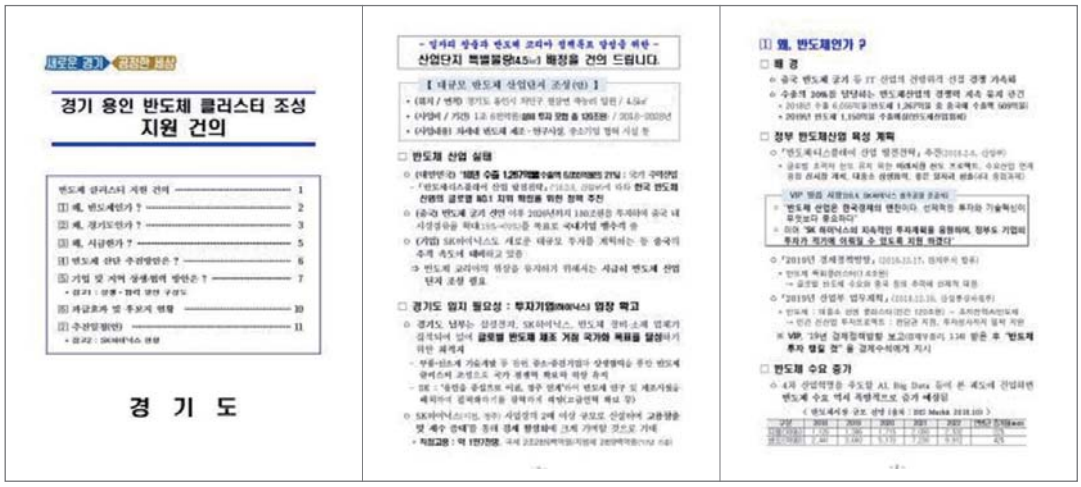
2) 정부 설득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

정부에서는 반도체 산업 대규모 투자에 대하여 환영했지만 비수도권의 유치 경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왜, 반도체 산업 투자가 필요한가?, 왜, 경기도에 유치해야 하는

가?, 왜, 시급한가?’ 의 논리를 가지고 정부 및 국회 등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였고 약 7개월 간의 정부 및 실무 협의를 통해 최종 용인으로 유치를 확정하게 되었다.

[표 41-6]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건의



3) 산업단지계획 마련 및 추진을 위한 중앙 부처 협의

경기도는 2019년 4월19일 산업정책과에 반도체산단팀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보 및 행정 인 · 허가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2019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한강유역환경청, 산림청,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29개 기관 114개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8월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업용수, 전력,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급 방안에 현안 과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등과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주관하여 용인시, SK건설, SK하이닉스와 협업체계를 구축한 ‘합동지원단’을 조직하여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사업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협업을 통해 채워준다면 사업 승인(’20.12.), 착공(’21.1.), 인프라·FAB1단계 준공(’24.12.) 등 향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유치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대에 적기 대응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될 계획이며, 대중소기업 창업 연구 공간과 교육장을 갖춘 상생협력센터를 설립해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국산화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이다.

최근 반도체 갈등과 관련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실 있는 협력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완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내에 핵심 소재 · 부품의 안정적 확보(국산화)와 미래 소재 원천 기술 개발업체(50여 개사) 선정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 육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부지조성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첫 번째 공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이 가동되면 2030년까지 삼성전자 기흥 · 화성 공장, 평택 공장, SK하이닉스이천 공장 등 최대 19개 라인에 8만4천 명의 인력이 일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기지인 '경기반도체클러스터'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2.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 창업지원 추진

창업지원과 창업활성화팀장 김근기

- 추진배경 :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 추진을 통한 특화산업 관련 우수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
- 추진내용 :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道내 대학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업 비율이 낮아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 추진
- 평　　가 :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추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 내 대학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업 비율이 낮아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 활용이 미진한 상황으로 권역별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 추진을 통한 특화산업 관련 우수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했다.

일자리 ·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경기도 민선7기부터 「권역별 대학을 특화산업과 연계 창업 역할 강화」사업을 추진, 경기도내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성 및 인프라를 활용 산학관 협력을 통해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 ·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 국정과제 39번.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기도는 창업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체, 학계,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선발하여 전문가로부터 사업에 대한 평가 · 자문을 수렴 ·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학연 협의체 Pool에 등록된 총 45명의 분야별 전문가는 경기도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자 평가 및 선정, 지원금 조정과 확정, 창업지원 관련 자문 및 심의에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협의체 Pool에 등록된 위원을 주기적으로 이력 및 경력사항을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고,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서는 Pool에서 제외, 이를 통해 전문가의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을 확보했다.

2) 특화산업 관련 특화 창업보육센터 지정 및 지원, 특화 우수기업 육성

경기도는 권역별 특화산업을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으로 중부권(IoT, AR/VR, 자율주행, ICT 등), 남부권(광학, 콘텐츠, 생명공학, 전기 · 전자 등), 서부권(녹색성장, 화학, 소재, 기계, 자동차 등), 북부권(섬유, 가구, 의료기기 등) 총 4개 권역으로 나눠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경기도 내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2019년에는 총 6개소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특화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고 특화산업과 관련한 입주기업을 지원하였다. 금년에는 특화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총 8개소를 특화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중부권-협성대, 연성대, 남부권-중앙대, 용인송담대, 북부권-동국대, 경민대, 서부권-한양대, 한국산업기술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화 창업보육센터에서는 특화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운영에 필요한 특화프로그램(마케팅, 전문교육, 컨설팅, 데모데이 등) 운영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42-1] 경기도내 권역별 특화산업 현황

구분	중부권 (수원,성남,화성,안양)	남부권 (용인,안성,평택,이천,여주,오산)	서부권 (안산,시흥,부천)	북부권 (의정부,포천,남양주,고양)
특화 산업	IoT, AR/VR, 자율주행, ICT, S/W, 지식서비스, 전기 · 전자 등	광학, 컨텐츠, 생명공학, 전기 · 전자, S/W 등	녹색성장, 화학, 소재, 기계, 자동차, 로봇, 환경, 금속, BT 등	섬유/가구, BT, 의료기기, 화학 등
대학 (36개소)	가천대, 아주대, 성균관대 등 14개소	한경대, 중앙대 등 11개소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등 5개소	대진대, 경민대, 동국대 등 6개소

[표 42-2] 2019년 특화 창업보육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특화 창업보육센터	특화 프로그램	주요사진
동국대	[바이오 분야-D-value up 프로그램] - D-Value Up Support(무역교육) - D-Value Up Marketing(마케팅 교육) - D-Value Up Froniter(마케팅-판로개척지원) - D-Value Up Follow UP(멘토링)	
협성대	[IoT 분야 - 역량강화 프로그램] - IoT 비즈니스 전략 수립 전문교육 등 - IoT 멘토링 및 팀빌딩, 제품인증 컨설팅, 전문가 활용 - IR투자 데모데이 및 성과보고회	
서울대	[S/W분야 : 역량강화 프로그램] - S/W 전문교육 - S/W 기업진단 및 투자유치, IR컨설팅	
용인송담대	[S/W분야 : 역량강화 프로그램] - S/W분야 기업진단 및 컨설팅 - IR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 및 성과보고회	
중앙대	[생명공학 분야 : Bio-Tech Master Program] - Bio-Tech 네트워크 교류회 - Bio-Tech 멘토링, Bio-Tech 투자유치	
한국산업기술대	[화학분야 : 화학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 수출마케팅 교육 및 멘토링 - 해외판로개척 지원, 투자계획서/IR데모데이 - 회계교육 및 멘토링	

2019년도에는 특화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된 6개소의 입주기업을 특화프로그램과 함께 시제품 개발, 시험 분석, 지식재산권 출원,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12건, 매출 2,304백만 원, 투자유치 50백만 원의 성과를 이뤄냈다. 사

업화지원을 통해 각 기업의 기술성을 토대로 시제품 개발 완료 및 매출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동시에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진행함으로써 자사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다양한 마케팅지원을 통해 전시회 참가, 해외 현지화의 인프라 구축 등 판로개척에 기여하고 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권역별 특화산업과 대학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추진

경기도내 대학별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중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업비율이 낮고, 경기도 권역별 특화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대학창업보육센터의 주력 보육분야가 일부 상이함에 따라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창업보육센터 간 특화산업과 주력 보육분야가 매칭 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주력 보육분야를 조정 ·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특화산업 분야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특화 창업보육센터의 특화프로그램과 입주기업 사업화 등을 통해 입주기업은 대학의 관련 연구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를 활용,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하여 직접적인 매출과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 산업구조 및 도내 대학 창업보육센터 업종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권역의 특화산업과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 42-3]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대학창업보육센터 현황('20. 7월 기준 / 36개소)

권역별	소재지	창업보육센터명	주력 보육분야	개소일
남부권 (11)	용인시	강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기전자 IT	1999-10-28
	용인시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IT, BT, CT	2010-04-15
	용인시	명지대창업보육센터(용인)	기계,전기,전자	1999-02-27
	여주시	여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기·전자, 도자기(향토산업), 농업ICT(6차산업)	2014-11-30
	오산시	오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IT,자동차	2000-04-28
	용인시	용인송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기계금형사출전기전자기타	2001-11-17
	안성시	중앙대학교 휴먼테크노 창업보육센터	생명자원분야	2000-12-01
	안성시	평택대학교 글로벌 피어선 창업보육센터	ICT, 보건복지분야, 문화	2017-11-29
	안성시	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환경, 바이오산업	2000-12-06
	용인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ICT헬스바이오환경, 글로벌 진출	2001-03-24
	오산시	한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반도체, 제조업 분야	1999-11-26
북부권 (6)	의정부시	경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의료기기, 전기전자 등	2000-03-07
	남양주시	경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식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 등	2015-01-22
	포천시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화학, 전자, 기계	1999-12-13
	고양시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	BT(바이오테크, 천연물신약, u-Health기기, 화장품, 기능성소재)	2011-05-19
	포천시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스타트업창업보육센터	의약, 바이오, 식품	2017-11-01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항공우주 및 기계분야, 전자 및 정보통신분야	2001-09-20
서부권* (5)	부천시	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BT/IT관련 산업	2003-03-12
	시흥시	경기과학기술대학교창업보육센터	녹색성장 및 1인기업	1999-09-09
	안산시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기,전자,정보통신기기 개발	2000-03-06
	시흥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정밀/특소/요소기계, 전자/기계부품, 나노광학, 정밀화학, 환경기술	2000-10-06
	안산시	한양대학교 에리카 창업보육센터	전자부품 제조업 등	1999-03-09
중부권 (14)	성남시	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나노,바이오,IT 등 첨단기술 분야	2003-03-24
	수원시	경기대학교 경기창업보육센터	IT, BT, 디자인	2001-01-01
	수원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디지털전자	1999-03-02
	성남시	동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정보기술(IT)	2000-12-22
	수원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창업지원센터	농생명바이오	2001-09-24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BT / IT / NT	1998-12-01
	화성시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자/전기	2001-04-27
	화성시	수원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IT, 영상산업, 식품과학분야, 아동산업,	2000-12-21
	성남시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CT, BT, IT	2000-10-16
	수원시	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반도체전자정보통신	2002-02-25
	안양시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Health, Beauty, 정보통신, IoT	2002-02-01
	안양시	연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자전기통신	2002-03-22
	성남시	을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보건의료기술관련분야	2001-04-11
	화성시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식분야, 기술기반 제조분야	2013-12-12

43. 경기도주식회사 매출액 100억 달성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장 인재서

- 추진배경 :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추진내용 :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매출 증대
- 문제점 및 해결 :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익성과 수익성 동시 달성의 어려움, 온라인 및 홈쇼핑 매출 증대 및 마케팅 다양화를 통해 과제 극복
- 평　　가 : 순익 흑자 전환 성공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주식회사는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및 과도한 가격경쟁 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출범하였다.

이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디자인 개선 및 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를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유통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백화점, 마트,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의

유통채널을 다음과 같이 공격적으로 확대해왔다.

우선 도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의 결과로 도내 중소기업 451개 업체에게 국내 온라인 20개 유통채널 판로를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로 온라인 채널 기획전 204회를 지원하여 누적 매출액 3,746백만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표 43-1] 온라인 판로지원 관련 사진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네이버 스토어팜</td>
<td>G마켓 기획전</td>
<td>티몬 행사기획전(베스트1위)</td>
</tr>
<tr>
<td colspan="3">
</td>
</tr>
<tr>
<td colspan="3">SNS 기반 공동구매 폐쇄몰 입점(카카오스토리)</td>
</tr>
</table>

또한 홈쇼핑 방송 70회를 지원하여 매출 16억 원을 달성하였다. 9채 채널 유통사(공영홈쇼핑, 현대홈쇼핑플러스샵, 롯데홈쇼핑원티비, K쇼핑, 더블유쇼핑, 엔에스쇼핑, GS마이샵, SK스토어, 신세계TV쇼핑)에 입점하였다. 지원과정에서 1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히트상품 2개(화성시 한우언양식불고기 매출 3.4억 원, 성남시 에브리봇물걸레청소기 매출 1.3억 원)를 발굴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

[사진 43-1] 홈쇼핑 판로지원 관련 사진

"홈쇼핑 방송 및 유통지원(더블유쇼핑, 공영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대형마트(롯데마트)입점을 추진하였으며, 대형 오프라인 플리마켓을 10회(현대백화점 7회, 롯데백화점 1회, 신세계백화점 1회, 행복한백화점 1회) 완료하였다. 또한 상품 전시회(4회) 및 팝업행사(10건)로 누적 매출액 984백만 원을 달성하였다.

[사진 43-2] 오프라인 판로지원 관련 사진

"바라지마켓 by 경기도주식회사" 팝업행사(현대백화점 킨텍스점, 4.16.~21.)

"롯데마트 프로모션 지원 - 매대 제작 및 팝업행사 by 경기도주식회사"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공익성과 수익성 동시 달성의 어려움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존 공공기관의 한계를 넘어 시장성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목표로 출범되었다. 때문에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회사로서의 실제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더구나 출범 첫해부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해 매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2) 온라인 및 홈쇼핑 매출 증가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는 변화하는 유통·판로 환경에 맞춰 '온라인 부문'과 '오프라인 부문'으로 재편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온라인 부문'은 온라인몰(이베이코리아·위메프·티몬 등), 홈쇼핑 및 티커머스(공영홈쇼핑 · 더블유쇼핑 · 롯데원티비 등), 신사업(SNS폐쇄몰) 등에, '오프라인 부문'은 백화점 및 마트 팝업 행사, 지점(시흥 바라지마켓)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덕분에 '온라인몰'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14% 성장하였으며, '홈쇼핑' 역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00% 상승하여 매출 실적에 기여하였다.

3) 마케팅 다양화 지원 사업성과

분당 · 일산 · 파주 등 6개 지역 맘카페와 협력해 주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맘카페 연합인 '맘스런'을 통해 확보한 잠재 고객은 무려 120만 명이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맘스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경기도 농식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시작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검증한 친환경 농산물을 경기도주식회사가 확보한 마케팅 채널로 판로를 만들고, 맘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냈다. 수익의 일부는 사회서비스원에 기부해 돌봄서비스 비용 등 공익적 가치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진행하여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위와 같이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통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여 매출 증대 및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매출 1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만드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대형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및 SNS 채널을 활용한 입점을 지원하고, 개별 상품별 맞춤형 기획전, 쿠폰제공 등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홈쇼핑 기업의 방송 판매 기회를 확대하여 지원 대상인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44. 지역경제 빅데이터(유통) 플랫폼 및 센터 구축 · 운영

데이터정책과 데이터기획팀장 권오징

- 추진배경 :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1번. 데이터 수집 · 가공 · 거래 · 활용기반 강화
- 추진내용 :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을 통한 데이터 유통기반 조성
- 문제점 및 해결 : 행정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데이터 유통거래기반 조성으로 정책결정 어려움, 플랫폼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구성
- 평　　가 : 데이터 유통 · 거래 기반 조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다.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빅데이터 센터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분석 · 유통하고 혁신서비스를 발굴 · 확산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은 금융, 문화, 환경, 유통 등 2022년까지 30개 분야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9년 총44개 기관이 참여한 공모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참여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플랫폼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최대 125억을 지원받게 된다.

*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1번. 데이터 수집 · 가공 · 거래 · 활용기반 강화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경기도는 2019년 3월부터 코나아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 소상공인과, 청년복지정책과 등과 TF팀을 구성하여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 참여를 준비해 왔다. 2019년 3월 자체공모를 통해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아임클라우드, ㈜코나아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데이터 센터로 참여하는 기관들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었다.

데이터 센터로 참여하는 기관은 기업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기업데이터㈜, 소비자 패턴분석 정보를 맡을 ㈜더아이엠씨, 일자리 정보를 보유한 경기도일자리재단, 도내 소상공인의 신용평가정보를 보유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유동인구 분석결과를 보유한 경기콘텐츠진흥원, 국토계획정보 및 지리정보를 보유한 국토연구원, 유튜브 데이터를 보유한 한양대학교, 기업의 소재, 부품, 특허 정보를 보유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다.

[사진 44-1] 경기도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협약

2) 경기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경기도는 2019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12개 참여기관과 협업하여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구축사

업을 추진하였다. 총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플랫폼 구축사업은 2019년도에 플랫폼 및 센터를 구축하고, 2020년에 데이터 구축 · 개방 및 이기종 플랫폼 연계 추진, 2021년에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각 센터는 데이터를 생산, 정제하여 플랫폼으로 전송하고, 플랫폼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융합, 가공, 분석하여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게 유통 · 제공하게 된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데이터 표준화 방안 및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참여기관에 제공하였다. 기관별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매주 개최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이나 공통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플랫폼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신용정보, 기업평판정보, 지역화폐정보, 일자리정보 등 생산, 소비, 일자리 분야 데이터 118종을 발굴하고, 데이터 유통을 통한 거래를 창출하였다. 참여기관별로 데이터 생산, 가공, 정제를 위한 신규 인력 54명을 채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3) 세계 최초, 지역화폐 기반 데이터 배당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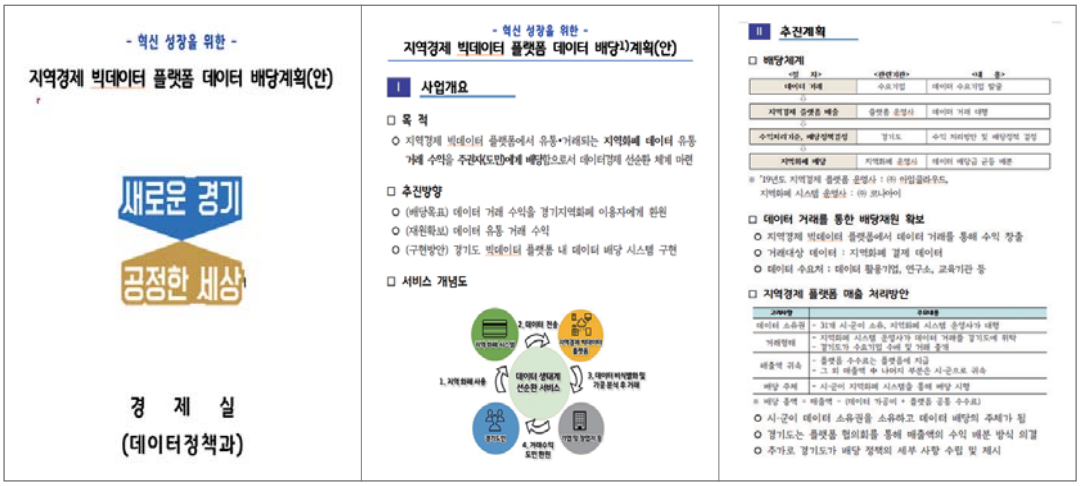
플랫폼을 통해 지역화폐 데이터를 유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데이터 배당”을 세계최초로 추진하였다.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실현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통수익을 활용하여 배당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시 · 군에 배당 정책을 설명하고 관련 부서와 지역화폐 이용 배당 절차를 합의하였다. 그 후 지역경제 플랫폼 협의회를 통해 데이터 배당정책을 의결함으로써 데이터 배당 추진을 확정하였다.

31개 시 · 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과 배당 절차와 분배 방식을 확정하였다. 이후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발생한 수익 중 원가(플랫폼 수수료, 데이터 가공비 등)를 제외한 수익금을 지역화폐 카

드를 대상으로 균등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2월에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는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도민들의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며,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으로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표 44-1]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배당계획(안)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행정기관 최초 데이터 유통 · 거래 기반 조성, 신속한 정책결정

경기도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은 행정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데이터 유통 · 거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례가 없어 추진방향 설정이 어렵고, 다수 기관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정책결정 지연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속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2) 플랫폼 협의회 구성 및 실무협의 진행

경기도는 이처럼 생소한 분야의 업무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이

해관계를 지닌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대표로 구성된 플랫폼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하여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2019년 10월 플랫폼협의회를 구성하여 플랫폼 혁신서비스 방안 및 데이터 배당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였다. 2019년 12월 2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데이터 배당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협조요청을 통해, 데이터 유통 수익금의 일부를 데이터 배당에 활용하는 데 동의를 얻어내는 등 경기도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참여기관별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책 실행방안을 수립하였다.

* 1차 협의 : '19.10.22(화), 2차 협의 : '19.12.05(목), 실무협의회 : 격주 추진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과학기술정보통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은 데이터 융합 · 분석 · 유통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공공성 확보, 도민의 데이터 주권확보와 같은 공공재로서의 데이터의 가치 정립에도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 및 활용교육을 추진하여, 이들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유통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도민에게 환원하는 데이터 배당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데이터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최적의 입지를 찾을 수 있도록 분석해주는 "기업입지 추천서비스"와 같은 혁

신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데이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45. 일본 수출규제 신속 대응 및 소부장산업 육성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장 김미화

- 추진배경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신속한 대응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추진내용 : 핵심품목 선정 및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구축, 산학연 연계
- 문제점 및 해결 : 공급기업의 낮은 R&D인프라, 수요-공급기업과 산학연 연계로 자립화 추진
- 평　　가 : 소부장 기술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완성품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하여 왔고, 반도체나 화학 등의 소재·부품에 있어서는 기초·개발연구의 투자와 핵심 인력양성을 소홀히 하여 산업 규모대비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수요기업들은 기술이 축적된 미국이나 일본 회사들에 오랜 기간 의존해 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사용해오던 소재·부품을 바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급기업들의 R&D 능력과 시설 인프라(테스트베드 등)도 부족하여, 단번에 글로벌 시장에 통용되는 기술력을 확보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자체조달률(산업연, '18년) : 반도체(27%), 디스플레이(45%), 기계(61%), 자동차(66%) 등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규제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에 특히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타개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는 신속한 긴급대책을 발표, 소부장산업 근거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연이어 실시하며 기술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돌입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일본 수출규제 신속 대응

2019년 7월 1일 일본이 對韓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사흘 만에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운영하며 긴급자금 마련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하며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기업현장을 순회하면서 중앙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같은 해 9월 도의회에 제출됐던 긴급대책 예산 326억 원이 도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구체적 실행계획들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기업의 개발 수요가 높거나 해외 의존성이 강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R&D 비용 225억원이 편성되어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도왔다. 지원받은 기업 중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 제작업체 한 곳은, 국내 최초로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받아 해외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 소부장 산업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시설투자와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었다. 기업들을 위해 지역신보의 한도를 넘는 최대 30억 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200여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경기도 출자금으로 조성될 소부장 펀드는 정책자금, 민간투자 등과 합쳐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대책 예산 중 마지막 1억 원은 중장기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으로, 경기도형

소부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 소부장산업 육성 기틀 마련

2019년 11월에는 「경기도 소재 · 부품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 · 시행되어, 소부장 산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은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활용하되 전문가 그룹을 통해 검증을 받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관을 단장으로 하고 산 · 학 · 연 전문가 그룹이 소속된 소부장산업 육성 TF팀이 만들어졌다. 연구용역 기관에서 발표한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TF팀의 제안들은 연구용역 내용과 합쳐졌고, 3대 전략, 10대 과제를 통해 소부장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방안으로 완성되었다.

[표 45-1] 경기도 소부장산업 육성 기본계획(안)

비 전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의 거점"	
목 표	
Ⅰ. 對일본 소·부·장 기술자립화 (단기적) Ⅱ.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혁신생태계 구축(중장기적)	
3대 전략	**10개 과제**
1. 핵심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	① 수입국 다변화 및 자금특례 지원 ② 신속한 기술개발(R&D) 지원 ③ 중장기적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④ 수요맞춤형 패키지 지원
2.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구축	⑤ 수요-공급기업 기술협력 지원 ⑥ 경기도 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축 ⑦ 반도체 특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	⑧ 산학연 기술개발(R&D) 지원 ⑨ 산학연 사업화 및 네트워크화 지원 ⑩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지원

기본계획의 최종적인 추진방향은 경기도 소재부품 육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하도록 하였다. 위원들은 도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 · 협회, 연구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에 따라 2년의 임기동안 소부장 계획 및 사업, 정책개선 등에 대해 심의 ·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경기도 소부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담당자, 대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 경기도 경제실장 등은 규제개선 사항과 대중소기업들의 상생협력 및 산학연 연계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한 토론회에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 등 36명은 공동주최로 참여하였고,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사진 45-1] 경기도 소재부품 육성위원

소부장 육성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사진 45-2] 정책토론회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정책토론회(국회)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중소기업들의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해소

소부장기업들은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하며 연구관련 기술협업을 위한 연계나 정보도 부족하다. 이의 해결책으로 경기도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원 내에 수요-공급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였다. 연구사업단은

내부 연구인력과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문제해결사(Problem system)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개발 · 실증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컨설팅하며 인적 · 물적 인프라 부족문제 해소를 돕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보 공유 및 연구협업을 위한 소부장 산업융합협의회에서는 산업융합포럼 등으로 수요-공급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2) 특화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기술력 강화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품목들의 핵심기술은 아직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재부품장비는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중간재에 해당하며,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간 안정적·장기적 거래가 중요하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부장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단지 지정계획을 발표하였고, 경기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용인 클러스터, 기계금속 산업에 시흥 시화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특화단지 지정 시에는 국가로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다른 지역보다 완화된 규제환경 속에서 혁신적 연구개발이 가능해진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소부장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제조업의 약50%를 차지하고 있어, 대외경쟁력의 강화는 해외 의존적 수입구조를 탈피시키고 국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고도화 된 기술력은 해외판로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도 연계될 것이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차세대 핵심기술 투자와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소부장 2.0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맞도록 경기도에서도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R&D 및 투자유치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6. 공공주도형 新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도시정책과 첨단도시기획팀장 유병수
도시정책과 첨단도시조성팀장 김금규
공공택지과 특별지역관리팀장 김영길

- 추진배경 :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통하여 新 성장거점 마련
- 추진내용 : 공공주도형 新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 문제점 및 해결 : 테크노밸리, 플랫폼시티 사업별 현안사항 해결
- 평　　가 : 공공주도형 新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 도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내 기존 도시는 대부분 주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직 · 주의 광역적 분리로 인한 출퇴근 교통 및 환경문제, 기회비용 소모, 개인의 삶의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으며 도내 인구 유입 및 신규창업이 경기 남부에 집중되고 있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구심점 마련이 필요하였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전면 취소와 동시에 지정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소규모 제조공장과 유통업체 등이 무질서하게 산재된 상태로 남아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이전 · 정비하고 지역 제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할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업종 배치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조 · 첨단 · 유통 · 주거 등이 어우러진 융 · 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新 성장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테크노밸리 및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

었다. 테크노밸리 및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은 서울과 인접한 기존 도시의 주거기능에 산업 · 업무 등의 경제활동 및 일자리 기능 도입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 및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익성 위주의 개발이 아닌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공공주도의 사업으로 특화된 사업구상을 통하여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등을 연이어 실시하며 기술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돌입하였다.

[표 46-1] 테크노밸리 및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사업명	특화구상
제3판교 테크노밸리	미래금융(핀테크), AI, 로봇, 공공주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IT기반 AR/VR, 방송 영상, 첨단의료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첨단 섬유·패션, 전기·전자, 조명기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역기반제조업, 첨단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첨단제조업, 지식산업, 복합환승센터, 공공주거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제3판교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인 · 허가 절차와 보상절차를 병행하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각각 인 · 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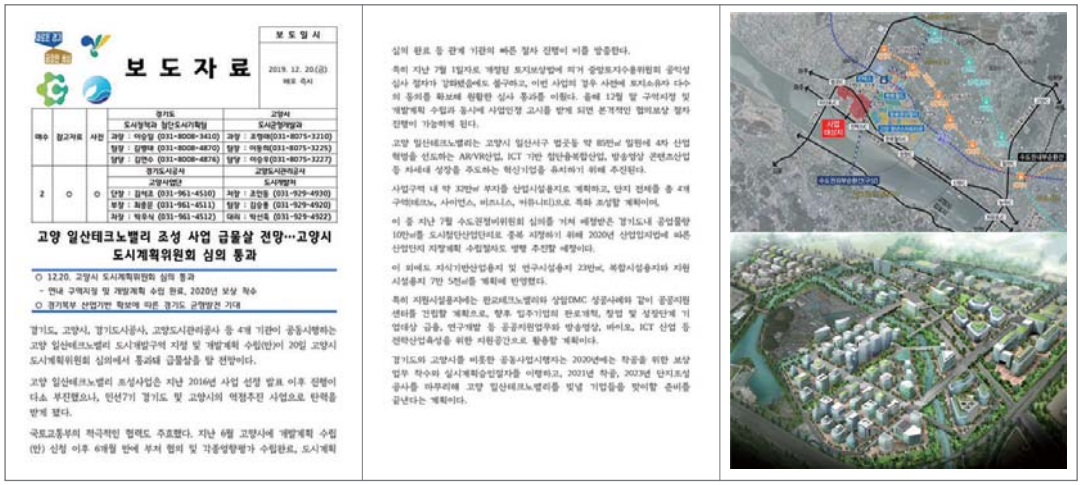
1) 제3판교 테크노밸리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19년 12월 사업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착공을 위하여 2020년 내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2)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5월 도시개발구역 내 일부(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다.

[표 46-2]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19. 12. 20.(금) 배포 즉시

경기도			고양시	
도시정책과 첨단도시기획팀			도시균형개발과	
과장 : 이승일 (031-8008-3410)			과장 : 조정래(031-8075-3210)	
팀장 : 김병태 (031-8008-4870)			팀장 : 이동희(031-8075-3225)	
담당 : 김연아 (031-8008-4876)			담당 : 이승우(031-8075-3227)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사업단			도시개발처	
단장 : 김덕조 (031-961-4510)			처장 : 조인동 (031-929-4930)	
부장 : 최준성 (031-961-4511)			팀장 : 김승훈 (031-929-4920)	
차장 : 박주식 (031-961-4512)			대리 : 박선희 (031-929-4922)	
참고자료	사전	협의	회수	
2	○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금물살 전망…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12.20.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면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완료, 2020년 보상 착수
○ 경기북부 산업거점 확보에 따른 경기도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20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 금물살을 탈 전망이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사업 선정 발표 이후 진행이 다소 부진했으나, 민선7기 경기도 및 고양시의 역점추진 사업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력도 주효했다. 지난 6월 고양시에 개발계획 수립(안) 신청 이후 6개월 만에 부처 협의 및 각종영향평가 수립완료, 도시계획 심의 완료 등 관계 기관의 빠른 절차 진행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된 도지보상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절차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의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 다수의 동의를 확보해 원활한 심사 통과를 이뤘다. 올해 12월 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사업인정 고시를 받게 되면 본격적인 협의보상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탁 85만㎡ 일원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AR/VR산업, ICT 기반 첨단융복합산업,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등 차세대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구역 내 탁 32만㎡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하고, 단지 전체를 총 4개 구역(테크노, 사이언스, 비즈니스, 커뮤니티)으로 특화 조성할 계획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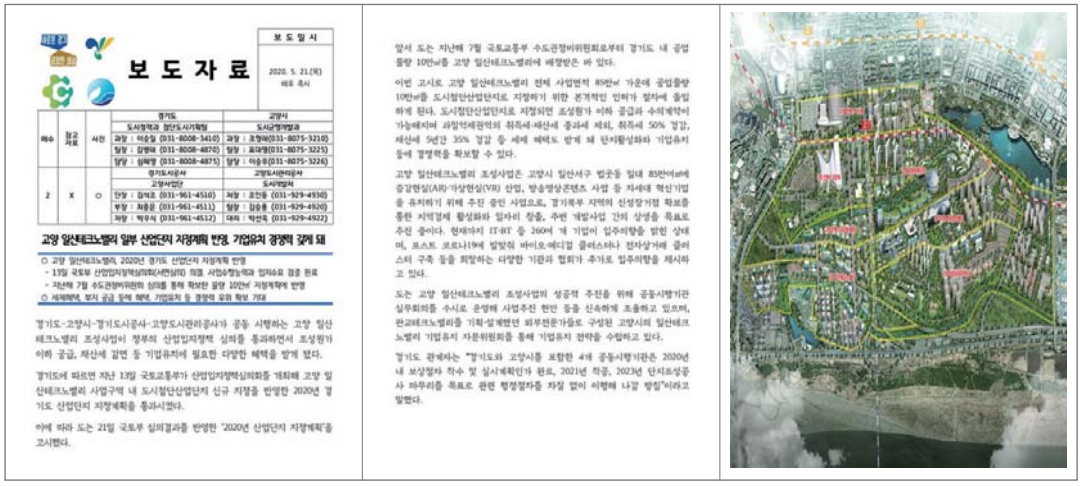
이 중 지난 7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받은 경기도내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기 위해 2020년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절차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식기반산업용지 및 연구시설용지 23만㎡, 복합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7만 5천㎡를 계획해 반영했다.

특히 지원시설용지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상암DMC 성공사례와 같이 공공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향후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창업 및 성장단계 기업대상 금융, 연구개발 등 공공지원업무와 방송영상, 바이오, ICT 산업 등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지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고양시를 비롯한 공동시행자는 2020년에는 착공을 위한 보상업무 착수와 실시계획승인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착공, 2023년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를 빛낼 기업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표 46-3]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일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0. 5. 21.(목) 배포 즉시

경기도			고양시	
도시정책과 첨단도시기획팀			도시균형개발과	
과장 : 이승일 (031-8008-3410)			과장 : 조정래(031-8075-3210)	
팀장 : 김병태 (031-8008-4870)			팀장 : 표대철(031-8075-3221)	
담당 : 심혜영 (031-8008-4875)			담당 : 이승우(031-8075-3226)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사업단			도시개발처	
단장 : 김덕조 (031-961-4510)			처장 : 조인동 (031-929-4930)	
부장 : 최준성 (031-961-4511)			팀장 : 김승훈 (031-929-4920)	
차장 : 박주식 (031-961-4512)			대리 : 박선희 (031-929-4922)	
참고자료	사전	협의	회수	
2	X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일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기업유치 경쟁력 갖게 돼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 13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면심의) 의결, 사업추진가능여부 검토 완료
- 지난해 7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보한 물량 10만㎡ 지정계획에 반영
○ 세제혜택, 부지 공급 등에 혜택, 기업유치 등 경쟁력 우위 확보 기대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 국토부 심의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경기도 내 공업물량 10만㎡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고시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신성장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변 개발사업 간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IT·BT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발맞춰 바이오·에너지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의향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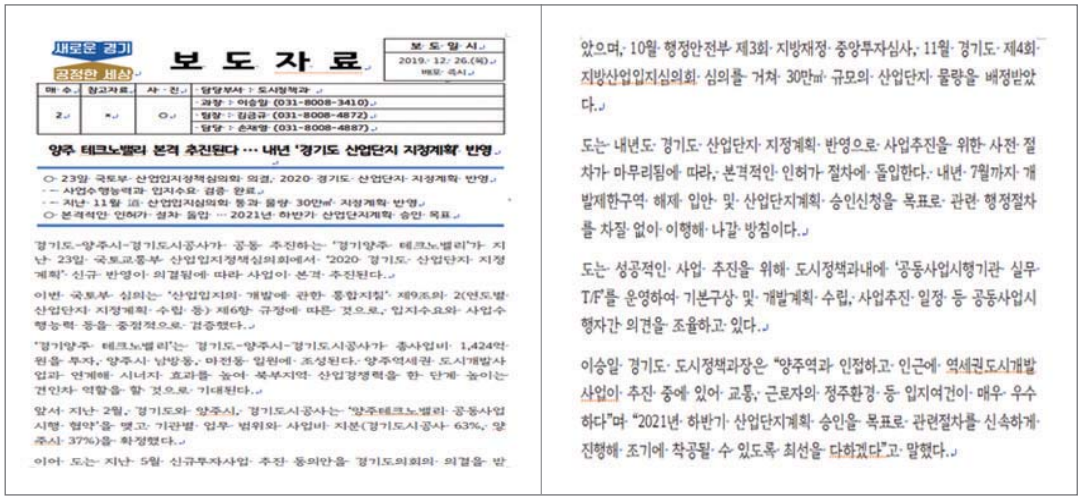
도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시행기관 실무회의를 수시로 운영해 사업추진 현안 등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를 기획·설계했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고양시를 포함한 4개 공동시행기관은 2020년 내 보상절차 착수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2021년 착공, 2023년 단지조성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3)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2019년 10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1월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 고시하였다. 2020년 5월에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표 46-4]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12. 26.(목) 배포 즉시

매수	참고자료	사진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2	-	0	과장 : 이승일 (031-8008-3410)
			팀장 : 김금규 (031-8008-4872)
			담당 : 손재영 (031-8008-4887)

양주 테크노밸리 본격 추진한다 … 내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 23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 사업수행능력과 입지수요 검증 완료
- 지난 11월 과 산업입지심의회 통과 물량 30만㎡ 지정계획 반영

○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 돌입 …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목표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규 반영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424억원을 투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경기도시공사 63%, 양주시 37%)을 확정했다.

이어 도는 지난 5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행정안전부 제3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 경기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도는 내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내에 '공동사업시행기관 실무 T/F'를 운영하여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추진 일정 등 공동사업시행자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승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며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 광명 · 시흥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 유통, 주거단지로 어우러진 복합개발사업으로 4개 단지 모두 사업인정 고시되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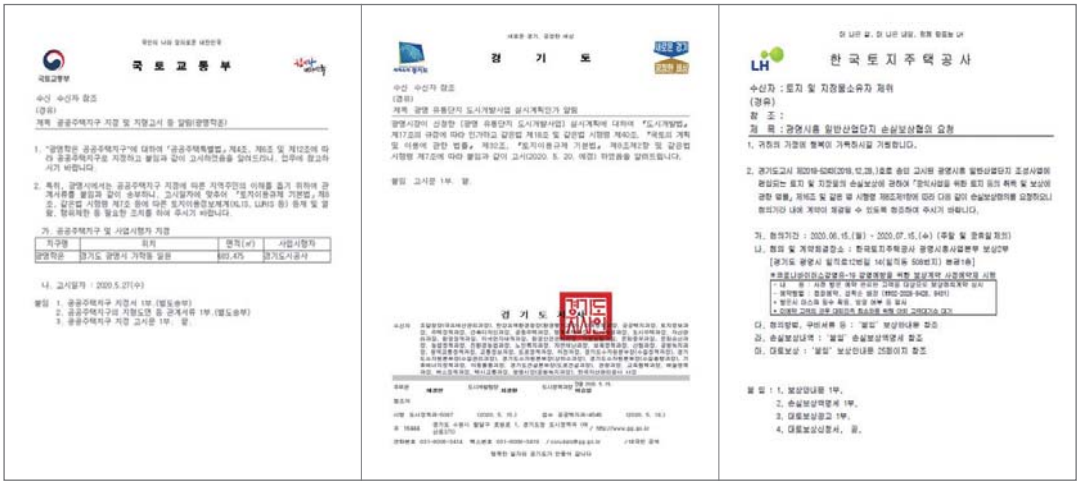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2020년 6월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단지계획 변경과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명 유통단지는 2020년 5월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준비하

고 있으며, 주거단지는 2020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신안산선 역사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신안산선 민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표 46-5] 학온지구 지정, 유통단지 실시계획인가, 일반산업단지 손실보상협의


국 토 교 통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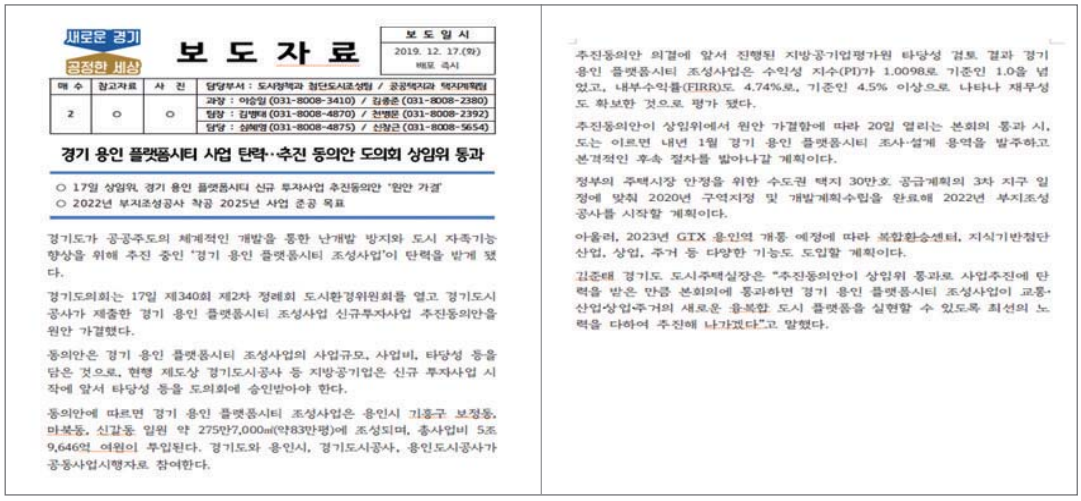
경 기 도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5)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승인권자인 용인시에 신청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표 46-6]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12. 17.(화) 배포 즉시

매수	참고자료	사진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첨단도시조성팀 / 공공택지과 택지계획팀
2	○	○	과장 : 이승일 (031-8008-3410) / 김종준 (031-8008-2380)
			담당 : 김병태 (031-8008-4870) / 천병문 (031-8008-2392)
			담당 : 심혁영 (031-8008-4875) / 신창근 (031-8008-5654)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탄력··추진 동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 17일 상임위,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안 가결'
○ 2022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2025년 사업 준공 목표

경기도가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의 사업규모, 사업비, 타당성 등을 담은 것으로, 현행 제도상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신규 투자사업 시작에 앞서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동의안에 따르면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000㎡(약83만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5조 9,646억 여원이 투입된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추진동의안 의결에 앞서 진행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은 수익성 지수(PI)가 1.0098로 기준인 1.0을 넘었고, 내부수익률(FIRR)도 4.74%로, 기준인 4.5% 이상으로 나타나 재무성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 됐다.

추진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함에 따라 20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 시, 도는 이르면 내년 1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계획의 3차 지구 일정에 맞춰 2020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해 2022년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GTX 용인역 개통 예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지식기반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추진동의안이 상임위 통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은 만큼 본회의에 통과하면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교통·산업상업주거의 새로운 융복합 도시 플랫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과정

테크노밸리 및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하지 못한 현안사항이 발생하지만 공동사업시행기관이 신속하게 논의하고, 관계기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테크노밸리 및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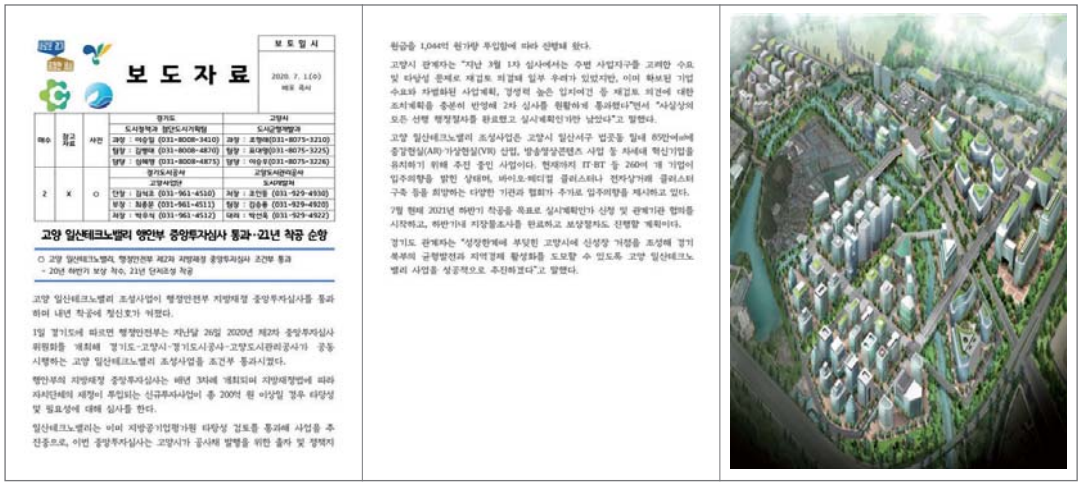
1) 제3판교 테크노밸리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제1, 2판교 테크노밸리의 부족한 공공 주거기능 보완과 산업용지 추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분양주택 세대수가 적어 학생 예측수요 부족에 따른 학교 설립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기도교육청 사전 컨설팅 협의, 지속적인 관할 교육지청 협의 등 적극행정으로 현재 교육환경평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2)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인근 창릉지구 등 주변 개발 사업을 고려한 수요 및 타당성 문제로 2020년 4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되었으나, 재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분히 반영해 2020년 6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미 확보된 기업수요와 차별화된 사업계획이 실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홍보 및 전략수립 중에 있다.

[표 46-7]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7. 1.(수) 배포 즉시

매수	컬러	사진	경기도 도시정책과 / 경기도시공사 개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과장 : 이승일 (031-8008-3410)	과장 : 조정래(031-8075-3210)
			팀장 : 김병태 (031-8008-4870)	팀장 : 표대영(031-8075-3225)
			담당 : 정혜명 (031-8008-4875)	담당 : 이승우(031-8075-3226)
			경기도시공사 고양사업단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재생과
2	X	O	단장 : 김덕호 (031-961-4510)	처장 : 조인동 (031-929-4930)
			부장 : 최종운 (031-961-4511)	팀장 : 김승환 (031-929-4920)
			처장 : 박주덕 (031-961-4512)	대리 : 박민욱 (031-929-4922)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고1년 착공 순항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행정안전부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 20년 6번기 보상 착수, 21년 단계조성 착공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내년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2020년 제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매년 3차례 개최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세정이 투입되는 신규투자사업이 총 200억 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이미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중으로,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고양시가 공사채 발행을 위한 출자 및 정책지

원금을 1,044억 원가량 투입함에 따라 신청돼 왔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심사에서는 수변 사업지구를 고려한 수요 및 타당성 문제로 재검토 의결해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이미 확보된 기업수요와 차별화된 사업계획, 경쟁력 높은 입지여건 등 재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분히 반영해 2차 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했다"면서 "사업상의 모든 선행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심사계획인가만 남았다"고 말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산업, 영상영상콘텐츠 사업 등 지식에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재까지 IT·BT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며, 바이오·헬리캡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의향을 제시하고 있다.

7월 현재 2021년 6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고, 하반기내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장한계에 부딪힌 고양시에 신성장 거점을 조성해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사업대상지는 경기북부 경원선 권역의 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부족한 산업시설용지의 조기 공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등 사업기간 단축 및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다.

4) 광명 · 시흥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시흥 특별 관리지역 내 영세기업의 이전수요 대비 산업용

지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복합용지(지식산업센터)의 입체적 공간 활용 등 이전 수요가 최대한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5)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구역은 GTX-A노선 역세권(용인역) 일원의 개발압력으로 그동안 난개발 우려가 있었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였고, 道내 대표적 베드타운인 용인시에 첨단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이 어우러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조성하여 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공공주도형 新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테크노밸리 및 플랫폼시티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 착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베드타운 지역에 직주근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7. 평택 포승(BIX)지구 진입도로 첫삽

황해청 개발과 포승개발팀장 윤 호

- 추진배경 : 황해경제자유구역(포승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 추진내용 : 국도38호선에서 포승지구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
- 문제점 및 해결 : 서해고속국도 교량 하부 점용허가 지연, 지속적인 협의 추진
- 평　　가 : 교통접근성 향상, 산업·물류 기업 유치 활성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BIX) 지구의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환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61억 원(국비 50%, 도비 50%)을 투입하여, 간선도로 국도38호선에서 평택 포승(BIX) 지구계까지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포승지구의 주요시설을 연계한 도로망을 구축하여, 기업 교통편의를 조기 제공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조기 구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제자유구역 지정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

하여 조성하는 지역이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하여 2008년 지정·고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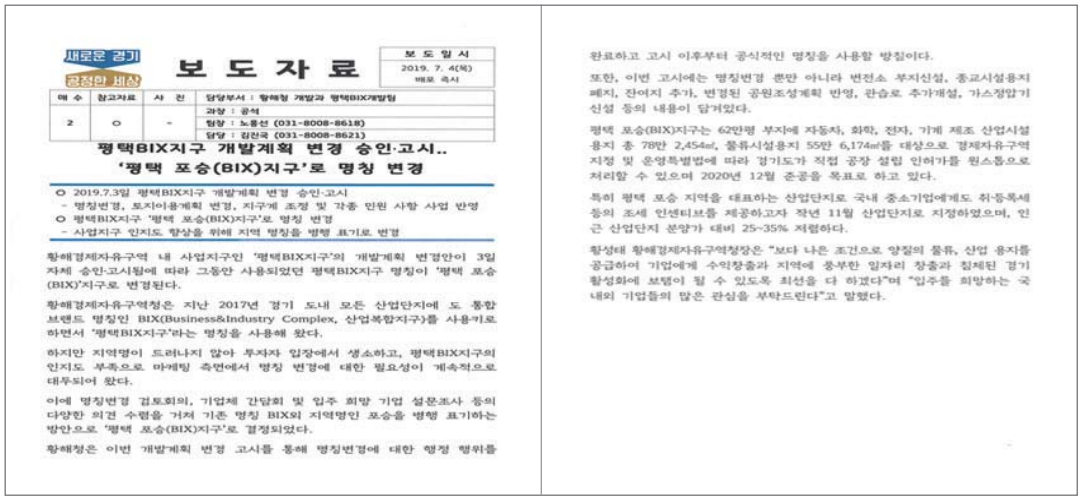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 제1항

2) 평택 포승(BIX)지구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항 및 서해안고속도로 등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환 황해권 첨단기술 산업의 국제협력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이다. 2012년 개발계획변경 고시를 통하여 2008년 지정된 포승지구를 3개 지구로 분리 * 하였으며,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2019년 7월 지구명을 변경하여 현재의 평택 포승(BIX)지구로 확정하였다.

* 포승지구(5.75㎢) → 포승지구(2.07㎢), 현덕지구(2.32㎢), 한중지구(1.06㎢)로 분리

[표 47-1] 평택 포승(BIX)지구 명칭변경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19. 7. 4(목)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황해청 개발과 평택BIX개발팀
			과장 : 공석
2	0	-	팀장 : 노동선 (031-8008-8618)
			담당 : 김진국 (031-8008-8621)

평택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평택 포승(BIX)지구'로 명칭 변경

○ 2019.7.3일 평택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 명칭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지구계 조정 및 각종 인원 사항 사업 반영
○ 평택BIX지구 '평택 포승(BIX)지구'로 명칭 변경
- 사업지구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역 명칭을 명칭 표기로 변경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지구인 '평택BIX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3일 자체 승인·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되었던 평택BIX지구 명칭이 '평택 포승(BIX)'지구로 변경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7년 경기 도내 모든 산업단지에 도 통합 브랜드 명칭인 BIX(Business&Industry Complex, 산업복합지구)를 사용키로 하면서 '평택BIX지구'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역명이 드러나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 생소하고, 평택BIX지구의 인지도 부족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명칭변경 검토회의, 기업체 간담회 및 입주 희망 기업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명칭 BIX와 지역명인 포승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으로 '평택 포승(BIX)지구'로 결정되었다.

황해청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명칭변경에 대한 행정 행위를 완료하고 고시 이후부터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고시에는 명칭변경 뿐만 아니라 변전소 부지신설, 종교시설용지 폐지, 잔여지 추가, 변경된 공원조성계획 반영, 관습로 추가개설, 가스정압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평택 포승(BIX)지구는 62만평 부지에 자동차, 화학, 전자, 기계 제조 산업시설용지 총 78만 2,454㎡, 물류시설용지 55만 6,174㎡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공장 설립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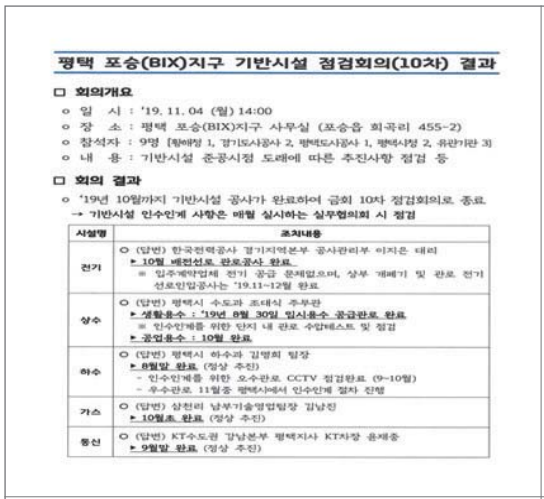
특히 평택 포승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국내 중소기업에게도 취·등록세 등의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작년 11월 산업단지로 지정하였으며,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 대비 25~35% 저렴하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보다 나은 조건으로 양질의 물류, 산업 용지를 공급하여 기업에게 수익창출과 지역에 풍부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5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후 기반시설 설치 및 향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청인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2019년 말 부지조성을 조기 완료한 결과 개발사업 준공(2020년) 전 유치기업의 입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년 말 사업개발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표 47-2]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평택 포승(BIX)지구 기반시설 점검회의(10차) 결과

□ 회의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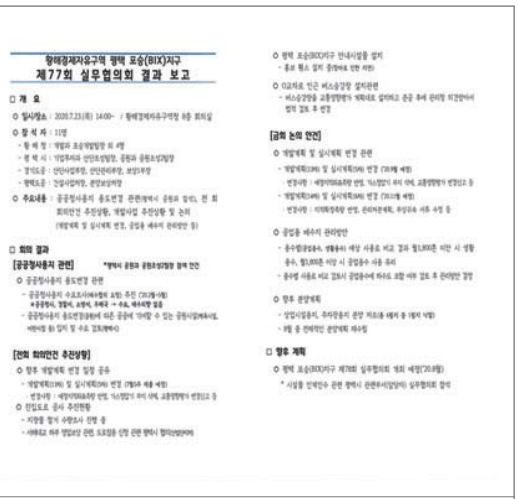
- 일 시 : '19. 11. 04 (월) 14:00
- 장 소 : 평택 포승(BIX)지구 사무실 (포승읍 희곡리 455-2)
- 참석자 : 9명 [항해청 1, 경기도사공사 2, 평택도사공사 1, 평택시청 2, 유관기관 3]
- 내 용 : 기반시설 준공시점 도래에 따른 추진사항 점검 등

□ 회의 결과

- '19년 10월까지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하여 금회 10차 점검회의로 종료
  → 기반시설 인수인계 사항은 매월 실시하는 실무협의회 시 점검

시설명	조치내용
전기	○ (당번)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공사관리부 이지은 대리 ▸ 10월 배전선로 완료공사 완료 ※ 입주예약업체 전기 공급 문제없으며, 상부 개폐기 및 관로 전기 선로인입공사는 '19.11~12월 완료
상수	○ (당번) 평택시 수도과 조대식 주무관 ▸ 생활용수 : '19년 8월 30일 임시용수 공급완료, 완료 ※ 인수인계를 위한 단지 내 관로 수압테스트 및 점검 ▸ 공업용수 : 10월 완료
하수	○ (당번) 평택시 하수과 김영희 팀장 ▸ 8월말 완료 (정상 추진) - 인수인계를 위한 오수관로 CCTV 점검완료 (9~10월) - 우수관로 11월중 평택시에서 인수인계 절차 진행
가스	○ (당번) 삼천리 남부기술영업팀장 김남진 ▸ 10월초 완료 (정상 추진)
통신	○ (당번) KT수도권 강남본부 평택지사 KT차장 윤세중 ▸ 9월말 완료 (정상 추진)

기반시설 점검회의(총10차)



항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제77회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 개 요

- 일시/장소 : 2020.7.23(목) 14:00~ / 항해경제자유구역청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11명
- 주요내용 : 공공청사용지 종도변경 관련(개략도 참조), 본 회의안건 추진상황,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논의

□ 회의 결과

[공공청사용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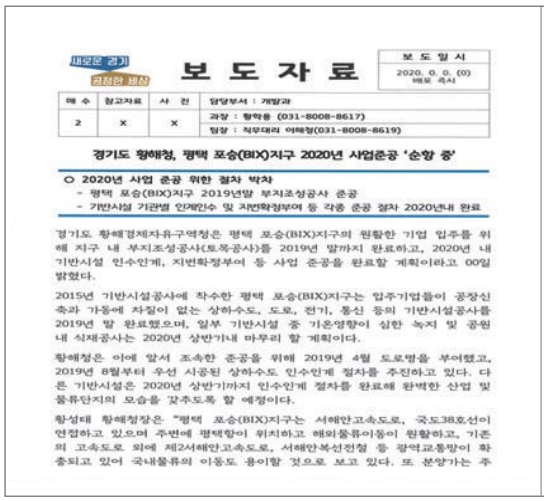
[금회 회의안건 추진상황]

[금회 논의 안건]

□ 향후 계획

실무협의(계속)

[표 47-3] 평택 포승(BIX)지구 부지조성공사 준공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0. 0. (0)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개발과
2	×	×	과장 : 황학용 (031-8008-8617) 팀장 : 직무대리 이해정(031-8008-8619)

경기도 항해청, 평택 포승(BIX)지구 2020년 사업준공 '순항 중'

○ 2020년 사업 준공 위한 절차 박차
- 평택 포승(BIX)지구 2019년말 부지조성공사 준공
- 기반시설 기관별 인계인수 및 지번확정부여 등 각종 준공 절차 2020년내 완료

경기도 항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BIX)지구의 원활한 기업 입주를 위해 지구 내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를 2019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0년 내 기반시설 인수인계, 지번확정부여 등 사업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00일 밝혔다.

2015년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한 평택 포승(BIX)지구는 입주기업들이 공장신축과 가동에 차질이 없는 상하수도, 도로,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공사를 2019년 말 완료했으며, 일부 기반시설 중 기온영향이 심한 녹지 및 공원 내 식재공사는 2020년 상반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항해청은 이에 앞서 조속한 준공을 위해 2019년 4월 도로명을 부여했고, 2019년 8월부터 우선 시공된 상하수도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기반시설은 2020년 상반기까지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 완벽한 산업 및 물류단지의 모습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항성태 항해청장은 "평택 포승(BIX)지구는 서해안고속도로, 국도38호선이 연접하고 있으며 주변에 평택항이 위치하고 해외물류이동이 원활하고, 기존의 고속도로 외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있어 국내물류의 이동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여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이다"며 "2019년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더 많은 기업들이 포승지구에 투자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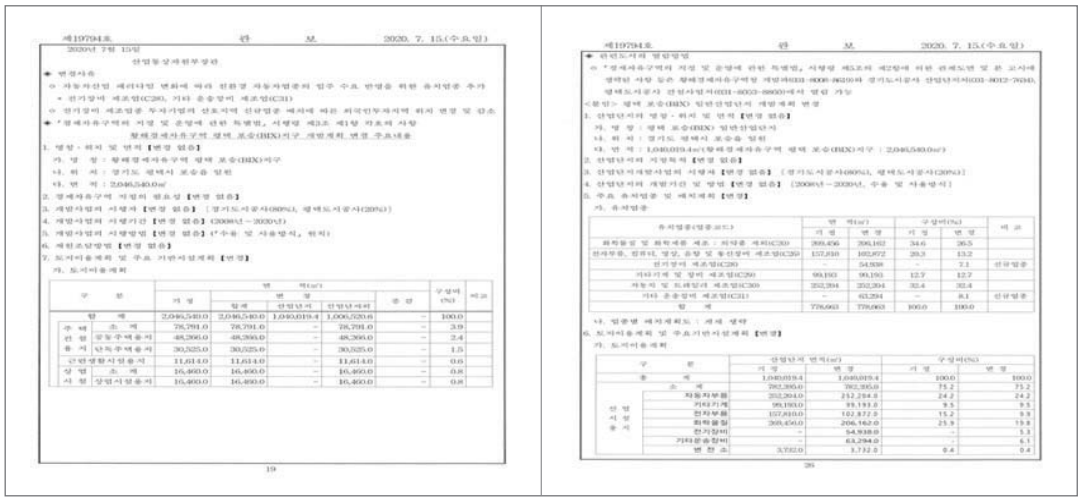
평택 포승(BIX)지구는 서해대교에 인접해 있으며, 산업과 물류용지 등 총 204만9,500㎡ 대지에 자동차·화학·전자·기계 산업시설용지와 물류시설용지, 상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3) 평택 포승(BIX)지구 투자유치

부지조성공사의 완료에 따라 입주 가능한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양적인 성장을 지속

하고 있다. 2019년 6건의 MOU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로 투자성과를 이루고 있다. 또한, 2020년 6월 신규업종 추가로 이차전지 및 전기차 산업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47-4] 평택 포승(BIX)지구 업종추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 평택 포승(BIX)지구 진입도로

평택 포승(BIX)지구 진입도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주간선축과 지구계를 연결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접근성 향상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규정에 따라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017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득하고 편입 토지 취득을 위하여 보상계획공고를 완료하였다. 이후 감정평가, 협의 보상, 토지수용재결을 진행한 결과, 2020

년 4월 토지 소유권 이전의 완료와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였다. 2022년 4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 **사업 개요**

○ 위　치 :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300-5번지 일원

○ 사 업 량 : 연장(L)=0.458km, 폭(B)=27~30m

○ 사업기간 : '16.9월 ~ '22.4월

○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 사 업 비 : 16,073백만 원(국비 50%, 도비 50%)

○ 추진현황

- '17.8.23.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7.10.24. : 실시계획승인 고시
- '17.11.3. :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 '18.11.26. : 손실보상 협의 추진
- '19.7.2. : 수용재결 신청
- '20.3.13. : 수용재결금 지급 및 공탁 완료
- '20.4.6. : 공사 착공
- '22.4. : 공사 준공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진입도로 사업구간 중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은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해대교 하부공간에 먼저 시행되고 있던 "고속도로 고가하부 개발사업(1단계)"의 시행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행 법인이 본 진입도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난한 상태이다.(보상요구 ▶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 시행법인)

고속도로 고가하부 개발사업관 관련한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법률자문 및

관원 질의를 통하여 손실보상의 명확한 근거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제자유구역인 평택 포승(BIX)지구와 간선도로(국도38호선)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 이후, 평택포승 제2일반사업단지와 포승국가산업단지 및 인근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와 만도, 보그워너모스시스템즈, 텔스타홈멜 등 다수의 자동차 부품업체와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평택 포승(BIX)지구가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평택 포승(BIX)지구는 글로벌 물류 중심기지 평택항에 인접하고 있다. 물류산업에 유리한 위치로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경부, 평택-제천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도로 교통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물류허브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48. 코로나19 대응, 전국 최초 항균마스크 생산 지원

특화기업지원과 특화산업지원팀장 유응현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균마스크 생산
- 추진내용 : 항균마스크 생산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국내 항균마스크 수요 감소로 해외 판로개척 지원
- 평　　가 : 마스크 품귀 현상 해결, 섬유기업 경영 안정화 도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해짐에 따라 도내 섬유기업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항균 면 마스크 생산을 보급, 보건용 마스크를 의료인 등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전 세계 마스크 품귀 현상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섬유산업의 틈새시장을 공격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체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도내 섬유업체 협업을 통한 일반(생활) 마스크 생산체계 마련

경기도 내 원사/편직/염색/봉제업체 등 스트림별 워킹그룹(8개 그룹)을 구성하였다. 일반 면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한 항균 원단을 사용하여 항균마스크를 하루 최대 21만매를 생산하고, 천원 내외로 보급하여 마스크 품귀 현상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2) 생산된 마스크 해외 네트워크 연계 판로개척 지원

미주/일본/유럽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 급증에 따라 코트라, GBC, GTC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였다. 샘플을 해외지사 및 무역관에 발송하는 등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섬유산업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231만 달러 계약 체결 성과를 이뤄냈다.

[표 48-1] 기업별 계약 성과내역

기업명	계약금액	기업명	계약금액
강길텍스타일	2,050천 달러(국내/해외)	엘레오스	9천 달러(해외)
서진니트	121천 달러(해외)	삼진	3천 달러(해외)
SK니트	103천 달러(해외)	보경섬유	2천 달러(해외)
대아	26천 달러(해외)	성신섬유	1천 달러(해외)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공급 확대로 일반마스크 수요가 감소되면서 참여한 워킹그룹의 항균 원단 등 제고에 대한 업체의 고민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에서 감염자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 중인 해외로 시야를 넓혀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기 구축된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경기비즈니스센터(GBC) 등 각종 수출지원 기관과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에 마스크 샘플을 전시하였다. 제품 특징과 수출가격, 납기, 최소 주문량 등을 담은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해외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을 주선하여 231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는 전국 니트 업체의 58%가 집중된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중심이다. 그 만큼 항균 원단을 사용한 마스크 생산체계를 다져, 도민들의 건강은 물론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계약이 연기·파기되며 피해를 입고 있는 섬유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수출 판로개척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미주지역 온라인 마케팅 및 물류센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및 해외바이어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3절 누구나 관광 오는 명품 경기 조성

49. 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장 정현석

- 추진배경 : 세계적인 관광 명소 구현
- 추진내용 :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투자 양해각서 체결, 비전선포식 개최, 사업협약 체결, 실무협의회 구성
- 문제점 및 해결 : 2차례의 좌절
- 평　　가 :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실패를 극복하고 서해안 관광벨트 거점으로 조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10년간 두 번의 부침을 겪어, 도민의 정상화 열망과 걱정이 큰 사업이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부지소유자인 수공을 설득하고 정부정책을 반영하였으며 잠재투자 기업을 마케팅하였다.

이 사업은 당초 2007년부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 부지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를 목표로 시작이 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관광호텔, 씨티워크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최고 수준의 테마파크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다. 그러나 2012년 말 부지공급 조건에 대해 사업자와의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설상가상 금융위기까지 겹쳐 실현되지 못했다.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중단된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적극 협력하여 재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개정된 산입법은 부지 공급을 단순 가격 입찰 외에도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법 개정에 탄력을 받아, 경기도 · 화성시 ·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부지 공급 조건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법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기로 하였다. 협력 내용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

2017년 1월에 종료된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재정상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냈다.

[사진 49-2] 테마파크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및 체결서

사업의 동력확보를 위해 2018년 2월 7일 정부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으며, 2018년 8월 23일 국제테마파크 재추진을 위한 공공기관(道, 화성시, 수자원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 투자 양해각서 체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 신세계)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성공적 조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화성 국제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사업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협약내용으로는 경기도와 화성시는 인·허가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지 공급 및 행정지원을,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은 랜드마크시설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고용창출, 상생협력, 공공기여 등이다.

또한, 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인허가를 마치고 2021년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사진 49-2] 테마파크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및 체결서

3) 비전선포식 개최(기재부, 도, 시, 수자원공사, 신세계)

2019년 11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경기도, 신세계는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사진 49-3] 화성국제테마파크 비전선포식

4) 사업협약 체결(수자원공사↔신세계프라퍼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2020년 4월 16일 사업협약을 통하여 개발사업자로 지위가 전환되었다. 사업자 지위를 갖게 된 신세계 프라퍼티 컨소시엄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할 계획이다.

5) 실무협의회

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갖고 있다. 관계기관 간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인 · 허가 과정 단축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USKR(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 사업으로 도민에게 친숙한 사업이다. 지난 2007년 USKR사업으로 첫발을 내딛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되었고, 2012년에는 업자 선정과정에서, 그리고 2017년에는 사업 협약단계에서 무산되었다.

2018년 정부가 사업을 국책과제로 선정하며 다시금 추진력을 얻게 되었고, 경기도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주관이 되어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며 다시금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송산그린시티 내 동측 부지)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로 조성될 예정이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의 주요 테마파크와 경쟁하는 한국의 대표적 테마파크 리조트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은 앞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약 1만 5천 명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조속히 국제테마파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관광단지 지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것이며,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이뤄진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도민의 신뢰에 보답할 것이다.

50.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조사·발굴 및 관광테마골목 육성

관광과 지역특화관광팀장 김선옥

- 추진배경 : 숨은 관광지 발굴, 명소화 및 최근 트렌드 반영한 관광지 개발 필요
- 추진내용 및 성과 : 도내 매력 있는 관광자원 조사 및 발굴, 관광테마골목으로 육성 및 홍보
- 평　　가 : 관광지 범위 확장, 소비자 맞춤형 관광지 확보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에는 가치 있는 명소가 많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 많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국보, 보물 등 시간의 가치를 품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가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주, 공주, 안동 등으로 역사 여행을 떠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우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명소화, 상품화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경기도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집중해 보았다. 최근에는 대규모 관광지 방문 등의 전통적인 관광 이용 패턴이 감소하고 여행 행태가 다변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은 날에도 여행을 일상처럼 즐기고 있었고, SNS를 통해 가고 싶은 곳을 결정하고 가보았던 곳을 공유하고 있었다.

즉, 기존의 대규모 관광지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정취를 품은 골목, 거리, 이색적인 풍경 등을 즐기기 위해 가까운 곳을 간편하게 방문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지역의 주민이 제공하는 로컬 중심, 소비자 중심의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조사·발굴하여 데

이터화 하였다. 이 중에서 우수한 자원은 스토리텔링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홍보하고 더 나아가 매력적인 관광테마 골목으로 육성하여 지역 상권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조사 및 발굴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기명소 100선' 등의 다양한 테마의 관광자원 13,000건과 한국관광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관광자원 1,633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등의 관광자원 9,241건, 도내 31개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 1,455건에 포털사이트,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조사한 관광자원 811건을 포함하여 총 26,140건의 관광자원을 수집·조사하였다.

이러한 자원들 중에서 중복 콘텐츠 16,639건과 관광자원으로 분류가 어렵거나 상품화 가능성이 낮은 콘텐츠(묘역, 비석 등) 6,011건을 제외하고, 역사 유적지, 거리, 체험장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3,490건의 신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였다. 이 자료는 사진·소개글 제작 등의 작업을 거쳐 2020년 9월 말까지 경기관광포털에 게시할 계획이다.

2) 발굴 자원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로 개발 및 홍보

발굴한 관광자원 중에서 상품성, 차별성, 확장성, 지역파급효과 등의 기준으로 101건을 선정하여 이를 '이야기가 있는 골목 투어' 등 7개 테마로 분류하였다. 이 후 '성남 모란시장 기름 골목 이야기' 등 101개 이야기로 아래의 표와 같이 개발하였다. 이 이야기는 E-Book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현재 경기관광포털에 게시되어 있다.

[표 50-1]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발 현황(101개 이야기)

테 마	수록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골목 투어	'성남 모란시장 기름 골목' 등 10개 이야기
건강한 삶을 위한 에코 여행	'고양 대덕생태공원' 등 16개 이야기
함께라서 더 즐거운 나들이 코스	'양평 봄파머스가든' 등 23개 이야기
취향 따라 덕후 여행	'평택 댓골재 양조장' 등 17개 이야기
과거를 넘어 미래로 여행	'연천 그리팅맨' 등 9개 이야기
재미있는 역사 여행	'여주 파사성' 등 12개 이야기
문화예술 나들이	'가평 음악역 1939' 등 14개 이야기

이러한 발굴 및 개발 과정에서 2019년 7~8월에 40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희소성 있는 장소와 일상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4개 부문 총 409개의 작품을 접수하여 최종 34개의 작품을 시상하였다. 또한, 발굴 및 개발한 자원은 홍보영상 촬영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하였고, TV 방송을 연계한 관광자원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다.

[사진 50-1] 홍보 추진 현황

공모전 '대상' 수상 작품

예능인 활용한 홍보 영상

KBS 방송 영상

3)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을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

경기도는 기 발굴한 관광자원을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및 지역협의체를 대상으로 공동 공모를 실시하여 2020년 사업대상지 7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대상지는 해당 지역과의 협의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절차를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테마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7개소 관광테마골목은 도민 참여형 이벤트,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 SNS를 활용한 홍보 등의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골목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50-2] 2020년 사업대상지 공모 선정 현황

연번	시·군	사업대상지	지역협의체	비고
1	수원	행궁동 카페거리	행궁동 지역협의회	
2	안산	다문화 거리(다문화길)	문화세상고리협동조합	
3	평택	신장쇼핑몰 수제패션골목	신장국제관광 도시재생주민협의체	
4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어웨이크교육문화콘텐츠협동조합	
5	이천	도자예술로(회랑길)	예스파크 이천도자예술마을	
6	포천	이동갈비골목	포천이동갈비협의회	
7	양평	청개구리 골목(양평시장길)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사업은 기존의 대형 관광지 중심에서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확장했다는 점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소비자 맞춤형 관광지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거리, 안전한 여행 등 여행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이 좋으면서 매력이 있는 숨은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020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한 관광테마골목은 하반기에 전문가 밀착 컨설팅을 거쳐 활성화 사업을 확정하고 실행하여 매력적인 지역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시·군별 1개 이상의 매력 있는 관광테마골목 보유를 위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50-3] 활성화 사업 추진(예시)

○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골목 브랜드 개발, 차별화된 특화상품 개발, 1:1 식당 컨설팅, 매력 콘텐츠 개발을 위한 그룹 프로그램 운영,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포토존 구성 등
○ **(관광코스 및 테마 프로그램 개발 · 운영)** 골목 투어 프로그램, 수제 패션소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 도자공방 체험 프로그램, 세계문화 체험관 운영, 대학교 연계 패션쇼 개최, 거리 축제, 토크 콘서트 등
○ **(맞춤형 홍보)** 영상지도 제작, 판매 및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등

51.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조성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심혜인

- 추진배경 : 민선7기 공약 165호. '평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경기도'
- 추진내용 : 도내 6개 생태관광거점 선정 및 조성, 생태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문제점 및 해결 :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차등 지원 근거 마련
- 평　　가 : 생태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도내 생태관광 자원은 경기도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은 중앙부처별 또는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주민 주도성, 각 지역의 고유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깊은 고려가 필요하였다.

또한 코로나 이후 관광은 '야외(자연)'에서 '소규모'로 '체험하며 즐기는' 형태의 관광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환경·주민과 상생하는 생태관광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코로나19 확산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위 '국내관광'(56%), 희망 관광유형 1위 '산·바다 등 자연경관'(49%)('2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편 경기도에도 경쟁력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DMZ를 비롯하여 국내 유일하게 둑으로 막히지 않은 한강하구,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한 한탄강 일대 등 관광 잠재력이 있는 생태자원들이 전국의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위치적 특성과 결합하여 생태관광 거점조성사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 방향 수립

경기도는 서해안, DMZ, 동·남부 등지에 산재되어 있는 생태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려 거점화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조성 주제를 정하고 이에 따라 공모를 시행하였다. 서부 권역의 조성 테마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여 해양, 갯벌, 습지, 북부 권역의 조성 테마는 DMZ와 생태, 평화, 동부 및 남부 권역의 조성 테마는 한강, 숲 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권역별 자원의 특성을 살린 조성 방향을 수립하였다.

2)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 거점지역 6개소 선정

경기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생태관광 거점지역을 조성하고자 시군의 추천을 받았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생태관광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 및 공모 계획을 수립 · 시행하였다. 15개소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서 6개소를 선정하고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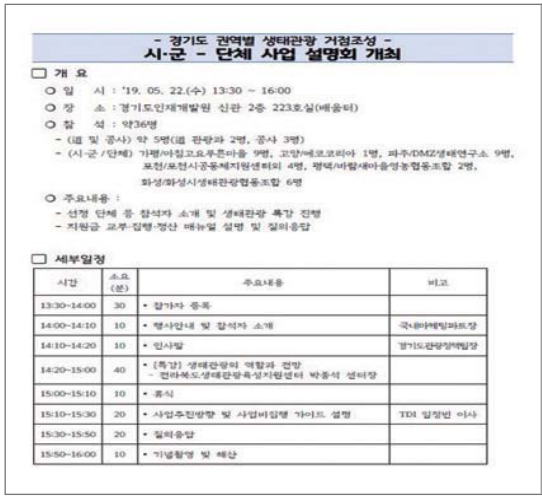
[표 51-1]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6개소 선정 현황

권역	시·군	대상지역	위치도
서부 (서해안)	화성	공룡알화석산지, 우음도	
	평택	소풍정원, 진위천	
북부 (DMZ)	고양	장항습지, 행주산성역사공원	
	파주	오금리습지, 민통선평야, 오두산	
동·남부	포천	한탄강지질공원	
	가평	축령산	

3)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지원금 집행·정산 매뉴얼 배포

2019년 5월 선정된 시 · 군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 · 배포하여 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기하였다. 약 50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생태관광의 역할과 전망' 관련 전문가의 특강,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비 집행 가이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표 51-2] 사업설명회 및 집행매뉴얼



-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조성 -
시·군 - 단체 사업 설명회 개최

□ 개 요

○ 일 시 : '19. 05. 22.(수) 13:30 ~ 16:00

○ 장 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2층 223호실(배움터)

○ 참 석 : 약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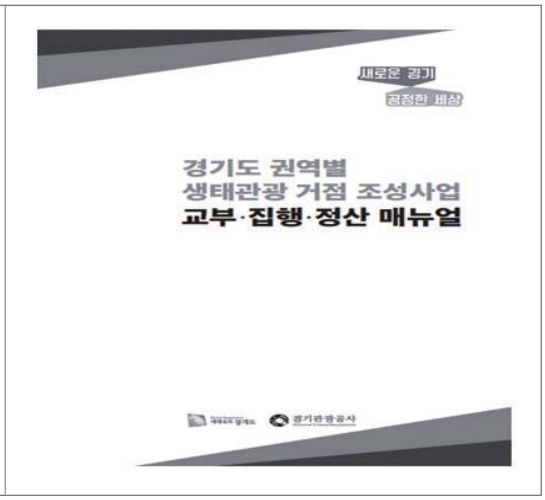
- (도 및 공사) 약 5명(도 관광과 2명, 공사 3명)
- (시·군 /단체) 가평/아침고요루existing마을 9명, 고양/에코리아 1명, 파주/DMZ생태연구소 9명, 포천/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외 4명, 평택/바람새마을영농조합 2명, 화성/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6명

○ 주요내용 :

- 선정 단체 등 참석자 소개 및 생태관광 특강 진행
- 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매뉴얼 설명 및 질의응답

□ 세부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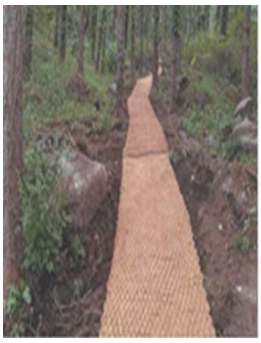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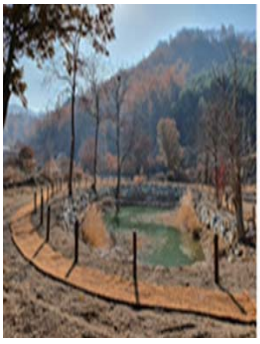
시간	소요(분)	주요내용	비고
13:30~14:00	30	• 참가자 등록	
14:00~14:10	10	• 행사안내 및 참석자 소개	국내마케팅파트장
14:10~14:20	10	• 인사말	경기도관광정책팀장
14:20~15:00	40	• (특강) 생태관광의 역할과 전망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박종석 센터장	
15:00~15:10	10	• 휴식	
15:10~15:30	20	•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비집행 가이드 설명	TDI 임정빈 이사
15:30~15:50	20	• 질의응답	
15:50~16:00	10	• 기념촬영 및 해산	



4) 지역별 탐방시설 조성 및 체험콘텐츠 개발

2019년 선정된 거점지역 6개소를 대상으로 거점별 편의시설 확충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다. 탐방시설 확충 등 시설 사업으로 화성 우음도 에코센터 설치, 고양 행주산성공원 내 버들장어 체험 · 전시장 구축, 파주 민통선 내 교육 · 쉼터용 정자 설치, 가평 축령산 생태관광 둘레길 및 생태산책길 조성 등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 등 콘텐츠 사업으로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 축제 개발 및 시범 운영, 야생화 도감 제작 및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자원 모니터링 등 지역별 성격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사진 51-1] 거점지역별 주요 실적(1차년도)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화성) 에코센터, 깃대종캐릭터</td>
<td>(가평) 숲 체험길, 주민교육</td>
</tr>
<tr>
<td> </td>
<td>  </td>
</tr>
<tr>
<td>(파주) 질오목쉼터, 주민해설사양성</td>
<td>(포천) 연못둘레길, 현무암돌담</td>
</tr>
</table>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성

6개 지역별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 년도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사업의 성과평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간 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공약 사업의 실효적인 완수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 평가와 현장점검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종합평가를 통해 6개 지역별로 피드백을 시행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지역과 보완 조건을 반영하여야 2차 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조건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6개의 각 거점지역들은 성과평가 결과를 2차 년도(2020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1차 년도에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차 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 하반기에도 사업의 최종평가를 시행하여 공약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2. 경기도 내 역사 · 문화 · 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심혜인

- 추진배경 : 민선 7기 공약 293호, '역사 · 문화 · 생태 관광코스 개발'
- 추진내용 : 경기도 그랜드투어 코스 개발, 온 · 오프라인 홍보 시스템 구축 등
- 문제점 및 해결 : 역사 · 문화자원의 관광콘텐츠 개발 및 다채널 경기관광 정보 제공 추진
- 평　　가 : 도민들이 지역에서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여가콘텐츠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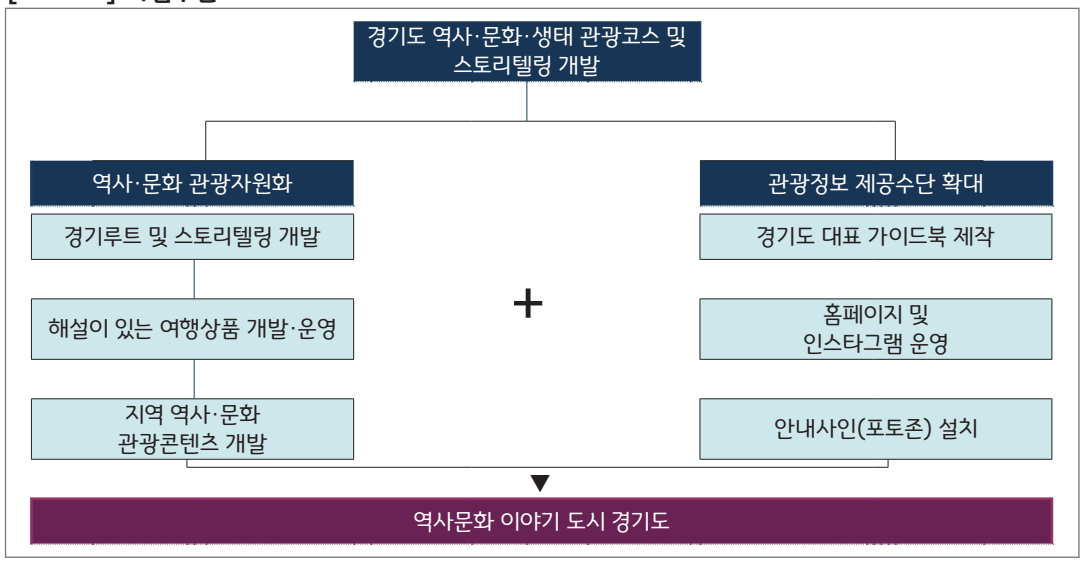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람하고 고유한 역사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관광레저연구, '18.3.).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신(新)시장 창출을 위한 4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역사문화 관광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다. (시·도 관광국장회의, '18. 11.6)

* 4대 중점과제 : 한류공연관광, DMZ평화관광, 스포츠관광, 역사문화관광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경기도는 유서 깊은 역사 · 문화 · 생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온 · 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표 52-1] 사업추진도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구석구석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추진

경기도 천년 역사, 문화, 생태 등 다양한 자원을 발견 · 경험 · 향유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 브랜드화를 위해 경기도 내 197개 주요 관광지를 원형으로 엮은 '경기그랜드투어' 코스를 개발하였다.

* 역사투어 : 수원화성, 융릉 · 건릉, 수도사 등 / 문화투어 : 만화박물관, 미메시스 뮤지엄 등

또한 테마별 26개 관광코스와 162개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테마투어 렛츠경기'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역사 · 문화 유적에 이야기를 입혀 해설사와 함께 경기도의 생생한 흔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959명이 체험관광을 경험하였다.

* '최초의 한국인' 테마 : 연천 전곡리 → 파주 가월리 · 주월리 → 파주출판도시 → 고강 선사유적공원 등

2) 트렌디한 관광정보 제공수단 확대

기존의 유명한 관광지 외에도 속속들이 경기도 관광 포인트를 알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뿐 아니라 가이드북을 발간하였고, 주요 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온라인으로는 2019년 12월 '경기 그랜드투어' 홈페이지(grand.ggtour.or.kr)를 개설하여 경기도의 역사 · 문화 · 생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역사 · 문화 · 자연 · 평화의 각 테마별로 주요 거점과 코스를 안내하였다. 관련 정보는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채널(@GGroute)에도 게시하여, 경기도 관광 현장의 감성과 정보를 모두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변화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콘텐츠 등록 수 473개, 팔로워 17,861명('20.7월 말)인스타그램 콘텐츠 등록 수 473개, 팔로워 17,861명('20.7월 말)

오프라인으로는 두 종류의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경기 그랜드투어'는 도민들이 역사 · 문화 · 생태 주요 명소의 정보를 접하고 방문할 수 있는 코스를 제공하였고, '테마투어 렛츠경기'는 역사와 문화체험의 26가지 테마를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총 정리하여 제작되었다. 가이드북은 해외 대학 도서관뿐 아니라 국내 공공도서관,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하여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비치하였다.

[사진 52-1] 가이드북 사진 및 명사투어

경기그랜드투어

테마투어 렛츠경기

3.1. 운동명사 투어

그 외에도 경기 그랜드투어 주요 지점에 '포토존'을 겸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셀카로 여행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채로운 안내와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콘텐츠 개발 부족

경기도에 널리 퍼져 있는 역사 · 문화 자원, 역사적 이야기, 전통 음식, 체험상품 개발 및 투어 코스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관광자원화 시도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 · 군에 국한되지 않는 테마별, 권역별 종합적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였다.

2) 경기도 관광자원에 대한 낮은 인지도

경기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정보 부족은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국내 관광객에게도 방문 결정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론리플래닛이나 러프가이드 등 유명 글로벌 여행 출판사에서도 경기도에 대한 관광 안내가 없어, 경기도의 천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관광체험 획득 경로가 원천 차단되는 등 인지도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였다.

경기도 관광 포인트에 대한 온라인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홍보, 가이드북 제작 · 배포를 추진하였고 그 외에도 경기도 역사 · 문화자원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웹툰 연재를 기획하고 있다.

라. 평가와 발전방안

- 도내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체험 콘텐츠 지속 발굴 추진

기존 명소별로 개별 홍보되던 다양한 관광 거점을 묶은 '경기 그랜드 투어'와 '테마투어 렛츠경기'는, 방문객들이 역사의 숨결, 자연과 평화 등 직접 천년 역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 해설가가 함께 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재미와 배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개인 관광객은 물론 가족 단위, 기존 관광지에 식상해 하는 젊은 층, 외국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지역에서 또는 경기도 지역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경기도는 향후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 제공을 위해 전문 해설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기도 이야기버스'를 운영하는 등 체험관광의 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53.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진

관광과 마이스관광팀장 최영경

- 추진배경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내용 : 매력 있는, 가고 싶은, 가기 쉬운 경기도 조성
- 문제점 및 해결 : 외부환경 대응강화를 위한 체질개선 및 경기도 브랜드 파워 강화 노력
- 평　　가 : 경기관광 최초 경기방문 외국인 관광객 260만 명 달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7년 3월 중국 당국의 한한령으로 인해 2016년 800만 명에 달하던 중국인 방한객이 2017년 전년도의 51.6%에 불과한 417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이에 기존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하던 방한관광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경기도는 기존의 저가 단체관광을 과감히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매력 있는 경기도, 가고 싶은 경기도, 가기 쉬운 경기도를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반에 걸쳐 체질개선을 추구하였다. 동시에 기존 중국 · 일본에 집중되어 있던 시장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경기관광 최초로 경기방문 외국인 관광객 260만 명을 달성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매력 있는 경기도, 경기도만의 독특한 매력 개발

민선 7기를 맞아 경기도만이 가진 매력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외계

인이 경기도에 방문했다는 콘셉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기여행 홍보영상을 제작, 지자체 홍보영상으로는 드물게 유튜브 채널에서 124만 회 시청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DMZ 자원을 활용하여 평화관광 콘텐츠를 美 NBC에 방영하기도 하였으며, 도내 한류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을 통해 한류 가이드북을 제작, 해외 현지 한국문화원 배포 등을 통해 현지 한류 관심 층에 큰 호응을 얻었다. 한류 가이드북은 현지의 추가 배포 요청에 따라 3만 5천 부를 추가 제작 중이다.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 확산을 위해, 드라마 · 예능 · 영화 등 촬영지원을 통한 미디어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생산 중이다. 시 · 군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 현재 10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 한류 콘텐츠 생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대표 마이스 공모선정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5개 지역특화 마이스를 선정하여 컨설팅 · 예산지원을 통해 향후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마이스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이다.

2) 가고 싶은 경기도, 해외시장 경기관광 홍보

경기도 대표 우수관광상품 선정을 통해 세계유일 평화관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하였다. 새로운 관광형태의 하나로 급부상한 특수목적관광 상품 개발도 새롭게 추진, K-POP 아이돌 따라 하기, 한식 만들기, 청소년 · 노인교류, 유소년 축구 교류 등 상품개발을 완료하였다.

관광 목적지 선정에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해외 대중매체,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미디어 마케팅을 대폭 확대하여 현지 소비계층을 직접 공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 예약의 주류로 자리잡은 OTA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기관광 홍보, 상품판매, 할인쿠폰 제공 등 실제 상품홍보, 판매 창구를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1) 특수목적관광(SIT-Special Interest Tourism) 단순 명소관람 이외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관광. K-POP 아이돌 연습생 과정 참여, 외국어 교육 · 연수, 친선경기 등 스포츠 교류 등 기존의 관광의 범주가 아닌 부분과 기존의 관광을 연계하는 관광형태

2) OTA(Online Travel Agency) 온라인으로 항공권, 입장권, 숙박권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여행사뿐만 아니라 여행후기 공유 플랫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트립어드바이저, 트립닷컴, 클룩 등 글로벌 단위 플랫폼이 대표적

3) 가기 쉬운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방문편의 확충

외국인 관광객의 경기도 방문 시 가장 큰 불편사항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EG투어를 당초 3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교통불편 해소에 큰 기여를 하였다. 안내지도 언어권 확대, 가이드북 개편, 개별관광객 대상 쿠폰북 발행 등을 통해서도 안내체계를 개선하였다.

중국인 및 중화권 관광객의 결제편의 제공을 위해 알리페이 가입 관광지를 당초 1개소에서 30개소로 확충하기도 하였다.

4) 시장다변화, 중국 · 일본 탈피 신흥시장 개척

한한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한 시장다변화 노력은 민선7기에 들어 더욱 확대되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의 경우, 시도별 방문율에서 40% 내외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인도 35%, 인도네시아 30% 내외의 점유율을 기록, 시장다변화의 성과를 기록했다.

도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사 대상 현지프로모션을 추진, 상품개발을 통한 관광객 모객에도 힘쓰고 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

관광산업,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분야는 외부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 미국-북한 간 핵이슈, 한국-일본 간 무역갈등 및 국제정세와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감염병 발생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순지원을 넘어 전산개발, 안내체계 개선, 종사원 역량강화,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관광업계 및 마이스업계의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경기도 브랜드 파워 취약

경기도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본인이 방문한 지역이 경기도인지 알지 못하는 관광객이 30%에 다다를 정도로 경기도에 대한 브랜드 파워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해외 현지 대상으로 경기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마이스 단독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기도 브랜드 파워를 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나 부족한 상황으로, 브랜드 파워를 올리기 위한 노력과 예산확충이 필요하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관광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누구나가 공감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감염병 발생,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관광, 특히 해외관광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관광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유망 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방문하는 서울을 바로 옆에 두고 있으며, 국내 최다 유료관광지를 가지고 있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경기도의 새로운 먹거리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광콘텐츠 개발, 뉴노멀 시대 새로운 홍보마케팅 추진, 수용태세 개선 및 시장다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54.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관광과 지역특화관광팀장 김선옥

- 추진배경 :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제2조)
- 추진내용 :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관광정보체계 구축 및 맞춤형콘텐츠 개발, 경기여행누림 차량 운영
- 평　　가 :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증대를 통한 관광복지 증진 및 도내 관광 활성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 관광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3.7%('19년 경기통계)를 차지하며, 이들의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관광약자를 포함한 도민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기도는 관광약자의 입장에서 만족도 높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모색하여 크게 '관광지 환경 개선, 관광정보체계 구축 및 맞춤형콘텐츠 개발, 장애인 여행지원 차량운영'으로 구성하여 관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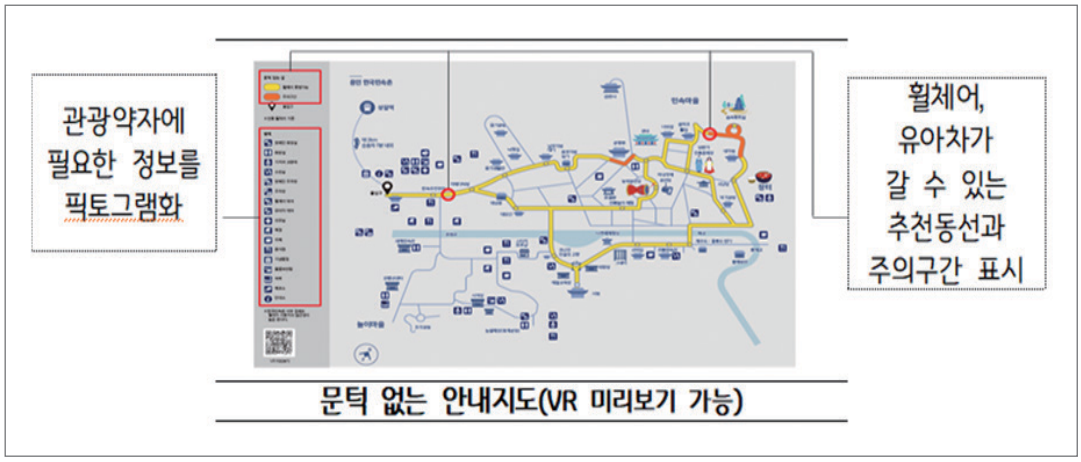
관광약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관광지 환경 조성을 위해 시 · 군 공모를 진행하여 11개 관광지('19년 5개, '20년 6개)의 물리적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다. 주요 내용은 휠체어 이용

자의 이동편리 도모를 위한 보행로 개선 및 가족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조성 분야이며, 관광지 내 관광약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접근성을 확보하고 관광편의를 제공하였다.

2) 관광정보체계 구축 및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도내 주요 관광지 29개소의 관광약자를 위한 필수정보를 수록한 '문턱 없는 경기관광 가이드북'을 5,000부(포켓북 4,500부 별도) 제작·배포하여 관광안내체계를 마련하였다. 보행보조기구로 접근 가능한 경로를 안내하고 관광약자 이용 팁 및 실제 이용 가능한 음식점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제작 全과정에 수요자(관광약자)가 참여하고, 공급자(관광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일반가이드북과 차별화를 두었다.

[표 54-1] 문턱없는 안내지도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가 직접 참가해 점검하는 모니터투어를 실시(13회)한 후 관광지별 만족도조사, 분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추천코스 및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시 · 군 및 관광업계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관광약자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31회)하여 민 · 관 사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3) 장애인 여행지원 차량운영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특장차량('19년: 대형버스 2대, 승합차 4대 → '20년: 대형버스 2대)을 도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및 동반자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관광약자의 도내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9년 총 257회 3,578명의 관광약자가 이용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실행 가능한 사항(여행자보험 가입)은 반영하여 추진하는 등 '도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54-2] 경기여행누림버스 및 이용안내문

<특장차량 : 경기여행누림버스>

<이용 안내문(앞, 뒤면)>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관광약자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관광약자를 위해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며, 관광약자를 직접 응대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를 조성함과 동시에 경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55.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관광과 지역특화관광팀장 김선옥

- 추진배경 : 4차 산업 도래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확산 거점 구축 필요
- 추진내용 : 공예종사자 및 일반도민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기반 조성
- 문제점 및 해결 : 소통 간담회 개최로 사업지지 확보 및 협력 기관 유치
- 평　　가 : 공예산업발전 및 문화 선도할 국내 1호 공예특화메이커스페이스

가. 추진배경 및 개요

4차 산업혁명은 공예문화산업에도 '메이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켰다. 공예의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며 누구나 창작하고 즐길 수 있다는 이 새로운 개념은 지속적으로 침잠하는 도자공예문화산업의 재기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전문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차원(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 등 공예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가운데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에서는 국내1호가 될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한국도자재단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모 사업에 참여하였고, 국내1호 공예 메이커스페이스인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경기도 여주시 소재 여주도자세상 내 조성하게 되었다.

[표 55-1]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 계획 개요 및 공예문화진흥법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18~'22년)」>

○ 5대 추진전략 : ▲공급기반 강화 ▲공예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공예문화 확산
▲유통활성화 및 시장창출 ▲공예정책 및 추진체계 정비

○ 대 표 사 업 : 공예클러스터 조성('19~'22년), 공예주간(매년행사)
(생산+전시+판매+체험 등 융합형 메이커스페이스 4곳 선정 지원)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중앙정부 공모사업추진

경기도는 도자공예분야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 출연기관인 한국도자재단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여주 도자공예 클러스터 구축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과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모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한국도자재단은 한국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KCDF)이 주관한 '공예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19년 7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고, 도자, 유리, 금속, 목공, 디지털공예분야의 육성과 융합이 가능한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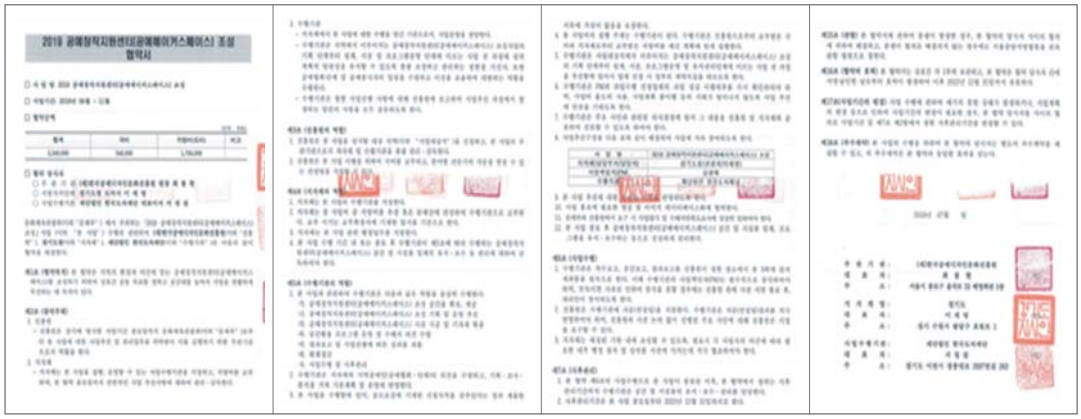
2)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①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공사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은 여주도자세상 내 유휴공간인 물의회랑A동 2,200㎡를 활

용하여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설계 및 조성공사가 진행되었다.

[표 55-2]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협약서



불의고리라는 테마를 배경으로 도자, 유리, 금속공방을 유치하였고 공예인 설문 조사 중 가장 도입 희망 의견이 많았던 목공방과 더불어 4차산업혁명 신 공예시대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공방을 경기공예창작지원 센터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창업지원실, 세미나실, 디지털교육실, 다목적교육실, 촬영지원실 등 공예 원스톱 플랫폼 역할 및 지원을 위한 시설도 함께 갖추었다.

하지만 당초 조성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물의회랑B동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강화된 소방법에 따라 증축, 내진설계 안정성 검사 선행 등 예상치 못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여 함께 설치되지 못하였다.

[표 55-3]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조감도

②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기자재 도입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공예특화메이커스페이스로의 브랜드 가치 확립과 타 메이커스페이스와 차별화를 위해 특화장비로 도자3D프린터 4기를 도입하였으며, 그밖에도 도자 전사프린터, 도자 전기 가마, 유리 블로잉 설비, 일반3D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전문 목공장비, 3D모델링 교육 장비 등을 구축하였다.

[사진 55-1] 도입장비 이미지

3)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개관식 이후 일반 도자, 유리, 목공, 디지털 장비교육 등을 시범 실시하여 차기년도 정상 운영에 대비하였으며,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접근성과 효율적 정보전달 및 회원관리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경기도자비엔날레가 전격 취소됨에 따라 '공예메이커페스타' 역시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여 디지털 공예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공예흐름전'과 1박 2일 동안 도자, 유리, 목공예의 융합을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공예메이커톤'을 청주대학교, 상지대학교, 단국대학교 재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사진 55-2] 개관식, 교육, 행사 이미지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조성 제안에 대한 회의적 여론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공예메이커스페이스)는 공예문화산업 육성 · 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조성 목적을 담고 있다. 때문에 연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 ·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업수행 시너지도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창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예메이커스페이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기존 공방 형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조성 제안에 대한 여론적 지지를 얻기 어려웠고 그 누구보다 지역 공예인과 경제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해당 지자체마저 조성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2) 사업 설명 및 소통 간담회 개최 진행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 간담회를 3월과 7월 총 2회에 걸쳐 추진하였다. 1차 간담회(2019.3.11.)는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과장, 여주시청, 여주시의회, 재단, 도예인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2차 간담회(2019.7.3.)는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여주도자기협동조합 등 지역 기관 관련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 55-3] 소통간담회 사진 자료

(1차) 경기도 - 여주 - 지역도예인 소통 간담회(2019. 3. 11)

(2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사업관련 소통 간담회(2019. 7. 3)

간담회는 사업 운영 방향성, 프로그램, 시설 등의 사업 세부사항과 지역 공예 창작 종사자들과의 연결성 및 활용성에 대한 설명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지자체 및 관련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담았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모사업 협력 참여기관으로서 지자체 및 관련기관을 유치할 수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KCDF 공예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모사업 선정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공예산업 발전과 범국민적 공예 문화 확산'을 목표로 조성된 국내 1호 공예특화메이커스페이스이다. 도자, 금속, 유리, 목공예는 물론, 세라믹 3D 프린터와 같은 디지털 공예장비까지 갖추고 있어 융합 창작을 원하는 전문 공예 종사자와 공예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일반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 조성되었고, 프로그램 또한 수혜자 맞춤형으로 구성하여 '재방문의사 100%, 만족 답변 97%'의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출처 : 2019년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결과보고 / 시범운영 프로그램 참여 설문조사)

또한, 지역 생산시설과 연계한 '시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공예창업지원사업'을 정식 운영 첫해인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예 산업 발전을 선도할 중심기관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센터를 장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공예인과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자를 위한 체류 공간 부재 문제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운영 활성화 및 지리적 한계 극복을 위해 게스트 하우스 조성에 관한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산되어 향후 추진을 위한 새로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행정적,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을 통해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가 공예문화산업발전 및 도민의 공예문화향유를 위한 핵심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56.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공원녹지과 자연공원팀장 홍두선

- 추진배경 : 경기-강원 상생협력사업으로 한탄강 일원 우수한 자연경관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추진내용 :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 문제점 및 해결 : 지질공원의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입증을 위한 논문 필요
- 평　　가 :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협력 사업으로 한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2020년 7월 7일 한탄강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등재하였다. 한탄강의 총면적은 1,165.61㎢이며, 길이는 136㎞(남한 약100㎞)이다. 행정구역은 경기도 포천시 및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질명소는 총 26개소로 포천 10개소, 연천 9개소, 철원 7개소이다.

[표 56-1] 행정구역별 지질명소 면적

행정구역	합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면적(㎢)	1,165.61	493.24	273.65	398.72
비율(%)	100	42.3	23.5	34.2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중앙정부 공모사업추진

[표 56-2]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실적

○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지정	: '15.12.31.
○ 경기·강원 상생협약 체결	: '16.3.7.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학술연구용역 추진(경기)	: '17.2.17.~'18.12.12.
○ (국가지질공원위원회)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 '18.11.22.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제출	: '18.11.30.
○ 유네스코 예비평가 추진(마티나 파스코바,체코)	: '19.6.14.~17.
○ 유네스코 현장평가 추진(장젼핑 중국, 마가렛 네덜란드)	: '19.7.23.~25.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회의결과발표(인증권고)	: '19.9.20.
○ 유네스코 총회(본부:파리)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결정	: '20.7.7

[표 56-2] '18~'19년도 정비사업 실적

○ 포천 · 연천 지질명소 11건 정비 (총 20억 원 소요)

- (포천)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진입로 정비 및 야외 지질체험장 정비 등 5개소
- (연천) 좌상바위 정비 및 백의리층 정비 등 6개소

2) 정비사업 추진 성과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질명소별 탐방로, 전망대, 주차장 조성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방문객 수는 2018년 1,250,206명, 2019년 1,457,598명으로 연 17% 상승하였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지질공원의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논문은 세계지질공원의 필수요건이다. 앞으로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평가 전까지 국제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학술논문(SCI)을 발표하여 한탄강 지역의 우수성을 게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진 56-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전경

포천 멍우리 협곡	연천 재인폭포

라. 평가 및 발전방안

한탄강은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인정받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걸맞은 지질명소 정비사업, 지질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 간의 효율적인 지질공원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한탄강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한탄강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세계지질공원 등재는 관광산업 활성화로 경기북부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경기도가 걸어온 길

제3장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제1절 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

57.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및 시행

안전기획과 안전기획팀장 민완식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도민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 추진내용 :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20.4.9.~7.31. 카드형 방식)
- 문제점 및 해결 : 미신청자 대상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실시, 외국인에게도 확대지급
- 평　　가 : 도민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마중물 역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며,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다.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이 크게 악화하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3월 24일,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였다. 지급대상은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다. 지역화폐,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도민이 원하는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 시 · 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업소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경제방역의 획기적인 시발점이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3월 31일 공포하였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고,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5월4일 공포하였다.

2) 道-시·군-금융기관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협약 체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시장군수협의회장), 손병환 NH농협은행장 등

13개 은행 · 카드사 대표,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 등이 2020년 4월1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협력사항, 지급방법,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 협약' 을 체결하였다.

또한, 경기도 소관 부서 및 협약기관 실무자 등이 4월 7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속협약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운영지침에 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부속협약'을 체결하여 세부적인 운영방향을 정하였다.

협약에 따라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시 · 군에 교부하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리에 필요한 전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신용카드사는 도민이 카드를 별도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농협은행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발급해 각 지점이나 시 · 군 주민센터를 통해 도민에게 전달하고 카드를 관리 ·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 57-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 협약식 사진

3)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운영지침 마련 및 시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 10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운영지침이 마련되었다. 지침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액, 사용매장, 신청기한, 사용기한, 지급방법, 신청주체, 신청방법 등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및 전달체계, 지급 중지 · 환수,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및 기관별 역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Q&A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 및 도 · 시 · 군 간 회의를 실시하고 각 시 · 군 · 읍 · 면 · 동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준비사항 점검 등을 통해 동 지침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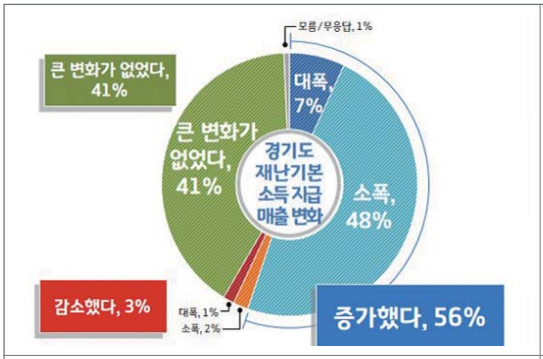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운영지침 중 예산집행 및 정산 매뉴얼을 추가 · 보완하고 지급대상 및 선불카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운영 지침을 개정(2판)하였다. 개정내용은 대리 신청의 범위와, 말소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 마련, 선불카드 충전금액 상향 조정, 선불카드 재발급이 가능토록 변경,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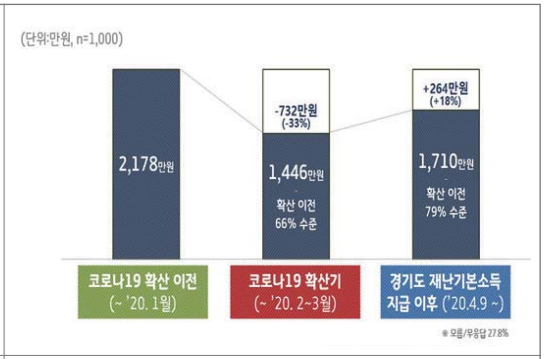
2020년8월5일 신청 종료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총 13,296천 명 중 12,933천 명(97.3%)이 신청하여, 총 2조 115억 원이 지급되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효과와 관련한 설문조사와 카드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양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5월6일부터 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기본소득 효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월매출 변화에 대해 '증가했다'고 답한 가맹점주가 56%로 절반을 상회했다. 월평균 매출 추이도 코로나19 확산 이전 2,178만 원에서 확산기(2~3월)에 1,446만 원으로 34% 감소했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1,710만 원으로 1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출액의 79%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표 57-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조사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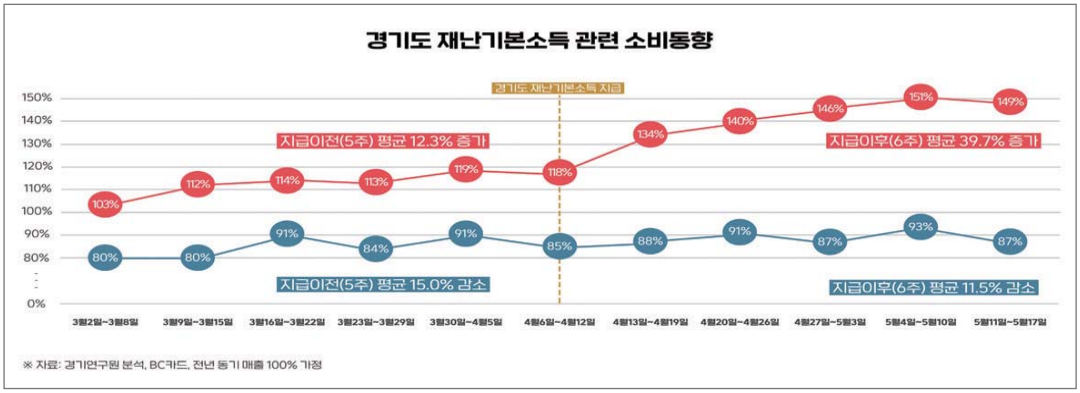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액 추이

또한, 경기연구원의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 매출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6.~4.12.) 118.2%를 시작으로 17주차(4.20.~4.26.) 140%, 20주차(5.11.~5.17.) 149%로 6주 평균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가맹점은 15주차(4.6.~4.12.) 85.0%를 시작으로 20주차(5.11.~5.17.) 87% 등 같은 기간 동안 6주 평균 11.5%가 감소했다. 두 비교군 간의 매출액 증가율 차이가 51.2%p가 난 것이다.

[표 57-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소비 동향



5) 도민입장에서 바라본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에 큰 활기를 주었고 또한 도민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각종 방송사와 언론사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도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지난 5월6일 화성소재 발안만세시장 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생계 위협을 받는 곳이 화훼관련 업종으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재난기본소득은 단비와 같은 존재이었고, 4월9일 이후의 지역 상점의 모습은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손님이 늘어나고 매출 회복세가 눈에 띄게 증가되었다고 한다. 또한, 수원 못골종합시장은 평일 대낮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상인들은 코로나19로 문을 열면서도 적자이던 때를 지나, 이제는 몰려드는 손님에 조금씩 웃음을 찾고 있다고 했다. 김00, 화서시장 상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지역화폐 덕분에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있고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손님들 정말 많이 찾아오시고 효과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 말했다. 온라인에선 지역화폐와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쓰는 사람도, 상인 매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글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범도민적인 재난 극복대책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며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이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가 기대했던 모습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가장 큰 효과라 할 수 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시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모든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 등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2020년8월5일 신청 종료 기준 12,933천 명

(97.3%)이 신청되어 2.7% 정도의 미신청자가 발생되었다. 미신청자 주요 유형은 타시도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 연락두절, 수감자, 타시도 요양소 입소자 등의 경우로 미신청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자발송, 신청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한 31개 시 · 군 읍 · 면 · 동 이 · 통장을 활용한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를 추진하여 미신청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2)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

당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조례제정을 통해 내국인에게 한하여 신속하게 지급 추진하였으나, 외국인 미지급에 대한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기 및 관련법에 따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책무 규정 등 지급근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확대하여 지급 결정 및 조례를 개정('20.5.4.)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지급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매출증가로 지역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계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58.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

문화종무과 문화정책팀장 김도형

- 추진배경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지역화폐 연계방안 마련
- 추진내용 :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 전국최초 추진. 2019년 경기아트센터 시범운영 이후 2020년 16개 문화시설 참여 중
- 문제점 및 해결 : 지역화폐 사용 매뉴얼, 체계적인 역할 분담으로 지역화폐 환급 시스템 마련
- 평　　가 : 문화시설과 지역화폐를 연계하여 도민 문화향유 도모,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 창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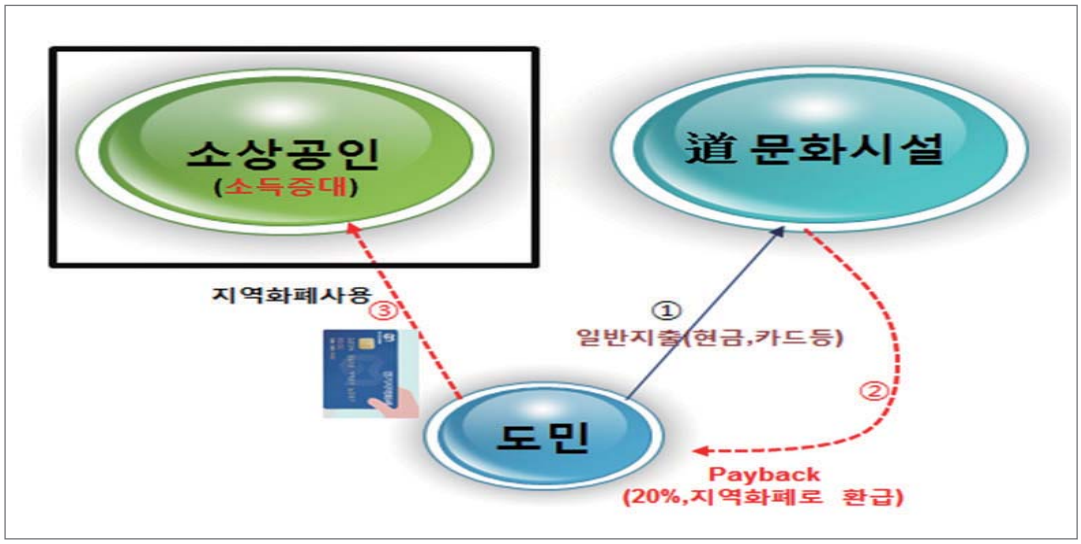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이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2019년 4월 발행을 시작하였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유통 기반조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공연장, 박물관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접목하는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경기도와 공공기관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문화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 설계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는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화폐 유통기반 마련 및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공연장, 박물관 · 미술관,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시설 이용료를 지역화폐로 사용하도록 하고, 도립 시설에 우선 적용 후 31개 시 · 군 소속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골목경제에 유입되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화폐의 당초 목적과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9년 6월 경기도는 공공기관과 머리를 맞대 지역화폐의 당초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화체육관광 시설을 통한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문화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기획하고, 경기아트센터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표 58-1]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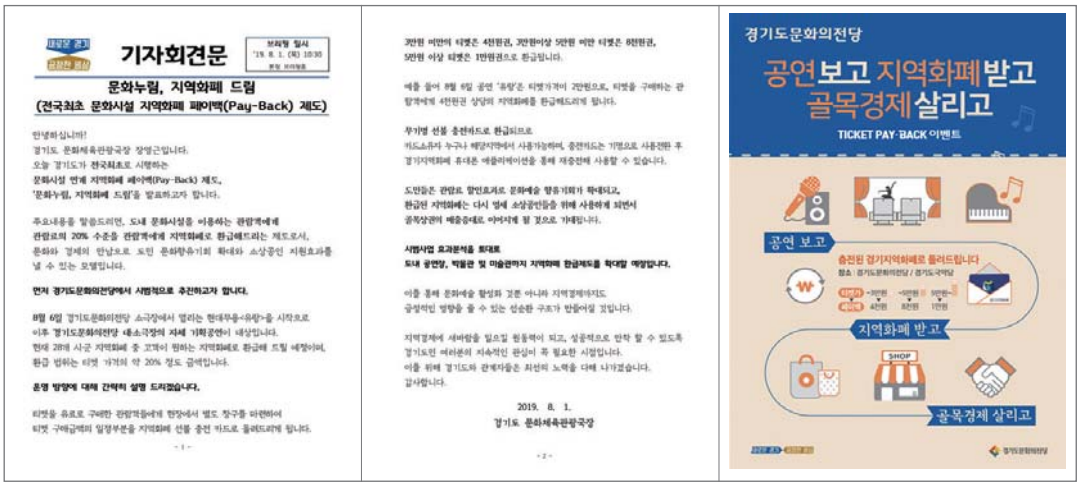


2) 전국최초,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 추진

경기아트센터는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 관람료의 20% 내외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티켓을 유료로 구매한 관람객들에게 별도 창구를 마련하여 티켓 구매 금액의 일정부분을 지역화폐 선불 충전 카드로 현장에서 돌려주는 방식이며, 티켓 구매금액 1만 원부터 3만 원 미만은 4천 원, 3만 원부터 5만 원 미만은 8천 원, 5만 원 이상 관람료는 1만 원을 환급하도록 설계하였다. 2019년 8월 1일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하였고, 2019년 8월 6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현대무용 '유랑'부터 적용하였다. 2019년 12월까지 약 5개월 간 추진한 결과 48회 공연에서 도민 5,567명에게 약 2천 7백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하였다.

[표 58-2]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 정책브리핑



기자회견문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전국최초 문화시설 지역화폐 페이백(Pay-Back) 제도)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보고 지역화폐받고
골목경제살리고

TICKET PAY-BACK 이벤트

공연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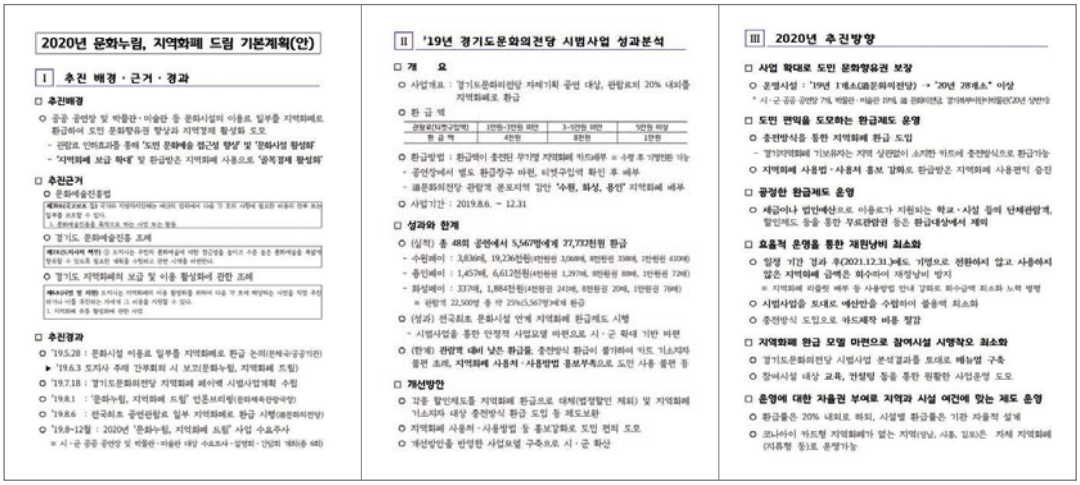
지역화폐 받고

골목경제 살리고

3)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의 시 · 군 확대

경기아트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립한 후, 경기도는 시 · 군 공공 공연장과 공사립 박물관 · 미술관까지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9월 시 · 군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내 박물관 · 미술관 방문 설명, 경기도박물관협회 이사진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경기아트센터를 포함하여 16개의 문화시설이 2020년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0년 9월 현재 참여 문화시설을 추가 공모 중에 있다.

[표 58-3] '2020년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 계획



2020년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기본계획(안)

Ⅰ 추진 배경 · 근거 · 경과

□ 추진배경

○ 공공 공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도민 문화향유권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람료 인하효과를 통해 '도민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 및 '문화시설 활성화'
- '지역화폐 보급 확대' 및 환급받은 지역화폐 사용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19.5.28 :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논의(문체국/공공기관)
▶ '19.6.3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 시 보고(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 '19.7.18 : 경기도문화의전당 지역화폐 페이백 시범사업계획 수립
○ '19.8.1 :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언론브리핑(문화예술관람수당)
○ '19.8.6 : 전국최초 공연관람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시행(문화의전당)
○ '19.8~12월 : 2020년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 수요주사
※ 시·군 공공 공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대상 수요조사 · 설명회 · 간담회 개최(총 6회)

Ⅱ '19년 경기도문화의전당 시범사업 성과분석

□ 개 요

○ 사업개요 : '경기도문화의전당 자체기획 공연 대상, 관람료의 20% 내외를 지역화폐로 환급

○ 환 급 액

관람료(1인당 구입액)	1만원~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환 급 액	4천원	8천원	1만원

○ 환급방법 : 환급액이 충전된 무기명 지역화폐 카드배부 ※ 수령 후 기명전환 가능
- 공연장에서 별도 환급창구 마련, 티켓구입액 확인 후 배부
- 재문화의전당 관람객 분포지역 감안 '수원, 화성, 용인' 지역화폐 배부

○ 사업기간 : 2019.8.6. ~ 12.31

□ 성과와 한계

○ (실적) 총 4회 공연에서 5,567명에게 77,737천원 환급
- 수원페이 : 3,836매, 19,236천원(4천원권 3,068매, 8천원권 338매, 1만원권 410매)
- 용인페이 : 1,457매, 6,613천원(4천원권 1,293매, 8천원권 88매, 1만원권 72매)
- 화성페이 : 337매, 1,884천원(4천원권 241매, 8천원권 20매, 1만원권 76매)
※ 판람객 22,500명 중 약 25%(5,567명)에게 환급

○ (성과) 전국최초 문화시설 연계 지역화폐 환급제도 시행
- 시범사업을 통한 안정적 사업모델 마련으로 시·군 확대 기반 마련

○ (한계) 관람객 대비 낮은 환급율, 충전방식 환급이 불가피이 카드 기소지자 물론 초래, 지역화폐 사용처 · 사용방법 홍보부족으로 도민 사용 불편 등

□ 개선방안

○ 각종 할인제도를 지역화폐 환급으로 대체(법정할인 제외) 및 지역화폐 기소지자 대상 충전방식 환급 도입 등 제도보완

○ 지역화폐 사용처 · 사용방법 등 홍보강화로 도민 편의 도모

○ 개선방안을 반영한 사업모델 구축으로 시 · 군 확산

Ⅲ 2020년 추진방향

□ 사업 확대로 도민 문화향유권 보장

○ 운영시설 : '19년 1개소(콘문화의전당) → '20년 28개소* 이상
* 시·군 공공 공연장 7개, 박물관·미술관 19개, 콘 문화의전당, 경기북부문화예술관(2021 상반기)

□ 도민 편익을 도모하는 환급제도 운영

○ 충전방식을 통한 지역화폐 환급 도입
- '경기지역화폐 기보유자는 지역 상관없이 소지한 카드에 충전방식으로 환급가능

○ 지역화폐 사용법 · 사용처 홍보 강화로 환급받은 지역화폐 사용편익 증진

□ 공정한 환급제도 운영

○ 세금이나 법인예산으로 이용료가 지원되는 학교 · 사설 등에 단체관람객, 할인제도 등을 통한 무료관람권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원낭비 최소화

○ 일정 기간 경과 후(2021.12.31.)에도 기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지역화폐 금액은 화수하여 재정낭비 방지
※ 지역화폐 미충전 배부 등 사용방법 안내 강화로 회수금액 최소화 노력 병행

○ 시범사업을 토대로 예산만을 수립하여 불용액 최소화

○ 충전방식 도입으로 카드제작 비용 절감

□ 지역화폐 환급 모델 마련으로 참여시설 시행착오 최소화

○ 경기도문화의전당 시범사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구축

○ 참여시설 대상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운영 도모

□ 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로 지역과 시설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

○ 환급률은 20% 내외로 하되, 시설별 환급률은 기관 자율적 설계

○ 코나아이 카드형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성남, 시흥, 김포)은 자체 지역화폐 (QR등) 등으로 운영가능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지역화폐는 골목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므로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 대형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환급받은 도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였고, 지역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도민들이 사용법과 사용처를 자주 문의하였다. 고령자 등 스마트기기에 친숙하지 않은 도민들은 환급받은 지역화폐에 추가 충전을 하기 위해 지역화폐 앱을 받아 인증하는 절차 등을 복잡하게 생각하여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였다. 공연 시작 전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도착하여 지역화폐를 환급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점도 불만요소로 제기되었다. 이에 경기아트센터는 지역화폐의 목적, 사용법, 사용처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고, 티켓창구에서도 친절히 설명함으로써 민원에 적극 대응하였다. 환급창구를 분산하고, 직원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화폐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도민들의 만족도도 향상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은 문화시설과 지역화폐를 연계하여 하나의 정책을 통해 세 가지 효과를 창출한다. 첫째,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이용료 인하효과를 통해 도민 문화예술 향유를 도모한다. 둘째, 코로나19로 문화예술 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시설로 관람객을 유인하여 공연장과 박물관 · 미술관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셋째, 환급받은 지역화폐가 골목경제에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기도는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민과 문화시설,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59. 세계최초 경기도 데이터 배당 시행

데이터정책과 데이터기획팀장 권오징

- 추진배경 : 데이터 기반사회로 이전,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시점에 도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 필요
- 추진내용 : 데이터 배당 실시, 국회토론회 개최
- 문제점 및 해결 : 시 · 군 동의 확보와 민원 대응
- 평　　가 : 세계 최초 데이터 주권 실천사례, 도민들의 공감 확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 디지털 데이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로 많은 IT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등 데이터 경제가 활발하다. 세계가 데이터 기반 사회로 전환되고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전 세계가 데이터 기반 사회로 이전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데이터 생산의 중심에 있는 사용자(도민)는 정작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미국 등 해외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정비와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데이터 3법을 개정(8월 5일 시행)하고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 활용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하고 있지만 국민의 데이터 주권과 관련한 정책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가 지난 2월 20일 실시한 데이터 배당은 도민의 데이터 권리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용자가 기여한 데이터를 필요한 기관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발생한 이

익을 되돌려주는 세계최초의 데이터 주권 실천 사례이며, 도민의 데이터 주권 의식을 넓히고 기업들의 공감과 참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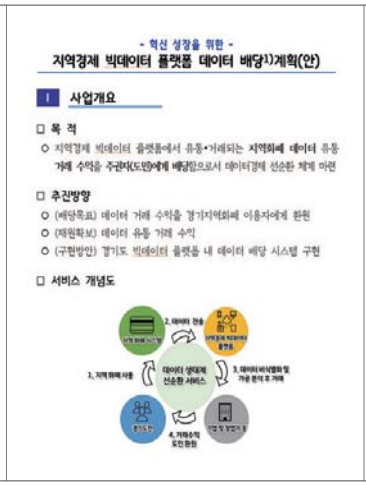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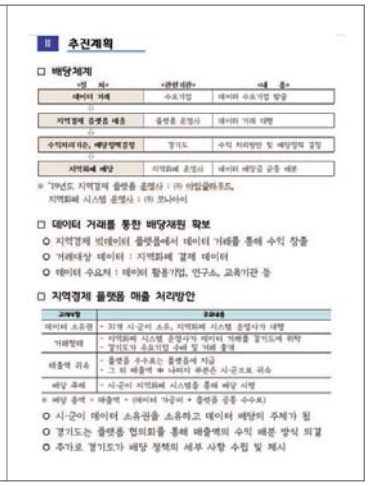
1)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배당계획(안) 수립

경기도는 2019년 12월,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유통, 거래되는 지역화폐 데이터의 유통 거래 수익을 도민에게 배당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데이터 배당계획(안)은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이라는 가치 아래 데이터 경제 시대 도민들의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고민에서 출발했으며, 시 · 군 협의회를 통해 지역화폐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배당절차를 합의하고 지역경제 플랫폼 협의회를 열어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배당을 의결함으로써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표 59-1]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배당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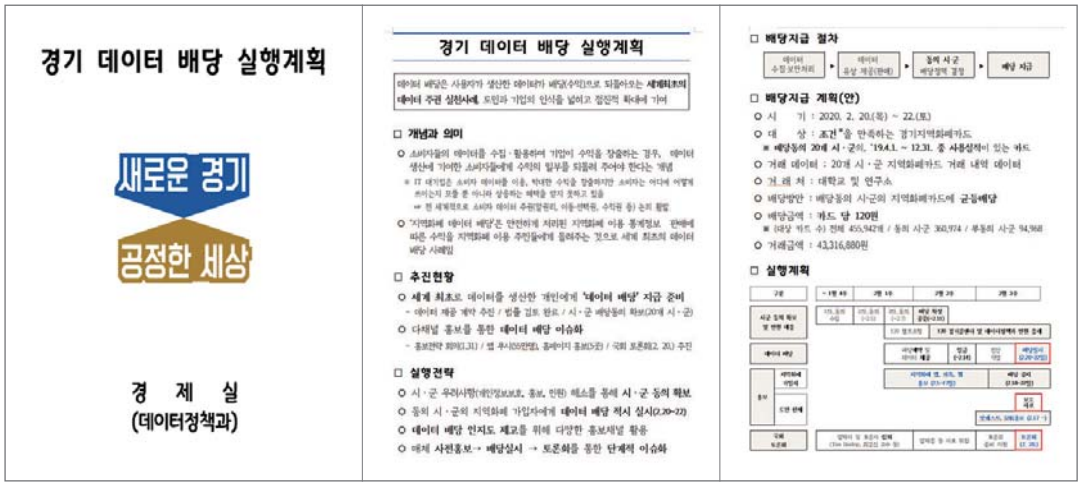
경기도는 이 계획을 통해 시 · 군 협의회에서 31개 시 · 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화폐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과 배당 절차와 분배 방식을 확정한 후 지역 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발생한 수익 중 원가(플랫폼 수수료, 데이터 가공비 등)를 제외한 수익금을 지역화폐 카드를 대상으로 균등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2) 세계최초 '데이터 배당' 실시

경기도가 실시한 데이터 배당은 국내외에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고민해야 했다. 특히 법적으로 데이터 배당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했다.

[표 59-2] 경기 데이터 배당 실행 계획



경기도는 지역화폐 운영 주체인 시 · 군의 동의를 확보해야 했으며, 시 · 군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20개 시 · 군의 동의를 확보하였다. 시 · 군의 동의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은 민원과 홍보에 대한 우려였다. 사례가 없는 데이터 배당의 실시에 따라 도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또한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러한 시 · 군의 우려를 줄이고자 경기도 120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배당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예상 질의응답 매뉴얼을 만들어 콜센터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지역화폐 앱을 활용한 푸시 메시지 발송으로 데이터 배당을 알리고, 도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데이터 배당 홍보 배너

를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 후 지역화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연구소와 대학에 데이터를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했으며, 수익 5천만 원은 플랫폼 이용료 및 데이터 처리 비용 등을 제외하고 20개 시 · 군 36만 개의 카드에 120원씩 배당하기로 최종 확정한 후 2020년 2월 14일 '데이터 배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매일 15만 개의 카드에 배당을 실시하였다.

3)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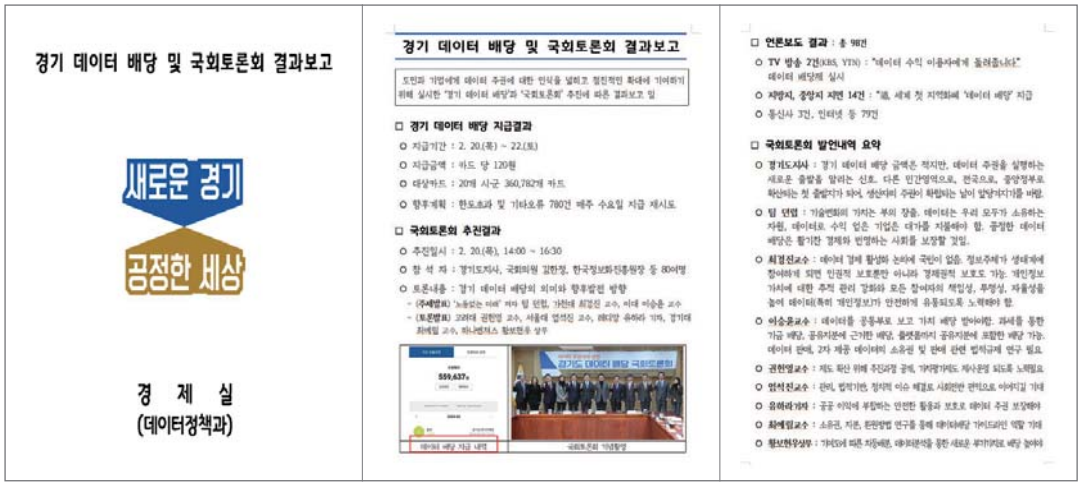
경기도가 실시한 데이터 배당은 돈의 액수보다 사용자가 생산한 데이터가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사례를 통해 데이터 주권에 대한 도민과 기업의 인식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또한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소비자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이러한 목표의 연장선에서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데이터 배당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데이터 주권의 의미와 미래를 논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국회토론회를 배당 첫날인 2월 20일에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김한정,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동없는 미래' 저자인 팀 던럽, 가천대 최경진 교수, 한양대 이승윤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 데이터 배당은 금액은 적지만 데이터 주권을 실행하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다. 생산자의 주권이 확립되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고 했고, 팀 던럽 교수는 영상발제를 통해 "데이터는 우리 모두가 소유하는 자원이며 데이터로 수익을 얻는 기업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공정한 데이터 배당은 활기찬 경제와 번영하는 사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경진 교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논의에 국민이 없다. 정보주체가 생태계에 참여하게 되면 인권적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권적

보호도 가능”하다며 데이터 배당이 갖는 의미와 미래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표 59-3] 경기 데이터 배당 및 국회토론회 결과보고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시·군 동의 확보와 민원대응

데이터 배당에 대한 생소함과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 · 군의 동의 확보가 어려웠다. 우선 실무자들이 민원이 많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시 · 군 담당자들은 데이터 배당이 유사사례가 없는 정책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거래한다는 오해로 민원인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며, 홍보가 부족하여 문의 전화가 폭주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지우고 최대한 많은 시 · 군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용역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문의처인 경기도 콜센터와 데이터정책과를 홍보하고, 경기도 콜센터 직원 교육과 내부 직원의 전화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민원 대응을 준비하였다.

결과적으로 20개 시 · 군의 동의를 확보했으며,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민원의 대부분은 데이터 배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 수급방법과 대상에 대한 문의(90% 이상)였으며 민원 전화와 블로그 등을 분석한 결과,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우려했던 개인정보 거래나 보호에 대한 민원은 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 정책은 데이터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그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개인에게 수익으로 돌려준 세계최초의 사례이며, 데이터 주권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실시한 데이터 배당과 국회토론회 이후 국내에서도 데이터 배당, 데이터 세금 등 국민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 소유권을 민법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도 시도된 바 있다. 이처럼 경기도 데이터 배당은 사회적으로 데이터 주권, 데이터 권리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도 했다.

경기도는 향후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제화는 물론 데이터 배당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과 연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과 개인정보저장소 구축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주권 실천(자기결정권 및 수익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 배당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지방정부와의 연대와 국제적 포럼, 도민이 참여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데이터 생산자인 개인(도민)의 주권이 확립되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60. 경기도민 정책축제 활성화

민관협치과 도민협력팀장 임철호

- 추진배경 : 주민참여의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통과 공감의 장
- 추진내용 : 정책제안 및 토론회, 주요정책 홍보부스 운영 등
- 문제점 및 해결 :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의제플랫폼 구축 및 공론장 활성화
- 평　　가 : 도민의 숙의토론으로 도정분야 및 지역사회 문제점 합리적 해결 추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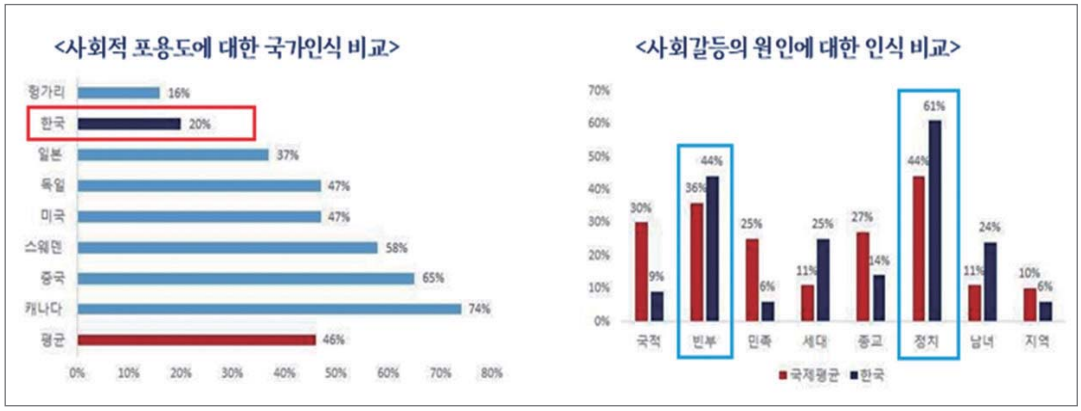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은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관리주의 모형에서 능동적인 협치의 주체로 바라보는 주민협치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는 주민참여의 운영형태를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적 참여로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숙의민주주의를 부각시키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로의 진화를 넘어서 '시민의 토론과 합의'를 중요시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선진모델로는 스웨덴 알메달렌과 덴마트 폴케뫼데 등이 있다. 스웨덴 알메달렌은 1982년 공식 출범하여 좌우, 중도를 포괄하는 다양한 정당의 연설과 전문가 세미나 등이 진행되는 대표적 정치축제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통과 축제의 장이자 지역활성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BBC world survey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사회갈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포용도가 낮은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가진 이러한 사회갈등은 집단 간 소통공간의 부재가 원인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도민참여의 열린마당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진 60-1] 스웨덴 알메달렌 및 덴마크 폴케뫼데

[표 60-1] 사회적 포용도에 대한 국가인식 및 사회갈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비교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도민 직접 참여로 이뤄지는 정책토론축제

경기도는 도민참여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2019년 12월 5일부터6일까지 2일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민선7기 주민참여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온라인 토론의제플랫폼 구축 · 운영을 통해 31개 시 · 군을 아우르는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9년 8월19일부터 9월15일까지 진행된 의제플랫폼을 통해 일반행정, 문화, 교육, 복지 등 34건의 의제가 접수되었고,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내부심의를 거쳐 최종 16개의 토론의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의제별로 사전참가신청 접수를 진행함으로써 도민참여를 확대하였다. 의제별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는 의제관련부서 및 경기도 민관협치위원, 도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60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정책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책 제안사항은 정책제안자 및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단계별로 숙성시켜 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아갈 계획이다.

[사진 60-2] 도민주도 정책토론회 및 청년들의 우리이야기 사진

「도민주도 정책토론회」 개최

청년들의 「우리이야기」

2) 민관협치로 실현되는 숙의민주주의 기반조성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통해 민선7기 도민참여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였다.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비전으로 한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도민주도 네트워크 활성화, 지속가능한 정책참여 확산, 숙의민주주의 기반조성을 3대 전략으로 삼고 계층, 연령, 지역을 아우르는 실질적 도민참여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다.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도민참여의 열린

마당으로써 실질적 도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를 통한 균형 있는 숙의절차를 지속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표 60-2]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경기도 비전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경기도」 비전			
비전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비전	도민주도 네트워크 활성화	지속가능한 정책참여 확산	숙의민주주의 기반조성
핵심 과제	거버넌스 구축 - 시·군별 협의체활성화 - 인식확산 포럼 등 추진 - 도-시·군 간 협력네트워크	도민주도 정책제안 -온라인 의제플랫폼운영 - 정기적 정책수요조사 - 도민의견수렴 참여기제 확대	민관협력 정책구현 - 도민공론장 활성화 - 참여정책 연계활성화 - 토론관련 법·제도 개선

3) 도정전반이 함께 하는 열린 참여의 장 마련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일회성 · 행사성 사업이 아닌 경기도민의 직접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자리로써 행사를 기획하였다.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축제 명칭을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며, 정책축제 추진방향 등 기본계획안 설계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 및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등 민관협치를 통한 정책축제의 기초를 만들어 나갔다.

또한, 도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5개 시 · 군별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제별 도민참여 정책토론회, 도 · 시 · 군 정책체험 · 홍보 혁신관,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본선대회, 도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토론의제별 온라인 여론조사와 더불어 정책축제 현장 참여자 대상으로 공감투표를 실시하는 등 도민과 함께 소통 · 공감하는 정책축제로 기획 · 운영하였다.

[사진 60-3] 토론의제 도민 공감투표 및 정책축제 사진

「토론의제 도민 공감투표」

「도민과 함께 정책축제 포토존」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경기도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참여의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는 도농복합의 31개 시 · 군으로 이뤄진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보의 사각지대 발생 및 참여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때문에 어느 한특정지역에 한정된 정책축제가 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도정전반이 함께 할 수 있는 경기도민 정책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극복방안을 찾았다. 경기도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31개 시 · 군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협조받았으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도내 전광판, 농협 ATM자막, 의왕톨케이트 전광판 및 도내 대학, 단체 등의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정보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부족

덴마크, 스웨덴의 해외 사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도민의 정책

참여 형태는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 숙의민주주의의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 또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8년 9월 발간된 경기연구원 자료에서 보면 현대 행정에서 도민은 고객에서 협치의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도민참여의 강화와 숙의민주주의는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보여진다.

제1회로 치러진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숙의토론방식으로 경기도 및 도민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점이 많았으나 이 또한 민주시민으로 가는 단계별 과정으로 이해되며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형태를 갖춰갈 것으로 기대된다.

3) 돼지열병(ASF)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행사를 하면서 가장 불가항력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중의 하나가 기상변화 및 질병 등일 것이다. 더군다나 1년여 동안 준비해온 행사가 갑자기 취소위기에 처하거나 행사 전반을 다시 기획해야 하는 순간만큼 힘든 순간이또 있을까 싶다. 2019년 9월에 들이닥친 돼지열병은 전국을 충격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다시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사람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게 마련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소통과 공감의 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비대면방식의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4) 토론의제별 부서의 미온적 대응

정책축제를 개최하고 난 후 정책토론회에서 배출 된 제안사항들을 관리하는것은 오롯이 관련부서의 몫으로 남게 마련이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누적된 사업들도 많은데 새

로운 정책제안 사항들은 항상 담당부서에게 무겁게다가갈 수밖에 없다.

또한, 정책제안들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거나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들일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소통을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아가고 있다.

정책제안자들과 담당부서가 함께 하는 토론회의 시간을 마련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서서히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가 소통의 중심에 있으며, 민관협치를 통한 모범사례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찾아온 도민주도의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써 도민참여 숙의토론을 통해 도정분야 및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 동안 이뤄진 도 실국 및 31개 시 · 군과의 연계 운영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의 정책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도민의 직접 참여로 이뤄진 의제발굴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민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다.

경기도는 도정 전반에 거쳐 정책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공론장 활성화 추진및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책축제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다.

“알메달렌이 처음부터 크게 시작했다면 분명 실패했을 것이다. 시민의 참여는 조직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고 스웨덴 알메달렌의 조직위 사무총장인 카린 린드발이 말했던 것처럼 경기도민 정책축제 또한 작지만 도민이 주인인 정책축제로 기획 · 운영할 것이다.

61. 빅데이터 기반 ‘경기 데이터 분석 플랫폼’

데이터정책과 데이터분석팀장 원금동

- 추진배경 :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추진
- 추진내용 : 데이터 생태계(수집 · 정제 · 분석 · 활용) 기반마련 및 서비스 구축
- 문제점 및 해결 : 해당없음
- 평　　가 :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방대한 양의 공공 · 민간 데이터를 경기도민, 도 및 시 · 군 공무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 정제 · 분석 · 활용 체계 조성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공동 활용과 데이터 기반의 행정지원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경기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1개 과제 54건 분석한 결과와 국민연금, 통신사, 카드사 등 3만 여건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포털을 통해 정보제공은 물론, 다양한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분석환경 마련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빅데이터 시스템 및 포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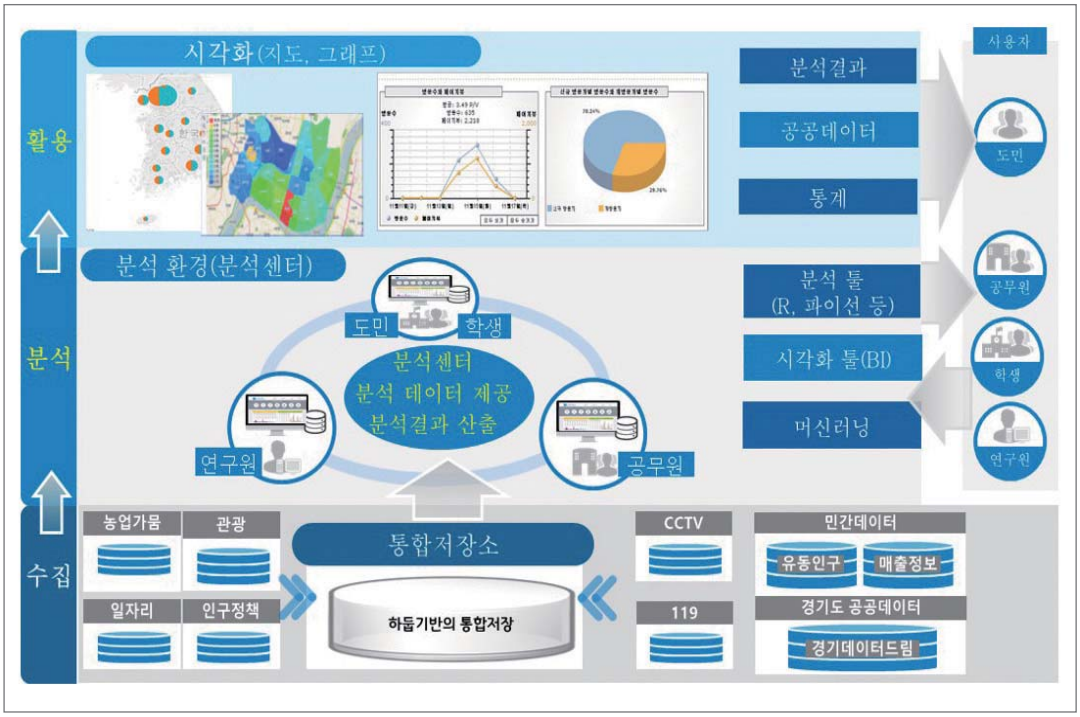
경기도가 그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부재로 체계적 관리와 시스템 기반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난해 9월부터 하드웨어 16종 27식, 관련 소프트웨어는 19종 48식을 도입하고 데이터를 수집, 저장할 수 있는 통합저장소 구축과 분석 활용 데이터 정보 제공, 상시 분석서비스, 분석센터 이용신청, 분석결과 시각화 등을 제공하는 분석포털을 개발하고 올해 4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통합저장소에는 '가족복지보건', '관광문화체육', '교육취업', '교통건설환경', '농림축산해양', '도시주택', '산업경제', '소방재난안전', '조세법무행정' 9개 분류로 나눠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데이터분석포털은 도민이나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분석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관광 코스를 알려주는 축제 · 관광지 분석, 가뭄에 노심초사하는 농민의 시름을 한방에 날려줄 수 있는 가뭄예측 등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나 그래프, 인포그래픽 등 다양하게 시각화된 콘텐츠로 구성,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표 61-1]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념도



2)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 마련

데이터 분석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데이터 분석환경'을 만들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각자의 능력에 적합한 셀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판교에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를 마련하였다.

도민 누구나 이곳을 방문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도구(R, R-Studio, 파이썬, 태블로, Auto ML 등)를 활용할 수 있고,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분석센터 이용신청은 '경기 데이터분석포털(https://insight.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일 최소 3일전에 신청하고 승인 후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다.

[사진 61-1] 경기 데이터 분석센터(분석실)

[사진 61-2] 경기 데이터 분석센터(교육장)

[표 61-2] 경기 데이터 분석센터 신청방법

① 포털접속	② 회원가입	③ 분석센터 이용신청	④ 승인 후 이용가능
경기 데이터분석포털 접속 (https://insight.gg.go.kr)	회원가입 (이메일, 성명 등)	i) 분석센터신청 > 이용신청 페이지 [신청]버튼 클릭 ii) 분석목적, 계획 등 작성 iii) 활용데이터 선택 iv) 이용동의 신청완료	i) 분석센터신청 > 이용신청 목록에서 "승인"여부 확인 ii) "승인" 시 해당일시 데이터 분석센터 방문
상시	상시	이용일 최소3일전	신청일시 센터방문

3) 데이터, 분석환경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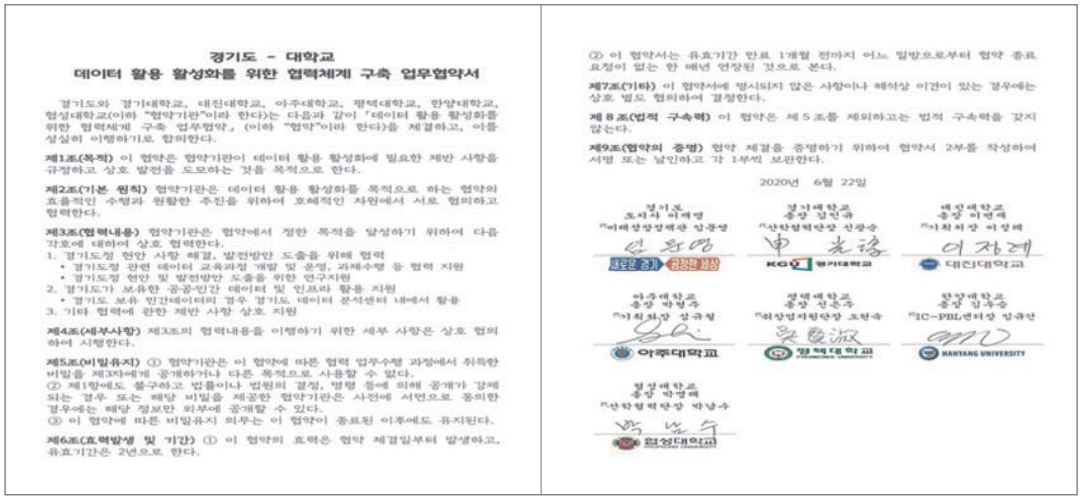
경기도와 대학(경기대, 대진대, 아주대, 평택대, 한양대, 협성대)은 관 · 학 상호 협력체계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 및 학술활동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협력대학에 도가 보유한 각종 공공 · 민간 데이터와 인프라를 제공해 해당 학교 데이터관련 학과 교수 · 학생들이 교육 ·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대학은 경기도가 제공한 데이터와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 교육과정 개발 · 운영, 과제 및 연구수행 등을 추진, 각종 도정 현안사안과 관련한 해결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 동참하는 방식이다.

협약을 통해 경기도 데이터 활용은 물론, 성남 판교 '경기 데이터 분석센터'를 방문하여 분석환경을 적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향후 6개 대학과의 협력성과를 분석한 후, 더 많은 대학 ·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표 61-3] 경기도-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 대학교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서

「경기도와 「경기대학교, 대진대학교, 아주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양대학교, 협성대학교(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협약기관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의 효율적인 수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호혜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제3조(협력내용) 협약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경기도정 현안 사항 해결,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협력
   • 경기도정 관련 데이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과제수행 등 협력 지원
   • 경기도정 현안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지원
2. 경기도가 보유한 공공·민간 데이터 및 인프라 활용 지원
   • 경기도 보유 빅데이터의 경우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활용
3. 기타 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 상호 지원

제4조(세부사항) 제3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비밀유지) ① 협약기관은 이 협약에 따른 협력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 행정 등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또는 해당 비밀을 제공한 협약기관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만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이 협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제6조(효력발생 및 기간)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종료 요청이 없는 한 매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8 조(법적 구속력) 이 협약은 제 5 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9조(협약의 증명)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6월 22일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이재명정책관 업무명"

경기대학교
총장 김진규
"산학협력단장 신광수"

대진대학교
총장 이명재
"기획처장 이정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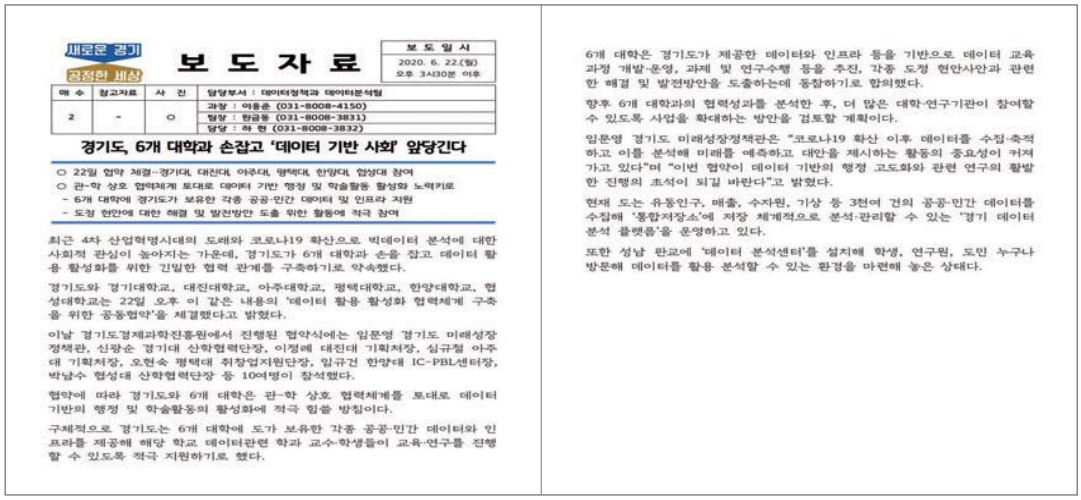
아주대학교
총장 박형주
"기획처장 심규철"

평택대학교
총장 임충주
"하장업지원단장 조정숙"

한양대학교
총장 임주영
"IC-PBL센터장 임규진"

협성대학교
총장 박명래
"산학협력단장 박남수"

[표 61-4] 경기도-대학 간 업무협약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0. 6. 22.(월) 오후 3시30분 이후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데이터분석팀
2	-	O	과장 : 이용준 (031-8008-4150) 팀장 : 한금동 (031-8008-3831) 담당 : 하 현 (031-8008-3832)

경기도, 6개 대학과 손잡고 '데이터 기반 사회' 앞당긴다

○ 22일 협약 체결-경기대, 대진대, 아주대, 평택대, 한양대, 협성대 참여
○ 관-학 상호 협력체계 토대로 데이터 기반 행정 및 학술활동 활성화 도력키로
- 6개 대학에 경기도가 보유한 각종 공공·민간 데이터 및 인프라 지원
- 도정 현안에 대한 해결 및 발전방안 도출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6개 대학과 손을 잡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경기도와 경기대학교, 대진대학교, 아주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양대학교, 협성대학교는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신광순 경기대 산학협력단장, 이정례 대진대 기획처장, 심규철 아주대 기획처장, 오현숙 평택대 취창업지원단장, 임규건 한양대 IC-PBL센터장, 박남수 협성대 산학협력단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6개 대학은 관-학 상호 협력체계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 및 학술활동의 활성화에 적극 힘쓸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6개 대학에 도가 보유한 각종 공공·민간 데이터와 인프라를 제공해 해당 학교 데이터관련 학과 교수·학생들이 교육·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6개 대학은 경기도가 제공한 데이터와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 교육과정 개발·운영, 과제 및 연구수행 등을 추진, 각종 도정 현안사안과 관련한 해결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6개 대학과의 협력성과를 분석한 후, 더 많은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데이터를 수집·축적하고 이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데이터 기반의 행정 고도화와 관련 연구의 활발한 진행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도는 유동인구, 매출, 수자원, 기상 등 3천여 건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저장소'에 저장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경기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남 판교에 '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해 학생, 연구원, 도민 누구나 방문해 데이터를 활용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도는 이번 사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의 이용률 분석이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여부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예측 · 판정하고, 교통 분야 공공버스 신규노선 분석, 관광산업 진흥정책이나 농업 가뭄대응책 수립 지원 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이나 학생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학술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상권분석이나 매출정보, 유동인구와 같은 정보들을 제공해 성공 창업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데이터 기반의 '경기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발전시켜, 정책지원 분석서비스 발굴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관리를 한다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은 물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1-5] 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도화 등 지속관리

62.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운영

비전전략담당관 비전전략팀장 김경수

- 추진배경 : 道 차원의 정책연구 결과물 공유 활성화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필요
- 추진내용 :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시스템 구축
- 문제점 및 해결 : 시 · 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물 공개율 제고
- 평　　가 : 정책연구 결과물 공유를 통한 도민 알 권리 보장 및 행정 투명성 · 신뢰성 확보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운영사업은, 道 차원의 정책연구 결과물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정책연구 결과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 신뢰성의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경기도, 시 · 군 및 경기연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시책 자료 등 경기도 정책연구 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맞춤형 정책연구 결과물 정보 서비스이다.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62-1]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개요

○ 홈페이지 URL : https://www.gplib.kr
○ 데 이 터 현 황 : 약 6,900건 (경기도 및 시·군 3,150건, 공공기관 3,750건)
○ 자 료 분 야 : 지방행정, 지역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10개 분야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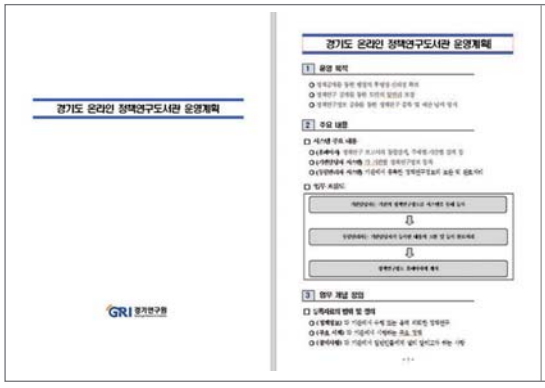
1)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오픈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구축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진행되었다.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도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자료 등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도 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약 6,900여 건의 정책연구 결과물을 등록하여 2019년 10월 30일에 정식 오픈하였다. 이에 도민이 효율적으로 정책연구 정보(원문 포함)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접속이 원활하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후 분기별로 시 · 군 연구용역 입찰공고와 시스템 등록 목록을 대조하는 등 자료등록 현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사진 62-1] 시스템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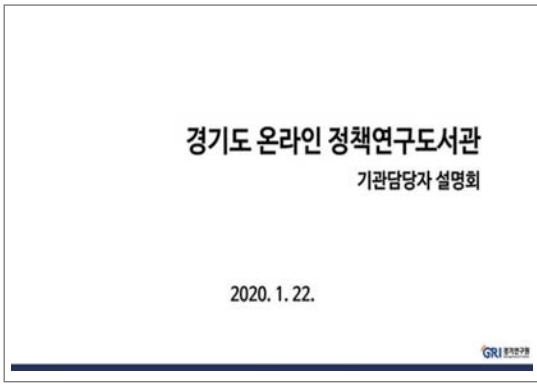


[사진 62-2] 시스템 오픈 기념 현판

2) 경기도, 시·군 및 道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 설명회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0년 1월 22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시 · 군 및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사업에 대한 설명, 홈페이지 및 기관담당자 시스템 시연 및 관련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였다.

[사진 62-3] 기관담당자 설명회 자료



[사진 62-4] 기관담당자 설명회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정책연구 자료 구축의 어려움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시스템 오픈 전 정책연구 자료 제공 서비스를 위하여 정책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 연구 자료와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책연구 자료의 초록뿐만 아니라 원문까지 수천 건에 달하는 자료를 등록해야 했으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1차 정책연구 자료를 완료하였으나 더 많은 양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시 · 군에서 보유 중인 정책연구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도민에게 다양한 정책연구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시 · 군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2) 지속적 독려

정책연구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 시 · 군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경기연구원과 각 지자체, 공공기관 담당자 간에 유선 통화와 분기별 독려 공문을 통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기관에는 직접 찾아가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요청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 · 시군 간 원활한 소통 · 협력 채널을 마련하였다.

도와 경기연구원은 정책연구 결과물 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도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생애주기별 복지망 구축

63. 장애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장 석헌주

- 추진배경 : 공약 337번. 장애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 추진내용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문제점 및 해결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 및 지원확대를 위한 강사교육 운영
- 평　　가 : 우수하고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 개발로 장애인 평생교육 수준 제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수요자 맞춤형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단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제한적이고 프로그램 개발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학습자 각각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함께 교육을 하거나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답습해서 운영하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장애유형별 기초문해 교육, 일상생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재, 지침서를 필요한 곳에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은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한계를 지닌다. 지침서는 현장에서 강사가 적용하기에는 이론적인 내용이 많고, 국립특수교육원

에서 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지침서에 따라 교육을 시범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경기도에서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337번, 장애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따라 자체적으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 군에 보급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주제선정위원회, 통합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한 결과, 발달장애인용 3종, 기타 주제별 3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전문교육기관을 찾는 데 난항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9월 착수보고회에서는 장애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 6종(발달장애인 통합 도예, 지적장애인 라인댄스, 자폐성장애인 합창, 시각장애인 무용, 청각장애인 수어문학, 지체 · 뇌병변장애인 사진)을 선정하였다. 고양, 부천, 안산, 시흥 4개 시 · 군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단체를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시범운영을 진행하였다. 시범운영은 프로그램별 10명 이내의 장애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12차시 내 수업을 운영하며 연구진, 경기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12월에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강사와 학습자의 현장 경험담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로써 경기도는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지침서는 전 시 · 군에 배포하고 2019년 연말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각 교육기관, 단체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에 따라 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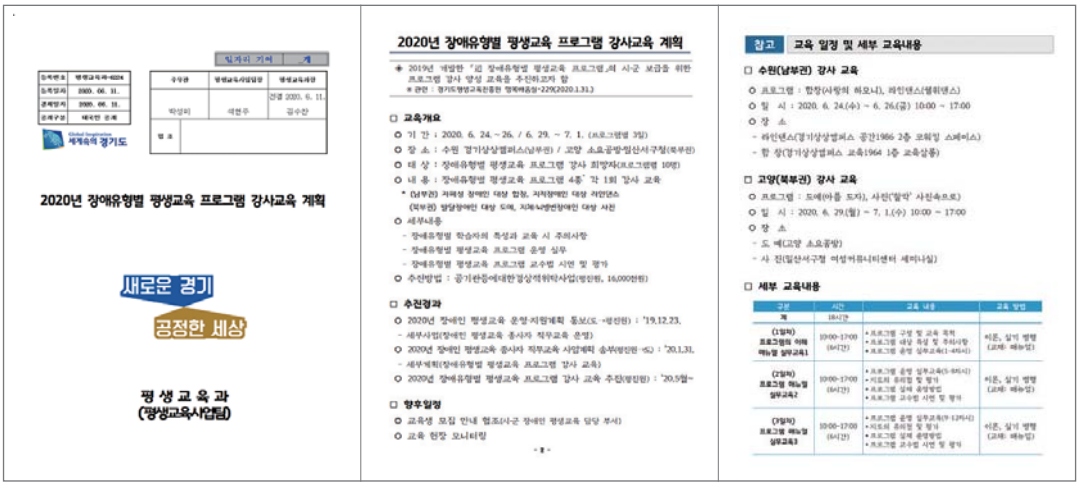
시 · 군에서 2020년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진 63-1] 경기도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6종 지침서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경기도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침서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현장의 강사가 따라 운영하기 쉽게 제작하였다. 그러나 일선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도예, 사진 촬영, 무용 등 관련 재능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강사들은 많지만 이들이 특정 장애유형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침서만 읽고 장애인 학습자를 이해하고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63-1] 경기도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교육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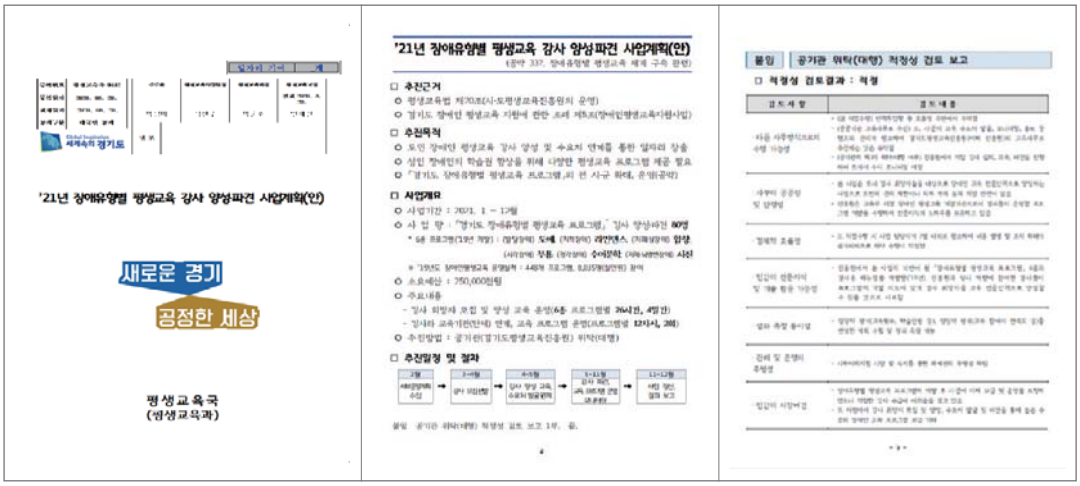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는 경기도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강사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사들을 양성하는 강사 교육을 시범적으로 수행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의 요구가 가장 많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장애유형별로 개발하고, 문화예술교육 전문가와 특수교육 전문가의 협력,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의 시범운영에 따른 활용도 제고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경기도는 본 프로그램의 전 시 · 군 확대 운영을 위해서 2021년도부터는 프로그램별 강사를 양성하고, 강사와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단체의 연계, 파견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표 63-2] 경기도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강사 양성·파견 사업계획(안)



64.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보듬' 개소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김경민

- 추진배경 : 민선7기 공약 123번.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인프라 확대
- 추진내용 : 학대피해 장애인의 상담 및 심리·정서 치료 등 초기대응 강화
- 문제점 및 해결 :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대 피해 입소자에 대한 대책(사례관리, 전담인력 등)
- 평　　가 : 피해 장애인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기거주시설 등에 분리한다. 그런데, 이후 학대로 인한 불안 및 우울 등의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없이 거주시설에 복귀시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없이 기존 시설에 거주할 경우 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받은 행동을 모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바, 학대피해 장애인의 응급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제공 등을 위해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

경기도 거주 장애인은 약 56만 명으로 전국 등록 장애인의 21%가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313개소(전국대비 23.6%)로 인권침해 발생의 잠재 위험군이 존재하고 있으나, 학대 피해 후 심리안정 및 일상생활 복귀 등 회복지원을 위한 쉼터는 경기도 내 1개소(경기북부 포천, 정원4명)만 운영되고 있었다.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응급대응 골든타임을 놓쳐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북부 쉼터는 포천에 위치하여 접근성 문제가 컸다. 시설규모도 적어 이용정원(4명)이 상시 초과됐고, 여성만 이용이 가능하였다. 또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내 부설로 운영

되어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의 원칙인 비밀보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또한 쉼터 부족으로 응급보호 대상 피해 장애인이 학대 발생 현장에서 생활을 지속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지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회복 과정 없이 일시보호나 다른 거주시설로 단순히 거주공간만을 옮겨 학대피해 장애인이 학대가해자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 장애인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피해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경기도형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피해장애인 쉼터 '보듬' 개소

학대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발생 시 실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19년 5월 보건복지부 쉼터 추가설치 공모사업에 신청 · 선정되었다. 수탁기관 선정계획에 의거 2019년 11월 29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20년 2월 6일 수원시 도심 권역에 경기남부 피해 장애인 쉼터 '보듬'을 추가 개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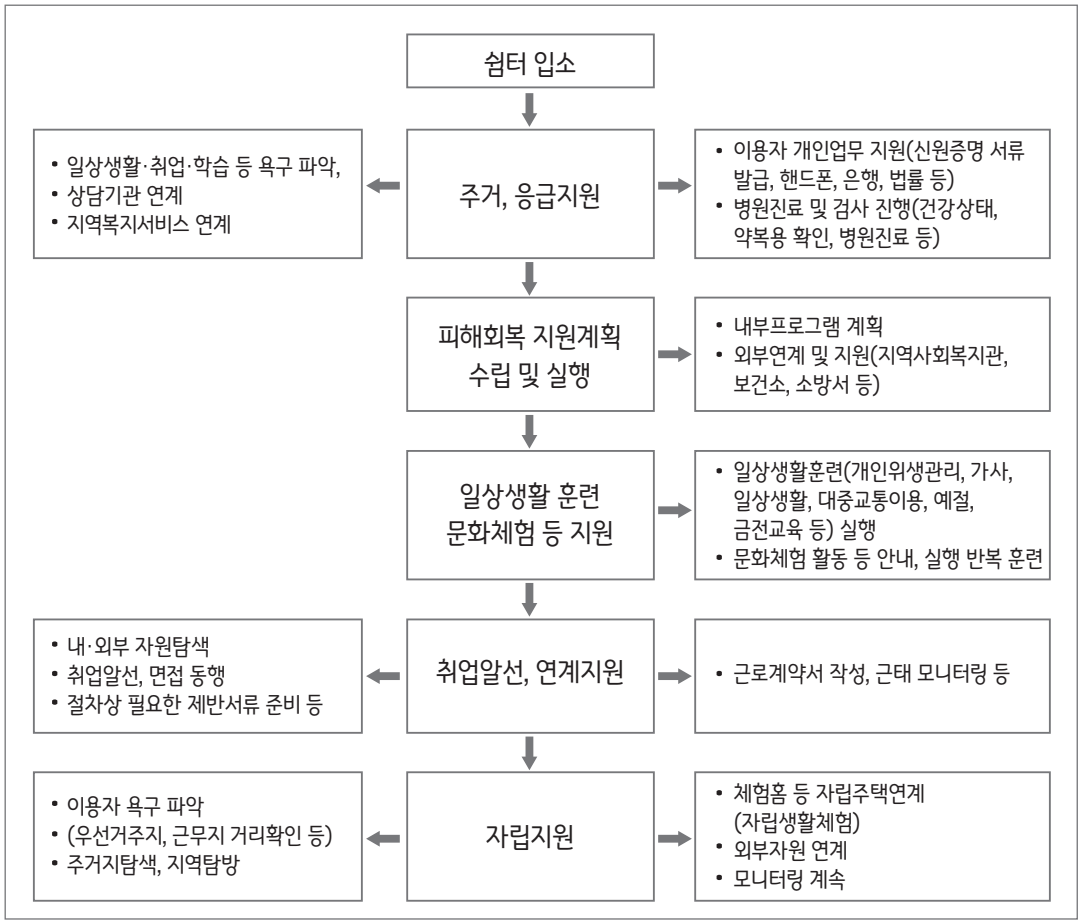
신규 설치 쉼터는 LH공사 매입 임대 주택을 확보하여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보호에서 자립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입소 시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찰 등과 협조하여 사전 사례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피해당사자 보호 및 입소지원을 한다.

쉼터 생활 과정에서는 전문적 인력을 배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일상 회복, 피해회복 프로그램에서 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 학대전파 차단 및 인권증진,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등 개별적 욕구를 깊이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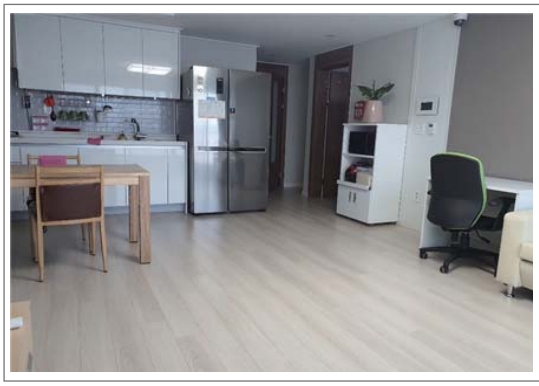
[표 64-1] 쉼터 이용절차

이용절차		
	입소의뢰	긴급지원 1~4주
	▼	▼
	Intake : 욕구사정	사례판정 4주차
	▼	▼
	긴급지원/위기개입 의료, 심리, 법률, 주거, 정서	자립준비 2개월
	▼	▼
	자립지원계획 수립 일상훈련, 취업, 지역자원연계	자립실행 3개월
	▼	▼
	지역사회 자립 및 사후관리 사례관리, 모니터링	연 장 3개월
		▼
		사후관리 적응 1개월 / 정착 6개월 / 안정 12개월

[표 64-2] 쉼터 지원흐름도



[사진 64-1] 쉼터 모습



2) 학대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2020년 2월 6일 개소한 경기남부 피해 장애인 쉼터 '보듬'은 현재까지 학대피해를 입은 21명에게 안전한 공간과 숙식을 제공하였고 2차적 피해 예방 및 학대로 인한 불안 및 우울 등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 심리 안정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학대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 및 피해에 알맞은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의료원, 지역병원 및 시 · 군 보건소,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긴급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학대피해와 관련한 사법절차를 지원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 법률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경기지방 변호사회 등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및 형사사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3) 일상생활능력 훈련 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학대 또는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들을 훈련하여 자립능력을 강화시킨다. 지역사회 행사, 사회참여 프로그램 참석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과 관련한 훈련 실시로 피해자의 자립의지 고취 및 자립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쉼터 이용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완전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회 적응 시 문제점 및 강점 등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및 지자체, 관공서, 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쉼터 부족으로 인한 응급조치 어려움

학대피해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피해 장애인쉼터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쉼터의 절대적 부족과 정원초과, 특정성별 피해자만 입소되어 있는 경우 응급조치가 불가하여, 전문 인력이 없는 단기거주시설이나, 모텔 등으로 일시분리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2) 전국 최초 법령에서 정한 피해 장애인 쉼터 기준 충족

'보듬'은 기존 쉼터가 장애인 거주시설 부설 형태로 여성만 입소가 가능한 방식에서 벗어나 남녀가 분리된 단독시설 형태이다. 이용 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 지역사회 조기 복귀와 자립지원을 위해 수원시 도심 권역 내 전국 최초로 법령에서 정한 6명의 인력, 입소정원 8명 기준과 시설규모 66㎡ 이상 등을 충족하여 설치하였다.

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업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운영법인으로 선정하여 피해 장애인 보호, 심리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원, 일상생활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피해 장애인쉼터 '보듬'의 추가 개소로 학대피해에 대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 피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기존 단기거주시설 내 별도 운영 중인 경기북부 피해 장애인 쉼터도, 응급보호의 원칙인 비밀보장, 개별화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신규 주택을 매입, 단독시설로 연내 이전할 것이다. 단편적인 돌봄 제공이 아닌 권리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대피해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기도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학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65.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도서관정책과 독서문화진흥팀장 박정숙

- 추진배경 : 일·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
- 추진내용 :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타 부처 및 부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돌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
- 평　　가 : 아이돌봄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서비스 결합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보육 ·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공적돌봄 이용률은 영유아에 치중(70.8%)되어 있고,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에서 학령기 아동돌봄 사업을 시행하여 확대 중이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틈새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학령(1~6학년)의 지역아동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1개소 당 10명 내외의 돌봄 인원을 확보하였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49개소 391명을 2020년 59개소 664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제공을 위해 임

의로 회원변경은 불가하며, 이사 등 특별한 사유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돌봄 시간은 주5일, 2019년 운영시간은 학기 중 평일 13시~19시, 방학 중 평일 10시~19시를 2020년에는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개선, 실제 돌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돌봄 운영을 통해 출결 및 귀가 관리, 생활지도 등 아동 관리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학습활동과 같은 개인학습을 보조하고,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2)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시행

2020년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서관 휴관 장기화로 원활한 돌봄을 진행하기 어려워 정상운영 전까지 긴급돌봄(프로그램 중단) 위주로 운영하였다.

또한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방역 등 물품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손세정제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전용 돌봄공간의 필요성

이용에 제한이 없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돌봄 아동만을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간식 등을 제공하여 비정기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아동들에게 의도치 않은 소외감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가급적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있는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일반 이용자와의 서비스 영역을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선발되지 않은 일반 아동들에게도 프로그램 참여를 탄력적으로 허용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아이돌봄을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2020년 59개소로, 경기도에 1600여개의 작은도서관 수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내 누구나 접근하기 편리한 작은도서관에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17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경기도 31개 시 · 군 전역으로의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66. 이 · 통장이 협력하여 아동의 안부를 묻다!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장 이현숙

- 추진배경 :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의 위기상황 조기발견 필요
- 추진내용 : 주민등록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이 · 통장이 양육수당 대상아동 全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복지서비스 안내
- 문제점 및 해결 : 부서 및 각 시 · 군 담당자, 이 · 통장들의 협조 요청
- 평　　가 : 적극적 위기아동 발굴의 시스템 마련 및 복지서비스 제공

가. 추진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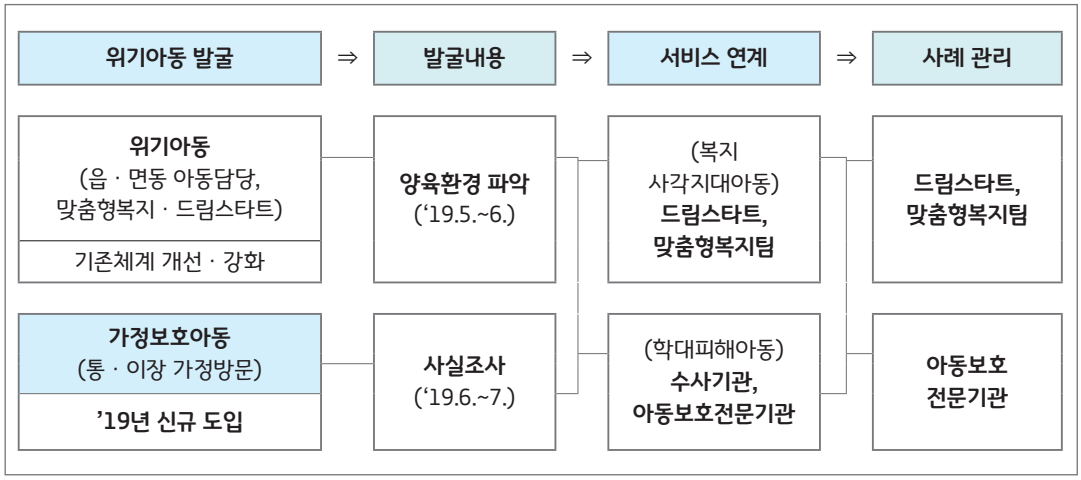
최근 경남 창녕군에서 여아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목에 쇠사슬이 묶여 감금당하는 등 학대당한 사건에서 보듯, 가정에서만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들에 비하여 실태파악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학대아동 등 요보호대상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조기발견하고, 신속대응으로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매분기 추진 중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각종 빅데이터[1]를 통해 18세 미만 위기 아동을 사전 예측하고, 읍 · 면 · 동 담당공무원의 가정방문을 통해 위기아동을 발굴 · 복지서비스 등 연계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3월 19일 첫 시행된 사업으로 시 · 군 맞춤형복지팀, 드림스타트팀 등 복지유관부서의 협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조기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1) <위기아동 예측활용 데이터>_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①장기결석 등 학교출결 ②어린이집·유치원 출결 ③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④치료 중단 등 병원기록 ⑤예방접종 미실시 ⑥양육수당 보육료 미신청 ⑦아동학대 사례 ⑧아동복지시설 퇴소 ⑨학교밖 청소년 등

이에, 경기도에서는 만7세 미만,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양육수당[2] 수령아동을 전수 방문 조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역상황을 잘 아는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위기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 주민들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이 · 통장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위기아동 발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표 66-1] 위기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가정보호아동 이 · 통장 가정 방문

2019년 6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 실태조사('19.6.10. ~ 8.20.)와 병행하여 경기도 내 양육수당 수령아동 164,052명('19.3월 말 기준)의 전 가정을 각 시군 이 · 통장들(15,832명)이 방문하였다. 1차 방문시('19.6.10.~7.26.) 아동의 실제 거주관계확인 및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하고, 미거주 및 특이사항(요보호아동 등)이 있는 경우 읍 · 면 · 동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담당자가 2차 확인하기 위해 재방문하였다.

2) 84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10~20만 원)

2) 요보호아동 공무원 재방문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1차로 방문한 아동 164,052명 중 미거주 및 특이사항 아동 2,098명을 읍 · 면 · 동 담당공무원 564명이 2차 재방문하였다. 전출, 해외체류 등으로 확인되거나 특이사항이 없는 2,025명은 현장종결하였으며, 아동 및 가정의 상태를 확인 · 조사하여 우선적 도움이 필요한 73명에 대하여 아동 입소 및 긴급 지원 서비스 등 즉시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였다.

주요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로는 부모의 질병과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아동 양육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아동에 대하여 일반가정 및 공동생활가정에 입소조치하거나 장애의심 아동에 대한 지능검사 진행, 재활치료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이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신청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직 등록 안내, 긴급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가정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표 66-2] 2차 방문조사 결과

(단위 : 명)

합 계	현장종결	복지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위기아동 신고대상
2,098	2,025	63	10	0

3) e-아동행복시스템 지원을 통한 위기아동 발견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2(정보수집 · 활용 근거)에 따라 e-아동행복시스템('18.3.19.시행)으로 위기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각 분기마다 빅데이터로 추출된 만 18세 미만 위기예측 아동에 대해 읍 · 면 · 동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양육환경 파악 후 드림스타트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66-3] 2차 방문조사 결과

(단위 : 명)

구 분	대상자	미처리	처리완료					
			소 계 (처리율)	비대상	현장종결	초기상담	드림스타트	위기아동
계	20,200	1,319	18,777	690	17,688	355	40	4
1분기	3,755	602	3,153 (84%)	101	2,939	100	13	0
2분기	4,043	291	3,752 (93%)	316	3,324	96	15	1
3분기	3,725	470	3255 87%	273	2,892	81	8	1
4분기	8,677	60	8,617 (99%)	0	8,533	78	4	2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부서 간 협조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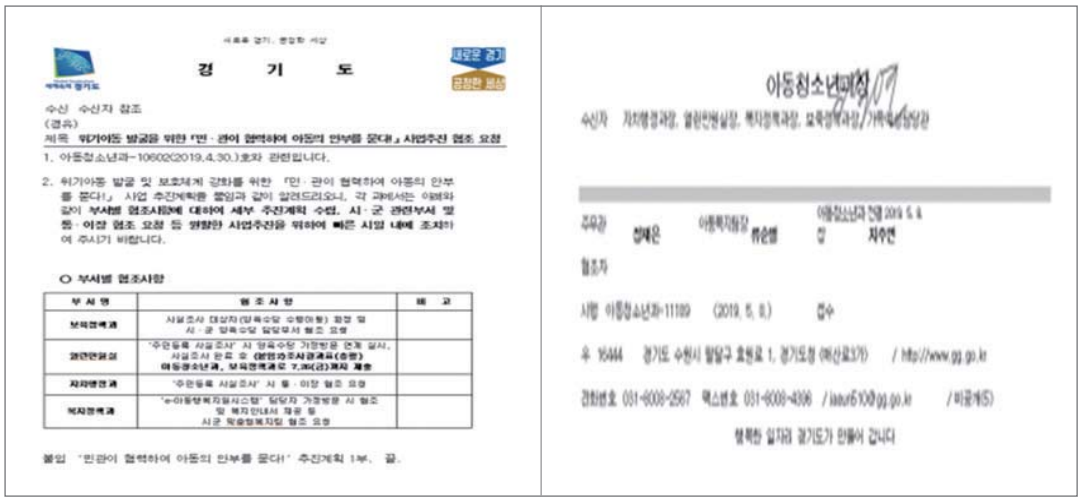
신규업무 발굴에 따라 도내 관련부서의 부서 간 업무 분담 체계 정립이 필요하였다. 특히, 실제 대상아동 가정을 방문하는 이 · 통장의 협조 요청 및 주민등록 실태조사와의 연계 등의 과정에서 조율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도내 5개 부서(아동돌봄과, 열린민원실,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보육정책과)와의 두 차례 회의('19.4.17./ '19.4.23.)를 통해 긴밀한 협조와 소통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2) 시 · 군 담당공무원의 업무가중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기존에 없었던 사업시행에 대한 시 · 군 공무원 및 이 · 통장들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일부 불만과 반발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2019년 5월 24일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 군 아동학대대응공무원 자체교육('19.5.24., 참석자 106명)을 통해 위기아동 관리 노하우 및 가정방문 시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시 · 군 아동학대 담당자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2019년 6월 20

일에는 시 · 군 아동업무 담당 국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위기아동 발굴 사업 협조 요청을 통해 추진하였다.

[표 66-4] 부서 간 업무 협조 요청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민 · 관이 협력하여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추진 협조 요청

1. 아동청소년과-10602(2019.4.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기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민 · 관이 협력하여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 군 관련부서 및 동 · 이장 협조 요청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협조사항

부 서 명	협 조 사 항	비 고
보육업무과	사실조사 대상자(양육수당 수령아동) 정보 및 시 · 군 양육수당 담당부서 협조 요청	
관련부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양육수당 가정방문 조사 실시, 사실조사 완료 후 (별첨)주민등록표사실조사(수정) 아동청소년과, 보육정책과로 7.26(금)까지 제출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동 · 이장 협조 요청	
복지정책과	"수아동행복지원시스템" 담당자 가정방문 시 협조 및 복지안내서 제공 등 시 · 군 학교협복지팀 협조 요청	

붙임 「민 · 관이 협력하여 아동의 안부를 묻다」 추진계획 1부. 끝.

아동청소년과장

수신자 자치행정과장, 열린민원실장, 복지정책과장, 보육업무과장 / 가족여성정책관

주무관 장혜은 아동복지팀장 류순열 결 재우연

협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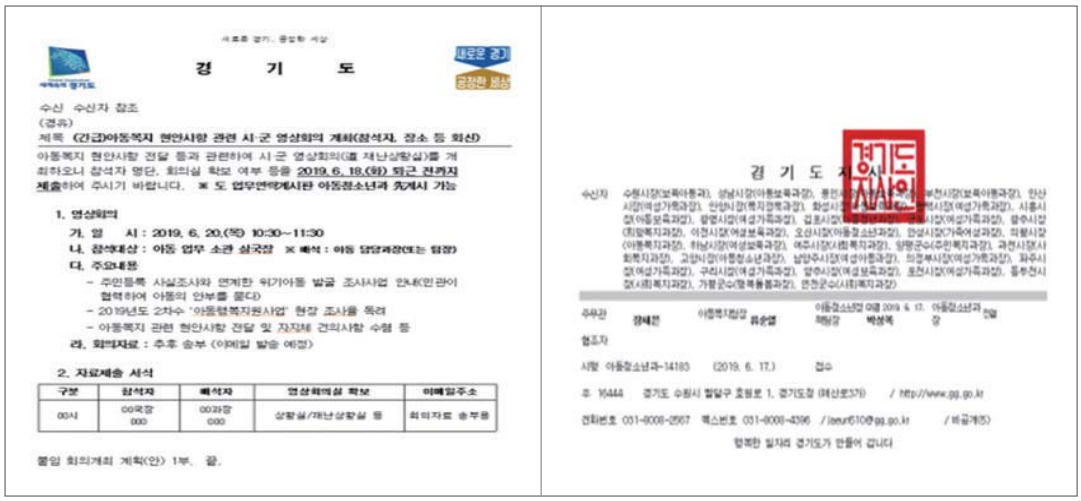
시행 아동청소년과-11189 (2019. 5. 8.) 접수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북산로3가)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2567 팩스번호 031-8008-4396 / iseul610@gg.go.kr / 비공개(5)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표 66-5] 시·군 업무 협조 요청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아동복지 현안사항 관련 시·군 영상회의 개최(참석자, 장소 등 회신)

아동복지 현안사항 전달 등과 관련하여 시·군 영상회의(를 재난상황실)를 개최하오니 참석자 명단, 회의실 확보 여부 등을 2019. 6. 18.(화) 퇴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업무연락계시판 아동청소년과 게시 가능

1. 영상회의
가. 일 시 : 2019. 6. 20.(목) 10:30~11:30
나. 참석대상 : 아동 업무 소관 실국장 ※ 배석 : 아동 담당과장(또는 팀장)
다. 주요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위기아동 발굴 조사사업 안내(민·관이 협력하여 아동의 안부를 묻다)
- 2019년도 2차수 '아동협복지원사업' 현장 조사을 독려
- 아동복지 관련 현안사항 전달 및 자자체 건의사항 수렴 등
라. 회의자료 : 추후 송부 (아래일 발송 예정)

2. 자료제출 서식

구분	참석자	배석자	영상회의실 확보	이메일주소
00시	00국장 000	00과장 000	상황실/재난상황실 등	회의자료 송부용

붙임 회의개최 계획(안)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인

수신자 수원시장(보육아동과), 성남시장(아동보육과장), 의정부시장(보육아동과장), 안산시장(여성가족과장), 안양시장(복지정책과장), 화성시장(여성가족과장), 평택시장(여성가족과장),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광명시장(여성가족과장), 김포시장(여성가족과장), 광주시장(희망복지과장), 여주시장(여성보육과장), 오산시장(아동청소년과장), 안성시장(가족여성과장), 의왕시장(아동복지과장), 하남시장(여성보육과장), 여주시장(시립복지과장), 양평군수(주민복지과장), 과천시장(사회복지과장), 고양시장(아동청소년과장), 남양주시장(여성아동과장), 의정부시장(여성가족과장), 파주시장(여성가족과장), 구리시장(여성가족과장), 양주시장(여성보육과장), 포천시장(여성가족과장), 동두천시장(사회복지과장), 가평군수(장묘통합과장), 연천군수(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장혜은 아동복지팀장 류순열 아동청소년과장 전결 2019. 6. 13. 아동청소년과 박성복 결재

협조자

시행 아동청소년과-14180 (2019. 6. 17.) 접수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북산로3가)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2567 팩스번호 031-8008-4396 / iseul610@gg.go.kr / 비공개(5)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관 주도였던 위기아동에 대한 조사를 이 · 통장 등과 협력하여 실시함에 따라 주변 이

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시 · 군에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의 부족 및 업무과다 등의 사유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읍 · 면 · 동사무소를 자진하여 찾아오는 민원인 및 주변인의 의뢰에 의한 조사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의 행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직접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이 · 통장들과 협력하여 각 가정방문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가정을 읍 · 면 · 동 공무원에게 연계하고, 재방문을 통해 발굴, 긴급 지원을 하는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경기도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의 이 · 통장 시스템을 더욱 활용하여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67.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아동돌봄과 아동돌봄팀장 신일범

- 추진배경 : 도정핵심과제 27번
- 추진내용 : 경기도아동돌봄지원조례 시행 및 예산 확보, 아동돌봄 지원시설 확충
  돌봄인력 지원 및 처우 개선, 거점형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설치
- 문제점 및 해결 : 돌봄공간 확보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돌봄센터 휴원과 긴급돌봄 실시
- 평　　가 : 예산과 인력 투입으로 돌봄시설 확충 중점 추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돌봄정책은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6세 이상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5]이다. 돌봄의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 초등단계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초등돌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국정과제로 '다함께돌봄사업', '온종일 돌봄생태계 구축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제정과 아동돌봄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하고 초등단계 아동에 대한 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 경기도 공적돌봄 이용률 : 영유아 68.3%(215/315만 명), 초등학교 12.5%(33/267만 명)
(출처 : 교육부, 20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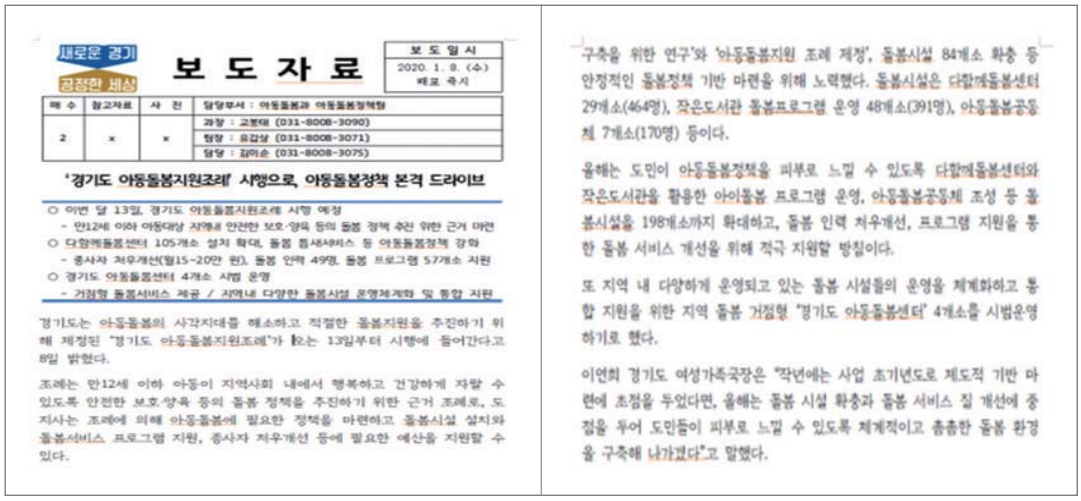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시행

경기도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 · 양육 등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로써 도지사는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2020년 아동돌봄정책에 전년도(23억 원) 대비 약 6배 증가한 131억 원(본예산 기준, 국비+도비)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표 67-1]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시행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1. 9.(수) 배포 즉시

매수	참고자료	사진	담당부서 : 아동돌봄과 아동돌봄정책팀
2	×	×	과장 : 고정태 (031-8008-3090)
			팀장 : 유갑상 (031-8008-3071)
			담당 : 김미순 (031-8008-3075)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시행으로, 아동돌봄정책 본격 드라이브

○ 이번 달 13일,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시행 예정
- 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사회로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 추진 위한 근거 마련
○ 다함께돌봄센터 105개소 설치 확대, 돌봄 통합서비스 등 아동돌봄정책 강화
- 종사자 처우개선(월15~20만 원), 돌봄 인력 49명, 돌봄 프로그램 57개소 지원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 시범 운영
- 거점형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내 다양한 돌봄시설 운영체계화 및 통합 지원

경기도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illegible]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조례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축을 위한 연구'와 '아동돌봄지원 조례 제정', 돌봄시설 84개소 확충 등 안정적인 돌봄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돌봄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29개소(464명), 작은도서관 돌봄프로그램 운영 48개소(391명), 아동돌봄공동체 7개소(170명) 등이다.

올해는 도민이 아동돌봄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시설을 198개소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력 처우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들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작년에는 사업 초기년도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돌봄 시설 확충과 돌봄 서비스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 지역자원과 연계한 아동돌봄 지원시설 확충

(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가 초등돌봄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지하여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2022년까지 전국 1,8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정부계획에 맞추어 2019년 30개소를 설치하였고, 2020년 108개소, 2022년까지 426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67-2] 경기도 아동돌봄 예산 비교(2019년 vs 2020년)

(단위 : 개소, 억 원)

구 분	2019년					2020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93	37.6	16.6	6.2	14.8	201	193.6	85	46.2	62.4
다함께돌봄센터	37	28.2	16.6	0	11.6	108	151	85	20	46
아동돌봄공동체	7	6.4	0	3.2	3.2	20	20	0	10	10
작은도서관 (돌봄프로그램)	49	3	0	3	0	59	12.8	0	6.4	6.4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0	0	0	0	0	4	9.8	0	9.8	0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초등학생 중심의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상주인력 2명을 채용하여 돌봄과 등하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간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6월 말 현재 총 4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에 65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표 67-3] 2020년 다함께돌봄센터 시군별 설치 현황('20.6월 말 기준)

○ 23개 시군 43개소

- 성남(6), 오산(5), 시흥(4), 수원(3), 용인(2), 화성(2), 부천(2), 안산(2), 김포(2), 남양주(2), 고양(1), 안양(1), 군포(1), 광명(1), 과천(1) 의정부(1), 평택(1), 하남(1), 이천(1), 양주(1), 의왕(1), 여주(1), 가평(1)

(나)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민선7기 자체 공약사업으로 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이 직접 돌봄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지역특성과 돌봄수요를 반영한 돌봄사업을 제안하고 공모를 통해 돌봄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개방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 사각시간을 해소하는 등 경기도형 돌봄사업으로 2022년까지 70개소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된 돌봄공동체에는 돌봄공간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별 특성에 맞게 일시 · 긴급 돌봄, 육아품앗이 등 돌봄서비스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돌봄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도에 최초 시범 운영하였으며, 10명 이상 마을주민 모임의 아동돌봄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 공동체를 선정하였고, 만 12세 이하 170여 명의 아동을 탄력적으로 돌보고 있다.

2020년에는 20개 공동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공동체에는 최상의 맞춤형 돌봄공간 조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역량강화워크숍(디자인씽킹) 및 아동의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공동체별로 자율적 일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

[표 67-4]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선정현황

○ ’19년도 선정 : 7개 시 · 군 7개 공동체
- 고양(1), 성남(1), 파주(1), 수원(1), 가평(1), 부천(1), 이천(1)

○ ’20년도 선정 : 14개 시 · 군 20개 공동체
- 고양(2), 성남(1), 평택(1), 시흥(1), 파주(2), 김포(1), 광주(1), 군포(1), 하남(1), 양주(4), 이천(1), 양평(2), 과천(1), 연천(1)

(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경기도는 돌봄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인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틈새 돌봄 기능을 수행하였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단계 학령기(1~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1개소 당 10명 내외로 공개모집하고 독서문

화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49개소 391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59개소에 664명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돌봄시간은 주5일,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돌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표 67-5] 2020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현황

○ 17개 시군, 59개소 - 수원(5), 용인(8), 부천(1), 화성(6), 남양주(5), 안양(3), 평택(1), 의정부(2), 광명(4), 군포(7), 하남(3), 오산(4), 구리(2), 포천(2), 양평(3), 가평(1), 연천(2)

[사진 67-1]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아동돌봄공동체 운영

3)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설치

2020년에 4개소 설치계획인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지역의 돌봄모델을 구축하고자 도가 직접 설치하는 돌봄시설이다. 만6세~12세 이하 아동의 직접 돌봄뿐만 아니라 도내에 다양한 돌봄시설들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네트워크화 하는 거점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6월 말 현재 파주시와 광명시에 장소를 확정하고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지역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표 67-6]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장소 선정 현황

○ 선정 지역 : 2개소

- 파주(파주운정동행복센터) :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소유자 : 파주시청)
- 광명(소하4단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 광명시 소하로 55(소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4)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돌봄은 충분한 인력지원과 종사자의 처우에 따라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 · 군 수요조사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에 시간제 돌봄교사(주 20시간)를 1명씩 추가 지원하여 방학 중 또는 저녁 돌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사업초기년도인 올해 예기치 않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사업'은 센터 시설방역과 긴급돌봄에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였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처우를 개선하고자 '경기도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처우개선비(월 5만 원)와 특수근무수당(월 10~15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를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364원)으로 편성하는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였다.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 현황 : 14개 시군 56명

- 수원(7), 용인(7), 성남(8), 부천(4), 화성(2), 시흥(7), 의정부(1), 김포(5), 군포(2) 오산(7), 이천(1), 포천(1), 의왕(3), 여주(1)

○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37명, 월5만 원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 72명, 월10~15만 원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자 생활임금 지원 : 59개소, 시간당 10,364원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돌봄공간의 부족과 관련법 개정

아동돌봄사업은 사업주체별, 연령별,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돌봄공간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율은 40%에 그치고 있으며 개소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돌봄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공동주택법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의무 설치시설이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도 3분의 2 이상의 입주민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 개선안을 작년에 범정부공동추진협의회,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돌봄공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6월과 7월에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필수시설의 용도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법령 개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돌봄공간 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코로나 19 확산으로 돌봄센터 휴원 돌입과 긴급돌봄 실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학교 개학 연기 및 휴업과 더불어 돌봄센터 휴원을 무기한 권고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코로나 19 확산이 되지 않은 시군의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는 정상운영하고 35개소가 휴원한 상태지만,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를 정상근무하게 하고 긴급돌봄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설 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지침을 시달하고 도-시군 담당자간 비상연락 단톡방을 운영하여 복지부 전달사항 자료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각 시 · 군 발생상황과 특이사항을 공유하였다.

[표 67-7] 다함께돌봄센터 긴급돌봄 실시 현황('20.6.30 기준)

○ 휴원시설의 긴급돌봄 현황

전체 시설수		휴원시설		긴급돌봄시설		등원율
개소수	현원	개소수	현원	개소수	등원인원	
43	937	35	702	35	307	43.7%

※ 정상운영 : 8개소

경기도 자체사업인 아동돌봄공동체와 작은 도서관 역시 휴관 장기화로 프로그램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대신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 내 방역지원을 위해 손세정제 구입 등 방역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예산항목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2019년에는 만 12세까지 아동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과 돌봄협의체 운영, 돌봄체계구축 방안 연구 진행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0년에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돌봄시설의 양적확대 와 돌봄서비스 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간확보가 된다면 향후 다함께 돌봄센터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2019년도에 시범 추진해본 결과 공간확보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여 2020년도에는 돌봄공간 유지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돌봄 전용공간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돌봄 공백시간에는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 · 개선하였다.

또한, 선정이후 사업포기 발생 시 차순위를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최대한 많은 돌봄공동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은도서관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간식지원 등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가급적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위주로 선정하여 일반이용자와 서비스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도내 1,600여개에 이르는 작은도서관 수와 거주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31개 시 · 군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의 많은 정책들이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지만 아동돌봄 특성상 대면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시설 내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우선 시설 소독강화와 실내에서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대응 등 행동수칙을 철저히 인지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습관화가 필요하다. 또한 돌봄에 집중해야 할 시설 종사자의 방역업무 부담완화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8.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시행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지원팀장 주현자

- 추진배경 : 청년 취업에 다수의 면접이 필요함에도 면접비 등 지원은 미비
- 추진내용 : 청년면접수당 지급,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취업지원 프로그램」제공
- 문제점 및 해결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상반기 채용일정 취소 및 연기 →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연령 확대, 근로기준 완화, 제출서류 간소화
- 평　　가 : 면접비 지원으로 구직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업의 면접비 지급문화 확산 계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4년 이후 청년실업률의 상승추세가 지속되어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년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 동원이 필요하였다. 사업추진에 앞서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청년들이 면접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교통비 등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면접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다.

* 면접비용 부담(80.5%), 비용부담때문에 면접포기경험 有(38.6%)-<'사람인', '18.5월>
면접비 지급되어야 한다(89%) - <'인크루트' 구직자 설문조사, '16.11월 >

기업이 면접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면접비 지급 의무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상태에서, 경기도가 2020년 동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면접비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내 구직 청년층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책이다. 면접 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선7기 청년정책 공약으로 도입되었다.

[표 68-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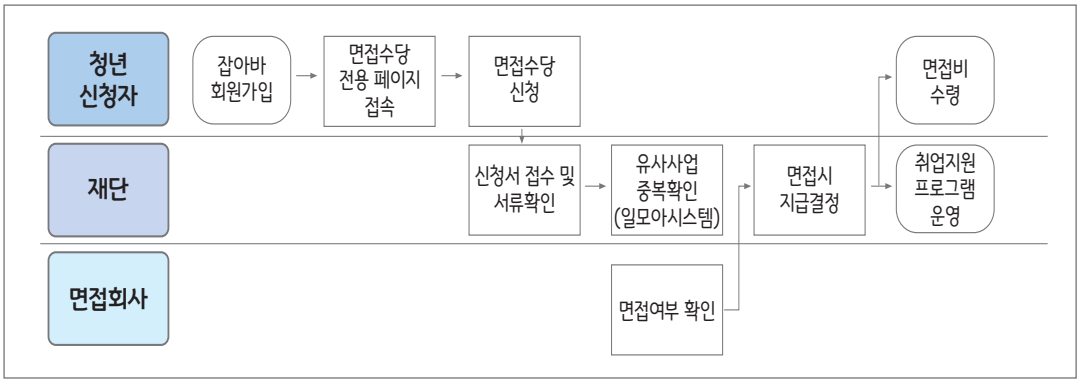
○ 지급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2조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조
○ 사업대상 : 취업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청년 만18세~만39세**
○ 지원내용 : **면접 1회 3.5만 원, 최대 6회 21만 원(경기도 지역화폐)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면접확인서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thankyou.jobaba.net)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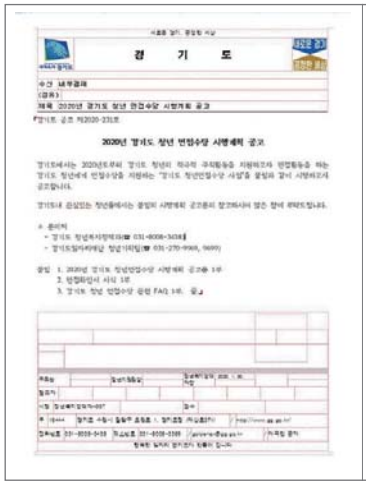
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

경기도는 청년들의 고용확대와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 14일 「경기도 청년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동 사업의 근거법규를 마련하였다. 이어 2020년 1월 28일 청년면접수당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월 6일 사업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사업의 추진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협업하여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청년면접수당 지원계획 총괄 수립, 예산편성 및 관리 등을 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온라인 신청 접수 플랫폼 개발 · 운영, 상담사 선발(관리), 신청자 선발(면접수당 지급), 실태조사(민원처리, 만족도 등)를 한다.

[표 68-2]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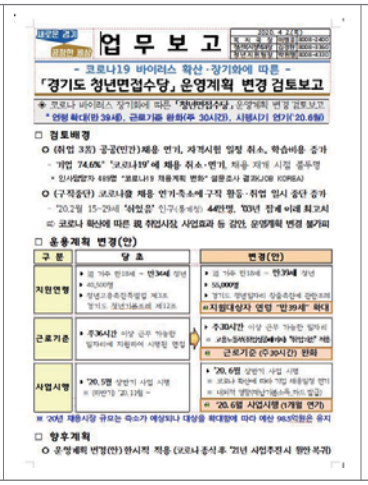


[표 68-3] 청년면접수당 시행계획 공고 등



경 기 도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 공고



업 무 보 고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장기화에 따른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운영계획 변경 검토보고

2020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모집 공고

2020년 5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2) 청년면접수당 신청접수 개시

경기도는 당초 금년 5월부터 신청 · 접수를 실시하고자 준비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개월 연기된 6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7월 31일까지 1차 접수를 진행하였다. 1차 접수로 약 9천여 명이 면접수당 신청을 하였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회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

※하반기접수일정(②차)9.14.~10.16.(③차) 11.2.~11.30.(④차) 12.16.~12.31.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은 가능하나 각 차수별 마감일은 18:00까지 제출 완료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기업들의 상반기 신규채용 급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들의 채용일정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하반기로 연기 되었다.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관련 설문조사를('20.2월 리서치앤리서치) 실시한 결과, 상반

기 채용계획 미수립(32.5%), 작년보다 감소(19.0%), 신규채용 없음(8.8%) 등 대다수 기업들의 상반기 채용은 취소(연기)되었다. 이런 채용동향의 변화로 인해 상반기 1차 청년면접수당 신청률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은행(출처_'20.6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13%가 경영 악화로 이미 인력을 축소한 가운데,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27%의 기업이 추가 고용 축소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는 등 2020년 청년들의 채용시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원연령 확대, 근로기준 완화, 제출서류 간소화

취업 3苦(채용일정 연기, 자격시험 일정 취소, 학습비용 증가)를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경기도는 신청연령을 당초 만34세에서 만39세로 확대하였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조건도 폐지하여 단기간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였다. 그리고 양질의 취업을 위한 청년들의 활발한 이직활동을 인정하여 現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68-4] 청년면접수당 홍보 포스터 및 온라인 신청사이트(잡아바) 등

여기에 추가적으로, 청년들이 제출하기 어려워했던 채용공고문도 폐지하였다. 면접확

인서의 대체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다만, 이런 완화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청년면접수당은 구직활동의 최종 단계인 면접 활동 단계에 다다른 취업 의지 및 역량 높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다. 청년들의 취업 성과 향상에 실질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되며, 비용의 문제로 구직 지원 횟수의 확대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구직강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면접수당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내실 있고 청년들에게 더욱 체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전반에 걸쳐 다각도로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6월 시작한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 사업 추진 등 기업의 면접수당 지급 문화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69. 광역 최초 '청소년 안전망팀' 신설

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장 윤미란

- 추진배경 : 국정과제 53 아동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국정과제 53-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국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국정과제 53-3)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배치로 업무의 전문성 제고
- 추진내용 : 청소년 안전망 팀(6명) 신설(팀장1, 주무관5)
  - 지자체 위주의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 추진
  -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종합정보망 구축
  -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을 통한 '경기도형 긴급대응체계' 구축
- 문제점 및 해결 : 민간과 공적영역 추진 장단점 분석 사업추진
- 평　　가 : 종합적인 계획 필요, 청소년 위기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조기 발견 정책 필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그동안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운영은 법률상 지자체장의 책무로 규정됐지만, 대부분 전담인력부재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업무위탁을 맡기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지자체의 풍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협업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 3월 16일 선제적으로 청소년 안전망 팀(6명)을 신설(팀장1, 주무관5)하여 시 · 군의 위기청소년전담기구 설치를 독려하고 모범을 실천하였다. 향후 경기도 청소년 안전망 팀은 시 · 군의 위기청소년 전담기구에 대한 광역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지자체 위주의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 추진

지난 2019년 수원시가 여성가족부의 지자체 위주의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시범 실시하였고 2020년에도 수원시, 파주시, 군포시 등 3개 지자체에 전담공무원 2인과 사례관리사 2~3명을 한 팀으로 한 지자체 위주의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전국 9개소가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 3개 시군이나 참여하는 사항이다. 경기도는 향후 여성가족부와 협의 타 지자체로 확대 운영예정이다.

2)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종합정보망 구축

또한 경기도는 2020년 4월 17일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인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청소년 피해 대응방안 및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위기 청소년에게 유관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온라인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 지원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청소년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현재 청소년안전망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구축되면 청소년들은 받을 수 있는 지원 절차와 단계별 지원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청소년안전망 유관기관 실무자들은 정보를 공유하여 위기청소년 연계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3)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을 통한 '경기도형 긴급대응체계' 구축

경기도는 대규모 재난·재해, 자살 및 목격, 갑작스러운 사고로 청소년들이 후유증으로 느끼는 심리적 외상(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재난·사고 대비 「심리

적 외상긴급 지원단」(209명)과 청소년 맞춤형「초동 대응팀」(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급 66명)구성하고 지속으로 사례관리 공유 등 교육을 실시 전문적인 위기개입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9년도에는 고성 · 속초 화재 사건 피해 3개 학교 440명 등 총 1,787명의 긴급심리를 지원하였다.

2020년도는 동 사업이 여성가족부 시범, 공모사업인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향후 경기도형 긴급대응체계는 전국적 확산을 위한 표준화 사업이 될 예정이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 기존 민간위탁(청소년상담복지센터)으로 추진한 사업

청소년안전망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 및 시 ·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사업을 공적영역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축적된 연계망과 지역자원 등 노하우를 지자체에서 협력하여 배우고 발전시켜 위기청소년 발굴과 연계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과 공공에서 추진 시 각각 장단점이 있는 사업영역을 분석하여 상호 협력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위기청소년 발굴사업은 공적영역 추진 시 경찰서 및 학교, 주민 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 위기청소년 발굴에 유리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자원 배분사업은 민간영역에서 공적영역보다 자원배분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2020년 3월 16일 출범한 경기도 청소년 안전망팀은 위기청소년을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 종합적,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청소년이 발생되기 전 선제적인 발굴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위기 청소년이 발생되면 이를 발견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후적 발굴체계로 진행되었으나, 위기청소년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한 발 앞선 다양한 위기청소년 발굴 정책과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이용 시설 · 자원이 위기청소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용시설은 부담 없이 위기청소년을 접할 수 있는 시설인데, 시설여건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어려움이 있다. 공부방, 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정보 · 문화 · 복지 · 상담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갖는 시설로 발전시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는 통로 역할이 필요하다.

7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버스정책과 환승요금팀장 이규철

- 추진배경 : ’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교통비가 증가한 道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추진내용 :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일부를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
- 문제점 및 해결 :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조례 개정, 도의회 요구사항 수렴 등
- 평　　가 : 경제활동이 없는 취약계층 교통복지 실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9년 7월 1일「근로기준법」개정시행으로 경기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가동률을 2019년 기준 85%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4천 명의 운수종사자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가 약 4천 명을 증원할 경우 2018~2020년까지 3년간 약 4,500억 원의 적자가 발생된다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검증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운수종사자 추가 증원을 기준으로 버스업체의 운송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 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요금인상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2019년 9월과 11월에 각각 시내버스(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와 마을버스(200~300원)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이뤄진 만큼 경기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일부를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이며,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30분 이내에 환승한 경우 서울 · 인천버스 및 전철 이용실적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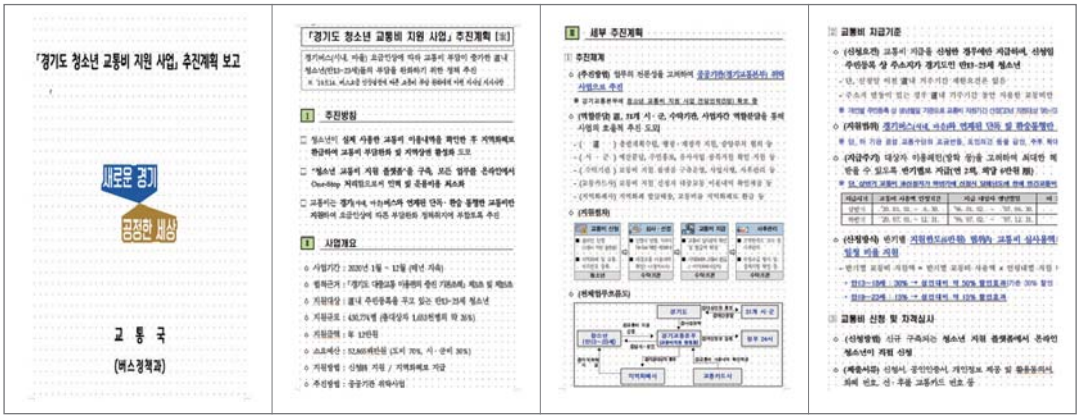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도입 검토

경기도는 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연령별 교통비 증가액을 조사한 결과, 만 13~18세는 연간 약 8만 원, 만 19~23세는 연간 약 12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서 만 13~18세에 대해 성인대비 반값 교통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추가지원금 4만 원을 더해 만 13~23세까지 모두 연간 12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통비 환급방식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교통비가 지원되는 교통수단은 요금을 인상한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기준으로 하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되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의 경우에는 경기버스를 이용하기 전후 30분 이내에 환승한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70-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 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교 통 국

(버스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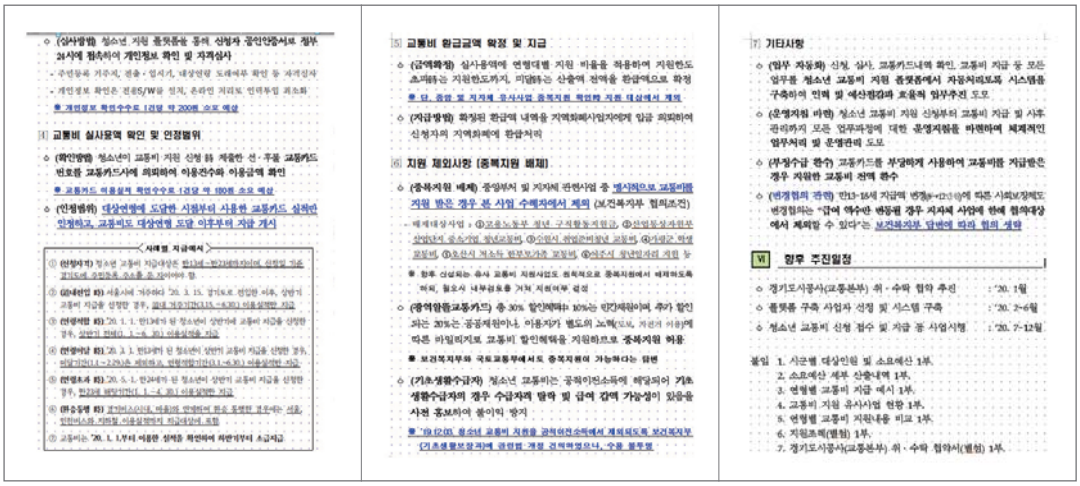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 [案]

Ⅰ 추진방침

Ⅱ 사업개요

Ⅲ 세부 추진계획

Ⅳ 교통비 지급기준


Ⅴ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및 인정범위

Ⅵ 지원 제외사항 (중복지원 배제)

Ⅶ 기타사항

Ⅷ 향후 추진일정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위한 지원조례 개정

경기도는 2019년 11월 12일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를 개정 공포하였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0-2]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제3조 및 제15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1. 청소년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신설 2019.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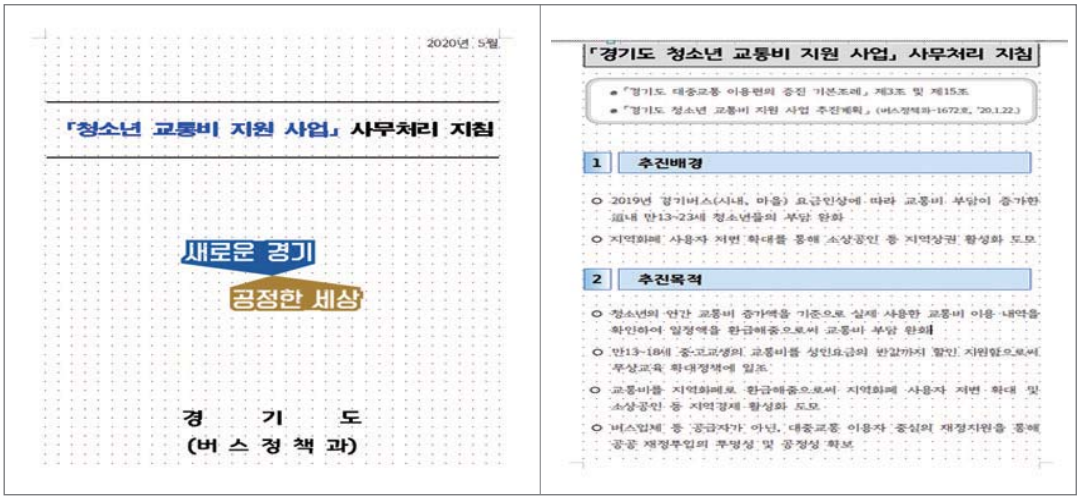
제15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3세 이상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3)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사무 처리지침 마련 시행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2020년 5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사무 처리지침이 마련되었다. 지침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기관별 역할, 지원 절차, 교통비 지급기준, 신청방법, 자격심사,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및 인정범위, 교통비 지급, 지급대상자 관리, 환수조치, 사후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70-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사무 처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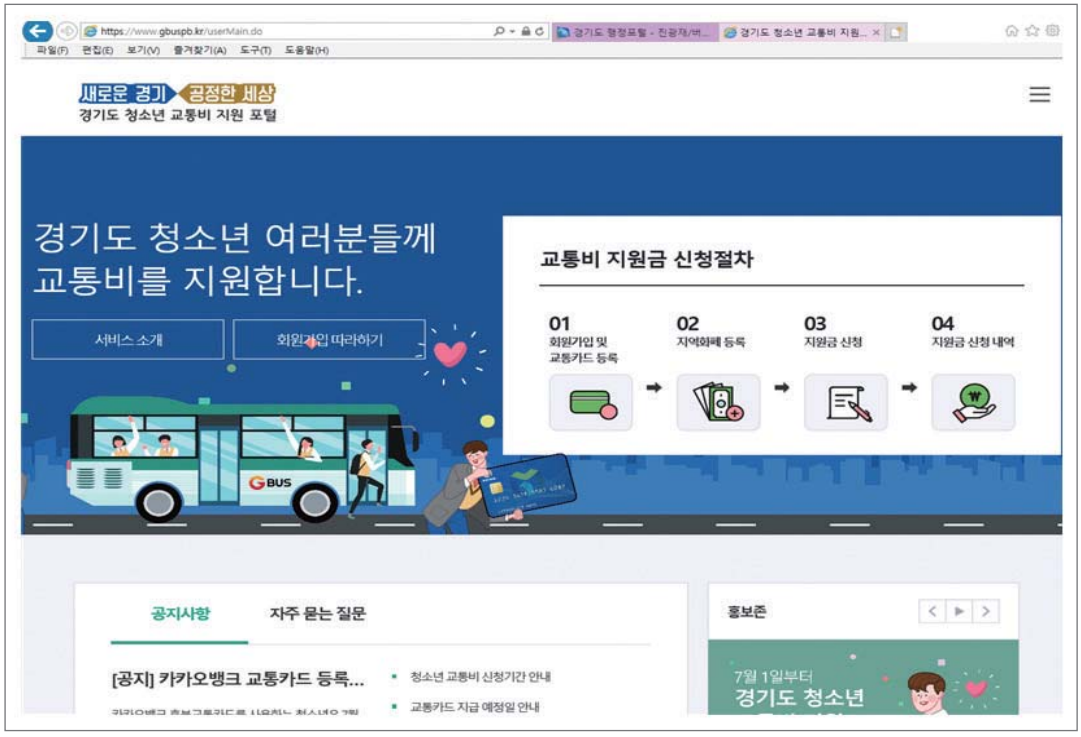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에 사업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5명)을 확보하는 등 동 지침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4)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을 통해 One-Stop 업무처리체계 구축

경기도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비 신청, 자격심사, 교통카드 실적조회, 교통비 지급 등 모든 업무를 One-stop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력 및 예산절감과 더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존 정책사업 추진 시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개인정보 확인을 주민등록 등·초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24시에 접속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토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입인력과 소요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70-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메인화면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난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 · 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교통비 지원 대상을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등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 시 교통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지급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요구와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실무협의 진행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방문하여 실무자와 수차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4차례 진행된 실무협의는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 교통국장, 버스정책과장, 환승요금팀장, 담당주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1차 협의 : ’19.9.19.(목), 2차 협의 : ’19.9.30.(화), 3차 협의 : ’19.10.28.(수)
  4차 협의 : ’19.11.1.(수)

실무협의에서는 민영제를 실시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서 경기도민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토로함으로써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 환급을 지역화폐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통해 2019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대중교통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지역화폐 사용자를 미성년 청소년까지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먼저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간의 복지사업이 특정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해당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즉, 해당연령에 대해서는 모두 보편적 복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사업특성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자에게만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것을 거듭 주장하였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해당 청소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다.

두 번째로 그간의 대중교통 정책은 버스운송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직접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객인 청소년에게 직접 재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어 경기도 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중교통 정책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지역화폐 사용자의 저변확대이다. 지난 2019년 4월 지역화폐 발급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 후 다양한 정책사업과 할인정책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성인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청소년들의 경우 관심도가 떨어져 가입자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는 지역화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4세 이상으로, 휴대폰이 있는 청소년들은 모두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만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역화폐를 신규로 발급받는 청소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연령도 대폭 낮아지고 사용자 저변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1. 경기도 전역 민주시민교육 확산 추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개발팀장(공석)

- 추진배경 : 국정과제 7번 민주시민교육 확대, 민선7기 공약 338번 글로벌 시민교육 확대
- 추진내용 : 민주시민교육 확산 및 활성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 문제점 및 해결 : 광역 차원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시군 지역사회 확산 추진
- 평　　가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양적 · 질적 성장,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으며, 민주적 자질과 주체적 실천능력을 갖추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존속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의 주체가 되어 참여 ·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상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성을 키우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국가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정착되어 활발히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년간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민주시민교육 입법 등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 국정과제 7번.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민주시민교육 확대)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도입 후 공론화를 위한 기반구축 중점추진

경기도는 20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제1기 종합계획(2017~2019)을 수립하여 교육모델 개발, 정책수립 기초조사 및 연구,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공모사업, 활동가 연수, 포럼 및 토론회 등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의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2017년 6억 원에서 2019년 20억 원으로 3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누적인원 11만명 이상 도민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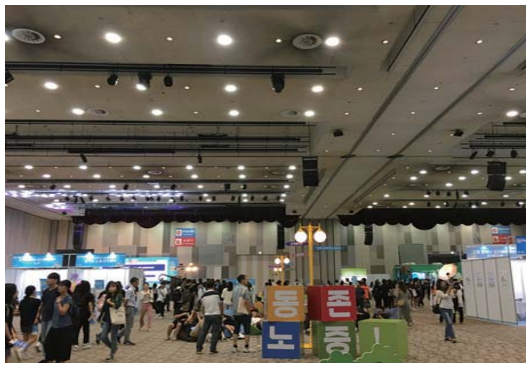
특히 2019년에는 역사 속 민주주의 현장 체험, 지역문제 및 사회이슈 해결 프로젝트, 전국최초 군 장병 민주시민교육 등 경기도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발히 운영하였으며,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교육 및 광역 지자체 최초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진로 박람회 개최 등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표 71-1]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 사업목적 :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
○ 사업근거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15년 제정)
○ 사업대상 : 성인, 청소년, 활동가 등 일반도민
○ 사업내용 : 민주시민교육 확산 및 활성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 추진실적
- ('16) 70백만 원 / 4개 사업(연구, 홍보, 실태조사 등)
- ('17) 600백만 원 / 8개 사업(공모, 프로그램 개발 등), 도민 9천여 명 참여
- ('18) 980백만 원 / 10개 사업(공모, 포럼 · 토론회 등), 도민 1.6만 명 참여
- ('19) 2,000백만 원 / 11개 사업(청소년 노동인권 등), 도민 8.8만 명 참여
- ('20) 3,310백만 원 / 15개 사업(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온라인콘텐츠 개발 등)

[사진 71-1] 군장병 민주시민교육('19)

[사진 71-2] 청소년 노동인권/진로 박람회('19)



2)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0년 5월 21일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을 비전으로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 · 군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표 71-2]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비전 및 과제

모두의 민주시민교육
깨어 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전략목표	실행과제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① 도민(개인)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체계 마련 ② 다양한 사회집단 및 대상별 특화 시민교육 ③ 민주사회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시대적 가치 공유 (시민주권, 노동인권, 역사, 환경, 평화, 성인지, 세계시민 등)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반 실천역량 강화	①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② 시·군 민주시민교육 주체(인력) 양성 ③ 지역사회 기반 실천연계 시민공동체 교육 확산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	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② 도 민주시민교육 홍보 및 사회적 인식개선 ③ 도 및 시·군 민주시민교육 운영 조직체계 강화

특히 경기도의 민선7기 주요 정책가치인 헌법 및 기본권(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존중,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및 성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과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중간지원조직 강화를 통한 추진동력 확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2018년 2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설치하여 전담인력 3명을 채용하였으나, 2019년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기존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의 중요성이 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 3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에서 정규직제화하여 1팀 6명 체제로 운영하였으며, 2020년 3월에는 본부단위로 격상하여 2팀 14명으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였다.

2) 시 · 군과의 협력을 통한 도 전역 민주시민교육 확산 추진

경기도는 31개 시 · 군 중 19개 시 · 군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미 추진 시 · 군도 다수이므로 시 · 군 지역사회 기반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 · 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상호연계 지원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 · 군 민주시민교육 센터 설치지원 등 2개 도비 보조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 있으며, 31개 전 시 · 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기도의 교육콘텐츠 및 운영노하우 등 자원을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71-3] 도-시군 민주시민교육 워크숍('19)

[사진 71-4] 시군 센터 담당자 간담회('20)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그 동안 성인, 청소년, 활동가, 군 장병,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양적 ·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 전역에 시민교육을 확산하여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지역사회 기반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 시민교육 주체 역량강화 및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하도록 돕고, 포스트코로나 교육환경에 적합한 비대면(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 · 배포할 예정이다.

72. 청년농업인 공동체 활동 지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부장 강동훈

- 추진배경 : 노동 인구의 고령화, 농촌 가계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
- 추진내용 : 6개 청년농부 공동체 선정 및 공동체 활성화 활동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농촌 가계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후계농을 찾기 어려운 상황
- 평　　가 : 인구감소 지역에서 활력 넘치는 인적자원 증가 기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다. '2017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촌의 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2.5%이고, 40세 미만 농업 경영주는 0.9%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업 · 농촌을 이끌어나갈 미래 주체를 어떻게 길러내는가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노동 인구의 고령화, 농촌 가계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맞물려 후계농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농촌은 청년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하지만 청년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일 이외의 지역 활동 프로그램 개발, 같은 지역 청년과의 네트워킹, 지역정착 문제점과 애로 해소 등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년이 살고 싶은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청년농업인 사업은 그간 유통 판로확대 중심의 마케팅지원 사업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활동을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 기반 구축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 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그들과 농촌지역 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도와 귀농을 원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만40세 미만으로 1개(지역별) 공동체에 3명 이상이 모인 6개 단체를 발굴 · 선정하고, 선정된 공동체별 800만 원까지 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비는 청년공동체가 직업 기획한 다양한 활동과 청년 모임 간 협력사업 운영 등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워크숍을 통하여 청년공동체의 어렵거나 배우고 싶은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여,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공동체 간 사업 공유를 통해 각 주체별 추진방향을 제시하며 같은 청년과의 소통활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청년농업인 공동체 공모: 6개 공동체 선정

경기도내 거주하는 만 40세 미만의 청년들 중 농산물을 직접 생산 · 가공하는 청년 창업농, 승계농 귀농인, 농업관련 협동조합, 농업 경영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및 청년(예비) 농업인, 친환경 청년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1개(지역별) 공동체에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활동하는 단체를 공모하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6개의 청년농업인 공동체를 선정하고 1개 단체당 최대 800만 원까지 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비는 청년공동체 활동과 청년 모임 간 협력사업 운영 등을 위한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강사비, 교통비, 식비 등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각종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표 72-1] 청년농부 공동체 사업 계획(안)

2020 청년농부 공동체 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5월 ~ 12월

□ 지원대상

□ 사 업 비 : 80,000천원(2년 출연금)

□ 사 업 량 : 청년농부 공동체 6개 내외(1개(지역별) 공동체 3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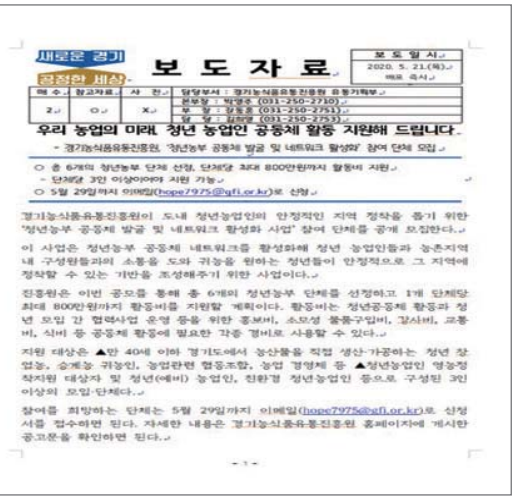
□ 사업목표 : 청년농부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역 정착과 지역 활력 제고 도모

"청년농부 공동체 활성화" / "청년농부가 모여 농업을 바꾼다"

□ 주요내용

□ 사업추진 절차

[표 72-2] 청년농부 공동체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5. 21.(목)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유통기획부

우리 농업의 미래, 청년 농업인 공동체 활동 지원해 드립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청년농부 공동체 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참여 단체 모집 -

○ 총 6개의 청년농부 단체 선정, 단체당 최대 800만원까지 활동비 지원

○ 5월 29일까지 이메일(hope7975@gfi.or.kr)로 신청

[표 72-3] 청년농부 공동체 선정

구분	공동체명	주요사업내용	비고
1	청춘농부들	팝업스토어 운영 및 농가체험 운영 등	가평
2	김포친환경 청년육성위원회	친환경 공동 텃밭 운영 등	김포
3	여주시청년미래농업연구회	청년창업농 맞춤 교육 및 미래농업 스터디 등	여주
4	용인친환경청년	친환경농산물 체험을 매개로한 농장 체험 등	용인
5	팜플렉스(farm flex)	프리마켓 운영 및 청년창업농 홍보 등	평택
6	깨농(깨끗한 농부들)	한탄강 청소 작업 및 쓰레기 섬 실태 조사 등	포천

2) 청년농부 공동체 워크숍

선발된 청년 공동체는 사업컨설팅을 통한 사업 구체화와 희망분야에 대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우선 워크숍을 통하여 2020년도 사업운영의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공동체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을 위한 사업화가 진행되며 공동체 간 소통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사진 72-1] 공동체 사업 설명

[사진 72-2] 사업컨설팅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청년의 기준

최근 청년과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사업이 늘어나면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 대상으로 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 왔다.

청년고용촉진법제2조에서는 청년을 만15세 이상 29세 이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를 만39세 이하,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기준은 만40세 미만이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조건은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인 자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청년 지원사업 중에서는 각 지자체의 만 65세 인구 비율에 따라 청년 기준을 만 45세 이하로 완화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청년의 기준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기준인 만40세 미만으로 청년의 기준을 잡았다.

2)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청년의 힘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움이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분명 침체되어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청년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야 하며, 청년에 관한 전문가는 그 누구도 아닌 청년이 되어야 한다. 분명 경험이 부족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나 그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공동체 기반으로 계속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사업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청년농업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활력 넘치는 인적자원 증가가 기대되며, 지역별 형성된 공동체는 청년 지역생활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와 공간으로 지역활동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모여서 진행한 사업은 지역여건을 반영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으로 발전하여 매력적인 정착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활동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3.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운영

외국인정책과 외국인권익팀장 김덕선

- 추진배경 : 현장에서 즉각적인 외국인주민 통역 지원 필요
- 추진내용 : 공공기관 · 병원 등 통역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통역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코로나19로 현장방문 통역대신 전화 등 비대면 통역지원
- 평　　가 : 사업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우수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의사소통이다. 특히 병원, 공공기관, 사업장, 은행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외국인들에게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발생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통역지원 사업은 센터나 단체를 내방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020년 의사소통이 필요한 현장에 통역서포터즈가 직접 방문하여 통역지원을 하는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부천시 등 10개 시 · 군에서 35명의 서포터즈가 위촉되어 14개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사업추진

사업추진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복지센터 등을 일선현장에서 활

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찾았다. 역시, 기존의 통역지원 사업은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고 직접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은 부족했다.

경기도 31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포천시, 가평군 10개 시 · 군이 사업을 신청하였다. 2020년 6월 말 현재 총 35명의 서포터즈가 위촉되었으며 일부 시 · 군에서는 서포터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표 73-1]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운영
○ 추진근거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6조
○ 사업기간 : 2020.1. ~ 2020.12.
○ 사 업 비 : 350백만 원(도비 100%)
○ 사 업 량 : 10개 시군 / 35명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을 통역서포터즈로 위촉하여 공공기관·병원 등 통역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통역지원
- 서포터즈 자격요건 : 결혼이민자 등 합법적인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인 자중
·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
· 한국어능력시험 3급(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보유자이면서 외국인주민 관련기관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활동 우수사례 소개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우주베키스탄인 외국인노동자 딜무러드 씨 이야기이다. 딜무러드 씨는 회사에서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 오른쪽 팔 근육 파열로 수술과 집중치료가 필요했다. 딜무러드 씨의 친구는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로 전화하였고 통역서포터즈가 긴급히 병원으로 방문해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역을 지원하였다.

또한 체류 및 회사에 문제가 될까 산재신청을 망설이는 딜무러드 씨를 설득해 산재를 신청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딜무러드 씨는 다행히 잘 치료를 받고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언어소통 및 정보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딜무러드 씨처럼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는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 이처럼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들의 활동들은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어가고 있다.

[표 73-2]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언어지원 현황(6월 말)

시군	통역지원 언어
부천	캄보디아어, (영어)
화성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일본어, 키르기스탄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일본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
남양주	(캄보디아어, 태국어, 네팔어)
평택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의정부	필리핀어
파주	캄보디아어, 태국어
시흥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김포	방글라데시어, 태국어,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포천	베트남어, 중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태국어, 인도어)
가평	베트남어

※ (괄호)는 채용 중인 통역서포터즈, 시군에서 확대 추진 중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2020년 3월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경기도 통역서포터즈들의 현장방문 통역이 어려워 가급적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통역지원을 하도록 사업방침을 변경하였고 7월부터 현장방문 통역을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외국인대상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긴급한 현장에서 통역서포터즈들이 의사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어 활약이 컸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통역서포터즈는 기존 통역지원사업과 달리 실제로 외국인들이 언어소통에서 문제를 겪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사업이 미진하였지만 현장에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가고 있으며 점차 시 · 군에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사업이 크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74.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강력 추진

체육과 체육행정팀장 김민헌

- 추진배경 : 빙상선수 성폭력 사건 계기 도내 체육계 (성)폭력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 추진내용 : 경기도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 스포츠 인권 정책 연구, 체육계 성평등 교육
- 문제점 및 해결 : 스포츠에 고착화된 성차별적 문화,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 평　　가 :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스포츠 인권 개선대책 마련, 도내 스포츠 인권 제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 및 주요 국가들은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대응형태는 관련 정부기관, 스포츠 연맹 및 연합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발행, 스포츠 성폭력 연구 진행, 성평등 교육 진행, 성범죄자 명단 공개, 조직 내 성폭력 담당자 지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성폭력은 젠더폭력의 한 유형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성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스포츠인권센터」를 운영 중이나 전문상담사가 매우 적고 담당 인력의 한계로 시 · 도 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이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체육단체 성폭력 근절 방지대책」(2019.1.16.)을 발표하고, 경기도 인권센터를 통한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및 구제 체계 정비, 인권침해 사전 방지 및 성폭력 신고센터 이용에 대

한 적극적인 홍보 등의 대책을 밝혔다. 그 밖에 31개 시 · 군체육회에서도 교육 및 홍보 등 성폭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내 엘리트 및 장애인 선수 대상 스포츠 선수 인권 실태조사 시행

경기도는 2019년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달간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의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 · 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선수들의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온라인설문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라 온라인조사와 1:1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을 병행하였다.

[사진 74-1]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 실태조사 관련 브리핑 및 언론보도

"체육계 성폭력 3회 적발 땐 영구제명"

경기도 6대 개선안 발표

도내 선수 2864명 실태조사
100명 중 6명꼴 "성폭력 경험"
장애인선수 70%는 "그냥 넘겨"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경기도 스포츠선수 100명 가운데 6명꼴로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이를 토대로 피해 경중을 따나 3회 적발 때 영구 제명하는 '삼진아웃' 징계기준을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1495명(전체의 52.2%) 가운데 6.6%인 98명(장애인 56명 중 3명, 비장애인 920명 중 95명)이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을 보면 장애인 선수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4% 19명), 신체 부위를 줄어들는 불쾌한 느낌(0.9% 5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1.9% 11명), 신체 일부 도촬(0.2% 1명) 및 무단 유포(1.4% 8명) 등이다.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 32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3% 24명), 회식 자리 술 권 따르기 강요(2% 23명) 등이다.

피해를 받을 때 대처방식을 보면 60% 이상이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그냥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선수들은 그냥 웃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임(45.9%), 참고 모르는 척(24.3%), 간접적인 의사 표시(18.9%) 순이었으며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도 참고 모르는 척(24.3%), 간접적인 의사 표시(18.9%)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의 경우 소속팀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이었으며 장애인의 경우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이었다.

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6대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스포츠인권 특별대책센터(스포츠기가) 위원회를 구성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3회 적발되면 영구 제명 처분하는 등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뿌리 뽑는다

조사결과 1,495명이 응답(52.2%)했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성폭력(성희롱) 피해경험이 6.9%(39명), 비장애인 선수들은 6.4%(59명)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의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의 비율이 높았고, 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육계 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 모두 '철저한 성폭력예방교육(비장애인 34.1%, 장애인 42.5%)'과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 · 집행(비장애인 32.7%, 장애인 26.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및 구제 체계 정비

체육계 특유의 폐쇄적 조직문화 등으로 성폭력 신고율이 낮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수들의 훈련장소 등과 같이 성폭력 발생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경기도인권센터(성평등 옴부즈만)에서 찾아가는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성평등 옴부즈만)에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통일된 접수창구 접근성 및 사건 대응을 용이하게 개선해 나가고, 접수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하여 도움을 주는 체계를 정비하였다.

※ 道인권센터 성폭력, 폭력 상담 전문가 배치 운영(2019.1.28.)

3) 체육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경기도는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경기도형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관 하에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코치, 감독 등 지도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도(관리)자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대응방안 안내", "지도자로서의 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수들 대상으로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조직의 위계구조 내 인권문제", "성폭력 지원체계 안내(신고,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4-1] 경기도 스포츠 성평등 교육 개요

- 대 상 : 코치, 감독 등 지도자 및 관리자

교시	시간	주제	교육내용
1교시	14:00 ~16:00	성인지감수성 향상 워크숍 (지도자과정)	▶지도(관리)자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역할과 젠더 차이 이해
2교시	16:00 ~18:00	성평등과 인권: 지도자의 책무	▶성희롱·성폭력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대응방안 안내(정부방침, 신고, 상담 등 지원체계) ▶지도자로서의 책무 등

- 대 상 : 선수,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교육

교시	시간	주제	교육내용
1교시	14:00 ~16:00	성인지감수성 향상 워크숍 (선수과정)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역할과 젠더 차이 이해
2교시	16:00 ~18:00	성평등과 인권 (젠더 임파워링)	▶조직의 위계구조 내 인권문제 등 ▶성희롱 · 성폭력의 개념과 사례 ▶성폭력 지원체계 안내 (신고, 상담 등)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교육은 2019년 7월 26일부터 시작하였다. 연말까지 도 및 시·군 직장운동부, 시 · 군 체육회 소속 지도자 및 선수, 도내 대학교 운동선수 등 37개 기관 1,38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 하반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교육 자제, 주요대회 및 훈련 일정으로 총 20회, 380명(선수 359명, 지도자 21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향후에도 매년 경기도 내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및 인권보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74-2] 경기도 내 선수 및 지도자 대상 성평등 교육 진행

4) 성폭력 가해 지도자(선수) 징계 기준 강화 제도개선(안) 건의('19.7.25.)

경기도 내 스포츠인권 특별대책 TF팀 운영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별기준의 경우 폭력은 "징계 협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 "중대한 경우"로 구분하여 위반행위를 정의하였고, 제도개선(안)은 "1회 적발된 경우", "2회 적발된 경우", "3회 적발된 경우"로 구분하여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제도개선(안)을 2019년 7월 25일 대한체육회에 건의하였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가해자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에 건의하여 관계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5) 道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 및 무료소송 지원

기존에는 피해자가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잘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하여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소송도 상시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시 · 군 성폭력 상담소(남부 21개소, 북부 14개소),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협력하여 법률구조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미술·음악치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6) 인권침해 사전방지 및 성폭력 신고센터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경기도 체육계 전반에 걸쳐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들께서 스포츠선수 인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침해 예방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경기도 G버스,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체육계 (성)폭력 신고절

차, 법률지원기관,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어 배부하였다.

리플릿은 도청 직장운동부, 경기도 종목단체(65개), 경기도장애인종목단체(35개), 시 · 군 체육회 직장운동부(31개), 시 · 군 장애인체육회(30개), 도내 대학(30개)에 발송하고 직접 선수들에게 배부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 ·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실태조사 참여도 확보

실태조사 시 지도자를 통해 설문조사지를 배부할 경우 응답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이에 2차 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URL을 보내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운동부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부 시 선수생활에 불이익 우려', '소문에 대한 두려움', '운동부 관계 유지' 등이 있다. 또한 훈련과정에서 지도자가 부당한 이야기를 할 경우 거절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위계와 통제의 문화를 내재하고 있는 체육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태조사는 초기에 응답률이 저조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조사가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홍보 및 각 단체를 통한 실태조사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응답률을 제고하였고, 유의미한 통계 · 결과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2) 성평등 교육 참여도 제고

초기 성평등교육 진행 시 각 권역별로 집합하여 교육하는 방식을 계획하였으나 하반기에 전국 단위 대회가 집중되어 있고, 각 단체별로 훈련 일정이 다양하다 보니 교육 참여율이 낮았다.

이에 각 시군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여 참여도를 제고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집단교육을 기피하게 되어 목표한 교육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향후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여 상황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은 스포츠 선수의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근거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결과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향후 '안전하고 차별 없는 체육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체육계 성폭력 예방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체육계의 성차별 구조 및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인 성평등 · 인권증진 교육 진행 및 지도자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3절 역사로 이어지는 과거와 현재

75.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

청소년과 청소년활동팀장 김찬범

- 추진배경 : 도지사 지시사항 104(155)번, 도내 중학생 대상 해외 역사의식 관련 유적지 답사
- 추진내용 : 도내 중학생 등 1,000여 명 해외(상해지역, 러시아 연해주지역 등) 항일 · 독립운동 거점지 답사
- 문제점 및 해결 : 낯선 문화권에서의 생활, 사전교육
- 평　　가 : 안전한 답사 수행 및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내용이 명시될 만큼 우리 역사에 큰 사건이며, 현재 대한민국을 있게 한 중요한 밑거름이다.

이에 도내 청소년에게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교과서의 단순한 문자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장소를 직접 답사하여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역사의 흐름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역사교육을 통하여 선조들이 겪은 어려움과 이를 이겨낸 강인한 정신과 지혜를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알려 미래사회를 선도할 경기도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의 구성 등 참가자의 효과적인 교육 및 안전한 답사를 위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협력하였으며, 답사지 선정, 사전교육, 참가자 관리 등 원활한 협조를 통해 참가 청소년들의 교육적 효과 및 만족도 제고 등 역사원정대 프로그램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 검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중학생역사원정대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협력을 요청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었다. 1,000명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학기 중에 출석인정을 받아 역사원정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협조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참가 청소년이 꼭 가봐야 할 중국과 러시아의 답사지 대상 선정, 참가 대상(중2) 및 선발 기준 등을 함께 논의하여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사업을 검토함과 동시에 유사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논산시, 당진시, 성남시를 방문하였다. 담당자를 통해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사업의 장 · 단점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들을 수 있었다. 비교적 참가 청소년수가 소규모이거나 각 학교 주체로 사업이 운영되는 등 다른 점이 있었지만 참가 청소년 관리 및 일정 등과 관련하여 사업 노하우가 담긴 의견을 진솔하게 이야기 해주었으며, 특히 참가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19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지역,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중국 상해 · 항저우 지역 사전답사를 실시하였다. 구성원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다녀왔으며, 답사를 통해 답사지 후보군을 방문하여 탐방 여건(유적소실, 탐방동선 등)을 확인하고 최종 답사지를 선정하였으며, 숙식에 대한 제반 상황을 점검하여 청소년들이 최

대한 건전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3박 4일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러시아 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사지의 선정이었다. 러시아 지역 특성상 항일 · 독립 유적지의 대부분은 이미 없어지거나,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가 많아 답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답사지 선정 및 답사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 졌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크라스키노까지 이동 거리가 길고 블라디보스토크 외에는 마땅한 호텔이 없어 이동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 우려됐다.

[사진 75-1] 러시아 사전답사

신한촌 기념비	크라스키노 마을 전경	라즈돌노예역

이에 방문일정을 크라스키노를 제외한 블라디보크토크와 우수리스크로 축소하고,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학교와 연계하여 고려인 후손과의 만남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재미있고, 안전하게 체험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중국 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정대 동선과 음식 선정이었다. 중국은 러시아와 다르게 항일 · 독립 유적지 대부분이 국가 또는 지역의 문화재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유적지가 최대한 잘 보존되어 있고, 한국말이 가능한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탐방하여 역사를 느끼고 체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상해부터 시작되는 임시정부 및 항일 · 독립운동의 역사의 흔적과 관련된 장소가 많아 정해진 일정 내에 모든 유적을 다 탐방하기에는 청소년들에게 체력적 부담이 우려 되었으며, 중국음식 특유의 냄새 때문에 매 끼니마다 성인조차 먹기 어려운 음식들이 한두 가지 포함되어 있어 참가 청소년들이 식사를 원활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는 가질 수가 없었다.

[사진 75-2] 중국 사전답사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재청별장 전시관

오복리 요인가족 거주지

이에 중국 탐방 일정을 상해에서 항주까지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고 임시정부 청사 및 주요 인물들의 거주지 또는 피난처 등의 유적 탐방을 계획하였다. 식사는 1일중 1식은 의무적으로 한식을 제공하고, 현지식당을 이용할 때에도 최대한 청소년 입맛에 맞을 음식을 선택하였고, 원정대 기간 중에도 참가 청소년들의 반응을 보면서 메뉴를 수정하였다. 또한 간식을 하루 3회 이상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먹는 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2) 선발 및 사전 교육

2019년 2월 28일 도지사 SNS에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 관련 글 개제 이후 참가 청소년 선발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였다. 청소년 선발 관련하여 중학생(2학년) 31개 팀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도내 교육지원청에서 시 · 군 별로 총 31개 팀을 선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①역사 · 독도 · 평화통일 등 관련 동아리 활동이 우수한 학생 ②역사탐방에 대한 참여의지 및 탐방계획 작성이 우수한 학생 ③도내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및 유경험학생 ④사회적배려계층, 해외여행 무경험자 등 금회 탐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순으로 선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독립유공자 후손 중 중학생 2학년에 해당하는 13명에 대하여는 자신이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2개 팀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선발하였는데,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였다.

[사진 75-3] 사전교육 등

도지사 SNS

양평시 사전교육

학교밖 청소년 사전교육

학생 선발만큼 중요한 것이 인솔자 선발이었다. 학생팀 인솔자는 탐방 중 유적지 관련 교육과 야간 워크숍을 진행할 역사교사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질 보건교사를, 학교밖청소년팀은 참가 청소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 4명과 도청 내 간호사자격증 소지 주무관 1명을 배치하였고 역사해설을 위해 독립기념관 소속의 역사 전문가 1명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공통으로 현지에서 탐방 전체를 총괄할 공무원 1명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소방공무원 1명을 선발하였으며, 추후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학생팀은 지역교육청 장학사 1명이 추가 되었다.

참가자 사전교육은 답사 2주 이내에 지역 별로 추진되었으며, 각 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한 장소에서 여행안내(여행사), 안전교육(외교부 등), 역사교육(역사교사 등), 친교시간(전문 강사)로 진행되었다. 이때 참가 청소년뿐 아니라 교사, 공무원, 소방관 등 탐방에 모든 참가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하였는데 학기 중에 사전교육이 진행되는 지역은 수업이 마친 후에 사전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밤 9시가 다 되어서 끝나는 지역도 발생했다. 그로 인해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시간을 조금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전교육, 역사교육, 친교시간 어느 하나 소홀해서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탐방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전교육을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더라고 주어진 교육을 모두 이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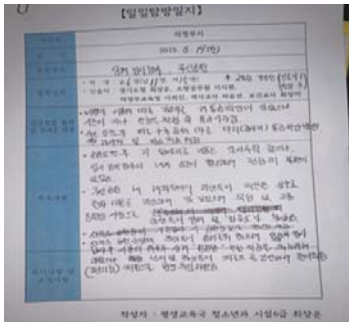
3)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 추진

2019년 8월 13일 드디어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하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손희정 도의원, 이진연 도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였으며, 부천, 의정부, 하남시 참가 청소년 등 13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역사원정대 선서를 통해 역사원정대 사업의 의의를 밝히고, 도지사로부터 안전하게 다녀오라는 당부의 말을 들었다.

[사진 75-4] 발대식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원정대 선서</td>
<td>원정대 물품 착용</td>
<td>발대식 단체 사진</td>
</tr>
</table>

[사진 75-5]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의정부) 탐방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일일탐방일지(8.19.)</td>
<td>임시정부청사(상해)</td>
<td>윤봉길 기념관 헌화</td>
</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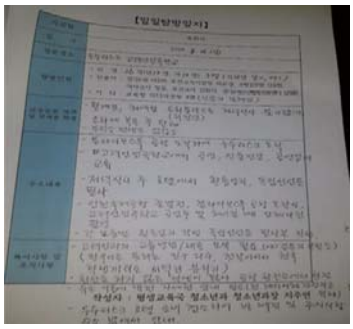
2019년 8월 19일은 의정부시 청소년들이 역사적인 경기도중학생역사원정대의 첫 발을 내딛은 날이다. 중국 상해 지역으로 답사를 떠난 의정부시 원정대는 1일차에 상해임시정부청사, 루쉰 공원 내 윤봉길 기념관, 상해서커스 관람을, 2일차에 동방명주탑 관람 후 가흥으로 이동하여 일휘교(요인 거주지), 매만가(김구피난처) 탐방 후 해염으로 이동하여 재

청별장(김구피난처)을 탐방하고 3일차에 항주임시정부청사, 오복리 · 사흠방 요인거주지 및 독립당사무소 탐방 후 성확각 및 청하방옛거리 문화체험을, 4일차에는 서호 관람 후 항주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일정을 소화하였다.

당시(8.19.~21.) 중국 상해 지역은 39도를 넘나드는 폭염의 날씨와 2일차에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현기증, 멀미 등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예상하지 못한 모기 등 해충 피해로 인해 탐방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의정부팀 탐방 후 멀미약 및 모기퇴치제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이후에는 비교적 순조로운 탐방이 이루어졌으나 파주팀(8.20.~23.), 부천팀(8.26.~29.), 김포팀(8.27.~30.), 하남팀(9.2.~5.), 연천팀(9.3.~6.) 역시 고온의 날씨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 되었다.

러시아 지역 답사는 2019년 8월 25일 포천팀 청소년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1일차에 고려인 민족학교 공연 관람 및 고려인 후손 교류, 2일차에 고려인문화센터(안중근기념비), 최재형 고택방문, 4월참변추모탑 및 이상설 유허지 탐방, 라즈돌노예역 탐방 및 러시아 열차 체험을, 3일차에 루스키섬 및 극동연방대학 방문, 아르바트 거리 및 해양공원(신한촌 이주기념비) 및 혁명광장 일대, 조명희문학비와 독수리전망대 관람을, 4일차에 러시아 사원 및 신한촌기념비를 탐방하고 귀국하는 일정을 소화하였다.

[사진 75-6]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포천) 탐방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일일탐방일지(8.25.)</td>
<td>이상설 유허지</td>
<td>고려인 후손 교류</td>
</tr>
</table>

역사유적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러시아 지역은 각 역사유적마다 가이드의 기본 설명, 참가 청소년의 사전 과제 발표, 역사교사의 부연설명 순으로 진행하였다. 가이

드의 역사 지식이 부족하여 포천시 답사 후 해당 가이드를 전면적으로 교체 요청하였다. 고려인 후손 교류 시에는 서로가 낯설어 지도자가 1명씩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 이후 간단한 게임(윷놀이 등) 및 놀이를 준비하여 교류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수정하였다.

중국은 총17회, 러시아는 총16회 답사가 연달아 진행되었으며,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75-1]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 탐방 일정

중국(17)				러시아(16)			
순	지역	인원	기 간	순	지역	인원	기 간
1	의정부	35	8.19. ~ 8.22.	1	포천	36	8.25. ~ 8.28.
2	파주	36	8.20. ~ 8.23.	2	양주	31	9.16 ~ 9.19.
3	부천	31	8.26. ~ 8.29.	3	시흥	31	9.19. ~ 9.22.
4	김포	31	8.27. ~ 8.30.	4	의왕	30	9.20. ~ 9.23.
5	하남	31	9.2. ~ 9.5.	5	군포	31	9.23. ~ 9.26.
6	연천	31	9.3. ~ 9.6.	6	학교밖	31	9.30. ~ 10.3.
7	이천	31	9.4. ~ 9.7.	7	평택	32	10.7. ~ 10.10.
8	동두천	30	9.8. ~ 9.11.	8	과천	31	10.14. ~ 10.17.
9	안산	31	9.16. ~ 9.19.	9	성남	32	10.16. ~ 10.19.
10	여주	31	9.17. ~ 9.20.	10	양평	31	10.21. ~ 10.23.
11	학교밖	34	9.23. ~ 9.26.	11	화성	37	10.23. ~ 10.26.
12	광명	31	10.7. ~ 10.10.	12	광주	31	10.24. ~ 10.27.
13	안양	31	10.14. ~ 10.17.	13	구리	32	10.27. ~ 10.30.
14	안성	31	10.18. ~ 10.21.	14	가평	31	10.28. ~ 10.31.
15	고양	34	10.21. ~ 10.24.	15	남양주	31	10.30. ~ 11.2.
16	용인	38	10.22. ~ 10.25.	16	수원	33	10.31. ~□11.3.
17	오산	31	10.23. ~ 10.26.				
합계	548			합계	511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사업 추진 전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을 때부터 탐방 중 사고에 대한 우려들이 많

았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중학생 2학년을 사업대상자로 추천하였을 때도 '단, 신청자 중 우수한 학생 선발일 경우 가능' 이라는 단서가 있었다. 간혹 참가자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이 어려워 잠을 설치거나,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함께 간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기 물건을 챙기지 못하여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나 숙소를 옮길 때면 인솔자들이 참가자가 머문 곳을 일일이 확인하였으며, 아침저녁으로 '아픈 곳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등을 점검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단 한 건의 사건 · 사고 없이 안전하게 3개월 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33개 팀 1,000여 명의 참가자들, 3개월 간의 운영기간, 변화무쌍한 해외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 · 사고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다양한 노력들이 총 망라되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를 여러 번 방문하여 협조를 구했으며, 중국 · 러시아 대사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였고, 팀별로 양호교사 · 소방관을 배치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였으며, 매 팀마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매일 참가자들이 취침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도 상황대기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점을 둔 점은 '단체 인솔에 따른 인솔자 교육'과 '현지 상황의 즉각 대응'이었다.

1) 단체 인솔에 따른 인솔자 교육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성공적인 탐방을 위하여 참여 청소년 선발만큼 중요한 것이 인솔자 선발이다. 인솔자 간의 협력 정도, 인솔자의 교육정도에 따라 역사원정대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답사의 질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우선 경기도청 인솔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주요 역할 및 임무에 대하여 교육을 한 차례 진행하였으며 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지원청 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2차례(남부 · 북부)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출국 10일 전에 참가 청소년 및 인솔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전교육을 33팀 전체 실시하였고, 출국 2~3일전 담당 공무원을 개별 방문하여 최신으로 수정되는 현지 사정 및 답사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일정이 1/2 진행되었을 무렵 인솔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간 보고회를 열어 답사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개선사항 및 발

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사전교육 시 인솔자들 간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인솔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순차적인 탐방 후 수정되는 상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인솔자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현지 상황의 즉각 대응

중국 답사지는 2층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도 계단이 좁고 높아 사전답사 때부터 낙상이 우려 되었다. 이에 각 지역 사전교육마다 주의를 주고 인솔자를 계단 주의에 배치하여 안내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아니나 다를까 계단에 발을 헛디딘 참가자가 발생하였다. 다행이 작은 찰과상 정도여서 함께 한 보건선생님이 치료한 후 무사히 탐방을 마칠 수 있었다. 예상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인솔자의 구성이나 사전교육을 통하여 최대한 예방하고 대처하였지만,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예상할 수는 없었다.

중국 답사가 몇 회 남지 않은 9월경 항주에 있는 임시정부청사 내부공사(10.22.~)로 인해 항주임시정부청사 방문이 어렵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항주임시정부청사 내부공사를 연기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청해 보았지만 연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이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는 4개 팀은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일정변경은 단순 답사장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동선 변경, 식당, 숙소 동선에 따른 편의를 모두 변경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 답사 후보군 중에 동선을 최소한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변경된 장소는 만국공묘, 위안부박물관, 항주고려사 등이다. 사전답사 시 규모와 답사 목적을 고려하여 배제되었던 곳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국공묘나 위안부박물관은 참가 청소년들에게 깊은 인상과 만족을 주었다.

이천시 원정대가 중국으로 답사를 떠난 기간(9.4.~7.) 중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항주에서 인천으로 운항하는 항공기(15:00시 출발예정)가 지연되었다. 일정에 따라 점심을

먹고 13시 전에 공항에 도착한 원정대는 공항에 발이 묶인 상태에서 태풍이 잦아져 비행기가 운행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국내에서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합동안전대책본부 구성을 논의하였다. 다행히 21:05분에 인천행 비행기가 이륙하였고, 인천공항을 통해 이천교육지원청에 도착하였을 때는 오전 3시 30분이었으며, 26명 전원 부모님들이 마중을 나와 안전하게 귀가 조치하게 되었다. 담당 부서는 채팅방을 통해 현지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현지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여행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음식 및 담요제공 등 지원책을 강구하였으며, 항공스케줄을 체크하며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비상근무를 하며 상황에 맞게 대응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응답하라1919, 임시정부100주년 기념 경기도중학생역사원정대' 사업 결과 청소년들에게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임시정부 요인 등 독립운동가의 삶에 대한 현장 체험을 통해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배우고 깨닫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려인 민족공연 관람 및 고려인 후손과의 교류를 통해 고려인의 이주역사와 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항일 무장 투쟁 학습 등 단순 관광이 아닌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도모 하였다.

[표 75-2] 안전 대책 및 사전교육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합동안전대책본부 구성도</td>
<td>별도 응급차량 상시 동행</td>
<td>3.1 독립선언서 필사</td>
</tr>
</table>

특히, 3.1독립선언서 필사본 작성 및 탐방 유적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청 등 사전 과제

를 이행하고, 사전과제 발표 및 탐방지에서 야간시간을 이용한 연계 활동을 통해 체험활동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道 · 교육청 · 인솔자 간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별도 응급차량 상시 동행 등과 외교부 · 영상관 · 연해주정부 등 합동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무사하게 탐방을 완료 하였다.

1) 사업 효과성 및 탐방 만족도 조사 결과

경기도중학생역사원정대의 사업의 성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고자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소와 함께 역사원정대 참가자 934명을 대상으로 사업효과성과 탐방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탐방에 참가하기 전에 사전평가(14문항)를 사전교육 시 조사하고, 탐방 3일차 저녁에 사후평가(21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해외여행 등 국제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591명(63.3%)로 나왔으며, 2회 이상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09명(22.3%)로 참가자 선발이 비교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으로 선발되었으며,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항일 역사의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됨' 등과 같이 참여 전 · 후 역사인식에 대한 높은 교육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됨',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협동심을 높이는 기회가 됨'과 같이 청소년이 올바른 역사인식 교육을 통해 자아인식의 증대 및 공동체 가치 학습으로 청소년의 인성학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만족도에 있어서는 '현지에서 제공한 음식'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함께 파견된 인솔자', '이번 교류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탐방국 현지에 진행된 프로그램 내용', '현지에서 제공한 교통수단', '탐방국 현지에 진행된 프로그램 진행과정 및 일정' 순으로 참가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연구팀은 경기도청소년역사원정대를 "사업의 높은 교육적 가치와 효과성을 확인했고, 역사인식 변화수준과 높은 탐방 만족도 결과를 통해 사업의 계속 운영과

수혜대상자 확대가 필요”라고 평가했다.

[사진 75-7] 사후활동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역사신문 만들기</td>
<td>활동사례집 등</td>
<td>활동결과보고회</td>
</tr>
</table>

2) 개선사항

연구팀은 경기도중학생역사원정대를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개선사항 역시 전달하였는데,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점을 들어 향후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선정하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활동결과보고회 및 자체 평가회의 등을 통해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많은 참가자들이 지적한 부분은 ‘주말을 포함한 탐방일정’으로 주말을 포함하여 탐방에 참가했을 경우 참가 청소년 및 인솔자 모두 탐방을 마친 후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겨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함에 따라 피로누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잘된 부분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의견은 ‘별도 수송차량 상시동행’으로 탐방 기간 내내 아이들을 수송한 대형 버스 외에 별도로 9인승 내외의 차량을 상시 동행시켰는데, 차량은 체력이 저하된 참가자 및 환자의 휴식 및 비상시 사용(비상약 구입, 분실물 수령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많은 인솔자들이 별도 차량에 대하여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중학생 역사원정대는 1,000여 명의 참가자가 33번의 릴레이 탐방 활동을 진행한 사업으로 기존에 경기도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도청 전 부서의 한마음 한뜻으로 무사하고 의미 있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 해는 지나갔지만 그 정신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76.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추진

문화종무과 문화정책팀장 김도형

-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
- 추진내용 : 103억 원의 재원을 확보, '긴급활동 지원', '취약근로자 보호',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 · 사용료 감면' 등 3개 분야 18개 사업을 통해 2,400여 명, 1,700여 개 단체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재원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사업재편. 경기문화재단은 창립 이래 최초로 기본재산 활용(20억 원)
- 평　　가 :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 관광업계 지원과 도민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증진 도모. 비대면 사업 발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발전방향 제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2020년 코로나19까지 재난 상황을 맞아 장기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단으로 예술인들은 수입 감소와 준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박물관 · 미술관 등 문화시설 휴관으로 해설 · 체험 · 교육 프로그램 강사나 프리랜서가 활동중단으로 인한 생계 위기에 처하였다. 영화산업은 매출 대부분을 극장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2020년 3월 영화관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87% 감소하여 투자 · 배급사뿐만 아니라 촬영 현장의 스태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외국인 관광객 급감 및 관광지 입장객 감소로 관광업계도 신음에 처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을 위해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103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 ‘긴급활동 지원’, ‘취약근로자 보호’,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 · 사용료 감면’ 등 3개 분야, 2,413명, 1,732개 단체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하고, 2020년 4월 13일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인, 관광업계 의견수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중단되어 사실상 실업상태에 처해있으며, 통신료·전기료·임대료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도 얘기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매출 등 실적을 제출할 수 없는 예술인들은 소외받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 너무도 어렵기에 예술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 지원을 호소하였다.

[표 76-1]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 관광업계 의견수렴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인 의견수렴 간담회(3.30.) 주요의견>

○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문화예술계 6개월 이상 침체, 종사자 사실상 실업상태. 통신료, 전기료,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상황이며, 신용불량자가 된 예술인도 있음

○ **현재 정부의 지원책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대출지원 등도 매출액 등 실적을 요구. 프리랜서가 대다수인 예술인이 소외되고 있으며, 실적이 없는 청년예술인이 지원받기는 사실상 불가능**

○ 택배, 대리기사를 해서라도 예술의 끈을 놓지 않았으나 현 상황은 너무 어려움. 예술인들이 버틸 수 있게 경기도에서 지원 요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경기관광 민관대책회의(3.25.) 주요의견 >

○ 관광업은 여타 업종과 달리 계절적 ·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민감한 산업임. 특히, 예약제로 이루어지는 업종 특수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상당 기간 수요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과 같은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유원시설, 숙박 등 여타 관련 산업의 상태호전과 관광수요자의 의식이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리라 예상되기에 금년 하반기 관광수요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관광산업이 속절없이 무너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

2)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추진

문화예술관광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5개 기관과 2020년 3월 중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나눠주기식 접근이 아닌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원시책, 현장활동이 중단된 취약근로자에게 콘텐츠 제공 및 기량향상을 유도하여 수입확보 및 지속적 활동유지 기반 마련, 매출이 급감된 단체 · 업계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문화향유 기반 체계 마련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였다.

'긴급활동 지원', '취약근로자 보호',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 · 사용료 감면' 등 3개 분야 18개 사업을 마련하여 2,400여 명, 1,700여 단체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020년 4월 1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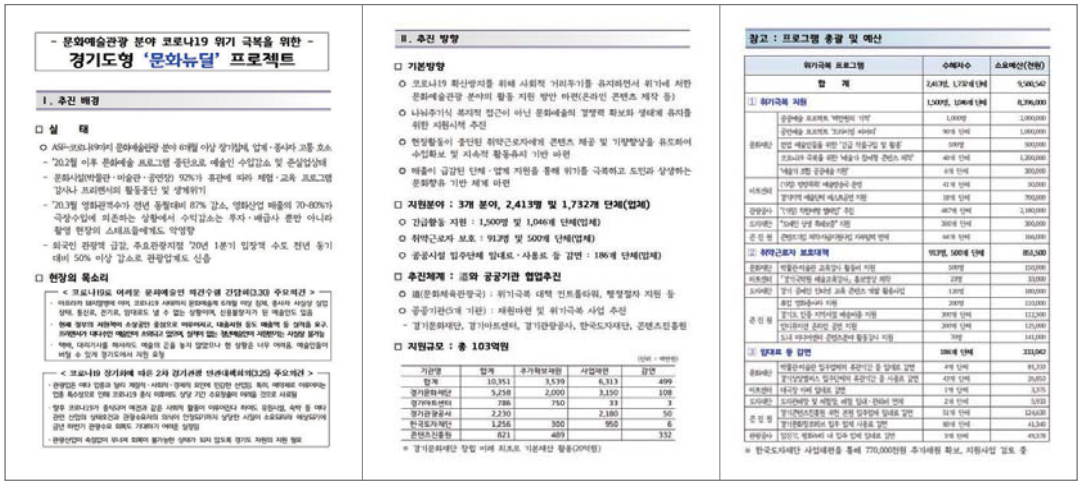
첫 번째 긴급활동지원 분야는 심사와 정산을 간소화한 신속공모를 통해 위기에 처한 예술인 1,000명을 지원하는 '백만 원의 기적', 도민들이 유료관광지 입장권을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선구매하고 할인금액의 일정액을 관광업계에 지원하는 '착한여행 캠페인',

경기아트센터 공연장을 활용해 도내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무관중 공연 및 온라인 방송을 지원하는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도예업체에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의 자금을 2.8% 내외의 저렴한 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도예인 상생 특례지원', 자동차 극장 방식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을 개최 지원하는 '드라이빙 씨어터'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취약근로자 보호 분야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과 지역서점 배송비용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활동이 중단된 예술강사, 영화종사자, 공예인, 인디뮤지션, 미디어센터 활동강사, 지역서점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은 문화시설 휴관과 오프라인 교육 · 체험 프로그램 취소 · 연기로 생계위기에 처한 예술강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켜 활동 유지와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저변확대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서점 배송비용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점 방문이 줄고 인터넷을 통한 도서 배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 배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는 도립 박물관 · 미술관,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문화창조허브 등 공공시설에 입주해 있는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다.

[표 76-2]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추진계획



- 문화예술관광 분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Ⅰ. 추진 배경

□ 실 태

○ ASF·코로나19여비 문화예술관광 분야 6개월 이상 장기침체, 업계·종사자 고통 호소
- '20.2월 이후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단으로 예술인 수입감소 및 존심업심해
-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공연장) 92%가 휴관에 따라 체험·교육 프로그램 강사나 프리랜서의 활동중단 및 생계위기
- '20.3월 영화관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87% 감소, 영화산업 매출의 70-80%가 극장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익감소는 투자·배급사 뿐만 아니라 촬영 현장의 스태프들에게도 악영향
- 외국인 관광객 급감, 주요관광지점 '20년 1분기 입장객 수도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감소로 관광업계도 신음

□ 현장의 목소리

<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인 특례수혜 간담회(3.30) 주요의견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경기관광 진흥대책회의(3.25) 주요의견 >

Ⅱ. 추진 방향

□ 기본방향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동 지원 방안 마련(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 나눔주기식 복지적 접근이 아닌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
○ 현장활동이 중단된 취약근로자에게 콘텐츠 제공 및 기량발달을 유도하여 수입확보 및 지속적 활동유지 기반 마련
○ 매출이 급감한 단체·업체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문화향유 기반 체제 마련

□ 지원분야 : 3개 분야, 2,413명 및 1,732개 단체(업체)

○ 긴급활동 지원 : 1,500명 및 1,046개 단체(업체)
○ 취약근로자 보호 : 913명 및 500개 단체(업체)
○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사용료 등 감면 : 186개 단체(업체)

□ 추진체계 : 도와 공공기관 협업추진

○ 도(문화체육관광국) : 위기극복 대책 반트롤타워, 행정절차 지원 등
○ 공공기관(5개 기관) : 재원마련 및 위기극복 사업 추진
-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콘텐츠진흥원

□ 지원규모 : 총 103억원

기관명	합계	추가확보재원	사업재원	감면
합계	10,351	3,539	6,313	499
경기문화재단	5,258	2,000	3,150	108
경기아트센터	786	750	33	3
경기관광공사	2,230		2,180	50
한국도자재단	1,256	300	950	6
콘텐츠진흥원	821	489		332

※ 경기문화재단 항목 이외 지표로 기본재단 활용(20억원)

참고 : 프로그램 총괄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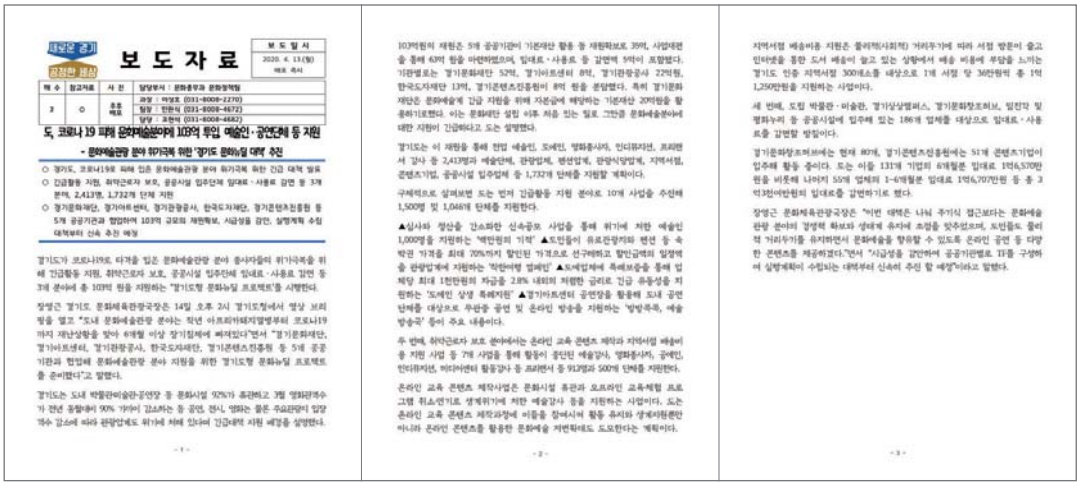
위기극복 프로그램	수혜자수	소요예산(천원)
합 계	2,413명, 1,732개 단체	9,500,542
Ⅰ 위기극복 지원	1,500명, 1,046개 단체	8,396,000
문화예술	공연예술 프로젝트 '백만원의 기적'	1,000명	2,000,000
	공연예술 프로젝트 '드라이빙 씨어터'	90개 단체	1,080,000
	방방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 작품구입 및 활용"	50명	500,000
	프로그램 극복을 위한 "예술극장 협력형 콘텐츠 제작"	40개 단체	1,200,000
	"예술의 전당 온라인관 지원"	0개 단체	300,000
미디어센터	디지털 영상제작 예술인공모 준비	41개 단체	30,000
	경기콘텐츠랩(콘텐츠)공모전 지원	10개 단체	700,000
관광공사	"디지털 역량강화 챌린지" 지원	46개 단체	2,300,000
도자센터	"도예인 상생 특례보증" 지원	300개 단체	300,000
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업 제작사업(개발)지 지원계획 반영	84개 단체	166,000
Ⅱ 취약근로자 보호대책	913명, 500개 단체	803,500
문화예술	박물관·미술관 교육강사 활동비 지원	500명	150,000
미디센터	「찾아가는 예술교육강사」 활동비 지원	22명	33,000
도자센터	경기 공예인 단체전 교육 콘텐츠 개발 활동비	120명	180,000
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업종분야 지원	200명	110,000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배송비용 지원	300개 단체	112,500
	인디뮤지션 온라인 공연 지원	300개 단체	135,000
	도내 지역서점의 콘텐츠센터 활동강사 지원	70명	141,000
Ⅲ 입주료 등 감면	186개 단체	331,042
문화예술	박물관·미술관 입주업체의 휴관기간 중 임대료 감면	4개 단체	81,333
	경기상상캠퍼스 입주기업의 휴관기간 중 사용료 감면	42개 단체	26,853
미디센터	대관장 이력 입대료 감면	1개 단체	3,375
도자센터	도자전예관 및 세계실 입대·전대비 면제	2개 단체	3,920
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관련 콘텐츠업체 입대료 감면	33개 단체	124,630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입주 업체 사용료 감면	80개 단체	41,340
관광공사	입주기업 지원사업 내 입주 업체 입대료 감면	3개 단체	49,376

※ 한국도자재단 사업재원을 통해 770,000천원 추가재원 확보, 지원사업 검토 중

[사진 76-1]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보도현황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3일 '경기도 문화뉴딜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표 76-3]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13(월) 배포 즉시

책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문화콘텐츠과 문화정책팀
3	0	흑백 컬러	과장 : 이상호 (031-8008-2270) 팀장 : 한한식 (031-8008-4672) 담당 : 조현석 (031-8008-4682)

도, 코로나 19 피해 문화예술분야에 103억 투입 예술인·공연단체 등 지원

- 문화예술관광 분야 위기극복 위한 '경기도 문화뉴딜 대책' 추진

○ 경기도,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문화예술관광 분야 위기극복 위한 긴급 대책 발표
○ 긴급활동 지원, 취약근로자 보호,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사용료 감면 등 3개 분야, 2,413명, 1,732개 단체 지원
○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103억 규모의 재원확보, 시급성을 감안, 심청계획 수립 대책회의 신속 추진 예정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관광 분야 종사자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활동 지원, 취약근로자 보호,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사용료 감면 등 3개 분야에 총 103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4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열상 브리핑을 열고 "도내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재난상황을 맞아 6개월 이상 장기침체에 빠져있다"면서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협업해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92%가 휴관하고 3월 영화관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9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공연, 전시, 영화는 물론 주요관광이 일제히 감소에 따라 관광업계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긴급대책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1-

103억원의 재원은 5개 공공기관이 기존재산 활용 등 재원확보로 39억, 사업대체를 통해 63억 원을 마련하였으며, 입대료·사용료 등 감면액 9억이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경기문화재단 52억, 경기아트센터 8억, 경기관광공사 22억원, 한국도자재단 13억, 경기콘텐츠진흥원이 8억 원을 분담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 긴급 지원을 위해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본재산 2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문화재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긴급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재원을 통해 한업 예술인, 도예인, 영화종사자, 인디뮤지션, 프리랜서 강사 등 2,413명과 예술단체, 관광업체, 변선업체, 관광식당업체, 지역서점, 콘텐츠기업, 공공시설 입주업체 등 1,732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긴급활동 지원 분야로 10개 사업을 수선해 1,500명 및 1,046개 단체를 지원한다.

▲실사와 청산을 감소화한 신속공모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예술인 1,000명을 지원하는 '백만원의 기적' ▲도민들이 유료관람키와 편선 등 속한권 '가격을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선구매하고 할인금액의 일정액을 관람업계에 지원하는 '착한이벤 '멀레인' ▲도예인체에 특례보증을 통해 입체당 최대 1천만원의 자금을 2.8% 내외의 저렴한 금리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도예인 상생 특례지원' ▲경기아트센터 공연장을 활용해 도내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무관중 공연 및 온라인 방송을 지원하는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취약근로자 보호 분야에서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과 지역서점 배송비를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해 활동이 중단된 예술강사, 영화종사자, 공예인, 인디뮤지션, 미디어센터 활동강사 등 외2명과 500개 단체를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사업은 문화시설 휴관과 오프라인 교육체험 프로그램 취소연기로 생계위기에 처한 예술강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켜 활동 유지와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저변확대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

지역서점 배송비용 지원은 플랫폼(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점 방문이 줄고 인터넷을 통한 도서 배송이 많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1개 서점 당 36만원씩 총 1억 1,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 도립 박물관·미술관,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문화창조허브, 일진각 및 별화누리 등 공공시설에 입주해 있는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사용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는 현재 80개, 경기콘텐츠진흥원에는 51개 콘텐츠기업이 입주해 활동 중이다. 도는 이들 131개 기업의 6개월분 임대료 1억6,570만원을 비롯해 나머지 55개 업체의 1-6개월분 임대료 1억6,707만원 등 총 3억3천여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대책은 나눔 주기식 접근보다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도민들도 좋아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면서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별로 1개를 구성하여 실행계획이 수립되는 대책부터 신속히 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

3)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성과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는 짧은 기간 도내 문화예술인, 관광업계에 큰 도움을 주었다. ‘백만 원의 기적’을 통해 도내 1,008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았으며,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사업은 당초 5월 2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단체가 많아 운영기간을 6월 7일까지 연장하고 총 245개 예술단체를 지원하였다. 7월부터는 참여 예술단체 확대를 위해 공연장을 도내 7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시즌Ⅱ’를 추진 중이다.

'착한여행 캠페인'은 79개 관광지가 참여하여 59곳의 입장권이 매진되고, 팔린 입장권은 16만여 장에 달하였으며, 국내 관광소비 파급효과는 116억 원으로 추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자동차 극장 방식을 활용한 '드라이빙 씨어터'는 고양, 안산, 양평 등 3곳에서 총 4회에 걸쳐 공연을 개최하여 총 1,785명이 관람하였다. 특히 박수 대신 장갑을 끼운 와이퍼를 움직여서 호응하는 모습은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인디뮤지션의 온라인 공연 지원' 사업을 통해 수입 기반이 취약한 인디음악인의 활동기반을 마련하였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물관 · 미술관 · 지역미디어센터 활동강사나 공예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사진 76-2]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주요 사업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착한여행 캠페인>

<드라이빙 씨어터>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경기도는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우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해외교류 사업과 축제 등의 행사예산을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 긴급 지원을 위해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본재산 20억 원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경기문화재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표 76-4]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재원확보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관명	합계	추가확보재원	사업재편	감면
합계	10,351	3,539	6,313	499
경기문화재단	5,258	2,000	3,150	108
경기아트센터	786	750	33	3
경기관광공사	2,230		2,180	50
한국도자재단	1,256	300	950	6
콘텐츠진흥원	821	489		332

※ 경기문화재단 창립 이래 최초로 기본재산 활용(2,000백만 원)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도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 관광업계를 신속히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 분야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드라이빙 씨어터, 문화시설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 비접촉, 비대면 사업 발굴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 도민 문화예술 향유권을 도모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발전방향 제시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새로운 지원 사업 발굴 등으로 문화예술관광 분야 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77. 친일잔재 청산 프로젝트 추진

문화종무과 문화정책팀장 김도형

- 추진배경 : 민선7기 주요정책 87번, 친일잔재 청산 프로젝트 추진
- 추진내용 : 도내 친일문화잔재 청산(조사연구, 공모사업, 아카이브 구축, 경기도 노래 신규 제정)
- 문제점 및 해결 : 도내 문화예술분야의 친일잔재를 걷어내는 공감대 형성
- 평　　가 : 친일잔재 청산과 국권회복의 노력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관 확립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친일잔재 청산 프로젝트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도내 문화예술분야의 일제잔재 정리에 대한 필요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체계적 친일문화잔재의 청산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친일문화잔재 '발굴 · 기록화'를 위한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용역」, 각종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 조사 연구용역 결과물을 디지털 자료로 기록 · 보존 · 관리하기 위한 「경기도 친일 문화잔재 아카이브 구축」,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친일잔재 청산 프로젝트 추진완료 시 도민들에게 도내 문화예술분야의 친일잔재를 걷어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일잔재 청산과 3.1운동 등 국권회복 노력에 따른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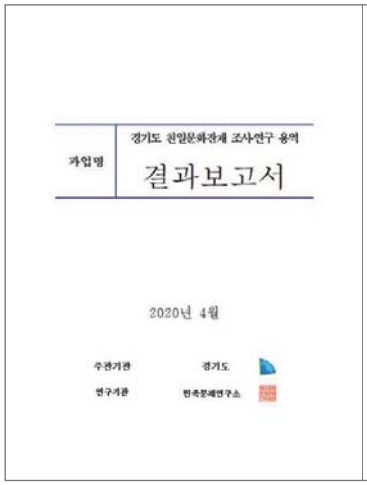
1)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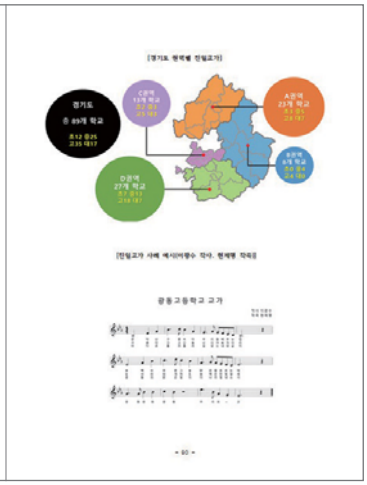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용역은 경기도 문화예술 분야의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과정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현재까지 향유되는 생활 문화 속 친일잔재를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되었다.

1905~1945년 8월 해방 전후 당시 행정구역상 경기도내에서 향유되는 친일목적으로 제작된 유·무형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 시 · 공간적 범위 및 용어와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자료수집 및 목록작성을 추진하였으며, 조사 결과 친일인물 257명(문화계 15명), 친일 기념물 161개, 교가 89개, 교표 12개 등의 도내 일제잔재를 확인하였다.

조사된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민간공모사업 및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경기도 내 친일문화잔재 청산과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들에 역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표 77-1]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과업명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2020년 4월
주관기관 경기도
연구기관 한국문예연구소



2)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문화예술 분야의 일제잔재에 대한 정리 필요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제잔재를 걷어내는 공감대 형성, 청산과 선양 등의 각종 콘텐츠 개발, 활용 등을 통해 아픈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발전의 역사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일제문화잔재 청산,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 · 항일정신노력 등을 소재로 한 영상, 사진, 노래, 글 등 각종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사업을 민간을 대상으로 공모 추진하였다.

민간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을 기대하며 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적 잔재의 발굴 · 청산 · 재해석, 일제잔재 시 국권회복 노력의 계승과 관련된 사업(캠페인, 학술 · 공연, 체험 · 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선정된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일제잔재 청산, 국권회복 노력의 계승을 통한 건전한 국가관과 역사관 정립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77-1]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 추진분야(캠페인, 학술, 공연, 체험 등)

3)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 구축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용역 결과물을 디지털화하여 기록 · 보존 ·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청산 프로세스 개발에 활용하고자 추진되었다.

아카이브는 연구용역의 결과 생산되는 자료의 보존 및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향유되고 있는 유 · 무형의 친일목적 문화를 청산하는 프로세스 개발 및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의 선양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시스템 개발, DB구축, 포털서비스 개발, 통합검색(검색엔진) 도입, 전시 · 홍보 · 교육 · 참여 관련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용자 접근성 강화 및 정보공유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디지털 콘텐츠 구축으로 경기도 사이버 독립기념관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형태의 관련 정보 제공으로 경기도 항일 정체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77-2] 경기도 친일 문화잔재 아카이브 구축 홈페이지(안)

4)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

기존 경기도 노래 작곡가의 친일 논란에 따라 도민 참여 방식의 '새로운 경기도 노래' 제작을 위해 2019년 도민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381건의 작품이 접수됐지만 선정된 작품은 없었다.

2020년 1월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실용음악 · 문예창작 관련 대학 등 공모전 실질 참여 가능자를 대상으로 집중 타깃 홍보를 통해 작사와 작곡을 분리하여 재공모를 실시한 결과, 2020년 1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작사 공모에 1,529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작곡가 윤일상 등 10인의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도민과 저명인의 심사를 거쳐 작곡 공모 대상 작사 3작품을 선정하였으며, 5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작곡 공모를 진행 중이다.

도민 참여로 만들어진 새로운 경기도 노래는 작곡 공모가 끝나는 2020년 10월 다시 도민 오디션 등의 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표 77-3]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모전 포스터 및 홍보 동영상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친일잔재 청산 프로젝트 추진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민간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민간단체의 공모참여 부족 시 내실 있는 콘텐츠 발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당사업에 대한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고, 관심도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분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친일잔재 청산 사업은 제국주의에 대한 동조와 추종을 단죄해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과오와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인 공동체적 과업으로, 우리는 이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사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토대로 지속적인 각종 콘텐츠 개발 및 활용사업, 자료 구축을 위한 아카이빙 등을 추진하여 일제 잔재 청산 문제를 과거와 같이 간헐적으로 제기하는 데서 벗어나 지속적인 실천운동으로 전환하고, 국민 계몽과 애국심 고취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향후 친일잔재 청산 프로젝트 추진완료 시 도민들에게 도내 문화예술 분야의 친일잔재를 걷어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일잔재 청산과 3.1운동 등 국권회복의 노력에 따른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78.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장 기이도

- 추진배경 : 2016년 5월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제정, 2016년~2017년 「경기도 항일유적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지 알림사업 필요
- 추진내용 : 항일운동유적지에 안내판 설치(2018년 62개소, 2019년 59개소)
- 문제점 및 해결 : 산업화(개발)에 따른 문헌과 현재의 장소 비교 분석 난이
- 평　　가 : 항일유적지 알림을 통한 항일정신 전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는 지리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에서 자주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의 주 무대였으며, 이는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항일운동유적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터, 지 등 다수의 유적지가 확인되었으나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여건에서 잊혀지고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안내판과 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 경기도 항일유적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6.10.27. ~ 2017.9.27.
○ 조사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항일유적(1895년 을미의병 ~ 1945년 광복)
○ 조사결과 : 터, 지 등 257건 확인 ※ 조사기관: (재)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2016.5.17.제정)

실태조사 결과 257건(건조물 38건, 터/지 181건, 현충시설 38건)이 확인되었으나 안내판 설치가 용이한 곳을 검토한 결과 2018년에 62개소를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20개소는 바닥표지판을 병행 설치하여 유적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효과를 높였다.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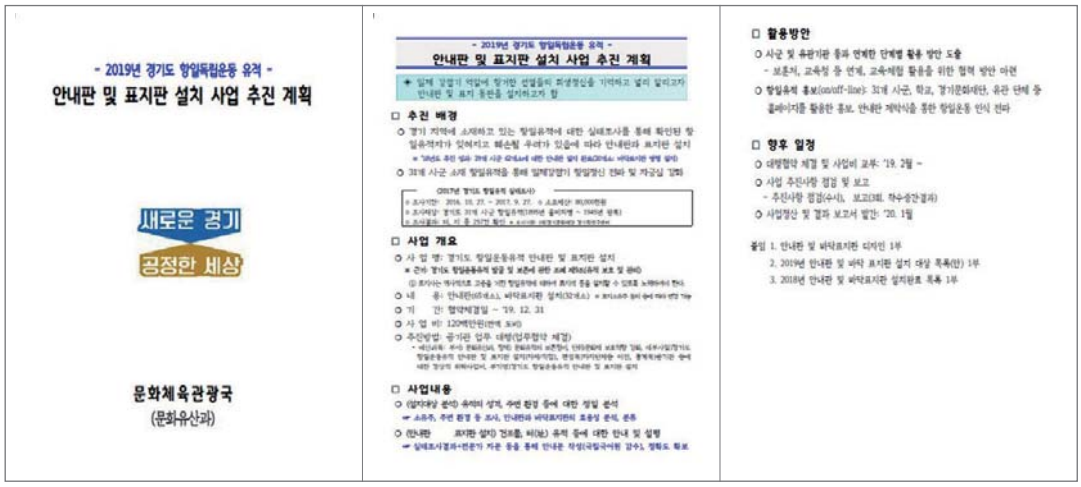
59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25개소는 바닥표지판을 병행 설치함으로써 2개년 동안 121개소의 항일유적지에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설치대상 유적에 대한 전문가, 31개 시·군 검토

안내판은 설치와 동시에 대중에서 표출되는 홍보 장치이므로 대상에 대한 선정작업 단계도 정밀하게 마련하였다. 우선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안내판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정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목록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시 · 군에 검토대상지 목록을 송부하여 요청사항(시 · 군에서 우선적으로 설치되기를 원하는 유적이 있는지, 소유주 관련 검토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 · 군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접수하여 다시 자문위원에게 송부, 최종 검토를 통해 설치대상 목록에 대해 검증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78-1]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계획(안)



[표 78-2] 시·군 제출 검토서

2019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대상 검토서

시군명	설치대상	검토항목	검토결과
부천 1	소사역 터 여성노동자 동맹파업지	① 유적지 적합성 여부	유동인구가 많아 설치효과 긍정 기대. 안내판 설치 적합 (심곡본동 594-3일대)
		②안내판 위치 적정성	적정(부천역 남부광장 진입구간 일대)
		③설치 시 사전검토 및 조사사항	점용허가등 해당없음 홍보판 인근 이면도로/건널목 형성된 곳으로 설치 가능
		④ 기 타	안내판 + 표지판 (교통 및 시민보행 보호등 바닥동판 형식적정) -형태 디자인 문안등 설치전 사전검토 시행요청 -설치 위치상 양면 방향 모두 볼 수 있도록 제작 협조 요청 -후보지 1에 대한 부천시 멀벅테마파크조성을 위한 조형물 설치 대상지로 본 사업 항일유적지 후보지를 후보지 2곳으로 확정요청함 (홍보계시물 앞·택시승강장 앞 건널목)
부천 2	부평수리조합 터 수리조합 반대 운동지	① 유적지 적합성 여부	유동인구가 많아 설치효과 긍정 기대. 안내판 설치 적합 (심곡본동 663일대)
		②안내판 위치 적정성	적정(현재 인근 강사장 및 심곡아파트 위치)
		③설치 시 사전검토 및 조사사항	점용허가등 해당없음 아파트 진입구간 내 이면도로로 설치 가능
		④ 기 타	안내판 + 표지판 (교통 및 시민보행 보호등 바닥동판 형식적정) 형태 디자인 문안등 설치전 사전검토 시행요청

2019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대상 검토서

시군명	설치대상	검토항목	검토결과
부천	부평역 3·1운동 안내시 위치	①유적지 적합성 여부	주변고려 만족하면 부지로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안내판 설치 적합
		②안내판 위치 적정성	적정
		③설치 시 사전검토 및 조사사항	주변고려만족의 형태로 교통수 양호 방향하며, 설치 장소가 만족하면 부지로 해당 주변입과 승분히 상회 후 협의해 주시길 바람. 또한 해당 방지는 '주변의 태양소로 인해 이미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시행한 지역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의 문화재 지표조사 또는 시발굴 조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화재청의 보존대책 등을 이행해야 함. 사업시행시 해당문화재가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신고하여야 함.
		④기 타	
부천	상록연사무소 앞 3·1운동 안내시위지	①유적지 적합성 여부	버스정류장 이면에서 인제 연사무소 앞은 편이고,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설치효과 긍정 기대
		②안내판 위치 적정성	적정
		③설치 시 사전검토 및 조사사항	보행 및 차량 이용 시민안해 장애물 주지 않게 안전한 곳에 설치하시되, 인근 상가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 후 협의해 주시길 바람
		④기 타	
부천	부천중앙도서관 옆 3·1운동 안내시위지	①유적지 적합성 여부	부천초등학교 부지로 설치효과 긍정 기대
		②안내판 위치 적정성	적정
		③설치 시 사전검토 및 조사사항	장기표고학교 형태로 교육수 사전등의 양호하며, 해당 학교와 충분히 상의 후 협의해 주시길 바람
		④기 타	
부천	원당산 입면성 적정 안 주지	①유적지 적합성 여부	선한복육문화센터 주변 도로부지로 설치효과 긍정 기대
		②안내판 위치 적정성	적정
		③설치 시 사전검토 및 조사사항	보행 및 차량 이용 시민안해 장애물 주지 않게 안전한 곳에 설치하시되, 센터 이용 시민들과 충분히 상의 후 협의해 주시길 바람 도로점용허가 양호하며, 수주 도로점용 허 가주 기간 만료시 변경허가등을 여일제 협의할 것으로 고려하길 바람
		④기 타	

2) 안내판 및 바닥 디자인 제작

안내판의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참여,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으로 선정, 제작하였다. 유적지의 상징성이 큰 만큼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기조에 중후한 느낌과 절제된 디자인을 선택하였으며 뭔가 특별해야 한다거나 태극기를 그리거나 하는 디자인은 최대한 피하고자 하였다.

[사진 78-1] 안내판 및 바닥표지판 디자인

다만 2018년에 제작한 안내판의 크기가 크다는 점 등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 2019년에

는 크기를 줄여 시각적인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모서리를 라운딩하여 안전도 고려하였다. 뒷면에 글자가 없어 홍보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아이콘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바닥표지판 또한 미끄럽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크기를 줄이고 통행으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가급적 통행로를 배제하면서 안내판 인근에 설치하였다.

3)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분포지도 제작, 배부

121개소에 대한 안내판 설치 완료 후 설치지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담은 분포지도를 제작하여 31개 시 · 군에 배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분포지도의 위치를 통하여 일반인의 유적지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유도하고 도내 항일유적 활용을 위한 콘텐츠 자료 구축과 더불어 학교 등에서 답사 ·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8-3] 항일유적 안내판 분포지도

4)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및 바닥표지판 설치 홍보

항일운동 유적에 대한 안내판 및 바닥표지판 설치는 그동안 소외되고 잊혀진 항일유적지에 대한 기억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사업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우리들의 지난한 항쟁의 역사를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 홍보도 중요한 방법이다. 사업 완료 후 보도 자료를 배부하여 항일유적지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투입과 노력, 항일정신 전파의 선도적인 행정력 투입 등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배부시기를 3.1운동 전후로 계획하여 노출 빈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보도자료는 “경기도, 항일 유적 121개소 안내·표지판 설치 완료”를 제목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항일운동을 알리는 안내판 · 표지판 설치 사업 2년 만에 완료
- 도내 항일 유적지 121개소에 안내판 설치 통해 항일운동 의미 되새겨
- ‘항일운동 안내판 분포지도’ 제작 및 배포

이러한 의미 있는 보도자료는 언론의 호응이 높아 30여 언론사에 노출되는 성과가 있었다.

[표 78-4] 보도자료 배부 및 보도현황(일부)

경기도, 항일 유적 121개소 안내·표지판 설치 완료

○ 경기도 항일운동을 알리는 안내판·표지판 설치 사업 2년 만에 완료
- 도내 항일 유적지 121개소에 안내판 설치 통해 항일운동 의미 되새겨
○ '항일운동 안내판 분포지도' 제작 및 배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도내 항일운동 유적을 알리는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는 도내 항일운동의 현장을 알리고자 20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첫 해인 2018년에는 안내판 62개와 표지판 20개를 설치하고, 2019년에는 안내판 59개와 표지판 25개를 도내 곳곳의 항일유적지에 설치 완료했다.

도는 안내판과 표지판 설치에 앞서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도내 항일유적지를 파악했다. 모두 257곳으로 건조물 38개, 터지 181곳, 현충시설 38개 등이다.

유적지들은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 될 때까지 조성됐으며, 화성, 안성, 용인, 이천, 평택, 등 도내 각 시·군에 산재해 있다.

도는 중요도, 보존상태, 활용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유적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친 뒤, 소유주 동의를 받아 121곳에 안내판을 설치했다.

항일운동 안내판 사업은 각 시행단계마다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지조사, 시·군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증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안내판 디자인을 바탕해 설치 장소를 선별했으며, 안내판 문안은 알고 싶은 정보를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작성했다.

도는 아울러 도내 항일운동 유적을 찾아보기 쉽고 항일유적에 대한 의미를 대중과 함께 공유하는 기회 마련을 위해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분포지도"를 제작하였으며 31개 시·군, 보훈처와 교육청 등을 통해 초중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항일운동 유적에 대한 안내표지 설치는 항일유적에 남겨진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전파하고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는 기억의 매체를 마련한 것이며, 특히 경기도 항일운동 안내판 분포지도는 잊혀진 우리 곁이 항일 유적을 되살리고 교육, 항일유적 탐방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2020년 03월 02일 (월)
문화 12면

도내 항일 운동 유적지 121곳에 안내판 설치 완료

경기도 항일유적지 121곳에 안내판 설치

송고시간 | 2020-02-28 11:36

김경태 기자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도내 항일운동 유적지 121곳에 안내판과 표지판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천 항방산 김영성 의병전투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안내표지판 설치에 앞서 2018년부터 문헌과 현장 조사를 거쳐 도내 항일유적지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곳은 건조물 38곳, 부지 181곳, 현충 시설 30곳 등 257곳이다.

이중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유적지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될 때까지 조성된 곳으로, 화성·안성·용인·이천·평택 등 시군 곳곳에 산재해 있다.

○ 인터넷 등 30여 언론사

-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경기신문, 국민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경기매일, 매일일보, 미디어연합, 파이낸셜뉴스, 머니S, 경기종합일보, 경인투데이뉴스, 아시아 투데이, 미디어투데이, 세계타임즈, ㈜경기타임즈, 경인저널, 뉴스후, 수원시민신문, 군포시민신문, 경기중앙신문, 일간 경기 등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추진과정 중 가장 큰 문제는 설치지가 사유지인 경우, 안내판 설치를 꺼려하거나 반대하는 경우였다. 중요한 유적지로 소유주 설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의 기본 취지를 인내심 있게 설명하고 향후 이전의 용이성 등을 설명하여 반대를 불식시켰다. 또 간혹 안내 문안에 대해 후손들께서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안내판의 특성상 상세한 부분까지 담기 어려운 점을 설명, 설득하였고 일부 안내판의 경우 반영할 수 있는 경우 최대한 유연하게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는 화성과 안성, 용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항일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의 하나이다. 하지만 개발압력이 높아 많은 유적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개설되며 지형이 변형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유적지를 찾아내어 소유주와 협의, 설치허가를 득하고 도로 · 하천 점유, 토지사용 허가 등 어려운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항일유적 안내판을 설치한 것은 항일 정신을 현대에 구현하는 것처럼 지난한 과정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설치과정 또한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31개 시 · 군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정밀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안내 문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전문가가 초안을 작성한 안내문안을 시 · 군 관련 부서에 송부하여 2차 검토하도록 하였다.

2차 검토한 문안에 대해 올바른 국어 표현 등을 확인하고자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통해 정확도를 높인 문안을 확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법의 정확성, 매끄러운 문장과 표현 등을 얻는 성과가 있었고 문안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설치한 항일운동유적 안내판은 향후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을 전파하고 브랜드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8년~2019년 완료한 안내판과 표지판의 유지 관리 계획과 이들 설치지에 대한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로운 경기도가 걸어온 길

제4장

상생하는 경제,
성장하는 경기도

제1절 함께하는 지역경제의 밑바탕 마련

79. 지역화폐 확대발행(활성화 정책 포함)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장 소민정

- 추진배경 : 공약과제 132번,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골목상권 매출증대
- 추진내용 :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코로나 19대응 추가확대 발행
- 문제점 및 해결 : 확대발행을 위한 예산확보, 운영기준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한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　　가 : 지역소상공인,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이며, 도내 전체 사업자의 약 83%(65만 개)를 차지하여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대규모점포 영업확장, 온라인 위주의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경영부담이 증가하여 왔다.

지역화폐는 이러한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선7기 도내 전 지역에 확산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2019년 4월 도내 전 시 · 군에서 발행을 개시하였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로써 법정화폐와는 달리 사용처를 지역이나, 집단 등으로 한정적으로 제한하여 운영이 가능한 결제수단을 말한다. 현재 경기지역화폐는 도내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에 따라 시 · 군별 지역 내로 사용이 제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9년 말 이후부터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에는 지역화폐 발행량을 확대하고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상향하여 지역 내 소비심리 위축에 적극 대응하고, 대규모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방역 조치로써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발행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노력에 따라 대면접촉이 잦은 지역상권의 위축 및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우려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기도에서는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확대발행 및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연간 발행목표인 8천억 원을 1조 2,567억 원으로 상향조정(4,567억 원 증)하고, 할인율과 월 구매한도를 당초 6%, 시 · 군별 50~70만 원에서 10%, 100만 원까지 상향 및 확대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건의하였다. 건의에 따라 정부차원의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통한 지역소비 진작을 위하여 발행량 확대 결정(2020년 당초 전국 발행규모 3조 원 → 6조 원) 및 국비지원(경기도 365억 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의 사용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가계지원 효과와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라는 이중효과를 도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도민이 '잘했다'는 평가(86%)와 함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취지에 공감(88%)하였다.

[출처 :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4.25. 18세 이상 도민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 79-1] 지역화폐 확대발행 국비지원건의 및 정부1차추경 국비 확정내시 공문

경 기 도

재도분 경기
공정한 세상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발행 및 국비지원 건의

1.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어난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인한 외출자제 등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지역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특히, 골목상권과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한 지역 내 소비심리 진작과 영세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여 현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총력 대응 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한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 협의(행안부), 국비지원 시·군별 발행기준 한도(300억) 해제(기재부, 행안부)** 및 **확대발행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에 국비 지원(기재부, 행안부)**을 건의드리오니, 현 지역경제 위기상황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화폐 확대발행 및 예산지원 건의서 1부.
2. 지역화폐 확대발행 소요예산 추계자료(총괄) 1부.
3. 시군별 구매한도 및 할인율 상향협의자료 1부.
4. 시군별 구매한도 및 할인율 상향에 따른 예산추계자료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사인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지역경제정책과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재정과장) 전결 2020. 2. 17.

협조자 지방행정지사 박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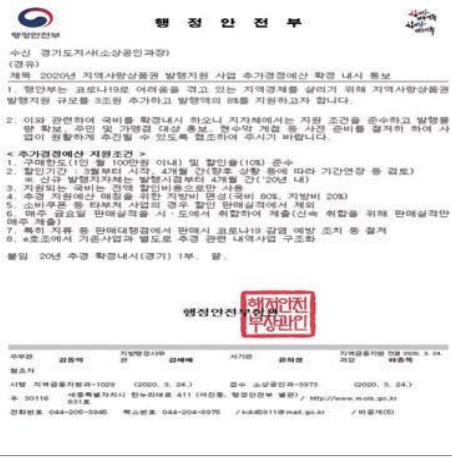
시행 소상공인과-2416 (2020. 2. 17.) 접수

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금곡동)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30-2942 팩스번호 031-8030-2969 / kyo0706@gg.go.kr / 비공개(5)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20.2.17. 지역화폐 확대발행 건의공문



행 정 안 전 부

수신 경기도지사(소상공인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 확정 내시 통보

1.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3조원 추가하고 발행액의 8%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비를 확정내시 하오니 지자체에서는 지원 조건을 준수하고 발행물량 확보, 주민 및 가맹점 대상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경정예산 지원조건 >
1. 구매한도(1인 월 100만원 이내) 및 할인율(10%) 준수
2. 할인기간 : 3월부터 시작, 4개월 간(할조 상황 등에 따라 기간연장 등 검토)
※ 신규 발행지자체는 발행시점부터 4개월 간('20년 내)
3. 지원되는 국비는 전액 할인비용으로만 사용
4. 추경 지원예산 매칭을 위한 지방비 편성(국비 80%, 지방비 20%)
5. 소비쿠폰 등 타부처 사업의 경우 할인 판매실적에서 제외
6. 매주 음료일 판매실적을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산속 취합을 위해 판매실적만 매주 제출)
7. 특히 지류 등 판매대행업에서 판매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 등 철저
8. e호조에서 기존사업과 별도로 추경 관련 내역사업 구조화

붙임 20년 추경 확정내시(경기)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인

협조자

시행 지역금융지원과-1029 (2020. 3. 24.) 접수 소상공인과-3973 (2020. 3. 24.)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945 팩스번호 044-204-8975 / kuse0911@mail.go.kr / 비공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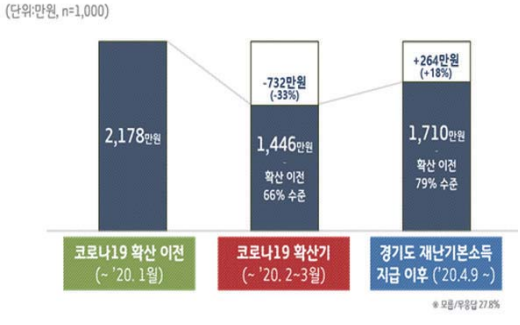
’20.3.24. 확대발행 국비내시(행정안전부)

실제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3월 대비 18%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수준의 79%까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하였다.

[출처 : ㈜한국리서치 (5.6. ~ 5.8.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 대상 전화조사)]

[사진 79-1]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20.3.24.)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매출수준 추이

2) 경기지역화폐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2019년 4월 발행 이후 지역화폐의 인식제고 및 사용자확대 등 홍보를 위하여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지역화폐관 운영('19년 4월) 및 경기지역화폐 31개 시 · 군 방방곡곡데이트('19년 연중 실시) 등 도민 인식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한 결과 2019년 11월 실시한 도민 리서치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으로, 일반도민 69%, 가맹점주 63%가 '잘했다'라는 응답을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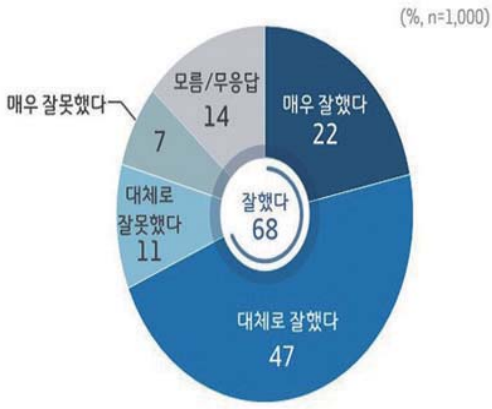
[출처 :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일반도민 '19.11.16.~17., 가맹점주 '19.11.13.~20.)]

[사진 79-2]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및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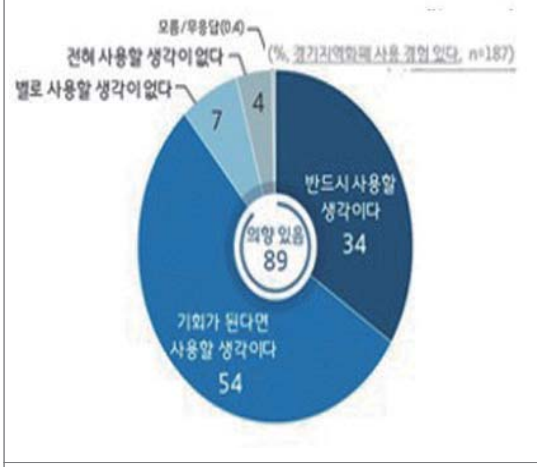
지역화폐 체험관 운영('19.4.29.~30.)

광명전통시장 데이트('20.7.8.)

[표 79-2] 경기지역화폐 도입성과 조사결과



경기지역화폐 도입 '잘했다'(일반사용자 69%, 가맹점 63%)



경기지역화폐 계속사용, 가맹의향(일반사용자 88%, 가맹점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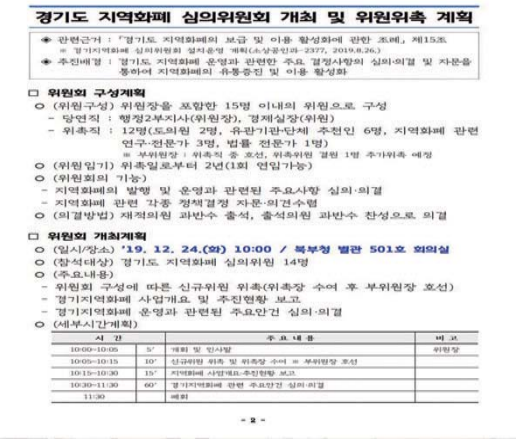
3)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운영

경기지역화폐의 지속적인 발행 확대(2019년 목표 4,961억 원, 발행 5,612억 원)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도민의 폭발적인 증가(3.24.~5.10. 기간 중 지역화폐 카드신청 약 325만 건)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등 운영기준에 대한 관심과 민원도 동시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2019년 11월)을 통하여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경기지역화폐와 관련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의원, 교수, 변호사, 상인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9년 12월 24일 최초 위원회 구성 및 2020년 4월 28일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및 대규모점포에 대한 경기지역화폐 사용가능 여부와 관련한 민원 및 건의와 시 · 군의 경기지역화폐 운영기준 준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기지역화폐 본래의 정책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도의원, 상인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역화폐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진 79-3]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및 지역화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19.12.24.)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원위촉 계획

◈ 관련근거 :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
※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소상공인과-2377, 2019.8.26.)
◈ 추진배경 :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한 주요 결정사항의 심의·의결 및 자문을 통하여 지역화폐의 유통증진 및 이용 활성화

□ 위원회 구성계획
○ (위원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 행정2부지사(위원장), 경제실장(위원)
- 위촉직 : 12명(도의원 2명, 유관기관·단체 추천인 6명, 지역화폐 관련 연구·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1명)
※ 부위원장 : 위촉직 중 호선, 위촉위원 결원 1명 추가위촉 예정
○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 (위원회의 기능)
-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의결
- 지역화폐 관련 각종 정책결정 자문·의견수렴
○ (의결방법)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 '19. 12. 24.(화) 10:00 / 복부청 별관 501호 회의실
○ (참석대상)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 14명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위촉장 수여 후 부위원장 호선)
- 경기지역화폐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보고
- 경기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주요안건 심의·의결
○ (세부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및 인사말	위원장
10:05~10:15	10'	신규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 ※ 부위원장 호선	
10:15~10:30	15'	지역화폐 사업개요·추진현황 보고	
10:30~11:30	60'	경기지역화폐 관련 주요안건 심의·의결	
11:30		폐회	

- 끝 -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지역화폐 발행의 법률적 근거 부재

그간 지역화폐의 활성화 노력과 이용저변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없었으며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지침과 발행 지자체(시 · 군)의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되고 있었다. 지자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하는 지역화폐 발행, 유통, 환전 등 운영과 관련한 각종 업무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근거가 없고, 지역화폐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는 법률에 기초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동안은 안정적인 발행 및 유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민선7기 이후 국회, 중앙부처 건의, 당정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지역화폐 기본 법률에 대한 조기 입법건의를 하였으며, 마침내 20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던「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4월 30일자

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7월 2일자로 시행되었다. 이로써 지역화폐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발행 및 유통에 있어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시 · 군과 함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지역화폐 운영기준 정비, 시 · 군 조례개정 지원 등 법률 및 시행령 제정에 따른 제도정비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 모바일 확대 등 사용자 편의개선

현재 경기지역화폐는 시 · 군별 선택에 따라 지류, 카드, 모바일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지류는 기존의 상품권의 개념에 근접한 매체이며, 전자적 매체인 카드, 모바일로 갈수록 최근의 결제 패턴을 반영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실물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지류, 카드에 비하여 모바일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하므로 휴대가 간편하고, 대인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어 지역화폐의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도민의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현재 시흥, 김포 등 일부 시 · 군에서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도내에서 시행중인 카드형 지역화폐는 기존 카드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나, 모바일의 경우 현재 통용되고 있는 QR코드(바코드)를 매장에 설치하거나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방식의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가 필요하므로, 지역화폐의 가맹점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결제시스템 구비가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지역화폐 사용편의성 제고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한 민선7기의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일반도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단기간에 폭발적인 발행량 증가로 이어졌으며, 지역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톡톡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용자 확대에 따른 불편민원과 개선 건의도 동시에 증가한 실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화폐가 지역사회에 안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자발적인 활성화 방안과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업무 수행에 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80.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정책팀장 윤현옥

- 추진배경 : 민선7기 도정핵심과제 39.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상인공동체)
- 추진내용 : 소상공인 30개 이상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조직화지원 및 공동지원사업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골목상권 상인 접촉점 마련,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와 교류협력 확대
- 평　　가 : 지역상인 중심의 지역상권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모델 마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8년 현재 경기도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2.2%인 70만2천개, 종사자의 35%인 152만 명으로 서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창업자수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쇼핑, 1인 소비 증가 등 급격한 소비 트렌드 및 경제 생태계 변화로 인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는 상인 혼자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골목상권 공동체의 주체로 당면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 경제인, 주민, 대학 및 도-시 · 군이 함께 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조직화 지원은 소상공인 30개소 이상의 골목상권 상인들이 총회를 거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등 조직화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골목 상권별로 상권분석, 경영교육과 우수상권 현장연수, 공동마케팅이나 공동시설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대부분의 골목상권은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청년으로 구성된 조직화전담매니저가 골목상권에 상주하면서 현장 중심의 밀착지원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지역사정을 잘 알고 애향심이 있는 청년매니저를 지역활동가로 양성

경기도는 한반도 중앙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으로 전 국토의 10%를 차지하는 10,185㎢로 28개 시, 3개 군으로 구성되어 도시와 농촌이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국가 신도시 개발의 주역을 담당한 경기도는 지리만큼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하다. 골목상권도 그렇다. 경기도의 골목상권은 구도심의 먹자골목에서부터 새로 조성된 신도시 외곽의 카페거리까지 그 형태와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표 80-1] 골목상권 조직화지원 매니저가 도정홍보 주체로 성장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모바일 경기</td>
<td>태평꿀성대</td>
</tr>
</table>

그래서 경기도는 권역별로 1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하의 지역 청년을 채용하고 향후 지역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기 교육훈련 과업을 추가하였다.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지역청년으로 구성된 조직화지원매니저들은 소비자 중심 서비스 교육 위주의 스타트 교육을 받은 후 상권에 직접 투입되었으며 격주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지역 활동가로 성장하고 있다.

2) 지역 내 미술·예술 분야 대학과의 협업 분야 발굴 모색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대학과 함께 논의하며 추진하고 있다. 골목이 살기 위해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고 특히 지역대학 학생들이 골목상권에서 문화를 생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역대학과 지역상권이 협업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육성하면서 아름답고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골목상권공동체 200개소는 상권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는데 상권별 기획 단계부터 지역 내 대학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미술 · 예술대학 교수 및 상권개발에 전문성을 지닌 지역 교수들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상권별 공동마케팅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비의 일부를 골목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쿠폰 형태로 지급하고, 대학협업사업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각 상권의 상황에 맞게 표준모델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조직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고와 우수한 성과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개별 소상공인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경제공동체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이다. 일단 상권 내 소상공인 중 적극적인 리더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권의 명칭을 정하고 정관도 만들어 총회를 개최하고 나면 단체 명의의 고유번호증과 통장을 만들

어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그 일련의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도내 자영업자의 60.3%가 창업 후 3년 이내에 폐업한다는 통계를 고려해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렵게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줄이는 게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길과 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9년 6월 초 권역별 전담 골목상권조직화매니저가 투입되어 현재까지 302개소(목표 300 '19년 203개소, '20년 99개소)의 조직화가 완료되었다.

[사진 80-1] 대학과의 협업 및 상인회 조직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대학협업 공모 상생협약식</td>
<td>평택 보람플러스 상인회 조직</td>
</tr>
</table>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과정

1) 처음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몰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는 달리 골목상권에는 대표자가 없고 상권 구역도 명확하지 않아 처음에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고 시작했다. 도에서는 관할 시 · 군의 추천을 받아 전담매니저에게 추천 상권 목록을 제공했지만 사업량 대비 제공되는 추천 상권은 턱없이 부족했고 무턱대고 관할 시청이나 골목의 상점을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

연초 통합설명회와 시 · 군 담당직원 워크숍, 언론브리핑, 시 · 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시 · 군추천 협조 의뢰 및 적극 참여를 부탁하는 등 31개 시 · 군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지만, 일부 시 · 군에서는 도 소상공인과로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2) 이 사업은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야 해서 직접 발로 뛴다.

골목상권 상인들은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모이기가 어렵다. 가게를 비울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직화지원매니저는 직접 전단을 들고 다니면서 골목상점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난다. 정책을 홍보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도의 좋은 정책들을 알리고 공동체 조직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면서 점차 그들을 공동체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다.

[표 80-3]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리플릿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골목상권이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위기 또한 극복하고 변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소상공인 개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골목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소

상공인들과 소통하면서 왜 변화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교육 등을 병행하여 상인혁신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옆 점포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같이 상생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도에서는 조직화된 골목경제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화 이후 공동체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엮어주고 지속적으로 자립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81. 전국 최대 규모, 지역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소각

특화기업지원과 정책자금팀장 조영미

- 추진배경 : 경기도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일환(공약 129번. 부실채권 소각)
- 추진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 최초, 최대 소각실시
- 문제점 및 해결 : 채권소각 대상자 연락두절에 따른 통지 불가로 소각조회 서비스 도입, 채무자의 의도적 상환 회피방지를 위한 관리 및 법률 검토
- 평　　가 : 상환능력 없는 영세 소기업 ·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해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대기업의 부실이 발생하면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대기업 살리기에 정부가 큰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부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다.

소기업 ·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한 후, 사업 실패 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상환을 하지 못하면 신용연체자로 등록되어 7년이 경과하면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기본적인 금융거래는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발견할 시 추가 압류 및 추심 활동이 재개되어 사업실패를 겪은 소기업 · 소상공인의 취업 · 재창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다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부실이 발생한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가 민선7기 공약으로 도입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채권 소각 실시 검토

경기도는 경기도 내 유일한 정책금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도내 소기업 · 소상공인 중 부실 발생으로 인해 10년 이상 채무의 악순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를 추진하고자 2018년 7월 경기신용보증재단 채권에 대해 소각 실시를 검토하였다. 소각이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를 없애 주고 신용규제를 풀어주어 채무자의 부담을 해소시키는 제도이며, 채무자 상환부담의 완전한 해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상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채권 회수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소각 사례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였고(표 81-1), 우선 국민행복기금 및 타 금융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각하고 있는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하여 첫 소각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다. 자치단체 및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최초의 도입이었다.

[표 81-1]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소각 현황

(소각현황) 소멸시효완성채권 '17년 이후 '18년 6월 말까지 총 21.7조 원 소각
(대상기관) 국민행복기금, 농신보, 캠코, 신보, 예보, 주택금융공사 등

2) 채권소각을 위한 근거 마련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권소각을 위하여 2018년 9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관리규정」에 소각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하부규정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위한 「추심불능채권관리기준」을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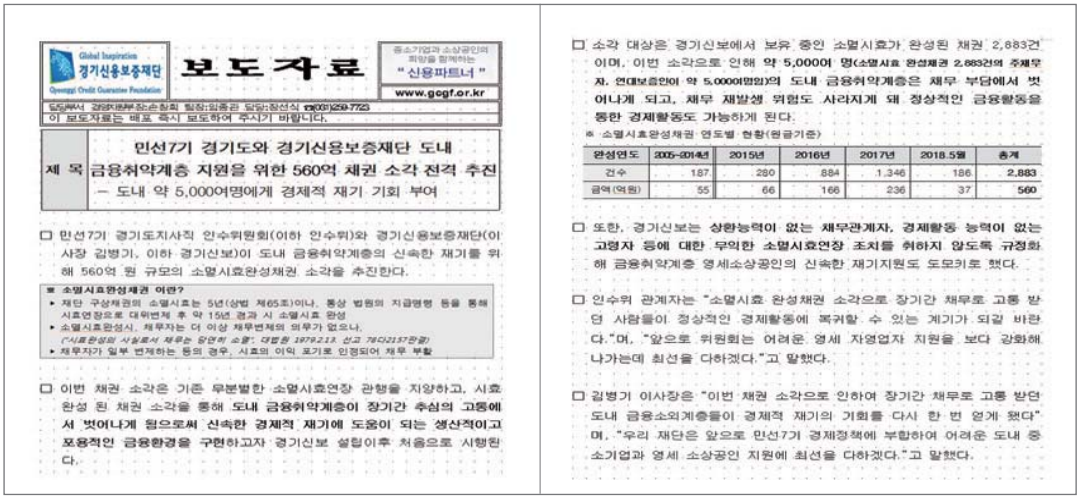
3)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첫 실시

2018년 11월 9일 전국 신용보증재단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하여 소각을 실시하였다. 2018년 9월 30일 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전부를 소각하여, 도내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영세한 소기업 ·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였다. 전국 신용보증재단 최초로 실시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1-2] 2018년 전국 최초 소각실시 현황

구 분	금 액	건 수	채무자관계자 수
소멸시효완성채권	565억원	2,706건	4,450명

[표 81-3] 첫 소각 실시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신용파트너"

www.gcgf.or.kr

제 목 민선7기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내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560억 채권 소각 전격 추진 — 도내 약 5,000여명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 부여

□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하 경기신보)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560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추진한다.

■ 소멸시효완성채권 이란?

- 채단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5조)이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연장으로 대위변제 후 약 15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완성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으나,

(「서울중앙지 사실로서 채무는 유효히 소멸,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37판결)

-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되어 채무 부활

□ 이번 채권 소각은 기존 무분별한 소멸시효연장 관행을 지양하고, 시효완성 된 채권 소각을 통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이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신속한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금융환경을 구현하고자 경기신보 설립이후 처음으로 시행된다.

□ 소각 대상은 경기신보에서 보유 중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883건이며, 이번 소각으로 인해 약 5,000여 명(소멸시효 완성채권 2,883건의 주채무자, 연대보증인이 약 5,000여명임)의 도내 금융취약계층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고, 채무 재발생 위험도 사라지게 돼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통한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된다.

※ 소멸시효완성채권 연도별 현황(원금기준)

완성연도	2005-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월	총계
건수	187	280	884	1,346	186	2,883
금액(억원)	55	66	166	236	37	560

□ 또한, 경기신보는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관계자,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 등에 대한 무익한 소멸시효연장 조치를 허하지 않도록 규정화해 금융취약계층 영세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지원도 도모키로 했다.

□ 인수위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간 채무로 고통 받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기 이사장은 "이번 채권 소각으로 인하여 장기간 채무로 고통 받던 도내 금융소외계층들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얻게 됐다"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 민선7기 경제정책에 부합하여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 소각채권 조회 서비스 실시

또한, 소각 대상 채권의 경우 장기간의 채무독촉, 폐업, 이사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채무소각 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본인 채무의 소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을 위하여 본인 채무의 소각여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2019년 2월 25일 시작하였다.

[표 81-4] 소각 조회 서비스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
www.gcgf.or.kr/cyber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소각 조회 확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www.gcgf.or.kr/cybe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문자인증을 통하여 로그인후 확인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이버보증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도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소각 대상 확대

2018년 11월 9일 소멸시효완성채권 565억 원을 소각 후, 장기 부실채무로 재기의 어려움을 겪는 보다 많은 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채무 부담의 완전한 해소를 통하여 재기를 지원하고자 2019년 4월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각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 소멸시효완성채권에서 주채무자의 파산 · 면책확정채권, 주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에 대해 실익이 없는 채권, 주채무자가 채무조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종결한 채권,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 주채무자만 있는 채권으로 추심불능채권의 소각 대상이 확대되었다.

6) 소각 현황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8년 첫 실시한 채권소각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2019년 6월 27일, 2019년 11월 28일, 2020년 4월 13일 소각을 추가로 실시하며 소각 실시를 정례화하였다. 특히, 2020년 4월에 이루어진 소각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부실채권 소각 시기를 당초 6월에서 2개월여를 앞당겨 실시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였다.

2020년 6월 말 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도내 소기업 · 소상공인의 소각 규모는 누적 1,361억 원으로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 최대 규모를 달성하였다.

[표 81-5]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각 현황(누적)

구분		금액	업체수	채무관계자 수
2018년		565억 원	2,419개	4,450명
2019년	6월	149억 원	631개	1,210명
2019년	11월	206억 원	1,082개	1,978명
2020년		441억 원	1,658개	3,088명
합계		**1,361억 원**	**5,790개**	**10,726명**

다. 추진 시 문제점(도덕적 해이) 및 극복방안

부실채권의 채권행사 종결이라는 소각제도를 검토하면서 채무자의 의도적 상환 회피, 즉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각 대상을 선정하기 전, 전체 채무자에 대하여 연 2회 국토교통부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자 재산 파악을 실시하고, 부동산 재산조회 결과가 없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강제집행 보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권 소각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였다.

또한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면탈한 부동산 및 금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이용하고, 채무자가 유사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 이익을 면탈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의 소송 등의 법적제도를 활용하여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즉, 소각 대상채권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친 채권으로, 각 대상채권의 관련 법 및 운용기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과 판례 검토에 따라 더 이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상환할 책임이 없는 채권임이 명확, 소각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소각제도는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영세한 도내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추심을 종결하여 오래된 채무로 인하여 심리적 · 경제적으로 위축되었던 소기업 ·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각제도를 통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관리 방향이 보수적이고 형식적인 채권유지에서 적극적인 조정 · 정리로 전환된 것도 의미가 있다.

채권소각이 단순히 도내 소기업 · 소상공인의 채권 상환부담 해소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에서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기도 내 포용적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82.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유만석

- 추진배경 : 도내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 추진내용 : ’20.1.1. 이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 최대3년간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지원대상자 확보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
- 평　　가 :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생계유지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에 기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중 84%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 폐업자의 반 이상이 업력이 3년 미만으로 상당수가 경쟁력과 생존율이 낮다. 그에 비해 그동안 고용보험은 근로자 중심의 제도로 운영되어, 자영업자는 폐업 이후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12년부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 보호가 가능해졌다. 경기도에서도 폐업 등 경영환경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 없이 나홀로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의 경영기반 마련과 사회보장제도 편입을 도모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지원 검토

경기도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기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보수** 5~7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등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 '20.5월 기준 도내 자영업자(1,326천 명)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44천 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액(1~7등급)을 선택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납입함

[표 82-1]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 사 업 명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추진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원대상 :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30~50%), 최대3년 지원
○ 기준보수 등급별 지원 금액 및 실 납입액

(단위 : 원)

구 분('19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중기부) 월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	-	-
경기도 월 지원액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실 납입액	8,190	9,360	21,060	23,400	45,045	49,140	53,235

2) 경기도·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이 사업은 임의가입 성격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과 신규 가입자 발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에서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유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사업수행이 필

요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 경기도·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0년 2월 27일 1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공동 노력을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2020년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 명단을 요청하여 4,768개사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는 홍보 시 상호 연계하여 누락 없이 모두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2020년 2분기 지원 신청자는 사업 시행 직후인 1분기 보다 1,308%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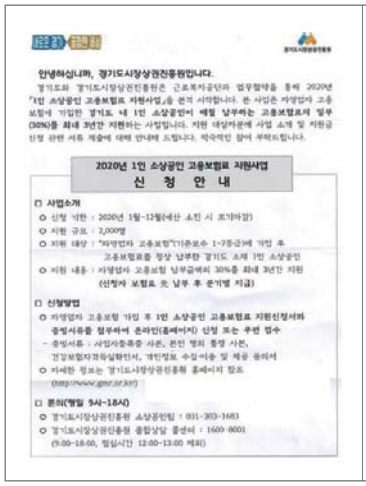
- ’19.10.23.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19.11.1.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19.12.3.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0.1.16. 업무협약 체결 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 ’20.2.27. 경기도·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 ’20.4.6. 사업 추진 세부방안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 ’20.4.30. 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1차 안내문 발송(3,878개사)
- ’20.7월 중 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2차 안내문 발송(890개사)

라. 평가 및 발전방안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 본인의 폐업 시 생계 유지와 재취업 ·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근로자 보호와 유사한 형태이다. 특히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규모 자본으로 다양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폐업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경

기도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30%씩 3년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켰다.

[표 82-2]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 및 언론보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치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이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3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분에 사업 소개 및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 청 안 내

□ 사업소개
- 신청 기한 : 2020년 1월~12월(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 규모 : 2,000명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기준보수 1~7등급)에 가입 후 고용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금액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 (신청자 보험료 全 납부 후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gmsr.or.kr)

□ 문의(평일 9시~18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 031-303-1683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경기도,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30% 지원

송고시간 2020-02-27 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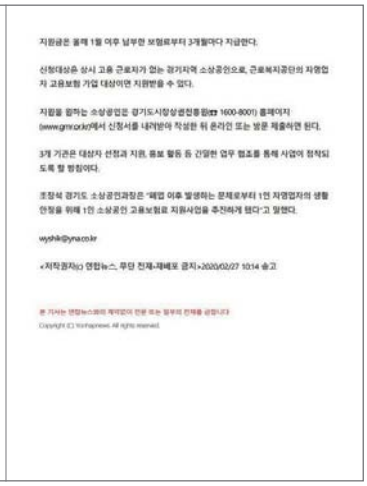
무명식 기자

경기도청

(의정부=연합뉴스) 무명식 기자 = 경기도가 1인 소상공인의 폐업 때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지역 1인 소상공인에게 기준 보수에 상관없이 월 납부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부터 3개월마다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상시 고용 근로자가 없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홈페이지 (www.gmsr.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3개 기관은 대상자 선정과 지원, 홍보 활동 등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창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폐업 이후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1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27 10:14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인용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의 경우 기준보수액 4등급까지만 대상으로 추진하여 일부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등급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사업도 함께 신청한 경우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1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누락된 지원 대상자가 없는 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도내 지원 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2021년도에는 더 많은 1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20.6월 말 기준 신청자 1,055명)을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83.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육성

소상공인과 시장상권지원팀장 손용석

- 추진배경 :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서 전통시장이 자생력 키울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인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육성 · 지원
- 추진내용 : 매년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50명 육성하여 월 급여와 전문성강화 교육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공정한 인력채용 및 운영관리를 위해 '도-경상원-시 · 군-상인회'가 협력관계 구축
- 평　　가 : 전통시장매니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은 239개로 4만 여 점포와 6만 4천여 명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보고이자, 25만여 명 도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시장은 온라인시장의 성장세, 대형마트·편의점의 높은 점유율 등 소비패턴의 변화와 경쟁업체의 급격한 성장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맞춤형 특성화 시장 모델 개발 및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전통시장 경영의 필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자체 재정으로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정부에서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으로 전문인력인 시장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지원받고 있는 수는 33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기도는 시장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사업을 민선7기에서 지난해부터 추진

하여 2년차에 접어들었다. 경기 전통시장매니저는 생활임금에 준하는 월 급여 및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받으며 전통시장 살림꾼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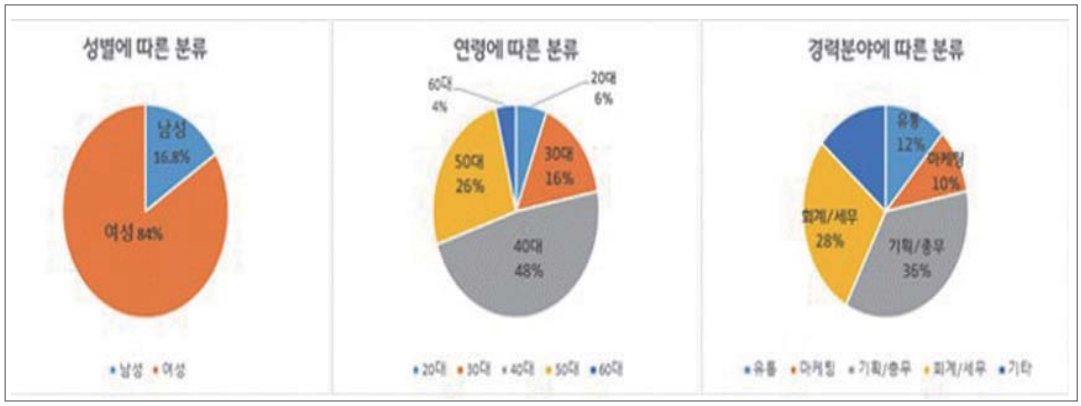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매년 전통시장 매니저 50명 채용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경기도는 2019년부터 매년 50명씩 전통시장매니저를 선발하여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시장매니저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65세 미만의 PC활용 가능자로 유통, 마케팅, 기획 · 총무, 회계 · 세무 등 관련 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2019년 선발된 경기 전통시장매니저의 주목할 점은 20 · 30대의 비율이 22%로 약 1/4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통시장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점포주의 노령화(점포주 평균연령 57.2세)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수요와 트렌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만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관련 직종에서 1년 이상만 근무하여도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미래세대 전통시장 리더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83-1] 2019년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기준에 따른 분류



2) 전통시장 자생력을 키우는 살림꾼인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 백화점에 버금가는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외에도 차별화되는 고유성을 가진 장소로 존재하기를 요구받는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경기도, 시 · 군 모두 앞 다투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전통시장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지원을 받아도 그 효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조직 역량강화라고 말한다.

전통시장은 상권의 특성과 장 · 단점을 파악해 수많은 지원 사업들 중 우리 시장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공모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점포별 환경개선, 친절교육 등 전통시장 내 개별 상인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및 의식개선을 위한 내부노력도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의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전통시장 내 상인회의 구성원들은 생계를 위해 개별 점포를 경영하고 있기에, 위와 같은 활동을 진행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만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경기 전통시장매니저를 각 상인회에 배치하여 살림꾼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 83-1] 상인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중앙정부의 시장매니저 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며, 점포수에 따라 상인회의 월 급여 부담률이 30~70%로 상이하다. 그러나 경기 전통시장매니저는 생활임금에 준하는 월 급여를 지원하며 상인회는 월 급여의 10%만을 부담한다. 근무하

는 매니저의 급여만족도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상인회 또한 훨씬 적은 재정 부담으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양측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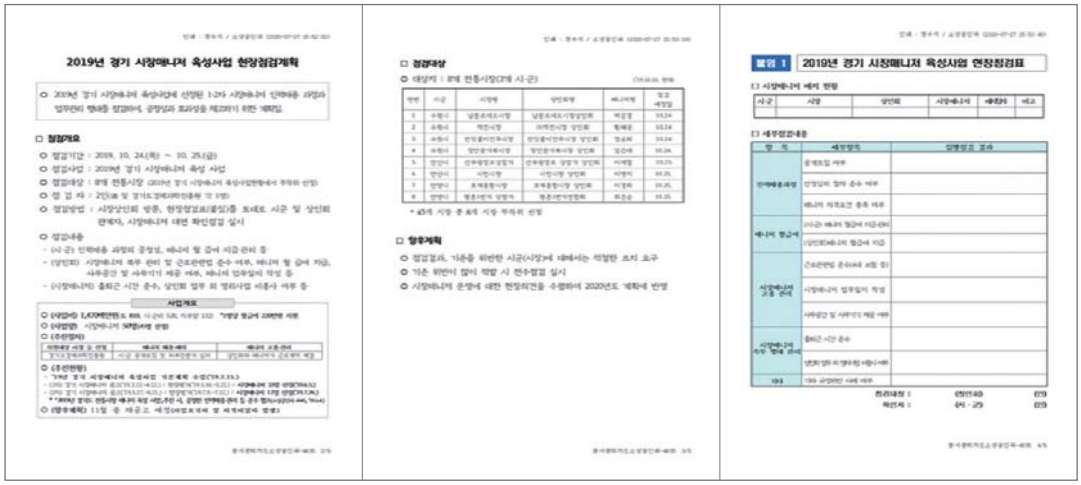
- 공정한 인력채용 및 운영관리를 위한 노력

경기 전통시장매니저의 추진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서류심사, 현장평가, 선정평가 3단계를 거쳐 매니저를 지원받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선정한다. 두 번째로 선정된 대상지 상인회에서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경기 전통시장매니저를 선정하고, 상인회와 매니저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개별 상인회가 전통시장 매니저와의 근로계약 체결 주체이기는 하지만, 도와 시 · 군이 월 급여를 부담하고 도 내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 목적을 지닌 공공일자리이기에 '경기도-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시 · 군-상인회' 4개 주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력채용과 운영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 · 군은 상인회의 매니저 채용절차를 행정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불시에 현장점검을 나가 공정하게 매니저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17개 시 · 군 담당자와 50개 시장의 상인회 그리고 50명의 시장매니저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다. 시 · 군 담당자의 잦은 교체, 상인회와 시장매니저 간의 갈등 등으로 초기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화로 때로는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 속에서 각 기관의 입장 등을 파악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순간들이 늘어나며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20년 사업은 작년에 비해 순조롭게 진행되어 16개 시 · 군 36개 시장 및 상점가가 선정되었으며, 8월 1일자 매니저 배치를 위한 상인회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표 83-2] 2019년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현장점검계획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도 경기 전통시장매니저들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경기도는 앞으로도 전통시장매니저 사업의 공정한 채용 및 운영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84.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기준 확대 권고

공정경제과 공정거래지원팀장 최정석

- 추진배경 : “한건물 두 편의점”으로 골목상권의 과당경쟁상황임에도 편의점 브랜드 간 출점 경쟁이 심각하여 편의점 출점의 기준이 되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필요
- 추진내용 : 편의점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 · 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상 제한거리를 50m→100m 이상으로 개정 권고
- 문제점 및 해결 : 관련규칙은 시 · 군에 개정권한이 있어 시·군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개정 필요성 인식 위해 실태조사 내용 공유 및 도-시·군 간 수차례 실무협의 추진
- 평　　가 : 광역-기초지방정부 간 상호 협조하여 과당경쟁 개선방안 합리적으로 도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외식업, 소매업종이 주를 이루는 도내 골목상권은 현재 동종업 간의 무한경쟁체제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소매업종, 특히 편의점수는 전국적으로 2008년 11,802개에서 2019년 말 45,193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건물에 둘 이상의 편의점이 있는 등 점포수 증가에 반비례하는 매출액 감소는 이미 도내 편의점이 과포화상태임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골목상권에 대기업 편의점의 진입은 확산되고 있고 편의점 브랜드 간 출점경쟁이 치열하여 도내 자영업자 간 매출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 경기도 실태조사 (’19.6월 기준)

▲ 편의점 11,384개(전국 45,193개 대비 25.2%),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 52백만 원*

*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1~2백만 원 수준으로 영세한 상황

▲ ’16~’19년 기간, 점포수 매년 11.6% 증가한 반면 점포별 매출액은 0.9%씩 감소

▲ 점포 이용건수 평균 0.9% 감소, 점포당 인구 수 1,159명(상주 51.1%, 유입 48.9%)

경기도는 2019년 6월, 도내 편의점주 간담회를 통해 편의점간 과당경쟁 피해사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편의점 등 도내 소매점포간 합리적인 거리제한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가 근접출점 피해 경험(100m내 출점 피해 77%), 월매출 감소액 972만 원으로 나타남('19년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 및 규제정책 연구, 경기연구원)

현재 씨유,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지에스 등 대기업 편의점 본부 간에는 '출점제한을 위한 자율규약'이 있다. 그러나 이 규약에 의하더라도 편의점 · 골목슈퍼는 50m마다 주어지는 '담배판매권' 보유가 출점의 동인이 되고 있어 과밀경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골목상권에서 과밀화 문제가 큰 편의점업종을 대상으로 근접출점 실태조사 및 규제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도내 과밀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의 거리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

경기도는 실제 도내 편의점 과밀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근접출점 현황과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① 도내 시 · 군별 편의점 전수 매출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규 편의점 출점시 기존 편의점이 받는 매출피해를 조사하였으며, ② 인근 신규출점으로 매출감소를 겪은 편의점주 대상 피해조사를 통해 근접출점 개선방안 정책을 연구하였다.

❶ 매출데이터 분석조사

도내 신규 편의점 출점시의 데이터 분석조사를 통해 ① 도내 시 · 군별 편의점출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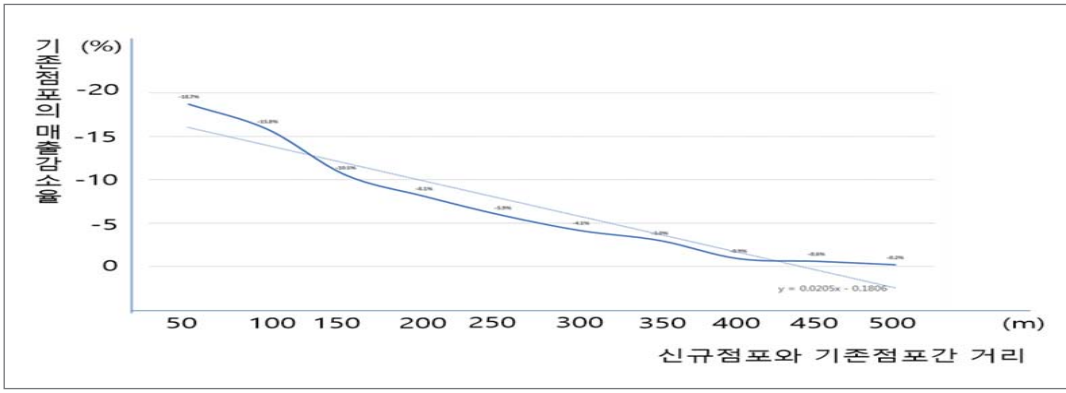
을 파악하고 ② 시·군별로 편의점 출점 시 기존 편의점이 받는 매출피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규점포가 기존점포와 가까울수록 기존점포의 매출감소 피해는 컸으며,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100m 이내 입점 시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었다. 신규출점 시 50m~250m 범위 내에 있는 기존점포는 매출감소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표 84-1] 실태조사 개요

구분	① 매출데이터 분석조사	② 피해설문조사 및 정책연구
조사기관	(사)한국일자리창출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경기연구원 (단기정책연구과제 추진)
분석기간	'19.9월 ~ '19.12월	
조사대상	경기도내 31개 시·군 편의점 매출추이 전수조사	경기도내 과밀지역 내 영업중인 편의점경영주 (19개 시·군, 225명)
조사방법	3년간('16.1~'19.6.) 신규 출점(2,128개)에 따른 기존점포 매출감소분석	표본지역 편의점 피해설문조사 (225명 조사)

[표 84-2] 도내 신규출점거리별 기존점포 매출영향효과



❷ 피해설문조사 및 정책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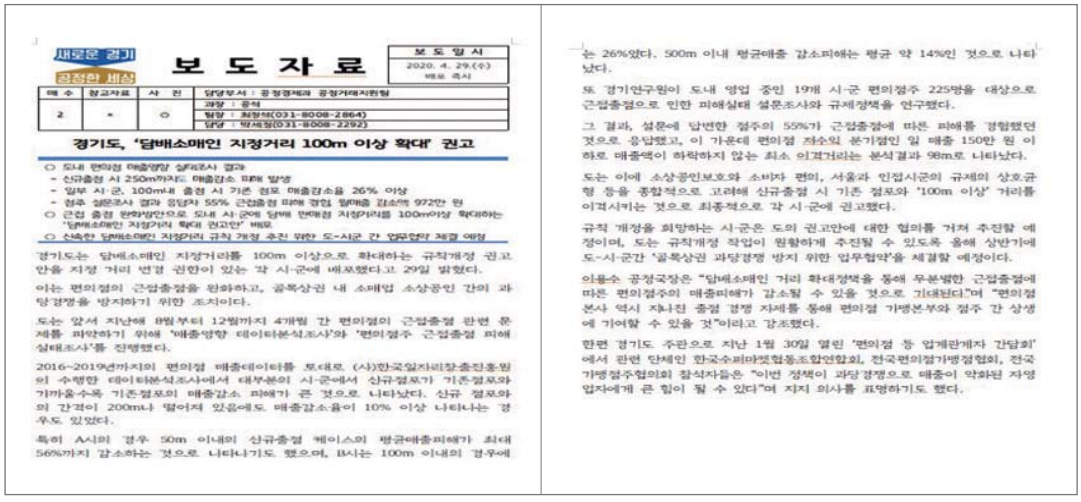
50m~100m 내의 신규출점으로 매출감소를 겪은 도내 편의점주 225명 대상으로 피해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55%가 신규출점으로 매출이 평균 972만 원이 감소하는 등 근접출점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설문 응답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신규점포와 거리가 1m씩 가까워질수록 기존점포의 매출은 3만6천 원씩 감소하였으며 일매출 150만 원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포 간 거리가 최소 98m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접출점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 담배소매인 지정거리확대 개정 권고안 발표

매출데이터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등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경기도는 시 · 군별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권고안을 2020년 4월 29일자로 각 시 · 군에 배포하였다.

[표 84-3] 규칙 개정권고안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29.(수) 배포 즉시

매수	참고자료	사전	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공정거래지원팀 과장 : 공석 팀장 : 최정석(031-8008-2864) 담당 : 박세정(031-8008-2292)
2	-	○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확대' 권고

○ 도내 편의점 매출영향 실태조사 결과
- 신규출점 시 250m까지도 매출감소 피해 발생
- 일부 시·군, 100m내 출점 시 기존 점포 매출감소율 26% 이상
- 점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 근접출점 따른 영업 일매출 감소액 972만 원

○ 근접 출점 완화방안으로 도내 시·군에 담배 판매점 지정거리를 100m이상 확대하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권고안' 배포

○ 신속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규칙 개정 추진 위한 도-시군 간 업무협약 체결 예정

경기도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개정 권고안을 지정 거리 변경 권한이 있는 각 시·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편의점의 근접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소매업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편의점의 근접출점 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영향 데이터분석조사'와 '편의점주 근접출점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16~2019년까지의 편의점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사)한국일자리창출진흥원의 수행한 데이터분석조사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규점포가 기존점포와 가까울수록 기존점포의 매출감소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점포와의 간격이 200m나 떨어져 있음에도 매출감소율이 10%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A시의 경우 50m 이내의 신규출점 케이스의 평균매출피해가 최대 5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B시는 100m 이내의 경우에는 26%였다. 500m 이내 평균매출 감소피해는 평균 약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연구원이 도내 영업 중인 19개 시·군 편의점주 225명을 대상으로 근접출점으로 인한 피해실태 설문조사와 규제정책을 연구했다.

그 결과, 설문에 답변한 점주의 55%가 근접출점에 따른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응답했고, 이 가운데 편의점 전수의 분기점인 일 매출 150만 원 이하로 매출액이 하락하지 않는 최소 이격거리는 분석결과 98m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소상공인보호와 소비자 편의, 서울과 인접시군의 규제의 상호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출점 시 기존 점포와 '100m 이상' 거리를 이격시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각 시·군에 권고했다.

규칙 개정을 희망하는 시·군은 도의 권고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도는 규칙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도-시·군간 '골목상권 과당경쟁 방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용수 공정국장은 "담배소매인 거리 확대정책을 통해 무분별한 근접출점에 따른 편의점주의 매출피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의점 본사 역시 자사점 출점 경쟁 자제를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 1월 30일 열린 '편의점 등 업계관계자 간담회'에서 관련 단체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정책이 과당경쟁으로 매출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구내(건물 내) 담배소매인 제도를 정비하여 담배소매인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측정방법을 객관화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1개 시 · 군 담당부서와 상호 논의 중에 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시·군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권고시 도의 한계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조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상 거리기준의 개정은 기초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시장 ·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도는 관련 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직접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광역 지방정부가 규칙 개정작업에 동인을 부여하더라도 실제 개정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 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골목상권의 과당경쟁 피해실태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 31개 시 · 군이 공감하고 도는 시 · 군의 의견을 청취하여 알 수 있도록 '편의점 실태조사 관련 시 · 군 담당자 간담회('19.11.19.)', '개정권고안에 대한 시 · 군 실무협의('20.5.30.)' 등 도-시 · 군 간 업무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여 골목상권 과당경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시 · 군에서도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도 권고 취지를 반영한 규칙개정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지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은 시 · 군의 지자체장에 개정권한이 있으므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 군 간 업무추진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관련규칙의 개정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발생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1개 시 · 군의 해당부서에서는 코로나19 대응마련이 일차적 과제로 부상하고, 비대면 업무방침에 따라 각종 간담회, 업무회의가 잇달아 취소되면서 업무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잇달았다

이에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신속히 언택트(untact, 비대면) 업무처리방침으

로 변경하고, 개정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시 · 군별 관련 규칙 개정 전 부정사례 방지 위한 업무협조 등)을 공문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담배소매인조합 등 관계자 의견청취 사항이나 시 · 군별 개정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을 통해 업무지연을 최소화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는 도내 편의점, 골목슈퍼 출점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의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는 과밀경쟁을 완화하고 매출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 · 군은 지역별, 인구별 특성이 다양하여 도가 권고한 개선방안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각 시 · 군별로 규제의 정합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정책은 일부 시·군의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개정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개정을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사항이었다. 이 경우, 광역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책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 · 군과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다.

또한 기초 지방정부인 시·군 역시 관련규칙의 개정사항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정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일방적인 탑다운(top-dowm) 형태의 업무협조가 아니라,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 하에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의 의의가 크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개정작업은 일부 시·군에서만 진행 중이나, 도내 전체적인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시 · 군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경기도는 광역-기초지자체 간의 상호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가능하도록 '담배소매인 개정작업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시 · 군별 담

배소매인 관련 규칙 운영상황, 각종 분쟁사례 공유 등 실효적인 담배소매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85. 도시계획 차원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장 김병태

- 추진배경 :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 추진내용 : 시 · 군 도시 · 군 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 문제점 및 해결 : 道 권한 부재,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시 · 군 공감대 형성
- 평　　가 : 소상공인 보호위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공동협력 전국 최초 사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의 점포를 말한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세사업자 중심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으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건축허가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입점제한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부터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현행 법률 개정없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 제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표 85-1] 대규모점포 입점절차

① 건축허가	→	**②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건축허가後-영업개시前)**	→	③ 건축준공 및 영업개시
(개설자→시·군)		(개설자→**시·군**)		(개설자)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소상공인 보호 위한 「도시계획차원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검토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도시계획차원의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시 · 군 도시 · 군 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입지제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85-2]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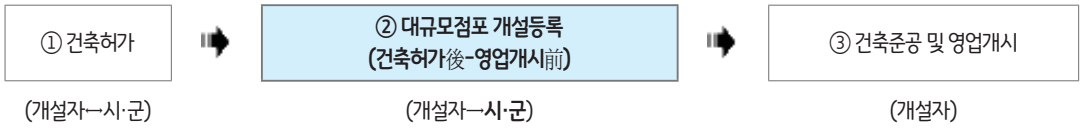
구 분	세 부 내 용
추진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시·군 조례로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건축제한)
개선방안	○ 대규모점포 입지가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내 입지제한 **- 용도지역(준주거,근린상업, 준공업)내 대규모점포 건축제한 ⇒ 시·군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2) 소상공인 보호 공감대 형성

경기도는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시 · 군의 참여를 위하여 관계기관 설명회와 시 · 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수원시 등 11개시(수원 · 고양 · 용인 · 성남 · 부천 · 화성 · 안산 · 남양주 · 안양 · 광명 · 하남)와 업무협약을 체결('19.12.3.)하였다.

대규모점포 상권은 행정경계를 초월하여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 수도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공동 노력하고자 「경기도-서울-인천-더불어민주당」과 업무협약을 체결('19.12.19.)하여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다.

[사진 85-1]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추진방안



3) 11개 참여市 개선안 마련 완료 및 조례개정 절차 진행

경기도는 협약체결 이후 실무협의회(道-11개市-GRI)를 구성('20.1.10.)하고,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 · 군 사례분석을 통하여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11개市에 제시하였다.

11개市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각 市여건에 맞는 조례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검토 · 자문을 거쳐 2020년 5월29일에 개최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부터 각 市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본격 진행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표 85-3]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조례개정 추진계획

구 분	市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	➡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市조례규칙심의	➡	市의회의결 및 공포
일 정	'20. 6.		'20. 6.~8.		'20. 8.~9.		'20. 9.~11.

4)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참여시 · 군 확대 (11개市 → 18개 시 · 군)

대규모점포 상권이 인접 시 · 군까지 행정경계를 초월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경기도는 일관성 있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를 위하여 2020년 6월 4일 부단체장 회의를 통한 설명 등 참여시 · 군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평택시 등 7개市(평택 · 양주 · 이천 · 구리 · 안성 · 의왕 · 가평)가 추가 참여하게 되어 하반기부터 조례개정안 마련을 위한 道-시 · 군 간 협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道 권한 부재

용도지역(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내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경기도의 권한이 아닌, 시 · 군 권한임에 따라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위해서는 시 · 군의 도시 · 군 계획조례를 개정하여야 하였다.

2) 설명회 개최 등 시 · 군 동참 요청

경기도는 이에 따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시 · 군(도시계획담당 부서)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20.10.30.)하고, 부단체장 회의('20.11.5.) 등을 통하여 경기도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수원시 등 11개市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지난 12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그만큼 경기도는 1차 참여 11개市와 2차 참여 7개市의 조례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참여 시 · 군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86. ‘착착착’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통합판로 지원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장 인재서

- 추진배경 :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지원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통합 추진, 매출증대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 추진내용 :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홍보 및 마케팅 추진, 온 · 오프라인 판로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기업 · 시설의 입점 신청 저조,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서류 간소화 등
- 평　　가 : 착한 소비문화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사회적 가치’란 경제 · 사회 · 환경 · 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가치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한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은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자활생산품, 노인생산품 등과 같이 취약계층이 사회적 의미를 담아 생산한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경기도주식회사 통합추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착한 소비문화 조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에 대한 공동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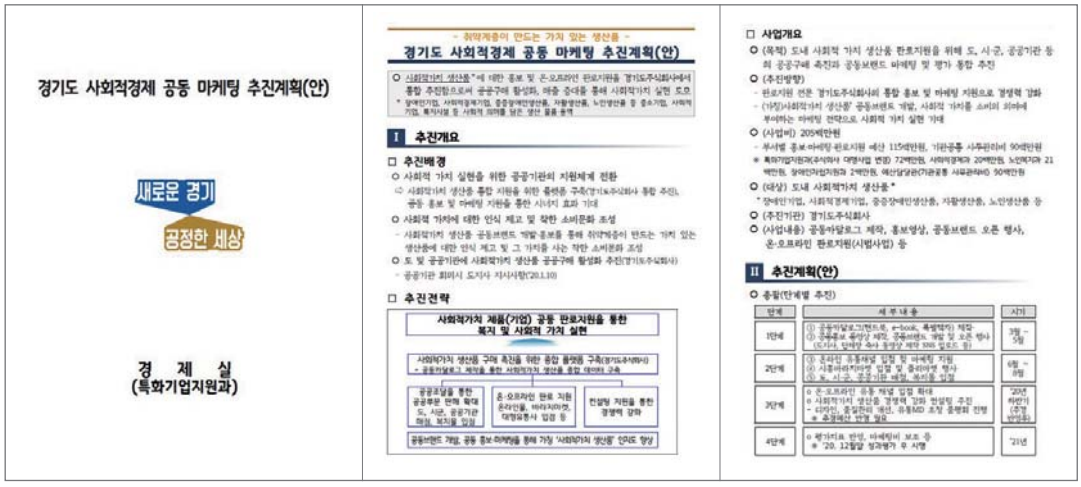
1) 사회적 가치 생산품 판로지원을 위한 공동추진체계 구축

기존에는 특화기업지원과(장애인기업 생산품), 사회적경제과(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자립지원과(중증장애인생산품), 복지사업과(자활생산품), 노인복지과(노인생산품) 등 생산기관의 성격에 따라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판로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동마케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생산품에 대한 인식 향상과 판로확대를 도모하고자 공동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화기업지원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경기도주식회사가 실무를 맡아 사회적 가치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지원을 담당하였다. 관련 예산은 5개 부서의 홍보 및 마케팅 예산과 예산부서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였다.

2020년 4월 22일 수립된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동마케팅 추진계획에 따라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홍보 · 마케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판로지원을 추진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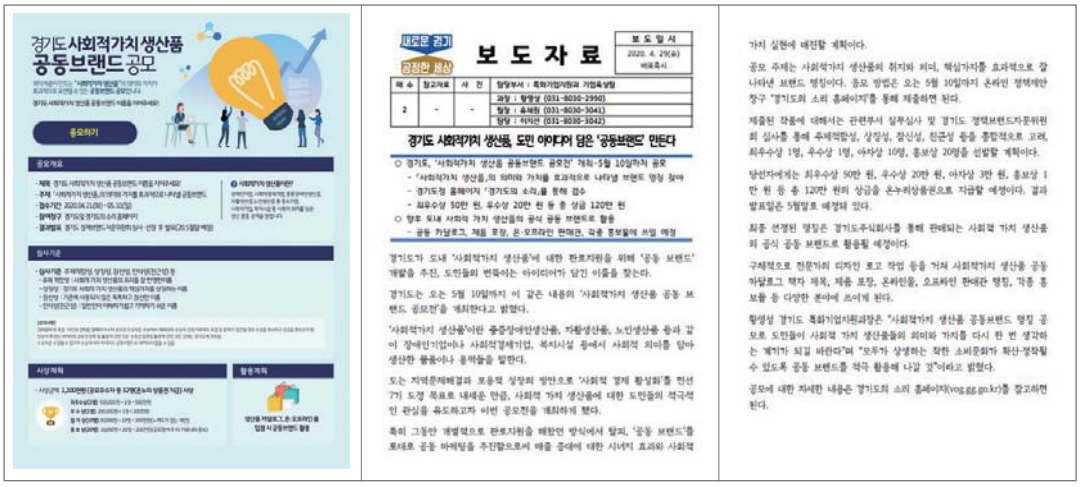
[표 86-1]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동 마케팅 추진계획(안)



2)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경기 '착착착' 개발

취약계층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의미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만들고자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 포스터를 제작하여 경기도 전 기관 및 시 · 군에 배부하였고, 도 홈페이지 게시,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도민 홍보를 추진하였다. 2020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491건의 브랜드(안)이 접수되었으나, 적합한 브랜드가 없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하였다.

[표 86-2] 공동브랜드 개발 과정



[표 86-3] 공동브랜드 경기 '착착착' 개발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인지도 제고, 착한 소비문화 조성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

해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경기 '착착착'(착한사람, 착한상품, 착한소비)이 개발되었다. 공동브랜드 경기 '착착착'은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카탈로그, 홍보영상 등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몰 입점 시 활용되고 있다.

3)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홍보 및 마케팅 추진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동 마케팅 추진계획('20.4.22.)」에 따라,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카탈로그와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부서별로 추진되던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5개 분야(장애인기업 생산품,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생산품, 자활생산품) 생산품의 공동카탈로그 제작을 통해 통합 추진하였다. 103개 업체, 403개 제품을 수록한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카탈로그(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쇼핑 가이드북)는 도 및 시 · 군, 산하기관, 도내 공공기관, 각급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 5,000부가 배부되었다.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의미, 공동브랜드 경기 '착착착' 홍보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은 그래픽과 5개 분야 기업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도지사 축하영상 등으로 제작되어 도 홈페이지, 경기도 유튜브 등 경기도 공식 SNS에 송출, 도민 홍보에 활용되었다.

[표 86-4]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쇼핑 가이드북

[표 86-5] 사회적 가치 생산품 및 공동브랜드 홍보영상

4)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역상생 협력매장인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바라지마켓' 입점을 지원해 대형 유통망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지웰 · 이제너두 등 온라인 복지몰 입점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매점 입점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다지고,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가치 생산품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86-1]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입점 사진

시흥바라지마켓 입점

경기도청 북부청사 매점 입점

이러한 경기도 주식회사의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바라지마켓' 12개사 입점, 8개사

입점진행 ▲‘복지몰’ 3개사 입점, 14개사 입점진행 ▲‘북부청사 매점’ 6개사 입점 등 총 43개사가 입점 또는 입점 진행 중에 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사회적 가치 생산품 생산시설(단체)의 관심 저조

자활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사회적 가치 생산품 생산시설은 대부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거나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사회적 가치 생산품 판로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몰 입점을 신청하도록 안내해도, 경기도주식회사에 입점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업이나 시설은 많지 않았다. 또한 입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시설이 많았다.

2) 설명회 개최 및 입점수수료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실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는 담당부서 회의 및 단체별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추진하였다. 입점신청서 양식도 간소화하고, 입점이 확정된 기업이나 시설에 한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이나 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나, 온·오프라인 몰 입점이 생소한 단체들의 관심이 높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단체나 시설은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높은 입점 수수료로 인해 입점을 망설이는 기업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홍보비나 입점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사회적 가치 생산품에 대한 판로지원은 취약계층에서 만든 의미 있는 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착한소비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또한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 가치 생산품 관련 기관·단체들이 공동마케팅 및 판로지원을 통합 추진하여 마케팅 비용 절감, 매출 증대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이 통합브랜드 경기 '착착착'(착한사람, 착한상품, 착한소비)으로 하나가 되어 사회적 가치 생산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디자인 개발, 품질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면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통해 보다 폭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87. 2020 착한 여행 캠페인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심혜인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관광업계 위기 극복 지원
- 추진내용 : 입장권 선구매 캠페인을 통한 도내 업계 긴급지원 및 방역용 위생용품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관광업체는 상품 선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는 최대 70% 할인가로 상품을 구입
- 평　　가 : 경기도형 관광분야 선순환 경제구조 롤모델 정착 및 민·관 소비자가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프로젝트 사업 추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20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 수가 급감하기 시작, 외국인 관광객은 6월 기준 전년대비 95% 이상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 조치에 따라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여 관광분야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도내 현황을 파악하고 관광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경기관광 민 · 관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경기관광공사, 민간 관광업계 종사자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사업예산을 일부 전환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어 있는 도내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 및 내수 진작을 유도할 수 있는 2020 착한여행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87-1] 경기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추이

※경기관광공사 해외마이스사업팀 전화조사

연번	관 광 지	'20.2~4월
1	한국민속촌	△80% 이상 (국내객)
2	쁘띠프랑스	
3	아침고요수목원	
4	아쿠아플라넷	
5	서울랜드	
평균		

'20.5월	
외래객	국내객
△95%	△40%
△95%	△75%
△99%	△50%
△99%	△85%
△95%	△65%
△97%	**△63%**

[표 87-2] 코로나19 관광업계 위기 대응전략

상황 분석	내수 관광시장 축소	관광업계의 피해 장기화	실질적 지원 요청
	·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감('20년 1분기 기준)	· 관광객 급감 및 휴업의 장기화로 경영수지 지속적 악화	· 현 상황에서 위기극복 가능한 실효성 대책 요청 *경기관광대책회의 1차(2.4.) *경기관광대책회의 2차(3.25.)
대응 전략	「도내 관광업계 대상 실질적인 위기극복 캠페인 추진」		
실행 방안	· 관광지 입장권 선구매 통한 관광업계 긴급 지원	· 전 국민 대상 경기도 착한여행 캠페인 전개	· 코로나 장기화 대비 방역물품 (손소독제, 마스크) 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 착한여행 캠페인	· 유료관광지 대상 입장권 선구매 캠페인을 통한 업계 긴급 지원 · 전 국민 대상 착한여행 캠페인 전개 관광업계 위기 극복 추진 · 국내 유력 판매 플랫폼을 통한 입장권 판매로 직·간접 소비 창출 · 방역용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안전한 식문화 체계 구축 지원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2020 착한여행 캠페인 추진

경기도는 전국민 대상 위기극복을 위한 '오늘의 착한소비, 내일의 행복여행'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관광업계 사전구매를 위한 '착한소비'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먼저 핵심사업으로 경기도 유료관광지 79개소 대상으로 경기도(경기관광공사)가 입장료를 50% 선구매 지원하고 관광업계는 20% 할인율을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정가의 30% 가격으로 '21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착한여행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착한여행 캠페인」은 '착한소비'와 '선구매' 개념을 적용한 민 · 관 상생협력 구조로 국내 유력 판매 플랫폼인 티몬을 통해 2020년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판매를 실시하였는데, 판매 첫날 16곳 관광지 입장권이 완판되고 판매 마지막 날인 24일 자정 기준 유료관광지 79곳의 입장권 19만매 중 59곳 매진, 총 16만매를 판매해 판매율 85%, 판매액은 7억 5천만 원을 달성하였다.

[표 87-3] 착한여행 캠페인 판매결과

참여기관	입장권 구매량	판매량	판매율	재고량	판매액 (소비자가 기준)
79개소	189,975매	161,106매	85%	28,869매	749,569,650원

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약 71억원***, 국내 당일여행 기준으로 **국내관광소비 파급효과는 약 1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업계 대상 실질적 지원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관광지입장 및 펜션 등 공사 지원액(15.4억 원) + 소비자 구매액(7.5억 원)] × 관광산업 유발승수(3.0966)

** [당일여행지출액(238,000원) / 국내당일여행일수(3.29일)] × 입장권판매량(161,106매)

경기도는 이와 동시에 도내 관광펜션 39개소 대상 숙박권(688매) 증정 이벤트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관광식당 358개소 대상으로 마스크 5,200개 · 손소독제 2,200개 · 자동 손소독기 358개 지원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위생 용품 수급이 어려운 업계에 방역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87-4] 착한여행 캠페인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구 분	대상시설	신청기관	추진사업	선정기준
관광사업체	122개소	79개소	착한여행 캠페인 입장권 판매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내 주요 유료 관광지 중 대기업 및 공공운영시설 제외 (경기관광체험프로그램 인증 포함 등)
관광펜션업	65개소	39개소	숙박권 선구매로 캠페인 이벤트 추진	경기도 소재 관광펜션업으로 등록 된 숙박시설 ('20.4월기준)
관광식당업	358개소	358개소	방역 위생용품 지원	경기도 소재 관광식당업으로 등록 된 음식점 ('20.4월기준)
소 계	545개소	**476개소**	-	-

<선 정 기 준>

○ 관광사업체

- 경기도해외마케팅전문가협의체 회원, 마이스 얼라이언스, 경기관광체험프로그램 인증 업체 포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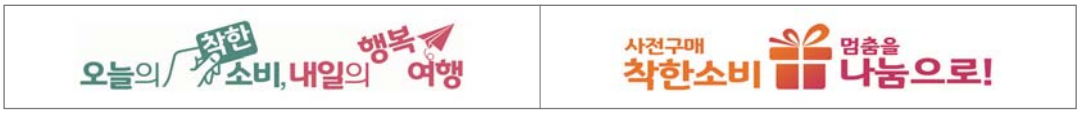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내 주요 유료 관광지 중 대기업 및 공공운영시설 제외

○ 관광펜션 : 경기도 소재 관광펜션업으로 등록 된 숙박시설(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 관광식당 : 경기도 소재 관광식당업으로 등록 된 음식점(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사진 87-1] 착한여행 캠페인 슬로건 및 포스터 이미지

[슬로건(2종)]



[포스터]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관광펜션업 참여 저조

도내 등록된 관광펜션업 대표들에게 일일이 통화하여 캠페인 취지 및 지원정책을 소개하였으나, 대부분 고령의 단독 사업주로 공공에서 지원받은 적이 전무후무하여 참여를 거절하여 각 펜션별 5~7번의 통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경기도의 지원취지를 이해시킨 후 숙박권을 활용한 홍보 이벤트에 참여하게 하였다.

2) 관광업계 할인율 적극 조정

처음 경기도에서는 착한여행 캠페인 참가 분담률을 20%로 제안했으나, 일부 관광 업계에서는 가격할인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가격 정책은 관광시설의 고유한 영역으로 경기도에서 제안은 가능하지만 강제성을 갖고 추진하기는 어려웠고, 이에 따라 가격 할인율은 업계에서 결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가격할인 불가로 캠페인에 참가하지 않은 업계들도 있으며(웅진플레이도시, 벽초지수목원, 파주치즈스쿨 등), 이와 반대로 업계 할인율을 20% 이상으로 책정한 시설(모란미술관(33.3%), 소울원(28.3%), 한터조랑말농장(27.3%) 등)도 있다. 현대유람선(아라뱃길김포터미널)의 경우, 최초 신청 시 할인율은 12%로 신청하였지만 캠페인 추진 배경 설명 등 협의를 통해 20%로 최종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1) 전국민 대상 경기도형 착한여행 캠페인 개최를 통한 전국 이슈화

「착한여행 캠페인」은 전국 단위 공중파 뉴스보도 및 취재(7회, SBS · YTN · JTBC ·

MBN · 연합뉴스TV · TV조선 · OBS), 주요 일간지 및 중앙지 캠페인 취재 및 기획 기사 보도(300여 회), 캠페인 기간 중 판매 플랫폼 인기 검색어 상위 지속 노출(1위~5위)등 홍보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 ·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경기도에서는 보도자료 배포(4회) 및 기사화, 공중파 뉴스보도, TV/라디오 광고, 대중교통 및 전광판, 수도권 아파트 E/V 및 유튜브 영상 광고, 온라인 바이럴 및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맘카페 등)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온 · 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성공적인 캠페인 추진을 이끌어냈다.

2) 국내 지자체 최초 경기도형 관광분야 선순환 경제구조 롤모델 정착

이러한 과정으로 민 · 관 및 소비자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프로젝트로 추진한 「착한여행 캠페인」은 단순히 파격적인 할인 판매전이 아닌, 관광업체는 상품 선판매로 당장 수익을 올리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침체된 관광업계를 돕는 착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잠재적 여행심리 회복을 견인하고 고사 위기의 관광업계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단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향후 관광을 통해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기존의 1회성 지원사업보다 진일보한 생계 활성화 지원 및 구축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타 광역 지자체(서울, 인천) 및 관광 유관기관(대구, 제주)의 자문 요청이 쇄도하는 등 국내 지자체 최초 경기도형 관광분야 선순환 경제구조 롤모델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88.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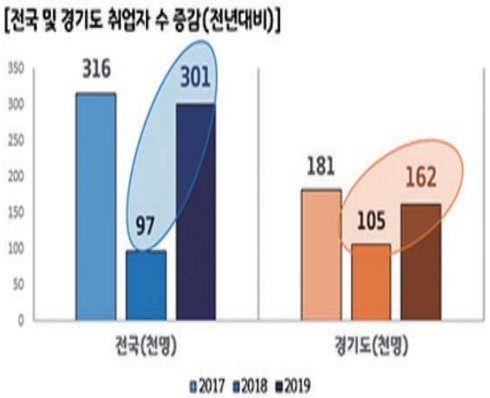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기획팀장 정성섭

- 추진배경 : 민선7기 경제 도정목표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구현 및 더 좋은 일자리 창출
- 추진내용 : 공공일자리(154개 사업), 공익적 민간일자리(117개 사업), 고용기여형 일자리 (170개 사업)
- 문제점 및 해결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사업 추진 지연으로 비대면 등 사업추진 방식 다각화
- 평　　가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기도형 일자리를 중점 확대하여 공정한 사회의 기틀 마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도내 일자리 여건은 2019년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청년 및 50대 이상 취업자가 확대되어 2018년 고용부진에서 회복세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의 위기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88-1] 전국 및 경기도 취업자 수 증감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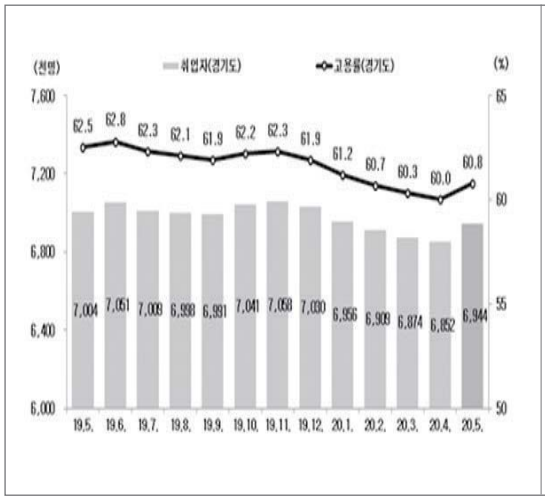


[표 88-2] 경기도 취업자 수 증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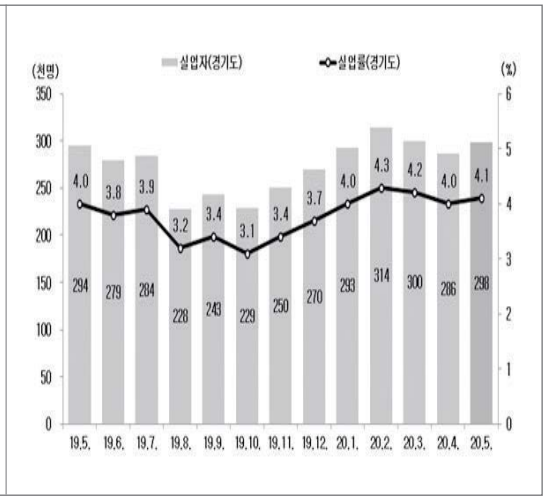
2020년 5월 기준 경기도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는 694만 4천 명으로 2019년 5월 대비 5만 9천명(-0.8%)이 감소하고, 고용률은 60.8%로 1.7%p가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4.1%로 0.1%p 상승했다.

코로나19 충격이 경제전반으로 본격화되면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임시 ·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일자리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표 88-3] '20.5월 경기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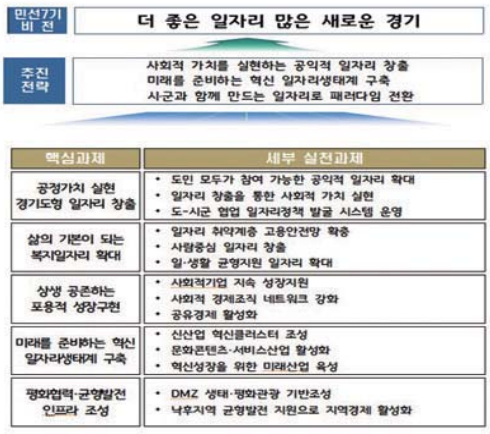
[표 88-4] '20.5월 경기도 실업률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민선7기 일자리 도정 철학을 반영하여 작은 영역이라도 다수에게 유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안전 · 공정 · 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기도형 공익적 일자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과 전략으로 2020년은 441개 일자리사업, 119천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88-5] 2020년 일자리사업 핵심과제



[표 88-6] 2020년 일자리 목표

1) 분야별 일자리사업 현황

○ 공공일자리 : 154개 사업, 112,216개 일자리

- (내 용)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본적 정의와 질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분야 일자리
- (주요사업) 먹거리안전관리사 '농농케어', 경기도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
- (기대효과) 지도, 단속분야 직접 일자리창출로 공정한 사회 기반 마련

○ 공익적 민간일자리 : 117개 사업, 7,443개 일자리

- (내 용) 공공성이 강하지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일로 道 재정지원이 필요한 민간일자리
- (주요사업) 다문화 디지털콘텐츠 창작지원, 경기 창업준비농장 운영 등
- (기대효과)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가치 실현하는 선순환 경제 동력 확보

○ 고용기여형 일자리 : 170개 사업

- (내 용) 재정으로 추진되는 공공인프라, 인재양성교육 등의 일자리
- (주요사업)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등

- (기대효과) 재정지원을 통한 직간접 민간일자리를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

2)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기반 구축

경기도는 대표적인 서민 · 지역형 일자리산업인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과 건설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19.5월)하고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실시한 첫해 교육에서는 36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으로는 최초로 경기도의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도내 건설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같이 힘쓸 것을 약속하는 노·사·정 상생 협약을 체결('19.7.15.)했다.

심각한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으로 위기에 놓인 건설일자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 · 사 · 정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수차례에 거친 실무진 만남을 통해 이루어낸 협약이다.

[사진 88-1] 노·사·정 협약체결

[사진 88-2]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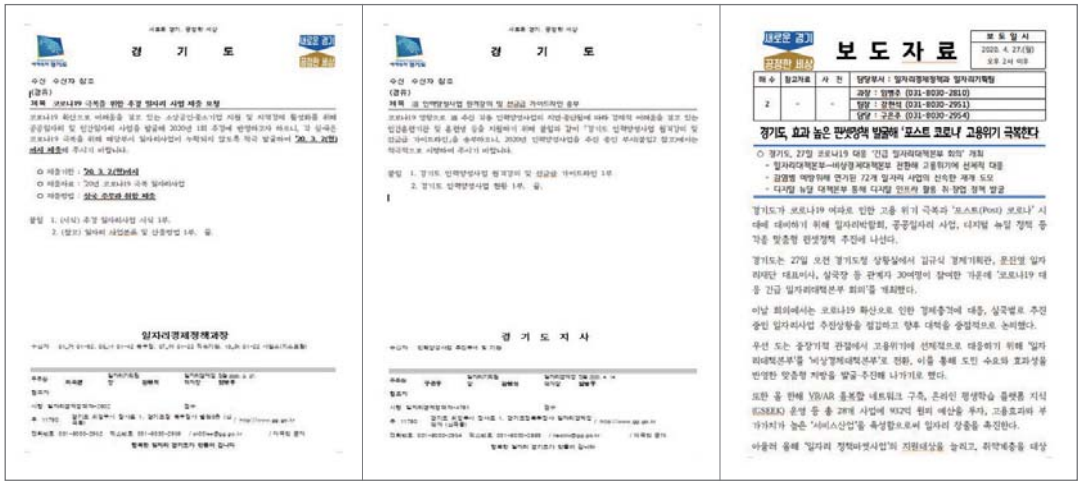
3)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일자리대책 추진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가 경제 및 일자리 위기로 확산되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특별보증 및 신속보증반 운영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긴급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53개)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연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훈련기관 및 훈련생, 강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강의 및 생계지원형 선급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코로나19 지속에 대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표 88-7]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일자리대책 추진


경 기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경 기 도

경 기 도 지 사

재난문 경기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0. 4. 27.(월)

오후 2시 이후

책 수	참고자료	사 전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기획팀
2	-	-	과장 : 임병준 (031-8030-2810)
			팀장 : 강현석 (031-8030-2951)
			담당 : 고준호 (031-8030-2954)

경기도, 효과 높은 판로정책 발굴해 '포스트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한다

○ 경기도, 27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일자리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일자리대책본부-비상경제대책본부 전환해 고용위기에 선제적 대응
- 감염병 예방위해 연기된 72개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재개 도모
- 디지털 뉴딜 대책본부 통해 디지털 인프라 활용 취·창업 정책 발굴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과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박람회, 공공일자리 사업, 디지털 뉴딜 정책 등 각종 맞춤형 판로정책 추진에 나선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규식 경제기획관, 문진영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삼국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긴급 일자리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응, 상국별로 추진중인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대책본부'를 '비상경제대책본부'로 전환, 이를 통해 도민 수요와 효과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 한해 VR/AR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GSEEK) 운영 등 총 28개 사업에 912억 원의 예산을 투자,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아울러 올해 '일자리 정책바젯사업'의 지원대상을 늘리고, 취약계층을 대상

또한 도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일자리대책본부를 개최하여 실 ·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사업특성별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신규 일자리 및 기존 일자리사업의 확대 발굴을 통해 총 42개 사업을 발굴하고 노동안전지킴이 등 사업효과 및 확장성이 높아 전국 확대시행이 가능한 주요 9개 사업을 중앙정부 긴급 지역일자리 창출 회의('20.5.21)에 건의하는 등 코로나19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자리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일자리대책본부 긴급 일자리사업 점검 회의 등 두 차례에 걸친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방식의 다각화 등 재개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교육훈련 사업은 이론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필수 실습과정은 개인별 또는 소그룹 교육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전환하였다. 감염병에 취약해 복지부 권고로 일시 중단되었던 노인일자리사업은 생계지원을 위해 활동비 우선지급, 비대면 사업은 제한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일자리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단순한 공공일자리가 아닌 기본적 정의, 질서,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기도형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여건 변화 및 일자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뉴딜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9.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긴급지원

특화기업지원과 정책자금팀장 조영미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마련
- 추진내용 : 코로나19 피해 상황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특별자금 규모 총 1조 1,200억 원 편성
- 문제점 및 해결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도래로 보다 확대된 금융대책 추진
- 평　　가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안정적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20년, 세계는 중국發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무후무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수정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9%로 예측하였으며, 1930년 세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공식화하였다. IMF는 현재 세계 경제를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 불확실한 회복'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와 비슷하게, World Bank와 OECD 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각각 -6.8%, -7.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이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중 가장 높고, 개발도상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다. K-방역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적인 방역 체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소비 부진과 수출 감소로 인해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특별자금을 긴급 지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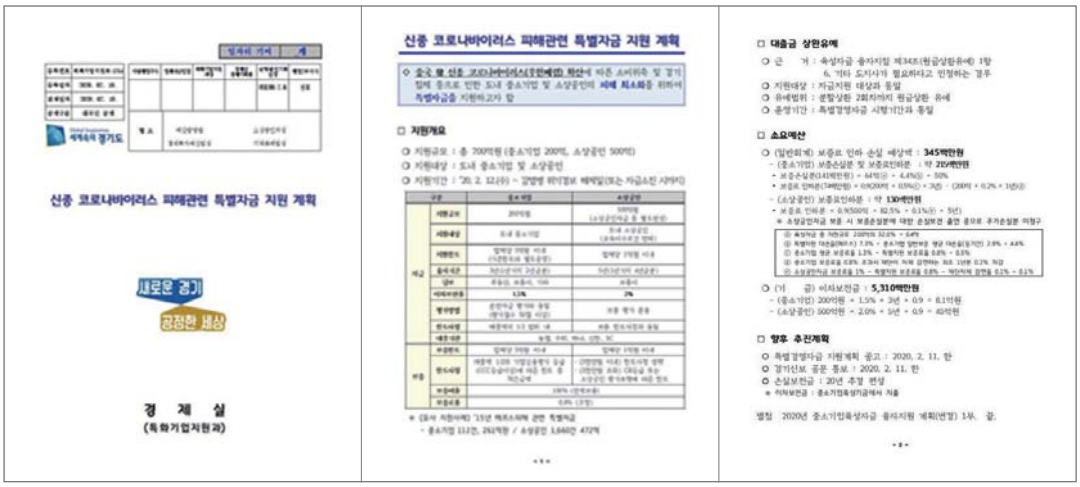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총 700억 원 규모 특별자금 선제적 시행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20.2.12. 확진자 수 전일대비 1,445명 증가)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여 2020년 2월 12일,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총 7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먼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지원 내용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균등분할), 이차보전율 1.5%로 결정하였다. 중소기업 보증 또한 업체당 5억 원 이내 한도,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0.8%(고정)로 지원하였다.

[표 89-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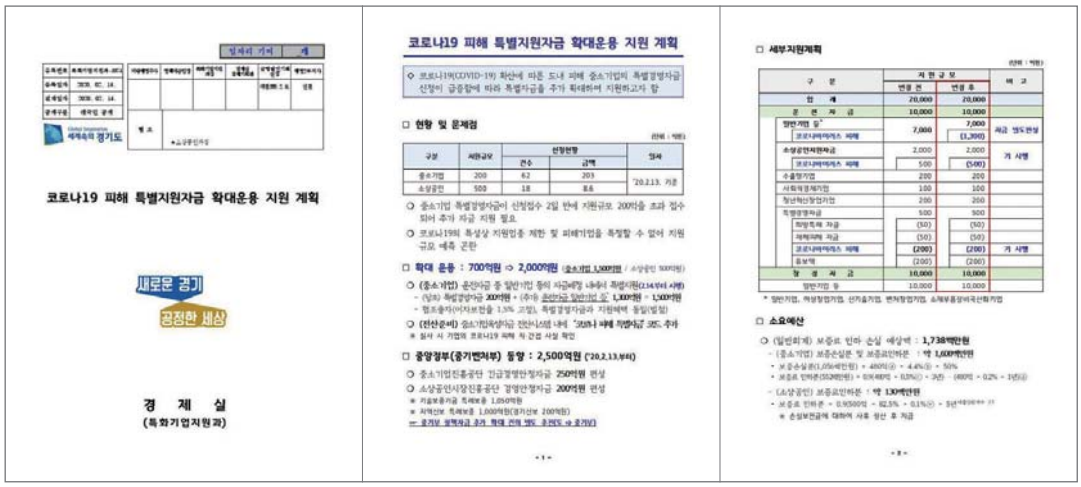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업체당 1억 원 이내 한도, 융자기간 5년(1년거치, 4년균등분할), 이차보전율 2%로 결정하였다. 소상공인 보증 또한 업체당 1억 원 이내 한도, 3

천만 원 이내 보증에 대해서는 한도사정을 생략하였으며,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0.8%(고정)로 지원하였다.

2) 특별자금 지원규모 1차 확대

그러나, 신청접수 2일 만에 도내 피해 중소기업의 특별경영자금 신청이 예상을 초과하여 급증, 당초 지원규모인 200억 원을 초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해 밤샘작업으로 긴급히 방침 결재를 진행하여 2020년 2월 14일 신속하게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1,500억 원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 1,5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총 2,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표 89-2]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자금 확대운용 지원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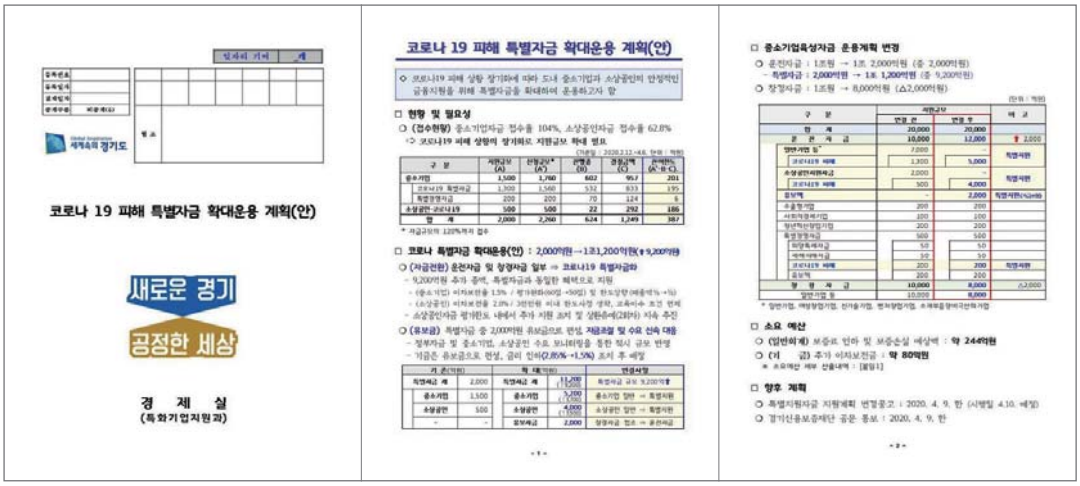
3) 특별자금 지원규모 2차 확대

코로나19 피해 상황 장기화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도래로 보다 신속한 금융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특별자금 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9,200억 원이 더 늘어난 총 1조 1,200억 원으로 자금을 확대 편성하였다.

이는 2020년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2조 원의 56% 가량으로, 시설자금 8,000억 원

가량을 제외한 가용 자금 전부를 코로나19 특별자금으로 전환한 특단의 조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1,500억 원에서 5,200억 원으로, 소상공인은 5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리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보액 2,000억 원을 별도 편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출금 상환도 분할상환 2회까지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이다.

[표 89-3] 코로나19 피해 특별자금 확대운용 계획(안)



[표 89-4] 경기도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규모 확대

(단위: 억원)

구 분		당 초 (2/12)	1차 확대 (2/14)	2차 확대 (4/10)
중소기업	일반	-	1,300	5,000
	특별	200	200	200
소상공인		500	500	4,000
예비자금		-	-	2,000
합 계		700	2,000	1조 1,200

4) 추진 성과

2020년 6월 30일 기준 중소기업 732건에 2,5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9,182

건에 2,518억 원을 지원하였다. 보증은 156,835건에 4조 3,726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전국 코로나19 특별지원 건수 기준 20.2%를 점유하는 수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전국 1위를 달성하였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코로나19 자금수요 폭발적 증가에 따른 특별대책 신속 시행

소비심리 및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신청이 급증, 코로나19 특별자금이 신청접수 2일 만에 당초 지원규모인 200억 원을 초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자금 수요 폭증 상황에서, 도는 2월 14일, 밤샘작업으로 신속하게 자금 지원규모를 중소기업 1,5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속적인 코로나19 경과 모니터링으로, 4월 10일 도는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1,500억 원에서 5,200억 원으로, 소상공인은 5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자, 시설자금 8,000억 원 가량을 제외한 가용 자금 전부를 코로나19 특별자금으로 전환한 특단의 조치다.

또한, 경기도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피해 소상공인들을 신속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동안 불필요하게 길었던 자금 지원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높았던 기준을 완화해 전무후무한 긴급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2) 기금 감소분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 지원 및 협조융자 증가로 이차보전금 지원액이 증가하고, 공

공예금 금리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특별자금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출 증가로, 기금 전출금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금융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금 감소분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경기도는 코로나19, 그 이후에 찾아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는 이번 코로나19, 가장 긴박했던 100일 간의 사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금융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목표로 총력 대응하였다.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코로나19 특별지원 전국 1위(특별지원 건수 기준 20.2%)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서 또 다른 위기가 닥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경기도는 2021년에도 민선7기 경제정책 도정목표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구현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피해 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 피해 모니터링 후 유보액을 수시 배정하는 등 탄력적 운용을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업자가 급감하고 일시휴직자가 급증한 현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조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2019년 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 · 확대한 제조 기업으로써 1년 이상 고용유지 · 확대를 확약하는 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90.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전국 최다

특화기업지원과 정책자금팀장 조영미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道내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직면
- 추진내용 : ’20년 상반기 156,835개 업체, 4조3,726억 원 보증지원(전년동기 대비 3배↑)
- 문제점 및 해결 : 보증수요 폭증에 대응, 지원기준 간소화 및 전사적인 총력지원 추진
- 평　　가 : 전국지역재단 중 지원실적 1위,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기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되면서 경기도에서는 1월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지역 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우려가 커지면서 급격한 소비와 투자 위축을 가져왔으며, 실물경제로의 파급되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화되었다.

[표 90-1] ’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보증수요 비교 현황

(단위: 건)

구 분	1월 일일평균(A)	3월 일일평균(B)	증 가(B-A)
콜센터 상담	1,026	5,232	↑4,206
방문상담	570	4,694	↑4,124
보증신청	291	4,738	↑4,447

이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위한 보증수요가 폭증하였다. 2020년 3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일평균 상담 건수는 코로나 집단발생 이전인 2020년 1월 평균 1,026건 대비 5.1배 증가한 5,232건이었고, 방문상담 건수는 2020년 1월 일평균 570건 대비 8.2배 증가한 4,694건이었으며, 보증신청 건수는 2020년 1월 일평균

291건 대비 16.3배 증가한 4,738건을 기록하였다.

이런 급격한 금융수요의 증가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 이래 전례가 없었으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최대한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코로나19 피해 특별자금 및 보증지원 추진

경기도에서는 2020년 2월 12일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으로 총 7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코로나19 특별자금"을 편성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선제적인 지원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자금신청이 급증하여 2020년 2월 14일 긴급하게 지원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 시행(1차 확대)하였고 이후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2020년 4월 10일 9,200억 원이 늘어난 총 1조 1,200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보증규모도 이와 함께 확대하였다.

경기도의 특별자금 연계 보증 외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보증상품과 중앙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보증" 등을 통해 위기에 빠진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해 다양한 보증지원을 추진하였다.

[표 90-2]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위한 보증지원 개요

(단위 : 억 원)

구 분		경기도	경기신보 자체	중앙정부	
		코로나 특별보증	금융기관 협약보증	초저금리 보증	코로나 특례보증
지원규모	당초	700	6,500	전국 6,000	전국 1조 원
	확대	1조 1,200	6,500	전국 6조 8,500	전국 8조 2,000
지원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한도		최대 5억 원	최대 1억 원	최대 5천만 원	최대 7천만 원
대출금리		이차보전 2.0%	은행금리	약 1.5%	약 2.6%

2)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직운영 및 보증지원 제도 개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폭증하는 보증신청 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업점의 미결 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하는 긴급 TF팀(신속지원전담반)을 2020년 3월 9일부터 재단 본점 내에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표 90-3] 신속지원전담반 개요

○ 1(목적) 보증수요 폭증에 따른 영업점 업무마비 개선 및 신속한 보증지원 도모
○ (내용) 재단 고객지원부장을 반장으로 총 51명을 투입하여 상담팀과 보증심사팀으로 운영

TF팀 반장	운영총괄·관리
고객지원부장	고객지원부

상담팀	심사팀
사이버보증 접수건에 대한 온라인 상담 전담	지점 보증신청건에 대한 심사, 품의 전담
21명(총괄1, 상담20)	30명(총괄2, 심사22, 지원6)

또한 보증수요 대비 부족한 보증지원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단기지원인력 174명을 긴급 채용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46명) 및 하나은행(33명)에서 파견 받은 인력 총 79명을 영업점으로 긴급히 투입했다.

[표 90-4] 영업점 인력 충원 현황

○ (충원인원) 총 253명(174명 채용, 파견인력 79명)

충원일자	구 분	인 원	배치부서	담당업무
2.24.	출장전담인력 (금융기관 유경험자)	21	영업점	현장실사
3.2.	출장전담인력 (금융기관 유경험자)	19	영업점	현장실사
3.4.	영업점 시간제 인력	25	영업점	고객응대
3.9.	비대면 영업점 상담 (금융기관 유경험자)	23	영업점	보증상담
3.9.	코로나TF 시간제 인력	6	신속지원전담반	TF 지원
3.10.	사이버보증 상담 (금융기관 유경험자)	20	신속지원전담반	보증상담
3.23.	영업점 시간제 인력	60	영업점	고객응대
4.8.	영업점 상담 및 출장인력 (중앙회 파견)	46	영업점	보증상담
4.10.	영업점 상담인력 (하나은행 파견)	33	영업점	보증상담
합 계		**253명**		

이와 함께 보증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위탁보증을 실시하여 재단에 집중된 보증수요를 은행에 분산시킴으로 보증적체 상황을 개선하였다.

[표 90-5] 주요 보증지원 제도개선 내용

○ **(2.12. 시행) 동반출장 생략, 실사자-심사자 분리 해제, 전결권 하부위임**
- 같은 기업 당 5천만 원 초과 출장방식 : (기존) 동반출장 ⇒ (완화) 단독출장
- 실사자-심사자 운용 : (기존) 분리운용 ⇒ (완화) 분리해제
※ 금액무관 심사자 출장가능
- 중소기업에 대한 회수보증 및 기한연장 전결권 : (기존) 지점장 ⇒ (완화) 차·과장
○ **(2.14. 시행) 현장실사 생략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업력 3년 이상, CB 3등급 이상, 재단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 운수업, 통신판매 등 직접조사 생략가능 업종 영위 중으로 대체 서류 제출하는 경우
○ **(3.23. 시행) 은행 보증업무 위탁 (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위탁업무 : 보증상담, 서류안내 및 접수, 신용보증약정, 서류송부
○ **(4.1. 시행) 기업은행 위탁 보증 시행**
- 재단의 모든 보증업무를 기업은행에 위탁하여 기업은행 방문만으로 보증-대출 원스톱 지원

3) 전사적인 총력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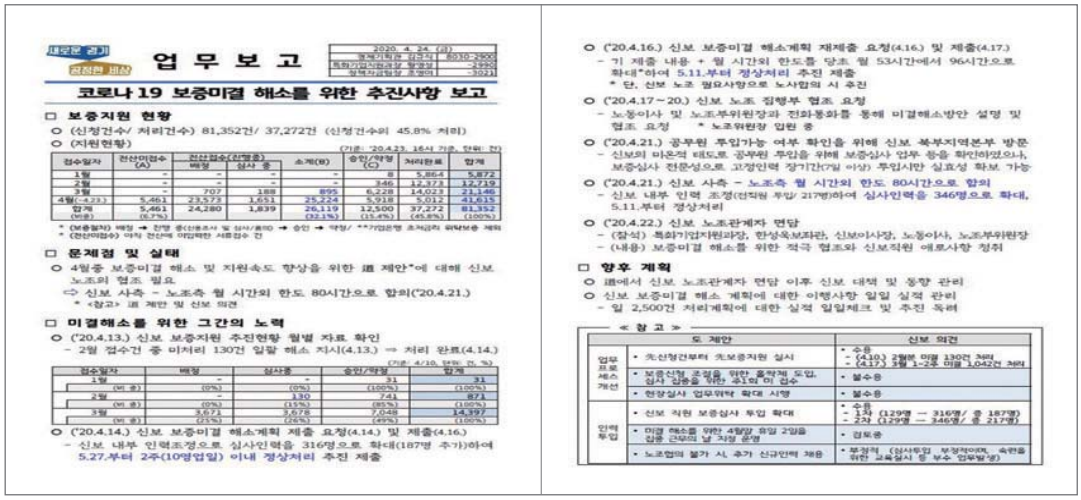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한 4월부터 보증수요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여 미결해소를 위한 지원건수 극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20년 4월 17일부터 일간 2,500건의 보증지원을 목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모든 직원을 보증심사에 집중(기존 129명 → 확대 346명)시키고 직원별 매일 평균 7건의 보증지원목표를 부여하여 미결해소를 위한 총력지원을 전개하였다.

또한 보증지원 집중을 위한 근로시간 확보를 위해 재단 노사 간 합의 및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통해 2020년 4월 21일 월간 초과근무시간 범위를 기존 53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

대하였으며, 도내 소기업 ·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혼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안내를 강화하였다.

[표 90-6] 코로나19 보증미결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 보고 자료



업 무 보 고

코로나 19 보증미결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 보고

□ 보증지원 현황

○ (신청건수/ 처리건수) 81,352건/ 37,272건 (신청건수의 45.8% 처리)

○ (지원현황)

접수일자	전산입력수 (A)	전산접수(취합중) 배정	전산접수(취합중) 심사 중	소계(B)	승인/부정 (C)	처리완료	합계
1월	-	-	-	-	8	5,864	5,872
2월	-	-	-	-	346	12,373	12,719
3월	-	707	188	895	6,228	14,023	21,146
4월(~4.23.)	5,461	23,573	1,651	25,224	5,918	5,013	41,615
합계	5,461	24,280	1,839	26,119	12,500	37,272	81,352
(비율)	(6.7%)			(32.1%)	(15.4%)	(45.8%)	(100%)

□ 문제점 및 실태

○ 4월중 보증미결 해소 및 지원속도 향상을 위한 1표 제안*에 대해 신보 노조와 협조 필요

⇨ 신보 사측 – 노조측 월 시간외 한도 80시간으로 합의('20.4.21.)

* <참고> 1표 제안 및 신보 의견

□ 미결해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

○ ('20.4.13.) 신보 보증지원 추진현황 월별 자료 확인

– 2월 접수건 중 미처리 130건 일할 해소 지시(4.13.) ⇒ 처리 완료(4.14.)

접수일자	배정	심사중	승인/부정	합계
1월	-	-	31	31
(비 율)	(0%)	(0%)	(100%)	(100%)
2월	-	130	741	871
(비 율)	(0%)	(15%)	(85%)	(100%)
3월	3,671	3,678	7,048	14,397
(비 율)	(25%)	(26%)	(49%)	(100%)

○ ('20.4.14.) 신보 보증미결 해소계획 제출 요청(4.14.) 및 제출(4.16.)

– 신보 내부 인력조정으로 심사인력을 316명으로 확대(187명 추가)하여 5.27.부터 2주(10영업일) 이내 정상처리 추진 제출

○ ('20.4.16.) 신보 보증미결 해소계획 재제출 요청(4.16.) 및 제출(4.17.)

– 기 제출 내용 + 월 시간외 한도를 당초 월 53시간에서 96시간으로 확대*하여 5.11.부터 정상처리 추진 제출

* 단, 신보 노조 협의사항으로 노사합의 시 추진

○ ('20.4.17~20.) 신보 노조 집행부 협조 요청

– 노동이사 및 노조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미결해소방안 설명 및 협조 요청 * 노조위원장 입원 중

○ ('20.4.21.) 공무원 투입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신보 북부지역본부 방문

– 신보의 마온적 태도로 공무원 투입을 위해 보증심사 업무 등을 확인하였으나, 보증심사 전문성으로 고정인력 장기간(7일 이상) 투입시만 실효성 확보 가능

○ ('20.4.21.) 신보 사측 – 노조측 월 시간외 한도 80시간으로 합의

– 신보 내부 인력 조정(전직원 투입/ 217명)하여 심사인력을 346명으로 확대, 5.11.부터 정상처리

○ ('20.4.22.) 신보 노조관계자 면담

– (참석) 특화기업지원과장, 한상욱보좌관, 신보이사장, 노동이사, 노조부위원장

– (내용) 보증미결 해소를 위한 적극 협조와 신보직원 애로사항 청취

□ 향후 계획

○ 1표에서 신보 노조관계자 면담 이후 신보 대책 및 동향 관리

○ 신보 보증미결 해소 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일일 실적 관리

– 일 2,500건 처리계획에 대한 실적 일일체크 및 추진 독려

< 참 고 >

	도 제안	신보 의견
업무 프로세스 개선	• 先신청건부터 先보증지원 실시	• 수용 – ('4.10.) 2월분 미결 130건 처리 – ('4.17.) 3월 1~2주 미결 1,042건 처리
	• 보증신청 · 준칙을 위한 홈작제 도입, 심사 업무을 위한 주1일 이 감수	• 불수용
	• 현장심사 업무위탁 확대 시행	• 불수용
인력 투입	• 신보 직원 보증심사 투입 확대	• 수용 – 1차 (129명 — 316명/ 중 187명) – 2차 (129명 — 346명/ 중 217명)
	• 미결 해소를 위한 4월말 유일 2일을 집중 근무의 날 지정 운영	• 검토중
	• 노조업의 불가 시, 추가 신규인력 채용	• 부정적 (심사투입 부정적이며, 속한을 위한 교육실시 등 부수 업무발생)

[표 90-7] 보증심사인력 집중

구분	합계	심사인력							보증지원 인력				
		재단직원					외 부	계	경영 지도 위원	하나 은행 파견	중앙회 파견	시간제	소계
		신속 지원반	영업점	본점	지역 본부	소계	중앙회 파견						
현행	425	25	104	-	-	129	-	129	30	33	46	187	296
확대	596	25	208	47	20	300	46	346	30	33	-	187	250
증감	171	0	104	47	20	171	46	217	0	0	-46	0	-46

[표 90-8] 코로나 금융지원 안내

업무안내

신용보증

보증이용안내
보증신청자격
보증종류
보증평가기준
보증절차
보증상품
대출금리안내
보증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안내
지원자금
자금지원공고

긴급금융지원

소상공인 지원 |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극복,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패키지

신용등급에 따라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등급	지원기관 및 상품
1 - 3 등급	①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1 - 6 등급	②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4 - 10 등급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	④ 재단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특별보증 ⑤ 재단 중기부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

4) 주요성과

다양한 대책과 전사적인 지원 노력으로 2020년 4월 17일 28,285건이었던 보증미결을 불과 한 달 만에 1,981건으로 대폭 감소시켜 그 동안 적체되었던 보증지원을 정상화하였다. 이로 인해 2020년 6월 말 기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총 156,835건 4조 3,726억 원 지원하여 전국 지원 실적 1위를 달성했다.

[표 90-9] 코로나 보증미결 해소 추진상황 보고

업 무 보 고

코로나 19 보증미결 해소 추진상황 보고

□ 미결처리 현황

○ 5.18.기준 보증신청 89,079건 중 87,098건 처리(처리율 97.8%)로 미결해소

- (미결현황) 4.17. 28,285건 → 5.18. 1,981건 : 26,304건 감소
  - 전직원 보증심사, 시간외 확대 도입 등으로 일 평균 2,250건 처리(평시 일 117건)
- (해소추이)

(단위: 건/ 기업은행 위탁보증 계외)

일 자	누적신청	누적 미결*(A)	일일신청(B)	일일처리(C)	전여미결(A+B-C)	비고
'20.4.17.(금)	71,101	28,549	1,201	1,465	28,285	대책 도입
'20.4.29.(수)	84,682	22,603	5,833	2,078	26,358	일 최다신청
'20.5.18.(월)	89,079	6,665	555	5,239	1,981	일 최다처리

* 누적 미결(A) : 전일까지 누적된 미결

□ 향후계획

○ 보증지원 정상화

- (기간 정상화) 신규접수 건부터 평상시 기간(2주 내) 지원 가능
- (조직 일상화) 신속보증전담반 등 비상조직체계 5월말까지 단계적 운영종료

○ 하반기 '경기신보 보증운영 계획' 수립

- 상반기 실적분석 후 하반기 보증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별도 보고

※ '20년 보증공급 예상규모 : 6조 5,400억원 ('19년 2조 8,272억원)

[표 90-10] '20년 상반기 전국 지역재단 보증지원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경기	서울	경북	대구	부산	경남	충남	인천
건수	156,835	134,296	68,140	58,446	58,991	65,675	47,779	43,437
금액	43,726	41,313	16,741	14,936	14,161	13,402	12,547	11,792
구분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북	울산	제주
건수	31,873	29,311	28,271	30,652	26,169	27,031	20,209	15,623
금액	8,277	7,842	7,593	7,257	7,000	6,642	5,164	3,883

※ 출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통계('20.6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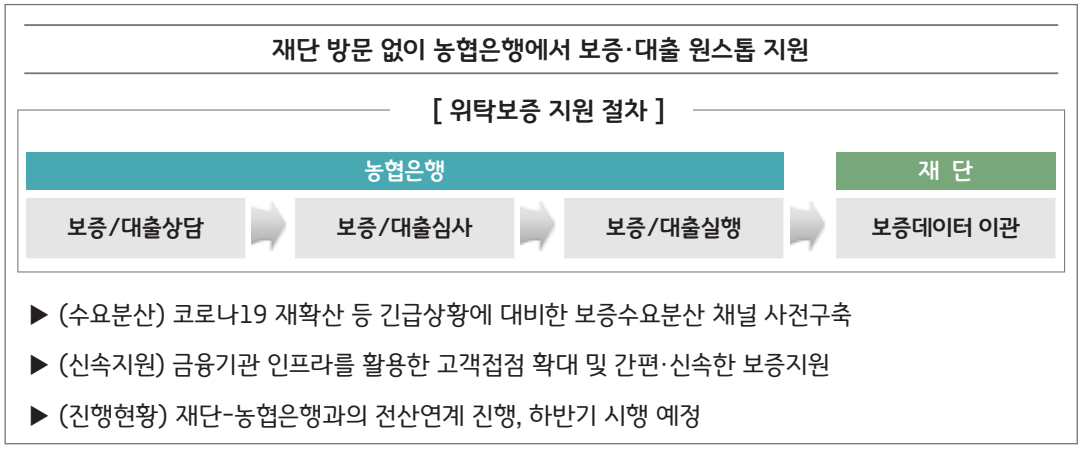
1) 문제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내 경제침체가 심화되면서 갑작스럽게 증가한 보증수요가 단기간 일시에 몰려,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원활한 보증지원이 사실상 불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영업점에서 보증접수부터 지원까지 약 2달 이상 소요되어 道내 소기업 ·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졌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들도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2) 극복방안

이런 한계상황에서 은행들의 영업창구를 활용하는 위탁보증이 효과를 보았다. 특히 기업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하여 시행한 “기업은행 초저금리 위탁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몰리는 금융수요를 은행으로 분산함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 여력을 높일 수 있었다.

[표 90-11] 농협은행 위탁보증 도입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다시 찾아올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위탁보증을 농협은행과도 확대하도록 위탁보증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 체계가 완성되면 위탁보증 채널

이 기존 기업은행에서 농협은행까지 확대되어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증 및 자금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현재 코로나19는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변이가 심해 치료백신의 단기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도 제2의 코로나로 불릴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등 향후에도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음을 인식, 코로나19 위기 시 대처했던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고 기록하여 다음 위기 시에는 보다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대면 보증이 가능한 모바일 보증 도입, 금융기관 위탁보증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재단 중 보증공급 최다인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이다.

91. 코로나19 극복 지역농산물 '착한 소비' 효과 톡톡 !!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장 진학훈

- 추진배경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외식산업 위축 및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지역농가 농산물 판매 어려움 발생
- 추진내용 : 지역농산물 착한소비를 위한 공동구매 및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 장터 운영
- 문제점 및 해결 : 코로나-19로 지역농산물 소비 위축, 새로운 농산물 판매방식 도입
- 평 가 :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소비자가 구매하는 선순환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된 이후 2월과 3월에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외식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농산물 소비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3월에는 각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들이 개학시기에 맞춰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이 주 납품처인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친환경 딸기 및 꾸러미 공동구매 행사를 도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위주로 시작하여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 4월에는 코로나19 발생이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농산물 판매방식과 다른 비대면 농산물 판매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방식) 장터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중국 우한교민을 수용한 이천지역 농산물 팔아 주기 행사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중국 우한 교민들 수용 문제로 다른 지역에서 반대할 때 이천 시민들은 따뜻하게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위상을 드높인 이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 의회와 함께 쌀 등 이천 농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이천 쌀, 딸기, 사과, 배, 두부, 화훼류 등 16개 품목 약 9백 5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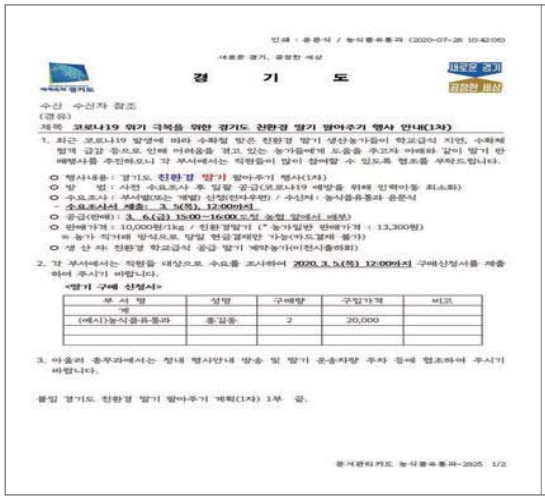
[사진 91-1] 이천시 농산물 구매하기 행사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이천농산물 구매하기 행사</td>
<td>경기도 의회 송한준 의장</td>
</tr>
</table>

2) 학교급식 친환경 딸기 등 오프라인 공동구매 추진

코로나19 발생이 확산되면서 2020년 3월 초 전국적인 학교개학 연기로 인해 수확시기를 맞은 학교급식 계약재배 친환경 딸기 납품이 중단되었다. 또한, 국내외 딸기 수확 체험객들도 급격히 감소하여 친환경 딸기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는 2020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공공기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딸기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하여 9,500kg(판매금액 9,500만 원)을 판매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표 91-1] 친환경 딸기 공동구매 행사(1호)



경 기 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친환경 딸기 팔아주기 행사 안내(1차)

1.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수확철 맞은 친환경 딸기 생산농가들이 학교급식 지연, 수확체험객 급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딸기 판매행사를 추진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내용 : 경기도 친환경 딸기 팔아주기 행사(1차)
○ 방 법 : 사전 수요조사 후 일괄 공급(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력이동 최소화)
○ 수요조사 : 부서별(또는 개별) 신청(전자우편) / 수신처 : 농식품유통과 공문서
- 수요조사서 제출 : 3. 5(목), 12:00까지
○ 공급(판매) : 3. 6.(금) 15:00~16:00 도청 농협 앞(예스 매장)
○ 판매가격 : 10,000원/1kg / 친환경딸기 'ㄷ' 농가일반 판매가격 : 13,300원)
※ 농가 직거래 방식으로 당일 현금결제만 가능(카드결제 불가)
○ 생 산 자 :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딸기 계약농가(이천시출하회)

2. 각 부서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2020. 3. 5.(목) 12:00까지 구매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구매 신청서>

부 서 명	성명	구매량	구입가격	비고
계				
(예시)농식품유통과	홍길동	2	20,000	

3. 아울러 홍부과에서는 청내 행사안내 방송 및 딸기 운송차량 주차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친환경 딸기 팔아주기 계획(1차) 1부. 끝.

문서관리카드 농식품유통과-2825 1/2

이외에도 지역농산물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잡곡 650kg(260만 원), 경기미 148,152kg(50,000만 원)의 판매 성과를 올렸다.

3) 온라인을 통한 친환경 꾸러미 등 지역농산물 공동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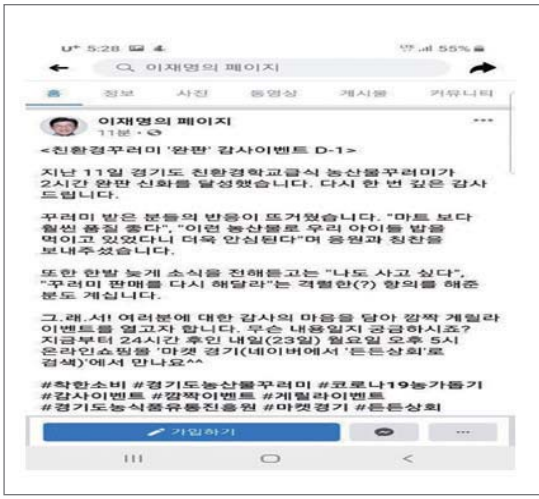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중순부터 학교개학 연기가 장기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친환경농산물연합회에서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판매가 긴급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10여종을 선정하여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만들어 우선 판매하기로 하였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는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마켓경기를 활용하였다. 2020년 3월 11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첫 판매는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에 나서자 준비한 물량 전부가 두 시간 만에 완판되었다.

경기도에서는 1차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23일 오후 5시부터 2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를 진행한 결과 사흘만인 25일 오후 5시 준비한 1만5천 상자가 판매

가 완료되어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친환경꾸러미와 함께 경기미 및 5가지로 품목으로 구성된 잡곡세트 판매하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130,096kg(65,048만 원), 경기미 110,130kg(33,039만 원), 잡곡세트 60,458kg(30,229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표 91-2] 지역농산물 공동구매 행사



4)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 장터 운영

2020년 4월에도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되면서 지역행사 및 축제 등이 취소됨에 따라 기존 대면방식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농산물 판매방식인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2020년 4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 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서울방향)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 장터를 시작하였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경기미, 잡곡 등 3개 품목을 판매하여 579만 원(1,775kg) 매출을 올렸다.

2020년 4월 4일에는 안성시(안성맞춤아트홀), 4월 11일 및 5월 2일 에는 수원시(종합운동장), 4월 18일에는 안양시(종합운동장), 4월 25일에는 여주시(신륵사 관광단지), 5월 16일 및 5월 30일에는 파주시(임진각), 5월 30일에는 의정부(경기도 북부청사), 6월 13일

에는 김포시(김포시청)에서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방식) 장터를 운영하였다.

경기도에서는 4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0회에 걸쳐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방식) 장터를 운영하여 40,886kg 17,389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사진 91-2]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착한소비 홍보 및 판매 장소 선정 어려움

농산물 착한소비 추진을 위한 품목은 개학연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생산품목으로 우선 선정하고 수확, 운송, 포장 등은 기존 학교급식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농산물을 구매할 소비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대면식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외식산업 위축 등으로 식당, 가공업체 등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할 소비처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한 홍보 수단 및 방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방식) 장터 운영을 위해서는 차량 소통과 안전 때문에 부지가 넓고 기존 상권에 영향이 적은 장소가 필요하였으나 대도시 주변에서 이러한

장소를 선정하기가 어려웠다.

2) 모바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및 공공시설 이용

처음 친환경 딸기 공동구매 행사는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 농가들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여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구매를 신청하여 농가에서 생산한 전량을 판매할 수 있었다.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친환경 꾸러미 공동구매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에 나서자 준비한 물량 전부가 두 시간 만에 완판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더불어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 평가로 많은 사람들과 언론 관심을 통해 홍보 문제는 해결되었다.

처음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방식) 장터는 차량통행량이 많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서울방향)에서 진행하였으나 통행량이 많아 안전문제가 예상되었고 소비자 주거지와 멀리 있어 이용에도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행사장소를 검토하던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장소가 넓고 시민들 접근이 용이하면서 기존 상권과 거리가 있는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안전문제, 소비자 이용불편, 기존 상권과의 중복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서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외식산업이 위축되어 사회적 약자인 농가들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착한소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및 경기농식품유통

진원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맞는 온라인 구매, 공동구매,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 방식) 등 다양한 농산물 판매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맞는 새로운 농산물 유통판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지역생산자가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지역 소비자가 소비하는 선순환 생산 및 소비가 되도록 온오프라인과 연결한 고정형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방식)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을 이용한 간편식 및 밀키트 상품을 개발하고 마켓경기 등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농산물 판매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도움이 되는 공공형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절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

92.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추진

규제개혁담당관 규제합리화팀장 김정아

- 추진배경 : 도내 중첩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 필요
- 추진내용 : 규제등급 상위지역에 대한 생활 및 발전기반 조성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중첩규제로 고통 받는 저발전 ·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시행
- 평　　가 :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도정 가치 실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팔당 상수원 규제, 군사 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되어 지역발전 저해 등의 문제들로 주민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동안 지역발전수준이 낮은 시 · 군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팔당 특별대책지역 수계기금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으나, 중첩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이다. 규제 정도가 심할수록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규제 정도를 도출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식과 지원 대상지역 선정의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연구원(GRI) 정책연구 과제를 착수하여 지역별 규제등급 도출을 위

한 규제지표의 설정, 지표별 가중치 도출, 규제등급의 산정방식을 설정하고, 지역별 규제 현황을 조사하여 규제등급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마련된 규제등급을 활용하여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 추진함으로서 중첩규제지역의 지원을 통한 도 내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추구하는 도정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추진

규제등급 마련의 첫 번째 단추로, 경기연구원(GRI)에서 「경기도 지역별 규제등급 평가 및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연구」가 추진되었다. 연구과제 기본계획 수립('18.8.)을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회의('18.8.~10.)를 거쳐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18.12.)과 함께 연구 과제가 착수되었다. 규제등급 평가를 위한 관계기관(실 · 국, 시 · 군) 간담회('18.12.)를 3회 실시하였고 규제등급 분석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19.2.~4.)도 함께 실시되었다.

2) 규제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 분석

규제등급 마련을 위해서는 적합한 규제들을 지표로 선정하여야 했다. 규제지표의 선정 기준은 '국가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거나, '타 지역(국가적 이익)을 위한 환경 · 안보 등의 보호를 위해 특정한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는 지역 · 지구 등을 선정하였다. 선정 방식은 규제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으며 선정된 11개 규제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층화분석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를 실시하였다.

3) 규제등급 및 추진계획 마련

선정된 규제지표와 계층화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대적 중요도를 활용하여 규제강도를 도출하였다. 규제강도는 각 시 · 군의 규제지표별 면적 비율과 지표의 가중치를 모두 곱한 값의 총합으로 산출하였다. 정책 목표에 따라 규제강도 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한 저발전 · 낙후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피해정도와 재정점수를 반영하여야 했다. 피해정도는 각 시 · 군의 지번별 개별공시지가(원/㎡)를 반영하여 산출하였고 재정점수는 최근 3년간 시 · 군별 재정자립도 평균값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 규제점수(100점) = 규제정도(40점) + 피해정도(40점) + 재정점수(20점)

[표 92-1] 규제등급 분석방법

(※ 출처 : 2020 경기도 규제지도)

GLOBAL INSPIRATION GYEONGGI PROVINCE

경기도 시·군별 규제등급 분석

■ 규제지표 선정방법

○ 국가 차원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에 한해 분석지표 선정
– 국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의 제한, 타 지역(국가적 이익)을 위한 환경 · 안보 등의 보호를 위해 특정한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는 지역 · 지구
○ 수도권, 군사, 물 · 환경규제 분야 총 11개 핵심규제 선정
– 수도권규제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군사규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 물 · 환경규제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개발제한구역

■ 규제지표 가중치 산정방법

○ 수도권 · 환경 · 군사 규제 관련 전문가 21인, 관계공무원 16인 대상으로 설문
– 규제지표별 중요도를 비교하는 설문조사 후 계층화분석을 실시하여 중요도 산정
※ 계층화분석(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평가기준이 다중적인 경우, 세부요인을 계층화하여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등을 통해 순위화 시키는 분석기법
※ 측정지표 중요도 조사 문항 예시

A	A가 B보다 강하다 A > B				동등	B가 A보다 강하다 A < B				B
수도권규제	5	4	3	2	1	2	3	4	5	군사규제
수도권규제	5	4	3	2	1	2	3	4	5	환경규제
군사규제	5	4	3	2	1	2	3	4	5	환경규제

○ 각각의 규제지표별 가중치 결과값을 산정하여 규제 강도를 도출

■ 규제등급 산정방법

○ 지역별 규제점수 산정(100점 만점) → 구간별 3등급 구분
○ 규제점수 = 규제강도(40점) + 피해정도(40점) + 재정점수(20점)
– 규제강도 : 규제지표(11개)를 종합 분석한 규제강도 산출(전문가 설문조사, GRI)
– 피해정도 : 지역별 전체 공시지가(원/㎡)의 평균값
– 재정점수 : 최근 3년간 시 · 군별 재정자립도 평균값(시 · 군별 평가에 한함)

■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시행계획

○ 지원대상 : 규제등급 상위지역 11개 시 · 군(1등급)
○ 지원방법 :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
– 재정적 지원 :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생활기반을 개선하는 사업 중심 추진
㉮ 도내 경진대회 · 공모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 도비보조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 배려(지역개발 분야)
㉰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우선 선정 배려
– 제도적 지원 : 중첩규제지역 현안과제 정부정책 반영 건의
㉮ 동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중첩규제지역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규제등급 조정 필요성과 지원정책에 대해 담당자들과 논의하였다. 도에서는 규제등급을 단순화(5개 등급→3개 등급화)하고 지원 시 · 군을 확대(동두천 추가)하는 방안으로 규제등급을 조정하여 추진하였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규제등급 하위지역 시 · 군의 항의

규제등급이 발표된 이후, 규제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일부 시 · 군들에게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는 일부 시 · 군들도 규제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등급 하위지역으로 분류되어 각종 지원정책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에 대한 의견들이었다. 그러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의 목표는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며, 단순한 규제의 중첩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정도(공시지가)와 재정점수(재정자립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규제 중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덜 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 기획 의도에 따라 시 · 군 담당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2)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사전실무협의 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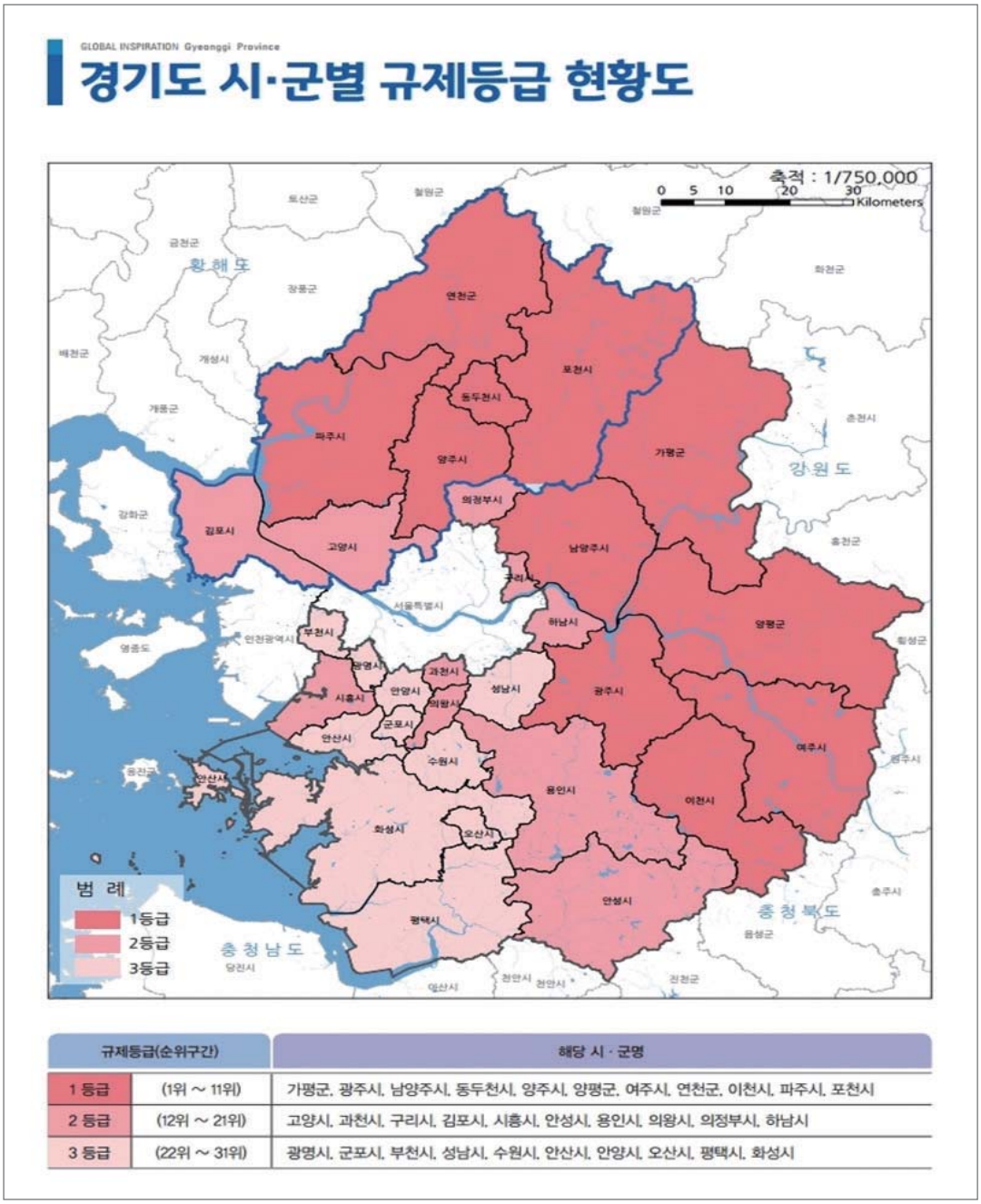
규제등급 마련 후 지원 사업 수요조사와 선정을 위한 사전실무협의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실 · 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당초 민선7기 주요사업 추진 시 규제등급 상위지역에 대한 추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는데, 이미 수립된 예산계획상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웠고 기존 사업들의 경우 이미 목적성이 뚜렷하여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

3차례 진행된 실무협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평가 시 규제등급 상위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고 '도비보조사업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을 배려'한다는 내용을 이끌어냈다. 향후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 실 · 국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표 92-2] 규제등급 현황도

(※ 출처 : 2020 경기도 규제지도)



규제등급(순위구간)		해당 시 · 군명
1 등급	(1위 ~ 11위)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2 등급	(12위 ~ 21위)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김포시, 시흥시, 안성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3 등급	(22위 ~ 31위)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은 수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 국가안보, 수도권균형발전 등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기업 활동과 민생 · 생활에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이다.

도 전체 지역별 규제등급을 부여하고 중첩규제로 고통 받는 저발전 · 낙후지역에 지원사업을 우선 선정 및 배려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추구하는 도정 목표의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규제등급 상위지역의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생활기반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이 중첩규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자, 정부 정책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93.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 성공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복지팀장 김일수

- 추진배경 : 상생하는 경제, 성장하는 경기도
- 추진내용 :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하는 양수발전소 신규설치 공모사업 포천 유치 성공
- 평　　가 : 지역경제 활성화, 남북통일대비 북한전력공급 중요거점 마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에 500~800㎿급 양수발전소를 건립하고자 2018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발전소 후보지 자율유치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지역 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이동면 도평리 일대 750㎿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의 '포천시 사업계획서'와 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12만2,734명의 서명을 담은 '서명서'를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제출하였다.

2019년 5월 말 공모 마감 결과, 포천시는 강원 홍천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영동군 등 3개 지자체와 함께 양수발전소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으며, 경기도는 포천시에 양수발전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는 2019년 6월 7일 포천 지역일대 사업부지를 방문하여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조치이다.

경기도는 한국수력원자력㈜에 포천시 유치를 적극 건의하는 것은 물론, 국회 산업 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담당 중앙부처인 산업 통상자원부에 협조를 구하는 등 양수 발전소 포천 유치가 성사되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9년 6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홍천군, 충북 영동군, 경북 봉화군 등 발전소 후보지 4곳 가운데 경북 봉화군을 제외한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등 승인을 받아 오는 2031년까지 발전소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포천시에 양수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총 7,982명(연간 1,140명)의 고용유발 효과는 물론 1조6,839억 원(연간 약 2,41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1조 원 가량의 양수발전소 건설비용 중 7,000억 원 가량이 토지보상비, 발전소 공사비, 기타비용 등으로 포천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포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남북통일'에 대비해 포천시 양수발전소를 막대한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북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거점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94.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나경란

- 추진배경 :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역 소재 연천군보건의료원의 응급의료 기능 등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지원
- 추진내용 : 필수전담인력(의사, 간호사)인건비 등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지역적 특성을 고려 진료과목 변경 및 인건비 상향조정하여 채용공고 진행
- 평　　가 :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능 강화 및 연천군보건의료원 운영 활성화 기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연천군은 접경지역 및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인구 지속감소, 재정자립도* 최하위 등 낙후된 지역이다. 3차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응급실이 없고 지역 내 의료 시설이 부족하여 경기도 내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낮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매우 열악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

* 연천군재정자립도 21%

연천군보건의료원은 경기도 내 유일한 병원화보건소로 의료진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이다. 때문에 해마다 의사배치가 원활하지 못하고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안정된 진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또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매년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업무대행 진료과목 확대지원(3개 과목 → 5개 과목)

연천군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 연천군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해마다 전문 공중보건의사가 감소 추세에 있어 배치가 안 될 경우 해당 진료과목의 진료가 불가능하다. 또한 출퇴근 복무제로 인해 의료원 내 입원환자 진료가 힘든 상황이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로는 안정적인 진료 수급이 어려워 2008년부터 도에서는 진료대행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확보하여 연천군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대행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정신과 등 3개 과목이었으나, 2020년 예산지원 확대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문의를 추가 배치하여 총 5개 진료과목에 대하여 안정적인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2020년 건강검진센터 운영 신규지원(도비 5억 원)

연천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23.8%로 타 지역보다 높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국가지원 건강검진(의무) 포기자가 다수 발생(일반32%, 암63%)하였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검진대상자가 2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관내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하여 여성암 검진은 타 지역에서 검진을 받거나 아예 검진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검진센터 운영 활성화가 절실하였다.

따라서 경기도는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연천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인력확충 및 검진장비 도입을 위해 도비 5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연천군보건의료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지역 검진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소실을 줄이는 등 의료취약지인 연천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표 94-1] 연천군보건의료원 현황

○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은대성로 95(☏ 839-4001~3)
○ 개원일시 : 1963년(연천군 보건소 설치), 1989.4.11.(보건의료원 출범)
○ 시설규모 : 건축면적 4,299㎡, 지상4층, 13실 52병상
- 본 관 :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건강검진센터, 보건소사무실 등
- 별 관 : 매점, 공중보건의 숙소, 치과, 장례식장(시설관리공단)
○ 조직(인력현황) : 105명(의료원 84, 보건지소 14, 보건진료소 7)
- 의료원 84명(공무원 56, 업무대행의사 3, 공중보건의사 14, 업무대행간호사 7, 청원경찰 4)
- 보건지소 14명(공중보건의 9, 일반공무원 5)
- 보건진료소 7명(보건진료직 7)
○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치과, 한방과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상 전문의료진 확보가 어려움 등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정신과적 상담 진료 요구가 있는 연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필수적인 진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를 추가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연천군보건의료원은 경기도 내 유일한 병원화보건소이다. 의료취약지역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써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는 진료전담인력 등을 지원하여

연천군보건의료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안정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천군에서도 자체 경영개선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95. 연천 덴마크파크 조성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장 정현석

- 추진배경 : 경기북부 평화 · 생태 · 관광 벨트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 투자유치
- 추진내용 :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공공사업만으론 한계가 있어 일부구역 민간투자
- 문제점 및 해결 : 해당없음
- 평　　가 : 경기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힐링 관광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덴마크파크 조성사업은 연천군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 중 민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이다. 덴마크 건축양식의 상점, 컨벤션, 수목원, 농장, 호텔 등 북유럽 감성을 담은 친환경 놀이와 생산적 체험 문화로 사계절 축제를 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사업이다.

2017년 1월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연천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경기 북부 도서 ·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소득시설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국적 자연 환경의 친환경 힐링도시 덴마크 파크 조성사업은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한 숲 속 휴양단지 조성, 다양한 숲 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 등 연강 포레스트 조성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연천 농촌관광휴양단지 내 민간투자 유치 공모

이미 가평의 스위스 마을(에델바이스)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경험이 있는 더츠굿이라는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휘게 덴마크 연천'이라는 주제가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의 민간투자 부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이국적인 덴마크 빌리지, 시설 간 연계성 확립,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써의 인프라 조성 등 연천군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계획이었다.

[사진 95-1] 연천 덴마크 테마파크 조성사업

2) 투자양해각서 체결 (道, 연천군, 더츠굿)

2019년 6월 7일 경기도, 연천군, ㈜더츠굿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연천군은 용지공금과 인허가를, ㈜더츠굿은 사업목적에 맞는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역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사진 95-2] 투자협약식 체결식

다. 평가 및 발전방안

1)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덴마크 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유치는 도-연천군-민간투자자 간 체결한 경기도 최초의 민간투자 개발 협약사업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래 주장해온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정의 정신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업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2) 경기 북부 관광 인프라 환경 개선

그 간 천혜의 자연환경과 선사 유적지 등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콘텐츠와 열악한 숙박 시설 등으로 연천군은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momentum)을 갖기 어려웠다.

덴마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기존 국비 지원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부족한 콘텐츠를 민간 투자유치를 받아 보강 · 연계함으로써 민 · 관이 함께 추진하는 성공

적 개발사업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서 군사접경지역이란 연천군의 대표이미지를 친환경 힐링 관광지로 바꿔줄 의미 있는 개발 사업이다.

96.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소유권 이전

문화종무과 문화기반팀장 김규상

- 추진배경 : 민선 7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실천 및 동두천시 재정난 해소
- 추진내용 :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경기도 이관
- 문제점 및 해결 : 열악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보강, 시설개선 등으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 평　　가 : 경기 북부 대표 문화시설로 발돋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동두천시는 가용재원 부족 및 사회경제적 지표 대부분이 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2012년 낙후된 경기북부의 문화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건립 지원을 결정하여 동두천시에서는 2016년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건립, 운영하였다. 그러나 전문인력 확보 및 지속적인 콘텐츠 보강 어려움 등 시설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2018년 12월 19일 동두천시는 경기도에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경기도 이관을 건의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마침 민선 7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방침의 실천과 부합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 간 고통 받은 동두천시의 특수한 환경,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 5월 15일 이관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다.

1) 공유재산 교환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문화격차 해소와 동두천시의 교환토지 활용을 목적으로 관련부서 협의(도 재산관리과, 도로정책과, 하천과, 동두천시)를 통해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이

관을 실현하였다. 상호 이익에 가장 부합하면서 도-시 · 군 간 새로운 상생모델을 마련하였다.

[표 96-1] 교환대상

(단위 : 백만 원, ㎡)

소유자	대 상		면적	재산가액*	재산유형
경기도	**소계**		**100,724**	**7,110**	**210필지 (행정 139, 일반 71)**
	동두천 관내 도로용지 등		87,070	3,796	행정 (126필지)
	동두천 관내 하천용지 등		13,654	3,315	행정(13필지), 일반 (71필지)
동두천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소계**	**18,220**	**7,372**	
		건물	5,983	4,387	행정
		토지	12,237	2,985	행정(3필지)

* (토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 / (건물) 시가표준액

2) 시설개선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공유재산 교환과 경기문화재단과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경기 북부 대표 문화시설로 발돋움하기 위해 열악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보강, 시설개선 등으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숲을 주제로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미디어 아트공간 조성, 생태와 연계된 작동전시물 개발, 야외놀이터 보강을 통하여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표 96-2] 전시콘텐츠 보완

합 계	용도별 면적		
	Zone1	Zone2	Zone3
	숲속계곡과 건축	기획전시	교육형 전시 LAB
콘텐츠 보완 (안)	숲속에서 만나는 물과 집≫물놀이존을 숲생태존 연계 콘텐츠로 구성	실감형 미디어 전시	LAB(상설 교육형 전시가 있는 체험 교육장)
685.42㎡ (207.33평)	271.92㎡(82.25평)	302.25㎡ (91.43평) → 74평	111.25㎡ (33.65평) → 51.08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동두천시는 열악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난 해소를 경기도에 건의하였다. 재정자립도 14.2% 등 동두천시의 열악한 사회 ·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시설물 매입, 운영비 지원, 재산의 교환 등을 검토하게 되었다.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매입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반발과 여론 악화를 우려하여 동두천시에서 매각의사가 없었으며, 운영비 지원의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 지원은 가능하나 타 시 · 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결국 세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재산교환 방식이 동두천시 현안 해결 및 경기북부 균형발전 ·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 최적의 방안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도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박물관 운영 안정화와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어린이박물관 시설 개선과 함께 경기북부지역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동두천시는 운영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도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교환받은 토지를 활용해 지역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97. 道 공공기관, 북부 및 자연보전권역 등 입지 추진

공공기관담당관 공공기관정책팀장 윤영길

- 추진배경 :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 분산배치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추진내용 : 17개 시 · 군 대상, 5개 기관 이전 시 · 군 공모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특정기관 이전 선호현상 / 인지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추진
- 평　　가 : 중첩규제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실현 및 각종 주민 요구에 대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 북부 시 · 군의 경우 국가안보, 수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받아왔고, 이는 행 · 재정적 지원 및 개발의 차별로 이어졌다. 경기연구원에서 발간된 「道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를 따르면 지역발전지수*가 경기 북부지역 등에서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인구증가율, 도로율, 상하수도 보급률, 재정자주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경기 남부는 기존에 구축된 각종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생적인 경제산업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 북부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행정인프라 구축 및 재정적인 지원 등 도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2024년 8월까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공공기관 3곳을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을 추진한다. 문화 · 관광 · 교육을 대표하는 공공기관 3곳의 고양시로 이전이 완료될 경우,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DMZ 역사 및 생태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평화관광, 시민교육 활성화가 가능, 한반도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 및 각종 주민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까지 포함하여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배치 시 · 군 공모를 추진하려 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신설기관 위주로 5개 이전기관 확정

이전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5개 기관으로 신설기관 위주로 결정되었다.

취업 · 교육훈련 지원과 일자리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6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부천시 옛 원미구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해 9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수원 컨벤션센터 5층에 자리 잡고 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및 종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올해 1월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 공공버스 등 경기도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할 경기교통공사와 미세먼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을 담당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신설 예정 기관으로 올 하반기 설립 예정이다.

2) 북부,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17개 시 · 군으로 한정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시 · 군은 각종 중첩규제 등으로 재정수준과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17개 시 · 군으로 한정된다. 경기 남부 시 · 군임에도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규제 등 특별한 희생을 받고 있는 시 · 군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모 대상 시 · 군을 북부 외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으로 확

대하였다.

[표 97-1] 공모 대상 시·군

① 북부(10개)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② 접경지역(7개) :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③ 자연보전권역(8개) :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남양주, 가평 * 밑줄은 중복 시·군

3)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수립

최적입지 선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수립이라 할 것이다. 선정기준의 경우 각 기관별 특수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 공통적으로 균형발전도, 경기도 공공기관 배치 현황, 도 공공기관과 사업 연관성, 도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과다경쟁 방지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시 · 군 재정부담 부분은 제외된다.

4) 2020년 하반기까지 시 · 군 선정 완료 후, 입지 추진

선정절차는 7월 공모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공모접수 및 1차 심사(서면 · 현장심사) 후, 9월 이후 2차 심사(PT)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7월 기준으로 경기교통공사(6.26.~7.17.) 및 경기도일자리재단(7.6.~7.24.)에서는 3주간 공모접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개 기관도 공모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특정기관 선호현상 발생 가능성

이전대상인 5개 기관의 분야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각 시 · 군에서 선호하는 기관 또

한 나눠질 수 있다. 반면, 이전기관의 향후 규모 확대 가능성 및 경제유발효과 등에 따라 특정기관 선호로 공모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취지인 지역 간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 각 기관이 최적의 장소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관 설명회 추진

이전기관 중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기관의 경우는 북부 및 자연보전권역 등 17개 시 · 군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관 사업홍보 설명회를 추진하여 특정기관 선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공표하고, 외부전문가 심사위원 선임 및 현장심사 병행 등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가장 적정한 시 ·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주요가치인 '공정한 세상'의 핵심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써,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경기북부 및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이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금번 정책은 지역 간 균형을 맞춰가면서 소외감과 박탈감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시작으로 소외지역 주민들이 가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으로 관련 시 · 군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

또한, 입지 선정방법을 설립주체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공개모집으로 추진함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최적지 선정 및 객관성 ·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공정한 광역행정과 도-시 · 군 상생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전기관을 최대한 조속히 입지하도록 하여 시 · 군-공공기관 간 유기적 협업

관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랜드마크(Landmark)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행정지원 및 지도 ·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사진 97-1] 이전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98. 경기북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추진

기획예산담당관 북부발전전략팀장 안영재

- 추진배경 : 경기북부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
- 추진내용 : 경기도 · 의정부시 · 경기북부변호사회가 업무협약 체결 후 유치활동 상호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위주의 홍보 · 서명운동으로 방향 전환
- 평　　가 : 사법행정의 지방분권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북부는 관할지역의 규모가 방대하고 높은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그에 대응하는 사법서비스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북부 고등법원 부재로 인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2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까지 이동하는 시간적 ·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원외재판부 설치는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며 대법관회의 의결로 설치를 결정하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확정된다. 현재 총 6곳(춘천 · 인천 · 창원 · 청주 · 전주 · 제주)의 원외재판부가 운영 중이고 올 5월 대법관회의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결정되면서 지방법원 소재지 중 의정부에만 원외재판부가 없는 실정이다.

원외재판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6개의 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수와 그 항소 건수를 비교해보면 더욱 의정부 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 의정부지법의 1심 합의부 사건은 총 3,280건으로 인천지법 다음 두 번째로 많고

같은 서울고법 관할인 춘천지법의 1,508건에 비해 2배가 넘는다.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 건수를 비교해도 의정부지법은 총 1,053건으로 인천지법 다음 두 번째로 많고 같은 서울고법 관할인 춘천지법의 490건에 비해 2배가 넘는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원외재판부 유치 관계기관 실무회의

2019년 3월 12일 경기도는 경기북부변호사회와의 면담을 통해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민관협동 추진기구 구성을 검토하였다. 유치활동의 구체적인 추진방향 논의를 위해 2019년 6월 4일 경기도는 의정부시 · 경기북부변호사회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가졌다.

회의를 통해 각 기관별 세부역할을 논의하고 설치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의정부시는 지원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변호사회는 민간유치활동과 법조계 주요인사 방문 등을 담당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연구과제에 예산을 지원해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의정부시와 변호사회의 유치활동의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사진 98-1] 3월 경기북부변호사회 면담

[사진 98-2] 6월 관계기관 실무회의

2) GRI 연구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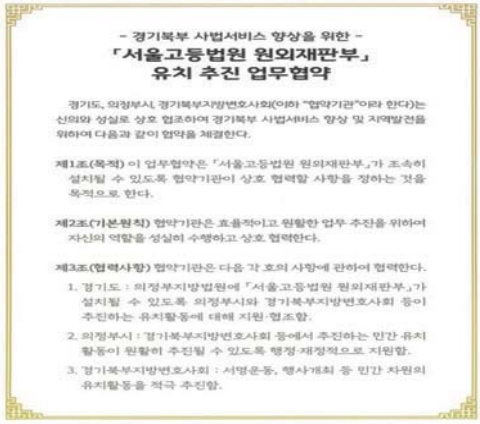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방안의 검토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원외재판부 설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같은 해 10월 11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최근 재판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를 수행한 최성환 연구위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수와 그 항소건수, 경기북부지역의 인구성장 및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 법원의 설치가 시급하며 법률개정 없이 실현 가능한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

2019년 12월 11일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변호사회가 추진하는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 ·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전문성 보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 · 재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경기북부 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표 98-1]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서



- 경기북부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조하여 경기북부 사법서비스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업무협약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기관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력사항)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한다.

1. 경기도 :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이 추진하는 유치활동에 대해 지원·협조함.
2. 의정부시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추진하는 민간 유치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함.
3.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서명운동, 행사개최 등 민간 차원의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함.

제4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이 다르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시 소멸한다.
② 이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력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3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이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2월 11일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이 재 명	안 병 용	이 임 성
이 화 순	안 병 용	이 임 성

4)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 위촉

2020년 2월 7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가 위촉식 및 1차 정기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 구성은 경기북부변호사회 이임성 회장과 의정부시 황범순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경기북부 유치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 98-3] '19년 12월 업무협약 체결

[사진 98-4] '20년 2월 유치추진위 위촉

향후 위원회는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북부 10개 시 · 군 전역에서 범시민 서명운동, 포럼

및 세미나, 주민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2020년 2월 1차 정기회의에서 향후 범시민 서명운동과 홍보운동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3월 경기도 · 의정부시 · 경기북부변호사회 세 기관은 협의를 거쳐 범시민 홍보 · 서명운동 추진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홍보 포스터 · 전단지 · 리플릿 등을 제작해 대면홍보를 진행하고 대면홍보 시 서명운동을 동시 추진해 연말까지 10만 서명운동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다. 경기도는 도청 민원실 등 대민장소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경기북부 10개 시 · 군의 홍보 및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함으로써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식적인 대면접촉 행사가 금지되었다. 당초 4월부터 예정되어 있던 원외재판부 홍보운동이 몇 달 간 제자리걸음을 하며 10만 서명운동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의정부시는 월초에 열리는 권역동 반상회 · 주민자치회를 이용해 홍보 · 서명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임이 불가능했다. 변호사회도 원외재판부 유치 공론화를 위해 이슈토크 · 공개포럼 등 행사 개최를 추진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2) 온라인 위주의 홍보 · 서명운동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온라인 위주의 홍보 · 서명운동으로 전면 수정하였다. 온라인 홍보 · 서명 웹페이지를 구축해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7월 1일부터 온라인 서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홍보 포스터

· 전단지 · 리플릿 등에도 온라인 서명 웹페이지의 QR코드를 삽입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도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도민들이 온라인 서명 웹페이지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도 공식 SNS계정을 통해 서명운동을 홍보할 계획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국정운영의 전반에 걸쳐 지방분권적 가치가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경기북부 유치는 사법행정 영역에서의 지방분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의정부지방법원 내에 유치된다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당장의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거리, 소송 당사자 수, 재판 출석횟수, 연간 소송 건수 등을 고려하면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 지출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또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외재판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북부 10개 시 · 군과의 협력을 통해 10만 서명운동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10만 서명운동을 달성한 후 유치추진위원회는 서명부와 청원서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대법관회의 안건 상정과 설치 확정을 위해 힘쓸 것이다.

99. 도봉산~옥정 광역철도(7호선 북부연장) 건설사업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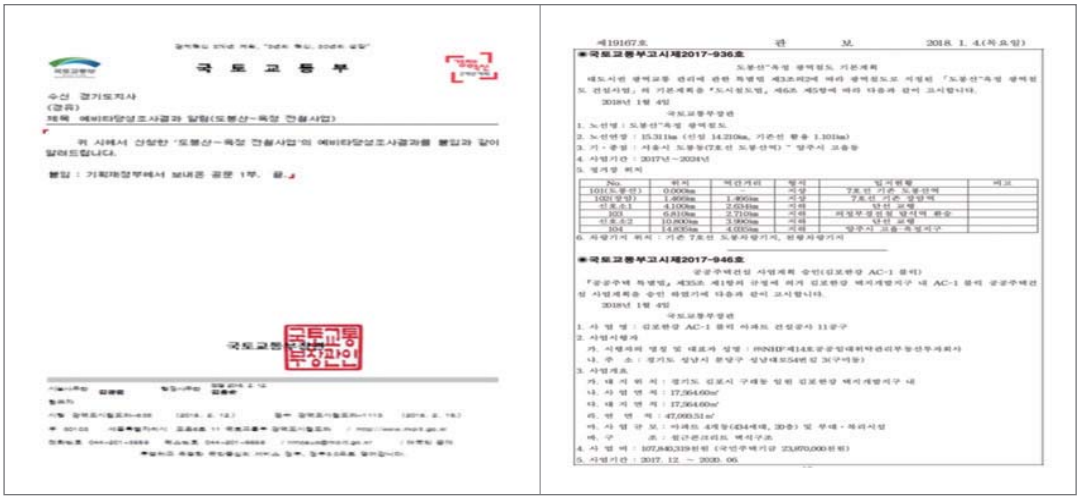
철도건설과 철도건설1팀장 남상원

- 추진배경 : 양주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등 수도권 북부 광역교통수요 적극 대응
- 추진내용 : 지하철7호선 의정부, 양주지역 연장(L=15.3㎞, 정거장 3개소)
- 문제점 및 해결 :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 및 설계기간 단축 등을 통한 적기 착공
- 평　　가 : 기본계획 승인 후 2년 내 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 북부지역 의정부시와 양주시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서울방면 수요 증가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철도 서비스 제공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표 99-1]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및 기본계획 고시


국 토 교 통 부

수신 경기도지사

(경유)

제목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알림(도봉산~옥정 건설사업)

위 사례서 산정한 '도봉산~옥정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기획재정부에서 보내온 공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인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36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No.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체화형	비고
1011(도봉산)	0.000km		지상	기존 도봉산역	
1001(방학)	1.460km	1.460km	지상	기존 방학역	
신호소1	4.100km	2.634km	지하	대곡 교행	
303	6.810km	2.710km	지하	의정부경전철 양건역 환승	
신호소2	10.900km	3.190km	지하	덕정 교행	
304	14.800km	4.000km	지하	양주시 고읍지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김포한강 AC-1 블럭)

국토교통부장관

이에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서울지역 접근성 강화 및 만성적인 교통지체 해소,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서울시 지하철 7호선을 직결하

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2016년) 및 기본계획 고시(2018년, 국토교통부)를 통해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3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추진 확정

2010년부터 3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추진을 확정한 사업이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열악한 경기북부지역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도 · 시군 · 국회가 합심하고 역사 축소 및 단선전철 변경 등 지역주민의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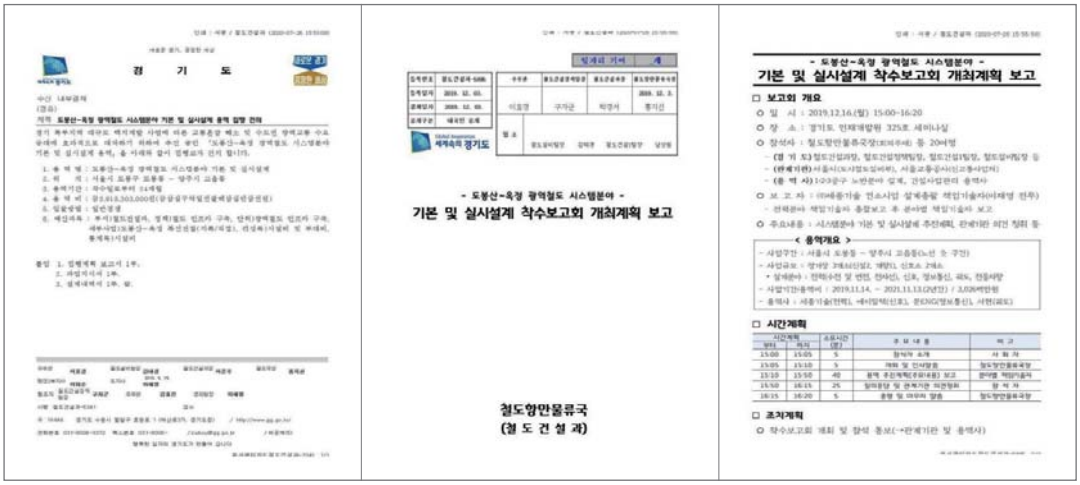
[표 99-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예타		구간	연장(km)	정거장	비고
1차	신청	도봉산역~장암~신곡장암~탑석~민락~고읍~옥정~송우~포천(2)	33.1	8	'09.11월
	변경	도봉산역~장암~신곡장암~탑석~민락~고읍~옥정~송우	23.2	6	'10.07월
	변경	도봉산역~장암~탑석~고읍~옥정	17.0	3	'10.09월
2차	신청	도봉산역~장암~탑석~고읍	14.1km	2	'11.08월
3차	신청	도봉산역~장암~탑석~고읍 / 환승(2량 1편성), 복선	15.0km	2	'13.06월
	변경	도봉산역~장암~탑석~고읍 / 직결, 단선	14.9km	2	'13.10월

2) 시스템분야 도 자체 설계 및 시공

하남선, 별내선 등 기존 경기도 시행 철도사업은 토목, 건축부분으로 차량, 신호, 통신 등 시스템분야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 시행 철도사업 최초로 시스템분야 설계 및 시공 직접 수행하였다.

[표 99-3]



경 기 도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시스템분야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계획 보고

철도항만물류국
(철 도 건 설 과)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시스템분야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계획 보고

□ 보고회 개요

□ 시간계획

□ 조치계획

3) 기본계획 확정 후 1년 11개월 만에 공사 착공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운행노선, 운행방식 등 수많은 논의가 펼쳐지며 다양한 대안의 검토 과정을 거쳐 도봉산역~장암~탑석~고읍 노선으로 결정하였고 운행방식도 복선전철에서 단선으로 최종 결정되어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국토교통부 2018.1.4.)

이후, 신속 사업추진을 위해 3개 공구 모두 턴키공사로 진행하였으나, 1 · 3공구 유찰로 인해 입찰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추가 소요 등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선행공구(2공구)의 설계 · 시공 동시 추진과 관계기관 적극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19년 12월 사업계획승인(우선시공구간)을 득하여, 그간 간절한 염원과 지난한 논쟁 끝에 드디어 공사에 착공하게 되었다.

[사진 99-1]

기공식 세리모니

[사진 99-2]

우선시공구간(탑석역 기초보강) 착공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지난 10년 노력의 산물, 새로운 경기로 가는 의미 있는 한걸음

'0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이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10년 만에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나, 총사업비 절감을 위해 신설역사 축소, 단선선로 수용 등을 수용하면서까지 어렵게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협의와 양보를 통하여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표 99-4]

<추진경위>

○ '09.11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시→도→국토부)

○ '16.2월 : 예타 완료(B/C 0.95, AHP 0.508)

○ '18.1월 :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1.4.)

○ '18.9~10월 : 1, 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9.2월 : 2공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19.12월 : 2공구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착수

2)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 소통 노력

도봉산~옥정 영향권인 지역 주민들로부터 노선변경 요구가 지속되었으나, 변경(안) 추진 시 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사업 장기화가 우려되어 현 기본계획안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노선변경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적기에 건설되는 것이 경기북부지역 철도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그간 경기북부 도민들의 뜨거운 염원 속에서 어렵게 이루어 낸 사업으로 의정부 · 양주지역과 서울 북부지역의 녹색 도시교통체계의 중심 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새로운 핵심축이 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무엇보다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또한, 개통 후에도 이용객들의 편의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의정부와 양주시민들께서 더 질 높은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100.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제곱미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군관협력담당관 군관협력팀장 황종일

- 추진배경 : 상생하는 경제, 성장하는 경기도
- 추진내용 :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軍과 협의, 전향적인 해제 검토
- 평　　가 :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방안 마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인구 중 1,300만 여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경제적으로나 국가 안보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맞닿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군사기지, 비행장, 사격장, 장애물 등 가장 많은 군사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28%(경기 북부지역의 42.74%)에 해당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100-1]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구 분	행정구역[A] (㎢)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 안전구역 (㎢)	행정위탁 (㎢)	보호구역 비율 [B/A](%)
		계[B]	통제보호	제한보호			
계	**10,183**	**2,269**	**470**	**1,799**	**749**	**654**	**22.28%**
남 부	**5,918**	446	49	397	672	297	7.53%
북 부	**4,265**	1,823	421	1,402	77	357	42.74%

이러한 사유로 개인의 재산권, 생활권이 침해되고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군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상 · 하반기로 시 · 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수요를 파악하여 해당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시 · 군과 공

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매년 군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군사시설 규제 합리화 추진

경기도는 매년 시 · 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육군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으며, 사안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에서 개최하는 관군정책협의회 및 국방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시 · 군별 군사시설 규제개선 사항을 합참에 건의하여(총 면적 59.5㎢) 이중 15.02㎢(25.2%)가 해제되었다. 또한, 시 · 군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상 · 하반기(연 2회) 지작사와의 관 · 군정책협의회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에는 국방부장관 및 접경지역 7개 시장 · 군수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중점현안을 논의하였다.

연천군의 경우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6만㎡ 군사시설 보호 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군부대 동의 없이도 공장 신축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백합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백학산업단지 조성은 백합 · 장남권역의 유일한 산업단지로 연천군 및 경기북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7기(2018년~2019년) 동안 총 127.66㎢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는데, 특히 2018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112.64㎢) 되는 등 군에서도 불필요한 군사규제에 대해 적극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표 100-2] 2019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실적(1㎢=1,000,000㎡)

○ 제한보호구역 해제 : 15.02㎢

일 자	대 상 지 역	면적(㎢)
2020.1.16.	김포시 대곶면, 양촌읍, 통진읍 일대	3.33
2020.1.16.	파주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적성면 일대	3.02
2020.1.16.	고양시 덕양구 일대	4.30
2020.1.16.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일대	0.85
2020.1.16.	양주시 광적면, 은현면, 백석읍 일대	2.58
2020.1.16.	포천시 영북면, 내촌면 일대	0.94

○ 보호구역완화(통제→제한)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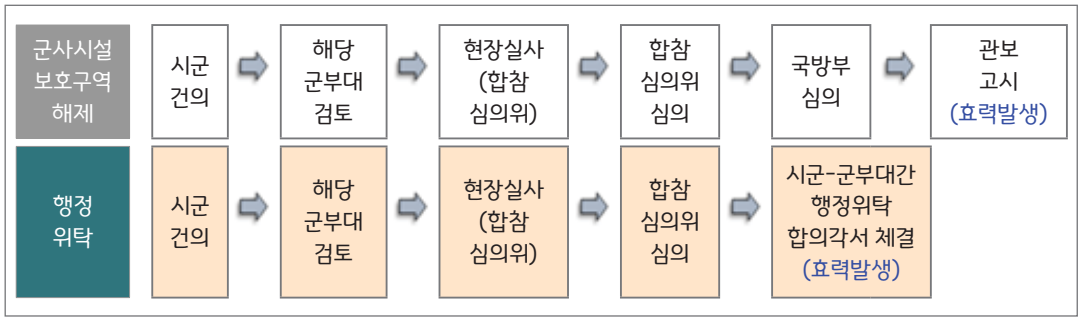
일 자	대 상 지 역	면적(㎢)
2018.12.7.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하성면 가금리 일대	0.0495
2018.12.7.	파주시 백연리 일대	0.0003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권자(합참·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는〈표3〉과 같이 시군에서 해당 군부대와 협의를 추진하고, 해당 군부대는 합참에 건의하여 합참과 국방부의 심의를 차례로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표 100-3]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절차



지역개발 및 민원해소에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적극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최종 해제권자인 軍에서 작전임무 수행 지장 등을 사유로 부동의 한다면 군사시설 규제 합리화는 추진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2) 軍과의 소통·협력 강화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합참에 군사시설 규제해소 건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예비역 군 출신으로 구성된 4명의 관군협력전문관 그룹을 구성하여 일선 군부대와 원활한 협의를 진행토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상작전사령부와 매년 상 · 하반기에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여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는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사시설물의 효용성이 저하된 지역을 시 · 군과 함께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관군협력전문관 등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상작전사령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한 활발한 논의 등 군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01.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최종 확정

외교통상과 전시전략팀장 안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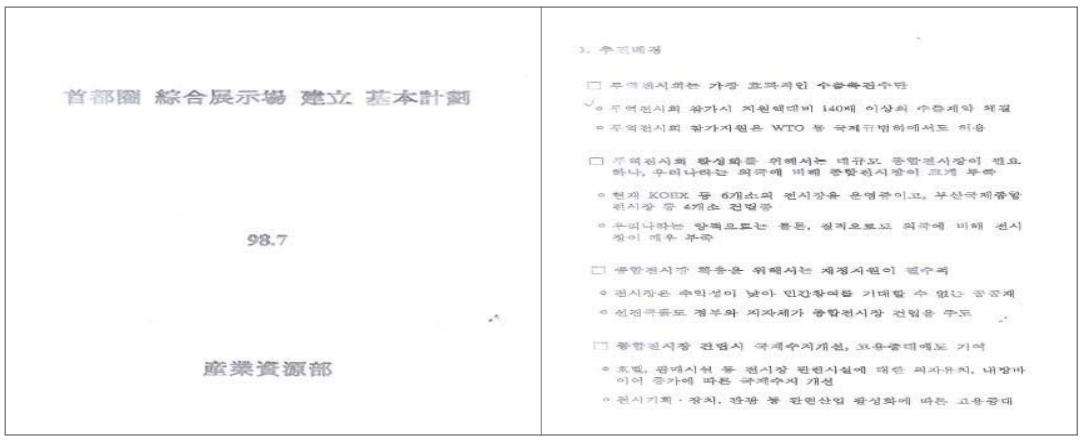
- 추진배경 :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따른 3단계 전시장 건립
- 추진내용 : 제1,2전시장에 이어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해 17.8만㎡ 국제 전시장 조성
- 문제점 및 해결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미발표,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 평　　가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제3전시장 건립 확정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 국제종합전시장 킨텍스, 경기도 유치

1990년대 말 정부(당시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전시장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무역 전시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도권 내 대형전시장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1999년 4월 29일 정부 입지선정위원회 결과, 인천과의 경합을 통해 최종 경기도와 고양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표 101-1] 정부「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기본계획」(1998.7.)


首都圈 綜合展示場 建立 基本計劃

98.7

産業資源部

이후 경기도 · 고양시 · 코트라는 1999년 9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를 체결하고 법인 ㈜킨텍스를 설립하여 제1전시장(2005. 4월 개장), 제2전시장(2011. 9월 개장)을 운영하였다.

2)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추진

킨텍스는 이미 성수기 포화상태이며 5년 내 포화상태(가동률 60~70%)에 도달이 예상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한 전시장 확충의 시급성에 대해 인식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의 잠정 보류

2017년 1월부터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었다. KDI 연구진들은 한국에 대형전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킨텍스 제3전시장과 잠실 제2코엑스 간 수요 중복분석 필요성 등을 주장하여 결국 예비타당성조사는 시나리오 2개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나리오1(킨텍스 3단계 단독 건립 시) 기준으로는 B/C와 AHP 모두 충족하였고, 시나리오2(잠실 제2코엑스 건립 시) 기준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다.

[표 101-2]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KDI, 2019.1.)

구 분	시나리오1 (킨텍스 단독 건립 시)	시나리오2 (잠실 제2코엑스 건립 시)
B/C (경제성)	1.09	0.95
AHP (종합평가)	0.539	0.457

하지만 당시 잠실 제2코엑스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었고 잠실 제2코엑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보는 보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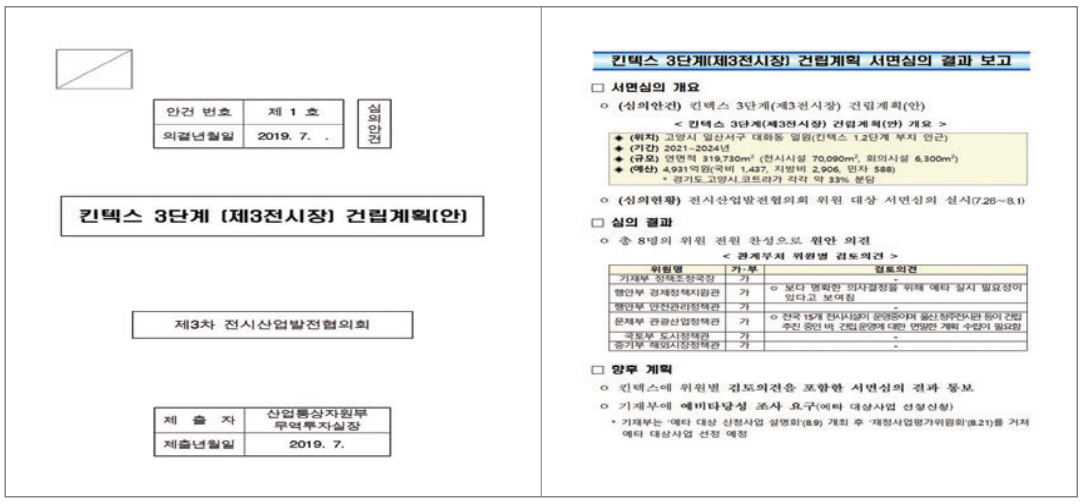
2)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잠실 제2코엑스 민자적격성 조사에 대한 동향을 모니터링 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① 전시장 대형화 경쟁 격화 ② 국제 전시회 개최 무산 위기 심화, ③ 킨텍스 인근 복합단지조성과의 연계개발 시급 등 주요 여건 변동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전시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형전시장의 건립 필요성을 인정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통과하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 하였다.

[표 101-3]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2019년 7월)



안건 번호	제 1 호	심의안건
의결년월일	2019. 7. .	

킨텍스 3단계 (제3전시장) 건립계획(안)

제3차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제 출 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제출년월일	2019. 7.

킨텍스 3단계(제3전시장) 건립계획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서면심의 개요

○ (심의안건) 킨텍스 3단계(제3전시장) 건립계획(안)

< 킨텍스 3단계(제3전시장) 건립계획(안) 개요 >

◆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킨텍스 1,2단계 부지 인근)
◆ (기간) 2021~2024년
◆ (규모) 연면적 319,730m² (전시시설 70,090m², 회의시설 6,300m²)
◆ (예산) 4,931억원(국비 1,437, 지방비 2,906, 민자 588)
* 경기도,고양시,코트라가 각각 약 33% 분담

○ (심의현황)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위원 대상 서면심의 실시(7.26~8.1)

□ 심의 결과

○ 총 8명의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의결

< 관계부처 위원별 검토의견 >

위원명	가~부	검토의견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가	-
행안부 경제정책지원관	가	○ 보다 명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예타 실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	가	-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가	○ 전국 15개 전시시설이 운영중이며 울산 정주전시관 등이 건립 추진 중인 바 건립 운영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국토부 도시정책관	가	-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	가	-

□ 향후 계획

○ 킨텍스에 위원별 검토의견을 포함한 서면심의 결과 통보

○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예타 대상사업 선정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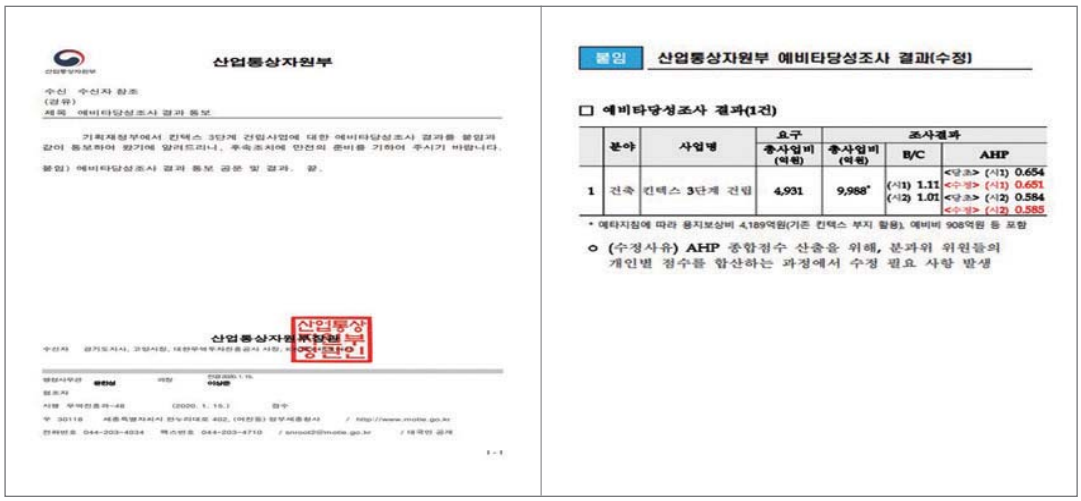
* 기재부는 '예타 대상 신청사업 설명회(8.9) 개최 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8.21)를 거쳐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정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2019년 8

월 개최하였고,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안건이 의결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는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2020년 1월 잠실 제2코엑스의 건립과 상관없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표 101-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보(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기획재정부에서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후속조치에 만전의 준비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공문 및 결과.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붙임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수정)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1건)

	분야	사업명	요구 총사업비 (억원)	조사결과 총사업비 (억원)	B/C	AHP
1	건축	킨텍스 3단계 건립	4,931	9,988*	(시1) 1.11 (시2) 1.01	<당초> (시1) 0.654 <수정> (시1) 0.651 <당초> (시2) 0.584 <수정> (시2) 0.585

* 예타지침에 따라 용지보상비 4,189억원(기존 킨텍스 부지 활용), 예비비 908억원 등 포함

○ (수정사유) AHP 종합점수 산출을 위해, 분과위 위원들의 개인별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수정 필요 사항 발생

[사진 101-1] 제3전시장 예비타당성조사 건립 경축 행사 (2020년 1월)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잠실 제2코엑스와의 수요 중복문제 극복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KDI 연구진들은 잠실 제2코엑스와 킨텍스 제3전시장과의 역할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킨텍스는 바닥하중 5t/㎡, 무주공간의 전시홀로 대형 산업재 전시회에 최적화된 국제 무역 전문 전시장 중심, 잠실 제2코엑스는 바닥하중 2.5t/㎡ 이하, 복층 전시홀로 국제회의·내수 전시장 중심으로써의 역할 자체에 큰 차이가 있고, 상호보완 관계로써 전시장 수요가 겹칠 수 없다는 것을 KDI 연구진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결국 잠실 제2코엑스를 동시 건립하는 시나리오2 조차도 경제성(B/C) 1을 넘겨 사업성을 확보하게 된다.

[표 101-5] 킨텍스 제3전시장과 잠실 제2코엑스와의 비교

구 분	킨텍스 제3전시장	잠실 제2코엑스
사업주체	정부, 지자체	민간 컨소시엄
사업비 조달	전액 공공	전액 민자
사업 위치	현재 킨텍스 1,2전시장 측면 부지	현재 잠실운동장 부지
전시컨벤션 총 면적	20만㎡ (3단계 완공 시)	10만㎡
순수 전시면적	17.8만㎡ (3단계 완공 시)	8만㎡
구조	단층형(바닥하중 5t/㎡)	복층형(바닥하중 2.5t/㎡)
임대료	약 1,887원	킨텍스 임대료의 2~3배
완공예상시기	2023년	2028년
교통 접근성	GTX-A복합환승센터, 고양선 지하철 신설, 대곡- 소사선('21년) 확정	도심 교통 인프라
공항 접근성	김포공항(20분), 인천공항(40분)	김포공항(60분), 인천공항(90분)

2) 정부 발표 지연 문제를 대정부 건의를 통해 해결

예비타당성조사를 두 번이나 받을 만큼 정부에서는 쉽게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킨텍스 제1,2전시장 가동률은 포화에 도달하고, 전시면적 한계로 전시회 성장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은 중요한 판로개척 수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확정 촉구 서한문을 보냈고, 결국 이는 정부(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표 101-6] 경기도지사 서한문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지체되고 있는 킨텍스 3전시장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장관님께 서한을 올립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킨텍스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제무역전시장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전시장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향후 3~4년 안에 신규전시회 개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경기도는 몇 해 전부터 킨텍스 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뜻하지 않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킨텍스 3전시장 건립 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15일 산자부 전시장 추족 실무를 거쳐 같은 해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8년 12월 완료되었지만 올해 8월 예비타당성 재조사 시행으로 현재까지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3전시장 건립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3전시장 건립시 5,420억여 원의 생산유발효과는 물론 2,344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014명의 고용유발효과와 5,293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킨텍스는 3전시장 건립시 세계 22위권의 국제전시장으로 도약하여 이에 따라 세계적인 전시회 유치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가와 대등하게 경쟁하는 국내유일의 대형무역전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킨텍스 3전시장 건립이 지연되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킨텍스 3전시장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조기 발표와 3전시장 건립을 위한 설계비의 국비 반영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장관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4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이재명

라. 평가 및 발전방안

킨텍스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종합전시장을 건립하여 우리나라를 아시아 무역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총 3단계 17.8만㎡ 규모로 계획되었다. 인천과의 경합을 통해 경기도 고양시가 선정되어 현재 제1,2단계 건립사업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킨텍스 제1,2전시장은 한국 전시산업의 대표 전시장으로써 매년 1,200여건 이상의 전시회 및 컨벤션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서울국제공작기계전·서울모터쇼·서울식품전 등을 10만㎡ 내외 규모의 국제 전시회로 성장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킨텍스는 제1,2전시장 10.8만㎡ 규모로 49위에 불과하여 아시아 내에서조차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20만㎡ 이상의 대형전시장이 5개가 건립되면서 아시아 진출을 계획하던 상당수 국제 전시회가 한국이 아닌 대형전시장을 보유한 인접국을 선택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전시 기반 투자 및 확대 움직임을 감안할 때 국제 전시회의 국내유치를 위해서는 킨텍스 제3전시장 확장이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킨텍스 제3전시장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고양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MICE 복합단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시 킨텍스가 국내 최대 메인프레스센터로서 활약한 것처럼 남북교류 협력 증진에 대비하여 남북 상호 전시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한 교두보로서의 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2.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산단 조성사업

산업정책과 산단조성팀장 이미영

- 추진배경 : 현행 道 산업단지 개발은 지역적·공간적 편중과 불균형 지속
- 추진내용 : 「산업입지법」 상 손실보전 제도 활용하여 '지역균형개발산단' 추진 기반 마련
- 문제점 및 해결 :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개발이익으로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94.12.)하였으나, 시행방법과 절차 등이 없어 이를 개선 (통합지침 조항 신설)
- 평 가 :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철학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도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그간 산업단지 개발은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으로 경기 남부에 편중 · 집중되어 이루어져 온 반면, 북 · 동부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한 실정으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민선7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산업단지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구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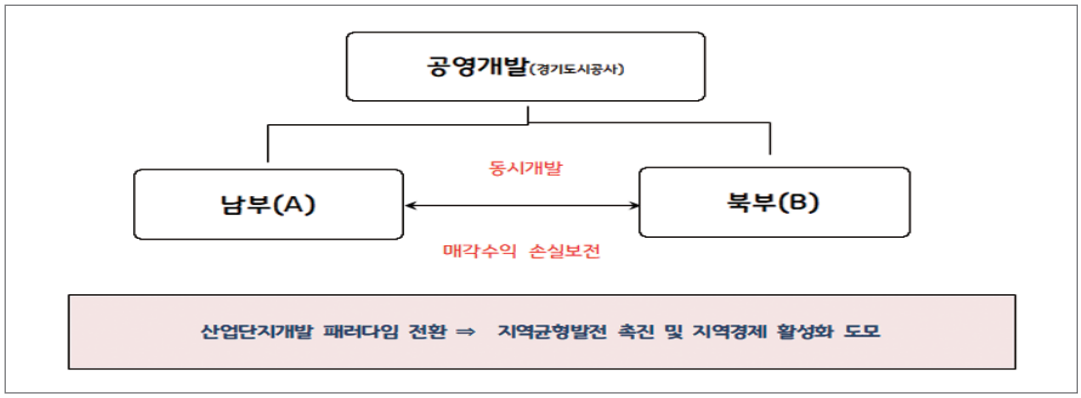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공영개발 추진계획 검토

경기도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남부지역과 산업기반이 열악한 북부지역을 동시에 조성하는 공영개발을 구상하였다. 이에 수차례 경기도시공사와 논의한 결과,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개발이익으로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을 근거로 공영개발 추진을 확정하였다.

[표 102-1] 공영개발 추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조항 신설

1994년 12월 '산업시설용지 개발이익을 다른 산업단지의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며, 시행방법 등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2018년 8월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20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국토부 1차관과 행안부 차관 면담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개정건의 후 1년 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성과를 이루어내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다.

3) 관계기관 업무협약서 체결

경기도는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를 의뢰하여 2019년 12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대상지의 장단점을 분석·검토하여 이익산단으로는 평택지역을, 손실산단으로는 파주지역을 선정하였다. 이후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하여 평택시장, 파주시장,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2019년 12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산단 결합개발 방식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시범사

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였다.

[사진 102-1]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식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식('19. 12. 26.)〉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결합 형태의 개발방식이다. 관련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유사 사례도 없어 법령 및 지침 개정 등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 문제 또한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경기 북부지역이 각종 중첩된 규제와 불리한 입지 여건으로 양적 · 질적인 불균형이 심화된 지역임을 고려하였다. 이재명 도지사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라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금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를 서둘러 추진하게 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는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을 개발이 용이한 지역과 묶

어 동시에 개발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균형개발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든 점에서 큰 성과일 것이다.

각종 중첩된 규제와 불리한 입지 여건으로 소외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표였다면, 다음은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을 대상으로 한 산업단지 추진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깨끗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경기도

제1절 사람중심의 주거환경

103.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장 김태수

- 추진배경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주거권 보장
- 추진내용 :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문제점 및 해결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비 확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평　　가 : 연차별 공급 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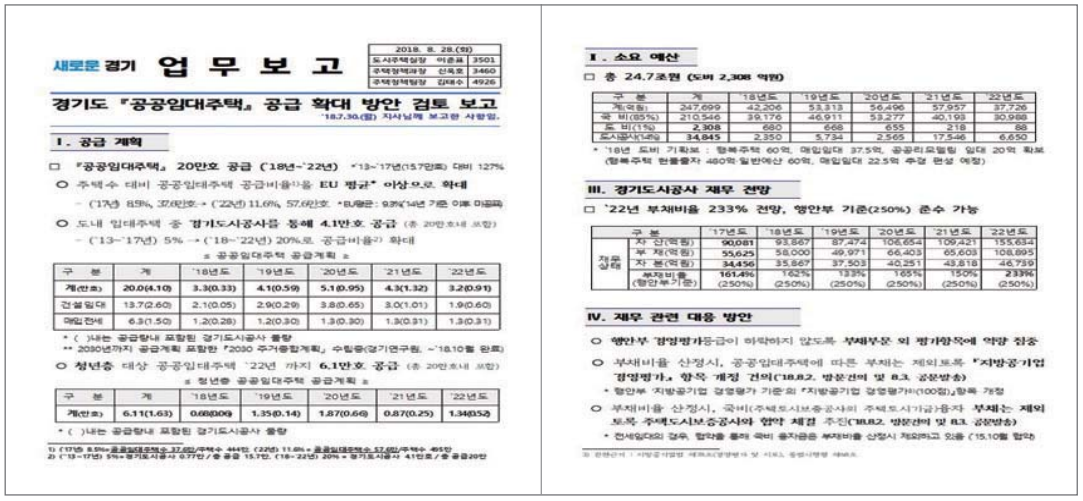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기도는 2018년 9월 국회 정론관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매입임대주택 매입비 추가 지원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표 103-1]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안)



새로운 경기 **업 무 보 고**

2018. 8. 28.(화)	
도시주택실장	이순효 3501
주택정책과장	신옥호 3460
주택정책팀장	김재수 4926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검토 보고
'18.7.30.(월) 지사님께 보고한 사항임.

Ⅰ. 공급 계획

□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18년~'22년) *'13~'17년(15.7만호) 대비 127%

○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EU 평균* 이상으로 확대
- ('17년 8.5%, 37.6만호 → ('22년) 11.6%, 57.6만호 *EU평균 : 9.3%('14년 기준 이후 미공표)

○ 도내 임대주택 중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4.1만호 공급 (총 20만호내 포함)
- ('13~'17년) 5% → ('18~'22년) 20%로 공급비율(*)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

구 분	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만호)	20.0(4.10)	3.3(0.33)	4.1(0.59)	5.1(0.95)	4.3(1.32)	3.2(0.91)
건설임대	13.7(2.60)	2.1(0.05)	2.9(0.29)	3.8(0.65)	3.0(1.01)	1.9(0.60)
매입전세	6.3(1.50)	1.2(0.28)	1.2(0.30)	1.3(0.30)	1.3(0.31)	1.3(0.31)

* ( )내는 공급량내 포함된 경기도시공사 물량
** 2030년까지 공급계획 포함한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중(경기연구원, ~'18.10월 완료)

○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22년 까지 6.1만호 공급 (총 20만호내 포함)
*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

구 분	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만호)	6.11(1.63)	0.68(0.09)	1.35(0.14)	1.87(0.66)	0.87(0.25)	1.34(0.5)

* ( )내는 공급량내 포함된 경기도시공사 물량

1) ('17년) 8.5%=공공임대주택수 37.6만/주택수 444만, ('22년) 11.6% = 공공임대주택수 57.6만/주택수 497만
2) ('13~'17년) 5%=경기도시공사 0.7만호 / 총 공급 15.7만, ('18~'22년) 20% = 경기도시공사 4.1만호 / 총 공급20만

Ⅰ. 소요 예산

□ 총 24.7조원 (도비 2,308 억원)

구 분	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억원)	247,699	42,206	53,313	56,496	57,957	37,726
국 비(85%)	210,546	39,176	46,911	53,277	40,193	30,988
도 비(1%)	2,308	680	668	655	218	88
도시공사(14%)	34,845	2,350	5,734	2,565	17,546	6,650

* '18년 도비 기확보 : 행복주택 60억, 매입임대 37.5억, 공공리모델링 임대 20억 확보
(행복주택 반올림자 480억 일반에산 60억, 매입임대 22.5억 추경 편성 예정)

Ⅲ. 경기도시공사 재무 전망

□ '22년 부채비율 233% 전망, 행안부 기준(250%) 준수 가능

구 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재무상태	자 산(억원)	90,081	93,867	87,474	106,654	109,421	155,634
	부 채(억원)	55,625	58,000	49,971	66,403	65,603	108,895
	자 본(억원)	34,456	35,867	37,503	40,251	43,818	46,739
	부채비율 (행안부기준)	161.4% (250%)	162% (250%)	133% (250%)	165% (250%)	150% (250%)	233% (250%)

Ⅳ. 재무 관련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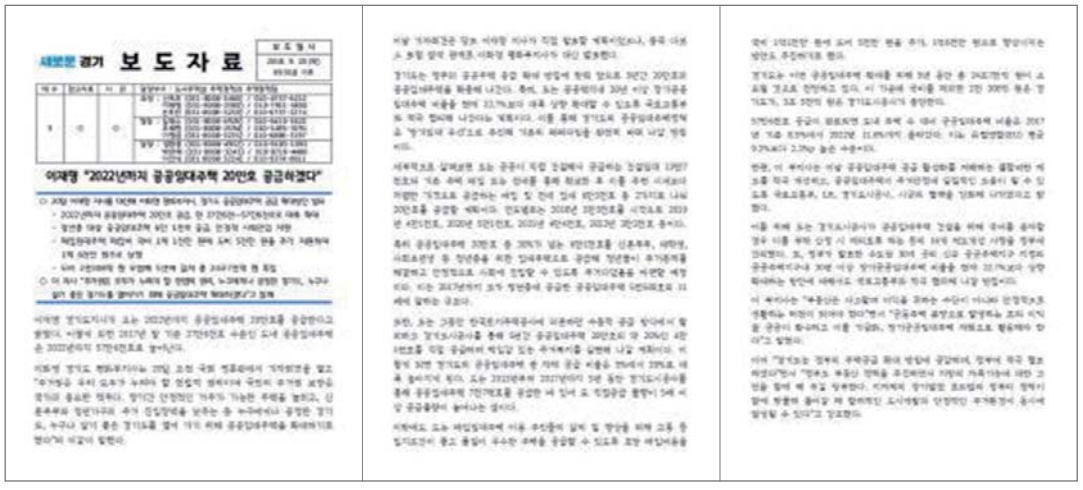
○ 행안부 경영평가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부채부문 외 평가항목에 역량 집중

○ 부채비율 산정시,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부채는 제외토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개정 건의('18.8.2. 방문건의 및 8.3. 공문발송)
*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100점)항목 개정

○ 부채비율 산정시, 국비(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등과 부채는 제외토록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 체결 추진('18.8.2. 방문건의 및 8.3. 공문발송)
* 전세임대의 경우, 협약을 통해 국비 출자금을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있음 ('15.10월 협약)

[사진 103-1]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브리핑

[표 103-2]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18. 8. 28.(화)	
배포일 이후	

매수	담당부서	책임	전화번호
1	주택정책과	팀장 김재수	031-8008-4926
		주무관 김지현	031-8008-4927
		주무관 이재원	031-8008-4928
		주무관 이정훈	031-8008-4929
		주무관 이지현	031-8008-4930
		주무관 이지현	031-8008-4931
	공공주택과	팀장 김정훈	031-8008-4940
		주무관 이지현	031-8008-4941
		주무관 이지현	031-8008-4942
		주무관 이지현	031-8008-4943
		주무관 이지현	031-8008-4944
		주무관 이지현	031-8008-4945

이재명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하겠다"

○ 지방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 이재명 행정부지사,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
-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총 37만6천~57만6천호로 대폭 확대
-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6만 1천호 공급 전담팀 서해안실 배정
- 확대방공주택 확보에 국비 3개 1만만 원력 5조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야
2개 의견만 정부에 보냄

○ 이 자리 "주택정책 전략적 노력과 함께 정책의 일치, 노력해야 공정한 정치, 노력이 없이 좋은 정치를 결여되어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보(본)고 등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다. 이행에 따른 2017년 말 기준 37만6천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천호로 늘어난다.

이로써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주거복지를 말고 "주거정책을 우리 도내가 노력과 함 연합적 정책지역 국가적 보장을 정책을 우리 도내가 노력과 함 연합적 정책지역 국가적 보장을 정책의 중요한 정책이. 정기간 안정적인 가주지 마련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족에 주거 안심정책을 보장하는 등 노력에서나 공정한 정치도, 누구나 일이 좋은 정치를 함께 가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로 했다"며 비장이 말했다.

이날 '주택대책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아프스 초청 일정 관계로 이화영 행정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당초의 3만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는 취지. 또한, 오는 공공임대주택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33.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으로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대폭적 세제지원을 확대해 서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천호와 '다소 주택 비율 오는 민간을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바탕 및 전세 임대 방식으로 총 2만5천호 나눔 20만호를 공급할 예획이다. 민간임대는 2018년 3만3천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 추진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3만호 중 30%가 넘는 1만1천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는 2017년까지 30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만6천호로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오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해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1천호를 직접 공급하여 적극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 중에 3만호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지역 공급 비율을 35%에서 33%로 비율 줄이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2017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만7천호를 공급한 바 있어 도 직접공급 물량이 5배 이상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따라 오는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택들이 넓어 질 뿐만을 위해 고용 등 경기도민이 좋고 돌들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장 매입임대를

국비 2억2천만 원에 도비 5천만 원을 추가, 1억8천만 원으로 할당이지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3년 동안 총 24조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만 3081억 원은 경기도가, 3조 5천만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출연한다.

5개년으로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다음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평균(9.3%)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 부지사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인 부채비율 적극 개선에도, 공공임대주택에 주택건설에 소용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을 공사할 경우 이를 위한 신청 시 바이크를 하는 등의 차입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주도일 30억 준비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지구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33.7%보다 상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복잡단한 이슈들에 이익을 중심에 서있어 이니셔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 공급으로 할당하는 조의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반해, 청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 지역에서 청기일도 조화롭게 정책이 함께 병행해 출비할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EU 평균(9.3%) 이상으로 확대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가며,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천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천호 등 2가지로 나눠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천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2천호, 2020년 4만6천호, 2021년 4만1천호, 2022년 3만7천호 공급을 계획하였다.

매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점검 및 독려하고, 매주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안 논의를 위한 경기도시공사와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2018~2019년도에 공공임대주택 9.1만호를 공급하여 목표치인 7.6만호 대비 120%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0년 6월까지 12.2만호 공급계획 대비 11.3만호를 공급하였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과정

1)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임대주택은 수준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경기도는 교통 및 입지가 양호하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매입 후 임대 공급하는 매입임대사업 등으로 양질의 임대

주택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가격, 입지 및 시설도 좋은 주택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천만 원에 도비를 추가 지원하여 1억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다.

2)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업비 확보방안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간 총 24조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1천 88억 원은 경기도가, 3조 1천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할 예정이다. 국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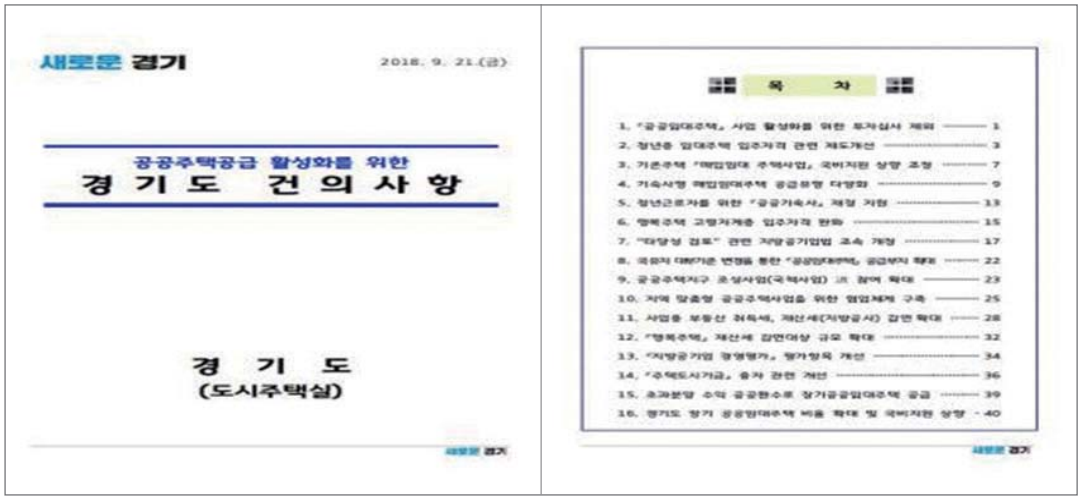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경기도는 국토부-수도권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 도내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입주자격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7건의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

* 제도개선 완료 : 입주자격 완화, 절차 간소화 등 7건 제도개선 완료
  -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제 · 개정('18.11.22., '19.07.29.)
  - 「지방공기업법」 개정(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사업 지방공사 타당성 검토 제외/'19.12.3.)

** 제도개선 건의 : 국토부-수도권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18.7.17.), 국토부·행안부 방문 건의('18.8.2.), 도내 국회의원 정책간담회('18.9.3.),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18.9.11.), BH 건의('18.9.4.), 2차 도내 국회의원 정책간담회('18.9.14.), 국토부 협의체 건의('18.9.27.), 국토부장관 간담회('18.10.25.), 국토부 건의('19.2.19., 5.21., 7.15., 7.26., 9.6., 11.22., '20.2.10., 5.26., 6.23.), 국토부 방문 건의('19.3.28., 6.17., 11.27., '20.3.18., 6.26.), 국토부 간담회('20.5.21.) 등

[표 103-3]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건의



라. 평가 및 발전방안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도민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독려 및 관리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련 불합리한 요소에 대한 제도개선, 국비지원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 및 협력하여 경기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

104.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팀장 이은철

- 추진배경 : 도 핵심과제 65번.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으로 분쟁 사전예방
- 추진내용 : 관련 근거 조례 마련 및 지원위원 위촉, 현장자문 지원서비스 제공
- 문제점 및 해결 : 법상 행정청의 자료제출 요구권, 조사권한이 없어 법·제도 개선 필요
- 평　　가 : 현행제도 내에서 입주민의 권리행사방법에 대해 자문해주어 만족도가 높은 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징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규약의 제정 및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한 단체의사를 형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청 조사·감사 권한이 없다. 집합건물 관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 및 입주민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지만, 법상 한계로 조사 및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있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건물관리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단 개시, 관리단 집회를 통한 관리인 선임, 규약 설정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리인,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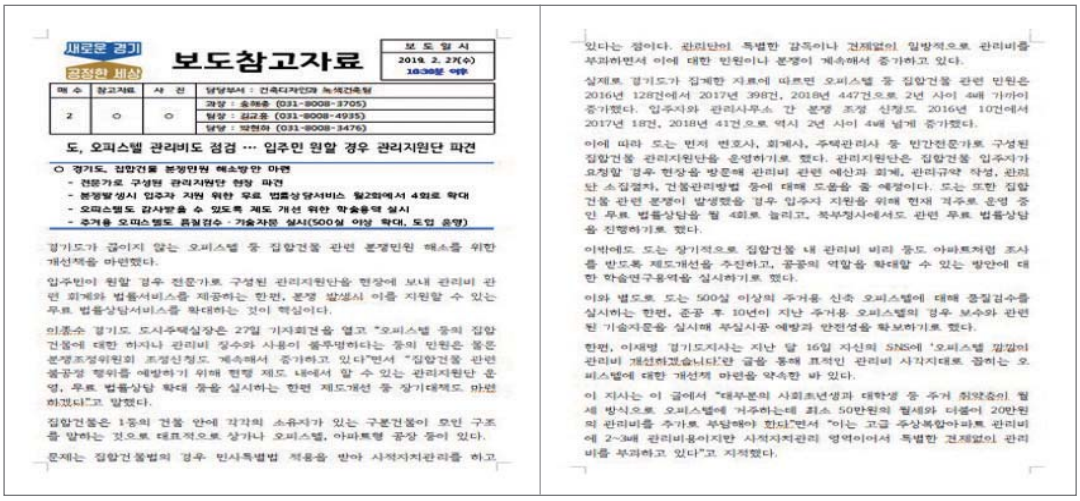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제도 도입 검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약 4배가 증가하여 2019년 1월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련 분쟁민원 해소방안을 검토하였다. 개선책으로는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지원단 찾아가는 자문서비스, 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 등이 포함되었다.

2019년 2월 27일 발표된 경기도 관리지원단 운영 계획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 민간전문가 분야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원대상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였다.

[표 104-1] 보도자료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마련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도참고자료

보 도 일 시: 2019. 2. 27(수) 18:30분 이후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팀
2	○	○	과장 : 송해준 (031-8008-3705) 팀장 : 김교웅 (031-8008-4935) 담당 : 박현하 (031-8008-3476)

도, 오피스텔 관리비도 점검 … 입주민 원할 경우 관리지원단 파견

○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민원 해소방안 마련
-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 현장 파견
- 분쟁발생시 입주자 지원 위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월2회에서 4회로 확대
- 오피스텔도 감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위한 학술용역 실시
- 주거용 오피스텔도 품질검수 · 기술자문 실시(500실 이상 확대, 도입 운영)

경기도가 급이지 않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분쟁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입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을 현장에 보내 관리비 관련 회계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분쟁 발생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에 대한 허지나 관리비 징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민원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합건물 관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지원단 운영, 무료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개선 등 장기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사적자치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단의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역시 2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변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절차, 건물관리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도는 또한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지원을 위해 현재 격주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을 월 4회로 늘리고,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장기적으로 집합건물 내 관리비 비리 등도 아파트처럼 조사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500실 이상의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중점검수를 실시하는 한편,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수와 관련된 기술자문을 실시해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표적인 관리비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최소 50만원의 월세와 더불어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는 고금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에 2~3배 관리비용이지만 사적자치관리 영역이어서 특별한 견제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경기도는 2020년 1월 07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3일 제정·시행했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첫 번째로 집합건물관리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자격, 인원, 임기, 지원 신청 및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04-2]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구성 및 운영개요

○ 자 격 요 건 :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 인원/임기 : 30명/2년(연임 가능)
○ 위 촉 절 차 : 공개모집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장 추천→위촉(도지사)
○ 지 원 신 청 : 집합건물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1/10 동의필요)
○ 지 원 내 용 : 관리단 집회,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규약 설정 및 변경, 관리비 및 회계운영,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에 대한 자문
※ 1. (지원제외) 집합건물분쟁조정 중, 고소·고발 등 소송 중, 관계법령 위반, 동일 내용의 지원 재신청, 개인 사생활 침해,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의 경우
2. (지원중단)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립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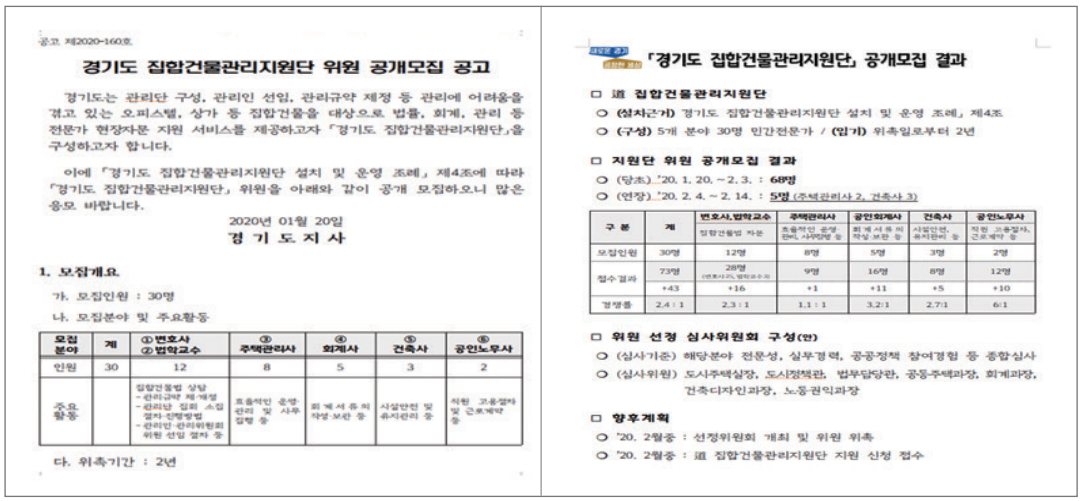
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위원 위촉

경기도는 2020년 1월 20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 30명을 공개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실시하고 26일간 신청접수를 받았다. 공개모집 결과, 73명의 지원단 위원 신청이 접수되었고 평균 경쟁률은 2.4:1로 집계되었다. 도시주택실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해당분야 전문성, 실무경력, 공공정책 참여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0명의 지원단 위원을 선정했다.

분야별 위원의 인원은 최근 3년간 민원유형(법령40%, 관리33%, 회계17%, 시설8%, 노

무2%) 비율을 참고하여 변호사 11명, 법학교수 1명, 주택관리사 8명, 공인회계사 5명, 건축사 3명, 공인노무사 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2020년 2월 28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을 위촉하였고, 위촉된 위원은 2년 동안 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한다.

[표 104-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 공개모집 공고 및 결과



공고 제2020-160호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는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01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30명

나. 모집분야 및 주요활동

모집분야	계	①변호사 ②법학교수	③주택관리사	④회계사	⑤건축사	⑥공인노무사
인원	30	12	8	5	3	2
주요활동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선정방법 - 관리인·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사무집행 등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등	직원 고용절차 및 근로계약 등

다. 위촉기간 : 2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공개모집 결과

□ 道 집합건물관리지원단

○ (설치근거)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구성) 5개 분야 30명 민간전문가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지원단 위원 공개모집 결과

○ (당초) '20. 1. 20. ~ 2. 3. : 6명

○ (연장) '20. 2. 4. ~ 2. 14. : 5명 (주택관리사 2, 건축사 3)

구 분	계	변호사,법학교수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집합건물법 자문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모집인원	30명	12명	8명	5명	3명	2명
접수결과	73명	28명 (변호사 23, 법학교수 5)	9명	16명	8명	12명
	+43	+16	+1	+11	+5	+10
경쟁률	2.4 : 1	2.3 : 1	1.1 : 1	3.2:1	2.7:1	6:1

□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 (심사기준) 해당분야 전문성, 실무경력, 공공정책 참여경험 등 종합심사

○ (심사위원) 도시주택실장, 도시정책관, 법무담당관, 공동주택과장, 회계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노동권익과장

□ 향후계획

○ '20. 2월중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촉

○ '20. 2월중 : 道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신청 접수

4)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현장자문

경기도는 2020년 3월 13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등에 홍보자료를 게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총 24회의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현장자문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도는 집합건물관리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건물관리현황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원단과 함께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필요한 자문을 한다.

주요 지원 사례를 보면, 집합건물 입주 초기 입주민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시행사가 특정 관리업체와 계약해 입주민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장기 독점 관리를 위해 관리단 집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청이 많았다. 지원단은 관리단 집회 관련 서면결의서 등 증빙서류의 유효성에 대하여 자문하고, 관리업체 변경을 위한 관리인 선임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 입주민이 관리인 선임 위한 관리

단 집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사진104-1] 하남 00지식산업센터 및 부천 00아파트 현장 자문사례

참석 10명(위원 4, 道 2, 입주민 4)	참석 16명(위원 4, 道 2, 입주민 4, 관리회사 6)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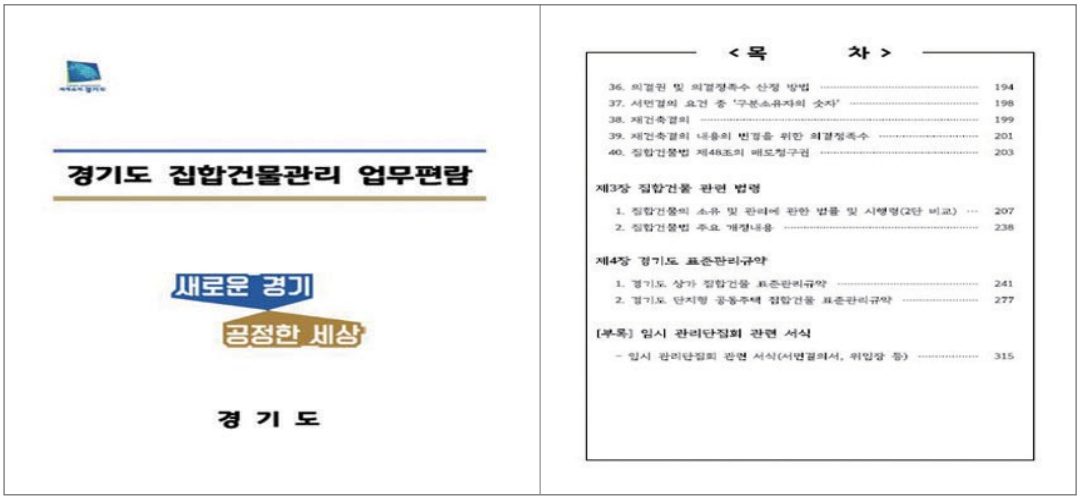
1) 집합건물관리지원 지원방법 개선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현장자문 시 집합건물 관리비 과다부과 등 관리부실 의혹을 제기하는 입주민과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리업체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쟁으로 이어져 전문가 자문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은 분쟁조정 경험이 많은 위원을 우선 배정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 현장자문 전 조정방안을 검토하여 신청인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개선했다.

집합건물관리지원 신청인이 「집합건물법」에 대한 용어, 절차 등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내실 있는 지원단 현장자문이 어려웠다.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도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 관리단 집회 개최 등 신청대상 집합건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사전 확인하면서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현장자문 전에 집합건물 관리 관련 이

해를 돕기 위해 법무부 질의회신, 집합건물법,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개최 서식 등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업무편람」을 제작(2020년 6월)하여 지원단 지원신청 시 배포하고 있다.

[표 104-4]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업무편람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업무편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 기 도

< 목 차 >

36. 의결권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 194
37. 서면결의 요건 중 '구분소유자의 소재' ····· 198
38. 재건축결의 ····· 199
39.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 201
40. 집합건물법 제48조의 매도청구권 ····· 203

제3장 집합건물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2단 비교) ··· 207
2. 집합건물법 주요 개정내용 ····· 238

제4장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1. 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241
2. 경기도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277

[부록] 임시 관리단집회 관련 서식

- 임시 관리단집회 관련 서식(서면결의서, 위임장 등) ····· 315

2)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제도 적극 홍보

입주 초기 분양자의 독점관리 및 관리개시 방해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집합건물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건축허가조건에 '건축물 사용승인 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 및 고지' 하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2020년 5월)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합건물 관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현장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포스터 제작, 농협ATM 홍보문구 송출, 시·군 주민지원센터 및 G버스 홍보동영상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표 104-5]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안내 및 홍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신청 안내

3) 집합건물법 및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에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 관리문제에 대하여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행정청에는 집합건물에 대한 조사 · 감사 권한이 없다. 주요 갈등 원인인 관리비 비공개 및 과다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근본적인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다.

* 지자체 조사권 신설 등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미반영(道→법무부/2019.1월, 2020.6월)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2020년 4월~12월)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현행법상 행정청 권한 부재를 보완하여 집합건물 관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관리비 과다부과 등 부당한 행

위에 대한 대응방법을 안내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집합건물 관리지원 현장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신청인 맞춤형 자문을 해주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원단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에는 집합건물에 안내 포스터 부착, SNS 동영상 홍보 등을 통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을 확대하여 50회 이상 현장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집합건물 관리비 과다부과 의혹 등 근본적인 집합건물 관리문제 분쟁해소를 위한 자료제출 명령권, 조사권 등 행정청의 법적 권한 확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105. 경기도 원도심 '도시재생' 50곳 이상으로 확대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장 안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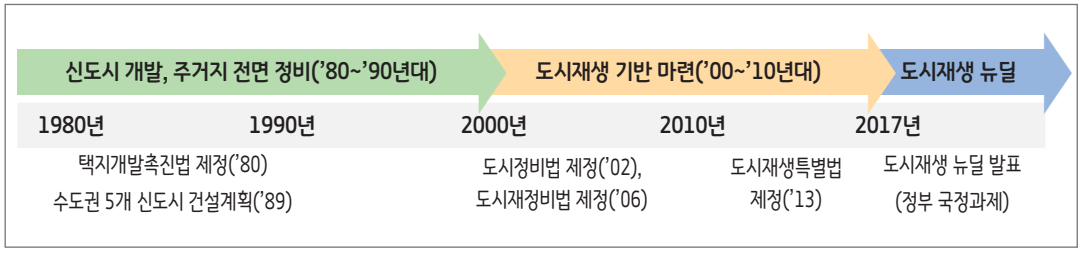
재생관리팀장 김춘식

- 추진배경 : 국정과제 79번.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 추진내용 :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 목표 50곳 이상 상향 ·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정부 뉴딜 종합평가 적극 대응, 제도개선 사항 발굴
- 평　　가 : 도시재생 뉴딜 4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전국 356곳 중 41곳 선정)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980년대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 중심 정책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가 외연적으로는 팽창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 · 고령화로 인구유입이 정체되고 경제가 선진국형 저성장 기조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양적 팽창의 도시 확장정책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제 과거의 외곽 확산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쇠퇴한 기성시가지 위주로 도시정책을 전환하고, 쇠퇴지역의 재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표 105-1] 도시재생 관련 정책 추진경과



정부에서는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

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 주민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발표하였다.

* 국정과제 79번.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경기도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인구와 사업체가 줄고 노후건축물이 증가하는 쇠퇴지역이 565개 읍 · 면 · 동 중 231개로 40.9%에 달하는 등 쇠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쇠퇴지역에는 424만 도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2017년에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정부협력 기반의 도시재생 뉴딜 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진행한 정부 뉴딜 공모사업 356곳 중 경기도는 전국 최다 규모인 41곳(12%)을 선정, 사업비 9,77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처럼 목표 달성이 순항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를 활용한 시 · 군 공모사업 컨설팅 총 86회('17~'20년), 시 · 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도비 52억 원('18~'20년) 지원 등 정부 뉴딜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소규모 재생사업도 최다 선정(전국 220곳 중 33곳)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도시 쇠퇴를 극복하고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임대주택, 주민 창업공간, 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한 곳에 입지하는 복합 앵커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구도심을 지역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가로환경정비, 집수리지원 등을 통해 노후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

경으로 정비한다.

[표 105-2]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 현황

년도	전국	道선정	지역
합계	356곳	41곳(12%)	19개 市 41곳
2017	68곳	8곳(12%)	고양(원당 · 화전), 안양(명학 · 박달1), 수원(매산-수원역), 광명(광명5), 시흥(정왕), 남양주(금곡)
2018	99곳	9곳(9%)	고양(일산2 · 삼송), 시흥(대야 · 신천대야), 화성(황계), 안양(석수2), 광주(경안), 평택(안정), 안산(월피)
2019	116곳	17곳(15%)	수원(연무 · 세류), 고양(성사 · 능곡), 부천(심곡본 · 여월), 안산(대부·본오), 평택(신평 · 신장), 광주(송정1 · 2), 성남(상대원), 의정부(가능), 포천(신읍), 양주(덕정), 남양주(화도)
2020 (10월기준)	73곳	7곳(10%)	평택(신장), 오산(궐동), 군포(당동), 화성(송산), 용인(신갈), 하남(신장), 의정부(녹양)

또한 지역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주민 참여 기반 조성을 통해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기업 등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내용으로 경기도에는 41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 105-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사진

<사업 전> <사업 후>

<복합 앵커시설 조성>

<사업 전> <사업 후>

<가로환경정비사업>

<사업 전> <사업 후>

<집수리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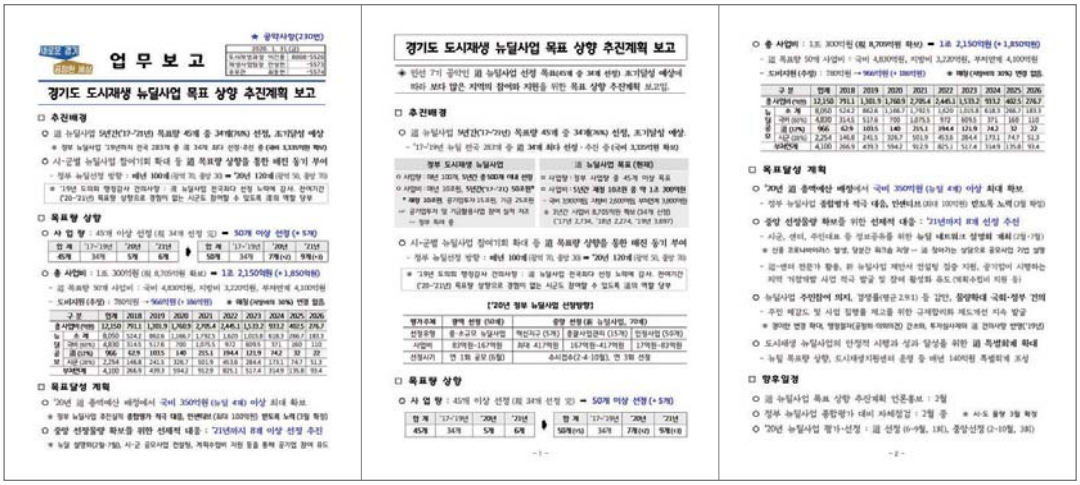
주민 워크숍 창립총회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2)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표 상향 추진계획 수립 · 시행

경기도는 2017년에 도시재생 뉴딜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2021년까지 45곳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9년까지 34곳이 선정되는 등 목표량 조기달성이 예상되었다. 이에 시 · 군에 보다 많은 지역의 참여와 지원을 위해 2020년 2월에 목표량을 당초 45곳에서 50곳 이상으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부처연계 사업 등 1조 2,150억 원(도비 966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표 상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표 105-3]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표 상향 추진계획 보고


업 무 보 고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표 상향 추진계획 보고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표 상향 추진계획 보고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표 상향 추진계획 보고

기존 45곳에서 50곳 이상으로 상향한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공모사업 참여 기법, 평가 시 착안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의지 등을 감안해 국회와 정부에 뉴딜사업 배정물량 확대 건의를 병행 추진하고,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성과 달성을 위해 매년 140억 원 이상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3) 주민체감도 및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 확대와 계획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 2019년 11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이 개정 · 시행되어 계획 변경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2019년 5월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이끌어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표 105-4]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사항

국 토 교 통 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평가 적극 대응

국토교통부는 광역 시 · 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총액을 시 · 도별 균등 배정과 시급성 · 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기존 사업의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여 최종 확정한다. 게다가 2020년에는 시 · 도별 배정하는 국비 총예산이 5,55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축소되어 지난해 대비 약 70% 정도로 감소됐다.

이에 경기도는 예산총액 350억 원(평년 500억 원 배정) 이상 확보를 목표로 기 선정사업의 성과 창출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월간단위로 착 · 준공 실적, 실 집행률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 · 군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5차례* 진행하는 등 정부 뉴딜사업 종합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예산총액 400억 원을 배정(전국 2위) 받았다. 이는 당초 목표액보다 50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기존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평가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 '19.3.15.(금) 시·군 과장회의, '19.5.30.(목) 시·군 과장회의, '19.6.24.(월) 뉴딜 네트워크 회의', 19.9.9.(월) 시·군 과장회의, '20.6.15.(월) 시·군 점검회의

[표 105-5] 2020년 시 · 도별 총액예산 배분

시도	배정액(비율)	시도	배정액(비율)	시도	배정액(비율)	시도	배정액(비율)
서울	360억 원 (60%)	광주	120억 원(48%)	강원	240억 원(69%)	전남	440억 원(110%)
부산	250억 원 (63%)	대전	220억 원 (88%)	충북	200억 원 (67%)	경북	360억 원 (90%)
대구	120억 원(40%)	울산	120억 원(48%)	충남	300억 원(100%)	경남	400억 원(100%)
인천	140억 원(47%)	경기	400억 원(80%)	전북	220억 원(73%)	제주	110억 원(73%)

※ ( )는 평년대비 비율 / 세종시는 '20년 신규사업 수요가 없어 배정 제외

2) 사업추진 장애 요인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국회 · 정부 건의

경기도는 원도심 '도시재생' 50곳 이상으로 확대와 더불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속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 생략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변경을 제외하는 특례규정 신설 등 규제합리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8월과 9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입법발의(안규백 · 강준현 국회의원)되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부담 완화와 도시재생사업 관련 재원의 사용용도 범위 확대 등 추가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표 105-6] 제도개선 건의사항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정부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 2020년 10월 기준 7곳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1곳이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 뉴딜사업 종합평가 적극 대응, 시 · 군의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컨설팅, 도시재생특별회계 확대 등 경기도와 시 · 군이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성과로써 지역 ·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한 주거 정비 사업이 아니다. 쇠퇴한 구도심에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어 사람들의 발길을 되찾고, 경제를 되살리는 전방위적인 도시재생 정책이다. 전면 철거와 같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자생적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는 목표량 50곳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재생 뉴딜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106.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지역정책과 도시주택정책개발팀장 김완진

- 추진배경 : 도심지 내 '쉼' 공간 부족, 벤치 등 설치 확대로 차별 없는 '쉼' 공간 조성
- 추진내용 :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 55개소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도민 FGI 및 대상지 도민 추천으로 다양한 도민 의견 수렴
- 평　　가 : 보편적 휴식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의 모임 · 소통이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속성장의 역사, 시간에 쫓기는 자동차 중심 이동 등의 문화적 특성, 그리고 '쉼'이 고려되지 못하고 효율성과 경제논리에 밀려난 도시공간 계획 등을 가지고 있다. '생활'과 '삶' 가까이에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편리하게 쉴 수 있는 자유로운 '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 주변의 쉼 공간은 민간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음식점 등의 유료공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료 쉼 공간의 이용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차별화 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주요도시를 보면 도심지 주민 생활권 가까이에 크고 작은 공원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고, 누구나 여유롭게 쉴 수 있는 벤치 등의 시설물이 곳곳에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인구밀도와 도심지 고밀도 개발 등의 공간적 특성을 감안할 때, 선진국 수준으로 도시공원을 일시에 확대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과 예산상의 한

계로 무리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생활 가까이 필요한 곳에 '쉼'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도로, 하천, 공개공지 등 기존 공공 공간에 벤치 등 기능과 디자인, 용도를 고려한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여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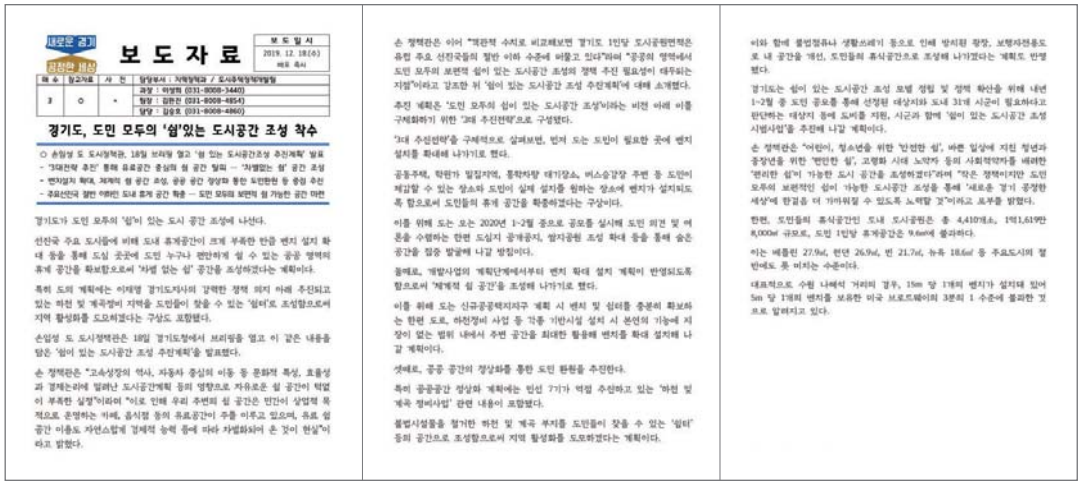
경기도는 도심지 내 '쉼' 공간 부족한 실정을 절감하여 2019년 10월부터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동등한 '쉼'과 '소통'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코자, 민간전문가와 도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정책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도심지 내 쉼터 조성 대상 공간 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정책 반영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쉼 공간 구성요소, 정책추진 방향, 디자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사진 106-1> 정책브리핑 및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인포그래픽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9년 11월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외적 공감대 형성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19년 12월 17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언론 정책브리핑을 실시하였다.

<표 106-1>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착수 보도자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19. 12. 18(수)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자연정책과 / 도시주택정책담당
3	○	-	과장 : 이성희 (031-8008-3440)
			팀장 : 김한진 (031-8008-4854)
			담당 : 김정호 (031-8008-4860)

경기도, 도민 모두의 '쉼'있는 도시공간 조성 착수

○ 손정달 도 도시정책관, 18일 브리핑 열고 '쉼 있는 도시공간조성 추진계획' 발표
- '3대전략 추진' 통해 휴식공간 중심의 쉼 공간 탈피 → '차별없는 쉼' 공간 조성
- 변지점적 확보, 계계적 쉼 공간 조성, 공유 공간 창달과 통한 도민환원 등 중점 추진
- 주요선언과 같은 이해인 도내 휴게 공간 확충 → 도민 모두의 보편적 쉼 가능한 공간 마련

경기도가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 공간 조성에 나선다.

신산국 주요 도시들에 비해 도내 휴게공간이 크게 부족한 만큼 벤치 설치 확대 등을 통해 도심 곳곳에 도민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공 영역의 휴게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차별 없는 쉼'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의 계획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하천 및 계곡정비 지역을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손일성 도 도시정책관은 1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손 정책관은 "고속성장의 역사, 자동차 중심의 이동 등 문화적 특성, 효율성과 경제논리에 밀려난 도시공간계획 등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 주변의 쉼 공간은 민간이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음식점 등의 유료공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료 쉼 공간 이용도 자산소합계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손 정책관은 이어 "객관적 수치로 비교해보면 경기도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며 "공공의 영역에서 도민 모두의 보편적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한 뒤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추진 계획은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3대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는 도민이 필요한 곳에 벤치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 학원가 밀집지역, 통학차량 대기장소, 버스승강장 주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장소와 도민이 실제 설치를 원하는 장소에 벤치가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휴게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 위해 도는 오는 2020년 1~2월 중으로 공모를 실시해 도민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도심지 공개공지, 쌈지공원 조성 확대 등을 통해 숨은 공간을 찾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벤치 확대 설치 계획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 쉼 공간'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신규공공택지지구 계획 시 벤치 및 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도로, 하천정비 사업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시 본연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벤치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로, 공공 공간의 창달화를 통한 도민 환원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공간 창달화 계획에는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하천 및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하천 및 계곡 부지를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쉼터' 등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점유나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해 방치된 창장, 보행자전용도로 내 공간을 개선,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경기도는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모델 정립 및 정책 확산을 위해 내년 1~2월 중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와 도내 31개 시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지 등에 도비를 지원, 시군과 함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손 정책관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쉼', 바른 일상에 지친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편안한 쉼', 고령화 시대 노약자 등의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편리한 쉼'이 가능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겠다"라며 "작은 정책이지만 도민 모두의 보편적인 쉼이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통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도민들의 휴식공간인 도내 도시공원은 총 4,410개소, 1억1,619만 8,000㎡ 규모로, 도민 1인당 휴게공간은 9.6㎡에 불과하다.

이는 배출된 27.9㎡, 런던 26.9㎡, 빈 21.7㎡, 뉴욕 18.6㎡ 등 주요도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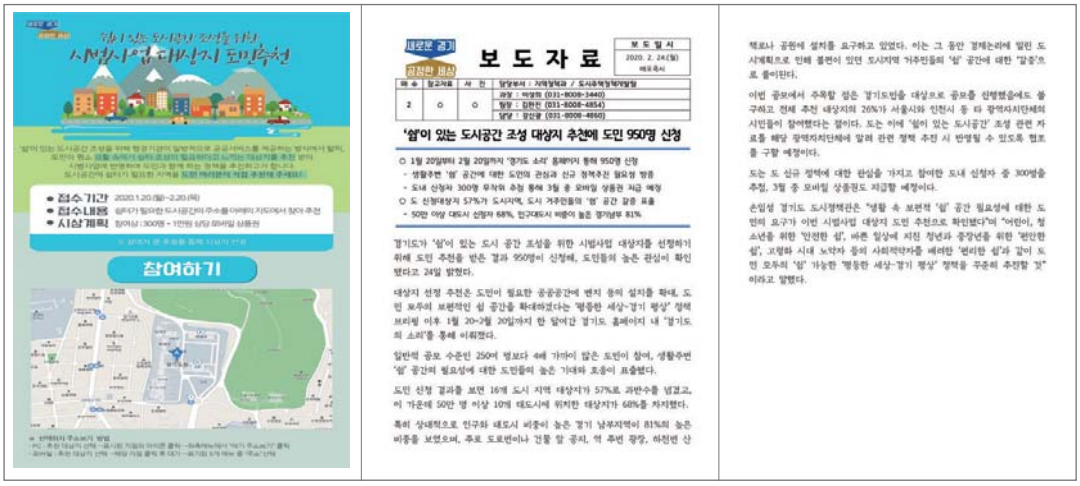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수원 나혜석 거리의 경우, 15m 당 1개의 벤치가 설치돼 있어 5m 당 1개의 벤치를 보유한 미국 브로드웨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시범사업 대상지 도민 추천

경기도는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정책의 시범사업을 '도민 참여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 속 '쉼'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장소에 대한 추천 신청을 받았다.

시범사업 대상지 도민 추천 신청에는 총 950명이 참여하여 930개소에 대한 추천이 이뤄졌다. 신규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공모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천 대상지의 24%가 서울시와 인천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 관할 지역을 추천하였다. 생활 주변 '쉼'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호응이 표출된 것이다.

<표 106-2> 도민추천 포스터 및 대상지 도민추천 결과 보도자료



시범사업 대상지 도민추천

참여하기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2. 24(월) 배포즉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대상지 추천에 도민 950명 신청

○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경기도 소리' 홈페이지 통해 950명 신청
- 생활주변 '쉼' 공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규 정책추진 필요성 방증
- 도내 신청자 300명 무작위 추첨 통해 3월 중 모바일 상품권 지급 예정

○ 도 신청대상지 57%가 도시지역, 도시 거주민들의 '쉼' 공간 갈증 표출
- 50만 이상 대도시 신청자 68%, 인구대도시 비중이 높은 경기남부 81%

경기도가 '쉼'이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도민 추천을 받은 결과 950명이 신청해, 도민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 선정 추천은 도민이 필요한 공공공간에 벤치 등의 설치를 확대, 도민 모두의 보편적인 쉼 공간을 확대해달라는 '행복한 세상-경기 행상' 정책브리핑 이후 1월 20~2월 20일까지 한 달여간 경기도 홈페이지 내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이뤄졌다.

일반적 공모 수준인 250여 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도민이 참여, 생활주변 '쉼'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와 호응이 표출됐다.

도민 신청 결과를 보면 16개 도시 지역 대상지가 57%로 과반수를 넘겼고, 이 가운데 50만 명 이상 10개 대도시에 위치한 대상지가 68%를 차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구와 대도시 비중이 높은 경기 남부지역이 81%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주로 도로변이나 건물 앞 공지, 역 주변 광장, 하천변 산책로나 공원에 설치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그 동안 경제논리에 밀린 도시계획으로 인해 플랜이 있던 도시지역 거주민들의 '쉼' 공간에 대한 '갈증'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모에서 주목할 점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천 대상지의 26%가 서울시와 인천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또는 이에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관련 자료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알려 관련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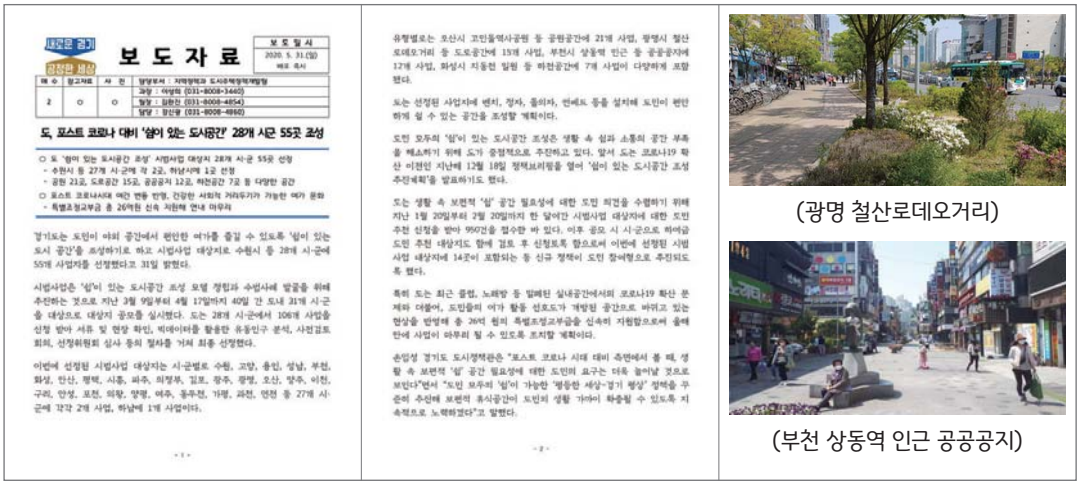
도는 도 신규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도내 신청자 중 300명을 추첨, 3월 중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생활 속 보편적 '쉼' 공간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도민 추천으로 확인됐다"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쉼', 바쁜 일상에 지친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편안한 쉼', 고령화 시대 노약자 등의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편리한 쉼'과 같이 도민 모두의 '쉼' 가능한 '행동한 세상-경기 행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경기도는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모델을 정립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2020년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도내 31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실시하여 28개 시 · 군에서 총 106개 사업을 신청받았다.

<표 106-3>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보도자료 및 시범사업 대상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5. 31(일) 배포즉시

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쉼이 있는 도시공간' 28개 시군 55곳 조성

○ 도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28개 시군 55곳 선정
- 수원시 등 27개 시군역 각 2곳, 하남시에 1곳 선정
- 광명 철산, 도로공간 15곳, 공공공지 12곳, 하천공간 7곳 등 다양한 공간

○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건 변동 반영, 건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여가 문화
- 특별조정교부금 총 26억원 신속 지원해 연내 마무리

경기도는 도민이 아파 공간에서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쉼이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 55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모델 정립과 수범사례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 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 공모를 실시했다. 또는 28개 시·군에서 106개 사업을 신청 받아 서류 및 현장 확인, 벤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 분석, 사전검토회의, 선정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는 시·군별로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27개 시·군에 각각 2개 사업, 하남에 1개 사업이다.

유형별로는 오산시 고인돌역사공원 등 공원공간에 21개 사업,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 등 도로공간에 15개 사업, 부천시 상동역 인근 등 공공공지에 12개 사업, 화성시 지동천 일원 등 하천공간에 7개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또는 선정된 사업지에 벤치, 정자, 돌의자, 펜데드 등을 설치해 도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은 생활 속 쉼과 소통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12월 18일 정책브리핑을 열어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는 생활 속 보편적 '쉼' 공간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여간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민 추천 신청을 받아 950건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공모 시 시·군으로 하여금 도민 추천 대상지도 함께 검토 후 신청토록 함으로써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14곳이 포함되는 등 신규 정책이 도민 참여형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특히 도는 최근 클럽, 노래방 등 밀폐된 실내공간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문제와 더불어, 도민들이 여가 활동 선호도가 개방된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총 26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측면에서 볼 때, 생활 속 보편적 '쉼' 공간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민 모두의 '쉼'이 가능한 '행동한 세상-경기 행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보편적 휴식공간이 도민의 생활 가까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 철산로데오거리)

(부천 상동역 인근 공공공지)

경기도는 정책 취지에 맞고 시범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서류 및 현장 확인, 빅 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 분석, 사전검토 회의, 선정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5월 29일 28개 시 · 군에서 55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정책 수요자의 니즈 불명확

경기도가 추진하는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정책에 대하여 실질적 수혜자인 도민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도와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했다. 도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장소와 시설물, 디자인 등에 대한 자료나 기준 등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도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9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만19세에서 55세 사이의 경기도민 4그룹(32명)을 대상으로 쉼터 조성의 필요성, 쉼터 조성의 방향성, 공공벤치 디자인 선호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민 추천 신청을 실시하였다. 도민이 생활 속에서 '쉼'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장소에 대한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 참고하는 등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도민 참여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2) 시범사업에 대한 시·군 참여 의지 불투명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은 실질적으로 시 · 군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도민 모두에게 보편적 휴게공간을 제공하려 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사업의 성공

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체 시 · 군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 12월 12일에 경기남부 3개 시 · 군을, 2019년 12월 13일에는 경기북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시 · 군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책의 합리적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고, 정책 추진계획을 최종 수립한 이후에는 2020년 1월 29일과 2월 5일 2회에 걸쳐 도내 31개 시 · 군 도시정책(계획) 관련 담당팀장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명하였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성공적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대다수 시·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은 공공의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기존 공간에 벤치 등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 차별 없는 '쉼'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모임과 소통의 장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그 동안 우리 주변의 '쉼' 공간은 민간이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음식점 등의 유료공간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유료 '쉼' 공간 이용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으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쉼' 공간이 마련되고 이러한 정책이 지속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쉼', 바쁜 일상에 지친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편안한 쉼', 고령화 시대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리한 쉼'이 가능한 도시 공간이 조성된다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당초 신규정책 검토 시에는 의도치 못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가문화에서도 보건·방역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

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여가문화 자체의 변화로 야외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55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2020년 가을에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쉼' 공간을 제공, 신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지원사업, 인·허가 등을 통해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실행과제로 함께 추진되고 있는 "도심지 숨은 공간 내 체감형 벤치 등 확대", "신규 도시계획 수립 시 쉼터 확대", "기반시설 신설 시 벤치 등 확대", "하천 이용편의 개선 생활SOC 사업", "도로·광장 내 방치공간 정상화" 등의 '쉼' 공간 확대 정책이 도정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 · 관리 및 독려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107.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이성일

- 추진배경 : 민선7기 공약사항 236번,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 추진내용 : 비의무관리대상 및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사업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정
- 평　　가 :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활성화로 주택 장수명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9년도 기준 도내 150세대 미만 등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약 2,260단지 174,48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1,705단지 133,294세대로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의 75.4%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입주자대표회 등 관리주체 구성 · 운영 및 장기수선 계획 수립 · 충당금 적립 등에 대한 의무가 없다. 공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급속한 노후화 등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후화 속도 대응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경우 주로 임차인 또는 저소득층의 서민 거주 비율이 높다. 보수공사비에 대한 입주민 부담감으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외벽 균열 · 옥상누수 등 훼손된 시설이 방치되는 등 도민의 거주 안전위협 및 지역 슬럼화 등 사회적 문제로 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거안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 매우 필요하다.

경기도는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임에도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선도적 지원 및 관리 정책 마련을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2022년까지 총 4년간 180억 원을 지원한다.

○ 사업개요

- (대　　상) 사용검사(승인) 후 15년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②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내　　용) 방수, 도색,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단지(棟) 내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총 예 산) 17,920백만 원(도비 5,376, 시·군비 12,544) * 도비 30% , 시·군비 70%
-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사업량)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소요 예산	계	**17,920**	2,632	4,648	5,327	5,312	
	도 비	**5,376**	789	1,395	1,598	1,594	
	시·군비	**12,544**	1,843	3,253	3,729	3,718	
공약목표량(연립 등)		**622(290)**	109(72)	160(73)	177(73)	176(72)	

- (보조금 지원 기준) 도 및 시·군 간 매칭을 통한 기준 보조율(도비 30%, 시·군비 70%) 적용

단지(棟) 당 최대 지원금 : 사업계획승인 4천만 원, 건축허가 1천6백만 원

※ 추가 사업비는 시·군비 또는 단지 자체 부담비 등을 반영하여 추진 가능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정책포럼을 2018년 2월~12월까지 총 6차에 거쳐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사업을 발굴하여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안정적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2019년 첫 사업 시행으로 19개 시 · 군 211곳 7,780세대에 약 27억 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담장 · 외벽균열보수 및 옥상방수, 단지 내 포장 등 훼손된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업완료 후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 89%(431명), 보통 11%(54명)로 입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107-1]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성과

현황	< 사업추진 전 >	< 사업추진 후 >
옥상지붕 유지보수 고양시 연립주택 (1979년 준공) (1개동, 6세대)		
단지 담장 유지보수 남양주시 연립주택 (1988년 준공) (1개동, 18세대)		
단지 담장 유지보수 구리시 연립주택 (1989년 준공) (1개동, 30세대)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통한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9년~ '22년(4개년) 180억 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수 : 268명
[산출:180억 원(4개년 총예산) × 14.9명(중분류-건물건설 및 건축보수)/10억 원]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도 · 시 · 군 연계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인 안정적 재정 마련을 위해 도내 31개 시 · 군과 수차례 걸친 사전협의를 통해 매칭비율을 결정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독려 및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추진 현황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 ○ 매년 사업구상 및 지원방식, 홍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보고
- ○ 미 참여 시 · 군에 대한 독려 및 시 · 군별 수요조사로 목표물량 배정
- ○ 매년 시·군별 추진실적, 예산확보 현황 고려 사업물량 재조정
- ○ 시·군 담당과장 회의 및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 ○ 매월 시 · 군별 보조금 지원 단지 사업추진일정 관리
- ○ 사업완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다음연도 사업계획 시 반영 검토 등

동 사업은 노후된 공용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모 등을 통하여 신청하는 사업으로써, 도민들의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였다.

[표 107-2]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사업」 홍보

도 · 시 · 군 홈페이지, SNS, 대중교통 G-bus 미디어 홍보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도 홈페이지 게재, 대상 단지 우편발송, 시 · 군 소식 문자알림, 시 · 군 반상회보 게재 등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접점지를 중심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소규모 공동주택은 영세업체의 건설 사례가 많아 안전에 취약한 구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동주택 지원 정책은 대규모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사업은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성상 재건축 등이 어려워 개 · 보수를 기본관리 정책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 도비 보조금 지원을 통한 주택 장수명화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08.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팀장 이은철

건축관리팀장 김용천

- 추진배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도시안전 및 사회·경제적 문제 개선 필요
- 추진내용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TF팀 운영
- 문제점 및 해결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TF팀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평　　가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 · 범죄 위험 예방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공사 중단 후 장기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안전 및 사회 · 경제적 문제의 개선의 요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자력재개의 한계와 재정 부족 등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8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9년에는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 유도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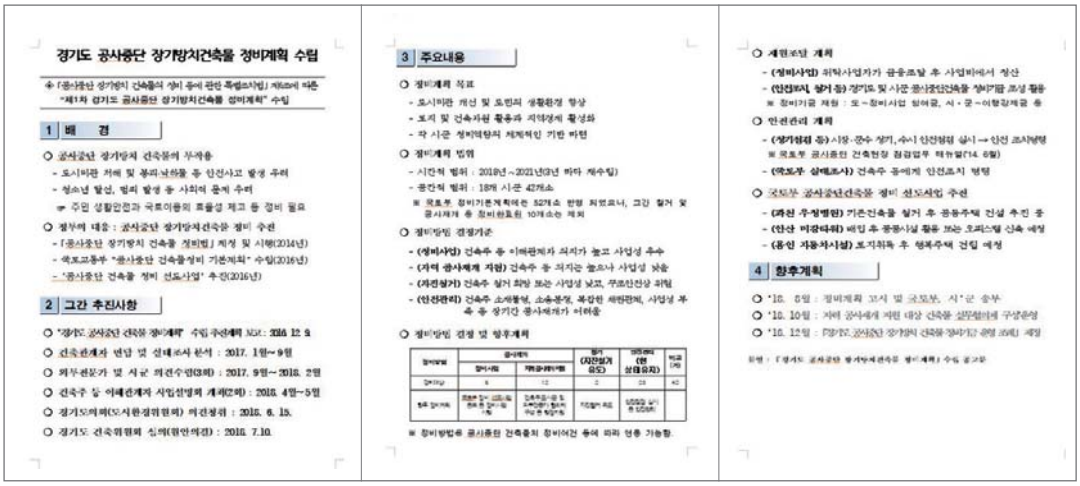
1) 정비계획 수립 (수립절차, 수립내용, 적용방법 등)

경기도는 2018년 8월 13일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 공고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은 해당 시 · 군 협의, 건축주 등 대면조사 및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사업설명회, 도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42곳 중 5곳은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12곳은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 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곳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 ·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23곳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108-1] 정비계획 수립 경위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른 "제1차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1 배 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부작용
- 도시미관 저해 및 붕괴·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청소년 탈선,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 우려
☞ 주민 생활환경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정비 필요

○ 정부의 대응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추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 제정 및 시행(2014년)
-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건축물정비 기본계획" 수립(2016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추진(2016년)

2 그간 추진사항

○ "장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계획 보고 : 2016. 12. 9.
○ 건축관계자 면담 및 실태조사 분석 : 2017. 1월~9월
○ 외부전문가 및 시·군 의견수렴(3회) : 2017. 9월~2018. 2월
○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사업설명회 개최(2회) : 2018. 4월~5월
○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 의견청취 : 2018. 6. 15.
○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018. 7.10.

3 주요내용

○ 정비계획 목표
- 도시미관 개선 및 도민의 생활환경 향상
- 도시 및 건축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 각 시군 정비업무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

○ 정비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8년~2021년(3년 마다 재수립)
- 공간적 범위 : 18개 시군 42개소
※ 목표로 정비기본계획에는 32개소 반영 희망하나, 그간 철거 및 공사재개 등 정비완료된 10개소는 제외

○ 정비방법 결정기준
- (정비사업)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의지가 높고 사업성 우수
- (자력 공사재개 지원) 건축주 등 의지는 높으나 사업성 낮음
- (자진철거) 건축주 철거 희망 또는 사업성 낮고, 무조건안전 위험
- (안전관리) 건축주 소재불명, 소송분쟁, 복잡한 채권관계, 사업성 부족 등 장기간 공사재개가 어려움

○ 정비방법 결정 및 향후계획

정비방법	공사재개		철거 (자진철거 유도)	안전관리 (현 상태유지)	비고 (계)
	철거지원	재정(융자)지원			
합계	5	12	2	23	42
	정비사업 추진 및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협의	건축주등 자력으로 공사재개 추진	지자체 지원	당분간 현 상태유지	

※ 정비방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세부추진 계획
- (정비사업) 위탁사업자가 금융조달 후 사업비에서 상환
- (안전관리, 철거 등) 장기도 및 시군 공사중단건축물 정비기금 조성 활용
※ 정비기금 재원 : 도~정비사업 참여금, 시·군~이행강제금 등

○ 안전관리 계획
- (장기정체 등) 시장·군수 상기, 수시 안전점검 실시 → 안전 조치명령
※ 목표로 공사중단 건축현장 점검업무 매뉴얼('14. 6월)
- (악도부 실태조사) 건축주 등에게 안전조치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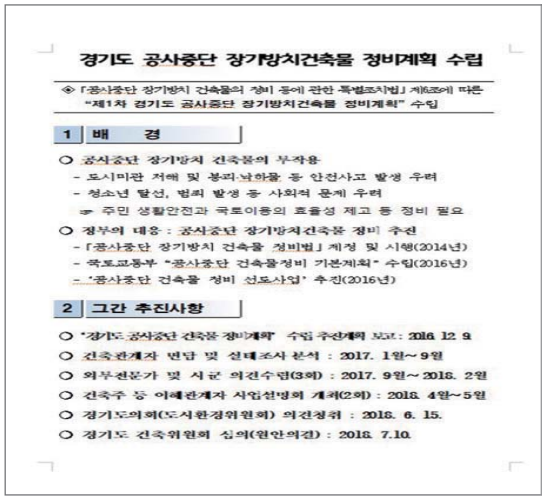
○ 국토부 공사중단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추진
- (과천 주정별원) 기존건축을 철거 후 공동주택 건설 추진 중
- (안산 비강타워) 매입 후 공공시설 활용 또는 오피스텔 신축 예정
- (용인 자동차시험) 도지취득 후 행복주택 건립 예정

4 향후계획

○ '18. 8월 : 정비계획 고시 및 국토부, 시·군 송부
○ '18. 10월 : 지역 공사재개 지원 대상 건축물 설문조사 구성준비
○ '18. 12월 : 「장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 조례」 제정

비고 :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공고문

[표 108-2] 정비계획 수립 공고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제1차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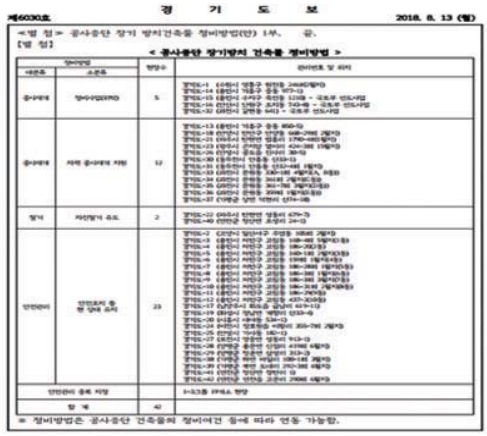
1 배 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부작용
- 도시미관 저해 및 붕괴·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청소년 탈선,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 우려
☞ 주민 생활안전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정비 필요

○ 정부의 대응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추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 제정 및 시행(2014년)
-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건축물정비 기본계획" 수립(2016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추진(2016년)

2 그간 추진사항

○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계획 보고 : 2016. 12. 9.
○ 건축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 분석 : 2017. 1월~9월
○ 외부전문가 및 시·군 의견수렴(3회) : 2017. 9월~2018. 2월
○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사업설명회 개최(2회) : 2018. 4월~5월
○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 의견청취 : 2018. 6. 15.
○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018. 7.10.



경 기 도 보

제6030호 2018. 8. 13 (월)

<별 첨>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방법(안) 1부. 끝.

[별 첨]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법 >

정비방법		현장수	관리번호 및 위치
사업주체	소유자		
준사업비	정비사업(재개)	5	경기도-1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46번지일대) 경기도-14 (광주시 곤지암읍 우산리 산1) 경기도-15 (광주시 곤지암 1-1호 - 국도로 변도사업 경기도-16 (광주시 초월읍 초월리 742-4호 - 국도로 변도사업 경기도-32 (의정부시 장암동 641) - 국도로 변도사업
준사업비	지역 중사업체 지정	12	경기도-13 (광주시 곤지암 중동 650-1) 경기도-18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85-2번지 2필지) 경기도-19 (의정부시 의정부동 1740-3번지일대) 경기도-20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85-2번지 1필지) 경기도-21 (의정부시 장암동 산1-1번지 1필지) 경기도-22 (의정부시 민락동 산1-1)
정부	지방정부 주도	2	경기도-23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85-2)
민간관리	정비조치 등 법 집행 요청	23	경기도-2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번지 2필지) 경기도-3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08-4번 1필지외) 경기도-4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08-4번 1필지외) 경기도-5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08-1번 1필지외) 경기도-6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39번 1필지외) 경기도-7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80-3번 1필지외) 경기도-8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80-3번 1필지외) 경기도-9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80-3번 1필지외) 경기도-10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80-3번 1필지외) 경기도-11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80-3번 1필지외) 경기도-12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80-3번 1필지외) 경기도-17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산29-1) 경기도-24 (의정부시 장암동 산1-1번지 1필지) 경기도-25 (의정부시 장암동 산1-1번지 1필지) 경기도-26 (의정부시 장암동 산1-1번지 1필지) 경기도-27 (의정부시 장암동 산1-1번지 1필지) 경기도-28 (의정부시 장암동 산1-1번지 1필지) 경기도-29 (의정부시 장암동 산1-1번지 1필지) 경기도-30 (의정부시 장암동 산1-1번지 1필지) 경기도-31 (의정부시 장암동 산1-1번지 1필지)
민간관리 중복 지정			1~23호 관리소 현장
합 계		42	

※ 정비방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사진 108-1]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이해관계자 사업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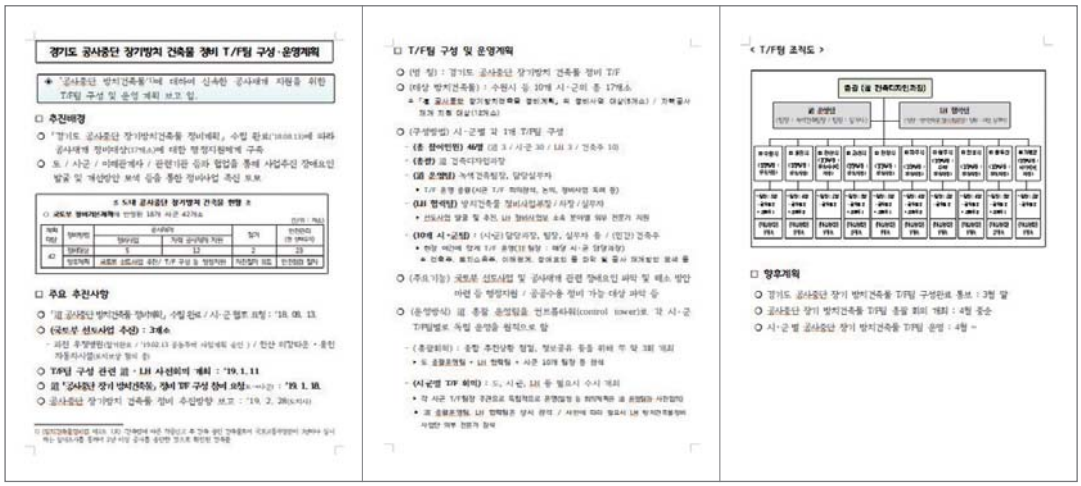
2) 정비 TF팀 구성·운영

경기도는 2019년 3월 26일 오랫동안 건축이 중단된 채로 버려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시·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태스크포스(TF)팀은 도 건축디자인과장을 총괄로 운영팀, 한국토지주택공사(LH)협력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있는 해당 시·군별 10개팀 등 총 46명으로 구성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17곳의 신속한 공사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조직으로,

도 총괄 운영팀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각 해당 시 · 군별 현장여건에 맞게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공사재개와 관련된 모든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해소 방안마련 등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표 108-3] 정비 T/F팀 구성·운영계획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T/F팀 구성·운영계획

□ 추진배경

□ 주요 추진사항

□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 T/F팀 조직도 >

□ 향후계획

[사진 108-2] 정비 TF팀 회의 사례

총괄회의 34명 참석(도6, 시군24, LH2, GH2)

○○시 TF회의 7명 참석(도2, 시2, 건축주2, LH1)

다. 추진성과

1) 총 42곳 중 10곳 정비완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사유재산으로 소송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2018년 8월 13일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이후 시 · 군 독려, 건축주 면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체계적인 정비 지원을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총 42곳 중 공사재개 5곳(수원 1곳, 고양 1곳, 용인 2곳, 동두천 1곳), 철거 3곳(파주 1곳, 안성 1곳, 과천 1곳), 허가취소 2곳(화성 1곳, 가평 1곳) 등 총 10곳을 정비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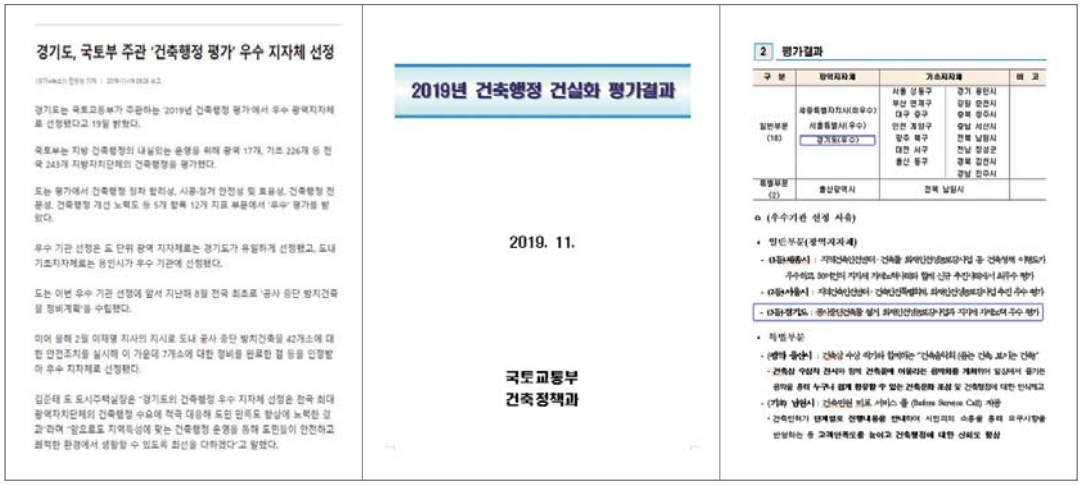
2) 안전조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허가권자로 하여금 '공사중단 건축현장 점검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14.6월)을 활용하여 개별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안전유지 · 관리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 · 군 및 한국토지공사(LH)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실태조사 시 지적된 안전지적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 ·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현재까지 경기도 내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은 없었다.

3) 방치건축물 정비 우수로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도를 지도 ·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도 평가에서는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 · 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5개 항목에서 평가를 하였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와 동시에 정비 TF팀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표 108-4] 2019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



경기도, 국토부 주관 '건축행정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 건축행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평가했다.

도는 평가에서 건축행정 정책 합리성, 사후점검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5개 항목 12개 지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우수 기관 선정은 도 단위 광역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선정됐고, 도내 기초지자체로는 용인시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이번 우수 기관 선정에 앞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 2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도내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42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해 이 가운데 7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점 등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의 건축행정 우수 지자체 선정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건축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해 도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

2019.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 평가결과

구 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비 고
일반부분 (18)	세종특별자치시(최우수)	서울 성동구	경기 용인시	
	서울특별시(우수)	부산 연제구	강원 춘천시	
	경기도(우수)	대구 수구	충북 청주시	
		인천 계양구	충남 서산시	
		광주 북구	전북 남원시	
		대전 서구	전남 장성군	
		울산 동구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	
특별부분 (2)	충남광역시	전북 남원시		

○ (우수기관 선정 사유)

• 일반부분(광역지자체)

- (최최최종시) :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을 최적건축종합지원단 등 건축행정 역할도가 우수하고, 30억원의 지역내 자체소재 R&D 협업 신규 추진·최하수 시우수 평가

- (최종서울시) :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안전특별위원회, 최적건축종합지원단 추진 우수 평가

- (최최경기도 : 종합건축안전을 설치, 최적건축종합지원단 등을 지역내 자체적 우수 평가

• 특별부분

- (세종 종합시) : 건축상 수상 여기와 함께하는 "건축솔루의 (좋은 건축, 보기는 건축)"

- 건축을 주업적 전시의 함께 건축물에 어울리는 광역하용 계획하여 일상에서 즐기는 공지을 중의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문화 조성 및 건축행정에 대한 인식개고

- (기획 남원시 : 건축민원 비포 서비스 센 (Before Service Call) 자원

- 건축인허가 단계별로 전문내용을 반영하여 시민의의 수용을 중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자력재개 한계와 재정 부족 등으로 정비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경기도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2019년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등 노력을 통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총 42곳 중 10곳을 정비 완료하였다. 아울러 시 · 군으로 하여금 개별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안전유지 · 관리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2020년 현재까지 경기도 내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은 없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 · 군 독려, 건축주 면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체계적인 정비 지원을 통해 경기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해나갈 것이다.

109.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장 양종길

- 추진배경 : 깨끗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한 민선7기 도정시책사업
- 추진내용 : 30개 시·군 48개소 설치 운영 및 전국 확대 기반 마련
- 문제점 및 해결 : 시 · 군별 상이한 지역여건 및 사업 중복 문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사업 운영의 탄력성 부여, 지역단위 주체와의 협력 및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 평　　가 :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사회 및 경제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복잡해지고 급증하는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단위의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소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한 민선7기 도정 시책사업이다.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에 복지 사각지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민의 노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상시적 ·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이러한 주거취약지역에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거점을 설치하고 일정 규모의 상근 인력 '행복마을지킴이 및 사무원'을 채용하여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안전 · 환경 · 복지 · 문화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운영 시행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제시되는 시 · 군 유사사업과의 중복, 기존 자원봉사 영역과의 역할 중첩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시범운영을 선행하였다.

시 · 군 수요조사 후 취약계층 및 주택밀집지역 여부를 현지 조사한 결과, 안산 · 시흥 · 의정부 · 군포 · 포천 5개 시 · 군이 시범운영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도는 시범운영을 위해 행복마을관리소의 근무체계, 기능 및 행복마을지킴이 업무 매뉴얼 등을 규정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중 시 · 군 담당자 및 행복마을지킴이 등과 간담회를 수시로 마련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였다. 운영 시간 조정, 특색업무 기획 등 각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역 특색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 · 군에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표 109-1]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6월
○ 장　　소 : 5개 지역(안산, 시흥, 의정부, 군포, 포천)
※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
○ 근무인원 : 1개소 당 10명
○ 운영방식 : 주 5일(토, 일 및 공휴일 제외) 08:00~24:00, 2교대
○ 소요예산 : 1개소 당 4억6백만 원(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사진 109-1] 행복마을관리소 활동 장면

취약계층 집수리	지역특색사업(주민교류프로그램)

2)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도는 2019년 1월 7일 경기도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원칙,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지킴이 및 사무원의 역할과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표 109-2]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및 행복마을지킴이 역할

○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 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 -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 동네환경개선 지원 -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등 -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역할

○ 경기 행복마을지킴이의 역할

-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 여성 안심귀가 및 아동 안심 등·하교 서비스
- 원도심 지역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3)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본 사업 시행

경기도는 도의원, 시 · 군 공무원,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관리소 발전방안 합동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행복마을관리소의 필요성과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2019년 7월부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행복마을지킴이 활동이 민간단체 활동과 중첩되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임무를 설계하였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 운영에 있어서 시 · 군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추진 중이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추진 대상 시 · 군을 선정하기 위해 취약계층 분포 정도, 단독주택 밀집지역 여부, 도시재생사업 연계가능성 등의 선정지표를 마련하였고, 주거취약 계층과 복지수요가 많은 원도심 주변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1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4) 사업 추진 성과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2020년 7월 현재 경기도 31개 시 · 군 중 30개 시 · 군 48개소에 설치 · 운영 중이며, '21년 3월 道내 全 시 · 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 · 군별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과 지역단위 기관 · 단체와의 협력 및 복지, 문화,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109-3]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보도자료 및 주민생활 혁신 챔피언 인증패 수상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0. 7. 15.(수) 15:00 이후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2	0	0	과장 : 조창범 (031-8008-2220)
			팀장 : 양종집 (031-8008-4291)
			담당 : 김주천 (031-8008-4293)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이젠 대한민국 행복마을관리소로

- 행안부 선정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

○ 행안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등 4개 분야 21개 사업 확산사례로 선정
- 전국 확산 위한 특교세 30억원과 컨설팅 등 지원 받아
○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2018년 시범사업 출발, 5월 현재 도내 27개 시군 40개소 설치
-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와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
-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확산 대상 사업에 도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의 혁신 우수성과를 발굴해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19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예산·평가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사례 444개 중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비롯한 4개 분야 21개를 확산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특교세 30억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안산, 시흥, 의정부, 군포, 포천시에서 시범사업을 벌였으며 5월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 40개소에 설치됐다. 나머지 4개 시군도 올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곳으로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에 조성하는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일자리를 창출에 효과가 있다.

또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2020년 2월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에 선정되었고, 2020년 5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확산 대상 사례"에 선정되어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하는 등 전국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1년에는 서울 중구, 충북 진천, 울산광역시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시·군별 상이한 지역여건 및 유사 중복사업

시 · 군별 상이한 지역여건에 따른 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와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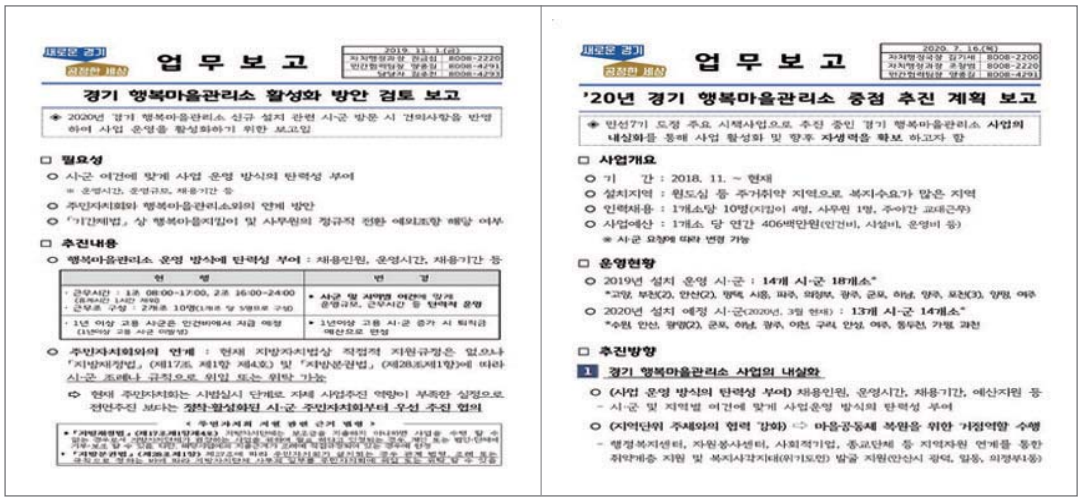
2)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반영 및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순회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업무 범위를 정하였고 기존 단체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결정하였다.

사업운영 중 유사 중복사업과 관련하여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역단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과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성과분석을 통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와의 역할중복 극복 및 연계방안과 행복마을관리소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모델을 연구하는 등 본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109-4]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사업 중점 추진 계획 수립



업 무 보 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 방안 검토 보고

업 무 보 고

'20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중점 추진 계획 보고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지역 순찰 활동, 취약계층 도움활동, 쓰레기 투기 계도, 취약계층 집수리 등 총 286,284건의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고, 48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 하였으며, 방역소독, 방역물품 제작 및 배부, 예방홍보 등 161,851건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펼쳤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3%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97%가 재이용 의사를 밝히는 등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원도심 등 주거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와 도내 전 시 · 군 및 전국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110. 수원-화성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강희중

- 추진배경 :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 추진내용 :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 동일 면적 토지 맞교환
- 문제점 및 해결 : 민선7기 본격적인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 성사
- 평　　가 : 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방정부, 의회가 협력하여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화성시 반정동 일원은 과거 택지개발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 싸여있는 'n자형'의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실질적인 생활권은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어 왔다.

이처럼 기형적인 관할구역이 획정 된 것은 1995년 영통지구개발을 위해 당시 화성군 신리 · 망포리 일원을 수원시 망포동과 신동으로 편입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구역 조정은 택지개발('94년 영통지구 택지개발) 필요에 따라 리(理)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편입에서 제외된 화정시 반정동 등 일부 지역이 현재 수원시 쪽으로 구분되는 n자형 경계가 형성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신동지구 개발 및 수원시 2030 도시계획 승인

수원시는 2006년 신동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신동지구에 포함된 화성시 반정동을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2014년 1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2014년 12월 신동지구 준공과 망포4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문제가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사진 110-1]

n자형 관할구역

[사진 110-2]

망포4지구 반정3지구 현황도

2) 경기도 중재안 제시 및 경계조정 합의

이후 수원시와 화성시 간 경계조정을 위한 실무협의가 지속되었다.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되던 와중에 2015년 7월 경기도 주관으로 망포지구 일부와 반정지구 일부를 동일면적을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당시 중재안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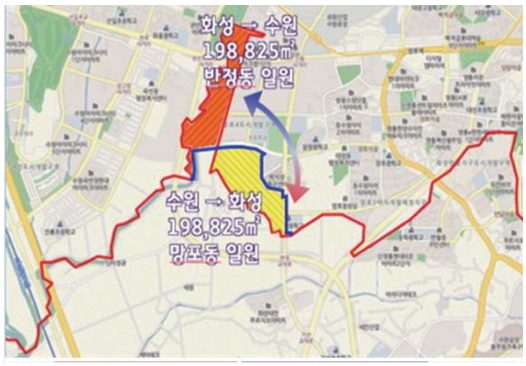
당시 경기도 중재안은 실무적인 협의는 이끌어내었으나, 함백산메모리얼 파크, 군 공항 이전 등 양 시간 갈등문제로 인하여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표 110-1] 경기도 중재안

□ 경계조정(안) ※ 동일면적(198,825㎡) 맞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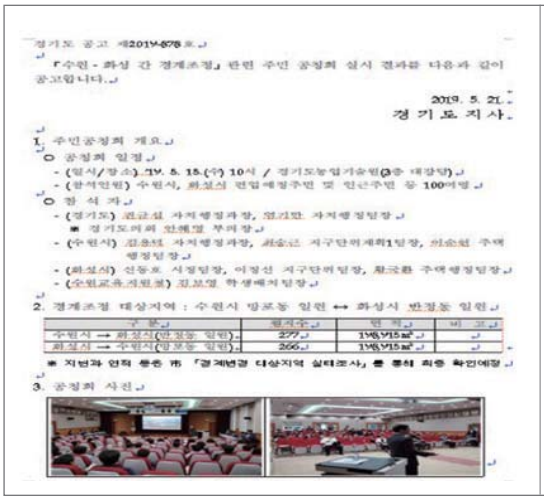
구분	대상 및 조정 내역								증감(㎡)	비고
	편입되는 지역				편입 받는 지역					
	지역	면적(㎡)	세대수	인구	지역	면적(㎡)	세대수	인구		
화성시	반정동	198,825	328	553	영통구 망포동	198,825	-	-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198,825	-	-	반정동	198,825	328	553	-	-

[사진 110-3] 경기도 중재안



지지부진 하던 경계조정 논의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의 본격적인 중재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2018년 8월 경기도 주관 경계조정 회의를 다시 재개하였으며, '수원시-화성시 간 협력이 필요한 4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2019년 4월 4일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 있는 19만 8,825㎡ 동일 규모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표 110-2] 공청회 결과고시


「수원 - 화성 간 경계조정」 관련 주민 공청회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1.
경 기 도 지 사

1. 주민공청회 개요
○ 공청회 일정
- (일시/장소) '19. 5. 15.(수) 10시 / 경기도농업기술원(3층 대강당)
- (참석인원) 수원시, 화성시 편입해당주민 및 인근주민 등 100여명
○ 참 석 자
- (경기도) 부지사, 자치행정과장, 염기호 자치행정팀장
※ 경기도의회 의원별 부여 중
- (수원시) 김용석 자치행정과장, 서수근 지구단위계획1팀장, 이소현 주택행정팀장
- (화성시) 신동호 시정팀장, 이정선 지구단위팀장, 채국환 주택행정팀장
- (수원교육지원청) 김보영 학생배치팀장

2. 경계조정 대상지역 : 수원시 망포동 일원 ↔ 화성시 반정동 일원

구 분	세대수	인 구	비 고
수원시 → 화성시(반정동 일원)	277	148,715㎡	
화성시 → 수원시(망포동 일원)	266	148,715㎡	

※ 지번과 면적 등은 向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 를 통해 최종 확인예정

3. 공청회 사진

[사진 110-4] 공청회 사진

이후 2019년 5월 15일 수원시, 화성시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었다. 2019년 6월과 10월 수원시의회와 화성

시의회에 이어 12월에는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최종 성사됐다.

4) 협약식, 대통령령 공포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019년 12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 · 수원시 · 화성시 공동협약식'을 열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0년 6월 23일 최종적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5년을 넘게 끌어왔던 경계조정이 최종 마무리되었다.

[표 110-3] 협약식 개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 2019. 12. 23.(월) 16:30 엠바고 이후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전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6	0	추후 게시	과장 : 권금섭 (031-8008-2220)
			팀장 : 김장현 (031-8008-4081)
			담당 : 윤태연 (031-8008-4082)

경기도 중재 또 통했다 경기도-수원시-화성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약
- 지난 3월 수원-용인 경계조정에 이어 올해만 2번째 -

○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23일 경기도청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 협약 체결
○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 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으로 맞교환하는 도 중재안에 수원, 화성시 동의
○ 이재명 지사,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준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에 감사, 앞으로도 해묵은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설것"밝혀
○ 같은 해 연속해서 주민 불편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도와 지자체 지방의회가 합의에 이른 모범사례로 평가
- 주민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지자체 간 경계 조정에 합의한 전국 최초 1, 2호 사례
- 반정동 지역 주민과 향후 입주예정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 기대
○ 도,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건의, 내년 5월쯤 대통령령 공포 예정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은 오늘, 경기도청에서 「수원-화성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기형적인 행정구역(n자형)에 따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 중재와 수원시, 화성시간 최종합의에 따른 협약이다.

[사진 110-5] 협약식 개최 사진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수원-화성시 간 갈등

2015년 7월 도 주관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통해 망포지구 일부와 반정지구 일부를 동일

면적을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합의를 이끌었으나, 함백산메모리얼 파크, 군 공항 이전 등 양시 간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논의가 중단되었다.

2) 실무회의, 도의 적극 중재로 합의 성사

민선7기 들어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2018년 8월 경기도 주관 경계조정 회의를 다시 재개하였으며, 2019년 3월과 4월에서 양 시에 방문하여 도 중재안을 적극 설명하고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경계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경계조정을 위한 수원시와 화성시 간 협력이 필요한 4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를 한 결과, 2019년 4월 최종적으로 도 중재안에 대한 양시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후 4대 사업 해결을 위해 관련부서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실무회의와 현장회의를 개최하였고, 4대 사업 해결을 위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의회를 설득한 후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을 이끌어 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수원-화성 간 경계조정은 주민거주가 완료된 지방정부 간에 이뤄진 '전국 최초'의 경계조정 사례인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19.3월)'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그리고 지방회의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라고 할 것이다.

경기도는 향후에도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주민들에게 중대한 불편을 끼치는 행정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중 합의가능성이 높고 주민불편이 큰 지역을 경계조정 중점 추진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시·군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 · 지원할 것이며, 자율

적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 주관 조정회의 실시 등 적극적인 중재를 실시하고 경계조정안을 마련하여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제2절 촘촘한 교통인프라 확충

11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도로정책과 도로정책팀장 백승범

- 추진배경 : 민선 7기 공약 211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 추진내용 : 고속국도 노선명 변경 당초 「서울외곽순환선」 → 변경 「수도권제1순환선」
- 문제점 및 해결 : 노선 경유 지방자치단체 부동의 → 명칭 개정 당위성, 필요성 설득
- 평　　가 : 지방자치단체 간 상행 · 협력 기반 마련, 경기도의 위상 강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고속국도 제100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988년 1월 판교~구리선으로 명칭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 7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노선명이 개정된 이후 29년 동안 계속 사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도시의 팽창과 수도권 인구의 분산으로 인해 서울의 경계가 불분명해져 왔다. 서울의 인구는 972만 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경기도 인구는 1,37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도는 지역내총생산 역시 전국 1위로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1991년 노선명이 개정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과거 개발 시대에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경기도를 서울의 외곽으로 격하시키는 차별적 명칭이었다. 이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지 않고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있어 시대 변화를 고려한 합리

적 노선명으로 명칭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추진

경기도는「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명칭 개정을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였다. 고속국도 명칭 중 차별적,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외곽' 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수도권 자치단체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인 '수도권순환선'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고속국도 노선명의 변경(명칭 개정)을 위해서는「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제11조에 따라 해당 노선이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 · 도와 20개 시 · 구의 동의를 얻기 위해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하였다.

2019년 6월 서울특별시가 최종 명칭 개정에 동의함에 따라 마침내 노선 경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였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는 2019년 6월 11일 고속도로 노선이 경유하는 지방자치단체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명칭 개정을 공식 요청하였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변경 공식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 까지 고속국도 노선번호 활성화 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노선명 개정의 타당성 및 노선명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사항 조사와 함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선명 개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명칭 개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시행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를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명칭 개정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대상 및 정비방법, 소요비용 부담 방안 등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였다.

2020년 5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4일 고속국도 100호선 노선명을「서울외곽순환선」에서「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변경하는 도로 노선 변경을 고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 최소화를 위해 도로표지판을 전면교체하지 않고 글자만 부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였다. 경기도 시 · 군과 인천광역시,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은 자체 확보된 유지관리 비용으로 표지판을 정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로 인해 경기도가 원인자로서 부담할 도로표지판 정비 비용을 당초 1,933백만 원에서 297백만 원으로 약 1,636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다.

[표 111-1] 추진경위

○ ’18.7. ~ ’19.6. : 노선 경유 20개 지자체와 명칭 개정 동의 절차 협의
○ ’19.2.14. : 경기도의회 명칭 개정 촉구 결의(제333회 임시회)
○ ’19.4.16.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명칭 개정 결의(제217차 회의)
○ ’19.6.5. : ‘서울시’ 명칭 개정 동의(3개 기초지자체 포함)
○ ’19.6.11. : 경기도·서울시·인천시 공동 명칭 개정 요청(도→국토부)
○ ’19.10.~’20.2. : 국토부 연구 용역(고속국도 노선번호 활성화 방안 검토 연구)
○ ’19.10.~’20.5. : 관계기관 협의, 도로표지판 비용부담 방안 협의 및 확정
○ ’20.5.29. : 국토부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통과(서면심의)
○ ’20.6.4. : 노선명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29호)
- 당초「서울외곽순환선」→ 변경「수도권제1순환선」

[표 111-2] 노선 개요

○ 노 선 명 : 당초「서울외곽순환선」 변경「수도권제1순환선」 ○ 연 장 : 128km(왕복 8차로) ○ 사업기간 : 1988.1.~2007.12. - '88. 1. 4. 판교~구리선(제정) - '91. 7. 25. 서울외곽순환선(개정) ○ 통과지역 : 경기 104km(82%), 인천12km(9%), 서울12km(9%)	

[표 111-3] 명칭 개정 결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29호

도로 노선 변경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 예정임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변경 시행일 : 2020년 9월 1일부터

구 분		[ ] 지정 [✓] 기존	[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변경 없음
노선번호		제100호	변경 없음
노선명		서울외곽순환선	수도권제1순환선
기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514-80	변경 없음
종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419-6	변경 없음
주요 통과지		별도첨부	변경 없음
총연장(킬로미터)		128.0km	변경 없음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해당 없음	변경 없음
	연장 (킬로미터)	해당 없음	변경 없음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노선 경유 지방자치단체 동의 지연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노선명 개정을 위해서는 노선이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은 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했다. 그러나 2018년까지는 서울특별시의 동의를 얻지 못해 명칭 개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월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명칭 개정을 위한 4차례 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다. 최종 2019년 6월 서울특별시가 명칭 개정에 동의함으로써 명칭 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2) 명칭 개정 절차 이행 기간 장기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2019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에 명칭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명칭 개정 결정권자인 국토교칭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의 협조를 구했다. 국회 대정부 질의 및 2019년도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조기 완료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건의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명칭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조율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였다.

3) 도로표지판 정비 비용 과다 발생 및 절감 추진

국토교통부에서 명칭 개정 검토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명칭 개정 시 도로표지판 정비에 약1,933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로표지판 정비 예산 절감을 위해 변경되는 고속도로 노선명의 도로표지 글자만 수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였다. 추가적으로 인천시, 경기도(시 · 군), 제3경인 고속화도로 표지판의 경우 해당 기관이 자체비용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함으로써 경기도가 부담할 도로표지판 정비비용이 약297백만 원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당초 대비 약 85%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표 111-4] 도로표지판 수량 및 교체비용

(단위 : 천원)

구분		계	한국도로공사	신공항 하이웨이	서울시	경기도 (시·군)	인천시	제3경인 등
수량(개)		392	87	6	15	257	18	9
교체비용(천 원)		495,183	280,000	9,900	11,850	155,804	18,634	18,995
부담 기관	경기도	297,750	280,000	9,900	7,850			
	도로관리청	197,433			4,000	155,804	18,634	18,995

[사진 111-1] 도로표지판 정비 방법

정비 전

정비 후(글자 수정)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한 것은 지난 30여 년간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위상을 재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상호 동등한 지방정부라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자치단체 간 상생 ·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 수도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112. 신안산선 복선전철 조기착공

철도정책과 광역철도팀장 방대혁

- 추진배경 :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대규모 사업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광역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
- 추진내용 :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방비(도/시 · 군 간) 재원분담 협의를 통한 사업 조기착공
- 문제점 및 해결 : 시입 · 군비 분담률은 시입 · 도지사가 시장입 · 군수와 협의, 지방비 분담률 확정
- 평　　가 : 사업 조기착공 및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가. 추진배경

신안산선 건설은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안산지역과 시화공단지역의 공로부문 광역교통수요를 철도로 전환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기존 안산선 이용수요 중 서울 서남부지역 연계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통행시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경부고속철도 개통 시 고속철도 광명역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장거리 지역 간 교통수요 집결지점으로써 기능이 기대되는 바, 이들 수요의 효과적인 접근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교통시설 구축 측면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광명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장래 역세권 개발수요 등의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로써 철도건설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분당선과 함께 수도권 X자형 광역전철망을 구축하여 서울 도심 진입 원활화 및 수도권 북동부와의 연계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12-1]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구간) 시흥·안산~광명~여의도 44.763㎞ /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식
○ (총사업비) 3조 3,465억 원(민자50%, 국고35%, 지방비15%)
○ (사업기간) '19년~'24년(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시운전 포함)
○ (시 행 자)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BTO-rs / 위험분담형)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조기착공 추진

신안산선 건설과 맞물려 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 USKR(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컨소시엄은 MOU 체결('07.11.27)을 통해 송산그린시티 동측 부지(화성시 신외동 446번지 일원)에 일자리 창출(건설 시 : 고용 5만4천 명, 생산 5.8조 원 / 운영 시 : 고용 6만4천 명, 생산 연간 3.2조 원), 경제 활성화 및 여행수지 적자 해소 등 동북아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계획하였다.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테마파크, 휴양시설, 판매시설, 호텔, 골프장 등)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주)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주))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성공적인 글로벌 수준의 테마파크 및 호텔 · 쇼핑몰 등 체류형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을 위해서는 광역철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안산 · 시흥시의 노선 갈등으로 지연된 신안산선 기본계획 노선이 경기도의 요구대로 안산축과 시흥축(USKR역까지) 2개 노선이 동시추진으로 확정('24년 완공 예정)되었다. 그러나 서해선(송산~홍성)과 공동사용이 필요한 송산차량기지는 서해선 건설 완료(2022년) 시기에 맞춰 건설되어야 함에 따라 신안산선 조기 착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신안산선 복선전철 조기착공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 22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경기 서남부-서울 도심 접근성 교통여건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며 송산차량기지를 우선 착공하였다. 2019년 9월 9일에는 안산시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착공식 행사를 가졌다.

[사진 112-1]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식 행사 사진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조기 착공을 위한 지방비(분담금) 마련 필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6.12.~'17.12.)를 통해 2018년 2월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른 넥스트레인(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정부와 협상을 추진할 당시 경기도는 사업의 조기 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비(분담금) 마련이 필요했다.

건설공사 사업 추진 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시 · 군과의 사전 재원분

담 협의 등을 거쳐 재원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2) 설명회 개최를 통한 지방비 분담금 확보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원활한 조기 착공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관련 기초지자체(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와 수차례 유선통화 및 신안산선 사업비 분담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재원분담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 결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GTX-A노선 및 하남선 · 별내선 사업 분담률과 동일하게 도 50%, 시 50% 분담률을 적용하여 추진키로 협의하여 지방비 분담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지방비 재원분담(도-시 · 군간) 협의('19. 8월)가 없었다면, 2019년 9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송산차량기지)이 불가능 할 수도 있었던 사례이다.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초지자체와 충분한 재원분담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도-시 · 군 간 재원분담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적기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역 주민에 철도서비스 제고와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의 상생이 기대된다.

113.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버스정책과 환승요금팀장 이규철

- 추진배경 : ’19. 9. 28. 버스요금 인상 추진
- 추진내용 : 취약계층 요금할인 혜택(조조할인, 영유아 요금 면제) 전면 확대 등
- 문제점 및 해결 : 관계기관 협의 난항 및 민원 발생 ⇒ 지속적 협의 및 서비스 개선
- 평　　가 : 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현상을 일부 완화하였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선버스 운수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2019년 7월 1일부터 경기 시내버스 업계는 운수종사자의 최대 근로 가능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행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시·도에 당시 운송수준을 유지하도록 운전자 채용·유지노력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당시 경기도 시내버스 업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격일 근무제로 1일 17시간 동안 근무하던 체제(1일 1대당 1명 근무)를 매일 1일 8시간 근무체제(1일 1대당 2명)로 변경하고, 신규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사업자 측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다.

또한 2015년 7월 시내버스 요금인상 이후 약 3년간 지속적으로 유류비, 최저임금 등 제반 비용이 증가하여 운송수지가 악화된 상황에서 버스업계는 추가 인력채용 비용을 감당

할 수 없어, 2018년 9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통하여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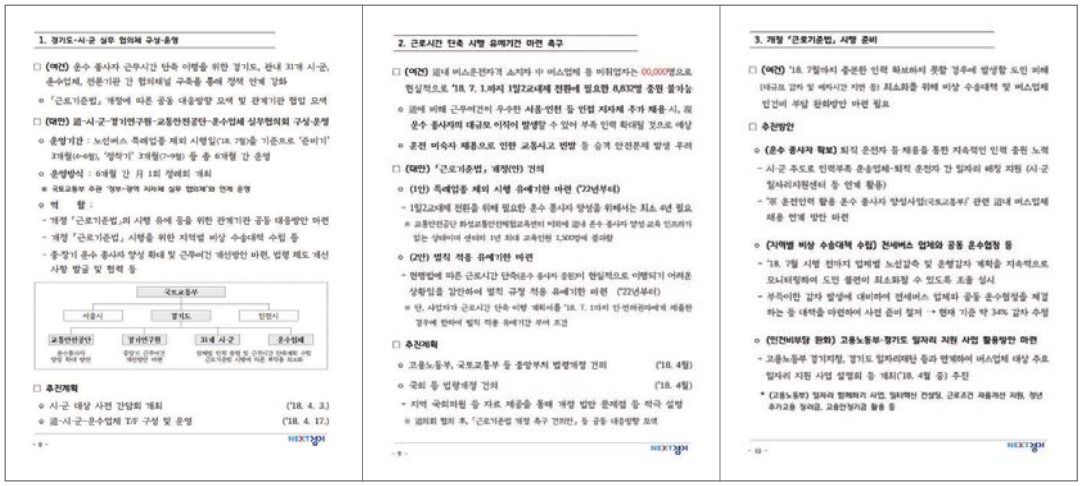
결국 2019년 9월 28일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교통비 부담은 경기 시내버스 이용객 중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요금 인상과 동시에 기존에 일부 노선 및 승객에게만 적용하던 취약계층 요금 할인 · 면제지원을 전면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道 버스요금 인상 협의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및 노선 감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경기는 별도의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요금인상 외 운영개선 지원금 확대, 운수종사자 양성사업과 연계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였다.

[표 113-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18.4.)



1. 경기도-시·군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 (여건) 운수 종사자 근무시간 단축 이행을 위한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운수업체, 전문기관 간 협의체널 구축을 통해 정책 안에 갈등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동 대응방향 모색 및 관계기관 협업 모색

□ (대안) 道-시·군-경기연구원-교통안전공단-운수업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운영기간 :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 시행일('18. 7월)을 기준으로 '준비기' 3개월(4~6월), '정착기' 3개월(7~9월) 등 총 6개월 간 운영
○ 운영방식 : 6개월 간 月 1회 정례회 개최
※ 국토교통부 주관 '경부-경력 지자체 실무 협의체'와 연계 운영
○ 역　　할 :
-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유예 등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방안 마련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위한 지역별 비상 수송대책 수립 등
- 중·장기 운수 종사자 양성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 법령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협력 등

국토교통부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교통안전공단 / 경기연구원 / 31개 시·군 / 운수업체

□ 추진계획
○ 시·군 대상 사전 간담회 개최 ('18. 4. 3.)
○ 道-시·군-운수업체 T/F 구성 및 운영 ('18. 4. 17.)

2.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기간 마련 촉구

□ (여건) 道내 버스운전자격 소지자 中 버스업체 등 미취업자는 00,000명으로 현실적으로 '18. 7. 1.까지 1만2교대제 전환에 필요한 8,832명 충원 불가능
○ 道에 비해 근무여건이 우수한 서울·인천 등 인접 지자체 추가 채용 시, 道 운수 종사자의 대규모 이직이 발생할 수 있어 부족 인력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운전 미숙자 채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빈발 등 승객 안전문제 발생 우려

□ (대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의
○ (1안) 특례업종 제외 시행 유예기한 마련 ('22년부터)
- 1일2교대에 전환을 위해 필요한 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해서는 최소 4년 필요
※ 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외에 道내 운수 종사자 양성교육 인프라가 없는 상태이며 센터의 1년 최대 교육인원 1,500명에 불과함
○ (2안) 법적 적용 유예기한 마련
- 현행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운수 종사자 중心)이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법적 규정 적용 유예기한 마련 ('22년부터)
※ 단, 사업자의 근로시간 단축 이행 계획서를 '18. 7. 1.까지 단전버전하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적 적용 유예기한 부여 조건

□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법령개정 건의 ('18. 4월)
○ 국회 등 법령개정 건의 ('18. 4월)
- 지역 국회의원 등 자료 제공을 통해 개정 법안 문제점 등 적극 설명
※ 協의회 후,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공동 대응방안 모색

3.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준비

□ (여건) '18. 7월까지 충분한 인력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도민 피해(대규모 감차 및 배차시간 지연 등) 최소화를 위해 비상 수송대책 및 버스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안
○ (운수 종사자 확보) 퇴직 운전자 등 채용을 통한 지속적인 인력 충원 노력
- 시·군 주도로 인력부족 운송업체-퇴직 운전자 간 일자리 매칭 지원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등 연계 활용)
- "퇴 운전인력 활용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국토교통부)" 관련 道내 버스업체 채용 연계 방안 마련
○ (지역별 비상 수송대책 수립) 전세버스 업계와 공동 운수협정 등
- '18. 7월 시행 전까지 업계별 노선감축 및 운행감차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율 실시
- 부득이한 감차 발생에 대비하여 전세버스 업계와 공동 운수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사전 준비 철저 → 현재 기준 약 34% 감차 추정
○ (인건비부담 완화) 고용노동부-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용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등과 연계하여 버스업체 대상 주요 일자리 지원 사업 설명회 등 개최('18. 4월 중) 추진
* (고용노동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안정지원 활용 등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합의

시 2018년 12월까지 운임체계 현실화 등 노선버스 사업자의 적정 수익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로 2019년까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도록 요청하였다.

경기도는 63개 업체의 운송수지 자료를 검증하고, 도의회 동의를 얻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서울 · 인천과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운영하여 수도권 지역의 동시 요금인상이 필요한 점을 들어 2019년 요금 인상이 불가함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9년 요금 인상을 계속해서 요구하였다. 2019년 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대신 국토교통부는 단계적으로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행정 · 재정적인 부담을 전담할 것과, 벽지 공영 차고지 건설비 지원 등 경기도가 요구하는 경기 시내버스 사무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2)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요금인상안 확정

개정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하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당시 운송수지를 분석한 회계자료 및 향후 추가 인력채용에 따른 예상 비용을 반영하여 2018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제출하였다.

* 일반 414원, 직행좌석 941원 등 인상 요구

경기도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 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조합에서 제출한 요금 인상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요금인상 검증용역('18.10. ~ '19.5.)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조합에서 요구한 요금 수준보다 합리적인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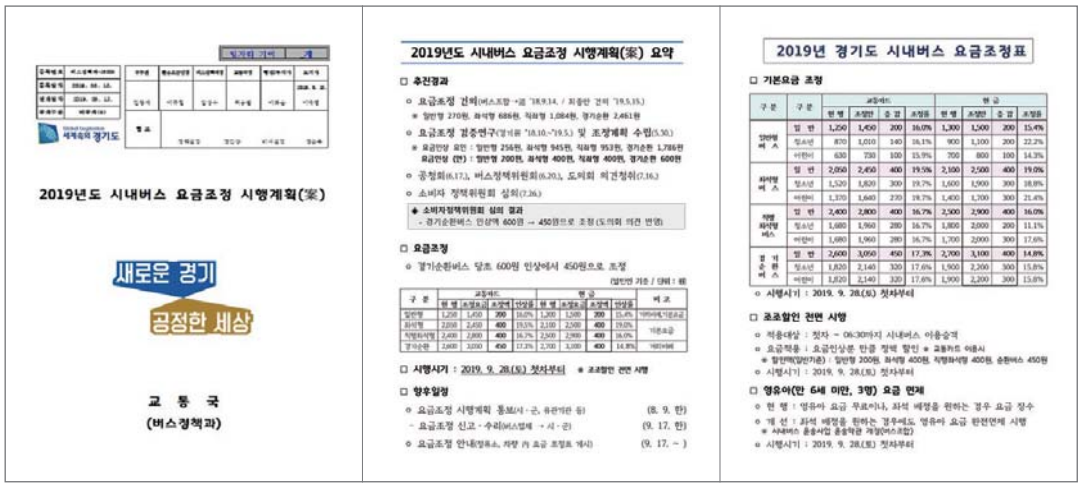
* 일반 200원, 좌석·직행좌석 400원, 경기순환 600원 인상 계획

아울러,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시행하는 지역 중 경기도만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할 시, 수입증가분이 다른 시행기관(서울, 인천, 전철기관)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예외적 정산기준*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요금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데 따른 버스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금증가액은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업체에서 선취

아울러 요금인상과 관련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 버스정책위원회, 도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19.6. ~ '19.7.)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버스 서비스 개선대책 수립, 경기순환형 버스 요금 상승폭 인하 등 요구를 반영하여 2019년 9월 최종 요금인상안*을 시행하게 되었다. *일반 200원, 좌석·직행좌석 400원, 경기순환 450원 인상 확정

[표 113-2] 2019년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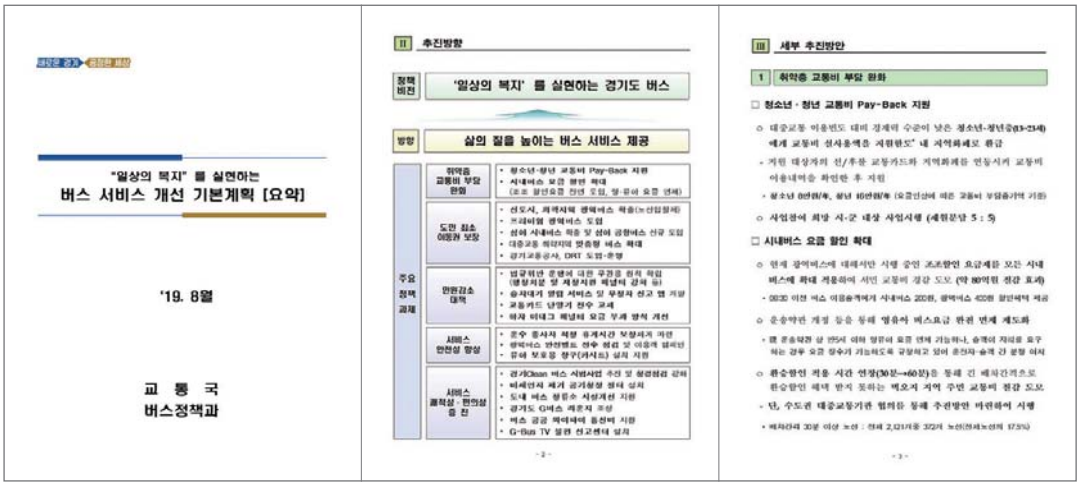
3)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 수립·시행

요금인상 관련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2019년 8월 경기도는 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버스 서비스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할 사회적 취약계층(조조탑승객, 영유아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할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새벽시간대 탑승객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도권 내 타 지자체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버스 노선에 조조할인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경기도 시내버스 조조할인을 확대 시행해달라

는 민원이 많았다.

[표 113-3] 2019년도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계획



"일상의 복지" 를 실현하는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 [요약]

'19. 8월

교 통 국
버스정책과

Ⅱ 추진방향

정책비전 | '일상의 복지' 를 실현하는 경기도 버스

방향 | 삶의 질을 높이는 버스 서비스 제공

주요 정책 과제

-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 청소년·청년 교통비 Pay-Back 지원 • 시내버스 요금 할인 확대 (조조 할인요금 전면 도입, 영·유아 요금 면제)
- 도민 접근 여건 보장: • 신도시, 외곽지역 광역버스 확충(노선입점제) •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 심야 시내버스 확충 및 심야 공항버스 신규 도입 • 대중교통 취약지역 맞춤형 버스 확대 • 경기교통공사, DRT 도입·운영
- 만원감소 대책: • 입금위반 운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행정처분 및 재정지원 복넣제 감액 등) • 승차대기 앱힘 서비스 및 무정차 신고 앱 개발 • 교통카드 단말기 정수 교체 • 하차 미태그 복넣제 요금 무과 방식 개선
- 서비스 안전성 향상: • 로수 중심지 체정 유계시간 도정과지 마련 • 광역버스 안전벨트 전수 점검 및 이용객 홍보단 • 급정 모포등 장구(카시트) 설치 지원
- 서비스 품질성·편의성 증진: • 경기Clean 버스 시범사업 추진 및 청결점검 강화 • 버세인지 제거 공기청정장 장착 실시 • 도내 버스 정류소 시설개선 지원 • 경기도 G-버스 캐릭터 주정 • 버스 공공 책어태어 등선버 지원 • G-Bus TV 실증 선고센터 설치

Ⅲ 세부 추진방안

1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 청소년·청년 교통비 Pay-Back 지원

○ 대중교통 이용빈도 대비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청년층(13-24세)에게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원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 지원 대상자의 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시켜 교통비 이용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

- 청소년 8만원/年, 청년 10만원/年 (요금단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증가액 기준)

○ 사업장이 희망 시·군 대상 사업시행 (예정분담 5 : 5)

□ 시내버스 요금 할인 확대

○ 현재 광역버스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조조할인 요금제를 모든 시내버스에 확대 적용하여 서민 교통비 경감 도모 (약 80억원 절감 효과)

- 0830 이전 버스 이용승객에게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50원 할인액적 적용

○ 운송약관 개정 등을 통해 영유아 버스요금 완전 면제 제도화

- 현 운송약관 상 25시 이하 정류이 요금 면제 가능하나, 승객이 자리를 요구하는 경우 요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실이 운전자·승객 간 분쟁 해지

○ 환승할인 적용 시간 연장(30분→60분)을 통해 긴 배차간격으로 환승할인 혜택 받지 못하는 백오지 지역 주민 교통비 절감 도모

- 단, 수도권 대중교통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 마련하여 시행

- 배차간격 30분 이상 노선 : 전체 2,021개중 322개 노선(전체노선의 17.5%)

또한 영유아 승객의 탑승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유아 승객이 좌석 요구 시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다.

경기는 조조할인 및 영유아 요금 면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를 추진하였다. 2019년 9월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여 영유아 3인까지 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조할인 시행 노선을 확대*하였다.

* 前 직행좌석형 → 後 모든 노선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2019년 9월 28일 조조요금 및 영유아 요금 할인 및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도록 요청하는 민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 면제 및 할인에 소요되는 요금수입금 손실은 전부 시내버스 업계에서 부담하고 있어, 관련 사업 신설 시 경기도 및 산하 시·군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교통비 할인을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승객이 증가하여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시행하는 타 시행기관 역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타 시행기관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통합요금제 개선을 통한 환승손실금 비용 감축과 이익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기관 간 조정 업무를 신설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버스 요금 인상부터 서비스 개선대책 추진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협의하는데 난항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협의 가능한 절충안을 도출하여 요금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일부 완화(조조할인 혜택 : 年 약 80억 원)할 수 있었다.

향후 단순한 취약계층 요금 지원을 넘어서, 경기도는 광역버스 이용객이 더욱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향후 광역버스 국가 사무 전환 시 준공영제를 확대하도록 협의를 추진한다면, 서울 · 인천 등 타 지자체 진출입 노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노선 계획 · 관리를 통해 우회노선 등 현재 노선의 문제점이 대폭 개선되어 경기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14. 하남선 복선전철 1단계 차질없는 개통

철도건설과 철도건설3팀장 표명규

- 추진배경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등 수도권 남동부 광역교통수요 적극 대응
- 추진내용 : 지하철5호선 하남지역 연장(L=7.7㎞, 정거장 5개소)
- 문제점 및 해결 : 관계기관 간 주기적 협업 · 논의를 통해 적기 사업 추진
- 평　　가 : 광역철도 사업 착수~개통까지 최단기간 완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 남동부에 위치한 하남시는 서울시와 연접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이 지속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광역교통을 연결하는 대규모 교통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하철5호선 연장 계획이 반영(2009년)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2011년, B/C=1.02) 및 기본계획 고시(2013년, 국토교통부)를 통해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

[표 114-1]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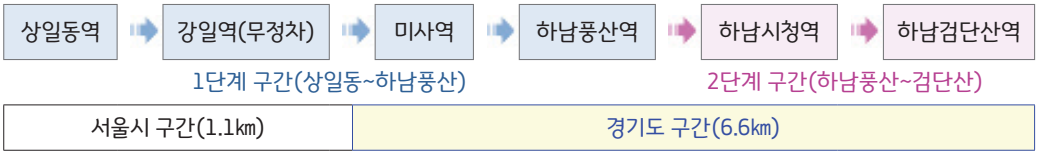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지방자치단체 주도 최초이자, 경기도 첫 번째 시행 광역철도사업

그동안 광역철도사업은 정부 주도아래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여 왔으나,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및 서울시)가 주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큰 의미가 있다.

[표 114-2]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하남시 창우동 일원(L=7.7㎞, 정거장 5개소)



○ 사업기간 : 2013년~2020년

○ 사 업 비 : 9,787억 원(국비 3,962 / 지방비 2,528 / LH분담금 3,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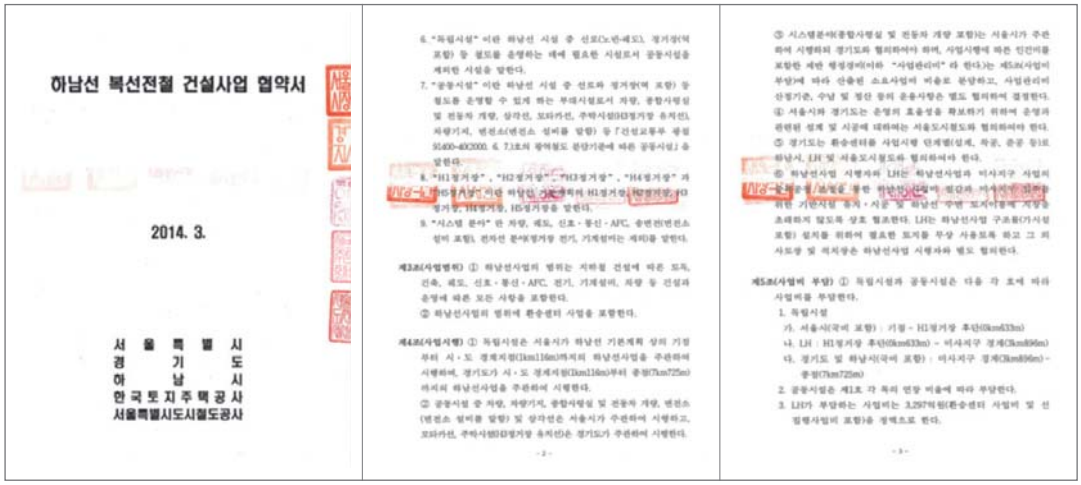
○ 시 행 자 : 경기도 및 서울시

또한, 경기도는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첫 번째로 광역철도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개통까지 이르는 사업추진능력을 인정받아 별내선(8호선 연장), 도봉산~옥정선(7호선 연장) 및 옥정~포천선(7호선 연장)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되게 되었다.

2) 사업 추진 분담방안 협약

지금까지 경기도 대규모 시행 주요사업은 토목, 건축부분으로 철도사업의 주요부분인 궤도, 차량, 신호, 통신 등의 경험은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에 각 기관의 업무분담을 사전 협의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표 114-3]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2014년)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

2014. 3.

서 울 특 별 시
경 기 도
하 남 시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3) 철도사업 착공 이후 5.6년만의 완공과 1단계 개통

철도사업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비용, 다분야(토목, 전기, 신호, 통신, 궤도, 차량, 전차선 등) 참여 및 종합시험운행이라는 타 사업보다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관계기관과 분야간 인터페이스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돌아가야 차질 없는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하남선은 지하철5호선 연장 구간으로 신설노선과는 상대적으로 노선길이, 차량기지 공사 등이 없어 여건이 용이할 수는 있으나, 중전철 철도사업이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5.6년 만에 개통까지 이룬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표 114-4] 최근 철도사업 개통까지 소요기간 비교

○ 지하철5호선 연장(하남선1단계) : **'15. 3월 ~ '20. 8월**(3공구 우선 착공 '14. 6월)
○ 지하철9호선 3단계 : **'09.12월 ~ '18.12월**
○ 김포 골드라인(경전철) : **'14.3월 ~ '19.9월**
○ 지하철4호선 연장(진접선) : **'14.12월 ~ '21.5월(예정)**

[사진 114-1] 미사역 승강장

[사진 114-2] 하남풍산역 대합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하남미사 입주 시기를 고려한 다소 무리한 계획 수립

그동안 정부 주도의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교통기반시설 확충 지연을 해소하고자 하남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개통하도록 계획하였다.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입주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2021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미사 구간이 포함된 하남선 1단계 구간은 2018년 12월, 2단계 구간은 2020년 12월로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2014년~2018년까지 설계부터 개통까지의 과정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지역주민의 상당한 민원만 유발된 것도 현실이다.

2) 구간별 현장 여건에 따른 공정 불일치

하남선 1단계 구간은 서울시와 경기도 구간으로 포함되어 각각 착공 추진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굴착지연으로 경기도 구간과 상당한 공정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후 서울시 지역주민의 동시개통 요구에 따른 개통 일정 협의에 상당한 진통이 발생하였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수천억을 투입한 기반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어 사회적 기회비용이 상실되지 않도록 서울시 구간 무정차 개통(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2019년 2월 최종 협의되었다.

3) 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지속 협의 노력

차질 없는 공정 관리를 위해 공사 착수부터 개통 시까지 경기도 및 관계기관은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경기도 주관 공정회의 30회, 관계기관 현안회의 27회 등 보다 빠르고 안전한 시행 방안을 즉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해 왔다.

* 현안 참여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 서울시, 하남시, 서울교통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첫 번째 광역철도 사업으로써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공사 추진, 민원 사례, 철도종합시험운행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 등 착공에서 개통 시까지의 일련의 절차와 과정들이 있었다. 이는 앞으로 경기도 철도사업의 표준모델이자 보다 더 발전된 방향을 제시할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에, 하남선 사업을 백서로 제작 · 관리하여 앞으로 있을 사업에서 동일한 문제 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보완 ·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하우 공유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향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역사를 구상하여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115. 경기교통공사 설립 절차 매듭-새로운 교통질서 구축

광역교통정책과 교통평가팀장 김영의

- 추진배경 :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에 부응하는 맞춤형 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구축, 철도 안전 운행을 위한 광역교통전담기구 필요
- 추진내용 : 새경기 대중교통플랫폼인 경기교통공사 설립으로 교통정책의 공공성, 혁신성 강화
- 문제점 및 해결 : 광역도 차원에서 처음 설립 시도 하는 "교통공사" 로서 도-시군-공사의 역할 정립 필요
- 평　　가 : 공사 설립 시 도민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 예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는 도시, 농촌, 도농복합도시 등 다양한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하 교통전담기구가 없다 보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행 감축, 친환경교통수단 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 3기 신도시 지정 등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 스마트교통(MaaS) 등 대중교통 안팎의 여건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민간업체의 수익성 위주 버스 노선 운영은 효율성은 있으나, 노선사유화로 인한 굴곡 · 비효율 노선조정의 애로, 재정지원금에 대한 투명성 부족, 안정적 운송서비스 구현 등 공공재로서의 기능은 부족하였다.

이러한 버스 민영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경기도형 공공버스(노선입찰제 기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성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2·3기 신도시 광역교통난이나, 대중교통 부족 지역 도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C-19 비상 상황으로 인한 버스 운행 감축에 대비하고자 맞춤형 신교통수단(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투입 · 운영도 검토 중에 있다.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면, 버스 민영제 + 공영제의 상생 · 경쟁이라는 새로운 교통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철도 분야를 살펴보면, 하남 · 별내선 등 광역철도 연장선, 용인 · 김포 경전철뿐 아니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는 신규 추진될 도시철도 노선만 9개가 계획되어 있어 경기도 철도 구축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철도 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과거에는 새로운 철도를 유치하고 건설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계획된 노선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철도노선의 운영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경기도의 인접 지역인 서울시와 인천시는 오래전부터 철도공사를 만들어 철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관련 조직이 없어 서울교통공사나 민간철도 운영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위탁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관리나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철도안전운행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철도안전운행,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 등 전문적 철도운영기관인 경기교통공사 설립이 절실한 이유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교통공사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타당성 검증 완료('19.7.~'20.2.)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운영도모를 위해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주요 과업내용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수지분석(B/C

분석 등), 설립형태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적정 자본 및 가용 투자재원 분석 등이다. 2020년 2월 “경기교통공사 설립은 타당성이 있음”이라는 결과를 획득하였다.

[사진 115-1] 용역 결과보고회 및 용역 준공 사진 대지

2) 경기교통공사 설립 주민공청회 개최(’20.4.)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2에 따라 교통공사 설립 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2020년 4월 17일에 경기도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행사 대응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자 최소화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및 실시간 의견수렴을 병행하였다. 교통국장, 도의원, 학계 위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고, 온라인을 통해 주민, 시군 공무원, 조합, 유관기관 등이 255명이 참석하여 경기교통공사 설립(안)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토론자들과 방청객은 교통공사의 설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교통공사에 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적 책임성 강화와 예산투입, 버스와 철도, GTX나 새로운 교통수단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였다.

[사진 115-2] 경기교통공사 설립 주민공청회

3) 행정안전부 공기업설립 최종 협의완료('20.5.)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는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수행과 함께 지자체가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이다. 2020년 5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심의를 위한 "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 위원들도 경기교통공사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며, 타 교통공사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 및 인력 운용 보강,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수립 등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설립 동의 확보로 경기교통공사 연내 출범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4) 경기도 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 - 설립 찬성 의결('20.6.)

'경기교통공사'의 설립(안)이 2020년 6월 8일 열린 '경기도 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연내 출범을 목전에 두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모여 적정성, 타당성, 충실성, 수익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교통공사 설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종합 판단하는 절차다.

설립(안)을 살펴보면, 자본금은 총 185억 원으로 도가 전액 출자할 방침이다. 설립형태는 서울 · 인천 · 부산 등 타시도 교통공사 사례와 같이 '지방공사' 형태이며, 조직구성은 1본부 5부서(경영지원부, 버스운영센터, 준공영운영부, 교통시설부, 철도운영부)이다.

[사진 115-3] 경기도 공기업 설립 심의 위원회

5) 경기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20년 6월 24일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어 공사 설립 및 출자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는 총 6장 37조 부칙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사수행 사업 ▲재무회계 기준 ▲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 · 감독 사항이 있다.

더불어, 2020년 교통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185억 원을 편성하는 출자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로 금년 9월 추경에 공사 출자금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및 출자동의안 의결은 민선7기 역점공약으로 2018년 말부터 시작한 공사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이래 경기도가 추진해온 교통 공사 설립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승인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도 - 교통공사 - 시·군 협업시스템 구축

경기교통공사가 설립 된다면 광역 도차원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그만큼 도-공사-시군의 역할분담과 협업이 큰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결정을 위해 시·군 공모를 진행 중이다. 입지환경 뿐 만 아니라, 시군과 교통공사의 협업계획이 주요 평가요소로 하고 있다. 공사는 도와 서울 등 수도권, 시군간의 광역 교통문제 해결에 먼저 집중하되, 다양하고 복잡한 경기지역 환경에 맞추어 도-교통공사-시·군과의 통합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협업모델 및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2) 버스 민영제, 준공영제와 공영제의 조화 - 新 교통질서 구축

공사 설립 후 3가지 제도가 동시에 병행되기는 어렵다. 경기도 버스체제는 수십 년간 재정지원형 민영제가 그 근간이기 때문이다. 노선입찰제에 기반한 준공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재산권인 버스 노선권 확보 등 애로 사항이 존재한다. 먼저 교통공사 설립 후 준공영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투입으로 교통 수요와 공급 불균형 지역에 투입하여 준공영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일부 지역(신도시 등)에는 버스 노선 직영 도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구현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3) 철도운영 선발주자의 독과점 시장

철도 운영기관은 독과점 시장으로 이미 서울, 인천 교통공사라는 선발주자들이 도내 철도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에 경기교통공사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장 필요한 철도 운영 협상단, 위탁 운영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 및 경쟁력을 키워 향후, 새롭게 위탁 계약이 도래하는 도내 철도부터 시장에 뛰어 들어 선발주자들과 경쟁하고자 한다. 도지사, 시장 · 군수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도내 철도는 경기교통공사

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 평가 및 기대효과

타 광역시(7개시)에서는 철도중심의 도시철도공사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로 먼저 출범하고 향후, 시군 철도 위탁운영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공공성에 기반한 안정적 운송 서비스 구현, 원가산정심의회에 기초한 투명성 확보 등 재정지원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다. 지하철, 버스, 택시, 경전철, 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 통합관리 및 편리한 환승체제 구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116. 경기도 320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택시교통과 교통복지팀장 김중억
버스정책과 서비스개선팀장 유수남

- 추진배경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 보장
- 추진내용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 운영
- 문제점 및 해결 : 특별교통수단 광역운영 한계에 대한 기준 마련
- 평　　가 : 안전 ·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5~9세), 영유아 동반자(0~4세 인구로 추정),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2015년 298만3천여 명(전체 23.8%)에서 올해 326만4천여 명(전체 24.4%)으로 28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362만5천여 명(전체 26.1%)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권 ·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 도입 및 확대가 요구되며, 그 일환으로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민선7기 도정 공약사항으로 2022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116대를 도입 · 운영하고, 저상버스를 매년 120대 도입하여 임기 내 480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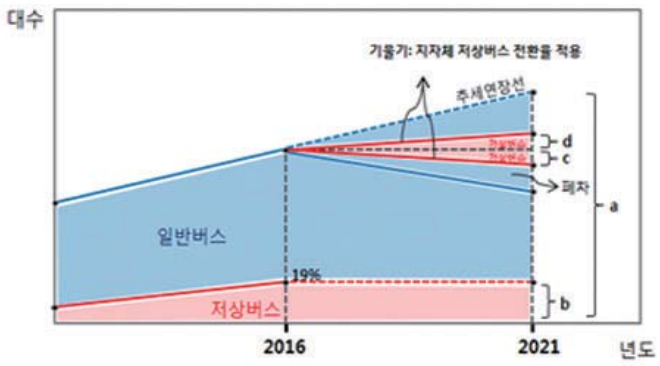
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1,101대, ’20.6.)

현재 경기도는 민선7기 도정공약인 특별교통수단 확보 목표(1,116대) 대비 98.7%까지 이행하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를 위해 도는 시 · 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도입 비용은 30~70%, 운영비용은 기본 10%를 지원하되, 광역이동 기준(버스수준 요금, 24시간 운영, 즉시콜 제공, 수도권 운행 등)을 만족하는 시 · 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를 지원하고 있다.

2) 저상버스 도입·운영(1,493대, ’20.6.)

저상버스 보급률은 현재 19.6%이며, 2024년 48.9%(3,737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을 위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대당 연5백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지원(대당 1천만 원) 등을 시행하고 있고, 인센티브 지급 기준(운행실적 평가) 등을 마련하였다.

[표 116-1]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 산정 방법론



저상버스 보급 목표치 (%)

$$= \frac{b+c+d}{a}$$

a : 시내버스 대수
b : 기존 저상버스 대수
c : 일반버스 폐차대수 중 저상버스 전환대수
d : 신규도입 차량 중 저상버스 도입대수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시 · 군별 재정 등 행정환경의 차이로 운행지역, 요금, 이용대상자 등의 운영기준이 상이하여 특별교통수단 광역운영에 한계가 발생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이동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시 · 군에 대하여 운영비 10% 추가지원, 「시 · 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 조례(안)」 마련 · 시달 등을 통한 광역통합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 · 군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회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이용 접근성을 강화를 위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로써, 민선7기 도정 공약사항의 원활히 추진하고 도민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입 · 운영비 투자가 요구된다.

[표 116-2]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운영 지원 관련 법령

항 목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저상버스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제2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내 시·군이 도입·운행하여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교통 수단의 도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117.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공공버스과 공공버스운영팀장 김정권

- 추진배경 : 공약 208번,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 도입
- 추진내용 : 광역버스 노선입찰제(한정면허) 전면 확대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서울시의 노선신설 부동의에 따른 노선신설 어려움
- 평　　가 : 기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보다 좋은 호응을 얻으며 단계적 확대 추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과거 우리나라의 버스교통은 민간이 버스노선을 소유하고 수익성 위주로 노선을 계획, 운영, 관리하였다.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간 버스서비스 불평등, 경쟁력 악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에, 2004년 서울시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노선을 계획 · 관리하고 민간의 버스운영 경험을 접목한 '수입금공동관리방식 준공영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광역시와 제주도까지 이를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금공동관리방식 준공영제'는 공공주도의 노선계획 · 관리로 버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지원 증가, 재정지원의 투명성, 민간의 노선권 인정에 따른 감차 어려움, 버스업체의 서비스개선 노력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7기에 들어와 버스교통을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적지원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감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수입금공동관리방식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노선입찰방식 준공영제'(이하, '경기도 공공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한정면허를 기반으로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노선을 계획 · 관리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운송사업자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체계적인 서비스평가가 가능해지며 버스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버스 운영체계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효율적·체계적인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을 위한 기관별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공공버스' 도입으로 공공의 역할이 기존의 노선 인 · 면허 관리에서 노선의 계획 · 관리, 제도운영까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과 관련한 노선입찰, 운송원가 산정, 운송비용 정산, 서비스평가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행정기관에서 이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진 117-1]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및 경기교통본부 개소식

이에 경기도, 시 · 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는 추진계획 수립 및 기준마련, 시 · 군은 면허발급과 노선관리, 경기도시공사는 노선입찰, 운송비용 정산, 서비스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 2020년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대상노선 선정

2020년 경기도 공공버스의 목표는 36개 이상의 노선 운영이다. 새로운 제도가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첫 해인 만큼 2020년도의 경기도 공공버스의 운행은 시범사업과 2020년도 1차 사업의 두 갈래로 구성된다. 시범사업으로 안정적인 첫 발을 뗀 후 2020년도 1차 사업 운행이 시작되는데, 이를 위해 시 · 군 및 버스업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평가를 거쳐 2020년 사업대상 22개 노선 177대를 선정하였다.

[표 117-1] 대상노선 선정절차

대상노선 수요조사	⇒	노선발굴 (신규, 반납)	⇒	시군협의 (노선,재정)	⇒	대상노선 선정	⇒	사업계획 협의	⇒	사업노선 확정
道→시·군		시·군		관할시·군		道 (버스정책위원회)		道, 시·군		道

3) 경기도 공공버스 시범사업 노선 운행개시

2018년 12월 '경기도 공공버스' 시범사업 대상노선으로 선정된 16개 노선은, 2019년 노선입찰을 통한 운송사업자 선정과 운행준비를 거쳐 2020년 3월 용인을 기점으로 하는 7007-1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하였다.

그 간 시범사업노선 운행을 위해 급행노선으로 운영, USB충전포트, 공기청정필터 설치, 공공와이파이 제공 등 차량의 고급화 등, 친절기사 인증제 도입 등 차별화된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경기도 공공버스가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도민들에게 경기도 공공버스 운행개시를 알리기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 블로그, 현수막, G버스TV, 라디오 스팟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다. 2020년 5월 18일에서 6월 12일에 걸쳐 진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기존의 광역버스 노선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7-2] 2020년 사업대상(22개 노선 177대)

구분	시·군명	연번	노선유형	기종점		운행대수	서울시 협의대상
				기점	종점		
				11개 시·군, 22개 노선		177대	16노선
1	파주시	1	신설	운정	공덕역	12	○
2	화성시	1	신설	오산역	상갈역	5	×
3		2	신설	향남2	강남역	7	○
4		3	신설	화성시청	강남역	7	○
5	광주시	1	반납	의정부	수원	10	○
6		2	신설	고산지구	잠실역광역환승센터	8	○
7		3	신설	관음리	서울역	8	○
8	이천시	1	신설	이천터미널	강남역	10	○
9	용인시	1	신설	남사아곡	서울역	10	○
10		2	신설	남사아곡	잠실역광역환승센터	10	○
11		3	신설	서천지구	서울역	8	○
12		4	신설	서천지구	잠실역광역환승센터	8	○
13		5	신설	동백지구(초당역)	잠실역광역환승센터	6	○
14	광명시	1	신설	KTX광명역	강남역	10	○
15	수원시	1	반납	수원남부공영차고지	사당역(一인덕원)	2	×
16	김포시	1	반납	유현마을	영등포신세계	6	×
17		2	반납	양곡차고지	합정역	8	×
18		3	반납	대명항	영등포신세계	10	×
19	안성시	1	신설	공도시외버스터미널	양재역	2	○
20	의정부시	1	신설	경기도청북부청사	잠실광역환승센터	10	○
21	의왕시	1	신설	월암공영차고지	서울역	10	○
22	의왕시	2	신설	월암공영차고지	광명역	10	×

[표 117-3] 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종합만족도	안전운행	서비스친절	차량관리	이용편의	만족도
경기도 공공버스(A)	85.0점	88.2점	89.3점	87.1점	81.1점	83.9점
수입금공동관리형(B)	79.3점	85.5점	82.6점	77.8점	76.7점	78.4점
차이(A-B)	5.7점	2.7점	**6.7점**	**9.3점**	4.4점	5.5점

버스에 대한 중요 가치 인식	
공공성 중요	시장자율성 중요
73.2%	19.1%

준공영제 유형별 적절성	
경기도형이 더 적절하다	수공형이 더 적절하다
74.5%	25.5%

4) 2020년 1차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추진

2019년 11월 시 · 군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였다. 또한, 2020년 3월부터는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22개 노선 중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17개 노선의 확정을 위해 서울시와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고, 5월경 사업계획 협의가 마무리되었다.

협의결과, 서울시는 전체 17개 노선 중 7개 노선에 대해서만 동의하였다. 따라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9개 노선(신설노선 7, 반납노선 2)에 대하여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6월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작하였다.

서울시 협의 결과 부동의된 10개 노선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반납노선은 '코로나19'로 시작된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서울시의 노선신설 부동의에 따른 노선 신설 어려움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해 시 · 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노선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22개 노선이 선정되었다. 이중 서울을 종점으로 하는 신설노선은 15개 노선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시와 사업계획을 협의한 결과 서울시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나머지 8개 노선은 부동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동의한 7개 노선도 종점지를 서울시 외곽(양재역)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타 노선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동의한 것으로 순수하게 노선신설에 동의한 건은 없다.

서울시는 과거부터 서울역, 강남역, 사당역, 잠실역 등의 주요 도심지역의 교통혼잡과 정류소 용량 초과를 이유로 경기도 광역버스의 도심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2)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경기도 공공버스 전면 확대 검토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WHO의 팬데믹 선언은 우리나라에 경제위축을 가져왔고, 경기도 버스업계 또한 버스이용객 급감으로 인해 엄청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수입금이 30~40% 이상 급감함에 따라 버스업체는 자구책으로 운행차량 감축에 들어갔고 심지어는 노선을 휴업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버스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반면, 서울, 부산 등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노선은 지자체의 지원으로 수입금 급감에도 불구하고 기존 버스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존에도 수익구조가 취약한 기존 광역버스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우선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반납의사를 조사한 결과, 광역버스 노선의 94%를 반납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사업 추진의 성공을 전망케 하는 유의미한 결과이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존 버스운영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체 대응만으로는 정상적 운영이 어려움을 실감한 것이다.

'코로나19'는 그간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기존 노선에 대한 공공의 노선권 확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는 이처럼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중교통 기반을 구축하여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높이고자 한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2020년 3월에 출발한 '경기도 공공버스' 시범사업 노선은 안전운행, 친절서비스, 차량관리 등의 부분에서 기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보다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로써 노선입찰제형 운행체계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제 경기도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의 점유율을 확대하여 단기적으로는 '21년까지 도 내 광역버스의 76.1%를, 중장기적으로는 25년을 전후하여 모든 광역버스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대변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버스행정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기도 공공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생태계의 대변혁은 점점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서도 대중교통으로서의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버스체계를 다잡아가며, 도민에게 업그레이드 된 버스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18.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도로안전과 보행교통팀장 김중억

- 추진배경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소지자 교통사고 증가
- 추진내용 :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진반납 시 지역화폐(10만 원) 제공
- 문제점 및 해결 : ’20년 신청자 증가로 예산부족으로 추경 편성 추진
- 평　　가 : 목표 조기달성, 향후 ’21년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편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74만 명)는 전체 면허소지(854만 명)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16%(101명)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631명) 대비 2배 수준이다. 또한 지난 3년간 도내 전체 교통사고는 0.9% 증가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7.3% 증가했고, 동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3%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0.9% 감소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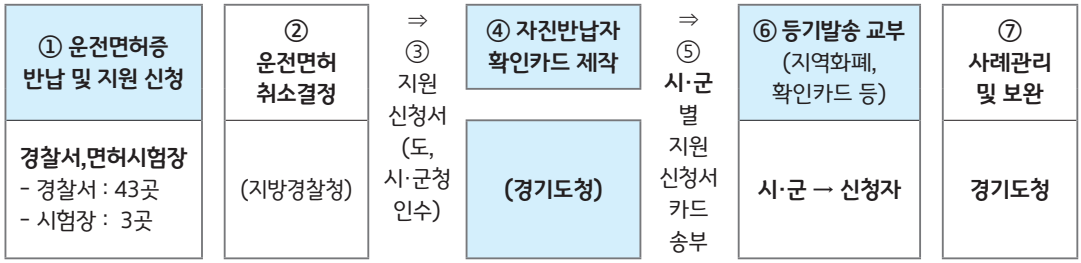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시,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하여 자진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 3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8월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 9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요령 마련

경기도는 시 · 군, 경찰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추진목적과 정의, 기관별 역할,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담은 추진 요령을 마련하였다. 이후 사업시행 이전에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다.

[표 118-1] 반납 및 지원 절차도



[표 118-2] 반납 및 지원 단계별 주요 내용

단 계		내 용
1.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지원사업 신청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서식1)
2. 자진반납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리	지방경찰청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
3. 지원신청서 송부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 지방경찰청 ⇒ 경기도청	○ 지원신청서 송부 (서식 2)
4. 자진반납자 확인카드 제작	경기도청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확인하는 카드 제작(시군별 연번 포함)
5. 지원신청서·자진반납자 확인카드를 시군별 송부	경기도청 ⇒ 시·군청	○ 지원신청서·자진반납자 확인카드 **시군에 송부**
6. 지역화폐와 자진반납자 확인카드 등을 등기우편 발송	시·군청 ⇒ 자진반납자	○ **지역화폐와 자진반납자 확인카드**를 자진 반납자에게 **등기우편 발송**(지원자 명단관리)

2)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경기도는 2019년 8월 도의회, 경찰, 시 · 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시민단체 등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전에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도모했다.

각 기관들은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자진반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장비 · 인력 · 물자에 대한 상호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만들기에 함께 힘쓰기로 약속했다.

[사진 118-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19.8.29.)

3) 자진반납자 목표 조기달성

사업시행 2달여 만에 1만 명이 반납하였고, 6개월 만에 2만 명이 반납하여 당초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이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신청서까지 원스톱으로 접수가 가능해 반납자 편의를 고려한 사업추진 방식이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8월부터는 주민등록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도 운전면허 반납이 가능해졌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당초 사업계획 보다 많은 자진반납으로 인해 예산이 소진되어, 인센티브(지역화폐) 지원이 지연되는 시 · 군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반납자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2019년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9월 기준 2.9만 명이 반납하는 등 호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예산 편성은 금년 수요와 향후 예측치를 판단해 부족함 없이 편성하여, 반납자가 기다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발광형 표지 등)을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사고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3절 건강한 삶을 위한 깨끗한 환경 조성

119. 5등급 노후경유차 57% 감축

미세먼지대책과 운행차관리팀장 서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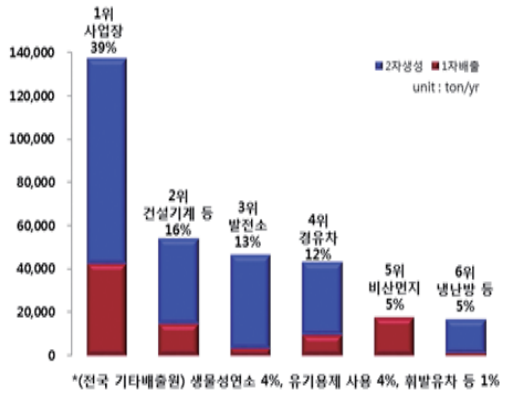
- 추진배경 :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유도
- 추진내용 : 5등급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한 보조금 증액 및 운행제한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지원예산의 증액을 통한 지원 강화
- 평　　가 : 2004년 시행 이후 연평균 저공해화 사업량의 6배 이상의 노후경유차 감축으로 약 1,700톤의 미세먼지 저감

가. 추진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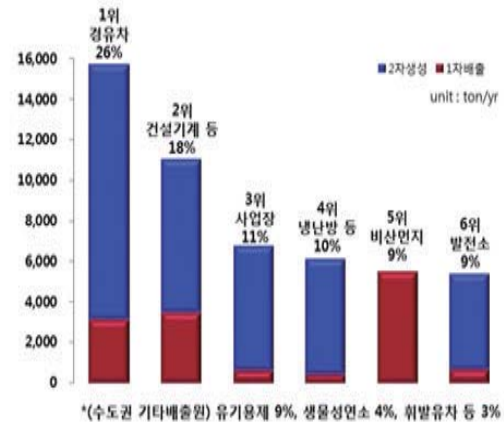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는 전국적으로 4위(12%)이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1위(26%)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노후차량인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건강위해도가 높아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정부 목표보다 높은 2021년까지 노후경유차 제로(ZERO)화를 목표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5등급 노후경유차를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다.

[표 119-1] 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 (자료출처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19.10.)



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 **<전국>**



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 **<수도권>**

또한, 경기도는 5등급 노후경유차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운행제한 제도는 해외에서도 핵심 대기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써, 1996년 스톡홀름을 시작으로 2017년 유럽에서만 264개 도시가 시행 중인 제도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5등급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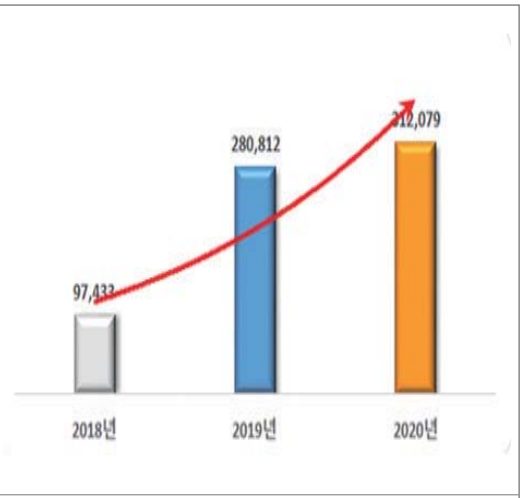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 지원정책으로는 차종에 따라 최대 300~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80% 이상 저감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저감장치 등)를 부착하는 경우 저감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있다. 이외에도 LPG차량으로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등이 있다.

경기도는 2018년 말 저공해화 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량 434,628대를 2021년까지 모두 저공해화하는 목표로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5등급 차량 12만 대에 2,808억 원을 지원하였다. 2020년은 3,121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13만 대에 해당하는 차량에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평균 저공해화 사업량의 6배를 넘어서는 실적이다.

경기도는 2018년 말 저공해화가 필요한 5등급 차량 43만 대를 2020년 6월말 18만 대로 57%를 감축하였고, 2020년 하반기 추경에 3천5백 대에 해당하는 예산을 정부에 추가 신청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표 119-2] 연도별 5등급 노후경유차 대수 및 예산 현황 '19.10.)

년도별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대수



년도별 저공해화 지원액(백만원)

2) 5등급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유도를 위한 운행제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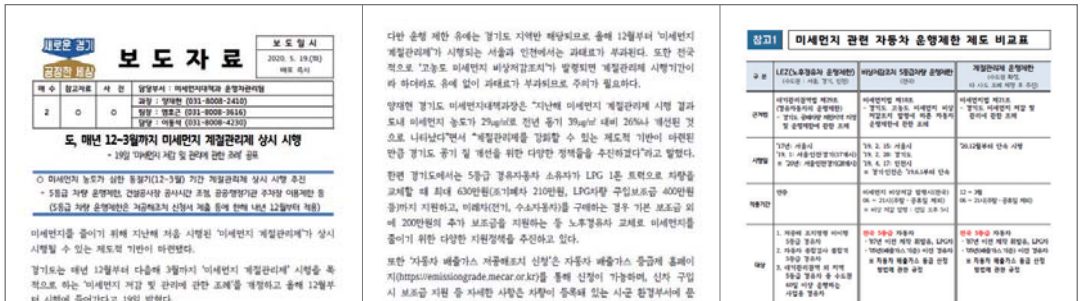
경기도는 5등급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Low Emission Zone),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은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도내 28개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을 위반하거나 배출가스 검사에 최종 불합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은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일 경기도내 초미세먼지(PM2.5)가 50㎍/㎥을 초과하거나 다음날 초과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등에 따라 국가재난상황에 해당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2020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기간(12~3월) 동안 전국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기도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 119-3] 계절관리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0. 5. 19.(화) 배포 즉시

책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운행차관리팀 과장 : 양재한 (031-8008-2410) 팀장 : 정호근 (031-8008-2616) 담당 : 이동석 (031-8008-4230)
2	○	○	

도, 매년 12~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시 시행

- 19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동절기(12~3월) 기간 계절관리제 상시 시행 추진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공공영업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등에 한해 내년 12월부터 적용)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상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공공영업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살수차, 진공 청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농업잔존물의 처리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물가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된다. 이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완료 후에도 약 13만대의 5등급 차량이 남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도 의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다만 운행 제한 유예는 경기도 지역만 해당되므로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서울과 인천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재한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 대비 26%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절관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30만원(조기폐차 21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 등)까지 지원하고, 미래차(전기,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노후경유차 교체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1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

구 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28개시 : 서울, 경기, 인천)	비상시(감조)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전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28개시 제외, 서울, 인천 포함)
근거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일	'17년 서울시 '19. 1. 15. 서울시 '19. 2. 28. 경기도 ※ '20년 : 서울·인천·경기	'19. 2. 15. 서울시 '19. 2. 28. 경기도 '19. 4. 17. 인천시 ※ 경기·인천은 '19.4.1부터 단속	'20.12월부터 단속 시행
적용기간	연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연중) 06 ~ 21시(주말 · 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 : 연일 초과 3시	12 ~ 3월 06 ~ 21시(주말 · 공휴일 제외)
대상	1. 저공해 조치명령 이사행 5등급 경유차 2. 저공사 운행금지 명령자 5등급 경유차 3. 배기량리터당 1ℓ 미만 5등급 경유차 중 수소전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경유차	연중 5등급 자동차 · 3년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 '05년이후제작+노후1~4단계 경유차 ※ 저공차 배출가스 등급 신청 방법제 관한 규정	연중 5등급 자동차 · 3년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 '05년이후제작+노후1~4단계 경유차 ※ 저공차 배출가스 등급 신청 방법제 관한 규정
제외차량	비상업차 루마이무	비상업차 루마이무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비교관차, SOFA차 등	비상업차 루마이무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비교관차, SOFA차 등
유예차량	1. 배연농도 10%이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비교 경제적용차 차량에 제한 및 차량에 관한 조례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20.12.31까지 유예)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비상업차 비제한, 업무용차 차량 ('21.3월까지 유예) ※ 이후 인한 등 미시도에서 운행차 제한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벌칙	1회 경고 (위반차 2번째 과태료)	10만원 이하 과태료(최대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최대 1회)

현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상시운행제한(LEZ)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자체

에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단속대상, 단속시기, 단속방법, 벌칙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9-4] 경기도 운행제한 개요

구분	상시운행제한(LEZ)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	**도내 5등급 경유차** 중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2.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차 3. 60일 이상 경기도를 운행하는 사업용지방등록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시기	연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21시(주말·공휴일 제외)	12~다음해 3월 06~21시(주말·공휴일 제외)
제외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등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등
유예	1.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화 신청 차량 ('20.11월까지)	저공해화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21.3월까지 경기도만 유예)
벌칙	1. 1차 경고 2. 2차부터 과태료 월 20만 원	과태료 1일 10만 원	과태료 1일 10만 원

3) 경유차 재구입 억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휘발유, LPG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오염물질 발생이 3~18배 많아 경유차를 재구입하면 발생원인은 줄지 않고 오염물질 발생은 지속된다.

이에 경기도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차 · 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도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792백만 원을 지원하여 7,132대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경유차가 아닌 전기, 수소 및 LPG 차량 등으로 구매되도록 유도하였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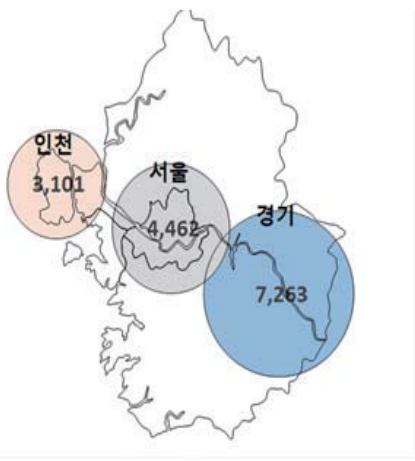
1)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등급 차량 등록대수

민선7기가 시작된 2018년 말 전국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300만 대로 이중 560만 대인 24%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다. 5등급 차량은 전국 258만 대 중 54만 대인 21%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 서울시의 2.2배, 인천시의 4.7배가 넘는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등급 차량 전체를 저공해화하기 위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7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지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표 119-5] 전국 5등급 차량 및 수도권 3개 시·도 저공해화 사업 예산

전국 5등급 차량 등록현황(대)



수도권 3개 시·도 저공해화 사업 예산(억원)

2) 2020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시 저공해미조치 차량의 대책

2020년 6월 말 경기도 내 저공해화가 필요한 5등급 차량은 18만 대로 저공해화 지원 등으로 2018년 말 대비 약 25만 대가 감소하였다. 감소된 5등급 차량 대수는 2018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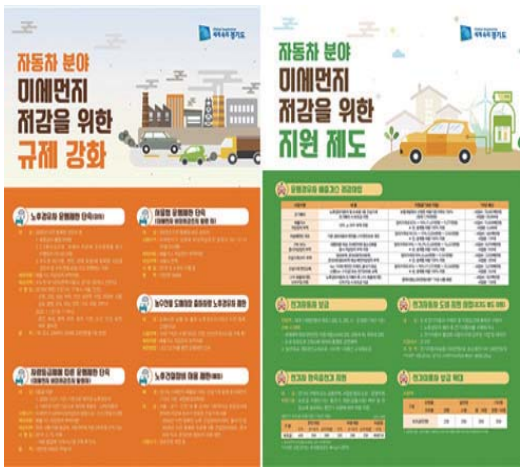
부터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감소한 차량보다 1.3배 많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인천시가 2020년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화를 완료하여 2020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상황과 달리, 경기도는 5등급 차량대수가 서울의 2배 이상, 인천의 4배 이상 많아 2020년 사업의 완료에도 약 13만 대(멸실인정 차량 제외)가 남고 수도권 외 14개 시 · 도 또한 2020년 이후에 100만 대에 달하는 5등급 차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13만 대 차량을 구제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202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을 유예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외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서울시와 인천시를 운행하여 미세먼지를 배출하거나 과태료 부과받는 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인천 방문 이력이 있는 5만 대를 우선 저공해화할 계획이다.

[표 119-6]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한 지원제도 및 규제강화 홍보물

노후경유차 정책 홍보물



노후경유차 지원 및 규제 홍보물

라. 평가 및 발전방안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 사업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이다. 세계 주요국가는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목표를 선언하고,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탈 내연기관 및 전동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로 연간 약 1,700톤의 미세먼지를 저감하였다. 저공해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까지 총 3,500톤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저공해화 사업의 지원액 상향 및 비경유차 구입 시 인센티브 지원과 같은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저공해조치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홍보로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120. 숲속공장(Plant in the Forest) 조성 추진 사업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2팀장 임헌벽

- 추진배경 : 공장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정화 숲 조성으로 대기질 개선
- 추진내용 : 경기도와 기업(121개사) 간 나무심기 협약(3년간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법적 근거 및 재정지원 없이 민간에 나무심기 유도, 오염물질에 대한 원인자 부담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강조
- 평　　가 : 재정지원 전혀 없이 도내 나무 53,178 그루 식재로 대기질 개선 효과 (2020.6월 말 기준 미세먼지 1,898㎏ 저감 및 약 53억 원 예산 절감)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 전국 최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경기도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약 30%인 19,045개소가 경기도에 있어,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연간 약 1,417톤으로 전국 최대이다.

현행법상 환경관리는 긴 시간 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내 및 주변국의 경제 위주 발전으로 오염물질 발생농도 저감이라는 질적인 환경관리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라도, 오염물질 발생 총량(사업장)의 증가라는 양적인 부분은 제자리걸음일지도 모른다.

2) 위기를 기회로... 변모하는 경기도

경기도는 선진국 우수사례 중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숲에서 영감을 얻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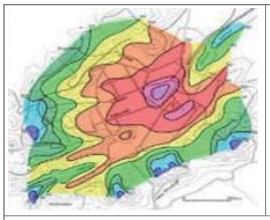
무와 대기오염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산림청 자료에 나무 1그루당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35.7g 정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공장을 대상으로 공장 유휴부지에 나무를 심는 내용으로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최종 삼성전자 등 121개소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정화 나무심기 내용으로 하는「숲속 공장(Plant in the Forest)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2021년까지 3년간 공장 내 나무심기 및 쉼터 등을 조성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내용으로 이후 몇몇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표 120-1]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숲 조성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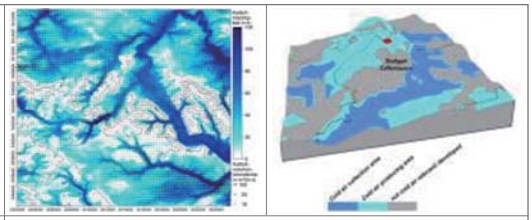
□ 사업의 목적

○ 대기오염, 열섬 완화를 위한 도시 대기 정체 해소를 목적

- 슐로스가든(Schlossgartenanlagen)에서 킬레스베르크(Kilesberg)까지 총 길이가 8㎞에 100ha 규모의 바람길 유도를 위해 도시숲 Green-U forest를 조성
- 2020년까지 슈투트가르트 중앙(Stuttgart HauptBahnhof)을 지하화하여, Green-U forest를 확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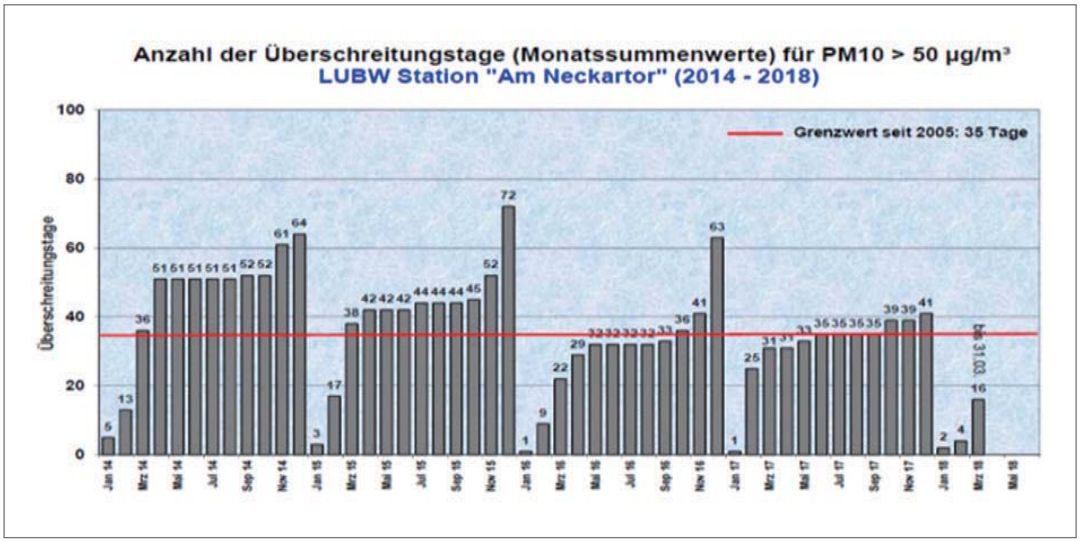
도시숲의 도심미기후 조절효과 분석



산줄기 찬바람 생성모델에 의한 공간화

□ 추진 효과

○ 미세먼지 고농도(PM10>50㎍/㎥) 일수 감소, 2017년 말까지 30%의 미세먼지 저감(고농도 일수, 10회('14) → 3회('17) 효과, 암네카토르 지점 기준)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19년 3월 26일 경기도와 삼성전자 등 121사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2020년 10월 말까지 나무 3만 여 그루 식재하였고 이후 2020년 6월 말 현재까지 2만3천 여 그루를 추가 식재, 총 5만3천 여 그루를 식재하였다. 이는 매년 미세먼지 1,898kg* 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약 53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인 것이다.

* 산림청 자료 : 1그루당 35.7g 정화

[사진 120-1] 숲속공장 조성 협약식

삼성, 기아, 현대, SK 등 10개사

협약기업 전체 121개사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2018년 12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사전 설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의 반응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나무식재 부지협소, 임차건물 등의 사유로 유보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에, 경기도는 우선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공장을 대상으로 총 24회 193개소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을 강조하여 설득에 성공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1) 경기도, 전국 최초 숲속 공장(Plant in the Forest) 조성

전국 최초로 시행한「숲속 공장(Plant in the Forest)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단계 관리에서 더 나아가, 배출된 오염물질을 전기 등 별도의 연료가 필요 없는 천연 공기청정기인 나무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백년 이상 저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사진 120-2] 숲속공장 조성 참여사업장 전경 및 「1사 1그루」 나무심기 홍보물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수원 S사 전경</td>
<td>이천 S사 전경</td>
<td>나무심기 홍보물</td>
</tr>
</table>

2)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추진

이와는 별도로 도내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1사 1그루」 나무심기 운동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경기도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할 것이다.

12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우리동네 '초록담'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장 김성각

- 추진배경 : 국정과제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추진내용 : 도로와 인도사이 상록성 띠녹지 조성
- 문제점 및 해결 : 도로관리부서, 주변 상가, 주민등과의 사전협의 후 실시
- 평　　가 : 미세먼지 및 폭염 저감, 안전 통학로 조성 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도시 내 도로는 차량 통행이 잦아 도로 주변을 통행하는 가로 보행자들은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복사열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일부 도로변에는 띠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낙엽성 수종으로 식재되어 있다. 미세먼지가 가장 극심한 이른 봄에는 잎이 나오기 전으로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상태에서 미세먼지 저감 작용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른 봄부터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여름철 도시 열섬화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와 인도 사이에 상록성 수종으로 띠녹지를 조성하는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신도시와 달리 도로변 띠녹지 조성이 미흡한 구도심이나 학교주변에 '경기 초록담'을 조성하면 구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사업 추진 검토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을 계획하면서 학계, 업계의 전문가 및 시 · 군 사업담당자가 모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사업 추진 지침(안) 마련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 총사업량, 5개년 추진계획 수립하고, 실제 시장조사 및 가설계를 통해 사업추진 단가를 책정하였다. 또 기존 도시 내 도로에 조성되어 있는 쥐똥나무 띠녹지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상록성 수종으로 식재하는 권장안을 마련하였다. 도로교통이나 보행자 안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각 시 · 군 도로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상가민원, 주민이나 통행자의 요구사항 등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도 만들었다.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 추진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21-1]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 추진개요

○ 사 업 명 :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

○ 해당시군 : 수원시 등 31개 시·군

○ 사 업 량 : 120km(2020년~2024년, 5년간)

○ 소요예산 : 총 240억 원(도비 72억 원/30%, 시·군비 168억 원/70%)

○ 연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사 업 량(km)		120	10	20	30	30	30	
사업비 (억원)	합 계	240	20	40	60	60	60	
	도 비(30%)	72	6	12	18	18	18	
	시·군비(70%)	168	14	28	42	42	42	

3)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 세부 추진내용

●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대상지 선정은 도시지역 내 차도와 연접하여 폭 4m 이상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하고 시행자와 시민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특히 구도시 지역, 학교 주변 통행로 등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

식재구간은 상가 및 횡단보도 위치, 이면도로 차량출입, 자전거통행로, 버스 정류장 등 도로변의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 주민, 상가주, 도로관리자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 조성한다.

● 수종의 선정

상록수로서 산림청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대상지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한다. 생태적으로 수벽설치에 적합한 수종 중초기 권장 수종은 측백나무, 서양측백나무, 사철나무 등 이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새로운 수종 개발을 권장한다.

● 식재기준

수벽의 높이는 최소 0.8m 이상 최대 1.5m 이하로 하되 대상지 여건에 따라 변형 설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패턴을 통해 경관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수벽높이는 상가 및 횡단보도 위치, 이면도로 차량출입, 자전거통행로, 버스 정류장 등 도로변의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자와 협의한 후 식재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 수벽의 폭 및 식재밀도

수벽의 폭은 최소 0.8m 이상(식재지반 기준)으로 하되 대상지 여건에 따라 변형 설치가 가능하다. 수벽에 사용하고자 하는 수목의 폭이 0.5m인 경우 1㎡당 6주 이상, 0.4m인 경우 1㎡당 10주 이상 식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부분적으로 증감할 수 있다.

● **식재틀 및 지반조성방법**

식재틀은 도로변에 화단형식으로 식재지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상지 여건에 따라 전문가와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변형설치 방법을 연구하여 시행한다. 식재지반 조성은 토양조사 · 분석을 통하여 토양개량 및 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지 여건에 따라 부분 적용한다. 포장하부 토양상태는 설계 당시에는 파악이 어려우므로 공사 진행시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대응한다.

● **유지관리**

겨울철 동해방지 및 염화칼슘 피해 저감을 위해 초록담 하부에 방호거적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도로변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염화칼슘 섞인 눈이나 물이 고여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도로변 수벽설치 후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수벽 식재 수종에 따라 유지관리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한다.

4) 추진성과

미세먼지가 가장 극심한 이른 봄부터 미세먼지 및 자동차 매연을 저감하고 여름철 도시열섬화를 완화하여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청정통학로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121-1]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 추진개요

○ 사 업 명 :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

○ 해당시군 : 수원시 등 31개 시·군

○ 사 업 량 : 120km('2020년~2024년, 5년간)

○ 소요예산 : 총 240억원(도비 72억원/30%, 시군비 168억원/70%)

○ 연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사 업 량(km)		120	10	20	30	30	30	
사업비 (억원)	합 계	240	20	40	60	60	60	
	도 비(30%)	72	6	12	18	18	18	
	시·군비(70%)	168	14	28	42	42	42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도로교통 및 보행자 안전

차량의 시야 저해, 보행자 이동상황 확인 불가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식재 시에는 각 시·군의 도로관리부서와 설계과정부터 협의하여 식재가 가능한 구간을 확인하여 사업구간을 선정하였다. 또한 식재높이도 지역 특성에 맞춰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위협요인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2) 인접 상가의 반대

도로변 띠녹지 조성 시 상가 물건의 상하차, 호객 등 상업 활동의 저해를 우려하는 상가주의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 반대가 예상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식재 시에는 상가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상업 활동에 저해가 되지 않는 구간에 식재위치를 정하고 수목높이도 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기 초록담 조성 후의 향상된 미관으로 오히려 상업 활동에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설명하여 사업시행 및 수목 식재 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상가주의 적극 협조를 유도하였다.

3) 상록성 수목의 내한성, 내염성

상록성 수목을 선정하여 도로변 띠녹지를 조성할 경우, 겨울철 혹한과 제설작업 시에 사용되는 염화칼슘 등의 염류유입으로 인한 수목피해가 예상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식재 시에는 식재틀을 설치하여 염류유입을 최대한 방지하고,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방한울타리 설치 등을 사업추진 지침에 제시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은 별도의 신규 부지의 확보 없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상록성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 및 폭염을 저감함으로써 어린 학생, 보행자, 주변 거주민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올해 추진 첫해로 이미 많은 시·군에서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 이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동일 수종만으로 단순하게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지 현황에 맞춰 다층식재, 수종다변화를 통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띠녹지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 조성만이 아니라 조성된 띠녹지를 유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도비를 보조하여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 조성지 주변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이 참여하여 유지 관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2. 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 지원

미세먼지대책과 친환경차보급팀장 전정순

- 추진배경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차를 친환경차로 전환
- 추진내용 :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매 지원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발굴 및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 개선
- 평　　가 : 미세먼지 저감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 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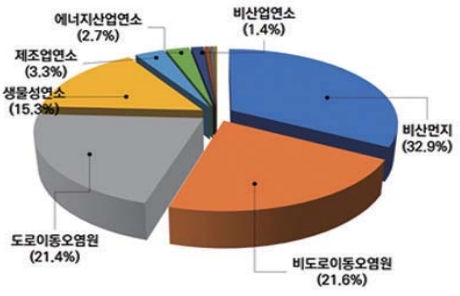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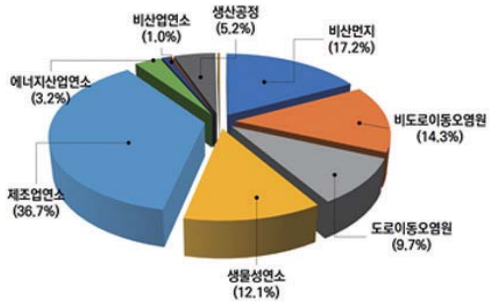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 주요국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퇴출을 서두르고 있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독성이 휘발유차보다 2배 이상 높아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프랑스 · 영국 · 노르웨이 ·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25~'40년까지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으로 '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수소차 6.5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10월 15일에는「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20년 4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전기차 · 수소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하는 등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친환경 교통기반을 구현하고 도내 초미세먼지 배출의 21.4%를 차지하는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

[표 122-1] PM2.5 원인별 배출현황 (자료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16년 기준)

	
경기도(11,127톤)	전국(100,247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전기차, 수소차 구매 지원

경기도는 2022년까지 전기차 30,000대, 수소차 3,000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이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차량이 구동되며,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CO_2나 NO_X의 배출이 없다. 또한 전기를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동급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해 차량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구입 시 승용차 기준 최대 820만 원의 정부 보조금과 최대 600만 원의 시 · 군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 6,756대를 보급하기 위해 127,301백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전기화물차의 본격 출시, 운영비 절감효과로 인한 전기버스 교체 증가 등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 확대 요청, 해당 부처 방문 등 국비 확보를 위한 건의를 지속 추진 중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대중교통의 무공해화를 추진하여 도심지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전기버스 구매 시 국고보조금 외에 도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영차고지(수원시 장안구 소재) 전체에 대해 전기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차고지 내 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등 전기버스 확대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건의하여 미세먼지 등 지역 대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신설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친환경버스 구매 부담을 경감시켰다. 경기도는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하는 수소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궁극의 친환경차이다. 단 5분이면 충전이 가능하고, 1회 충전으로 6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고효율의 연비를 자랑한다. 수소차 구입 시 2,250만 원의 정부 보조금에 시 · 군 보조금 최대 1,75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충전인프라가 열악한 조건에서도 575대의 수소차를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1,337대, 30,337백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보급을 추진 중이다.

[사진 122-1] 전기버스 충전 모습

[사진 122-2] 전기화물차 출시

2) 충전 인프라 확대

전기차 · 수소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한 충전불안 해소 등 불편사항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타 기관 협업을 통하여 2020년 현재 전기충전기 15,000여기를 설치하였다. 특히, 전기차 이용자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찾기 쉬운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보급하고 있다. 2019년에는 167개 지점에 급속충전기 145기, 완속충전기 20기 등 총 165기를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또한 초급속충전기(100kwh) 설치로 향후 신형 전기차를 위한 안정된 충전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2020년에는 초고속 급속충전기 설치,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쉽게 조작부의 위치를 대폭 낮춘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 설치 추진 등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동시에 공용 충전기 166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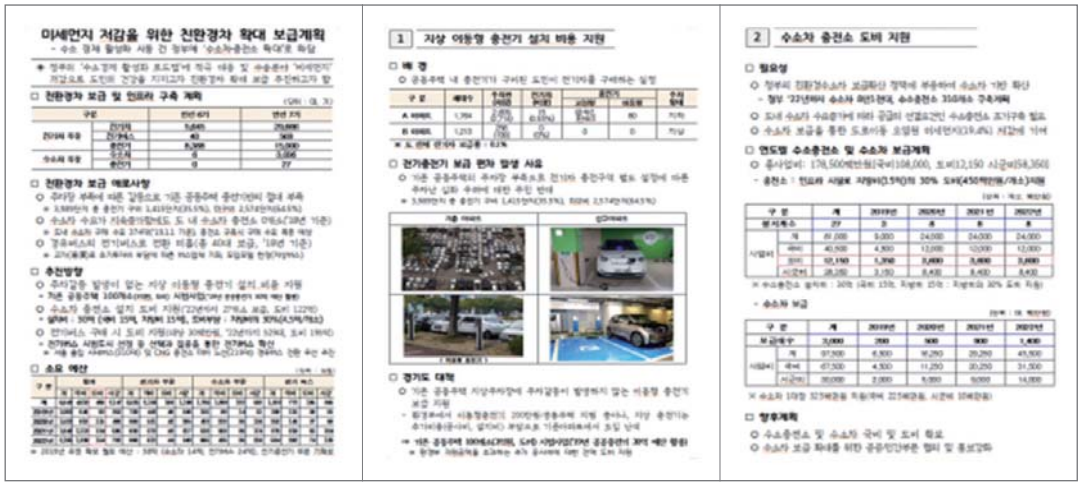
수소충전소의 경우 경기도는 부생수소 공장이 없고 운송거리가 멀어 충전소 보급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수소충전소 1개소 당 설치비가 30억 원에 달하고 최소 100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운행 수소차 부족에 따른 충전소 운영 적자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난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수소충전소 기반 마련 시까지 부지가 확보된 시·군에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소차 공급 확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규제개선 등으로 설치부지의 법적제한이 완화되어 공공청사 및 환경기초시설, 도시공원 · 체육시설 내 입지가 가능하므로, 해당시설 내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시 수소충전소 용지 반영을 추진하는 등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2018년까지 경기도 내에는 연구용 수소충전소 3개소만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9년에는 국비 105억 원을 확보하여 평택, 부천 등에서 수소충전소 7개소 설치를 추진 중이며, 환경부 민간보조사업에 경기도 내 총 8개소가 선정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승용용 충전소 2개소, 버스용 충전소 1개소에 대한 국비 7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환경부 민간보조사업에 4개소가 선정되어 경기도 내에는 총 22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올해 준공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이밖에도 고속도로휴게소의 경우 4개소가 2019년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4개소가 2021년 준공예정이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5,000기, 수소충전소 27개소 구축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전기차 · 수소차 보급 확대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형 그린뉴딜의 주요정책으로 부상됨에 따라 구축 목표를 전기차 충전기 20,000기, 수소충전소 60개소로 상향하여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도모할 예정이다.

[표 122-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확대보급 계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확대 보급계획

1 지상 이동형 충전기 설치 비용 지원

2 수소차 충전소 도비 지원

3)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경기도는 2019년 4월 29일「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 ·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2020년 1월 7일에는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를 규정하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표 122-3] 조례 주요내용

○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수립·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 보급·확대
○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설치대상, 충전시설 종류, 설치비율 등 제반사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4) 인센티브 제공으로 친환경차 구매 유도

경기도는 전기차 · 수소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5개 시 · 군 공영주차장 및 7개소 경기도 유료주차장의 주차비를 전액 감면하고 경기도 유료도로 3개소(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또한 도내 산업단지 183개소(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에 입주한 기업 또는 종사자가 전기차 ·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도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로 전환 시에도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친환경차 유지 · 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친환경차 구매 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과정

1) 공동주택에서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반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이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 주차면 부족이나 충전기 관리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다른 입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전기차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전기

차 충전기 설치 신청이 반려되자 아파트 정문을 차로 막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전기차 보급률이 늘면서 아파트 안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갈등이 깊어, 전기차와 기존 차량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이동형 충전기 보급 및 옥외콘센트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이동형충전기 사용을 위한 전자태그 부착

이동형 충전기는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벽면형 콘센트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기) 태그를 붙여 충전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설치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요금은 어느 곳의 콘센트를 사용하더라도 전기차를 충전하는 개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타 입주민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이 없다. 또한 이동형 충전기는 별도의 전기차 전용 주차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적다.

[사진 122-3] 이동형충전기 및 태그 및 전기차 충전 모습

3) 충전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또한 고정식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기존 콘센트를 사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면 되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지

하주차장이 협소하여 콘센트 설치가 어렵다. 이에 2019년에는 도내 공동주택 49개 단지에 이동식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 136개 및 옥외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사진 122-4] 옥외 콘센트 설치 및 전기차 충전 모습

4) 수소충전소 입지제한으로 인한 설치 어려움과 해결 노력

수소충전소는 “수소폭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수소에 대한 주민들의 선입견 등 민원제기로 인해 도심 가까운 지역에 설치 가능한 장소가 있어도 대부분 외곽에 설치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국토계획법 등 각종 법령상 제약도 있어 설치가 어렵다. 또한 수소차 보급 초기 경제성이 약해 민간의 수소충전소 사업 참여 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아, 공공부문에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선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공공청사 등 고시계획 시설부지 내 설치가능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는 불가하나,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 네거티브 전환 규제개선 건의 등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2020년 1월 1일 해당 규칙이 개정 · 시행됨으로써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됨으로써 전국 4,500여개의 공공청사에 수소충전소 설치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시설을 포함

시켰다. 복합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여 2020년 2월 21일 해당 시행령이 개정 · 시행됨으로써 부지확보가 용이해졌다. 행정이행절차 간소화, 설치 · 운영비용 절감 등 기존업계의 신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여건을 마련하였다.

5)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자체 최초로 화성시청 내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지자체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수소충전소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다. 또한, 주민 수용성을 높여 타 지자체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소차 보급 확대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진 122-5]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위치도 및 조감도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아 '12년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배출량이 감소되며,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CO_2 2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소차 역시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99.9% 이상 제거 후 청정 공기만 배출하며 1천 대 운행 시 나무 6만 그루와 같은 수준의 탄소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진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충전 불편을 시급히 해결하고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및 대상기관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123. 일본산 석탄재 수입 대책 마련

자원순환과 폐자원관리팀장 이재천

- 추진배경 : 일본산 수입폐기물 관련 실태('19.7.10.) 및 道 발주공사에 "일본산 석탄재 혼합시멘트" 사용제한 검토 도지사 지시('19.8.12.)
- 추진내용 : 전문가 국회토론회, 도민 여론조사 및 관련법 개정 건의
- 문제점 및 해결 : 과도한 수입으로 국내산 석탄재가 매립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시행('20.3.31.)
- 평　　가 : 국내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및 일본산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마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석탄재는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함에도 국내산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본산 석탄재 등을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국내 5대 발전사에서 약 1,029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그 중 약100만 톤이 매립장에 순매립됨에도 국내 시멘트사는 127만 톤의 석탄재를 수입하였다. (환경부 보도자료, '20.3.24.)

이에 따라 수입 석탄재 반입량만큼 국내 석탄재 재활용이 제한되어 매립량이 증가하였으나, 이윤을 추구하는 사경제 영역으로 기존의 국내 법령으로는 수입제한 조치가 불가능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일본산 수입폐기물(석탄재) 관련 검토('19.7.10.)

경기도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유해폐기물(석탄재)이 들어올까 걱정하는 국민정서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관련규정 등 수입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입석탄재의 가격이 국내산보다 저렴하여 수입되는 석탄재 반입량에 따라 국내 석탄재 재활용이 제한되고 매립량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내 시멘트제조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경제 영역으로 강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23-1] 폐기물 수입절차 및 수입현황

□ **수입 절차**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 수입 허가·신고

○ **(관련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허가 : 수출입규제폐기물 85종 / 신고 : 수출입관리폐기물 25개 품목(석탄재 등 연소잔재물 포함)

○ **(관리실태)** ① 원자력 사고 발생지역 수입 시 **'방사능검사성적서' 의무 제출**('17.10.19.~),

② 국내 반입 매 통관 시마다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 '수출입폐기물포털시스템'에 제출

③ 폐기물 수입업체 분기 1회 점검 실시(방사선, 방사능 측정)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체르노빌(우크라이나) 및 후쿠시마(일본) 해당

□ **수입 현황**

○ 연소잔재물(석탄재) 수입현황 (환경부 통계)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량(천 톤)	1,310	1,348	1,297	1,372	1,268	951

- 주요사용처 : 강원도, 충북 소재 시멘트 회사

□ **문제점**

○ 수입되는 석탄재 반입량에 따라 국내 석탄재 재활용 제한, 매립량 증가 불가피

○ 이윤을 추구하는 사경제 영역이므로 강제적 수입 제한 불가

- (시멘트회사) 시멘트 부재료 대체와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추가 이익 발생

- (발전소) 대부분 자가처리시설(매립비 톤당 2만 원) 운영, 재활용 시 폐기물처리비용 추가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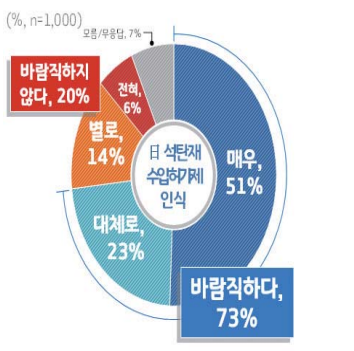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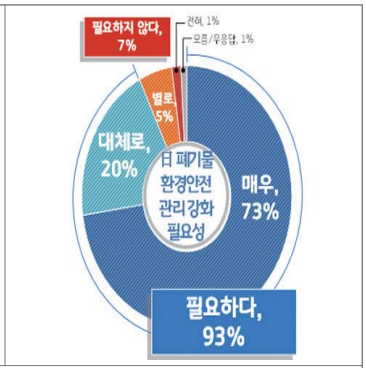
2)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2019년 8월 29일 국회에서 설훈 국회의원, 환경재단, 학계 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산 석탄재 전량 재활용을 위한 비용구조 변화, 단계적 수입규제, 대체원료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개진되었다.

3) 일본산 폐기물 수입제한 관련 도민 여론조사 실시

2019년 8월부터 9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규제 73%, 환경안전관리강화 93%, 道공사 일본산 석탄재 사용제한 83% 등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3-2] 국회토론회 및 도민설문조사 결과

<table>
<tr>
<td rowspan="3"> </td>
<td colspan="2"> 
</td>
<td> 
</td>
</tr>
<tr>
<td colspan="2">도민설문조사('19.8.~ 9.)</td>
</tr>
<tr>
<td>국회토론회('19.8.29.)</td>
<td>日 석탄재
수입규제폐기물 변경</td>
<td>日 폐기물
환경안전관리 강화</td>
</tr>
</table>

4) 일본산 폐기물(석탄재) 한시적 수입제한 강화 환경부 건의('19.10.7.)

경기도에서는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규제를 명문화하고자 중앙정부에 일본산 석탄재 수입 제한을 위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표 123-3]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 건의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② ~ ④ (생략)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원자력사고·고장 등급(INES)에 따라 7등급의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5)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시행('20.3.31.)

석탄재 등 수입제한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입금지 품목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수입 규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산 석탄재의 재활용 활성화로 인한 매립 감소로 국내 재활용 촉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가 기대된다.

[표 123-4]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시행 내용

시행 전	시행 후
제18조(수출입 금지 등)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한다.	제18조(수출입 금지 등)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 1.「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2.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경기도는 국회토론회, 도민 여론조사, 언론 홍보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규제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켜, 수차례 건의 끝에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 (환경부)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 실시 후 「수입금지 품목 고시」 예정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는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 석탄재 수입과 관련, 국회토론회('19.8.29.), 도민 여론조사('19.9.21.),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규제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자체 대응책으로, 2019년 10월부터 도에서 계약·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국산석탄재 함유 시멘트로 제조한 레미콘 업체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계약 건에 대하여는 국산으로 변경납품을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2018년도 127만 톤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이 2019년에는 95만 톤으로 32만 톤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국산 석탄재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2019년 8월 6일 환경부의 석탄재 재활용 관련 지침(목표율 상향 75%→95%) 개정을 건의하였고,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폐기물 규제를 위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등 개정 건의를 통해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시행('20.3.31.)을 이끌어냄으로써,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및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4. 청소선 도입으로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해양수산과 수산산업팀장 김종배

- 추진배경 : 공약사항 227번, 평택해안 청정해안 유지(평택시)
- 추진내용 : 경기바다 청소선 1척 건조 및 운영
- 문제점 및 해결 :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주요 장비수급 지연 등
- 평　　가 : 깨끗한 경기바다조성, 수산자원회복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9년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은 약 16만5천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2013년 4만9천 톤에 불과했던 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에는 9만 5,631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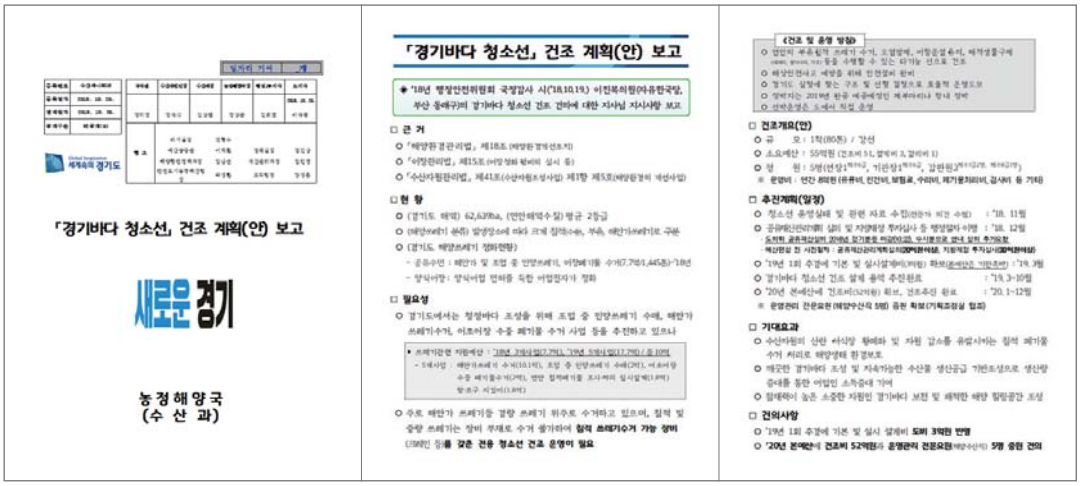
※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투입 예산은 지속 증가
(수거량) '15) 69,129톤 → '16) 70,840톤 → '17) 82,175톤 → '18) 95,631톤
(예　산) '15) 512억 원 → '16) 520억 원 → '17) 604억 원 → '18) 762억 원

경기도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 침체어망, 도내 어업인들이 조업 중 인양하여 가져오는 쓰레기 수매, 어초어장 내 폐기물 수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도 연안 쓰레기 15,700톤을 수거 · 처리하였으나, 이는 화성, 안산을 포함한 5개 연안 시 · 군에 사업예산을 지원해주는 간접적인 방식이었다.

또한 주로 해안가 쓰레기 등 경량 쓰레기 위주로 수거하여, 실제 바다 속에 침적되어 있는 중량쓰레기는 수거 장비의 부재로 처리가 불가한 실정으로 침적쓰레기 수거 가능 장비

를 갖춘 해양쓰레기 전용 청소선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8년 경기도는 경기도 연안의 침적되어 있는 해양폐기물을 도가 직접 수거 처리하기 위한 바다청소선 건조를 계획하게 되었다.

[표 124-1] 경기바다 청소선 건조 계획(안)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도비로만 짓는 국내 첫 바다청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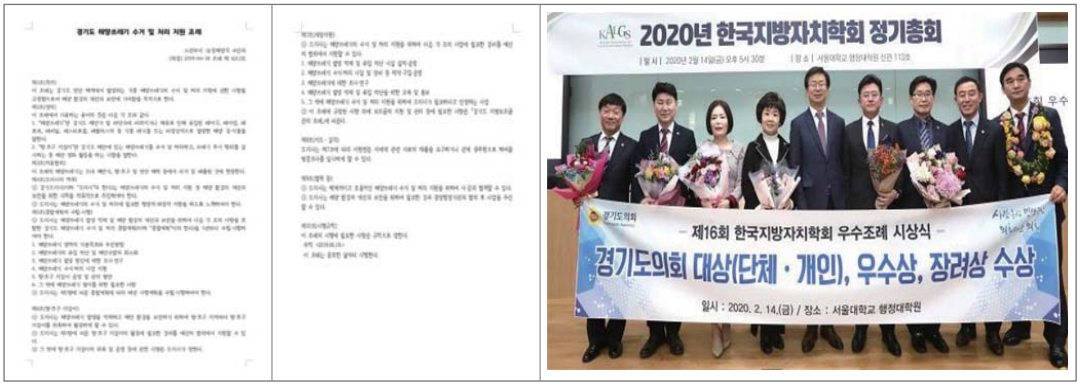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다청소선은 한국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각각 20척과 12척을 운영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로는 전북, 전남, 경남, 인천, 부산에서 각 1척씩의 어장정화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 비해 경기도 청소선은 전액 도비로 짓는 국내 첫 청소선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2)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 조례」 제정으로 처리기반 마련

경기도는 2019년 6월 18일 경기도 연안 해역에 발생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연안환경 개선과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것은 제주도('17.9월)에 이어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번째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이며, 경기도 해양쓰레기 조례는 올해 1월에 전국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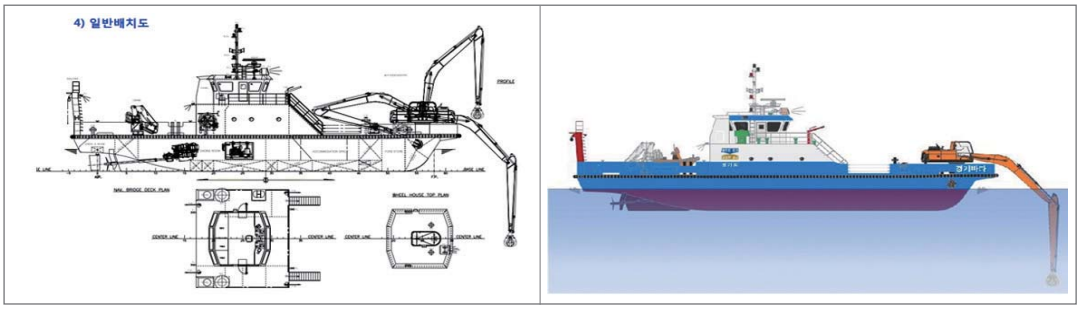
[사진 124-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조례 및 우수조례 평가 시상식



3) 경기도형 청소선의 설계

2018년 수립한 청소선 건조계획을 기반으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이루어진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경기도 연안의 침적쓰레기 수거에 적합한 경기도형 청소선 설계를 완성했다. 청소선은 길이 33m, 폭 9m, 최대 폐기물의 적재량 100톤의 140톤급 강선재질로, 침적폐기물 수거를 위해 배 앞쪽에는 굴삭기를, 배 뒤쪽에는 인양틀을 장착하게 된다.

[표 124-2] 경기바다 청소선 설계 및 모형도



4)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조 돌입

청소선의 건조는 2020년 2월에 경남고성군 소재의 조선소인 ㈜미래중공업을 시공사로, 부산시 소재의 ㈜한국해사기술과 전면책임감리를 계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생산설계 등 사전 조율단계를 거쳐, 5월 6일 선박건조의 착공식이라 할 수 있는 강제절단식(Steel-Cutting)을 성공리에 마쳤다. 2020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건조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말 현재 전체 공정률은 40%에 도달하였다.

[사진 124-2] 강제절단식(Steel-Cutting) 및 청소선 선체조립작업

5) 경기도민의 열정과 관심을 보여준 청소선 명칭공모

경기도는 2020년 6월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청소선의 선박명칭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총 1,717건의 공모작이 접수되어, 경기도 바다와 청소선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선작 선정을 위해 내부심사를 포함한 총 3차의 심사를 거쳐 청소선의 명칭은 최종 “경기청정호”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본 당선작은 청소선의 사업취지와 사업추진 의지를 간결하게 표현하였다는 최종 심사의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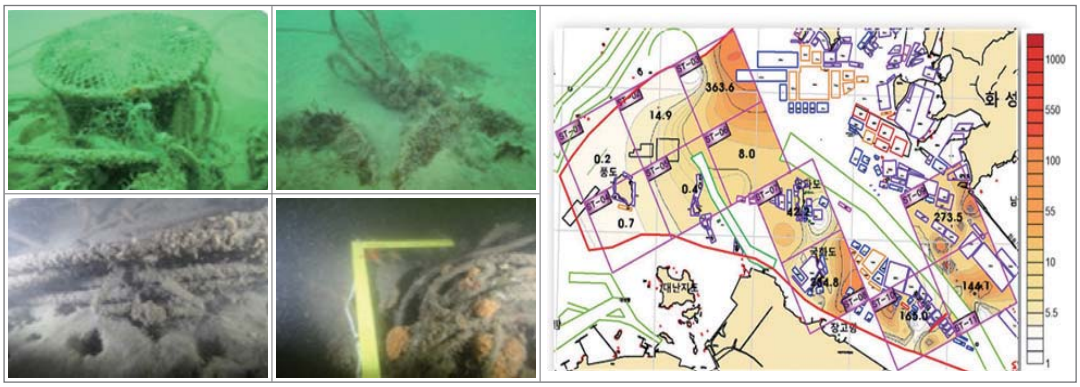
[표 124-3] 경기바다 청소선 명칭공모전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경기도 바다의 쓰레기 지도를 그리다

경기청정호가 준공되면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인 바다청소 작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4만6천ha의 경기도 바다 어디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은지 육안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 그래서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연안 침적폐기물 조사 및 수거처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경기도 연안 1만ha에 쌓여 있는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위치를 파악하는 쓰레기 지도를 그리게 되었다.

[사진 124-3] 경기바다 침적폐기물 종류 및 분포도



확인된 쓰레기양만 약 1,500톤에 이르고, 조사가 어려웠던 항로주변, 어장 주변 등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청정호의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 매년 100~200톤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고, 매 5년마다 경기바다 침적폐기물 지도를 다시 그려 경기청정호 운영의 성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2) 코로나19로 인한 장비 수급의 어려움

경기청정호는 설계용역 중이던 2019년 10월에 주기관(엔진), 발전기, 굴삭기, 크레인 등 주요 장비를 미리 선정하였다. 그중 경기청정호 운영에 적합한 엔진으로 미국업체의 제품으로 선정하였는데,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엔진수급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예정보다 1개월 늦은 9월에 엔진이 수입되면 기관실 공사 및 선실공사일정에도 차질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매달 2회 조선소 현장을 방문, 설계사, 시공사 감리단 및 엔진제조업체와 관련 회의를 거쳐 기관실 이외에 공사일정을 재조정하였고,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12월까지 세부추진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청정호의 도입은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바다의 침적폐기물과 도서지역 해안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 · 처리하여 깨끗한 경기바다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청정호의 본격적인 활약으로 경기도는 매년 100~200톤의 연안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1,370만 경기 도민에게 깨끗한 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내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증대 및 침적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청정호 운영 외에도 5개 연안 시군과 함께 도내 바닷가쓰레기 수

거사업과 지역주민을 활용한 바다환경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도내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다.

125. 생활폐기물 저감 재활용 활성화 모델을 시군과 공유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염호근

- 추진배경 :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경기도형 폐기물 저감 정책 수립 필요
- 추진내용 : 4개 분야 15개 정책과제 추진
- 문제점 및 해결 : 폐기물 발생, 배출, 수거 · 선별, 재활용 처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
- 평　　가 : 도-시 · 군과 협력하여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1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인해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만1,605.3톤에서 2018년 1만2,406.1톤으로 약 6.9%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폐비닐과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민간에 의존하는 재활용품 수거-선별-처리과정은 취약한 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폐기물 발생, 배출, 수거 · 선별, 재활용 처리까지 全 단계별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도출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에는 4개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시·군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추진에 나섰다.

나. 추진실태 및 문제점

1) 발생단계

1회용품 사용 급증에 따라 경기도는 2019년 4월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하였다. 규제품목 위주로 1회용품 감축을 추진 중이나 비규제 대상 또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시 1회용 컵 사용 및 배달 시 1회용품(수저, 용기 등)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축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 배출단계

재활용품 배출시 단독주택은 재활용품(플라스틱, 종이, 유리병 등)을 한 봉투에 모아 문전 배출하고 있으나, 봉투파손 시 도시 미관을 저해 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야기 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공동주택은 주택 내 품목별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배출하고 있으나,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이 정착되지 않아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다량의 이물질(음식물, 스티커 등) 혼입으로 성상이 불량한 상황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분리배출 된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은 3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125-1] 단독주택과 공통주택의 재활용품 배출 모습

단독주택

공동주택

3) 수거·선별 단계

단독주택은 시 · 군이 매일 문전에서 혼합 수거하고, 공동주택은 특정 요일에 민간업체가 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선별장에서 선별(여건에 따라 일부 상이)한다. 재활용품은 선별장에서 세부 선별, 압축 등을 거쳐 재활용 제품 생산원료로 가공하고, 이물질 등으로 성상이 불량한 것들은 잔재물로 구분하여 소각 처리된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혼합 수거, 공동주택의 높은 민간수거 의존도, 선별 인프라 부족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선별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 계획에 따르면 도내 공공선별장의 재활용품 선별율은 55%로, 나머지 45%는 잔재물로 소각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재활용 단계

재활용산업은 생산원료(선별된 재활용품)의 낮은 품질, 재활용 제품의 수요 저조, 산업 대형화의 어려움*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재활용품의 종류별, 단계별로 분화되어 있어 대형화가 어려운 구조로, 종업원 10인 이하 업체 비율은 73.7%, 총 매출액 1억 원 미만 업체는 58.7%('18, 환경부)

다. 추진내용

경기도가 수립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모델'은 ▲생활 속 폐기물 발생량 줄이기(1회용품 저감) ▲재활용 활성화 ▲교육홍보 강화 ▲재활용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의 15개 세부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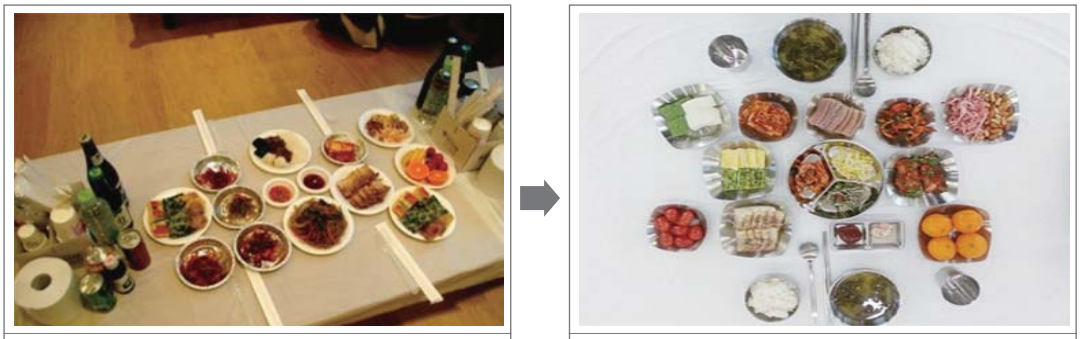
1) 생활 속 폐기물 발생량 줄이기(1회용품 저감)

공공기관 내 1회용 컵 등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솔선수범을 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기도의회, 경기도립의료원 등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 1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다. 조사내용은 1회용품(컵, 용기, 병입수) 구매 실적, 공공청사 폐기물 발생 · 처리, 공공청사 내 입점 카페의 1회용품 (종이 · 플라스틱 컵, 빨대 등) 사용실태 등이다.

또한 1회용품 다량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 강화(1회용품 사용 감시원 운영)를 위해 연말까지 22개 시 · 군에 지도 ·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감시원' 57명을 운영 중에 있다. 지역단위의 자원순환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 6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특히, 7월 15일에는 공공기관의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하고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인증마크 수여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 ·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환경우수업소 선정과 홍보 · 지원 강화를 통한 1회용품 다량사용업소의 '자원순환 문화' 촉진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2020년 7월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 식기 및 세척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 장례문화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2014년 환경부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장례식장 1개소 당 연간 밥 · 국그릇 72만 개, 접시류 144만 개가 사용된다고 한다.

[사진 125-2] 1회용품·다회용품 사용 모습



1회용품 사용 | 다회용품 사용

아울러 가정 내 배달 시 1회용 수저, 포크 등 불필요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불필요하지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 도민 공감과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표 125-1]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스터

또한 배달문화 정착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아이스팩 활용을 위해 필요한 수요처로 재공급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6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가정에서 배출된 아이스팩은 시에서 수거하고 세척 · 소독과정을 거친 후, 전통시장 등에서 재사용된다. 생활폐기물량 감축 효과로 차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다.

[표 125-2] 재사용 과정

2) 재활용 활성화

단독주택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등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된 재활용품 거점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행복마을 관리인, 이·통장을 활용한 전담관리제로 운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품의 성상 개선으로 재활용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성상 개선을 위해서 시 · 군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품목별 요일제를 지정 · 운영하도록 하고, 요일제 운영이 어려운 경우는 혼합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가성이 높은 폐자원에 대하여는 별도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종이팩 → 휴지, 무색 페트병 → 의류용 섬유, 병 재생산, 시트류

아울러 재활용시장 상황에 민감한 민간주도의 수거체계 안정화를 위해 점차 공공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과정을 파악하고, 수거거부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관리를 위한 선별장 공간 및 인력, 부대장비를 확보하고 노후화 된 폐기물 처리 시설개선으로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에너지 재활용 위주의 양적 확대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물질재활용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업사이클 기업에게 직접 폐현수막, 폐비닐을 공급하여 건축패널, 가로수보호판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구매실천을 협력하여 지역 내 폐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맞춤형 업사이클 시범사업'을 안성시, 포천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폐자원의 원활한 재자원화 및 고부가 가치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교육, 캠페인 실시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도민 및 1회용품 다량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저감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등 자원순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우수업소 인증제와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1회용품을 저감하는 모범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SNS 등 홍보매체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올바른 분리 배출 가이드라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집중 홍보(홍보물 배포 등)할 것이다. 또한, 자원순환 플리마켓 등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및 1회용품 사용 저감 캠페인 등 도민들의 생활 속 실천도 유도할 방침이다.

[표 125-3] 홍보포스터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라인</td>
<td colspan="2">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스터</td>
</tr>
</table>

4) 재활용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개선 등을 통해 비상시(재활용품 수거 중단 등) 공공처리 기반을 확보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용인, 부천, 안성, 연천, 여주 등 5개시에서 공공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확충 및 개선*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재활용품 일시 적체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재활용품 비축센터 운영도 검토할 방침이다.

* (신설) 1개소 : 용인(150톤/일)
(시설 개선) 4개소 : 부천(70톤/일), 안성(58톤/일), 연천(10톤/일), 여주(30톤/일)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모델’은 폐기물 발생, 배출, 수거 · 선

별, 재활용 처리까지 全 단계별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4개 분야 15개 세부과제 추진을 통해 도-시 · 군간 정책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코로나19 이후 폐기물 다량 발생 상황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사업에 대한 시 · 군 예산지원과 정보교류는 물론, 정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도민, 폐기물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경기도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하여 협력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4절 모두를 지키는 사회안전망 구축

126. 도내 정신질환자 한밤중 진료 입원 언제든 가능

정신건강과 자살예방팀장 홍성자

- 추진배경 : 야간에 정신질환자 진료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한 실정
- 추진내용 : 남북부 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24시간 응급대응팀 운영
- 문제점 및 해결 : 의료기관의 시설 리모델링으로 응급실 및 정신병동 기능 확대
- 평　　가 : 경기도형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자해 ·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현장대응 · 이송에 훈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입원거부, 정책적 지원 미비 등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요에 부응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야간 인력 부족, 병실 부족, 동반 신체질환 치료 곤란 등의 이유로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공공의료기관 등을 활용한 공공모델을 우선 구축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정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응급환자 입원 제약으로 치료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경기도형 감염병(코로나19) 정신응급대응체계를 마

련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경기도 남부권역은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신체질환 진료)과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정신질환 진료)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북부권역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을 원스톱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응급실 및 정신병동의 기능을 확대하여 24시간 정신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2020년 6월 11일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에 따라 남부권역은 2020년 6월부터 정신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하였고, 북부권역은 병원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공사로 2020년 9월경 대응체계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표 126-1] 업무절차(흐름도)

< 남부권역 >

환자발생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도립정신병원, 타 정신의료기관
1차평가(유선) (응급대응팀)		정신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경찰, 소방)	》 2차 정신과적 대면평가 (응급대응팀)	》 신체질환 치료 (응급실)		정신응급환자 입원치료

< 북부권역 >

환자발생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타 정신의료기관
1차평가(유선) (응급대응팀)		정신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경찰, 소방)	》 2차평가 (응급 대응팀)	》 신체질환 치료 (응급실)	》 정신질환 치료 (정신병동)		(필요시) 정신응급환자 입원치료

[사진 126-1] 사업수행 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정신건강복지 센터

2) 24시간 응급대응팀 운영

자해 ·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응급상황 대응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나 경찰관만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현장 대처를 요구하기는 무리한 실정이다. 자살 시도 등 정신적 위기상황에서 경찰, 구급대원들과 협조적이고 안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에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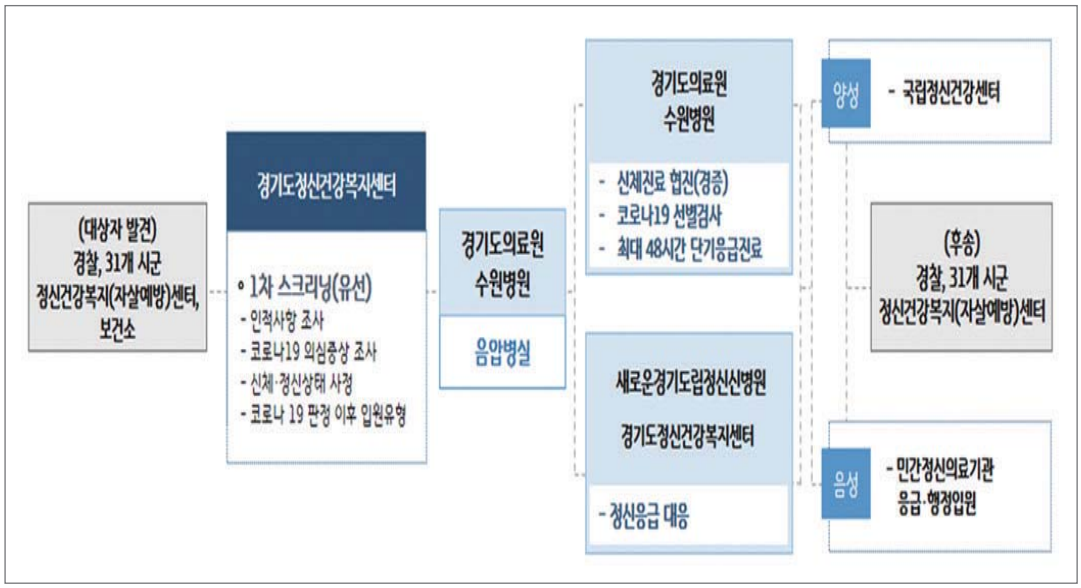
남부권역 응급대응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설치하여 현재 2인 1조로 24시간 운영되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정신응급환자 음압병동을 병행 운영 중이다. 북부권역 응급대응팀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설치하여 2020년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응급대응팀의 역할은 정신응급 대상자의 정신과적 평가(1차 유선, 2차 대면), 관계기관(경찰 및 소방) 의사소통 중재, 선별 및 정보제공, 정신의료기관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 의뢰 연계, 응급후송 지원 등이다. 야간 및 주말에도 지정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신체질환을 포함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24시간 정신응급환자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신속한 정신응급 초기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병원 이송이 지연되고, 경찰 및 소방, 기초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 위기개입 출동 시 응급입원 연계 과정에서 지나친 시간을 소모하는 등 고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20년 3월 23일부터 '24시간 정신응급환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감염과 정신응급 관리체계를 실현한 것으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및 정신응급상황에서 격리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기도민과 방역당국의 안전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126-2] 체계도



[사진 126-2] 선별진료소

초기 평가

경찰 및 소방, 기초센터 의뢰

코로나19 검사 및 정신응급진료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경기 남부권역에는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었다. 경기도형 정신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부권역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24시간 정신응급환자를 진료하기에는 의료진 인력과 시설 등이 부족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인력과 보응급환자용 병실 및 보호실 등을 보강하여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2020년부터 「지정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정신응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24시간 정신응급환자에게 내외과적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형 감염병 정신응급대응체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집단 감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 정신응급의료서비스를 구현하도록 구축되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및 정신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및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공공모델이 정착되면, 향후에는 민간 영역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욱 신속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사회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27.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운영팀장 유권수
보건의료정책과 의약관리팀장 엄원자

- 추진배경 : 무자격자 의료행위 방지 및 환자 등 인권 보호
- 추진내용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및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 운영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의견 등으로 법률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평　　가 : 수술실 고의적 불법행위 예방 및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 보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와 환자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에 다수 보도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8년 10월부터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내 수술실 CCTV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환자가 수술 부위 촬영 등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환자의 사전 동의하에 선택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술실 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확보를 위해「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조의 동의도 얻었다. 아울러, 정보보호 책임 관리자를 선임하여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다.

'전국 최초 수술실 내 CCTV 운영'에 대하여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관심과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도민 91%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운영에 대해 찬성하였고, 87%는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반드시 동의할 것'

48%)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수술실 내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2019년 5월부터 산하 병원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 · 운영을 전면 확대하였다.

아울러, 2020년도에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 운영의 자발적 확대 지원을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 지원사업 대상 기관 공모를 추진하여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 운영

2018년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수술실 CCTV는 2018년 신축 당시 안성병원 내 수술실 5곳에 CCTV를 설치하여 우선 운영할 수 있었다.

이후 실시한 '도정여론조사' 결과에서, 도민들의 CCTV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였다. 경기도는 CCTV의 확대 설치 · 운영을 위해 2019년도 예산 8천4백만 원을 편성하여 CCTV 추가 설치 및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솔루션을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 22곳에 22대 CCTV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 예산액 8천4백만 원 확보(장비 설치비 44,000천원, 보안솔루션 40,000천원)

또한, 시행 첫 달 54%의 동의율을 보였던 촬영 동의 건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면 확대 실시 전인 2019년 4월 말에는 동의율 66%를 기록하였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CCTV 촬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전면 확대한 이후에도 67%('20년 6월 말 기준)로 꾸준한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표 127-1]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동의율

구분	'18.10.01. ~ '19.04.30.			'19.5.01. ~ '20.5.31.		
	수술건수	동의건수	동의율	수술건수	동의건수	동의율
합계	1,192 (144)	791 (76)	66% (54%)	**3,766**	**2,518**	**67%**
수원병원	-	-	-	605	470	78%
의정부병원	-	-	-	322	152	46%
파주병원	-	-	-	1,055	667	63%
이천병원	-	-	-	434	220	51%
안성병원	1,192 (144)	791 (76)	66% (54%)	641	528	82%
포천병원	-	-	-	709	481	67%

※ ( ) '18.10.01. ~ 10.3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최초 실적

※ '19.05.01. 수술실 CCTV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확대 운영

2) 수술실 CCTV 운영 방법

경기도의료원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 관리 방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다. CCTV 운영에 따른 정보주체(환자, 직원) 촬영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촬영 영상에 대한 보관, 폐기절차 및 영상 열람 요청 처리 절차를 마련하였다.

[표 127-2]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동의서

<운영·관리 방침>

<직원 동의서>

<환자 동의서>

수술 전 먼저 동의서를 구비하여 간호사를 통해 절차에 대한 설명 후 환자 동의를 받고 수술실 출입 직원에 대해서도 미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수술실에서는 단계별로 확인 후 CCTV를 ON/OFF 스위치로 동의한 건에 대하여 촬영을 진행하였다.

[표 127-3]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촬영 절차

1단계 환자확인	**2단계** 재확인	**3단계** Time Out 시행	**4단계** 수술진행 및 종료	**5단계** CCTV촬영 종료
환자 확인 및 동의서 확인	재확인 후 CCTV 스위치 ON/OFF	수술 참여 인력이 수술 전 정확한 환자 확인	종료 후 회복실 입실 후 환자 확인	환자 퇴실 후 스위치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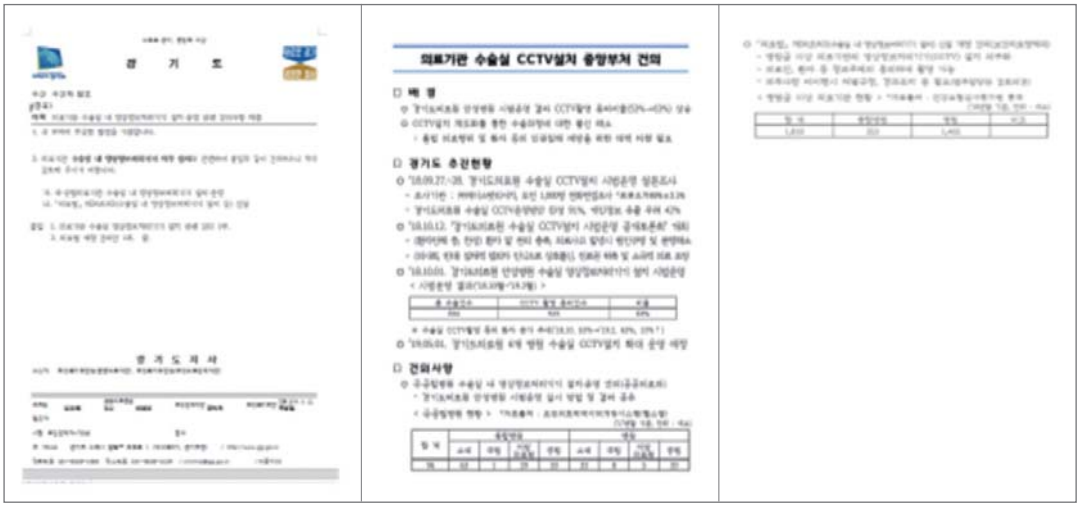
수술 후 환자가 열람을 요청할 시에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열람이 이루어지진다. 통제실에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한 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행정과장)의 서명 후 열람이 가능하다.

3)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 건의 등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 예방과 환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2019년 3월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 건의하였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국 · 공립의료기관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및 「의료법」제26조의2(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신설을 통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2020년 7월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화 지원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전달하였다.

[표 127-4] 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개정 건의



공 기 호

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운영부처 건의

□ 배 경

□ 경기도 추진현황

□ 건의사항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 김경협 의원 외 19명의 공동 주최로「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국회토론회 개최를 하였다.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연합,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등이 참석하여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 127-1] 수술실 CCTV 국회토론회('19.5.30.)

아울러, 20대 국회에서는 안규백 의원 등 15인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 김남국 의원 등 12인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2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부정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술실뿐만 아니라 신생아 낙상, 감염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2곳에도 CCTV를 설치하여 신생아 낙상, 감염 예방하는 등 신생아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과정

1)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의 진료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협회의 주장 내용은 수술실 CCTV 도입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의료진 처벌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책임 회피를 이유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커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CCTV 촬영 건의 해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유출될 위험성 주장,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2) 의료계 의견 수렴 및 보안강화

경기도는 의사와 환자 간 불신 조장,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진료의 위축 등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줄여가기 위해 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공개토론회, 국회토론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 공개토론회 : '18.10.12., 국회토론회 : '19.5.30.

촬영 영상에 대한 해킹 방지 및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KCMVP) 적용, 프라이버시 마스킹 및 디지털 포렌식(워터마킹) 기술, 화면캡처방지기술 적용으로 다양한 보안기술 적용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및 관리자의 권한 관리로 불법적인 영상 획득과 재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출 목적에 따른 제한적 사용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전국 최초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 운영'은 의료진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마취로 인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인 모두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이제 CCTV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CCTV 설치 운영은 환자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수술실 내 불법·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의사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만이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에는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의료계, 환자단체연합 등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의료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는 것이다. 나와 내 가족 누구든 수술이라는 의료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안전한 의료문화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128. 음압부검 설비 갖춘 AI전용 BL3시설 구축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팀장 유성종

조류질병대응팀장 최영화

- 추진배경 : 깨끗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경기도
- 추진내용 : 음압 부검 설비를 갖춘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구축
- 문제점 및 해결 :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음압부검설비 구축
- 평　　가 : AI전용 BL3건립으로 선제적·능동적 AI 예찰시스템 확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람과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검사하는 방역기관이다. 이 질병들은「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어, 발생 시 OIE에 보고해야 하는 질병이다. 또한 전파력이 강하고,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 개체감소를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어 경제학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200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경기도에서는 약 1조3천5백억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였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는 2,596억 원 및 28,093천 수 살처분으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또한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철새 이동경로를 감안하면 AI 유입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지정 운용지침」에 의거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에서만 실험·검사할 수 있는 고병원성 병원체이다. 시험소 내 BL3 가동 중이지만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다른 질병과 같이 사용해야 하며, 음압 부검시설이 없어 병원체 안전처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에 지자체 방역기관 중 처음으로 음압형 부검 설비를 갖춘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을 구축하고자 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AI 전용 BL3 건립 검토

2014년 이후 매년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능동적 예찰 시스템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물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신속하고 대량의 검사를 위해 실험실을 확장하고, 폐사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음압부검실이 필요하게 되어 AI전용인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증축을 추진하였다.

* '14년 15.4만 건 → '15년 30.4만 건 → '16년 32만 건 → '17년 38.2만 건 → '18년 25.2만 건

[표 128-1] AI전용 BL3 증축 추진 계획

2) 개념컨설팅 설계 도입으로 맞춤형 실험실 구축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가에 의한 시공과 운영절차 마

련이 필요하고,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인증의 준비와 향후 적법한 운영을 위해 최초 설계 시 생물안전 전문가의 개념컨설팅을 도입하였다. 개념설계안 작성, 장비 적절성 검토, 실시설계 검토, 인허가 지원, SOP 작성 지원 등 개념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실험실 구축이 가능하였다.

또한 경기도 건설본부, 허가부서(질병관리본부), 정밀진단기관지정부서(농림축산검역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문가의 협조로 최적의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17개월(2018.4.~2019.10.)의 공사로 AI전용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이 증축되었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128-2] AI전용 BL3 증축 개요

○ 사업기간 : 2017.6월 ~ 2019.10월(29개월)
○ 총사업비 : 5,500백만 원(국비 500백만 원, 도비 5,000백만 원)
○ 건축면적 : 연면적 956㎡ 지상 3층 철근 콘트리트 구조
○ 주요시설 : BL3(실험실,부검실,멸균실 등), 준비실, 시료보관실, 사무실 등
○ 설치장소 :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63, 동물위생시험소 내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준공 : '19. 5. 18. / 기계설비 준공 : '19. 10. 2.
○ 시설특징
- 공기 중 고위험 병원체 유출방지를 위한 멸균 및 폐쇄형 음압시설
- 고압멸균기 및 바이오킬 시스템을 통한 발생 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 전국 지자체 최초 음압부검대 설치

3)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국가 인증 획득

AI 전용 BL3는 3개월의 검증 기간을 거쳐 2019년 11월 신규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20년 2월에 신규허가를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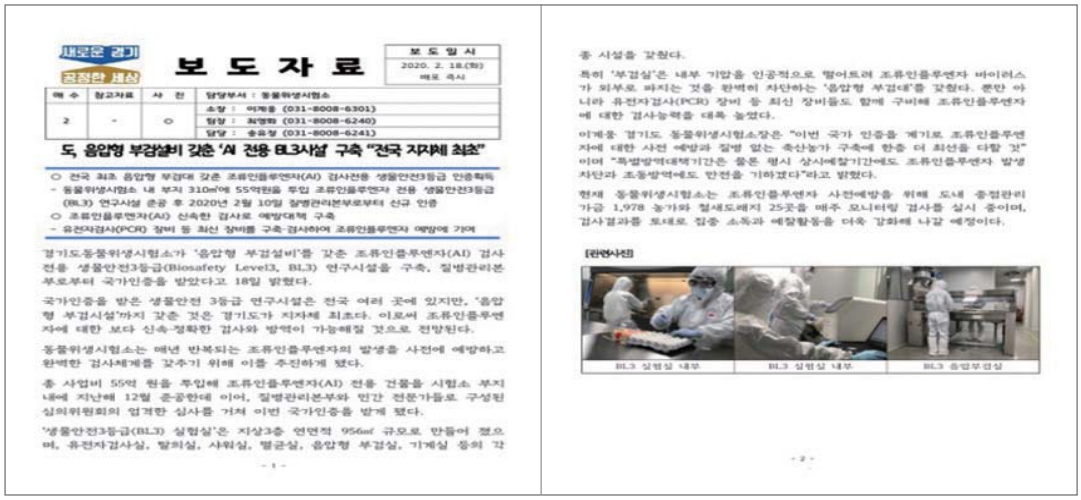
[표 128-3]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신규허가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음압형 부검설비 최초 설치·검증

전국 지자체 방역기관 중 음압형 부검설비가 BL3 내에 설치된 예가 없어,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기준 중 동물실험용 BL3운영 기준에 맞춰 설치하였다.

[표 128-4] AI전용 BL3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0. 2. 18.(화)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 이계동 (031-8008-6301)
팀장 : 최명학 (031-8008-6240)
담당 : 송효정 (031-8008-6241)

도, 음압형 부검설비 갖춘 'AI 전용 BL3시설' 구축 "전국 지자체 최초"

전국 지차제 중 음압형 부검 설비를 갖춘 기관이 전무하고, 신규허가로는 전국 최초로 검증하는 장비여서 국내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증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생물안전작업대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인증기관인 NSF의 NSF/ANSI49 검증 항목에 따라 검증을 완료할 수 있었다.

2) 건축 공사 지연

당초 계획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8개월(실시설계 3개월, 건축공사 및 검증 10개월, 허가/진단기관 지정 4개월)을 추진기간으로 예측했었으나, 건축 공사 중 주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어 타절되었다. 이후 다른 업체로 다시 계약하여 잔여공사를 추진하여 준공되었고 이로 인해 건축 공사 지연이 발생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AI 음압형 부검설비가 갖춰진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구축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일일 검사 능력 확대 및 생물안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기타 해외 가축전염병 진단 시 신속·대량의 검사체계가 구축된다는 의미로 초동방역대처 및 상시예찰시스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에 발생하지 않던 신규 악성 해외전염병 검사체계 구축이나 코로나19 동물검사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중점관리 가금 1,978농가와 철새도래지 25곳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 유입 경로 · 축종별 위험도 관리를 위해 매년 약 10만 건 이상 정밀검사 실시하는 능동적 예찰시스템을 운영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29. 소방 대응력 강화

소방행정과 소방조직팀장 홍의선

- 추진배경 :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의 단계별 충원 및 관서확충 필요(공약 NO.307-308)
- 추진내용 : '22년까지 부족 소방공무원 단계별 3,321명 충원 및 소방관서 28곳 확충
- 문제점 및 해결 : 현장소방인력 및 소방관서 부족 → 소방력 확충
- 평　　가 : 현장대응 소방력 확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기후 온난화 등 기상변화로 인해 자연재난(폭염, 가뭄 등)이 빈번하다. 또한, 국내외적 환경 요인으로 인해 황사, 미세먼지 등의 발생 뿐 아니라 코로나19 등 대규모 신종 감염병도 발생하였다.

이에, 소방조직의 업무영역이 과거의 화재 · 구조 · 구급을 넘어 다양한 생활안전의 영역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 11월 수원 골든플라자 화재, 2019년 3월 용인 롯데몰 공사장 화재, 2020년 4월 한 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등과 같은 대형화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 넓은 관할면적과 도심 교통정체로 인해 소방차 7분 도착률은 2019년 기준 47.4%로, 전국 평균 65.1%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지속적인 소방공무원 충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정기준 대비 근무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 소방공무원 현황('18년 기준) : 8,941명(소방력 기준 12,262명 대비 3,321명 부족)

이에 경기도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321명을 충원하는「현장 소방인력 단계별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부족 소방인력 보강을 시행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부족 소방인력 및 관서 보강계획 수립

경기도의 화재 · 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 건수는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초기에 우세한 소방력 투입이 필요한 대형화재가 빈발하는 지역적 재난환경으로 인해 소방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민선7기의 출범과 함께 2018년 11월「부족 소방인력 보강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본 계획을 통해 공무원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여 격무를 수행하고 있는 2교대제(2조2교대) 근무자를 3교대제(3조2교대)로 모두 전환할 예정이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법령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전 관서에 설치하는 등 예방인력을 중점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 '19년 경기도(전국) 소방활동 : 화재 9,421(2,359)건, 구조 223,249(52,506)건, 구급 675,986(172,340)건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수원, 용인)의 폭증하는 소방수요에 부응하고자 소방서를 추가 설치하여, 기존 관서의 안전관리 부담을 해소하고 소방서장 지휘통솔 범위 내 효율적 조직 관리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신도시 및 외곽지역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인구유입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연차별로 119안전센터 26개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2) 현장 소방인력 충원

경기도는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321명의 소방공무원을 보강하기로 하였으며, 연도별 보강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29-1] 소방인력 연차적 보강계획

('18년)8,941명 → ('19년)9,803명 → ('20년)10,675명 → ('21년)11,513명 → ('22년)12,262명			
743명	**744명**	**838명**	**996명**

○ 소방력 기준대비 부족인력 충원 : 2,027명(3조2교대 근무 100%)
- 119안전센터 1,368명, 119구조대 248명, 119구급대 411명

○ 소방안전 특별점검단 확대 등 예방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전담인력 : 423명
- 10년 주기 전수점검(연간 10%) → 3년 주기 전수점검(연간 33%)

○ 재난종합지휘센터 및 보건안전관리(현장안전 + PTSD) 전담인력 : 215명
- 119수보요원 근무 개선(3교대 → 4교대), 보건안전관리 및 소방청사·물품관리 등

○ 지역별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관서 신설 : 28개소 626명

○ 원거리 농어촌 지역대 구급대(구급차량) 배치 : 6대 30명

상기 계획에 따라, 2019년 743명, 2020년 744명을 보강하여 일선관서 예방인력 및 현장대응, 보건안전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재난 대응분야에서 소방차 현장 출동시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화재대응 및 중증환자 소생률이 향상되는 등 재난 ·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감소되었다. 소방력 보강을 통한 소방서비스 개선 효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29-2] 소방력 보강을 통한 소방서비스 개선 효과('18년→'19년)

○ 신속한 화재대응 ☞ 인명피해 3.8% ↓ (599명→576명), 재산피해 22.4% ↓ (2,704억→2,098억)

○ 구급 전문역량 향상으로 중증환자 식별 증가 ☞ 33% ↑ (68,806명 → 91,512명)

○ 3교대 증가 : 4.7%(92.6% → 97.3%) / 소방관 1인 담당인구 감소: 99명(1,508 → 1,409명)

또한 재난예방분야의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위협 요소 개선을 통한 도민 안전기반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29-3] 재난예방 분야 안전 위험요소 개선 활동('18.7.1. ~ '20.6.30.)

○ 다중이용건축물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128,942개동)으로 도민안전 위험요소 해소
○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사법활동 강화 ☞ 검찰송치 877건, 과태료 6,005건
○ 화재안전저해 3대불법행위* 대상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 인명피해 우려대상 총 40,179곳
* (3대 불법행위) 소방시설작동차단,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 비상구 폐쇄
○ 화재안전의식의 민간영역 확산을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 신고증가 : 2018년 123건 → 2020년 6월현재 2,258건 (18.4배 증가)

관내 지역특성과 환경에 맞는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과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전문자격 구급대원 265명을 보강하였다. 이로써 구급차 3인 탑승률은 21%증가(24%→45%)하였다. 3인탑승 구급차가 증가하면서 환자 이송 중 1명의 구급대원이 수행하던 '가슴압박, 인공호흡, 약물 처치' 등을 2명의 구급대원이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함에 따라,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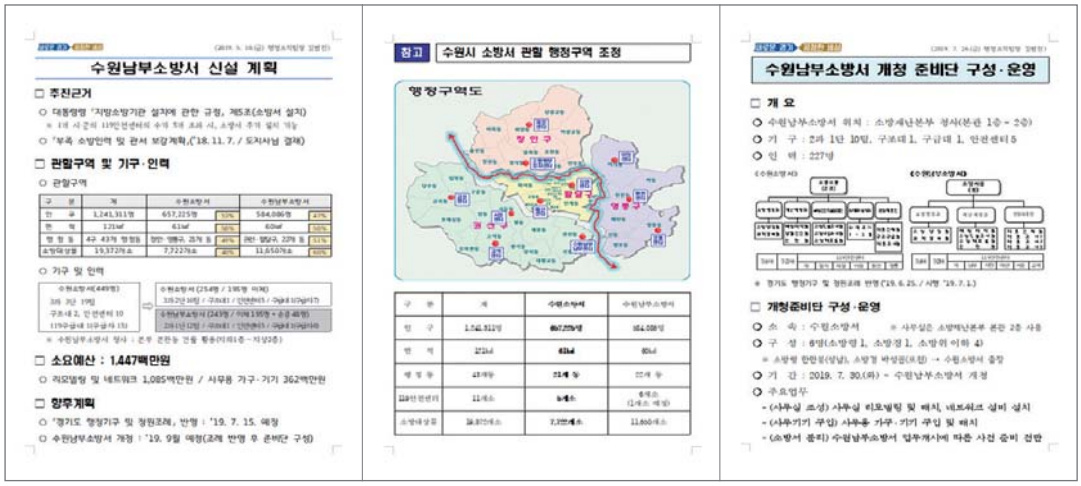
위급한 상황에 놓인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부족한 구급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여 구급대원 3인 탑승률을 100% 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고 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경기도 소방은 우수한 인재 채용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현장대원 전문능력 향상으로 2019년 세계 전문응급처치 경연대회 1위, 현장대응 전국 경연대회 3개 분야 최우수,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2위(국무총리상) 등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3) 지역별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관서 신설

신도시 개발 및 도시화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도시 · 농촌 복합지역 원거리 소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도시인 수원시에 소방서를 추가 설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수원남부소방서'를 신설하였다.

[표 129-4] 수원남부소방서 신설 계획 수립



또한 신도시 및 원거리 지역의 신속한 소방출동을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119안전센터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26개소를 신설 추진 중이다.

[표 129-5] 연도별 119안전센터 신설 계획 수립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119안전센터 신설	26	8	6	6	6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부족 소방인력 기준인건비 확보

2018년 기준, 법정 소방력 대비 부족 소방인력은 3,321명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도별 계획에 따른 필요 소방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 · 도로 산정하여 내려주는 기준인건비는 필요 소방인력을 모두 충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현장 인력난의 지속화, 신설 소방관서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직결된다.

이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 1,212명(2019년 619명, 2020년 593명)만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추가로 275명(2019년 124명, 2020년 151명)을 자체 증원하여 총 1,487명의 소방인력을 확보하여 재난현장에 배치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지역을 넘어선 초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형재난의 지속적인 발생과 이에 따른 인명피해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형재난은 당사자의 인적·물적 손실을 넘어서 우리사회 전반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회변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천/밀양화재(58명/192명 사상) →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 전국적 시행
└한 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50명 사상) → 공사장 안전 사회적 관심 ↑

서대문구 KT통신구 화재, 일산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 등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의한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예방점검 강화와 대규모 신종 전염병(코로나19, 메르스,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지속적인 발병에 대비하여 상시적 대응 및 감염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향후에도 소방인력 기준인건비 확보를 통해 현장활동대원 및 예방점검 요원, 보건안전 전문인력 등 부족 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용인서부소방서와 신도시 등 소방사각지역 신속출동을 위한 119안전센터를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설해 나감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130. 2020년 산불진화헬기 20대 운영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권영대

- 추진배경 :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 발생,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가 중요
- 추진내용 : 산불진화헬기 20대 운영(임차), '19년 기준 총 1,446회 산불진화 활동
- 문제점 및 해결 :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산불진화헬기 운영
- 평　　가 : 산불 초동진화 및 골든타임 준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는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전국에서 발생한 494건 중 36%인 17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6.19ha 산림에 피해를 입혔다. 높은 인구 밀도와 성공적인 산림복원, 등산 · 캠핑 · 주말농장 등 여가활동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졌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 도시화로 인한 토양 건조화도 산불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다.

[표 130-1] 2020년 상반기 전국 산불발생 현황

(2020.1.1~6.30)

구분	계	경기	경북	강원	전남	경남	충남	기타
건수	494	**178**	79	58	32	30	28	89
면적(ha)	2,893.85	**46.19**	2,042.00	217.07	5.58	24.49	4.00	554.52
면적/건당	5.86	**0.26**	25.85	3.74	0.17	0.82	0.14	6.23

2019년 강원도 동해안과 2020년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밀도가 높고, 산림과 인접하여 주거, 공장 등 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자칫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가 중요하다.

*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 인명 3명, 주택 553동 등 피해액 30,278백만 원

이에 경기도는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년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하여 봄 · 가을철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총 68대*를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20대를 시 · 군에 분산 배치하였다.

* 경기도 20, 경북도 15, 전남도 8, 경남도 7, 강원도 6, 기타 12(산림청, 소방청 제외)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산불진화헬기 도입과 운영

산불진화를 위한 지자체의 헬기 임차는 1997년 경남 6대, 경북 4대 등 총 10대로 시작되었다. 경기도는 2001년부터 헬기 3대를 임차하여 산불진화에 투입하였다. 현재는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20대를 운영 중이며, 시 · 군에 분산 배치하여 신속히 산불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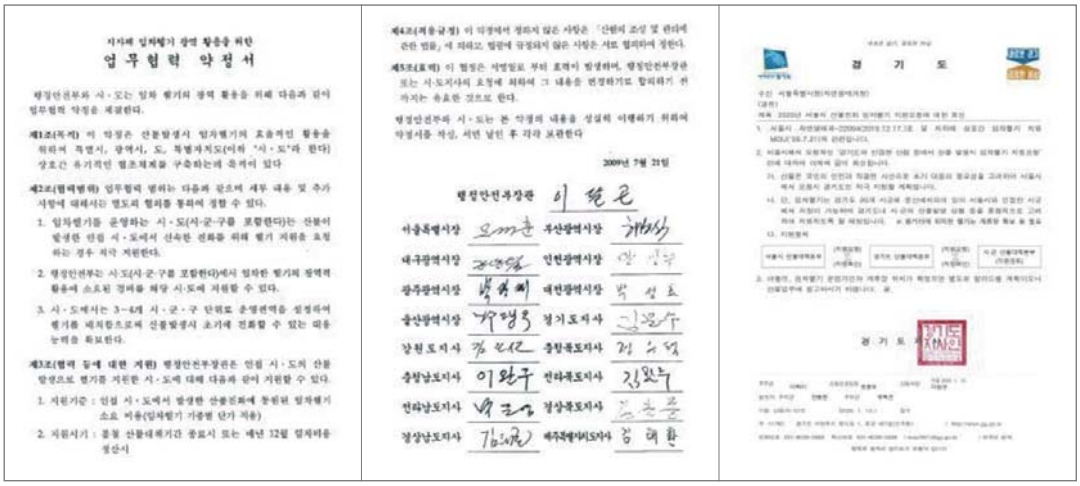
[사진 130-1] 경기도 산불진화헬기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헬기의 담수용량은 400~1,800ℓ이며 평균 800ℓ로 대부분 기동성

이 좋은 소형헬기에 속한다. 총 20대 중 18대는 18개 시 · 군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2대는 7개시에서 공동으로 임차하였다. 그 외 시 · 군에서는 산불 발생 시 인접한 시 ·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기 위해 2009년 7월 21일 '지자체 상호 간 임차헬기 지원 MOU'를 체결하여 시 · 도, 시 · 군 간 공동 진화체계를 구축하였다. 2020년 1월에는 경기도-서울시 간 산불진화헬기를 지원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표 130-2] 지자체 상호간 임차헬기 지원 MOU 및 경기도-서울시 업무협의



지자체 임차헬기 상호 활용을 위한

업 무 협 력 약 정 서

소방청장과 시 · 도지사 임차헬기 상호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산불발생시 임차헬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방법) 업무협력 방법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 및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1. 임차헬기를 운영하는 시 · 도(시·군·구를 포함한다)는 산불이 발생한 인접 시 · 도에서 산속한 진화를 위해 헬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2. 소방청장은 시·도(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임차한 헬기의 상호 활용에 소요된 경비를 해당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3. 시 · 도에서는 3~4개 시 · 군 · 구 단위로 운영권역을 설정하여 헬기를 배치함으로써 산불발생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제3조(협력 등에 대한 지원) 소방청장은 인접 시 · 도의 산불 발생으로 헬기를 지원한 시 · 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기준 : 인접 시 · 도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에 동원된 임차헬기 소요 비용(임차헬기 기종별 단가 적용)
2. 지원시기 : 공동 산불대책기간 종료시 또는 매년 12월 임차비용 정산시

제4조(계속규정)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효력) 이 협정은 서명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방청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소방청장관과 시 · 도는 본 약정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작성, 서명 날인 후 각각 보관한다

2009년 7월 21일

소방청장관 이 성 근

서울특별시장 오○○ 부산광역시장 허○○

대구광역시장 ○○○ 인천광역시장 ○ ○

광주광역시장 ○○○ 대전광역시장 ○ ○

울산광역시장 ○○○ 경기도지사 ○○○

강원도지사 ○ ○ ○ 충청북도지사 ○ ○ ○

충청남도지사 이완구 전라북도지사 김완○

전라남도지사 ○○○ 경상북도지사 ○○○

경상남도지사 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경 기 도

경 기 도 지 사 인

2) 산불진화헬기 성과

2019년 기준으로 총 1,446회 출동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산불진화 454회, 산불 예방 및 계도활동에 902회, 산림사업 자재 운반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 지원 등 90회 등이었다. 2019년 3월 2일과 4월 4일에는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에 산불진화 지원을 하였다. 軍시설(군부대, 군사격장 등) 및 민통선 내 산불 발생 시에도 산불진화헬기 지원하였다.

* 軍 시설 및 민통선 산불은 경기도 산불 통계에서 제외(2019년 40건 발생)

경기도는 산불 발생 시 신고 접수 후 현장에서 물 투하까지 30분 안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95% 이상 달성하였다. 매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산불진화헬기를 신속히 투입하여 건당 피해면적은 올해 상반기 기준 0.26ha로 최근 10년간 평균 건당 피해면적 0.36ha보다 0.1ha 감소하였다.

[표 130-3]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

(2010~2019)

구분	10년 평균	연 도 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74.4	744	7	7	11	6	48	150	113	161	69	172
면적(ha)	26.9	269.06	0.83	0.61	1.94	2.20	5.47	94.31	51.69	55.04	15.83	41.14
면적/건	0.36	0.36	0.12	0.09	0.18	0.37	0.11	0.63	0.46	0.34	0.23	0.24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20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형 헬기 위주로 산불진화에 효율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소형 헬기는 산불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담수용량이 적고 강풍이 불면 운항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020년 5월 21일 산불진화헬기 업체 관계 담당자 면담 등에서는 헬기 임차기간 및 담수용량 확대가 건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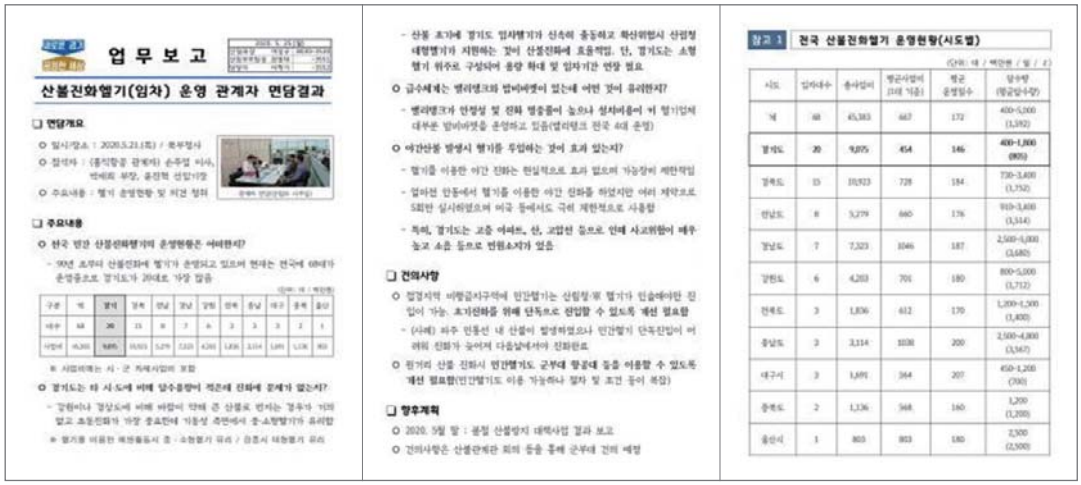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헬기의 평균 담수용량은 800ℓ로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산불진화헬기의 평균 담수용량은 1,600ℓ의 절반에 불과하다. 운영일수도 147일로 전국평균 운영일수 179일보다 32일이 적어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형적으로 강원도나 경상도에 비해 대형 산불로 확대될 위험이 적고 산불 확대 시 서울, 원주, 진천에서 산림청 대형헬기 지원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기

도는 중·소형 헬기로 초기 산불진화에 집중하고 산림청 대형 헬기가 지원하는 산불진화 헬기 진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거점 지역 4~5개 선정하여 중·대형 이상의 헬기를 임차하여 소형헬기 위주 구성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현재 담수용량이 800ℓ로 1,000ℓ 이상으로 확대 필요

[표 130-4] 산불진화헬기 운영 관계자 면담 결과



업 무 보 고

산불진화헬기(임차) 운영 관계자 면담결과

❑ 면담개요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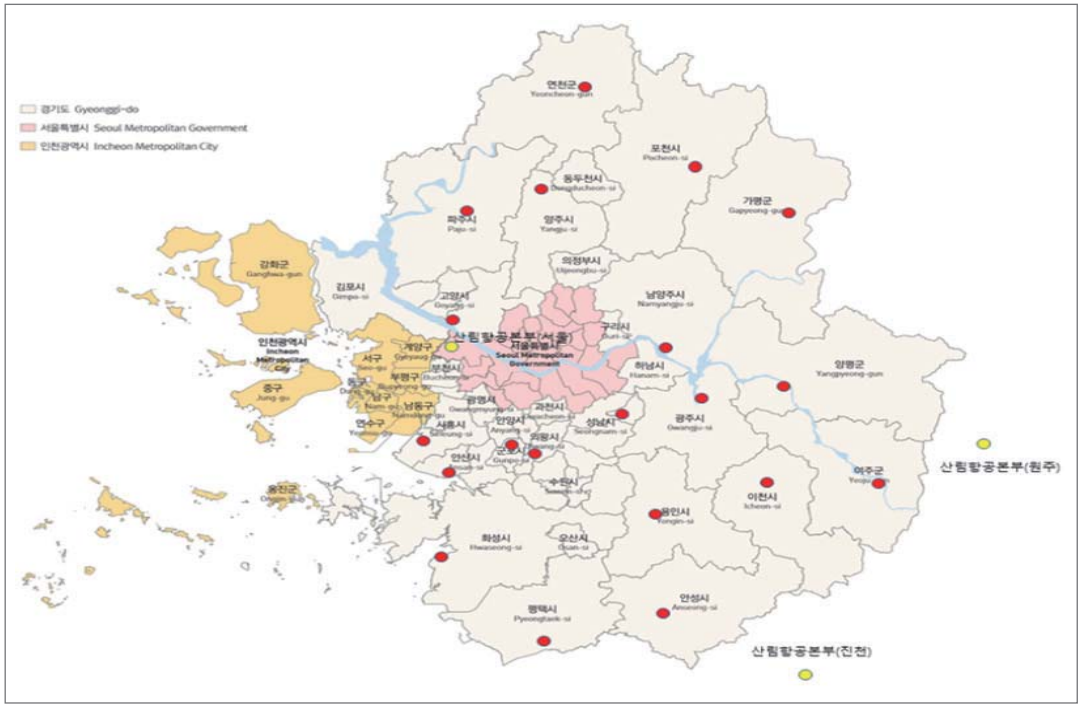
❑ 건의사항

❑ 향후계획

참고 1 전국 산불진화헬기 운영현황(시도별)

시도	임차대수	총사업비	평균사업비 (1대 기준)	평균 운영일수	담수량 (평균담수량)
계	68	45,383	667	172	400~5,000 (1,392)
경북도	20	9,075	454	146	400~1,800 (805)
경북도	15	10,923	728	184	730~3,400 (1,752)
전남도	8	5,279	660	176	910~3,400 (3,314)
경남도	7	7,323	1046	187	2,500~6,000 (3,680)
강원도	6	4,203	701	180	800~5,000 (3,712)
전북도	3	1,836	612	170	1,200~1,500 (1,400)
충남도	3	3,114	1038	200	2,500~4,800 (3,567)
대구시	3	1,691	564	207	450~1,200 (700)
충북도	2	1,136	568	160	1,200 (1,200)
울산시	1	803	803	180	2,500 (2,500)

[표 130-5] 경기도 산불진화헬기 배치 및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위치도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기후변화와 성공적인 산림복원, 여가활동 등의 증가로 인하여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인구 밀도와 도시화는 산불 피해에 취약하다. 작년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수개월 간 많은 산림을 태웠고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동해안과 안동 산불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다. 만약 대형 산불이 경기도에서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산불 예방 및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운영한다. 산불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전부 예방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산불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도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 · 군 간 공동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불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산불진화헬기의 효율적 운영으로 산불이 초기 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31.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보급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재난정보통신팀장 이준희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 훈령) 제17조 현장소방활동 관리체계 구축
- 추진내용 :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4,000대) 도입 ☞ 인식표+경보기+대원위치추적장치 통합
- 문제점 및 해결 : 유찰에 따른 사업일정 지연, '21년 1월 준공될 예정
- 평　　가 : 현장대원 모니터링으로 안전관리 체계 확보 기대 ☞ '21.1월 사업완료 예정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 훈령)」제17조(현장소방활동대원 관리체계 구축) 제2항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은 현장소방활동대원의 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실태를 살펴보면 현장활동 시 인식표를 활용한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확인은 실질적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휘차운전원 및 현장안전점검관이 건물진입 시 인식표 수거 및 안전관리 상황판 기록관리의 실질적 운영에 미흡하고, 현장 투입대원의 각종 활동정보를 수기 기록할 때 불편함이 발생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인명구조경보기와 대원위치 추적장치는 경보기능이 중복됨에도 진입대원은 현장활동 시 두 장비를 모두 착용해야 함에 따라 현장 활동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인인식표, 인명구조경보기, 대원위치 추적장치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를 도입하여,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인 현장대원 안전상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인명구조경보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경보기능 + 신호기능 + 센서기능) 도입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기존 인명구조경보기와 같은 경보기능 등을 제공하고, 대원 위치 추적장치의 신호발송, 위치추적, 탈출신호 등 신호전송 기능을 구현한다. 또한 인식표를 대신하여 현장출동 및 화재발생 건물 진입 · 진출 신호, 진입기간, 주위온도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다.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다양한 단말기(스마트폰, LTE무전기, PS-LTE무전기 등)에서 송수신 가능한 신호를 활용한다. 다양한 제조사 및 모델의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를 상호호환 운영하기 위하여 전송규격을 표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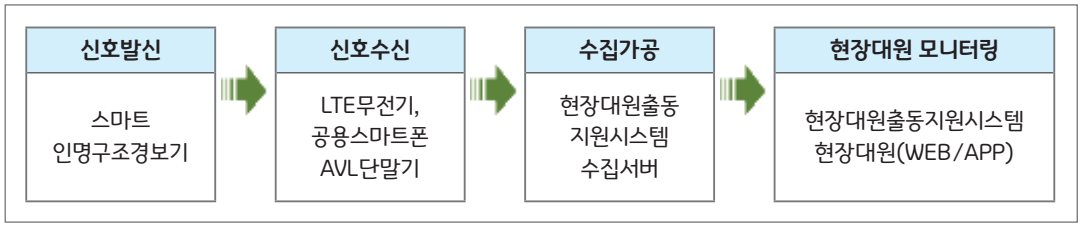
[표 131-1] 시스템 개요

2) 현장대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 인명구조경보시스템은 기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 중인 현장대원 출동지원시스템 및 차량동태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고, 대원 출동차량 탑승여부, 현장대원 현재 위치 및 상태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스마트 인명구조경보시스템은 현장대원 상

황실 WEB, 현장대원 모바일 APP을 활용한 현장대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31-2] 현장대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구성체계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 유찰에 따른 사업일정 지연

조달청 유찰로 인한 재공고('20.6.5. ~ 6.17.) 기간 소요 등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약 2개월의 사업기간이 지연되었다. 2020년 7월16일 현재,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2021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2020년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제작 및 시스템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준공 기한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대원의 활동상황을 외부에서 모니터링 하는 장치로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인식표(위험현장 진 · 출입관리), 인식구조경보기(비상시 경보음), 대원위치 추적장치(비상시 신호발신)의 기능을 통합한 장치이다. 1개 장비로 통합된 만큼 장비 경량화 및 단일화를 통하여 대원들의 불편은 해소되는 반면 현장활동 안전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첨단 Io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형 인명구조경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재난현장을 진 · 출입하는 대원들의 활동시간,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대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32. 비상구 신고포상제 활성화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장 최문석

- 추진배경 : 도민에 의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여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화재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내용 : 비상구 신고포상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도민홍보, 매뉴얼 제작 · 배부
- 문제점 및 해결 : 지역경제 활성화, 비파라치에 의한 다수신고 → 조례개정 (현금 → 지역화폐)
- 평　　가 : 비상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인명피해 사전 차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인구 1,372만 명, 특정소방대상물 수가 55만 동을 넘어서는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이다. 각종 신도시 개발 등으로 꾸준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주거시설, 공장 등 건축물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하는데, 2019년 9,42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국 화재발생 건수의 1/4를 차지하였으며, 인명피해 576명(사망 47명, 부상 529명), 재산피해 2,000여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표 132-1] 2019년 화재발생 현황

구분	화재(건)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재산피해(억)
경기도	9,421	576	47	529	2,086
전 국	40,030	2,503	284	2,219	8,059
비율(%)	23.5	23	16.5	23.8	25.9

이에 경기도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더욱 절실히 공감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소방인력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은 물론, 도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민 · 관 합동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을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 및 밀집화로 대형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특히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불량으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안전정책을 다음과 같이 실현하고자 한다.

나. 추진내용

1) 인력확대(소방안전특별점검단 신설)

경기도는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내 35개 소방서에 소방 불법행위 단속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설치하였다. 예방분야 강화를 위하여 2019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내 27소방서에 우선적으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신설하였고, 2020년 4월 1일자로 35개 전 소방서에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신설을 완료했다. 인원도 종전 302명에서 645명으로 대폭 증원하였다.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팀, 소방패트롤팀, 소방사법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특별조사팀은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화, 소방패트롤팀은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불시 무패턴 · 반복 단속

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소방사법팀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 기획수사, 특별사법경찰 및 소방관계법령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표 132-2]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조직 현황('20.4.1. 기준)

○ 재난예방과 소속에서 점검 분야 등을 분리하여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신설

구분	2019.4.1. 이전	2020.4.1. 이전	현재
인원	302명	465명	645명

○ 1차 조직개편(2019.4.1.)

개편 전

13~29명 재난예방과

예방대책	소방특별조사	민원	안전문화
5~8명	6~13명	4~8명	4~5명

개편 후

13~25명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이체	신설	신설
소방특별조사	소방패트롤	소방사법
7~17명	3~5명	3명

○ 2차 조직개편(2020.4.1.)

<조정안>

< 조직도 >

총 12~33명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소방특별조사
- 소방패트롤
- 소방사법

< 조정 내역 >

개편 전			개편 후		
팀 명	설치관서	정 원	팀 명	설치관서	정 원
소방특별조사	27개서	293명 (7~18명)	소방특별조사	35개서(+8)	449명(+156) (7~25명)
소방패트롤	27개서	91명 (3~5명)	소방패트롤	35개서(+8)	115명(+24) (3~5명)
소방사법	27개서	81명 (3명)	소방사법	35개서(+8)	81명 (2~3명)

소방사법팀(35署, +8) : 27署 + 수원남부, 의왕, 여주, 과천, 구리, 동두천, 가평, 연천

※ 소방특별조사팀 및 소방패트롤팀(+8) : 재난예방과(27署) → 소방안전특별점검단(35署)

소방안전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인원도 대폭 증원하였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만여 동의 소방대상물을 점검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에 민간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병행 운영하며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 조례개정 추진

경기도에서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2010년 4월 19일「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해당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 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조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 6차 개정 시 신고처종 확대, 현물에서 현금으로 포상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면서 폭발적인 신고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포상금 현금지급으로 나타난 일부 비파라치에 의한 포상금 독식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월 13일 7차 개정 시 포상금 지급방법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변경하게 되었다.

[표 132-3] 조례개정 사항

구 분	2019.3.13. 6차개정	2020.1.13. 7차개정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대규모점포 포함), -복합건물(조건 삭제) -운수·숙박시설 -근린생활, 문화집회, 노유자, 의료, 위락시설(5개처종확대)	변동없음
지급방법	현금 -현금(지역화폐 포함) -포상금 상한액 삭제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
신고자격	-나이 제한 삭제	거주지역 삭제

여전히 특정 대도시에서 신고가 집중되는 문제는 남아있으나, 조례 개정결과 1일 평균 신고건수 20.4건에서 조례 개정 이후로는 1일 평균 11.6건으로 약 43.1%가 감소하였다. 신고자가 다각화되는 등 무분별한 신고 저감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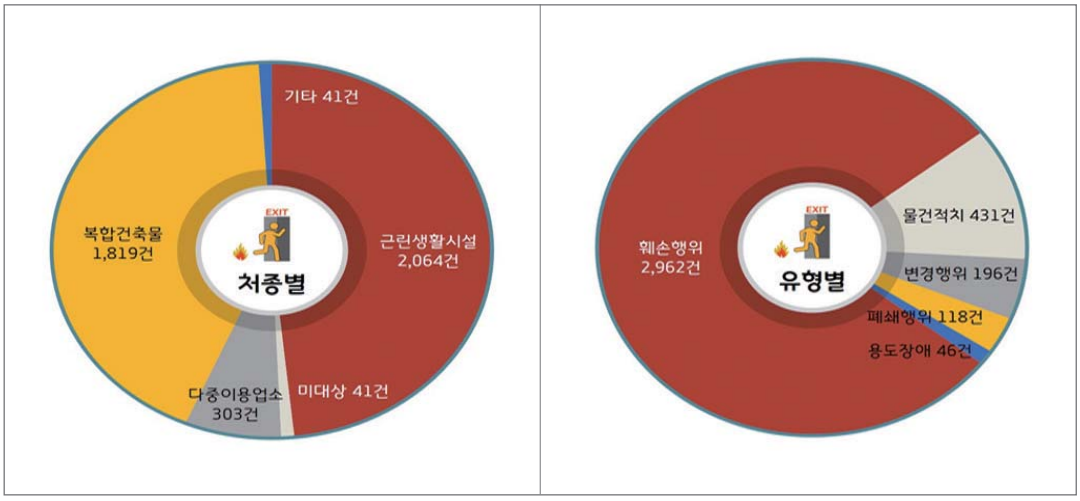
경기도는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실시하여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 2회 소방시설 관리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자체점검 시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 감독하고 있다.

3)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처종별로 보면 총 신고건수 3,753건 중 근린생활시설 2,064건, 복합건축물 1,819건, 다중이용업소 303건, 기타(판매, 의료시설 등) 41건순으로 신고 되어, 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집합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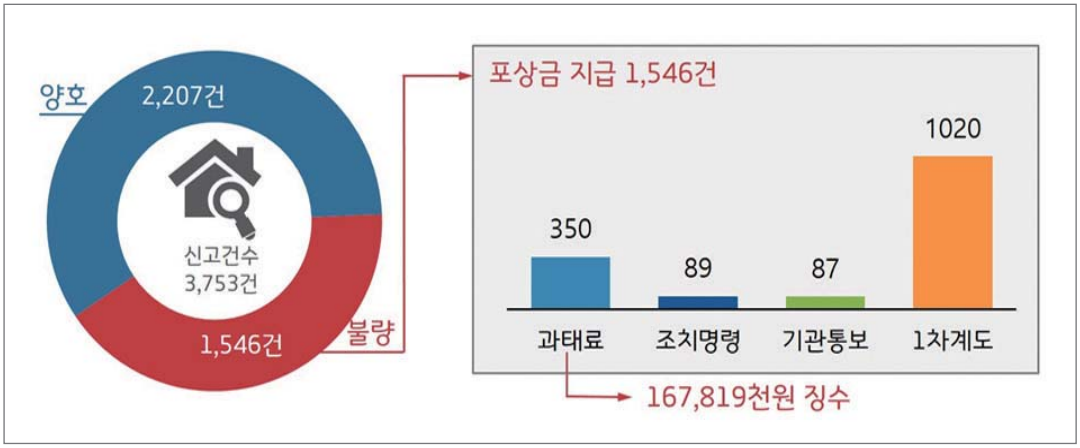
유형별로는 도어스토퍼 설치 및 도어클로저 분리 등 훼손행위 2,962건, 피난통로상 장애물 적치 431건, 방화 문을 유리문으로 변경한 행위 196건, 비상구 잠금장치 설치 등 폐쇄행위 118건, 기타 용도장애 등 46건이 신고되었다.

[표 132-4] 처종별·유형별 신고건수



이중 불량사항 1,546건에 대해 과태료 350건, 조치명령 89건, 기관통보 87건을 처분 조치하였으며, 과태료 167,819천 원을 징수하였다.

[표 132-5] 불량사항 조치결과



4)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 방위적 홍보

도민의 알권리와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언론보도, 유튜브, SNS 등 다중매체를 활용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며, 도민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132-6] 언론홍보

언론홍보	전광판 홍보	직능단체 간담회

소방서(홈페이지) 홍보	지역방송 자막송출	캠페인 등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비상구 신고포상제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비파라치 등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2020년 1월 13일 비상구 신고포상 운영조례를 개정(현금→지역화폐)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신고건수 6,224건(월평균 518.7건) 대비 2020년(6월 기준) 신고건수 2,258건(월평균 376.3건)으로 총 3,966건(월평균 27.5%)의 무분별한 신고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표 132-7] 연도별 실적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건물의 대형화와 고층화 추세에 따라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재난관리를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단계인 예방, 대비단계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화재건수는 2018년 42,338건, 2019년 40,103건, 2020년 19,446건이 발생되었다. 특히 2017년 12월 충북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망 29명,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 37명, 2018년 11월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망 7명 등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들은 모두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가장 큰 원인은 화재에 따른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였다. 이러한 사고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구의 유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제도는 우리 생활주변의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또한 도민 참여하에 안전점검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점에서 민·관이 함께 이루어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133. 음성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156개소 확대 구축

자연재난과 지진방재팀 이진우

- 추진배경 : 지진 발생 신속대응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내용 : 소방서, 도청 및 소속기관, 시 · 군청 등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설치
- 문제점 및 해결 : 지진조기경보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 평　　가 : 지진 대비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향후 지진발생 시 인명피해 저감 기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는 지진발생 시 재난수습 담당 및 구조·구급대원 등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청, 도의회, 소방재난본부 등 공공기관과 소방서, 도내 시 · 군 청사 등에 경기도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대하였다.

지진조기경보란, 국내에서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거나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 사람들의 대피가능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경보이다.

지진조기경보를 통해 피해를 주는 지진파(S파)가 도착하기 5초 전에만 지진발생 사실을 알 수 있다면, 탁자 아래로 숨는 등의 근거리 대피를 통해 최대 80%의 인명피해를 경감할 수 있고, 10초 전에 알 수 있다면 최대 90%의 인명피해를 경감[1]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 예고없는 피해를 100으로 가정할 때 피해경감 예측 연구 자료(동경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경기도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기상청에서 발령한 경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해 구내방송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기상청의 긴급재난문자 발송보다 신속하다. 또한 전용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트래픽으로 인한 지연 등의 우려도 거의 없어 신속한 지진피해 대응이 가능하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 도내 156곳 음성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완료

경기도는 2016년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전용 통신망을 구성하였다. 도내 소방서 전체 34곳 중 17곳에 지진조기경보장치를 설치해 지진발생 시 구조 · 구급대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나머지 17곳의 소방서에도 지진조기경보장치 설치를 완료하였다. 도청 및 수자원본부, 건설본부 등 지진발생시 주요 시설물 피해 수습 · 복구를 맡는 소속기관 30곳에 지진조기경보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용인시와 안양시 6곳의 지진조기경보장치를 연계 지원하여 총 53곳을 확대하였다.

이어서 2019년에는 시청 · 군청 등에 지진조기경보장치 48곳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경기도 시스템과 연계하여, 2019년 말에는 119곳에 음성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9년 용인시 자체사업으로 31개 읍·면·동에 설치한 지진조기경보장치와 2020년 의왕시 자체사업으로 6개 동에 설치한 음성 지진조기경보장치를 경기도 시스템과 연계하여, 현재 총 156곳에 음성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2016년, 2017년 연이어 국내 규모 5.0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몇 년 내에 이러한 지진이 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전문가 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진조기경보장치 설치 대상 일부 소속기관 및 시 · 군에서는 지진조기경보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여 추진이 지연될 때도 있었다. 이에 지진조기경보의 인명피해 저감 효과 및 중요성을 강조, 설득하여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설치를 완료할 수 있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현재 경기도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지진조기경보장치가 설치된 일부 관공서를 통해서만 전파할 수 있어, 조기경보 발령 시 이를 들을 수 있는 도민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읍 · 면 · 동까지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인근 주민이 지진조기경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민 · 관 협력사업으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하여 지진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

134. 전국 최초 주거용 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획득

자연재난과 지진방재팀 이진우

- 추진배경 : 지진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실시 유도
- 추진내용 :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문제점 및 해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대한 인식 및 사업절차 이해 저조
- 평　　가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8)과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4)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지진발생 시 기반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2011년부터 내진보강 계획을 세워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20년 현재 도내 공공건축물의 67.2%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상태이다.

하지만 민간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비율은 2017년 기준 12.5%에[2] 불과하며,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지진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자「지진 · 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2019년 2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2)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경기연구원 2017-7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실시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내진성능에 대한 검토 후 지진에 대해 안전한 건축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예산 및 경기도, 시 ·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주거용 건축물 ‘전국 최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획득

위와 같은 제도 도입의 결과로 2019년 9월 수원시에 소재한 ‘영통 하우스토리’ 주상복합 건축물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하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증절차를 거쳐 주거용 민간건축물 중 전국 최초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영통 하우스토리’는 주상복합 건축물로 지상 31층, 아파트 98세대, 상가 32호 규모이다. 주거용 외에도 저층부 상가에는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이 입점해 있어 지역 주민이 널리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증명판 제막 행사에 관한 취재가 KBS TV뉴스에 특집으로 전국에 방영되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2) ’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추진

2020년에는 도민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숙박시설, 전철역사, 종합병원, 버스터미널 등 다양한 민간 건축물이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물 인증을 추진 중이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2019년 2월 시행하고 신규사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제도와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인증제에 대한 이해가 낮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주거용 민간건축물 중 전국 최초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한 '영통 하우스토리'의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했다. 인증을 추진하려는 시설관리자 측에서는 구비서류, 지원조건 등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인증 신청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 및 수원시 담당자, 영통 하우스토리의 입주자대표회, 시설관리자가 모여 사업 진행절차, 지원조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논의과정에서 나온 문의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즉시 소통 · 해소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 참여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거용 민간건축물 중 전국 최초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2) 인증제에 대한 민간의 관심 저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 및 인증 지원 사업은 2019년 처음 실시되어 대부분의 도민이 제도를 알지 못하였다. 리플릿, 반상회지, 보도자료 배포 등 기존 홍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초반에는 민간건축주의 관심도가 저조하였다.

민간건축주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사업 절차 및 자부담 비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많았다.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한 사업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의 발굴 및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건축물 내진확보에 대한 관심이 깊은 민간건축주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에 대해 문의한 민간건축주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사항 및 절차를 집중 안내하고 신속하게 응대하였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 및 시 · 군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대상을 신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금 지급절차 개선 등을 적극 건의하여 사업추진을 더디게 하는 요소를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 2019년 11월과 12월, 2020년 2월과 5월에는 도민이 접하기 쉬운 G버스 TV 홍보매체를 통해 경기도 전역 및 서울 진출입 버스에 광역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간 건축주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2019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의 실시 초기에 사업 참여에 관심을 가진 건축물은 업무시설 등 건축물 주 이용자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다양한 시설물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앞으로 더욱 많은 도민이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8곳, 주상복합 3곳, 병원 2곳, 어린이집 2곳, 전철역사 등 운수시설 2곳, 리조트·추모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이 각 1곳 등 총 총 21곳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지속적인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현재 내진보강을 실시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참고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135.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노동권익과 산재예방팀장 이승준

- 추진배경 : 안전수칙 미 준수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계도로 안전문화 정착
- 추진내용 :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자 선발(10명), 5개 권역(10개시) 집중점검
- 문제점 및 해결 : 지자체 감독권한 부재, 道 조례 규정에 근거 지속 점검실시
- 평　　가 : 노동자의 생명존중과 산업재해 예방 기반조성에 기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산업현장에서 안전규정 미준수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위험한 노동환경 방치의 결과로, 유형이나 규모면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사망사고 발생 후의 사후조치 보다는 산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는 안전조치 미 준수 산업현장에 대한 상시점검·계도를 통해 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율을 감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2020년 4월부터 건설안전분야 민간경력전문가로 구성된「노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하여 안전점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협업체계 구축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8년 3월 20일「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서는「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현장 출입허용 등 사업주의 협조를 규정했다. 동 조례를 근거로 현장 점검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중점 진행하는 사

업인 만큼 현장에서의 협조도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일부 안전조치 요구에 대한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다. 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청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

[표 135-1] 안전점검 활동절차

현황분석	현장점검	불량현장 통보	감독요청	이행확인
사업장 현황 <지자체 협조>	안전수칙 준수여부 <노동안전지킴이>	고위험 불량 현장 유관기관 통보 <지자체, 안전공단>	불량현장 감독요청 <노동지청>	불량현장 감독 이행 확인 <노동안전지킴이>

2)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는 최근 3년간('17~'19년) 산재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던 10개 지역(수원, 화성,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부천, 김포, 안산, 시흥)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135-1] 현장점검활동 및 간담회

구체적으로는 수시점검, 합동점검 등을 통해 노동자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설치 등 주요재해 유형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

였고, 기계 · 장비작업 신호수 배치, 화재감시자 배치 등까지 살펴보았다. 2020년 4월부터 888개소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2,446건을 시정조치 하였다.

3) 도정현안 자동응답조사 결과 및 확대 요구

경기도 홍보기획관 리서치팀에서 '산업재해'를 테마로 자체 기획하여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산업현장 경험자 층에서 산업현장에서 전반적인 산재예방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② 특히,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긍정인식이 75%로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해 볼 만하다.

[표 135-2] 도정현안 자동응답조사

지난 4월 29일,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국회의원 44명과 공동주최하였던 바, 산업현장에서 노동환경 기준조건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노동안전지킴이」운영 확대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여부 감독 권한 부재

현재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관이 관리 감독하는 체제가 유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 직접 운영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 시, 현장출입에서부터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었으며, 그때마다 담당자가 현장 관계자와 유선으로 협조를 구하곤 해야만 한다. 심지어 안전조치가 매우 시급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요구하느냐?"라며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현장도 있다. 이 경우 뒤로 한발 물러서서 노동지청에 감독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감독권한 부재로 인한 현장에서의 강력한 대응의 한계이다.

2)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활동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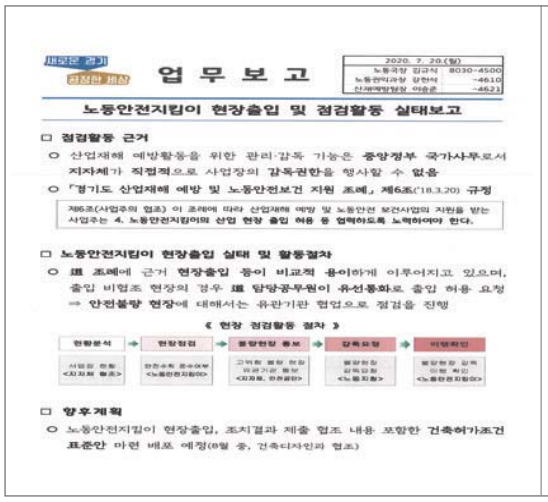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관리감독 기능은 국가사무로써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사업장의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나,「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6조(사업주의 협조)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 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축허가조건에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 근거 마련

경기도에서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관련「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을 마련하여「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에 협조할 수 있도록 배포예정 중에 있다.

[표 135-3] 경기도 건축공사장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



업 무 보 고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출입 및 점검활동 실태보고

□ 점검활동 근거

○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관리·감독 기능은 중앙정부 국가사무로서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사업장의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6조(18.3.20) 규정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 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출입 실태 및 활동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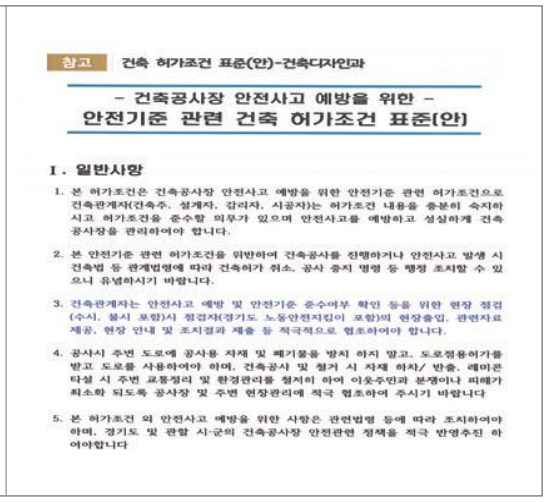
○ 1회 조례에 근거 현장출입 등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입 비협조 현장의 경우 1회 담당공무원이 유선통화로 출입 허용 요청
⇒ 안전불량 현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업으로 점검을 진행

《 현장 점검활동 절차 》

현황분석 → 현장점검 → 불량현장 통보 → 감독요청 → 이행확인

□ 향후계획

○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출입, 조치결과 제출 협조 내용 포함한 건축허가조건 표준안 마련 배포 예정(8월 중, 건축디자인과 협조)



참고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건축디자인과

–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

Ⅰ. 일반사항

1. 본 허가조건은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관련 허가조건으로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는 허가조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허가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실하게 건축공사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본 안전기준 관련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점검(수시, 불시 포함)시 점검자(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포함)의 현장출입, 관련자료 제공, 현장 안내 및 조치결과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공사시 주변 도로에 공사용 자재 및 폐기물을 방치 하지 말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및 철거 시 자재 하차/ 반출, 레미콘 타설 시 주변 교통정리 및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웃주민과 분쟁이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공사장 및 주변 현장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허가조건 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건축공사장 안전관련 정책을 적극 반영추진 하여야합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운영사업은 관리감독의 직접적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측면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부분적으로 10개 지역에서만 활동하고 있지만, 도내 전 지역에서 노동자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산업현장에 대한 점검과 현장계도를 통해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용주의 노동자 생명존중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36.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100ℓ에서 75ℓ로 하향추진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장 윤진훈

- 추진배경 : 환경미화원 작업 중 부상방지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추진내용 : 6개 시 하향조정 조례 개정완료, 20개 시 추진결정
- 문제점 및 해결 : 주민 반대 및 불만 우려 → 추진결정 전 주민 설문조사, 시행 전 충분한 홍보
- 평　　가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100ℓ에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25㎏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압축해 버려질 경우 규정무게를 초과하여 최대 45㎏까지 채워 배출된다. 가득 차 버려진 종량제봉투는 환경미화원 2인이 수거하는 것도 버거우며,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손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왔다.

* 환경미화원은 근무여건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피로 누적에 따른 위험대처능력 저하로 사망사고 발생('17.11.16. 광주남구/'17.11.29. 광주서구/'18.2.23. 서울 용산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장 · 군수 권한이다.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종량제봉투는 각 시 · 군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제작 및 판매한다. 종량제봉투 제작 가능한 용량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100L로 다양하며 각 시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제작용량 조정이 가능하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경기도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중 부상을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인 100L를 75L로 하향조정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시 · 군의 자율적 조례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5월 12일 경기 남부권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북부권(14일), 동부권(19일), 서부권(22일) 4개 권역으로 나눠 시 · 군 청소부서 담당과장과 도-시 · 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의에 나섰다. 권역별로 이미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 조정을 결정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의정부시 등 4개시의 추진 사례를 공유하면서 추진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사진 136-1] 종량제봉투 하향조정 도-시·군 간담회

<table>
<tr><td> </td><td> </td></tr>
<tr><td>남부권(5.12.)</td><td>북부권(5.14.)</td></tr>
<tr><td> </td><td> </td></tr>
<tr><td>동부권(5.19.)</td><td>서부권(5.22.)</td></tr>
</table>

이미 추진하고 있는 4개시의 관계자는 100L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보다 상가 및 소

규모 공장에서 배출량이 많다고 하였다. 상가의 음식물 쓰레기, 젖은 쓰레기, 일회용 기저귀, 소규모 공장의 작업 후 잔여물 등이 혼합 배출되어 25kg인 규정 무게를 초과하므로, 100L 종량제봉투를 75L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시 · 군 간담회 추진 결과 고양시('20.7월), 평택시('20.6월) 2개시가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총 6개시가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조정 조례개정이 완료되었다. 수원시 등 20개 시 · 군은 하향조정을 결정하여 추진예정이다. 화성시 등 5개 시 · 군은 100L 종량제봉투의 높은 수요량과 제작 중단 시 혼란이 우려되어 내부검토 중이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과 환경미화원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100L 종량제봉투 제작중단에 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행 전 충분한 사전 홍보 시행이 필요하다.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으로 75L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이불, 대형쿠션 및 대형인형 등을 대형폐기물로 분류하는 등 배출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하향조정한 의정부시는, 시행 전 · 후에 환경미화원 안전 예방을 위한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조정에 대한 홍보를 다방면을 통하여 시행하였다. 그로 인해,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과다 발생하지 않았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조정은 효율성, 편리성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수거자와의 상호 이해를

통한 노동 존중 문화를 정착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추진예정이거나 내부검토 중인 시 · 군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독려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많은 시 · 군에서 종량제봉투 용량을 조정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37. 방범 CCTV 확대 설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영상정보팀장 오흥석

- 추진배경 : 민선7기 공약과제 324번. 더 안전해진 경기도
- 추진내용 : 통학로 및 방범 CCTV 설치, 저화질 CCTV 교체,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 문제점 및 해결 : 방범 CCTV 확대 설치 정책적 지원 및 시·군 협업체계 강화
- 평　　가 : 안전한 경기도 구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34,269곳 108,794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밀집, 산업화로 인한 소외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사건 ·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방범용 CCTV 설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흉악범죄,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어린이 납치 유괴사건 등 다양한 범죄의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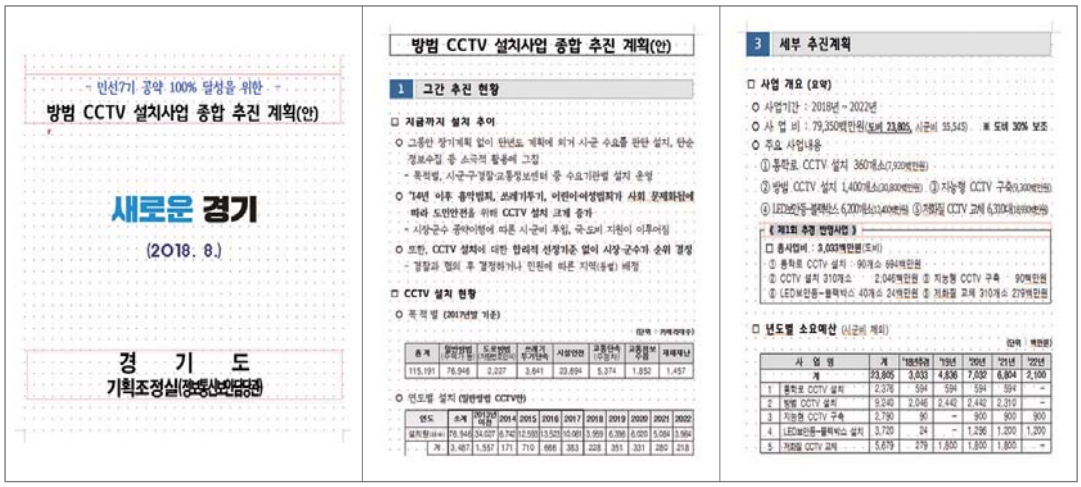
경기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통학로 CCTV 설치 ▲방범 CCTV 설치 ▲저화질 CCTV 교체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를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방범 CCTV 확대 설치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645억1천3백만 원(도비 193억5천4백만 원, 시·군비 451억5천9백만 원)을 투입해 방범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통학로 CCTV는 23억7천6백만 원이 투입돼 360곳에 1,440대가 추가 설치된다. 대상지역은 도내 중 · 고등학교 가운데 통학로 100m 이내에 CCTV가 없는 352개교를 포함한 360곳이다.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 CCTV는 92억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400곳에 5,600대가 설치된다. 도는 그동안 CCTV 설치에서 소외됐던 외곽지역에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표 137-1] 경기도 방범 CCTV 종합 추진계획(안)


- 민선7기 공약 100% 달성을 위한 -

방범 CCTV 설치사업 종합 추진 계획(안)

새로운 경기

(2018. 8.)

경 기 도

기획조정실(정보통신화담당관)

방범 CCTV 설치사업 종합 추진 계획(안)

1 그간 추진 현황

□ 지금까지 설치 추이

○ 그동안 장기계획 없이 단년도 계획에 의거 시군 수요를 판단 설치, 단순 정보수집 등 소극적 활용에 그침

- 목적별, 시군구경찰·교통정보센터 등 수요기관별 설치 운영

○ '14년 이후 흉악범죄, 쓰레기투기, 어린이·여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도민안전을 위해 CCTV 설치 크게 증가

- 시장군수 공약이행에 따른 시군비 투입,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짐

○ 또한, CCTV 설치에 대한 합리적 선정기준 없이 시장·군수가 순위 결정

- 경찰과 협의 후 결정하거나 민원에 따른 지역(동별) 배정

□ CCTV 설치 현황

○ 특적별 (2017년말 기준)

총계	합계	도로방범 (지방비포함)	주택가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신호위)	교통정보 수집	재해재난
115,191	76,946	2,227	3,641	23,694	5,374	1,852	1,457

○ 연도별 설치 (일반방범 CCTV만)

연도	총계	2013년 이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설치량(대수)	76,946	34,027	6,747	13,593	15,061	3,999	6,396	6,020	5,064	3,964	
계	3,487	1,557	171	710	666	383	228	351	331	280	218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 개요 (요약)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79,350백만원(도비 23,805, 시군비 55,545) ※ 도비 30% 보조

○ 주요 사업내용

① 통학로 CCTV 설치 360개소(7,920백만원)

② 방범 CCTV 설치 1,400개소(30,800백만원) ③ 지능형 CCTV 구축(3,300백만원)

④ LED보안등-블랙박스 6,200개소(13,640백만원) ⑤ 저화질 CCTV 2,8에 6,300대(16,590백만원)

《 제1회 추경 반영사업 》

□ 총사업비 : 3,033백만원(도비)

① 통학로 CCTV 설치 : 90개소 594백만원

② CCTV 설치 310개소 2,046백만원 ③ 지능형 CCTV 구축 90백만원

④ LED보안등-블랙박스 40개소 24백만원 ⑤ 저화질 교체 310개소 279백만원

□ 년도별 소요예산 (시군비 제외)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18(추경)	'19년	'20년	'21년	'22년
계	23,805	3,033	4,836	7,088	6,804	2,100
1 통학로 CCTV 설치	2,376	594	594	594	594	-
2 방범 CCTV 설치	9,240	2,046	2,442	2,442	2,310	-
3 지능형 CCTV 구축	2,790	90	-	900	900	900
4 LED보안등-블랙박스 설치	3,720	24	-	1,296	1,200	1,200
5 저화질 CCTV 교체	5,679	279	1,800	1,800	1,800	-

저화질 CCTV는 얼굴과 차량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2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49억4천8백만 원의 예산으로 6,315대를 교체한다. 교체작업이 마무리되면 경기도내 CCTV는 모두 고화질로 운영돼 범죄예방과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폭행, 배회 등 특정 범죄 · 사고 행동유형을 CCTV가 자동

으로 감지하여 관제요원 모니터 화면에 자동 표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관제시스템은 모니터링 전문요원이 24시간 화면을 지켜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도는 27억9천만 원을 투입해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31개 시 · 군에 도입할 예정이다.

2) 주요 성과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방범 CCTV 2,347곳 9,219대(통학로 CCTV 228곳 924대, 방범 CCTV 2,119곳 8,295대)를 확충했고, 저화질 CCTV 3,846대 교체, LED보안등-블랙박스(부천, 여주)는 46곳에 설치했다.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2018년 남양주시가 시범 구축했으며 2020년에 11개 시 · 군에서 구축 중인데, 상반기에 5개 시·군(용인, 의정부, 하남, 여주, 가평)이 구축을 완료했다.

CCTV 설치가 증가되면서 최근 4년간 경기도 내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범죄 발생 건수는 폭력이 7만2천623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 4만1천111건, 성범죄 5천108건, 강도 166건, 살인 195건 순이었다. 방범용 CCTV 방범 인프라 확충이 범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표 137-2] 5대 범죄* 발생건수('18.12.31.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건수	130,598	126,023	119,044	119,203	
증감(비율)	-	4,575(3.5%↓)	11,554(8.8%↓)	11,395(8.7%↓)	

* 5대 범죄 :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범죄예방(신고) 및 영상정보 활용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관제인력이 사건 · 사고를 탐지해서 경찰 등에 신고한(강력범죄, 재난/화재, 교통사고 등) 범죄예방(신고) 건수는 10,070건이고, 경찰 · 소방에서 범죄, 재난, 화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에 요청한 영상정보 활용 건수는 122,872건으로 나타났다.

[표 137-3] 범죄신고 및 영상정보 제공 건수('19.12.31.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범죄예방(신고) 건수*	5,403	6,103 (13.0% ↑)	8,698 (42.5% ↑)	10,070 (15.8% ↑)	
영상정보 활용 건수**	61,582	76,022 (23.4% ↑)	90,135 (18.6% ↑)	122,872 (36.3% ↑)	

* 범죄예방(신고) : 관제인력이 사건·사고를 탐지해서 경찰 등에 신고한 건수(강력범죄, 재난/화재 등)

** 영상정보 활용 : 경찰, 소방에서 범죄, 재난, 화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에 요청한 건수

현재 경기도는 31개 시 · 군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양주시, 포천시가, 2020년에는 구리시가 구축이 완료되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CCTV를 통합 관리하여 각종 사고 및 범죄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2020년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방범용 CCTV 추가 증설 및 설치 확대에 대한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각 80%, 91%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도 88%나 되었다. 또한 CCTV 설치가 필요한 곳은 범죄취약지역(28%) > 통학로(17%) > 여성거주 및 1인 가구 밀집지역(16%)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진 137-1] 방범용 CCTV 및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학로 CCTV】

【방범 CCTV】

【CCTV 통합관제센터】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방범 CCTV 설치 예산 지원 및 중앙부처 건의

방범 CCTV 설치 사업은 국비, 도비, 시 · 군비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 군에서는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 여건 및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도비보조율 상향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재정자립도 낮은 시 · 군의 도비보조 확대를 위해 2019년 SOC 분야 정책사업으로 반영하였다. 시 · 군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계획을 안내하여 수원시 등 16개 시 · 군에 162억4천2백만 원을 지원하여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도모하였다. 또한 방범 CCTV 설치에 대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국비)를 신청하여 수원시 등 21개 시 · 군이 217억2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

아울러, CCTV 설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시설유지비 및 통신, 전기 등 공공요금의 시 · 군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의 국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관계부처(행안부)에 건의하였고, 지속적으로 경기도 차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 방범 CCTV 설치사업 점검 및 도, 시·군 담당공무원 영상회의 개최

경기도는 CCTV 설치사업의 도비보조 대상 시 · 군의 사업별 추진상황, 설치 및 운용 실태, 부진사유 및 향후계획 등 점검을 추진하였다. 점검결과 사업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시 · 군에서 도비보조사업 추진 시 심의위원회 개최, 경찰 협의,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 확정 후 수요를 도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사이버 침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인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경기도는 방범 CCTV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시 · 군 담당공무원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2020년 4월 28일 도 영상회의실 ↔ 31개 시 · 군 영상회의실 간 영상정보팀장,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CCTV 도비보조사업(통학로, 방범, 저화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방송기능을 활용한 CCTV 현장대응 강화방안, 방범 CCTV 설치 필요지역 전수조사 등을 설명했다. 또한, 시 · 군 우수사례 발표, 협조사항 전달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와 시 · 군은 방범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사진 137-2] 방범 CCTV 및 통합관제센터 도, 시·군 담당공무원 영상회의('20.4.28.)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현재 34,269곳 10만8,794대이다. 2022년이 되면 도비보조 사업으로 779곳 3,116대를 더해 35,048곳 11만1,910대가 된다. 여기에 각 시 · 군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CCTV 설치계획과 국비 지원 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11만대를 훌쩍 넘어 더욱 촘촘하게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CTV 촬영 영상을 모두 수집 · 저장 · 이용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설치와 운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 12월 16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을 마련한 후 다음해 9월 13일 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입법 예고하였으나, 아직도「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입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헌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범죄 수사 등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구체적 요건 · 절차 · 대상기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보다 상세히 법률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영상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와 그 정보의 불법유통 문제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영상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안전하고 따듯한 경기 구현” 비전 실현을 위해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

138.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완료(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

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장 나명숙

- 추진배경 :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영유아 사망사고 발생으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추진내용 : 도내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 문제점 및 해결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 강화
- 평　　가 :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안전사고 근절 기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3년 3월 충청북도 청주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 발생 등 계속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13.5월)」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차량에 만 4세 유아를 방치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규정은 존재하나 실질적 안전을 확보할 방법이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도로교통법」개정과 함께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추진계획 수립

경기도는 2018년 7월 17일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남겨졌던 4세 아이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통학차량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통학차량 운전기사가 하차 전 차량 내부의 아동 유무를 확인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여 차량 내 영유아 방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은 사업비 12억여 원을 투입하여 도내 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설치하는 것으로 통학차량 1대당 2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2018년 8월 27일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8년 9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벨 방식으로 시동을 끈 후 운전자가 차량 맨 뒷자리 확인 벨을 눌러야 차량 내·외부 경광등과 경보음 울림을 해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2) 경기도 내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완료

경기도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 사업을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추진하였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원장 집합교육과 함께 통학차량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교육을 병행하였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4,421개 어린이집 통학차량 5,677대에 설치를 마쳤고, 사업비로 11억 3,800여만 원을 집행하였다.

경기도는 통학차량 사고 근절을 위해 매년 정부합동 미신고 시설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표 138-1] 어린이집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보도자료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경기도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아시아뉴스통신= 지현우기자) 송고일시 : 2019-03-31 13:30

경기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이 최종 완료했다. 경기도는 이에 여해 올해 본예산에 44억원을 확보(도비 30%, 시군비 70%) 오는 4월 중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 장구 추가 설치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억원(국비 50%, 도비 50%)을 편성, 도내 4422개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차량 5691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일보

HOME 정치 도의정

경기도,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완료... 유아용 카시트 안전보호 장구도 지원

최현호 기자 | 승인 20190331 2001 | 2면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44억 원을 확보(도비 30%, 시·군비 70%), 4월 중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 장구 추가 설치 지원에도 나선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억 원(국비 50%, 도비 50%)을 편성, 도내 4천422개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차량 5천691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사업'을 추진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통학차량의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영유아 안전은 확인 또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안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외에도 4월 중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장구 설치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후 1년간 빈틈없이 점검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는 예방이 우선이다. 특히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의 경우 피해 대상이 영유아이고, 그간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은 설치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인증 받은 제품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작동은 제대로 되는지,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의무는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9년 4월 17일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의무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경찰청과 정부기관 합동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위한 홍보('19.4.17.~5.16.)와 집중 단속('19.5.17.~7.16.)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9년 말

동절기 안전점검에 맞춰 하차확인 장치 설치와 작동유무를 재확인함으로써 1년 동안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어린이집에 안착시킬 수 있었다.

2) 매년 정부합동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시설 점검으로 안전점검 범위 확대

경기도는 2019년부터 정부합동으로 매년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시설을 점검하여 통학차량 관련 사고를 원천 봉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비롯해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차량구조 장치까지 범위를 넓혀 촘촘하게 점검하고 있다. 2020년 정부합동 점검에서는 안전교육 미 이수, 안전표시 장치 부적합 등 총 63대의 통학차량을 점검하여 시정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어린이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자칫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소홀히 하더라도, 기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여러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영유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로 차량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2018년도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에 이어 2019년도에는 통학차량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3,891개소 어린이집에 보호용장구 58,008개를 지원하였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예방 한다는 자세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제5절 모두를 지키는 사회안전망 구축

139. 재난대응 물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자연재난과 지진방재팀 홍종원

- 추진배경 : 지진, 태풍,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대비 방재물자 지원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지역 복구 및 안정 지원
- 추진내용 : 광역방재거점센터 1곳, 방재비축창고 60곳 운영 및 방재물자 126개 품목 비축 관리
- 문제점 및 해결 : 시·군과 협의, 재난수습부서 및 소방재난본부와 협력
- 평　　가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가능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2016년 11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의 일환으로 광역방재거점센터·방재비축창고 구축 및 방재물자 비축 사업 추진하였다. 2019년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 감염병 등 모든 재난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기도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조·구급요원이 사용할 수 있는 구급·구조물자 57개 품목과 이재민과 복구지원 인원이 사용할 복구·생활지원 물자 69개 품목으로 총 126개 품목 70만개를 광역방재거점센터와 방재비축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광역방재거점센터는 광주시 곤지암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관면적이 2,400㎡로 방재비

축물자 126개 품목을 보관하고 2018년 4월부터 운영 중이다. 방재비축창고는 경기도에서 창고 설치, 물품구매 · 관리를 담당하고, 시 · 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협업사업으로 추진되어 도내 31개 시 · 군에 60곳이 설치되어 있다. 개소 당 42㎡로 61개 품목의 방재비축물자를 보관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표 139-1] 거점센터 및 비축창고 위치도

● 광역방재 거점센터
(광주시 곤지암읍)

● 방재비축창고
(31개 시 · 군, 60곳)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경기도 방재물자 비축 모델 전국 확대 추진 중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거점센터 · 비축창고 및 방재비축물자 모델'을 전국 17개 시 · 도에 확대를 추진 중으로, 2020년 5월 20일에 시 · 도 업무담당 회의를 개최하였다. 행정안

전부 업무담당 공무원이 경기도 거점센터 · 비축창고에 직접 방문하여 경기도 방재비축물자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전국 확대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을 논의하였다. 대전시, 서울시, 강원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하여 방문하였다.

* 거점센터 방문현황 : 행안부 2회('20.5.22., 6.19.), 대전시(5.25.), 서울시(5.27.), 강원도(6.9.)

경기도는 그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사업이 효과적인 추진될 수 있도록 물자관리 QR코드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재난 발생 시 방재물자를 시 · 도간 원활한 응원 및 관할 시 · 군 · 구에 지원 가능하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행정안전부에 개정건의하였다.

2) 태풍, ASF, 코로나19 등 신속한 재난대응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를 운영하면서 태풍, 메르스, ASF 등을 비롯하여 금년 코로나19까지 재난 대응을 위하여, 2020년 6월 말까지 42회 61개 품목을 14개 실 · 과에 불출하였다.

특히, 2020년 1월 26일 경기도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에는 감염병관리과의 요청에 따라 확진자 발생 지역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개인보호구, 손소독제 등 4개 품목 4,572개를 불출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119구급대 현장 활동,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다중이용시설 점검,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재난 기본소득, 신천지 예배시설 현장 확인 등에 지속적으로 개인보호구세트, 손소독제, 비멸균장갑 등 소요되는 물자를 불출하여 코로나19에 대응토록 하였다.

* 코로나19 대응('20.1.27.~7.26.) : 감염병관리과 등 15개 실·과, 16개 품목, 140,052개 불출

[사진 139-1] 방재비축물자 지원

소방재난본부(1.31.)

군포보건소(2.12.)

제1호 용인생활치료센터(3.19.)

3)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 道 통합관리

거점센터 · 비축창고 및 방재물자 관리는 물류전문업체로 일원화하였고, 광역방재거점센터는 '재난대응 통합 물자관리 시스템'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광역방재거점센터 1개소와 방재비축창고 60개소를 도 관할 하에 통합 운영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방재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 방재 물자를 즉시 운송하는 수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만큼 보다 신속하고, 시 · 군 경계 없는 현장 대처가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4) 방재 창고시설·물자 재난부서 공유

재난 발생 후 긴급으로 물자를 구매해도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재난마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물자를 재난수습부서별 구매 시 중복구매가 우려되고, 재난 대응을 위하여 구매한 물자가 남을 경우 보관 장소 부족으로 사무실 등에 분산하여 보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기도는 2020년 1월 창고시설 및 방재물자 공유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6월 30일 기준 자연재난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및 소방재난본부 등 4개부서의 물

품을 보관하는 등 창고시설·물자를 재난부서와 공유하고 있다.

5)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업근거 마련 - 2019.4.29.

광역방재거점센터 · 방재비축창고 및 방재비축물자 운영사업은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다. 대응 할 수 있는 재난이 지진에 한정되어 있었는데「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진에 한정된 것을 모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표 139-2]「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신구 조문 비교

당 초	개 정(2019.4.2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 마. "삭 제"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자재 비축용 창고신축·임차, 물자·장비 구입은 지진을 대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삭제"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 마. "삭 제"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한파, 폭염, 미세먼지 등 재난관리를 위한 자재(물품 · 장비)구입 · 임차, 자재(물품 · 장비)비축용 창고의 신축 · 임차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삭제"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비축물자로 모든 재난 대응 한계

방재비축물자는 재난에 대비하는 것으로 어떤 재난이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하기에 비축물자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재난 대응에는 비축 중인 방재물자로는 한계가 있다. 전국 단위 재난으로 수요 물자구매는 시장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주요 물자는 품귀현상 및 가격이 급등하는 양태를 보인다.

따라서, 재난수습부서 및 소방재난본부에 재난 대응에 필요한 물자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물자구매계획에 반영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초기에는 비축물자를 불출하여 지원했다. 수요가 많은 물자에 대하여는 마스크, 개인보호구세트 등은 지속적으로 생산업체에 현장 방문 · 협의하여 구매선을 확보하고, 수요부서와 연결하여 수요물자를 구매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2) 주변인식의 문제

사업초기 발생하지도 않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재비축물자를 대량 구매 · 비축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연한이 도래되어 폐기되는 물자에 대한 매몰비용 등 우려로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하여 내용연한 도래 전에 소방재난본부에 소관전환, 일선 소방서에 지원함으로써 폐기되는 물자가 없도록 하였다.

3)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하여 원활한 재난대응 곤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방재물자의 원활한 시 · 도간 응원 및 정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시 · 군 · 구에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시 · 도 보유 비축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방재비축물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

[표 139-3] 법령개정 건의(안)

○ 시·도간 방재비축물자 지원(응원)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19.11.25.)

○ 시·도 방재물자의 관할 시·군·구 무상양여 근거 규정 신설 건의('20.6.15.)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제46조(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다른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
③ (신 설)	③ 시 · 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발생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물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방재물자의 시 · 도와 시 · 군 · 구 상호 간 원활히 응원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6조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광역방재거점센터 · 방재비축창고 및 방재비축물자 운영사업은 재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 · 군 경계 없이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난별 재난수습부서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난 대응 물자의 공유체계 구축으로 복합재난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재난수습부서 및 소방재난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재난별 소요 방재물자를 미리 예측 · 선정하는 등 신속한 재난대응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40. 코로나19 대응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장 전은경

- 추진배경 : 코로나19 세계적인 유행(pandemic) 및 국내 확산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 위험 직면
  ※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 "심각"(최고단계, '20.2.23.~)
- 추진내용 : 민관 합동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신속 검사 · 치료체계 마련, 선제적 행정행위
- 문제점 및 해결 : 민관 협력을 통한 병상 및 의료인력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
- 평　　가 : 경기도형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안전 확보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다. 2003년 유행했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2012년 유행했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자 올해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3월 11일에는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하였다. 9월말 현재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240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98만 명에 이르고 있고, 아직도 그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되었다. 이후, 1월27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수준으로 격상하고 유지하였으나, 2월말 대구 ·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특정 종교 집단을 통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자 2월 23일 위기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자 기존 '경기도 방역대책반(반장 보건건강국장)'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7개반)'를 1월 27일 확대 · 설치하고 모든 도정역량을 기울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중앙방역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자체 방역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을 저지함으로써 방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함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되었다. 민관 합동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운영, 전국 최초 역학조사관 확대 운영, 확진자 등 치료병상 확대, 생활치료센터 및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및 홈케어시스템 운영 등이 이에 속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민관 협력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구성 및 운영

코로나19 환자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방지하고 병상, 의료인력 등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을 지난 3월 3일부터 구성 · 운영하고 있다. 민간전문가인 감염병관리지원단장,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감염병 긴급조치 등 정책 제언, 역학조사, 확진자 병상배정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주 3회(월, 수, 금)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상황에 대해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긴급대책단 내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예방의학과 등 10개 분야 22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함으로써, 감염병 분야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기도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사진 140-1]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활동

【코로나19 전문가 자문회의】

【긴급대책단 브리핑】

2) 전국최초, 공종보건의사 및 민간전문가 활용 道 역학조사관 확보 및 운영

'역학조사'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활동을 말한다. '질병 수사관'으로도 불리는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역대책을 세워 확산을 막는 핵심 전문가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 140-2] 경기도 역학조사관 활동

【역학조사관 임명식】

【현장 역학조사 활동】

코로나19 발생 전 경기도에는 일반임기제 4명과 공중보건의 2명 등 총 6명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당초 인력으로는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감염병 분야 민간 전문가 13명,

시 · 군 소속 공중보건의 58명 등 총 71명을 한시적으로 경기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 · 확보하고, 코로나19 최전선에 투입하여 사례분류, 심층역학조사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코로나19 대응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3) 안전한 치료를 위한 확진자 등 병상 및 관련 시설 신속 확보

경기도에는 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등 수용을 위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분당서울대병원, 명지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3개 병원 26실 28병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지정입원병상은 신종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환자 등을 격리 치료할 병상 부족이 예상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 493병상과 성남의료원 90병상을 우선 확보함으로써 병상부족사태에 대비하였으며, 기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2개 병원 및 민간 상급종합병원 7개 병원 등 총 61병상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병상부족으로 인한 의료붕괴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병상 부족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무증상 및 경미한 환자는 의료인력 및 장비가 갖춰진 연수원 등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4개소 1,058실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 입국자 및 확진자 접촉자를 격리 수용할 '접촉자 격리시설'을 1개소(40실) 운영함으로써 추가 확진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 140-1] 경기도 병상운용 현황('20.9.25. 0시 기준)

구분	계	국가지정병상(3)			공공의료기관(6)							민간(상급종합병원 등)(7)							
		분당서울대	국군수도병원	명지병원	안성병원	수원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포천병원	성남의료원	국군수도병원	순천향부천	한림성심	아주대병원	한림동탄	일산병원	고대안산	성빈센트	분당서울대
확보	670	9	8	9	140	89	111	82	71	90	40	2	3	5	1	2	2	3	3
사용	311	8	4	4	42	47	48	50	40	42	13	2	2	3	0	1	2	1	2
가용	359	1	4	5	98	42	63	32	31	48	27	0	1	2	1	1	0	2	1

[표 140-2]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현황('20.9.24. 18시 기준)

구 분 (개소일)	소재지	전담병원	수용인원(명)		
			가용	사용	잔여
계			1,058	159	899
경기수도권2 (6.24)	안산시	도의료원 수원병원	323	48	275
경기도 제3호 (8.22)	이천시	도의료원 의정부병원	181	35	146
경기도 제4호 (8.28)	고양시	도의료원 파주병원	273	47	226
경기도 제5호 (8.29)	안성시	도의료원 안성병원	281	29	252

4)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의료인력 모집 및 현장 투입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과 함께 현장 의료인력 부족이 예상되었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8월 18일부터 9월 18일 까지 한달간 도내 의료전문자격증 소지자(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역학조사관,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에 대한 모집을 실시하였다. 총 1,171명을 모집하였고 이중 감염병 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가정대기자를 위한 홈케어시스템 운영단 등에 총 83명을 배치하는 등 의료현장에 전문인력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표 140-3]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 현황

합계(명)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역학조사관	기타*
1,171	14	558	268	81	28	10	9	203*

* 한의사 104, 응급구조사 86, 물리치료사 5, 작업치료사 3, 치과위생사 3, 치과기공사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도내 의료자원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또한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병상 수급, 의료인력 등은 공공의료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우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중앙방역체계와는 별도로 선제적으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을 구성함으로써 민간과의 협조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부족한 역학조사관의 확대, 민간 병원 협조를 통한 병상 확보 등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또한, 긴급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의료현장 전문인력 수급문제 해결은 물론 민관이 함께 감염병을 이겨낸다는 긍정적 효과도 보았음은 물론이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2012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이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방법 및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로써 현재 코로나19 방역에서 'K-방역'이라 불리며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나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에 특화된 감염병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앙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 지방은 소위 야전 지휘관으로서 지역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빠른 대응으로 공조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의료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경기도에도 감염병전문병원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최대 인구(13백만 명, 25%) 거주 및 유동인구가 많은 경기도 감염병 발생건수 또한 약 25%(5만 여건, '18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기타 지역보다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41. 경기북부지역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방역팀장 정봉수

- 추진배경 : 경기북부지역 파주, 연천, 김포 축산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 추진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이동제한, 살처분 등 신속조치로 확산방지
- 문제점 및 해결 : 야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상존, 멧돼지 차단방역 조치
- 평　　가 :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육돼지 발생 없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폐사율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 질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78개국에서 발생 중에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몽골, 인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2019년 5월 23일 처음 발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재난성 가축질병으로 인해 매년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타 국가에서는 농장소독 등 차단방역을 적극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야생멧돼지, 물렁진드기, 바이러스에 오염된 돈육제품이 바이러스가 매개체가 되어 차단방역 소홀 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파주 양돈농가에서 2019년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후, 연천, 김포에 추가적으로 발생되어 2019년 10월 9일 연천발생을 마지막으로 총 9건이 발생하였다.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로 현재까지 사육돼지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파주, 연천, 포천, 철원, 양구, 고성 등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육하는 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 주변에 대한 환경검사 등 농가 방역시설을 강화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양봉인 등에 방역관리를 안내 및 홍보하고, 수계지역을 매일 소독하는 등 농장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초동방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등 예방적 살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 즉시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투입하여 시료채취, 신고농장 출입통제 등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 발생농가뿐만 아니라 인근 3Km 이내 사육농가 총 55농가 110,987두에 대하여도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지속적인 확산추세로 김포, 파주, 연천 내 모든 돼지농가를 예방적 살처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전파를 차단하였다.

[표 141-1] 발생농장 현황

발생일자	지 역	발생일시	사육두수	살처분(두수)
계	9건			
1차	파주시 연다산동	’19.9.16.	2,369	2,369
2차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19.9.17.	4,638	4,638
3차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19.9.23.	2,119	2,119
4차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19.9.23.	2,273	2,273
10차	파주시 파평면 미산리	’19.10.1.	2,661	2,661
11차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19.10.1.	19	19
12차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9.10.2.	2,267	2,226
13차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19.10.2.	2,916	2,916
14차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19.10.9.	4,245	4,245

2) 경기도 권역별 이동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통상 발생농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관리지역, 500m~3Km는 보호지역, 3Km~10Km는 예찰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하지만, 금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북부, 인천북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방역관리 제한조치를 실시하였다. 경기북부권역을 출입하는 차량을 지정하여 스티커(녹색, 주황색, 흰색) 477건을 발급하여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였다.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발생에 따라 10월 2일부터 경기 북부지역을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모든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현재도 부분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표 141-2] 방역 강화조치 내역

구 분	지 역	기 간	주요 방역 강화조치
중점관리지역 지정	경기북부 (파주·연천·포천·동두천·김포)	9.17. ~ 10.7. (3주간)	● 타 지역 반출금지 ●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 ● 농가별 통제초소 운영
4대권역 지정	경기 북부·남부 강원 북부·남부	9.25. ~ 10.15. (3주간)	● 4대권역 간 돼지분뇨 반·출입 금지 ●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 ● 농가별 통제초소 운영
핵심관리지역 지정	발생지역 (파주·연천·김포) *강화, 철원	10.2. ~ 11.2.	● 양돈농가 수매 및 도태 조치 ●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 통제초소확대 ● 사료 환적장 설치, 전용차량 지정운행 ● 총기금지, 포획틀, 포획트랩 설치
완충지역 지정	고양·포천·양주·동두천 *화천	10.10. ~	● 통제초소 설치하여 차량 이동통제 ● 전용차량지정운행,농장단위방역강화 ● 모니터링 및 점검강화(정밀검사) ● 총기금지, 포획틀, 포획트랩 설치
경계지역	의정부, 남양주, 가평 *춘천, 양주,인제, 고성	10.14. ~	● 통제초소 설치하여 차량 이동통제 ● 총기사용, 멧돼지 전면제거, 집중포획

3) 돼지 사육농장 신속 임상예찰 및 검사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돼지사육농가에 대하여 현장 임상예찰과 정

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였다. 파주, 연천, 김포 발생농가 중 어미돼지에 양성 확진이 많음을 확인하고, 파주, 연천, 김포 모든 농가에 대하여 채혈검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전역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 모돈 혈청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화예찰을 통한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전역 추가 발생여부를 완화조치 해제 시까지 확인하였다.

4)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모든 돼지농장 및 관련 작업장의 가축 · 사람 · 차량 · 물품 등 출입을 금지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7회에 걸쳐 발령하였다. 9월 17일 파주 최초 발생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을 1차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실시하였다.

[표 141-3] 일시 이동중지 명령 내역

대 상	차수	적 용 기 간			지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및 물품 등	1차	'19.9.17. 06:30	~	'19.9.19. 06:30 (48시간)	전국
	2차	'19.9.23. 19:30	~	'19.9.25. 19:30 (48시간)	경기·강원·인천
	3차	'19.9.24. 12:00	~	'19.9.26. 12:00 (48시간)	전국
	4차	'19.9.26. 12:00	~	'19.9.28. 12:00 (48시간)	전국
	5차	'19.10.2. 03:30	~	'19.10.4. 03:30 (48시간)	경기·강원·인천
	6차	'19.10.04. 03:30	~	'19.10.6. 03:30 (48시간)	경기·강원·인천
	7차	'19.10.09. 23:10	~	'19.10.11. 23:10 (48시간)	경기연천

5)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단계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관심단계로 운영하던 중 2019년 9월 16일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동시에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하였다.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심각단계를 넘는 방역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였다.

6) 도지사 주재 시군단체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점검 영상회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강력한 확산차단을 위하여, 2019년 10월 2일 도지사 주재 시·군 단체장 긴급 방역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과 가장 중요한건 초기대응임을 강조하였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최고단계 대응하라는 지시와 함께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중심대응 및 적극행정, 신속한 예찰, 검사,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표 141-4] 관련 회의 모습

도지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회의(9.17)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10.2)

7) 긴급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실시

경기도 내 파주, 연천, 김포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 및 발생여부 사전 모니터링을 위해 발생 시 · 군 인접지역인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256농가의 돼지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10월 13일부터 3주간 긴급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신속히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방지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전파위험이 될 수 있는 축산관련시설 42개소는 11월 20일부터 매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예찰검사 중 무허가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사육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를 하여 300두 미만 소규모농가에 대해 119농가 13,809마리를 수매·도태 실시하였다.

8)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

발생농장 및 방역대내 주요지점 그리고 경기도 전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였다. 시·군별 거점소독시설 39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축산차량, 사람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였다.

[표 141-5] 통제초소(84)·거점소독시설(39) 운영현황

구 분	계	김포	파주	연천	양주	포천	동두천	안성	고양	화성	가평	여주	이천	양평	남양주	용인	평택	광주	시흥	안산	의정부	부천
합 계	123	10	19	16	11	15	5	5	6	4	2	4	3	2	4	1	2	1	1	3	8	1
통제초소	84	9	16	14	8	10	4	2	4	2	1				3					2	8	1
거점소독	39	1	3	2	3	5	1	3	2	2	1	4	3	2	1	1	2	1	1	1		

- 양돈농장 앞 초소 922개소(북부 343, 남부 579) 설치·운영

9) 발생농장 방문차량 추적검사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료차량, 분뇨차량, 출하차량 등에 대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역학관련 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0)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019년 10월 2일 연천군 신서면 민통선 안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첫 확인하였다. 이에 주변지역 방역관리 강화, 울타리설치, 포획 등 바이러스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발생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11) 살처분 참여자 심리치료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을 살처분한 농장주나 종사자, 살처분 현장방역 참여자 등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방지를 위하여 2019년 9월 30일 경기도 심리지원단을 구성 · 운영하였다. 지원단은 6개 시 · 군 1,967명을 상담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심리지원 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발생 시·군 모든 농가 살처분 방역조치

도내 김포, 파주,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9건이 발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 발생 시 · 군의 모든 돼지에 대해 살처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농가의 희생과 결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정책자금, 성금모금, 신용보증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 지사님과의 대화 등 다각적으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의 및 정책을 발굴하였다. 농가의 희생과 결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을 수 있었던 만큼 농가가 다시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는 농가 내 · 외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살처분한 농가의 재기를 위해 재입식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다시 생산기반 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2) 경기도 전지역 이동제한에 따른 축산농가 도축출하 불편호소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뉴얼에서는 가축이동제한 지역을 통상 발생농장으로부터 10Km 이내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금번 경기도 권역별 가축이동제한은 경기도 발생지역

돼지 207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 명령조치를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경기북부지역의 진출입 차량통제로 사육농가에서는 제때 가축을 출하하지 못하여 농가의 경제적 큰 피해를 호소하였다.

경기도는 돼지농가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출하대상 가축에 대한 임상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가축에 한하여 이동승인서를 발급하여 관내 도축장으로만 출하토록 조치하였다. 도축장 근무 검사관은 도축장 출입 전 2차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도축을 실시하는 등 현장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

3) 모든 살처분 가축을 열처리방식인 랜더링 처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소멸방법으로 최우선시 되는 것은 발생농장 가축을 신속히 살처분하여 바이러스의 배출을 막는 것이고, 2차적으로 사체를 매몰 또는 소각하는 것이다. 매몰방식은 매몰지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내는 신속한 살처분을 위해 매몰방식을 선택하였으나, 그 외 농가는 랜더링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하였다.

발생농장은 현장에서 처리하였고, 500미터 내 인근농가는 바이러스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되었으나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매뉴얼에 따라 사체를 매몰하였다. 그 외 지역은 수매 후 살처분 방식으로 랜더링 처리하였으나, 향후 대규모 사체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 확산되는 등 바이러스가 야외에 상존하고 있어, 차단방역 소홀시 언제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19년 9월 16일

부터 10월 9일까지 경기도는 9건, 전국은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방역조치로 현재까지 사육돼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확산방지의 첫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및 타 지역까지 권역별로 경기도 내 사육농가에 대하여 차량 및 돼지 이동제한 조치, 매일 축산시설 소독을 실시하였다. 둘째는 파주, 연천, 김포 전 지역을 이동제한 조치하고 매일 농장 소독, 가축·분뇨 반출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확산을 막았다.

하지만 금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파주, 연천, 김포 발생이후 인천에서 추가로 발생하였다. 축산농가에서 방역을 소홀할 시 매개체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철저한 차단방역 생활화, 농장 방역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체계화된 방역시스템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142. 이천 물류창고 화재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팀장 유해공

대응전략팀장 최진만

- 일　　시 : 2020. 4. 29.(수) 13:32
- 장　　소 :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640-1, 한 익스프레스 B동 (공사장)
- 건물개요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방식 샌드위치패널 4/2층, 연면적 11,043㎡
- 발화위치 : 지하 2층 2구역 내부 추정
- 발화원인 : 지하 2층 2구역 3번 유니트 쿨러(실내기) 주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한 착화
- 재산피해 : 조사 중(약 73억 추정)
- 인명피해 : 50명(사망 38, 부상 12)
- 소방력 동원현황 :인원 - 515명(소방공무원 335, 경찰 150, 기타 30)
  장비 - 138대(지휘2, 펌프8, 탱크13, 화학5, 굴절2, 구조13, 구급67, 기타28)

가. 화재상황 분석 및 대상물 현황

1) 화재상황 분석

2020년 4월 29일 13:32경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한 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장 지하2층 내부에서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당시 페인트 도장, 우레탄도포, 패널설비 등 78명의 작업자가 건물내부 각층에 산재되어 작업 중이었으며, 폭발적인 연소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천소방서는 신고접보 21분 만에 대응2단계로 출동단계를 상향시켜 화재초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였다. 인명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화재진압을 위해 방면별(4개 방면)로 구역을 나누어 수색 및 화재진압활동을 실시하였으나, 강한 화세 및 건물 붕괴 우려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화재는 지하2층, 지상1층·3층에서 우레탄폼 도포 마감작업이 진행되는 시점에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착화되었다. 화재는 폭발적으로 연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유독성 가스는 다수 인명피해 발생의 촉매작용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 142-1] 화재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화재건물 정면사진</td><td>화재건물 우측면</td></tr>
<tr><td> </td><td> </td></tr>
<tr><td>화재건물 좌측면</td><td>화재건물 후면</td></tr>
</table>

이번 화재는 지난 2008년 1월 발생한 냉동창고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첫째, 우레탄폼이 건물 내부에 도포되어 있었고, 둘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착화된 화재는 폭발적으로 연소가 진행되었으며, 셋째, 우레탄 폼에서 발생한 독성가스와 급격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우레탄폼 연소 시 발생하는 독성가스 종류인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흡입 시 5분 이내에 사망 할 수 있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다.

[표 142-1] 우레탄폼 연소가스 독성

○ **화재초기 열분해 연소로 HCN, 아크로레인, 암모니아, HCl, CO, 등 다양한 유독가스 발생**

※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HCN 흡입 시 5분 이내 사망(연령, 신체상태, 조건에 따라 다름)**

가스성분	30분간 LC50* (ppm)	RD50** (ppm)
HCN(Hydrogen cyanide)	110 ~ 200	-
아크로레인	140 ~ 170	1.7
암모니아	1,400 ~ 8,000	303
HCl	1,600 ~ 6,000	309
CO	5,000 ~ 6,600	-

* LC50 : 연소가스를 동물에 30분간 노출 시 50%가 죽음에 이르는 가스농도의 통계적 계산값

** RD50 : 동물 호흡량이 50% 내려가는 데 필요한 물질 농도의 통계적 계산값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공무원 포함 515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으며 지휘차량, 펌프차량 등 138대의 소방차량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화재는 발생 3시간 만에 큰불이 진화되었고, 5시간 만에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 그러나 강한 화재로 인한 건축물 손상 및 붕괴우려로 현장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화재진압 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소방재난본부는 콘크리트 석재 등의 폭열현상 의한 건축물 붕괴 우려로 투입대원에 대한 비상탈출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대원투입 공간에 대한 현장활동 모니터링 안전관을 방면별로 투입해, 인명구조 활동과 더불어 대원의 안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로 인해 건설노동자 등 50명의 희생자와 약 7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표 142-2] 폭열현상(Spalling failure)

○ 콘크리트, 석재 등 내화재료(耐火材料)가 고열에 의해 내부 습기가 팽창되면서 균열이 일어나 **박리되는(薄利) 현상**으로 화재시 콘크리트 구조물에 물리적, 화학적 영향을 주어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300℃ 이상**에서 발생한다.

※ 화재현장 마감재 콘크리트 석재임 / 통상 화점 부근의 농연온도는 650~750℃에 달한다

▶ 콘크리트 폭열현상(Spalling failure)으로 천장의 보드나 판넬을 지지하고 있던 철 구조물이 뽑히면서 천장 보드가 붕괴되거나 박리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순직사고 이어질 수 있음

2) 화재건물 기본현황 (공사장 공정률 90%)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640-1번지 외 15필지

○ 건 축 주 : ㈜한익스프레스

○ 작업공정 : 내부 마감재 및 인테리어 작업 등

※ 건축분야 시공사 : ㈜건우

○ 업　종 :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 일반창고, 사무실 등)

○ 건물구조 : PC콘크리트구조, 공업화박판강구조 패널지붕 지상4층 /지하2층 3개동, 연면적 77,316.51m2(A동 : 66,321.16m2, B동 : 10,961.75m2, C동 : 33.60m2)

동명	계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A동	66,321.16㎡	20,791.32m²	693.93m²	26,151.81m²	595.26m²	18,088.84m²	-
	-	일반창고	일반창고	일반창고	사무실	일반창고	-
B동 (화재동)	10,961.75㎡	4,908.62m²	606.17m²	2,103.98m²	716.79m²	2,067.27m²	558.92m²
	-	냉장창고	일반창고	냉동창고	일반음식점	냉동창고 · 사무실	사무실
C동	33.6㎡	-	-	33.6m²	-	-	-
	-			경비실			

○ 임시소방시설 설치현황

- 소형소화기 층별 2대(대형소화기 포함 화재위험작업장은 5m 이내 2대 추가 배치)
- 휴대용 확성기,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건축물 현황>

○ 건물구조 : PC구조+철골조 지상 4/지하2층 1동, 연면적 10,961.75㎡

○ 용　도 : 냉동 · 냉장창고, 일반창고, 사무실 (공정률 90%, 공사기간 : '19.4.1~20.6.30)

구 분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면적(m²)	4,908.62m²	606.17m²	2,103.98m²	716.79m²	2,067.27m²	558.92m²
용 도	냉동창고	일반창고	냉동창고	일반음식점	냉동창고·사무실	사무실

○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소형/대형) 30/18, 휴대용 확성기

※ 위험물 임시 저장 · 취급 : (옥외저장소) 제3석유류 8,000L, 제4석유류 8,000L

화재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써 냉동 · 냉장창고 등 창고시설 용도로 공정률 90%

의 완공을 거의 앞둔 상태였다.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휴대용 확성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나. 총력대응 인명구조활동

1) 화세보다 우세한 소방력 집중 투입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13개 구조대를 현장에 출동시키고, 사상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량도 67대를 출동시켜 인명구조활동에 총력 대응태세를 갖추었다. 구조대원은 고열, 붕괴우려, 농연으로 인한 시야확보 불가로 포복자세로 인명검색을 실시하였다. 고열로 인해 진입이 어려웠던 지하층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무인파괴 방수차를 활용해 장해물(철판)제거 및 배연작업을 실시해 인명구조활동을 지원하였다.

무인파괴방수차

《주요제원》

- 크　기 : 12.3m×2.5m×3.9m
- 파괴력 : 강화유리(12mm), 콘크리트(120mm)
  샌드위치패널(200mm)
- 물탱크 : 2,000L / 폼탱크 : 200L
- 총중량 : 32t

또한, 현장대응 3단계 모델(투입→휴식→직전대기)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빈틈없는 총력 인명구조태세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대응태세 구축은 최근 발생하는 사고 · 재난대응 전략으로 초기부터 우세한 소방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하기 위함이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대응에서도 보았듯이 이러한 대응태세 구축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긴박한 현장의 긴급탈출 명령

다수의 요구조자가 건물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구조대원이 선택할 수 있

는 한가지의 선택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해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급격한 폭발적 연소 및 강한 화세로 PC구조+철골조의 건물은 폭열현상* 및 지하층의 균열소리로 인해 총 9번의 투입대원 긴급탈출 명령을 발령하였다.

[표 142-3] 긴급 탈출명령

○ 강한 화세, 폭열현상*(박리), 균열소리(지하층 등)에 따른 긴급 탈출명령

※ 지휘관 등 붕괴우려에 따른 경고 무전 9차례 실시

♣ 당시 폭열음과 땅 출렁거림 현상 有

B2층 중앙기둥(벽면)	B1층 벽면 및 천장	1층 바닥 박리 잔해물	제4방면 패널무너짐흔적

다. 소방안전대책 수립

1) 대형공사장 특별점검 등 안전대책

화재 이후 공사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연면적 3천㎡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해 2020년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고용노동부, 시 · 군 건축부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7개반 376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하여 1,135곳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결과 불량대상 105곳에 130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15건, 과태료 처분 42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행정처분 41건 등 의법 조치하였다. 주요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소방분야로 기술자 · 감리원 배치 위반 30건, 착공신고 위반 10건, 하도급 위반 6건, 무등록 영업 4건, 무허가 위험물 5건, 거짓감리 2건, 기타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71건이었고 건축분야로는 사용승인 전 입주 등 2건이었다.

같은 기간 중 소방관련업에 대한 35개반 70명을 소방공무원을 동원하여 공사장 722곳, 소방관련업체 807곳에 대해 지도 · 감독 점검도 실시하였다. 이번 지도 · 감독 점검에서 공사현장 722곳 중 불량대상 48곳에 62건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입건 12건, 과태료 45건, 행정처분 38건 등 의법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감리원 미배치, 기술인력 공사현장 배치 통보 위반, 무등록 영업, 하도급 위반, 착공신고 전 소방시설 시공 등이 주를 이루었다. 소방관련업체는 19개 업체에서 21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였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시설차단 등 위법행위 단속이 주 임무였던 119소방안전패트롤을 가동범위를 확대하여 3천㎡ 미만의 공사현장에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하였다. 40개조 80개 반으로 구성된 소방안전패트롤 요원은 공사현장 674곳을 단속하여 25곳 2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4건, 기관통보 3건, 조치명령 19건 등 의법 조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설 공사현장 현장소장 등 관계자 742개소 2,273명에 대해 화재 시 초기대처방법, 우레탄폼 및 용접 · 용단 작업 시 안전대책 등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제도개선

대형공사장 특별 안전점검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2020년 6월 4일 소방청 2건, 고용노동부 3건,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2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다. 2020년 6월 18일에 발표한「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정부합동 발표」내용을 보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건의한 7개 안건 중 5건이 반영 또는 일부 반영되었다. 세부 건의 및 반영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42-4] 세부 건의 및 반영내용

건 의 사 항	반 영 내 용
①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가스경보기, 완강기 추가	(반영)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
② 용접 · 용단 작업장 화재감시자 자격기준 신설	(반영) 화재감시자 전문교육과정 개설
③ 대형공사장 화재위험 정보 제공 의무화	(반영) 산업안전공단 이행 확인점검 결과 화재위험성 발견시 지자체와 공유
④ 건설공사 안전기준 등 현장 이행력 강화 - 위험작업 동시작업 금지 - 건설공사현장 CCTV설치 의무화	(반영) 가연성물질 작업과 화기취급 작업 동시작업 금지 조치
⑤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자재해보험 모든 건축공사장 건설공사보험 가입 의무화	(반영)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3) 대형화재 현장대응력 강화방안 수립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대형화재 현장대응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5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된 강화방안은 화재발생 직후 더욱더 완벽한 현장대응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관련부서 직원(5개 분야 13명)으로 구성된 TF팀에서 5월 한 달의 기간 동안 수립한 대책이다. 주요 추진전략은 “현장지휘체계 확립”, “긴급구조통제단 개선운영”, “출동대 대응역량강화”, “정보수집 활동체계개선”, “현장지휘관 지휘역량강화”의 총 5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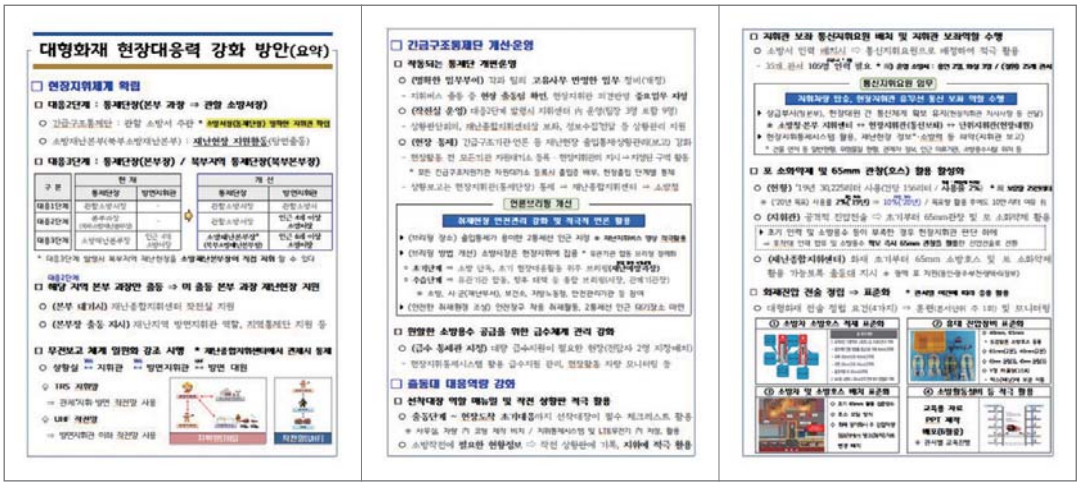
현장지휘체계 확립 분야에서는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의 현장지휘권 강화를 통해 재난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아는 초기지휘관이 종료 시까지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일관성 있는 재난현장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그 외에 현장지휘관의 지휘 · 통제를 위한 재난종합지휘센터의 무전관제 및 보고체계를 강화하였다.

긴급구조통제단 개선·운영은 실무 위주의 긴급구조지휘대 편성, 재난현장 출입통제 상황관리 체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출동대대응역량 강화 분야로 주로 현장대응부서, 즉 소방서 현장지휘대의 현장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선착대 지휘관 역할 강화, 지휘대 보강(통신요원의 지휘관 보좌), 소방호스 적재표준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화재조사요원 집중투입 및 소방사법활동 강화를 통한 정보수집 활동체계 개선과 현장지휘관의 지휘훈련 교육강화를 통해 대형화재에 대한 현장대응력 강화를 꾀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대응력 강화방안이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표 142-5] 대형화재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라. 평가 및 발전방안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대형재난 발생 시, 출동 소방력의 최고수위 우선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번 이천 물류센터 화재도 이러한 대응체계를 가동하였지만 다수의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하였다. 이는 화재 대응활동만으로는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평상시 화재예방과 대비에 관한 부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경기도 소방은 도민의 가슴 아픈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건축법」등 관계기관의 제도개선까지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한편 소방특별조사 및 점검 등 화재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대형재난 시 가용 소방력을 조기에 투입하여 재난을 초기에 최대한 억제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로운 경기도가 걸어온 길 ('19.9.1.~'20.6.30.)

인쇄일 : 2020년 12월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경기도

주　소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경기도청 기획담당관실

전　화 : 031)8008-2793

팩　스 : 031)8008-2118

인　쇄 : 예향아트